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프로그램

	8/30(목)	8/31(금)		9/1(토)		9/2(일)									
11:00 ~ 12:00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환경운동, 관계맺기와 확장하기		말(語)도 안 되는 대학구조조정들 말(味, 없애다) 한다		'비공식노동자' 조직화 전략 모색 워크숍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학생운동전력토론회	
12:00 ~ 13:00															
13:00 ~ 14:00	등록(13:00~14:00)	인문관 7층 31707		인문관 7층 31703	인문관 7층 31706	인문관 7층 31707	인문관 7층 31507	인문관 7층 31703	인문관 7층 31706	법대 B107					
14:00 ~ 15:00	계약행사(14:00~14:50) 법대 B107	휴식(14:00~15:00)		피터위터만 특별강연(13:30)		휴식(14:00~15:00)		휴식(14:00~15:00) 'OO씨의 하루' 영화상영 (14:30~15:00)							
15:00 ~ 16:00	사회운동 대토론회 1부 - 전쟁과 빈곤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 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법대 B107	토론회/ 이재물 돌아보라, -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안전한 짐을 구하는 홀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경명대 33304 토론회/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사회운동		사회운동총회					
16:00 ~ 17:00															
17:00 ~ 18:00														경명대 33203	인문관 7층 31706
18:00 ~ 19:00	저녁식사 (18:00~19:00)	'OO씨의 하루' 영화상영 (18:00~18:30) 저녁식사(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계약행사							
19:00 ~ 20:00	사회운동 대토론회 2부 - 사회운동의 소동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법대 B107	토론회/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 인종의 반격' - 빈곤심판 인종변정		반전평화 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지역운동의 평가와 전망 모색		여성대회 8시 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기타 장소] 어린이방 : 경계관 31B101 여성 휴게실 : 인문관 1층 여학생 휴게실 본부 : 경계관 31B109 부스 설치 : 인문관 2층					
20:00 ~ 21:00															
21:00 ~ 22:00														경명대 33203	인문관 7층 31706

Contents

전체 행사 미리보기	3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엮은 풀씨들(조직위원명단)	7
소개와 행사 경과	9
사회운동총회 총회	17
선언문 초안	18
사회운동대토론회	33
사회운동대토론회 1부 :	34
사회운동대토론회 2부 :	153
□ 열쇠말(공동의제) 워크숍	204
○ 미래를 돌아보라!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숍	205
○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워크숍	256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	272
○ 지역운동의 평가와 전망 모색 워크숍	326
□ 특별행사(빈곤심판 민중법정, 여성대회(가), 피터 워터만 특별 강연)	344
○ 빈곤심판 민중법정 (8/31)	345
○ 여성대회 (9/1)	353
○ 피터 워터만 강연 (9/1);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 21세기 노동희방전략	365
□ 사회운동 전략과제 워크숍	366
○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367
○ 안전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376
○ 2003년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이야기하다	391
○ 환경운동, 관계맺기와 확장하기	404
○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441
○ 말(語)도 안 되는 대חק구조조정을 말(誅, 없애다)하다	460
○ [토론회]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432
○ 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 사회운동	517
○ 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529
○ '비공식' 노동자 조직화 전략 모색 워크숍	551
○ 주체화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운동	582
○ 비정규 운동의 비상(飛上)을 위한 원탁 토론	584
○ 학생운동전략포럼	621
□ 사회운동포럼 사전 워크숍	671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672

사회운동포럼



전체행사 미리보기

□ 사회운동대토론회

8월 30일 첫날 진행되는 사회운동대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토론회 1부는 ‘전쟁과 빈곤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문학연대, 장애여성공감,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패널로 나와 청중들과 함께 현 사회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입니다.

대토론회 2부는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권, 노동, 여성, 학생, 생태지역,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패널로 나와 운동 내부의 소통과 연대가 가로막힌 지점들, 대안에 대해 풍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열쇠말(공동의제) 워크숍

사회운동포럼에서는 현재의 사회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어 4개의 공동 열쇠말을 뽑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지역운동이 그 네 가지 열쇠말입니다.

○ 미래를 돌아보라!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숍에서는 민주주의, 페미니즘의 거울에 비춰 운동사회 구조와 문화, 운동과정들 성찰해봄으로써 운동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가치와 운동 자신이 일치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봅니다. 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 민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외침이 언어를 버리자, 교육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합니다.

○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철도,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공유합니다. 인간의 권리와 자율성, 사회적 유대를 파괴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고 삶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에서는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한 솔직하고도 진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망과 활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이 실리에만 목매달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지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사회변혁적인 노동운동, 보편적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합니다.

□ 지역운동 워크숍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거점으로서의 지역, 연대-조직-활동 전략으로서의 지역, 아래로부터의 혁신 방안으로서의 지역 등 다양한 의미의 지역운동을 돌아봅니다. 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지역운동인지부터 살피면서 그동안 전개되어 온 다양한 지역운동의 경험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찾아봅니다.

□ 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포럼 마지막 날인 9월 2일, 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들이 풀씨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운동포럼의 취지와 향후 계획, 공동행동전략과제를 채택, 선언하는 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합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의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회운동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하고 이후 변화의 의지를 함께 다지고 모어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특별행사

C 빈곤심판 민중법정 (8/ 31)

민중법정을 통해 1)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2)빈곤의 원인과 주범을 심판하며, 3)빈곤 대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피해자의 생생한 현실 △일하면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노동빈곤의 문제점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는 서울시 발전 프로젝트 고발 등 3가지 주제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는 법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 여성대회 (9/ 1)

사회운동포럼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사회운동의 이념, 조직, 실천에 대한 내부적 반성을 공동의 토론을 통해 진행합니다. 87년 이후 여성의 역사, 사회운동의 반성,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꿈꾸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채택합니다.

C 피터 워터만 특별 강연 (9/ 1): '정의의 무기'로서 노동운동의 부활(가계)

피터 워터만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주로 활동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노동운동을 분석하고 이론적·실천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국제적 정의 연대운동과의 결합 등 노동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과 페미니즘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정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터 워터만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력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회운동 전략과제 워크숍

C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 에이즈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받고 있는 이들의 삶과 투쟁을 공유함으로써 에이즈문제를 정확히 보고 성소수자,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시작해봅니다. 에이즈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기다립니다.

C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주거권운동은 곧 철거민운동일까요? 철거민운동의 요구가 보편적인 주거권운동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징검다리들을 건너야 할지 살펴봅니다. 지역, 사회공공성, 노동, 새로운 활동양식 등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들과 주거권운동의 만남도 시도됩니다.

C 2003년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이야기하다

: 2003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의 시도들(지역 풀뿌리운동, IPT운동, 전범재판, 대중집회 등)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봅니다.

C 환경운동, 관계맺기와 확장하기

: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만나온 경험들을 평가하면서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의 관계맺기와 연대에 있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봅니다. 다른 운동과 환경운동이 둘러앉아 환경운동의 확장을 위한 과제를 찾아 머리를 맞댁니다.

C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 정치운동의 정의를 정당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보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구체적 결합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양한 정치운동세력이 그리는 향후 정치운동의 미래를 공유하면서 상호 상승작용이 가능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C 말(謔)도 안 되는 대학구조조정을 말(誅, 없애다)하다

: 최근 대학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대학 재편은 대학생 주체들의 사고와 행동양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대학주체들의 힘을 모아 대학을 재구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C [토론회] 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오늘날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부터 살펴보면 민중의 보편적 생활권으로서 요구해야 할 소득보장, 사회복지 방안을 찾아봅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확대되는 빈곤에 맞서 사회운동의 투쟁과 연대, 빈곤운동의 주체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도 모색합니다.

C 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 사회운동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에서 일어나는 노동인권 침해사례와 ATNC 네트워크의 대응활동을 살피면서 한국 사회운동의 국제연대방안을 찾아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지역 활동가들을 직접 모십니다.

C 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실천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모색합니다.

C '비공식' 노동자 조직화 전략 모색 워크숍

: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범의 노동자인 '비공식노동자'의 유형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조직화된 사례를 통해 향후 조직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C 주체화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운동

: '주체화'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이주노동자 운동을 돌아보고,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 등 이주노동자 운동의 발전 방안을 집단회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C 비정규 운동의 비상(飛上)을 위한 원탁 토론

: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 운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비정규 주체를 포함한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과 입장이 솔직하게 교류되고 전망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만듭니다.

C 학생운동전략포럼

: 오늘날 학생운동의 위기 원인과 대학생들의 의식 지형을 분석하면서 학생운동의 혁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지역, 교육, 페미니즘 등을 부어잡고 실천해온 학생운동의 경험도 나눕니다.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엮은 풀씨들

강경인	팽+1	김도경	김소연	김제영	까지만	민선	박종원	서진숙	시와	오기형
강곤	팽+2	김도현	김수영	김종건	나영	민수	박지영	서혜석	신우섭	오두희
강내희	팽이눈	김동규	김수현	김종섭	나현필	민영	박지혜	석상열	신유라	오상훈
강대준	교육공동	김동근	김순금	김종환	동진	민혜	박찬규	석진희	신유아	오세영
강동일	체나다	김동환	김순희	김주환	두시간	민혜	박하순	선용진	신진선	오지은
강동진	구교선	김득연	김승운	김준범	라미숙	박경석	박현진	선지영	신행범	오하라
강문숙	구선희	김득연	김아름	김준우	라은영	박김영희	박혜영	성래	심광현	오형석
강상구	구정모	김랑희	김영삼	김준우	려목	박김형준	박혜정	성래	심영보	오형수
강성준	구정화	김명섭	김영식	김준현	류고은	박래균	반태경	성실	심희천	오희수
강소연	구준모	김명수	김영원	김준희	류문수	박명석	밤꽃양	성우	아래	옥세진
강승희	구현진	김명신	김영은	김중현	류미경	박미선	방형중	성철	안규진	윤인
강신현	권경우	김미경	김영재	김중희	류은숙	박상은	배경내	세용	안병주	우예림
강영규	권미란	김미성	김영진	김지선	류주형	박석진	배성인	소영호	안보영	유기만
강영석	권순택	김미영	김예니	김지은	마성식	박선봉	배여진	소윤	안성민	유민식
강용준	권영진	김민아	김완	김지은	무동	박선영	배정란	소현빈	안성열	유승현
강원섭	권용수	김범규	김용욱	김진량	무명	박성배	배정화	소희	안승현	유신재
강정주	권태훈	김병수	김용한	김진명	문문주	박성우	백승욱	손동신	안은정	유영주
강주성	권혁기	김병용	김원정	김진익	문상린	박성준	백은솔	손명애	안창영	유윤종
강진영	권혁무	김병인	김유미	김태훈	문선희	박세민	백재용	손상열	안현숙	유의선
강진희	권현태	김병태	김윤이	김하늬	문세경	박승호	범용	손상영	양규현	유종범
강태하	권형은	김보성	김은환	김한별	문소라	박승희	범용	손승환	양서연	유지은
강현욱	권혜정	김보연	김승태	김한영	문소라	박영홍	변연식	손승환	양수현	유혜정
강현주	기룡	김보영	김일숙	김현주	문수연	박옥순	변훈철	손영주	양승은	유현경
경하	김경	김삼연	김재구	김현모	문원	박윤희	보람	손형우	양혜림	유현영
고근예	김경미	김상현	김정래	김형진	문유성	박일훈	보리	송권봉	양혜진	육태민
고길섭	김경자	김석	김정수	김형태	문종찬	박재범	상용	송명관	엄기호	윤상필
고대권	김광배	김성영	김정아	김형택	문지원	박재순	상욱	송수환	엄병천	윤석연
고석태	김광원	김성영	김정은	김혜진	문혜진	박정미	상철	송영숙	엄태선	윤여협
고영남	김광호	김성일	김정자	김혜진	미경	박정수	서강봉	송유나	여도진	윤영
공성식	김다운	김성진	김정지현	김호정	미니	박정희	서귀환	송한수	여미숙	윤정
공정수	김대일	김세균	김정하	김화영	미류	박주영	서영은	송효정	여준민	윤정아
곽성혜	김덕민	김세진	김정훈	김훈	미정	박준도	서유영주	수열	염정수	윤진영
곽이경	김덕진	김소라	김계수	김희정	민구	박준형	서은희	수진	영진	윤호상

은종복	이봉화	이장우	이현옥	장영란	정병기	정희찬	준혁	최예륜	한승현	황인동
은지	이상윤	이재교	이혜경	장윤미	정선숙	조남명	지은	최윤정	한아름	황평우
이강용	이상훈	이재영	이화숙	장지영	정선숙	조대환	지형	최은숙	한주태희	
이경진	이상희	이재영	이환춘	장진범	정세진	조든문	진우	최은아	한지숙	전국빈민
이경호	이서영	이재용	이희봉	장현일	정소연	조백기	진재연	최이숙	한지원	연합
이규철	이선미	이정면	인화	장호경	정시영	조범준	진철	최장미	한채윤	전국노점
이기규	이선정	이정희	임기환	재명	정식	조성진	진환	최재범	한혁	상연합
이꽃맘	이선희	이종탁	임덕영	재영	정식화	조수빈	차미경	최정기	하승	빈민해방
이나리	이성로	이종훈	임복균	전규찬	정영섭	조승화	찬섬	최정아	허유경	철거민연
이남경	이성숙	이주철	임성희	전누리	정영찬	조영관	참여사회	최종진	허익수	합 이상
이남태	이소형	이주환	임소연	전대서	정은주	조윤미	연구소	최준영	허준기	30인
이다예	이소희	이준	임월산	전상룡	정은희	조은샘	채나영	최지현	허혜영	평등사회
이다택	이수정	이지호	임유영	전성백	정은희	조은석	채승기	최지현	현모	로전진하
이대희	이수진	이진선	임유청	전소희	정정훈	조정미	천준호	태승	형호	는활동가
이동렬	이숙전	이진숙	임인선	전영혜	정종숙	조정환	초코+1	태형	호성희	연대 50
이동연	이승은	이진우	임재은	전옥	정종혁	조진희	초코+2	하명수	홍명교	인
이동화	이승철	이창근	임정희	전원배	정준현	조현철	초코파이	하상수	홍석환	
이동천	이승희	이창석	임필수	전은숙	정지영	조혜은	최고봉	하승우	홍수종	
이득재	이영철	이철	장대성	전준형	정지현	조혜진	최광락	허주영	홍영선	
이량	이원재	이태식	장대식	전진유	정현	조효계	최명숙	한기로	홍의표	
이류한승	이원재	이평성	장민희	전효관	정현정	곽동엽	최문경	한대식	홍지연	
이만호	이원호	이해관	장병권	정민섭	정혜영	주미순	최미경	한명희	황수진	
이묘량	이유미	이현대	장상훈	정민우	정혜진	주영아	최미경	한범승	황순영	
이배화	이윤소	이현서	장여경	정박기선	정희준	주함미	최성규	한승욱	황연중	

■ 후원단체

- 민중언론 참세상

- 성균관대26대 동아리 연합회, 38대 문과대 학생회

24대 사회대 학생회, 성균관대 학생행진

※ 이름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빠진 풀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운동포럼 본행사 때 풀씨가 되어주실 분들도 있겠지요. 미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풀씨들, 앞으로 풀씨가 되어주실 분들과도 함께 사회운동포럼을 엮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사회운동포럼



소개와 행사 경과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열립니다

6월항쟁 20주년, 우리 운동의 현실은?

2007년 올해는 87년 6월항쟁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20년 전 거리에서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중 어떤 이는 ‘88 정치인’이 되어 국회의원이 되었고, 어떤 이는 정부 관료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6월항쟁을 기념해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도 합니다. 그 속에서 6월항쟁 20주년 기념 행사는 마치 축제처럼 흥겨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사회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개발주의에 맞서 새만금 갯벌과 생명들을 지키려고 했던 운동, 한반도 평화를 해칠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반대했던 운동, 허세욱 열사를 낳은 한미FTA 반대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은 비정규직보호법안과 이랜드여성노동자 투쟁, 아프간피랍/파병반대-철군운동 등 오늘 우리사회의 현실은 처절하기만 합니다. 6월항쟁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생명을 옹호하고자 했던 민주항쟁의 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운동의 내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운동의 위기’라는 말을 반복하기에도 지겹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 운동은 암흑 속을 헤매는 것 마냥 어둡고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운동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처진 어깨 너머로 술잔을 기울이는 활동가들이나 운동 안에서 상처받고 운동에 등을 돌리는 활동가들을 보며 운동의 위기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엉킨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여전히 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운동의 위기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밖으로 향했던 고민의 방향을 우리 안으로도 한번 맞추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운동 안에서 풀고 있는 문제들을 꼬집어내고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머리 맞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과정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목표와 과정은 함께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운동이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태, 여성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들이 운동 내부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통에 사무치다/연대에 미치다/변혁을 외치다!

소통/연대/변혁을 기치로 각 운동들간에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운동포럼을 엽니다. 각 운동들이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들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운동들의 힘이 모여 더 큰 힘이 되어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바꿔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소통’ 과 ‘연대’ , ‘변혁’ 누구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운동포럼은 지금 우리 운동이 서있는 위치에서 여전히 소통과 연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연대 없이 변혁은 요원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소통, 관성적인 연대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서로가 변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소통을 통해 운동들이 좀더 가까워질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연대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소통과 관성적인 연대로는 변혁을 꿈꾸는 운동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운동포럼에서 만나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운동포럼이 진행됩니다. 사회운동포럼 기간에는 사회운동대토론회, 열쇠말(공동의제) 워크숍, 사회운동총회와 같은 주요 행사를 비롯해 빈곤심판민중법정, 여성대회, 각 주제별 사회운동 전략과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2007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이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을게요.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걸어온 길

□ 2007년 3월 20일, 제안서를 돌리다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5개 단체가 뜻을 모아 사회운동포럼(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 것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배반되고 신자유주의가 심화되어 온 지난 시기를 되짚으면서 사회운동의 전망과 활동양식의 재구성, 연대성의 확장을 여는 계기로서 사회운동포럼(가) 개최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007년 3월 27일, 첫 간담회를 열다

: (가)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간담회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열렸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공동제안단체들의 문제의식을 나눴고, 사회운동포럼이 자칫 특정 색깔의 단체들이 결집하는 자리는 아닌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자리는 아닌지, 대선과 같은 정세를 겨냥한 자리는 아닌지, 자기 내용만 전시하는 자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운동포럼이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할 문제의식과 포럼에서 다룰 내용을 좀더 숙고한 다음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제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4월 27일, 2차 간담회를 열고 포럼의 위상을 확인하다

: (가)사회운동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가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운동포럼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운동포럼을 △사회운동의 연대성 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크 △기존 운동의 관성과 자기 운동의 담장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으로서의 공동 전망과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장 △생활/투쟁의 거점으로서의 '지역', 기층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하는 장으로 일구어내자고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사회운동포럼이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교육과 참여의 공간을 함께 열어보자고 뜻을 모았고, 운동간 횡단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운동단위들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7월 조직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그 이전에는 준비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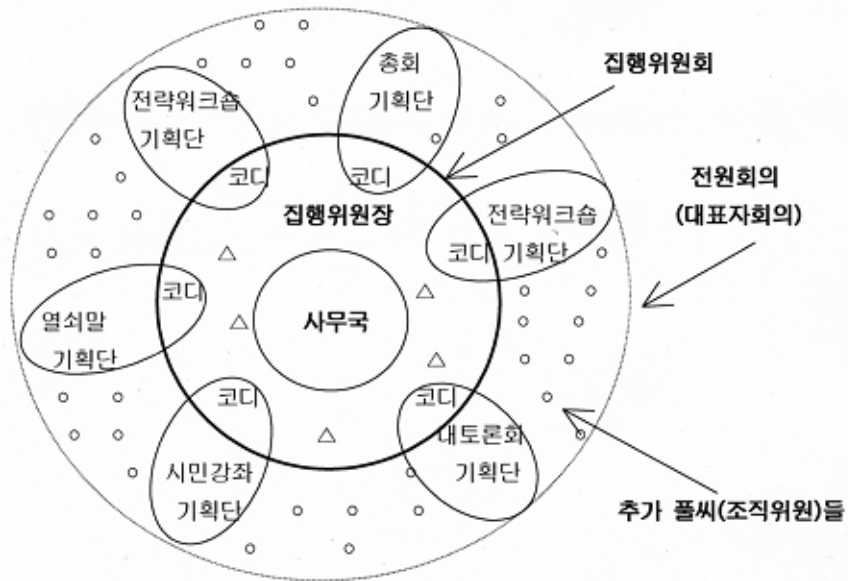
□ 2007년 5월 9일, 전원회의 준비모임을 열다

: (가)사회운동포럼 준비위원회 전원회의(대표자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가졌습니다. 전원회의(대표자회의)에 제출할 포럼 기획안과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 2007년 5월 16일, (가)사회운동포럼 준비위원회가 뜻을 올린다

: 참가단위 전원회의(대표자회의)를 사회진보연대에서 열고, (가)사회운동포럼 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첫날 대토론회와 마지막날 공동행동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사회운동총회를 열기로 한 한편, 참여단위들의 문제의식을 모아 △지역 △사회공공성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 △새로운 활동양식 네 가지 의제를 사회운동포럼 전체가 함께 고민할 열쇠말(공동의제)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운동포럼 안에 자리잡을 의제별 워크숍 제안서를 검토하고 각 기획단별 사전토론을 거쳐 다음 집행위원회 때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박래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무국에는 이상훈/김혜진(사회진보연대), 최준영(문학연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수평적인 체계로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 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6월 5일, 소통과 연대를 통한 변혁을 꿈꾸는 이름을 짓다

: 준비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가 열려 행사의 정식 명칭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으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이 함께 준비하는 사전행사로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연속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사회운동시민강좌도 기획을 보완하여 더불어 열기로 했습니다.

□ 2007년 6월 14일, 사전행사로 페미니즘 연속워크숍이 시작되다

: 사회운동포럼 사전행사로 준비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연속워크숍 1차 - 왜 현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이 아닌가>가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제로 두 차례 더 열렸습니다.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워크샵 - 일,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6/28, 민주노총서울본부)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3차 워크샵 -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의 실천의 현황과 과제 (7/12, 민주노총서울본부)

□ 2007년 6월 18일, 3차 간담회를 열다

: 사회운동포럼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집행위원장 명의로 공개 호소문을 돌리고 조직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가졌습니다. 몇몇 단체들이 간담회에 추가로 참석해 포럼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 2007년 6월 20일, 티를 잡고 풀씨를 모으다

: 준비위원회 2차 집행위원회를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고 각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워크숍 기획들을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참여단위와 개인들이 공동행동전략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뜻을 조율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균관대가 장소로 확정되었고, 소통/연대/변혁을 함께 싹틔울 풀씨(조직위원)를 모으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 2007년 7월 5일, "소통에 사무치다, 연대에 미치다, 변혁을 외치다"

: 준비위원회 3차 집행위원회를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고 각 기획단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양한 기획단들이 구성되었고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간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교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동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원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뜻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의 슬로건이 격론(?) 끝에 "소통에 사무치다, 연대에 미치다, 변혁을 외치다" 로 결정됐습니다.

□ 2007년 7월 5일, 원탁에 둘러앉아 공동의 전망을 찾다

: 공동행동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1차 원탁회의가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 마지막 날에 채택될 공동행동전략과제 구상을 검토하고, 참여한 단위들의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운동의 반성을 좀더 진솔하게 담아내자, 각 기획단의 논의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하자 등등의 의견이 나왔고,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조율을 위해 2차 원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사회운동포럼 첫날 열리는 대토론 1, 2부에 모실 사회자와 토론자, 준비 기획단이 사회진보연대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1부와 2부 내용을 기획했습니다. 1부는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망에 관한 이해와 제안을 중심으로, 2부는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경험과 제안을 중심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 2007년 8월 7일, 긴급한 현안투쟁 속에서 뜻을 다지다

: 조지위원회로 전환한 뒤 첫 번째로 열린 5차 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운동 내 긴장과 피로도가 높아져 왔고 그 여파로 몇몇 기획단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스럽게 공유됐습니다. 그래도 사회운동포럼을 행사가 아닌 운동으로 생각한다면 역량을 잘 배분해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뜻을 다지기로 했고, 뒤늦게 개통된 정식 홈페이지를 통해 준비 내용을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8월 7일, 원탁에 둘러앉아 사회운동의 반성지점을 고민하다

: 사회운동총회에 내용을 ‘총회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2차 원탁회의가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사회운동의 반성 지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제출되었는데요, 소통/연대/변혁이라는 세 열쇠말을 부여잡고 사회운동 주체들의 내부 반성과 돌파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공동행동전략과제로 제출할 안들을 재편성하고 순서도 다시 잡으면서 한 번 더 기획단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8월 20일, 선언문 작성을 위한 공개토론을 갖다

: 총회 선언문 수정안을 갖고 포럼 내외부의 의견을 듣는 공개 원탁회의를 한 차례 더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행동전략과제를 사회운동총회 전체 참가자 이름으로 선언하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총회 선언문과 별도의 문서로 공동행동전략과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행동전략과제는 각 기획단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신기로 했습니다. 선언문에서 여전히 부족한 내용은 이날 토론 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선언문 최종안 작성을 기획단에 위임하기로 하고 포럼 기간 동안 나온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8월 21일, 마지막 집행위원회를 열다

: 본 행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마지막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풀씨 모집 현황, 딱판 홍보 계획, 개-폐막식 기획, 자료집 원고 마감일, 행사 진행 활동가 추가 결합 등을 검토하면서 차질없이 포럼이 준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실무를 점검했습니다.

□ 2007년 8월 22일~29일, 논의 정리와 딱판 홍보에 힘을 쏟다

: 22일 1차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최종 웹자보를 배포하는 등 딱판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각

기획단별로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원고를 쓰는 데도 진땀을 찌는 시기였습니다.

□ 2007년 8월 30일, 사회운동포럼 막을 올리다

: 30일 5개월 가까이 준비해온 사회운동포럼이 아래와 같이 조각보를 엮어 막을 올립니다.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총회 진행 순서

사회 : 박래균(사회운동포럼 집행위원장)
유익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때: 2007년 9월 2일(일) 오후 3시-6시

□ 곳: 상균권대학교 법대 B107호

□ 개회 선언(3분)

□ 사회운동 포럼 경과, 진행상황 보고(5분)

□ 사회운동 선언문 초안 및 공동전략과제 초안 발표(10분): 공동전략과제기획단

- 사회운동 선언문의 의미와 작성 진행경과 보고 설명 구성 취지 및 1~3차 원탁회의 논의 내용 보고

□ 각 기획단 논의 결과 발표(60분)

- 각 기획단 별로 1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획단의 취지-논의 결과-운동 과제-기획단 향후 전망 등을 발표

(10분 간 휴식)

□ 토론 주제 확정 후 토론(40분)

□ 제1안 토론(30분)

- 각 기획단 및 플로어에서 공동행동 등을 제안하고, 이를 토론

- 사회운동 포럼의 전망에 대한 논의

□ 사회운동 선언문 확정(5분)

□ 사회운동포럼 선언문 낭독(5분)

사회	운동	포럼
----	----	----



총회 선언문(초안)

2007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총회 선언문

**소통/연대/변혁'의 원리로 사회운동을 혁신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 다른 세상을 건설하자 !**

1.

사회운동포럼은 전쟁과 빈곤을 확산하고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우리는 1987년 6월 함쟁과 노동자 대투쟁 20년, IMF 위기 10년이 지난 오늘,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사회운동의 전망을 공동으로 계획하고자 했다. 지난 4일간 사회운동의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포럼의 성과를 집약하여 선언한다. 우리 앞에는 걸어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이 놓여 있다. 우리는 오늘의 결의를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 머나먼 길에 같이 가야 할 수많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에 갈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 사회운동의 현장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는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고 미래를 파괴하는 저주스런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이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며 오직 이윤의 팽창을 위해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까지도 마음대로 상품화한다. 전 세계의 부와 자원이 북반구로 집중하며 세계적인 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 WTO,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민족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하며 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폭력적, 배제적인 정치를 일반화한다. 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 민주주의의 파괴,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야만의 시대를 향한 회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

이런데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일한 대세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을 극복하고 민중의 대안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민중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미래이며, 민중에게는 언제나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3.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을 향한 대중적 열망은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와 독점재벌의 억압과 수탈에 맞섰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열망을 배신하며 최초의 문민정권,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환호 속에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세계화와 IMF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앞장섰다. 자신을 87항쟁의 적자로 내세우는 노무현 정권은 제국주의와 자본의 편에 서서 한미 FTA 체결과 노동법 개악에 몰두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나섰다. 남한의 지배세력은 재벌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세계화에 편입하여 살아남는 것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 방안이라며 강요하고 있다. 지배세력의 이러한 전략은 남한 민중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착취와 억압, 전쟁과 폭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에 모인 우리는 이미 실패한 미래일 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예정한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이전의 운동의 무기력과 오류를 딛고 새롭게 출현한 전 세계적 대안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과 함께 우리는 스스로 대안이 되는 길에 나서고자 한다.

4.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본격화했지만, 사회운동은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노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운동적 관성을 답습하고,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운동 내 민주주의의 기쁨을 훼손하였으며,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연대가 아닌 상층연대에 매달리면서 각종 조직 내 헤게모니 장악에 몰두해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노동조합은 자기중심적 실리주의에,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한 진보정당은 선거정치에 경도되어 사회운동적 성격이 탈각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들로부터 고립되어 어떤 희망도, 감동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배세력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을 각종 차이들을 내세워 분할하고,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온 탓이다. 사회운동은 1990년대 이후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국제주의, 인권, 페미니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과 같은 대안적 가치와 결합하지 못한 채 개별 운동으로 분화만 되어 갔고, 진정한 연대와는 점차 먼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운동사회의 분화, 지배 권력의 세련된 탄압, 보수주의의 새로운 확대 등 사회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운동 내부는 조직이기주의, 남성중심주의, 학력주의, 경험주의 등 잘 못된 습성과 오래된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자기 혁신과 사회변혁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스스로를 혁신함으로써 부분적인 연대를 넘어 사회운동의 통합적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5.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억압과 착취, 폭력과 불평등이 강화되는 현실을 지양하고 민중의 집단적인 운동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고 자유와 평등, 연대를 실현하는 사회운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소통연대변혁”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소통

소통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동시에 우리의 내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제한 없는 소통은 오직 단결과 소외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관계 맺기를 가로질러 대안적이고 변혁적인 관계 맺기의 새로운 고리가 될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분출하는 운동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신뢰에 기초하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수평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공동의 실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대

연대는 운동의 목적인 동시에 운동의 확장 과정 그 자체이다. 소통을 경유한 경계 없는 연대는 오직 갈등과 배제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에 맞서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배타적 집단주의가 아닌 호혜와 나눔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 맺기가 바로 연대이다. 우리는 의제 간, 조직 간의 기능주의적 연대를 넘어 이념, 개인, 조직 등 다양한 관계망을 횡단하는 삶의 원리로서 연대를 인식해야 한다.

지배 권력은 언제나 성, 인종, 직업, 문화적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한편 민중을 분할하고 대립하도록 만든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원리로 이러한 분할 통치

전략을 해체해야 한다. 나아가 연대의 원리 속에서 경쟁밖에 상상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넘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변혁

변혁은 착취, 억압, 폭력 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타협 없는 변혁은 민중을 자본주의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중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우리의 기획인 동시에 실천이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그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처방이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중의 삶의 위기는 억압과 착취, 폭력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생태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실과 완전히 단절하고 사회를 변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변혁은 결코 결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기 성찰에서부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변혁은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공유되고, 연대를 통해 확장될 것이다. 변혁은 자본주의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맞서는 다양한 가치들과 주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구성될 것이다.

6.

소통/연대/변혁을 원리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해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변혁이념은 민중에게 빈곤과 전쟁의 고통만을 안겨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향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착취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민중이 지배세력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를 구축하는 설계도이다. 거기에는 성별분업과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가족제도를 변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이상이 포함될 것이다. 당연히 민주주의, 평화, 인권, 생태주의 등 보편적 가치가 노동해방의 이념 위에 새로이 재구성되어 통합되는 그런 설계도일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그런 전망 가운데 새롭게 다가와야 한다.

그런 변혁적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운동의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운동의 혁신을 통해 운동의 전망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노력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소통과 연대,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의 변혁적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변혁에 대한 전망은 대안사회의 상을 담은 청사진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으로 제기 되는 투쟁과 요구를 단순히 합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대중운동과 대안에 대한 정치적 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 결합되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의 논의로 출발하여 사회변혁 이념의 정립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대안사회의 이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래로 발전해온 사회운동 이념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 위에서 대안적인 변혁이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에 참가한 우리는 진보운동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운동 과제”를 본 선언과 함께 붙임 자료로 제안한다. 우리는 이 과제에 대해 많은 사회운동 주체들이 “소통/연대/변혁”의 방향성 속에서 같이 토론하여 더욱 풍부한 운동적 과제를 합의하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통과 연대를 통해 변혁의 전망을 만들어간다는 사회운동포럼의 취지는 ‘2007 사회운동포럼’ 행사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승되고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운동포럼에 참여한 주체들은 물론 수많은 사회운동 주체들과 함께 사회운동포럼의 내용과 과제를 공유해 나갈 것이다. 우리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총회 참가자들은 이상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선언을 합의에 의해서 채택, 선언한다.

2007년 9월 2일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총회 참가자 일동

(붙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2007 사회운동의 과제 (Ver 1.0/2007.9.2)

* 이 문서는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을 준비하고 참가한 기획단의 논의를 수렴하여 총회 선언문과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동안에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사회운동의 공동실천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이 문서에서 나열된 과제들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㉑ 민주주의의 후퇴에 맞서 급진적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를 부정하고, 파괴한다. 정부의 행정행위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국가폭력을 노골화하며,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 입법부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법제의 수립에 매달린다. 사법부의 계급적 본질은 더욱 강화된다. 이렇듯 국가는 총체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중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부정되거나 축소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계급억압을 강화하는 국가에 맞서 민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기획한다. 우리는 민중이 스스로를 대표하고, 민중과 소수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국가, 세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자본과 국가에 권리를 위임하는 정치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

[과제]

- 국가 권력이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행하는 모든 폭력에 철저히 반대한다.
-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하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장 강화한다.
- 국민소환, 국민발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국가기관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강화한다.
- 다양한 (지역) 자치의 확보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 다양한 사회소수자의 ‘자기결정권’ 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투쟁한다.

㉒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인종, 피부색, 성, 성적체성, 장애 및 질병에 의한 다양한 차별이 확대되고 강화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은 경쟁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스스로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며 표현할 수 없다. 소수자들은 그 본연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경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할 수 없다. 우리는 소수자 운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진보성에 주목하며, 소수자 운동이 제기하는 다양한 관점을 사회운동의 지향으로 받아 안는다. 우리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차별의 강화와 확대에 맞서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평등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과제]

- 우리 사회 주요 차별 문제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어린아청소년 등의 차별 문제를 사회운동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재해석하고, 그로부터 자본주의적인 차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 HIV/AIDS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자본주의 체제가 강조하는 가족의 효율성으로부터 소외와 차별받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의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한다.

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빈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대부분이 쉽게 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의 양상이다. 한국사회의 빈곤은 전체 인구 중 716만 명의 소득이 최저생계기준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의 심화와 빈부격차의 극단적 확대와 부유층 소득점유율의 확대로 드러난다. 오늘날 빈곤은 '노동빈곤'이라는 형태의 일반화로 대표되며 그것의 원인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있다.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맞선 투쟁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은 당사자만의 치열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의 절박한 과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현재 심화확산되는 빈곤의 원인을 밝히고 자신의 과제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에 의존적인 제도의 수혜자라는 수동성을 벗어나 빈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투쟁을 형성할 수 있는 반빈곤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과제]

- 잔여적,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민중의 재생산 권리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사회복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 공적 서비스의 상품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실업자,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의 투쟁을 조직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 심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대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반빈곤운동을 사회운동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한다.

④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변혁하자

현재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는 성별분업과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단위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을 분리하여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모델을 유지해왔다.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은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재생산한다. 여성의 육체, 성욕은 가족 내에서 출산의 의무에 종속되어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은 박탈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같은 여성정책에서 드러나듯 여성은 생계보조자로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편 가족 내에서 노동력 재생산, 양육과 노인부양을 책임지도록 동원되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린다. 성별분업-성차별주의에 의해 정당화된 여성의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노동의 일반적인 형태로 전체 노동자계급에 확산된다.

이처럼 노동권과 여성권이 완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로 결합되어야 하며 그럴 때 성별분업과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가족을 변혁할 수 있다.

[과제]

- 여성의 모든 차별에 대해 반대하며,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파괴하고 여성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공사분할-성별분업-성차별이데올로기를 폐절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신체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한다.
- 여성의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철폐하는 투쟁을 전면화한다.
-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가내노동, 재생산노동, 비공식노동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투쟁한다.
- 여성이 스스로 대표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조직화/자기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불안정노동과 저임금, 비공식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은 오로지 주식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일상화되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악화되어 노동자 계급의 삶 전반이 위협받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며,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저항할 권리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주노동자/자국노동자, 여성노동자/남성노동자를 가르고 분열시키는 자본의 전략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파괴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생활 문화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면서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이에 맞서고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편 남한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안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는 등, 착취의 영역을 이미 세계화해오고 있다. 또한 남한정부역시 자원 확보란 명분으로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병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자본과 함께 벌이고 있다. 우리는 남한 자본의 해외 민중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해외 민중들의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연대한다.

[과제]

- 파업권을 비롯한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장시간 노동의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 노동 현장에서 자본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는 자치를 복원한다.
- 노동유연화, 불안정화, 차별화를 분쇄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한다. 실업-반실업 상태의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 노동시간의 자주적인 기획, 노동자의 여가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문화적 권리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나선다.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철폐한다.
- 사업장에 갇힌 조합주의와 경제주의를 넘어, 지역으로부터 노동자-민중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적 성격을 강화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쟁취하고 차별을 철폐한다.
-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㉕ 공공영역과 자연자원의 사유화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공공부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교육, 보육, 의료, 물과 에

너지 그리고 통신과 운수 등 대부분의 영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부분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미 심각한 철도, 통신비의 인상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 및 철도와 통신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를 보고 있다. 또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강화되면서 빈곤의 심화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교육비 인상으로 인한 교육 받을 권리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형 인간의 양성 등의 교육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비의 인상과 공공성의 파괴로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차별적인 개발 논리 아래서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유화를 통해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며, 사회공공성의 확보와 강화는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운동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이행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 사회 공공성 투쟁은 구조와 계도를 변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이 삶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자치,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과제]

- 의료,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시장화를 반대한다.
- 누구나 치료받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쟁취한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주거권을 쟁취한다. 주택과 토지의 민중적 통제권을 쟁취한다.
- 물, 에너지, 철도, 전기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고 민중의 권리를 확대한다.
-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여 자본주의 이후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 토대를 마련한다.

㉔ 생태위기에 맞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자본주의는 자연생태계를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체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이후 파괴된 생태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 밀림과 산림의 남벌과 갯벌과 습지 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농경지의 파괴와 사막화 재앙,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대량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가 복합적인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는 기후난민을 비롯해 민중의 삶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간다. 생태계의 파괴는 부국보다는 빈국에, 지배계급보다는 피지배계급에 더욱더 심각한 생존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생태계의 파괴를 통한 인간 재앙이 가속화되는 어떤 개발에도 반대한다.

[과제]

- 반생태적 국책사업, 지역주의적 개발에 반대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전략을 모색한다.
-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낳는 화석연료, 핵에너지 억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다

만, 민중들의 생존과 자연의 파괴를 일삼는 자본 중심의 대안에너지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 유전자조작 등 생명공학 기술의 확대와 적용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가 가축을 위협성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다.

○ 반생태적 사회체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하며, 사회운동 내에서 생태적 가치가 공유되고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㉔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에 맞서 국제적·민중적 대안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 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각종 무역협정들은 금융적 팽창을 꾀하는 초민족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 는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히 확대하는 반면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며 세계의 부와 자원을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 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역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과제]

○ 투자과 무역은 자본의 이윤 확대를 목표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민중의 필요를 바탕으로 민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자본의 효율성이 아닌 노동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초국적 농기업의 수중에 전 세계의 농업·식량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무역체제는 해체되어야 하며 민중의 식량 주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물·에너지·교육·의료 등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며,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약자본의 배판 불리는 특허권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이 우선이다.

㉕ 미제국주의와 동맹세력의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오늘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확산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무력화하고,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되는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9.11 이후 이른바 ‘대테러전쟁’ 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중동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침공 5년을 맞이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혼란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파괴는 무한히 거듭되고 있다.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점령 종식, 그리고 레바논의 평화, 팔레스타인 해방 등 군사세계화로 인한 모든 전쟁과 군사기지를 반대하며 절멸과 무한전쟁에 맞서는 ‘평화주

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 세계화'에 맞서 반전운동을 더욱 확산할 것이며 평화를 옹호하는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과제]

- 미 제국주의의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해야 하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운동을 지지한다.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은 즉각 철군해야 한다.
- 이란을 비롯한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미국의 '대테러전쟁' 확대에 반대한다.
- 전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동맹을 반대하고 각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우리는 전세계 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하여 미제국주의의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국제평화연대투쟁을 전개한다.

㉔ 한-미-일 동맹 해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북한의 핵 실험 이후 6자회담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앞당길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침략적 강화, 현대적 재편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무기경쟁, 군바무기경쟁의 가속화로 전쟁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서 주둔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명분화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과 군산, 대구, 파주의 지역에서 관철되고 있으며, 기지 신설, 확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대양 해군론'을 앞세워 제주 해군기지를 신설하면서 군사안보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자국의 군바무기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 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부의 일방적인 군비축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동아시아 반기지, 반핵, 반군사주의 연대운동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지역적 연대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이에 한국의 평화운동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 동아시아에 평화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하고, 주둔 미군의 철수를 위해 투쟁한다.
- 주한주일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현대적 재편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 즉각 중단, 파주, 군산, 대구 미군재편 및 이전계획 즉각 중단을 위해 투쟁한다.
- 일본의 재무장화, 평화헌법 개악 반대한다.

- 한-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화 반대에 반대하며,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투쟁한다.
-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고, 남한의 주도적인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를 시작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반도 분단의 종식,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㉞ 신자유주의에 맞서 새로운 지역운동을 강화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각종 지역발전전략, 이른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립 등을 내세워 지역을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은 고용기반의 해체, 공적 서비스의 후퇴, 자본유치를 위한 각종 개발과 투기의 전면화 및 지역 간 경쟁의 격화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반의 붕괴를 가장 최전선에서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지역,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파괴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확장된 민중의 권리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결실함의 반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의 거듭되는 패배 속에서 생기를 잃고 표류해온 사회운동의 대안을 새롭게 구성하고,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보다 굳건히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다.

[과제]

- 지역의 불안정 노동자 및 사회적으로 배제된 기층 민중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지역운동을 만들어 나간다.
- 신자유주의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등이 조직의 형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지역연대투쟁을 강화한다.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정치와 지역경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토착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배력을 제거한다.
- 아래로부터의 교육, 문화, 생활공동체운동을 실천한다. 교육, 문화운동에서 시작하여 주택, 의료, 언론 등의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점차 확대한다.
- 지역연대, 조합, 공동체운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연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실천을 만들어 나간다.
- 지역개발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생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㉟ 사회변혁은 사회운동의 혁신으로부터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안사회의 원리는 운동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전 과정에서 실천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높낮이 없는 운동, 차별하고 밀어내지 않는 운동, 자유와 책임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운동을 일구어내는 일은 사회변혁의 출발이자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새롭게 담금질하는 일, 운동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민중과 만나며 민중이 주체로 선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도 ‘외톨이’ 운동언어와 주변부에 밀려난 교육, 열망을 잃어버린 관성화된 집회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제]

○ 민주주의는 운동이다. 운동사회 안에 존재하는 높낮이를 거둬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실천부터 꾀한다.

○ 의사결정의 순간에만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넘나드는 소통은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새로운 유대를 일구는 힘이다. 소통의 힘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길러져야 함을 받아들이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움과 실천을 시작한다.

○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운동의 과제와 목표를 끄는 과정, 사람과 사람/운동과 운동의 관계 맺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은 운동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성적 차이에 눈감은 현실 인식, 전통적 성역할을 이어가는 역할 분담, 여성 활동가들을 밀어내는 구조와 문화, 성폭력 등을 운동사회로부터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민중과의 마주침과 소통은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풀무질과도 같다. 그러므로 민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일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인권 생태 평화 페미니즘 등 보편 가치들이 녹아드는 운동, 민중이 주체로 서는 운동, 변혁을 열망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교육, 민중과 함께하는 교육, 전통적인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위아래를 해체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운동에서 실천되고 있는 교육경험들이 만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집회는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변혁에 대한 열망을 분출시키는 표현의 장이다. 집회 참여자들 사이, 집회 참여자와 민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장이기도 하다. 집회가 가진 이러한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눈앞에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부터 바꾼다. <끝>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대토론회1부



사회 운동 포럼

사회운동 대토론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사회운동 대토론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C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3시-6시

C 곳: 성균관대학교 법대 B107

C 모실 분들

▷ 사회: 백승욱

▷ 이야기 손님: 나영(문화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김영희(장애여성공감), 송석현(노동자의 힘),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장석준(전진), 조대환(이윤보다인간술), 호성희(여성운동전략기획단)

사회운동 대토론회 1부 토론 요지: 질문들

I. 시대 인식의 쟁점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성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자유주의 시대의 변화를 세계적인 차원과 남한 사회의 차원을 구분해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운동분야에서 느끼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I.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적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덜 주목하고 있지만 중요한 측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전개에 특징은 무엇이며, 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치 상황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중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올해 87년 2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중운동의 성장기이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중운동의 위기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또는 그 이상의 시기로 확대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통의 기반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운동영역 상호간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 특히 87년 이후 남한에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운동의 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기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되살리거나 강조할 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87년의 대중운동의 시기는 그 이후 대중운동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대중운동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2. 운동노선의 평가

- 과거 운동노선에서 계승할 부분과 문제로 삼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과거 사회운동이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 영역과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사회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직방식, 연대방식, 쟁점 형성 방식 등에서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이 지향하는 바처럼 소통/연대/변혁이 가능한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토론회 보려 합니다. (대토론회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1. 대중운동의 혁신

- 대중운동으로서의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중운동의 틀을 고수하면서 그 내부적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적 틀과 쟁점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사회운동의 틀은 지금까지의 구도와는 핵심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 대중운동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 사이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자 부문별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서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페미니즘 운동과 소수자 운동이 던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다른 운동 영역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중과 시민을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 운동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

(여기서는 혁신된 사회운동은 어떤 조직적 전망 속에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당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앞서 운동 혁신에 대한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 쟁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회운동과 정당 간의 관계

- 노조/정당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운동 내에서 정당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만약 정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운동에서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국가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국가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핵심에 공공성 투쟁을 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공공성 투쟁에 대해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성 투쟁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변화를 운동의 목표로 삼는 투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NGO 운동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정책의 변화는 민중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운동-사회정책-국가 사이의 관계를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여기에서 (2)의 질문인 정당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공성 투쟁 외에 상품화의 진전을 반대하는 투쟁의 형태는 가능하겠습니까?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대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현실의 조건을 인정하는 속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로만 제기되고 있고, 대중운동의 발전에 반드시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토론회의 논의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1. 대안의 문제

- 대안 사회에 대한 논의가 정책대안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중운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운동간의 연대,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전환한 사회운동의 대안적 전망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2. 이행론과 혁명론

- 과거 이행론/혁명론 논쟁에서 계승 또는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3. 국제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대안세계화

- 대안세계화 운동은 기존의 운동방식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문화연대 나영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인간보다 이윤을’, ‘모든 권력을 자본에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가치들이 모두 시장과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끔찍한 비인간적 노동과 생태의 파괴, 기본권의 상실, 세계 전쟁에 대한 반성이 다시 자본의 자유화를 앞세워 모두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생태, 의료, 교육, 전기와 물 등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빠르게 자본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폭넓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재타도’와 같은 단일한 적대전선을 형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은 추상적 구호와 전선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WTO나 FTA 협상 저지 투쟁을 벌여왔지만 협상과 별개로 ‘경제자유구역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매각 등 국내에서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주요 법률과 정책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특징은 대중 조직화나 운동 주체의 재생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서비스 부문’이라 칭하는 영역들은 실상 삶의 모든 영역들이며 또한 ‘재생산의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은 서비스 부문과 공공 영역을 장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삶의 영역(재생산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만이 꾸준히 지배계급으로 재생산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고리타분하고 단순한 국가의 교육과정 대신 다층적인 문해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교육하는 최고급 시설의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그들만의 주택과 그들만을 위한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그들만의 리그에 경쟁하는 대중이 편입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삶의 모든 영역을 서비스 상품화하여 끊임없이 대중을 소비 주체로 호명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공공성', '공동체'의 개념은 사라지고 '각자 경쟁하는 소비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발전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 자본의 자유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FTA로 인해 농업이 무너져도, 누군가가 분신을 하고, 경찰에게 맞아 죽어도, 납치된 이들이 사살을 당해도 모든 상황을 '그들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국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맙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군사 세계화가 힘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한 대중의 지지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운동이 변화해야 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상적 구조와 사안별 대응 투쟁, 몇 차례의 대정부 집회만으로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신자유주의 자본의 전략과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비아 캄페시나 활동이나 쿠바의 행보가 보여주듯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중과 함께 구체적인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대안을 구축해 나가는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질문〉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를 거쳐 IMF 시대를 지나면서 급진전되어 왔습니다.

주요하게 지적되는 노동유연화 정책과 민영화, 굵직한 자유무역 협상들과 자유화 조치 등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때들들께서 보다 잘 다루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 외 민중의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세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부문에서의 변화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최초로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화했고, 6.31 교육개혁안을 통해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했습니다. 96년 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대학 구조조정은 대부분의 대학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단순 교양교육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 NURI, BK21 등으로 인해 학문연구 있어서도 철저하게 자본에 종속된 연구 기관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학생들이 자신을 오직 '예비 취업생'으로만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과 학생운동 침체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DJ 정부에서 시작된 7차 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경쟁과 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주체를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완성해냈습니다. 정부가 교육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고리로 삼았다는 것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

입니다. 교육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주체를 양성하는 핵심 영역이며 공공 서비스 영역 중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강화와 실용학문 중심의 지식 재편, 다기능적 노동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교육 개혁의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31 교육개혁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은 대학 교양과목의 절반 정도는 영어 관련 과목이고 대학생들은 전공 대신 영어와 고시 공부에 몰두하고 있으며 자본은 대학을 잠식했습니다. 한편, 국립대 법인화와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고등학교 등은 이제 교육 부문은 완전히 시장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할 때, 한국 사회운동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했고 참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특징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카드 및 대출 규제 완화의 결과 양산된 대규모의 불안정 노동인구,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이로 인한 대중의 무력화입니다. IMF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단협이나 파업은 너무나도 먼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이를 뒷받침 해주기는 커녕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심지어 사측과의 협상 도구로 이용하기까지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 체념하고 운동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정한 임금 구조와 생활고를 카드와 대출을 통해 해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97년의 폭풍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용불량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빚 때문에 다시 비정규직이 되고 있으며 생활이 불안정한 대부분의 이들이 카드로 살고 나서 월급 나오면 카드값 갚고 다시 돈이 없어 카드로 생활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한 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랜드 투쟁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용감하게 거리로 나섰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정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DJ 정부 이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통일 담론,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의 결합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과 통일 정책은 범여권의 중요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운동진영에게(특히 좌파운동진영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아직까지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남북 경협과 통일 이데올로기는 남한 자본을 살찌우고 국가 발전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어막이 되고 있음에도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통일 정책이 곧 평화 정책인 양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군사세계화에 동참하고 미군 기지를 확대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통일-자유무역을 통한 강대국 건설'로 대중에게 이해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폭력적인 전쟁 동참과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통일-자유무역' 쉼트의 본질을 드러내고 명확한 대응 이데올로기 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1.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2. 운동노선의 평가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대중운동의 혁신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3. 운동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
 - (1) 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1)에 대한 답변

대중운동, 연대운동의 현재 모습들

-어떤 사안이든지 일단 이름부터 걸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운동의 방향이나 쟁점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100개 단체가 이름을 걸어도 실제 활동하는 단체는 많아야 대어섯 단체에 불과하다.

-중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한 연대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민주노총, 전농, 전교조 등 거대 조직의 이름을 넣어야 하며 우선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후 활동에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조직은 선거 시기 때마다 활동 역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선거 승리를 의식한 활동들에 집중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연대체의 전체 활동 역량이나 활동방식 자체가 타격을 입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집회나 토론회, 언론에서의 발언권은 그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들 보다는 일단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아래로부터의 소통 구조가 부족하다. 상층 집행부의 결정은 현장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파적으로, 조직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개별 사안들에 대해 내부 논의와 소통의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규모 대중 집회에 집착하지만 탁상 집회는 매우 관성적으로 조직되고 진행된다. 일단 대규모의 대중 집회를 해야 무언가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집회는 20년 쯤 발언하고 행진하고 조금 싸우다가 해산하는 관성화 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작 그 자리에 모인 개인들과 개별 조직, 대중운동 단위들의 목소리는 집회에서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한다. 집회에 참석한 수백 명이 3시간 가까이 무대만 바라보며 앉아서 박수치다가 각자 놀다가 또는 서성거리거나 술을 마시다가 행진할 때가 되면 플러스 라인을 따라 열맷취 권거나 뛰고 경찰이 막으면 싸우다가 어느 정도 경찰과의 합의 하에 집회를 마무리 짓고 해산해서 술을 마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90년대 후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집회 전에 모여 사전 교양이나 논의를 하고 각자 선전물을 준비해오는 모습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여성, 장애, 교육, 생태환경,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의제가 발굴되었지만 운동 진영 내에서는 이를 사회적 의제로 내세울지언정 정작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의제들을 의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많은 사회운동 조직들이 교육 연대체에 이름은 걸지만 여전히 교육투쟁은 교육단체만의 몫이고, 단체마다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장애인 투쟁에 연대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운동 진영 내에서조차 화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동가 간의 다양한 성적 차이와 지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활동 방식 등은 진정한 연대와 폭넓은 활동가 재생산 구조를 가로막고 있다.

-회의나 집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전체 활동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거대 민주운동 조직, 노동조직 중심이고 대부분의 소규모 단체들이나 영역운동, 소수자운동 단위들은 형식적으로 끼워지거나 단순 실무만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 단체에는 문화제를 준비하거나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와 공연 단체를 섭외하는 역할만을 기대하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발언 기회를 한 번씩 주기는 하지만 전체 집회나 토론회 내용에서는 당사자들과 관련한 의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성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발언에서도, 전체 활동에서도 소외된 주체들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실제 정책의 영향은 각 지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마다 보이는 경향도 모두 다르다. 지역 민중들의 상황에 따라 정책이 미치는 효과나 이데올로기 지형도 다르고 지역 정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민중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회운동진영은 대정부 투쟁, 서울 중심 투쟁, 큰 사안 중심 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민중의 삶은 노동현장과 거주 지역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분산되고 있는데 운동 진영은 과거의 관성 그대로 활동함으로써 대중없는 대중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거대 조직, 상층단위 중심의 연대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연대 방식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대 조직에 기댄 연대체 활동이 반복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두 가지가 대중 동력과 재정 문제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대중 집회 중심의 활동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시도도 필요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중 집회를 끊임없이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집회는 이미 조직화된 대중을 최대한 많이 집회에 '참석'(참여가 아닌 오로지 '참석')하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대 조직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고 다양한 집회 방식을 고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화 된 대중 외에 보다 다양한 대중들과 함께하기 위한 집회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꼭

다 같이 한 장소에 열 맞춰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무대가 꼭 정면에 하나만 있을 필요도 없고 발언과 공연이 꼭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집중이 필요할 때는 함께 집중하되 집회 장소 사방에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무대를 설치하고 누구나 여기저기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직접 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집회를 기획한다면 굳이 조직화 된 대중 동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거대조직의 형식적 연대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연대와 활동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을 고려해 지금과 같은 조직 중심의 연대체 외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방식의 연대활동을 시도해 보았으면 한다.

네트워크에는 조직과 개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되 이름만 거는 연대가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의제와 사업을 제안하고 뜻이 맞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정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때 그 때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 방식은 조직 간 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도 시도될 수 있다. 상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과 선전, 조직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부나 지회별로 또는 개별 현장과 내부 조직별로 각기 다양한 의제와 행동을 제안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단위들이 공동행동을 기획한다면 보다 다양한 의제와 의견들을 담아낼 수도 있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미 10년 이상을 지루하게 반복해 온 문제제기 이지만 더 이상 여성, 환경, 교육, 장애,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의 의제는 민중운동 또는 노동운동과 별개의 '영역운동', '당사자 운동'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동시에 함께 해결해나갈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사회운동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의제들과 연계하기 보다는 '1+1'의 방식으로 고민해 왔다. 새로운 대중운동의 영역이 생길 때마다 1+1+1+1...의 형태로 사고해서는 각각의 사안이 모두 개별화될 뿐이다.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의 한 마디를 기억하자. "당신들이 단지 우리를 도우러 왔다면 돌아가시오. 그렇지만 당신들 고통의 근원과 우리의 그것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종소! 함께 싸웁시다." 1+1은 돕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물방울 안에 다양한 분자와 원자들이 존재하다가 상황에 따라 각기 모이고 흩어지면서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는 것처럼 여성 문제나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임을 생각하고 기체나 액체, 고체를 형성할 연대 고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돕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사안과 관련한 투쟁이 있을 때 지금은 교육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노조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은 가끔 집회에 와서 연대발언을 하는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교육 문제는 주체 재생산의 핵심적인 고리이자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요건이며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자기 주변의 친구와 친척, 자식들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 그들이 '약한 여성이고 자식을 둔 어머니이고 생활이 어려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전체 노동 구조상에서 처한 여권이 곧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소수자여서'가 아니라 차별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 '여성국'을 둔다고 조직 내에 여성주의 문화가 형성되거나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발언과 의무적 연대 이전에 조직 내부에서부터 소통방식과 회의 구조, 조직의 활동 방식, 뒷풀이 문화 등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성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반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성 단체의 집회가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을 파견해서 발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으로 반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여성 노동권의 문제가 어떻게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지, 가사 노동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수시로 함께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대표자나 활동가 뿐 아니라 조직 내의 보다 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사회 영역과 소수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제안을 모두 포함한 형태의 지역에서의 활동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지역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운동권 중심의 활동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짧은 경험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지역운동은 운동권의 활동 지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성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들을 기대한다면 시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지치거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접근해야 하며 오랜 시간을 두고 성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활동은 분명 대중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장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한 동시다발적이고 산발적인 행동들이 활성화될 때 중앙 집중적 형태의 대규모 대중 집회보다 훨씬 위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가들이나 자신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조직 내 대중들도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체감하고 직접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제안한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도 지역에서 보다 유용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규모에 집착하지 않고도 지역 내의 각 단체나 운동 주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직접행동이나 참여형 집회를 공동으로 기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나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주체 재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지역에서는 여성, 교육, 보건의료, 환경, 장애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한 활동들이 당사자들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중들의 삶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으며 그러한만큼 각기 다른 활동 영역 간의 다양한 교차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발생한다. 사실 사회운동진영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각기 제 영역을 별도로 가진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민중들에게는 그 모두가 다 개개인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로 닥쳐올 때 민중들은 주저함 없이 나선다. 지역의 민중들

을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각기 자신의 문제를 걸고 함께 싸울 주체들로 본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사회운동의 대안의 장으로써 지역은 가장 중요하고 폭발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질문〉

(2) 사회운동과 정당 간의 관계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신자유주의의 반대 운동의 핵심에 공공성 투쟁을 놓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공공성 투쟁'이란 국가의 공공정책에 기대거나 공기업 등의 공공 영역을 단순히 사수하는 투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국가 정책으로서의 공공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 전기, 교통, 통신, 교육, 의료, 보육 등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주요한 공공영역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에 기대는 공공성 투쟁'이 아니라 '민중이 직접 자율적 삶을 구성할 수 있는 공공성'을 구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국가 기구와 대의 정치의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한 민중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정당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정당이나 국가 정책에 기대하는 것 보다는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투쟁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많이 이야기되는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시도가 비단 정부 차원의 공공 영역이나 정책을 유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민중들이 구체적인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소규모의 다양한 공동체들을 구성하여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기에 이에 기반을 둔 탄탄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멕시코에서 역시 신자유주의의 저함 세력이 된 것은 어떤 운동 단체나 전국 단위 노동조직, 농민 조직이 아니었다. 탄압의 현장에 있는 민중들이 직접 저함의 주체가 되었으며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자신들의 대안을 구성하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상품화의 진전을 막아낼 힘은 여기에 있다. 의식주를 포함해 여성, 의료, 교육, 환경,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지역 내에서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중의 힘으로 호혜적으로 해결되고 서로의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자체 공공영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공공성 투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태적 문화사회교문네트워크〉의 구성 제안을 담고 있는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의 원고로 대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심광현 교수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새로운 진보적 대안은 거시담론과 미시담론,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사회생태적 과제, 사회적 공공성 강화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긴밀히 맞물리는 지점으로 초점을 이동시킬 때라야 현실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 최근 유고의 차베스가 주도하고 있는 남미 사회주의의 역시 그 지속가능성은 위로부터의 변혁과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긴밀한 결합에 달려 있다고 본다.¹⁾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아래의 진보적 실천이 긴밀히 결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어떤 것일까? 요약하자면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와 생태문화적 모순적 실천의 지역적-전국적-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자본-국가에 대항하며 자본-국가를 넘어서는 생태적 문화사회로의 지속적인 이행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호에서 윤곽을 그려보았던 이 대안적인 거시적으로는 역사적 공산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가는 지속가능한 진보적 사회구성 과정의 기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그간 〈문화과학〉 및 〈문화연대〉를 통해 공유하게 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통해 발전시켜 온 '문화사회론'의 틀을 밑그림으로 삼아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사회구성체론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 1) 조지프 추나라 지음/이수현 옮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다함께, 2006), "볼리바르식 혁명은 근본적으로 모호하다...차베스의 정치는 자신이...쿠데타(1992년에 차베스가 시도함)나 선거(1998년에 차베스가 당선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서 위로부터 개혁을 선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위로부터 선사한 개혁들은 다시 미안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개혁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고유기에 달려 있었다. 만약 유가가 하락하거나 사회 하층민들의 기대가 석유 지원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여전히 베네수엘라 자본가 계급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윤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베네수엘라의 소수 자본가 특권층은 여전히 건재하다...그들은 단지 경제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국가권력도 갖고 있다...국기에 의해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41~47쪽)
- 2) 심광현,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해신을 위하여」, (〈문화과학 45호〉, 2006년 봄호).
- 3) 98년 7월 민교협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라는 글의 한 부분으로 제시한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초보적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과학〉, 동인 내에서 집중적인 토론 끝에 '문화와 경제' 특집(〈문화과학〉, 15호, 98년 여름호)이 만들어졌고, 이어서 '21세기와 진보의 새로운 전망' (16호, 98년 겨울호), '문화사회로의 전환' (17호, 99년 봄호), '노동과 노동거부' (19호, 99년 겨울호)가 구성되었다. 창간 당시에는 말투세르와 푸코, 들뢰즈/가타리 등을 통해 철학적 담론과 사회이론들을 주로 검토했다면, 문화사회론을 구성하면서 망드레 고르, 스태니 이노노비츠, 칼 폴라니, 페르낭 브로델, 폴링가스, 아렌트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99년부터는 생태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필자의 경우는 최근 들뢰즈/가타리에게 아니키즘/낭만주의적인 요소가 과잉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말스를 재검토하면서 미학과 생태학을 매개로 칸트-말스-들뢰즈를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심광현, 「프랙탈」, 〈현실문화연구〉, 2005)

2. 문화사회의 사회구성 : 비자본주의 시장, 민주화된 국가, 자율적 사회운동

신자유주의는 정치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킬 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을 상품화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의료-문화적인 영역과 공공 에너지 서비스 영역마저도 상품화하고자 열안이 되어 있다. 만일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이 영역을 상품화한다면 극소수의 부자들은 더 큰 혜택을 보겠지만 다수는 생존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빈곤과 고통 상태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도 위배된다. 시장적 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월권을 방지하면서 다양한 실천들에게 적합한 상이한 원칙들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⁴⁾에도 부합되면서, 문화적 가치가 사회의 중심 목표가 되는 다차원적인 사회구성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계약/네트워크 실천 유형	분자적	리종적	물적
	사적 소유	협동적 소유	국가 소유
	개인 계약(A)	연합적 계약(B)	중앙 계약(C)
정치적 (평등의 원칙)(D)	인권(1)	직접민주주의(자치)(2)	대의민주주의(3)
사회문화적 (필요원칙)(E)	생활세계(4)	문화민주주의(5)	사회문화공공부문(6)
경제적 (능력 원칙)(F)	시장(7)	자주관리/협동조합(8)	공기업(9)

〈 새로운 사회구성체론을 위한 사회적 매트릭스〉

4)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길사, 2002), 341-346쪽 참조. 이 책에서 이정전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몇 개의 영역으로 가르고 영역별로 가장 적합한 정의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통계적 방법으로 실증해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 경제영역의 핵심인 시장에서는 성과나 능력에 의거하여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의의 원칙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과주의와 능력주의). (2) 반면에 각 개인의 시민권의 행사와 관련된 범위와 각 개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정치영역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정의의 원칙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하며, 법 앞에 평등하고, 시장에서 빛어진 과도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인정되며, 모든 국민이 똑같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적 이익의 추구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며, 오직 공익의 추구가만 정당화될 수 있다. (3) 가족, 학교, 이웃과 같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명목인 사회화 명목(토니스가 말하는 거미인 사르트,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명목)에서는 맑스가 말한 <필요의 원칙>, 또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 통용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개별적 배려나 개별적 봉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매트릭스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두가 자발적 연합의 원리(B)를 배제함과 아울러 정치경제적 실천이 사회문화적 실천(E)을 과도하게 지배하거나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시스템을 운영해 왔음을 직관적으로 보게 해준다. 스탈린주의의 핵심 문제가 정치적이고 중앙집중적 계획원리의 이상 비대화와 월권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경제제일주의와 사적 소유 원리의 이상 비대화와 월권에 있다. 이런 사회들에서는 정당성의 위기가 초래되며 사회적 해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한때 스탈린주의가 그러했듯이 지금 신자유주의는 이런 식의 월권을 통해 자기무덤을 파고 있다.

이 두 극단의 사이에는 사회민주주의적/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라는 다른 길이 존재하고 있다. 서구 사례에서 보듯이 이 길은 계급타협의 산물이므로 자본축적의 위기가 도래하면 언젠가 해체될 수 있고, 타협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노동계급이 국가에 의한 시혜(무상의 공교육과 공공의료 등 사회 복지)에 수동적으로 길들여져 자립과 자치의 능력을 상실하고 상품사회에 포섭되어 자본의 이탈이 노골화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할 정치적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상의 공교육과 공공의료 등 사회복지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강력한 사회 복지는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시민의 자율적 자립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능동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공공성과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율적 연대는 정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적 상호관계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 미국과 영국, 유럽 등지에서 자본축적의 위기가 발생하고 노동대중의 저항력이 약화된 틈을 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어 온 역사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지구상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역시 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자본의 공세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물론 사회민주적/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스탈린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비해 진일보한 사회시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체제의 문제는 자본-국가에 대한 노동계급의 통제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공동의 자립-자치의 능력((2)-(5)-(8))의 형성을 체제 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포섭되며 이런 문제는 대안적인 비자본주의적 공동생활양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나 개별 노조 차원에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 매트릭스로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는 9개의 함 중 겨우 4개의 모퉁이 영역(1, 7, 8, 9)을 채우고 있을 따름이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초국적 독점자본이 시장(7)을 지배하며 나머지 영역 모두를 노골적으로 잠식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87년 체제는 경제 영역의 이상비대화에 비해 정치 영역에서는 일단 절차적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었고 일정하게 인권의 신장도 이루어졌다. 반면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극심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87년 체제의 성과 자체를 의문시 하는 경향도 커져가고 있다) 또 서구에 비해서는 사회문화 영역, 특히 (5)와 (6)의 영역이 미숙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미비되어 토호-관료 연합세력의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대세론을 내세우며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사전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어 (7)의 시장영역이 공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공공영역과 대의제 정부기구마저 일방적으로 침식할 우려가 크다.

현재 위험사회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큰 파도에 맞서면서도 과거 공산주의의 오류를 반

복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적/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이루어냈던 사회적 공공성을 그 이상으로 구축하고, 자본-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가려면 결국 B-E의 축을 새롭게 활성화하여 이 축이 A-C, D-F의 축을 견제하면서 적절히 자기 영역 내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실천의 경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자율적 공동의 자치 능력을 형성하면서 그와 동시에 국가와 시장의 비현실적 사멸을 꿈꾸는 대신 국가(A)를 지속적으로 민주화하고, 시장(C)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독점으로 부터 해방시켜(브로델) 투명한 교환의 장소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런 길이 곧 “생태적 문화사회” 이로 나아가는 길이다.

3. 사회적 공공성 연대와 생태문화코문 네트워크의 구성

이제까지 개인과 집단들은 그 다수가 사회적 시공간의 한쪽 귀퉁이에 내몰려 살고 있고 극소수가 오히려 전체 시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왔다. 진보적 사회변혁이란 바로 이런 상태와 싸우면서 다수가 사회적 시공간의 심자료를 자유롭게 확보하며 프랙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공간의 배치를 역동화시키는 것(위에서 말한 9개의 힘을 가진 사회적 매트릭스 전체가 (1)-(3)-(7)-(9)의 4개의 모퉁이에 의해 압착되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2)-(4)-(5)-(6)-(8)의 십자형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자본-국가가 유클리드적인 격자구조로 압착시켜버린 사회적 배치의 내부에서 노동계급과 다중의 자율적 연대와 협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자율과 자립의 역량을 생산할 수 있는 사이-공간을 만들어내면서 ((2)-(4)-(5)-(6)-(8)을 연결하는 생태문화코문 네트워크의 구성) 그 힘을 근거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주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확대함으로써(사회공공성 연대)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장치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과잉자본을 합리적으로 시장과 생활세계에 재투자함과 아울러 공교육과 공공의료 및 사회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선순환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창출하는 원동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주관리 협동조합>-<여가소비자를 포함한 생활세계>-<공교육과 공공의료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지역평의회>

5) 생태적 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사회문화적 행위와 제도 전체의 생태문화적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경제행위를 문화적으로 재조직화한다는 것은 사적 소유/임금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화폐적 경제 행위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임금을 확대시키며, 육체노동/지식노동의 강제적 분할을 넘어서서 개인들의 신체적/정서적/지적 역능의 동시적 신장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행위의 문화적 재구조화란 개개인들이 지식/권력의 복합적 네트워크에 능동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정치제도와 조직을 탈권위주의화하고 최대한 개방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다양한 영역/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대의민주주의의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역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월권을 함할 시에는 민중적 통제/소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임금노동을 최소화하고(노동시간 단축), 비임금노동으로서의 문화활동(창조적 직업과 자율적인 정치적 행위)을 최대화(자유시간 증대)하는 방식으로 삶의 양식 자체를 재조직화하자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리모델링은 경쟁시장에서의 수직적 서열화를 위한 임시위주의 교육의 생태문화적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엘리트주의적인 예술과 스포츠 제도와 정책 등의 문화민주주의적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문화 전반의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를 묶어낼 수 있는 <생태문화적 모문 네트워크> 구성이다. 여기서 '모문'이라 함은 전통적인 공동체나 과거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위에서 주어지는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와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주의적 활동을 실행하는 것, 자본주의적 교환의 규칙(가치법칙)에서 벗어나 '선물의 규칙'에 따라 활동과 재화를 나누는 생활을 실행하고 창안하는 것...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외부'를 창안하는 법, 자본주의 안에서 곳곳에 구멍을 뚫고 살아가는 방법...선물(munis)을 통해 하나로 결합(com)되는 관계로서, '활동을 통해 이질적이고 상이한 개체들이 '모문'이라는 하나의 집합적 신체로 구성되는' '현실적인 이행운동'임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문화적 모문이라고 함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의 원리인 B 축이 사회문화적 실천인 E 축과 교차하는 지점인 (5)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연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도 정치적인 것만도 아닌 미적-윤리적인 자유와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실천의 모든 차원에서 모문적 연합의 원리를 관철하려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없이는 그동안 구축해온 사회적 공공성과 민주적 공론장도 자본-국가 사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또 각 하위단위들이 모두 고립 분산되어 자본-국가의 포획장치와 상품문화에 흡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공성과 민주적 공론장의 기능과 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십 년간 군부독재에 억압되어 위축되었던 시민사회가 87년 6월 합쟁을 통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민주개혁의 성과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확산되는 대신 군부독재를 대신한 재벌-관료 연합에게 이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표류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밀로부터 유기적으로 구축된 대중적 역량에 탄탄히 의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경제적 조합주의로 협약화되고 좌파가 고립 분산된 상황에서 소수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대변하는 시민운동만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만으로는 사회적 공공성과 민주적 공론장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의 뼈아픈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렇게 취약해진 사회적 공공성과 민주적 공론장이 지역적-전국적 생태문화 모문 네트워크의 확산에 의해 힘을 받아 새롭게 강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생태문화 모문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노동-다중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이 강화되면 자본-국가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그 성과가 다시 생태문화 모문 네트워크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4. 지역적 실천의 실마리

노동운동이 수평적 연대운동의 적극적 계기를 형성하려면 노동운동이 공장 밖의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결성 이래 임금협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에 매몰되었던 노동운

6) 이진경, 「미래의 맑스주의」 (그린비, 2006), 304-306쪽.

동 내에서 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주체성의) 재생산의 장소인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성찰이 일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선 노동조합 활동가들 다수가 지역사회 개입 전략을 아직 절박한 필요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활동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공장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환경 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처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진보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⁷⁾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관련하여 중심적으로 고민을 진전시켜야 할 주요 테마는 지역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개입과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 부분이다.

'사회공공성은 지역 전략에서 더욱 합당한 지향점이다. 주택, 교육, 의료 등에 파고드는 시장논리의 확산은 지역사회에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력 재생산의 차이에 따라 지역을 구획해 나간다. 사회공공성투쟁은 집합적 소비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논리를 제어해 나가는 운동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공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지역적으로 산개해 있는 미조직 중소영세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유망한 과정이다.'⁸⁾

이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국민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대체로 도시화를 통해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도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집합적 소비의 영역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개별화된 시민권만으로는 자본의 압력을 극복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이 개별화된 시민권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조직적 역량 면에서 큰 한계가 있다. 반면 대다수가 노동자이기도 한 주민들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야말로 집합적 소비 영역을 잠식해 오는 자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도시일수록 거주지와 작업장의 분리가 심해 노동조합 조합원의 거주지는 노동조합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공간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식 결합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은 노동조합 단독으로서만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지역위원회)과 지역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의 다양한 조직들, 노동운동에 발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간의 네트워크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연맹의 광역시도 지역본부의 활동이 더욱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지역본부는 지역 특유의 사업 내용과 지역사회/노동운동의 발전 전략을 갖는 '싱크 탱크'를 확보하여, 다른 가용한 자원과 조직들을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⁹⁾

노동조합은 앞서 말한 지역의 다양한 조직적 자원들과 네트워크하여 생태계 보존과 지역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는 민주적 공론장인 지역평의회 구성, 의식주의 소비만이 아니라 공동육

7)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지음,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2006년 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 김현우 외, 같은 책, 116쪽.

9) 김현우 외, 같은 책, 117~118쪽.

이-공동의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복합적인 협동조합형 모문을 구성해 갈 수 있다. 노동운동이 농민-환경-보건의료-교육-여성-문화운동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호혜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적인 단체들 사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개인 회원들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생협운동과는 달리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연결망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단지 소비자협동조합에 머무는 대신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의 복합적 성격을 지닐 수 있어 지역 차원에 공존하면서도 일상적으로는 서로 무관하게 흩어져 분야별로 움직여 온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생활상의 호혜적 활동을 통해 매개하여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5. 나가며

이와 같이 다차원에 걸친 복잡한 네트워크적 배치를 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생활세계는 물론 교육과 의료 및 공공 서비스의 모든 영역마저 잠식해가려는 신자유주의에 직면하여 이에 지속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단위들 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적 배치를 구성하는 길밖에 없다.

자동기술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그 위기의 그림자를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이라고 부르며 그 기회의 빛을 앙드레 고르Andr Gorz는 ‘문화사회’ 라 부른다. 국내외적으로 오늘과 같은 신자유주의화가 큰 저항 없이 심화된다면 이 흐름은 전인구의 10% 미만 이 일과 놀이를 향유하고 나머지는 극빈 상태에 머무는 ‘10:90 사회’ 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 증대 분을 다차원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다면 국민 다수에게 동일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더 많은 여가시간과 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자기혁신을 통해 생태문화적 모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적 공공성 연대를 강화해가는 노력만이 10:90 사회로의 흐름을 생태적 문화사회의 방향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으며, 그런 길을 통해 분단체제의 평화적 극복도 가능해질 것이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운동의 급소를 드러내며 변혁의 전망을 만들어가자 보편적 권리의 재구성을 고민하며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각종 공공영역이 사유화되고 시장 밖에 있던 것들이 끊임없이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포섭되고 있습니다.(예. 공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더욱 깊숙이 전장이 되어가고 있음도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고전적인 인권 영역으로 여겨왔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와 같은 영역에서 그 침해양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으며 흔히 사회권이라 불리는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과 같은 영역은 인권으로 인식되어보지도 못한 채 끊임없는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 또한 정보인권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문제들도 그 심각성에서는 덜하지 않습니다.(예. 생체여권)

이런 경향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유는 불평등하고 평등은 부자유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본을 위한 자유만이 허용되며 평등은 자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력은 오히려 ‘인권’을 남발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신의 언어로 왜곡하고 파괴합니다.

노동의 경계를 타고 작동하는 자본-권력과 시민권의 경계를 타고 작동하는 국가-권력은 우리의 삶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억압을 살아내는 개개인의 삶과 소통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몇 푼 되지 않는 비정규직 임금을 갱여두는 비혼의 여성노동자가, 진보운동의 목소리보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반값아

파트를 궁극하게 되는 현실, 노동운동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롯이 살려낼 수 없는 현실, 여성운동에서 '나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꾸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개별권리들의 총합이 아닐뿐더러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질서 그 자체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정당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편적 권리로 재구성하고 인권이 저항하는 민중의 권리가 되도록 더욱 버리는 것을 인권운동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87년 이후 사회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진보의 외연은 확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의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진보의 가치들은 조각났습니다. 결국 다양한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운동이 '개혁적인' 정권 아래에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총체적인 운동으로 탈바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운동의 '위기'라고 불러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 넘어서야 할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연 모든 운동이 '위기'라는 단어에 붙들려야 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도 87년은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운동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보편적 운동으로 재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청소년운동이나 성소수자운동과 같은 새로운 운동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운동과 같이 87년을 거치며 부문으로 자리잡아온 운동은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들을 선점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과 거대한 전선,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군중의 결집, 이것이 87년 이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운동'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전통적인 좌파(정파)운동 - 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현재의 운동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총체적인 운동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분절화된다는 점에서 위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위기가 당과 노동운동의 위기로 치환되는 관점 자체에서 위기를 볼 때, 운동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반성을 시작할 때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의 상을 대중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반쪽짜리 평가일 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넘어서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중을 조직하기 위해 그/녀들의 삶에서 출발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을까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이라고 우리가 호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계급과 가부장제, 그리고 다양한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사노동에 아무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가부장이 되고 자본은 가족임금제도를 통해 이런 현실에의 저항을 예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개발주의의 광풍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이 동네는 개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중도 안되는 개발이익이라도 나에게 몫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나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자본이 가져가는 개발이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여전히 공장에서의 임금투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투쟁, 여남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정투쟁 등으로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운동은 사회운동의 시야에 쉽게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신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이 파고들어와 '민주화'의 역풍을 왜곡하고 있으나 진보운동은 무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의제가 아닌 의제는 궁급해하기보다는 경계하고 자신의 패러다임 안에서 인지되지 않는 모순들은 부차화했습니다. 이런 경향이 운동의 발전을 발목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보편적 토대는 저홀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계급의 보편성은 노동자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차이를 담지 못하고 삶을 가로지르지 못하는 보편성에 대한 맹목이 오히려, 저홀로 변혁적 저항이 사라지게 했고 변혁적 전망을 당과 노동운동의 전망으로 환원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한국사회의 운동의 변혁적 전망을 버리기 위해서 운동의 현재를 가로지르는 시도들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87년의 거대한 흐름은 당과 거대한 전선, 수많은 군중의 결집 그 자체보다, 변혁이념에 대한 성찰을 통한 공동의 전망 모색, 대중의 삶에서 출발하는 운동에서 그 계승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지금까지의 대중운동은 노동조합, 농민회, 노점상연합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분명 위력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원되지 않는 대중, 동원하지 못하는 지도부, 이것이 현재 대중운동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새로운 조직적 틀로만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서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것들-다양한 교육과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의 확립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열려있는 조직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전체 운동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서로를 배우면서 키워가는 운동이 될 때 새로운 사회운동의 틀을 고민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중연대나 최근의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틀 자체가 운동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운동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에 앞서 각각의 운동이 다른 운동과 소통할 준비를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인권운동은 인권이 실현되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 질서를 향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가치와 지향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 만큼,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섬세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할 수는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의 작동에 대해서는 인권담론만으로 설명해내기 어렵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부터 비롯된 자본의 모순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거부장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이 억압당하는 현실을 배우고 소수자에 대한 각종 차별이 이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배워야만 진보적 인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은 자본에 맞서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쟁취한 이후 도대체 그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 지향은 무엇이 될 것인지, 또는 권력을 쟁취해가기 위한 싸움은 어떻게 미래의 가치들을 담아냄으로써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만들어갈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에서야 변혁적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류’ 운동은 다수성과 역사성만으로도 ‘중심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롭고’ ‘소수자적인’ 운동에, 혹은 그 운동의 가치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태주의와 여성주의, 평화와 인권을 말하는 ‘주류’ 운동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쉿소리처럼 귀를 차갑게 파고드는 것은 왜일까요? 생태주의적 노동운동과 반자본적 생태운동이 만나지 않고 부딪쳐 보자고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 운동들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때 반가운 느낌 뒤로 그늘이 스칩니다. 인권운동의 고민이 소통되는 느낌보다는 권리담론만을 차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운동은 역사가 있고 스스로를 보편적 운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대의 기초를 계급에서 구했던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질화되고 분할재편되는 계급구조 안에서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지만 연대의 기초를 다른 가치들에서 찾았던 운동들은 ‘오래 묵은’ 가능성을 버려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의 차이들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영역’ 운동으로만 이해되던 운동의 보편적 의제들이 모든 운동들 속으로 스며들 때에 변혁적 운동의 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당보다 정치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틀보다는 운동의 정치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당’은 운동에서 정치의 최종심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성화된 당이 가져온 폐해에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현재의 정당은 제도화된 정치영역에서 운동의 의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은 국가권력으로 진입하기에 가장 매끄러운 조직적 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끄러운 만큼 국가권력에 틈을 내고 균열을 만들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노조 역시 공장에서 자본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조직적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장 밖의 정치를 펼치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치를 국가권력을 상대로 하는 것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미 정당/노조의 틀로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운동들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운동, 노점상운동, 여성운동, 소수자운동들 모두 국가권

력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무를 제기하면서 국가권력과의 싸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평택투쟁의 경험)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정치일 것입니다. 운동 안에서의 민주주의, 대중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관계맺기,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끊임없이 정치화하는 문제제기와 대안모색 등으로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현재의 국가권력이 허용하는 정치에 불들리지 않고 호락호락 포섭되지도 않는 진보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공공성 운동이 사회운동의 정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되게 민영화/사유화 저지 투쟁에서 출발한 사회공공성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누가 물을 생산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물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며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주택을 사회화할 것인지, 사회화된 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이 만나게 되며 입법운동과 정책제시를 넘어선 고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해나가며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질서에 대한 꿈을 나눠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인 내용은 사회공공성운동의 반자본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워크샵에서 토론했던 글의 일부입니다.

사회공공성 운동이 소유나 국가를 둘러싼 쟁점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음에도 반자본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사회공공성운동은 생산에 대한 통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유화일지, 소유담론 자체를 해체한 이후의 또다른 어떤 모습일지는 멀러있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처럼 생산자본(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소유권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주들, 생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평창하고 있는 금융자본 등)이 이윤창출을 위해 생산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사회공공성운동은 자유와 평등을 재정립하는 과정일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문뜻 자유를 거스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며 자본가들은 무제한적인 시장을 인류의 이상으로 격상시키며 자유라는 어법을 끌어다 쓰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결국 공공영역에서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도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의 평등에 머무르고

있는 근대인권담론에서의 '평등'도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체성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실현될 수 있는 평등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셋째, 사회공공성 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양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살만한 집을 구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했을 수 있고 밀용직 건설 노동자는 지난달 전기세를 내지 못해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될 수도 있으며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의사는 자녀들의 교육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명역과 부문에서 확장되어온 다양한 운동은 하나의 정체성-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면 다양한 정체성들을 확인하면서 계급/계층으로 단일하게 환원되지 않는 주체들의 만남을 통해 노동과 생산에 대한 새로운 피러다임을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노동운동의 내부로 스며들어야 하며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자신에게까지 오는지를 운동의 의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의 전방위적인 먹임에 맞서 다양한 주체로 대응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공공성 운동은 연대의 원리/원리를 복원하면서 대안사회의 씨앗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화폐를 매개로 해서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들,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맺어가는 관계로 전환하는 과정, 즉 인권의 가치로 세상을 조직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의 공공명역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의 명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된다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인권보장체계가 어렵듯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주체'들의 '자치'가 아닐까.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운동과 대중이 직접 대면하는 지점은 이념보다는 정치, 정치보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운동이 정책의 선호도판술을 물으며 그것을 통해 각자의 삶 안에서 피워낼 대안적 가치들의 울림을 전하지 못한다면 정치도 변혁도 불가능해집니다. 정치적 의제와 구체적 정책대안들은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변혁의 전망과 대안이념에 대한 갈증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입니다.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권력에 의해 왜곡되는 '인권'의 고갱이를 되살리기 위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앞서 언급한 내부 워크샵에서, 자본주의와 근대인권담론이 서있는 자리를, '가치' 있는 노동과 '가치' 없는 노동의 구분에 따른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이때 자본주의와 근대인권담론을 넘어서기 위한 기획을 저칠게나마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은 1)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함으로써 잉여가치를 통한 이윤 발생을 차단하고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되찾을 것*, 2) 가사노동 등 '가치' 없는 노동에 가치(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가치와는 다른)를 부여할 것, 3) 노동을 '가치' 에 따라 위계를 두고 차별화하는 자본이 아닌 다른 권력을 생성해 나갈 것. 근대인권담론을 넘어서는 기획은 1) 시민의 권리를 확장할 것(특히, 사회권의 실현), 2) 비시민의 시민권을 요구할 것(이는 이주노동자, 성매매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등 다양한 정체성이 지닌 차이들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 의무에 기초한 접근을 넘어서 다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두 가지 기획은 서로를 넘나들면서 하나의 기획이 될 수 있다. 노동의 권리에 대한 성찰은 장애인, 청소년 등의 인권현실에 착안하면서 탈주의 지점을 찾을 수 있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아동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운동의 전략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잉여가치' 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을 폭로한다. 맑스 이후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생산을 멈춤으로써 자본을 압박하고 생산수단을 전유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을 환수해 계급지배의 조건 자체를 허무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전유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 이 시장에서 가치매겨져야 하는 전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 이것은 최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이기도 하다. 즉,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분석을 통해 '착취' 를 폭로하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양식이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지멸될 수 없다는 점을 폭로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투쟁의 '의도하지 않은 한계' 나 노동운동의 경제주의로의 기울기에 대한 고민과도 닿아있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과연 인간 노동의 결과물이 그의 '소유' 라는 전제가 적절하지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될 것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권리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만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로도 이어질 것이다.

대안이별을 버리기 위해 다양한 운동들간의 가로지르기가 필요하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각각의 운동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자신의 운동 안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맑스주의가 지니는 계급분석의 냉철함과 여성주의가 지닌 유체성의 힘, 생태주의에 내재된 지구적 사고의 가능성, 인권에 담긴 대안지향성, 평화가 이끄는 일상예의 성찰 등이 각자의 운동들 안에서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각의 운동 안에서 자신의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은 각각의 운동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맑스주의의 쟁점들, 여성주의의 쟁점들, 생태주의, 인권, 평화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운동을 넘나들며 토론되지 못합니다. 운동이 서로를 가로지르고 다양한 가치들을 운동 안에 담는다는 것은, 각 운동의 숙제까지 함께 나눌 때 변혁의 전망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들을 보편가치로 호출하기 이전에 그 가치가 보편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가 장애인 삶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막연하게나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 많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 될 것이고 그것이 더욱 장애인을 소외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되어지는 것이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실업상태는 70%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자유주의가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 유형과 현실적 조건들에 맞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성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더욱 경쟁력이 요구 되어질 것이고 장애인은 결국 효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존재성가치성에 대한 의심까지 갈 것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예상보다 더 빠른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공통질문>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민주화 정치에 인권울 내세우는 정치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더욱 기만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 2%를 지키지 않을시 부과 되었던 벌금을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한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을 고용할시 사업주에게 주어졌으나 이 기금을 방대하게 사용함으로 2005년에는 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시킴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업이 증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또한 비장애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비에도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정책 표면으로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 사회소외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현실과 다른 정치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1. 87학쟁 20년/ IMF위기 10년,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올해 87년 2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중운동의 성장기이기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중운동의 위기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또는 그 이상의 시기로 확대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통의 기반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운동영역 상호간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통질문〉

2. 운동노선 평가의 관점에서

지금도 실감하도 하지만 과연 80년대 시민운동진영 안에 장애운동이 있었을까를 생각한다. 대부분 운동진영의 주체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처음 어떻게 만나는가 보면 대학이란 곳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접근조차 막혀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80년대 장애인운동도 일정정도 보행이 가능한 대학에 접근한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 중심이다 보니 장애인중에게 접근하는 운동은 미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장애인이 주체이기보다 장애인을 위한 운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대중운동의 혁신

2000년에 들어서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주체로 나서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투쟁은 지금까지 이동할 권리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을 중증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 보장으로 또한 인권이고 거리에서 투쟁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제도교육을 받지 못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운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후 장애인의 이동권이 교통약자 노인 아동 임산부 등등의 보편적 권리로 사회적 합의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장애운동의 주체의 변화는 중증장애인의 등장도 있겠으나 1995년부터 시작 된 장애여성운동은 장애 여성 주체의 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가부장제와 비장애중심 사회에 저항을 나타내었고 장애여성의 열악한 인권침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는 일정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여성운동의 성과라면 장애운동 사회 내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질문〉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 페미니즘 운동과 소수자 운동이 던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다른 운동 영역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운동 안에서 항상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또는 이주노동자, 노숙인 세트로 묶어 연대로 초대하거나 참여 시켜야 '진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색 맞추기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연대에 참여하여 항상 똑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운동진영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변화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장애중심, 정상성중심, 가부장제중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또 식상한 얘기를 한다고 할 것도 같아 불편하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불편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란한 운동의 이념들의 열띤 논리들 앞에서 자기 경험을 언어화 시켜내지 못한 주체들의 담담함을 과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자신감 없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자면 소수자 운동이란 누구의 관점에서의 해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운동은 작다는 뜻인가요? 시력이 늦었다는 건가요? 사회적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운동 내에서 소수자운동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알겠으나 한편으로는 운동 내에서 또 다른 위계가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수자 운동이란 말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진영 내에서 소수자운동 아닌 운동진영은 정확하게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이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노동자의 힘 송석현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지배전략이다. 그런데, 자본의 이윤을 저하 경향과 더불어 항상적인 자본의 축적 위기로부터 비롯된 전략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1)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착취 수탈하는 ‘노동유연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2)공공부문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의 이윤 획득 공간을 확장하며, 3)복지국가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산업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부문에서 자본의 이윤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자본의 이같은 축적체계를 완비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권력의 역할이다. 자본은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논리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축적 운동을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권력을 요구한다. 국가 주도로 법제도를 완비하고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지구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자본의 지구화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변동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변동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지구화는 평화적인 자본축적이 아니라 제국주의 독점자본간의 매우 격렬한 갈등을 함축하는 경쟁적인 자본의 지구화이다. 따라서 지역 간의 블록화 경향은 내적으로 제국주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지구화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의 형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인류적 가치의 보편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 지배 이데올로기의 보편화를 의미할 뿐이다. 일국 내적으로는 국가경쟁이데올로기와 효율성의 이데올로기가 시장경쟁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보편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의 보편화는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보편화하는 문화적 제국주의를 함축한다.

따라서 자본의 지구화와 전 인류적 가치의 보편성은 자기모순이며 상호충돌의 항상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가치 그 자체가 계급투쟁의 한 축으로 급속히 전락되고 있다. 보편적 가치는 자

본의 보편화, 세계화를 의미하는 반면 노동의 보편화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화 안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적 강탈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와 윤리적 가치의 보편화는 이미 그 안에서 계급투쟁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미-소 냉전체제로부터 탈냉전, 냉전의 와해로 이어진 현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자본의 전 지구적 팽창과 더불어 초국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적 자본전략에 기초한 제국주의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함축한다. 이 정점에 미국의 대세계전략-군사적 패권전략과 지역 맹주에 대한 봉쇄 전략이 가로놓여져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군사적 제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 내부의 갈등 또한 잠복해 있다. EU의 미국독주 비판과 중국의 해양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자본의 무한 축적체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강제적 재편과 통제가 요구되며,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간의 갈등과 전쟁위험을 함상적으로 수반한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반자본, 반제 투쟁으로 발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할 과제와 국제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공통질문〉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영역에서 변동을 또한 동반하고 있다. 87년 혁명에 대한 반혁명적 성격을 지닌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이 오늘날 한국의 지배체제 재편과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의 핵심이다. 노태우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형성은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의 과정이었다. 수구-보수 대 민주-개혁으로 상징화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와 같은 미완의 혁명을 반혁명적으로 지배권력 내부로 체제 내화시키는 과정이었다. 2004년 4.16총선은 친일-송미-수구-보수/정통보수-친미-합리적 보수-민주의 대립에 있어서 후자로의 권력이동을 형식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권이 87년 ‘6.10민주혁명’의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이동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과거 재벌독점체제는 국가권력과의 결탁을 통한 경제적 특혜와 수혜, 그리고 반시장적 독점성에 근거한 비합리적 게임에 의해 성장한 자본체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어울리는 경쟁법칙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시장과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자본의 지구화는 자본 경쟁에서의 국제적 경쟁 규칙과 가치를 요구한다. 따라서 ‘정통보수-친미-합리적 보수-민주’로의 권력이동은 부르주아의 헤게모니 하에서 ‘민주변혁운동’을 수렴, 관리해 가면서 남한의 노

동자민중을 권력 내부로 재주체화하는 부르주아 내부의 권력투쟁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4.15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권력이동은 한국의 역사로 보면 보수-수구-재벌로 표상되는 비합리적인 자본지배권력에 대한 합리적 보수-자유주의-자유시장경쟁으로 표상되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경쟁 논리적인 자본지배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이다. 한국의 지배체제는 소위 '개혁이데올로기' 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합리성' 과 '국가 경쟁력' 을 통해서 오히려 '계급적대' 를 지배구조로 흡수하는 헤게모니 재편에 성공해 왔다.

이 헤게모니적 재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독점자본과 한국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6.10민주혁명 때의 동조지역할을 수행했던 도시 썬미부르주아를 시장-합리성-신자유주의-세계화라는 코드 안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미 노태우정권 때부터 신자유주의에 맞춘 코포타리즘의 구축이 시도되었고 6.10민주혁명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시민운동을 지배 블록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94년 이후 급성장한 시민운동은 지배권력의 헤게모니에서 '국가경쟁력' 과 '효율성', '합리성', '공공성' 을 자신의 내적 코드로 수용했고 이것이 소위 '개혁적 시민운동' 의 세력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운동의 성장은 '위로부터의 수동혁명' 과 6.10민주혁명이 낳는 최대의 부산물이다.

시민운동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자본주의가 '효율적' 이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생산기지화' 하려 한다. 이것은 한국의 자본권력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간의 다름은 그 개혁의 속도와 개별적인 정세에 따른 판단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나 '복지' 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 정도로만 사고될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권력으로서 시민운동의 재편과 지배 헤게모니로의 포섭은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의 헤게모니로 재편하는 사회적 토양이 된다. 시민운동의 코드를 이용한 노동운동 내부의 압박과 포섭은 다시 노동운동을 지배체제 내로 흡수하는 포획 코드로 작동한다. 97년 민주노총 내에서 주창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개혁투쟁' 은 이런 포획 코드에 의해 지배 블록으로 재주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의 지배블록 재편과 헤게모니적 재편은 정치분파 간, 정치와 독점자본분파 간의 이합집산과 갈등의 양상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적 재편에 따른 '자유주의적 권력 재편' 과 '자유주의' 적 코드 하에서의 지배헤게모니 구축, 그리고 사회권력의 자본권력적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배블록은 자신의 헤게모니 하에 시민운동과 일부 노동운동 내의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을 사회권력적 토양으로 재편하고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일상과 생활을 포획해 가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재편과 포섭 전략은 이미 민주노총의 제도화를 통해 현장 속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관철시켜 가는 과정이자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그리고 국민국가적 통합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지배체제의 블록을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시민운동과 '합리적 개혁' 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썬미 부르주아를 지배 헤게모니 안으로 흡수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계급 운동 내부를 분할 포섭함으로써 작동한다. 민주노총을 통한 전투적 노동운동의 흡수와 제도화, 그리고 구조적 재편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권력 안으로 재주체화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을 '세계화' 라는 급박한 민족주의적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재

무장시키며 '생존의 땀' 으로 몰아넣고 있다. 합리성, 그것은 자본의 이윤 증식 욕구로, 오히려 민중들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 수용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계급' 이 아니라 '개별화된 개인들' 로서 '무한경쟁' 과 자본의 제도적 합리화, 그리고 경쟁적 생산성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오늘날 지배 권력이 국민 개개인들을 묶어세우고 재주체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코드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자유주의적 가치' 를 통해서 '세계화' 의 보편적 가치를 자본의 가치로 재구조화한다. 그런데 이런 재구조화 속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문화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기존의 재벌체제-지연과 연고주의-정경유착과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해체' 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이하게도 '개혁' 적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개혁' 이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즉 엄격한 자유경쟁과 시장논리를 추구하면서 한국 총자본의 이해인 '국가경쟁력 강화' 와 '사회 전체의 생산기지화'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반동성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 동안 '개혁' 은 독재와 전통적인 관행에 억눌려 왔던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엄격한 시장 질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게도 필요한 '개혁' 이었다.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세력들도 지연-지연, 가부장제적 지배구조 안에서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세력들은 '개혁' 이라는 정치적 지형 안에서 공존해 왔으며 이에 따른 계급 적대의 은폐라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배권력의 헤게모니로 재편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노동자, 민중 진영의 지형 변화는 노동자민중과 지배 블록간에 있어서 매우 왜곡된 지배 코드에 의한 재주체화로 포섭되고 있는 제도화의 경계 지점에서 있다.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좌선파의 결과처럼 보인다. 수구보수와 대립각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역사적 의미가 있는 좌선파이다. 그러나 이 좌선파는 결코 계급적인 좌선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왜곡된 권력이동의 지형을 창출한 근원적 기반이기도 하다. 잠재적으로 그것은 계급적인 분화를 함축하는 좌선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같은 계급적 분화는 통합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좌선파' 는 신자유주의 '개혁' (자유주의적인 사회의 재조직화)를 선택하는 '좌선파' 이다. 물론 이와 같은 좌선파는 단순한 정치-경제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좌선파' 라는 문화혁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소위 '세대 차이' 라는 세대별 대립은 오히려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대립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가부장제와 연고주의에 대한 대립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좌선파' 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좌선파' 가 아니며 오히려 '우선파' 이다.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것은 연공서열제나 연고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권위나 위계제와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쟁과 능력에 따른 시스템을 요구한다. 나이에 따른 위계가 아닌 능력에 따른 위계가, 근무연한에 따른 봉급이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에 따른 계약과 봉급을 요구한다. 따라서 소위 노동자민중들이 표출하고 있는 현재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굴절된 '우선파' 를 함축하는 '좌선파' 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에 대중의 역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라는 인식의 확장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의 역동성은 근본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한계 안에 놓여 있으며 ‘반자본’이 아니라 ‘자유주의’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반동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런 반동성이 굴절되는 것은 ‘위로부터의 수동혁명’과 ‘수구보수 대 민주개혁’이라는 왜곡된 지배 코드에 의한 자유주의의 지배 체계모니 블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배 체계모니 블록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존권, 생활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한계에 의해 자기 부정될 수밖에 없다. ‘노동 현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생산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탈력노동제’, ‘변형근로제’, 연봉제와 성과급제,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에 대한 공격은 노동자들을 생산 현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축출시키고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악화시키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민중의 삶을 절대적으로 황폐화시킨다. 청년실업자의 급증과 노인의 분노는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들어설 수 없는 세대의 분노를 대표한다. 청년들의 민족주의화도 이와 같은 무한경쟁에 의해 파괴되는 삶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세대차라는 것은 변화의 속도에서 밀려난 세대와 ‘세계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형성에 따라 ‘탈권위적 코드’로 자신의 현재 분노를 집중시키는 세대간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것도 현실-자본주의적 무한경쟁이라는 ‘현실’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도 현실-자본의 내재적이고 함상적인 위기와 노동배제의 반인간적 착취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장기적으로 파괴되어 갈 것이다. 오늘날 남한에서 신용불량자는 400만, 절대빈곤층 800만, 노숙자 1만여명, 청년실업자 300만이다. 전체 인구의 1/10이 신용불량자이며 빈민이 1/5인 나라에서 ‘삶’은 ‘생존’이다. 하지만 ‘생존’조차도 어렵다. 그리고 그 결과는 45분당 한 명씩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의 수렁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한국의 노동자민중만을 공격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몰고 온 외형적 결과는 ‘자본 축적 조건의 정비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한 자본 위기의 극복’이지만 본질적 결과는 노동자민중의 삶 전체에 대한 파괴이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배제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생존이나, 죽음이나’의 기로에서 있는 노동자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97-98 총파업 투쟁은 이미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예봉이 함하고 있는 ‘파탄’을 몸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미래에는 ‘투쟁’이 예견하고 있었듯이 전민중과 노동자계급의 ‘생존적 파탄’에 저항하는 ‘반신자유주의’, 더 본질적으로 ‘반자본’ 투쟁이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제평가

1. 87학쟁 20년/ IMF위기 10년,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제평가

사회운동은 자본의 사회권력으로 기능하는 시민운동으로 분화하여 독자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 하면서 반자본의 지형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다.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급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공격과 자본의 완전한 수탈체제-시장경쟁체제 무한 증식욕구의 복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의 배제는 민중 생활고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 내의 균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은 '실업극복', '노숙자보호', '국가정책과 경영의 효율성 감시', '환경운동' 과 같은 공동체의 보존과 시민적 가치의 옹호를 통해서 이 균열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자유주의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효율성' 을 옹호하고 공동체의 균열이 아니라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공성' 을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의 지배전략에 공헌하는 반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한편으로 시민운동을 시민사회의 사회 권력화를 통해서 체제 통합적인 동반자로 포섭해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본적인 자본의 가치 증식이라는 본질적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자의 구심적 전선 또한 복원해 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민운동' 의 분화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결국 시민을 배제하고 사회 권력으로서의 '시민운동' 만을 확대 재편함으로써 사회의 권력으로 안정화되어 가도록 시민운동을 몰아 부칠 수밖에 없다. '시민' 은 배제되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재생산된다.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응하는 반자본적-친노동적 접근 또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기에서 시민운동의 사회적 헤게모니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대중운동이 '현장' 에 간혀 있는 상황, 노동자계급정치 지연이 불러온 공백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시민화'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환경, 여성, 인종 등의 사회운동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의해 보다 강화된 모순의 옹축 지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급진화되고 계급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운동의 성과를 발전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파괴에 저항하는 급진적 담론과 실천을 조직해냄으로써 '반자본' 계급투쟁의 장으로 시민운동을 분화시켜내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자본이 생산하는 이데올로기로의 끊임없는 유포와 포획의 장치 속에서 '보편적 가치' 를 민중적으로 확산시켜내지 못한다면 사회 현실에서 얼마든지 자본의 사회권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자본이 유포한 시민운동은 중립적 시민 코드에 의해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단순한 평화 투쟁, 민족주의에 근거하는 반미투쟁으로 귀결시킨다.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도 기껏해야 자본의 비시장적 관행과 불법성에 대한 고발과 폭로에 그치고 만다. 비록 시민운동으로부터 분화는 했지만, 여전히 대중적 실체를 가진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본에 대립하는 계급적 주체를 확보하지 못한 현 상태의 사회운동은 언제든지 자본의 이데올로기 아래로 재포섭되는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더 적색화, 급진화, 계급화해야 한다.

다행히도 사회운동은 반자본의 변혁적 계기를 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환경, 인권, 여성, 과학기술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의해 끊임없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자본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인류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투쟁은 보다 근본적인 '변혁', '자본 밖'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계급화와 적색화는 반자본 대항 주체의 형성과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회운동이 판나는 대중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형성하는 주체만이 아니라 반자본의 계기와 동력을 자신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함축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육체로 각인하고 있는 노동자계급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운동은 비로소 변혁적일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이 제도화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이 실리주의화되었다고 해서 노동자 대중주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만이 유일하게 일관되게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대중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운동이 노동자계급운동과 조우할 때,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운동의 대중운동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운동의 주요 의제는 반자본 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변혁을 수행한다고 해결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반자본투쟁 그 자체가 이와 같은 과학기술과 환경 파괴, 성과 인종 등의 차별성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 인종, 환경은 대자본투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투쟁의 영역으로 반자본 투쟁과 접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것은 코핀의 원리에 독자적 차원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반자본 투쟁으로 환경, 성, 인종을 환원하는 것은 계급 환원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그것의 독립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특정한 계급적 가치와 관점을 내재하고 있다. 테일러 시스템의 일관생산라인은 어떤 계급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적 평가와 코핀적 원리에 따른 기술기획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성, 인종 등에 대한 가치들도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적 가치들과의 접합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반자본이라는 단일한 전선 안으로 이들의 가치들을 접합시켜야 한다. 이 때 이들의 가치는 코핀의 전략적 목표와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사회운동에서 대중운동은 없었다. 대중운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만이 있었을 뿐이다. 사회운동의 대중운동적 실현은 노동운동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설 수 있을 때, 바로 이들과 접목하여 반자본 투쟁을 벌이는 외중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중적 노동운동은 87년 이래 '제도화'의 멍에 빠져 수동적 주체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관료화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제도화의 필연적 부산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도화를 무조건 비판하고 '반제도'로 따지는 것은 지배권력에게 노동운동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화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제도화의 과정에 응축되어 있는 계급투쟁의 계기를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급적대의 선' 을 구축해 내지 못하는 전술적 무능력에 있다. 제도화는 반드시 또 다른 모순의 축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제도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제도화를 둘러싼 투쟁이 보다 중요하다. 이때 제도화를 둘러싼 투쟁의 핵심 고리는 '직접민주적 권리와 제도적 장치' 들의 구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화를 둘러싼 투쟁은 관료화에 대한 투쟁, 반관료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관료주의 투쟁, 반관료주의 투쟁이 '개량화' 에 대한 극복을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민주적인 제도화가 더욱 강력한 개량화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량화의 극복은 오로지 '반관료' 가 아니라 '반자본' 이라는 전략적인 권력의지의 조직화와 창출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대중운동의 위기를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운동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위기' 다.

노동자 대중운동의 위기는 일각에서 말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협의를 못했거나 제도 정치권에서의 정치세력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위기' 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질적 비약으로 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발전 안에서 왜곡되고 굴절되어왔다. 이것은 노동운동가들의 몫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운동가들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운동의 새로운 재편과 질적 도약 없이 노동자계급의 정치화와 한국에서의 변혁운동의 전망이 창출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운동의 적색화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다.

<공통질문>

2. 운동노선 평가의 관점에서

과거 사회운동 노선만을 두고서 문제 삼을 부분이나 계승할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의 경우만을 이야기하자면, 사회운동의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이 자본의 이윤 증식 운동과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사회권력에 대해해서 대안의 사회권력을 제기한 점도 기본노선상 매우 올바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반자본의 영역으로 시민운동을 분화시켜 냈다는 점도 현재 사회운동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부문운동의 합으로서 사회운동이라는 것, 사회운동은 부문운동들 각각을 지칭하거나 그것의 총합을 지칭한다는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고에는 노동운동도 부문운동이며 사회운동의 각 부문과 영역이 소통하고 연대하듯이 노동운동도 사회운동의 의제를 받아 안아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사회운동 주체들도 노동운동의 투쟁에 연대함으로써 사회운동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는 사회운동의 궁극적인 운동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운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서 경과해야 하는 주요한 전략적 고리를 형성해내지 못한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은,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은, 또는 과학기술운동과 환경운동 등등은 물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호간에 연대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기 운동 영역의 과제를 상호간에 이해하게 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지평을 넓혀 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연대와 소통의 씨줄(또는 날줄)일 뿐이다.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분명한 적대와 변혁의 날줄(또는 씨줄)을 함께 그어야 한다. 적대와 변혁의 날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내부에서부터 자본을 지양하는 ‘자본 밖’을 실현하기 위해 ‘반자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자본 전선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유력한 축은 자본주의 모순과 착취를 자신의 사회적 생산관계에서부터 육체로 함축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이며,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연대와 적대의 씨줄과 날줄은 완성된다.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에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 내용은 노동운동이 자본과의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내부관계에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에서 사회운동적 의제를 받아 안아 실천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운동을 자본-임노동 관계를 폐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 밖’을 구상하는 ‘반자본’ 정치투쟁에 나설 때에 비로소 사회운동의 의제를 자신의 과제로 코뮌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 재조직화돼야 하며,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은 우선 자본주의 내에서부터 자본을 폐절하는 반자본 정치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결합,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반자본 대체권력의 관점에서 코뮌적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앞으로 사회운동의 과제가 돼야 한다. 노동운동의 정치화! 사회운동의 계급화!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대중운동의 혁신

앞서 II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조우하고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변혁의 씨줄과 날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반자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자본 전선은 자본의 직접적인 공세와 국가권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대중의 결집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전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재편되고 있는 방식으로 조직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신당)-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의 운동 질서 재편구도는 시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개량주의의 힘 아래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근본적인 반자본 변혁보다는 자본의 제도적 장치 아래로 포섭되는 수순일 뿐이다.

87년 이래 ‘민주’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의 함과 악취를 동시에 경험한 노동자 대중운동이 또 앞으로 20년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개량주의의 함에 취하고 악취에 주저앉는 경

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변혁적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은 분명히 자본 대 반자본의 구도 속에서 변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형성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공통질문〉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II장 2절 운동노선 평가 답변 참조바랍니다)

〈공통질문〉

특히 페미니즘 운동이 던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다른 운동 영역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밀려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운동이 제기하는 유의미한 제기는 반자본 변혁운동의 근본적인 원리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삶은 가장 본질적인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침해하게 노출돼 있다. 소수자의 운동이 저항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 대항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체로 서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와 소수자 운동의 원리를 사회운동의 기본원리로 구성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운동 및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에 퍼져 있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하고, 힘의 원리가 아닌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치가 실현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통질문〉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중과 시민을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운동이 시민운동과 분리됨으로써 사회운동은 민중운동이 되었다. (앞 내용 참조)

오늘날 시민은 부르주아지만을 일컫는 것도 아니고, 시민적 권리를 갖는 ‘시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시민은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문제이고 그를 통한 포섭의 문제다. 자본은 끊임없이 민중을 시민으로 호명하며 그 이데올로기 아래 자본의 영역으로 재주체화한다. 한편으로 민중은

시민으로 호명되기를 바라면서 자본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자발적으로 재주체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존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은 민중으로 하여금 생존의 굴레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오직 그 그늘을 박차고 나올 때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오늘날 사회에서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다. 따라서 시민은 호명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 민중일 따름이다. 민중과 시민을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운동을 반자본 운동의 영역에서 볼 때,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선전과 선동의 유효함을 위해 시민으로 부르더라도, 변혁적 사회운동이 자본의 사회권력을 잠식해가면 갈수록 민중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공통질문〉

3. 운동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

3항 전체에 답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사회운동의 반자본 변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이 점이 혁신의 주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강제한 정세 속에서 전략적 목표는 ‘반제반자본의 국제혁명’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국혁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일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의한 국제적인 자본운동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이며 국제적인 노동자동맹 없이 완수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반제반자본’이라는 변혁의 목표는 국제노동자동맹이라는 전선의 구축 없이 수행될 수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선의 구축은 노동자계급의 인류해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물론 이 때, 보편적 가치는 물계급적이고 추상적인 객관성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일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해방적 정신을 더욱 급진적으로 보편화할 때 그것은 보편적 가치로 전화될 수 있다.

반제반자본 국제혁명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자동맹의 구축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현장-지역-부문에서의 반자본 ‘대체권력’ 형성이라는 목표 하에서 모든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여기서 전략적 목표는 ‘대체권력’의 조직화이며 전술은 코뮌적 질서를 창출하는 모든 민주적, 계급적 투쟁을 지지, 지원, 조직화하는 것이다. 제도나 반제도나가 아니라 제도와 제도 외부를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비제도적 투쟁에 모든 합/비합법적 투쟁을 종속시켜야 한다. 합/비합이 제도/반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합법은 투쟁의 힘에 따라 재구축되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서 이전에 비합법이었던 것이 합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이며 비제도적이지만 사실상 민주적 제권리에 해당하는 투쟁도 있다. 합법=제도, 비합=비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분법을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권력을 변혁의 모든 것으로 사고하

는, 국가물신화된 변혁이론일 뿐이다. 비록 국가의 법적 장치에 의해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지라도 사회권력에 의해 이미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들이 그렇다. 제도적 확장과 비제도적 영역으로의 자기 확대에서 경제지점에 놓여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치들을 둘러싼 투쟁을 전술적으로 배치하면서 투쟁의 양식은 합과 비합법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비합 투쟁은 궁극적으로 비제도적 대체권력을 형성하는데 주어져야 한다. 비제도적 대체권력은 생산자 자신의 자기통치원리로서 코뮌적 권력을 형성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합/비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제도/반제도를 넘어선다. 환경, 여성, 인권은 이와 같은 자기통치원리에서의 ‘보편적 가치’ 들을 구획하는 사회변혁의 전술적 고리들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정치화는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자기를 상승시키려는 권력의지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바로 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일차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지렛대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공통질문>

(1) 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은 반자본 변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혁명정당-반자본전선-변혁적 노조의 유기적 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일관되게 반자본 투쟁과 보편적 가치를 향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을 결집시키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반자본 코뮌을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문제는 당이다. 맑스주의의 위기는 바로 당 형태의 위기로 현상되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당은 거부되어야 하는가.

“당의 위기로 현상하는 맑스주의의 위기는 역사적으로 크게 서구사민주의와 스탈린주의로 나타났다.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 개량주의와 스탈린주의(볼셰비즘의 다수 포함)는 경제주의와 대리주의라는 본질에서 발현되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이들의 차이는 단지 본질적으로 혁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로서 ‘당’ 을 설정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궁극적으로 ‘의회-선거의 득표’ 로 물질화하거나 아니면 ‘권력 탈취 부대’ 로 물질화시켰다. 여기서 권력의 실질적인 물질화는 노동자계급의 대표체인 ‘당’ 으로 귀결된다. 또한,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대표체인 ‘당’ 이 ‘의회’ 를 통해서든 아니면 ‘폭력적인 전복’ 을 통해서든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을 접수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회주의적 조치와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이행의 계기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고 정치를 통한 경제의 조직화라는 경제주의에 빠져있었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은 경

제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며, 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치 권력체가 된다. 위 양자는 국가권력의 장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당적 구성 원리가 의결과 집행, 구상과 실행의 분리 체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은 당의 목적과 구성 원리는 부르주아 정당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맑스주의의 정당들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무관하게 사실은 부르주아적 정당과 닮은꼴로 구성되고 계급 전선 속에 배치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노동자대중 그 자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이며 정치적 행위를 특정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같은 물신화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로써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노동자계급은 ‘관객’으로 전락하며, 정치적 지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스탈린주의는 당과 국가의 융합체계, 당의 국가로의 전화를 용인함으로써 노동자계급 대중을 정치로부터 배제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노동자계급 대중으로 무한히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사회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특정 집단(당 관료 집단)에 귀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사회로 퇴행하고 말았다. 서구 사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역시 권력의 장악을 기도하는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투표행위에 묶어 버림으로써 부르주아 지배 질서 내부로 투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 두 가지 편향은 부르주아 국가주의 정치로 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할 부르주아 국가장치를 용인하거나 활용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서구 사민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자생성의 영역에 가두어 두고 의식성을 배제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 내부로 투합하였고, 스탈린주의는 당의 의식성을 앞세워 노동자계급의 자생성을 배제함으로써 계급 투쟁으로부터의 이론적 수혈화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맑스주의는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계급 타협과 변혁 전망의 포기라는 수정주의로 변질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주의 이론이 신격화되어 ‘이성의 확산’으로 군림하면서 화석처럼 굳어만 갔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맑스주의가 더 이상 계급투쟁의 이론이 될 수 없었고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흡수되고 말았으며, 구소련에서 교조화된 맑스주의 이론은 그 자체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고 점점 더 양상하게 이론적 불임을 낳았다. 양자가 동일하게 배제한 것은 ‘사회주의적 또는 정치적 계급의식’이 노동자계급 그 자신의 존재성과 결합된 노동자계급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여기서 맑스주의의 위기는 본격화된다. 그리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 운동의 결합’을 이루어내는 결절점으로서 노동자계급정당은 형해화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당조직의 모순과 함상적 위기 속에서 모순과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당조직과 실천을 제기하고자 한다. ‘국가로 전화하는 당’이 아니라 맑스주의의 생명력인 이론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계급 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의 결합’을 복원하여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정당이 그것이다. 이 정당은 노동자계급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지도-피지도 관계로 설정하지 않으며, 노동자계급 대중과 투쟁공간 속에서 함께 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당이 곧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서의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맑스주의가 기획하는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사업으로서 해방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자는 대안사회의 권력을 책임지는 정치의 주체는 바로 노동자계급 그 자신이며, 그들이 전국적인 경제를

계획하고 회계와 통제를 실시할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계급의 정당은 권력의 '바깥에 있는 조직'이다. 그것은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나 여전히 바깥에 있어야 한다. 당의 지도적 원칙은 끊임없는 설득을 통한 동의, 폭로와 선전 활동을 통해서 관철되어야 한다. 당이 노동자계급을 조직적으로 하부 체계에 등으로써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안팎에서 그들의 투쟁을 안내하고 선전함으로써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항상 제도 밖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를 기획하고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비제도적 정당'이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와 참된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대의에 동의하는 계급의 선진 분자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정당이 아니라 전위정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앞선 전위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론은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받음으로써 진리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의 이론과 노선도 현실 계급투쟁의 변화와 발전에 근거한 노동자계급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당의 지도 노선과 이론적 생명력은 바로 끊임없이 현실 계급투쟁으로부터 수혈 받아야 하며, 노동자계급은 당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당파적인 '과학'으로 정립시켜 가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은 '투쟁정당'인 것이다.

당이 국가로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국가장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 원칙과 운영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당이 국가로 전화하는 물질적 토대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당의 국가로의 전화를 막는 것은 꿈꾸어 볼 수 없다. 비제도적 투쟁정당은, 이후에 좀더 상세히 살펴볼겠지만, 노동자계급이 건설하고자 하는 '대체권력'과 동일한 구성 원칙과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제도적 투쟁정당은 직접민주주의를 조직 구성 원칙으로 삼는다. 노동자계급이 대체권력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과 정치 활동의 과정에서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활동을 스스로 체험하고 훈련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정당의 조직 구성은 철저하게 각 당원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 즉 그들 스스로 당의 모든 활동과 내용,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을 위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에서 지식 독점이나 정보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 독점이나 정보 독점은 소수 엘리트 또는 정치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에 의한 당권력의 장악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더욱 격화시킨다. 이것은 당내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생산자들이 그 스스로 전국적인 생산을 통제하고 기획하는 그런 정치권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셋째, 부르주아 조직 형태와 전혀 다른 질을 갖는 독자적인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 즉 자본의 물질적 조건에서 생산되는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장치와 명백히 다른 질의 조직 구성 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계급투쟁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실천으로부터 대항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정치를 재전유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가져야 한다. 역사적 전위정당은 '계급투쟁으로의 통로'가 '계급투쟁으로부터의 통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양자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상의 원칙 속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운영수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당 중앙은 철저하게 아래로부터 각 당원들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의 기초 단위에서 선출된 이들이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직접 집행 단위를 구성하여 '의회와 행정의 통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 권력 그 자체가 따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한 의결-집행 체계에 포함되어 의결과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초 단위에 있는 당원들에게는 '소환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모든 회의록은 공개됨으로써 선출된 자의 견해에 대해 각 기초 단위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근거하여 소환,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내 모든 정보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나 이론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단위는 폐지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당원의 발언권, 그리고 분파형성과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장치가 있다. 비제도적 투쟁정당이 던지는 문제의 핵심은 오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당조직을 운영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 활동을 통해서만 노동자들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조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당을 구성하고 건설하는 것이다. '비제도적 투쟁 정당'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 사회의 경제와 생산 메커니즘, 그리고 생활을 기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 체득하는 그런 정치조직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시기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투쟁은 전달 벨트적인 당-노조 관계의 혁신과 민주적 의사 소통의 복원이라는 '맑스주의의 혁신' 작업의 일환이면서 노동자의 자생적 혁명성을 당적 질서로 조직하는 '위기'의 돌파 지점을 열어가는 것이다. (송석현, '비제도적투쟁정당과 노동자계급정치' 중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당은 '반자본', '반관료'의 투쟁을, '코뮌권력의 정치적 조직화', '생산자대중의 자기 통치권력'의 생산을 통해서 이룩해 가고자 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당'을 의미한다. '당'이란 자본의 체계 밖에서, 자본을 넘어서 외부를 창출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적 결집체, 즉 노동자대중 스스로가 정치가로서, 코뮌권력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정치조직이다. '자본의 체계 밖에서, 자본을 넘어서 외부를 창출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적 결집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존 국가장치의 파괴를 지향하며 기존 국가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당은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권력의 주체'로 조직되며 '정치적 주체'로서 대안 사회의 권력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당은 그 스스로 '대체 권력'을 자임하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의 정당은 오직 노동자 계급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주체화'를 조직하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대체 권력'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공통질문〉

(2) 사회운동과 정당 간의 관계

노조와 정당의 관계문제는 기본적으로 양날개론을 거부한다. (위 비제도적 투쟁정당에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사회운동 내에서 정당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날 ‘당’에 대한 관념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 ‘당’과 ‘당 운동’을 보는 관점은 다음 세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당 운동을 부르주아 의회 공간 안에서의 정치세력화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께, 이와 정반대로 모든 형태의 당 운동을 ‘폐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당 운동을 거부하는 경향
- 셋째, 당 건설 운동을 80년대의 비합전위당 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여기서 당 개념에 대한 관점의 혼재와 혼란이 발생한다.

위 첫째 관점은, 서구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제도화된 사민당으로부터 당 관념이 고착화된 것에 기인한다. 당 운동은 제도내적 수권정당의 권력 장악을 위한 국가주의적 정치 운동이며, 이 때 당의 실천은 선거 과정과 의회 및 행정권력 공간에서 정책 수립, 입안, 행정적 집행과 연관된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 영역에서 정치세력화해야 한다는 논리, 국가권력을 둘러싼 게임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당 관념은 국가에 대한 도구론적 관점,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의 결과 위에서 있는 공적권력체로서 국가를 보는 관점에서 있다. 여기서 반자본 변혁 전망은 없다.

둘째 관점은, 앞서 제기한 제도화된 사민당에 대한 염증과 더불어 현실 사회주의 역사에서 스탈린주의적 전위정당의 폐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파생한 것으로서, 국가로 전향한 당에 대한 거부이다. 혁명 정당이 대중을 권력의 주체로 세우지 않고, 대중 권력체를 당의 하부에 뒤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당 형태 그 자체에 그와 같은 권력체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요소(대표제, 관료제, 군대식 체계)가 있다는 비판, 나아가 모든 권위적인 기구에 대한 원초적 거부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혁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권력의 확신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혁명당에서 집권당으로 전향는 백이면 백 모두 그렇다는 것), 이성의 확신과 강철블록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부터 평의회 운동의 강조, 다중 주체의 네트워크로 당 운동의 대체가 주장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행의 물질적 토대(생산의 사회화)와 이행 주체로서 대중권력문제(국가권력의 성격, 국가장치 문제)를 다루는 데에 당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반자본 계급

투쟁에서 사회운동의 다면적 전선의 접합과 운동의 방향성을 지시할 중심축에 대한 사고 또한 부재하게 된다.

셋째 관점은, 90년대 현실 사회주의권 몰락이 철저한 맑스주의적 혁명 정신을 옳은게 수행하지 못한 탓이라는 판단, 사회주의권 몰락의 원인이 스탈린주의적 변형에 의한 것, 그것과 대비되는 트로츠키적 레닌, 또는 트로츠키적 맑스로부터 혁명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전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당과 계급에 대한 자코뱅적, 또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또한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이다. 이는 맑스주의 안에서 스탈린적, 탈맑스적 경향 배제하는 입장이며, 맑스주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철저한 맑스주의 내부적 반성에 기초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 및 노동자 중심성의 배타적 강조, 헤게모니전략의 부재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운동론은 당운동과 사회운동을 대비시켜 왔다. 국가에 대항하는 변혁적 사회운동론에서는 의식적으로 사회운동과 당 운동을 분리시켜 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회운동과 당 운동의 분리는 맑스주의 혁명정당이 대중적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제도화된 사민주의정당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분리 정립된 것이다. 이것은 68을 전후한 신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분리 정립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이 때 사회운동론자들은 주로 위 둘째 입장(당운동의 폐해성 강조)에서 위 첫째 입장(당운동을 부르주아 제도정당, 수권정당론과 일치시키는 것)과 셋째 입장(비합전위당, 물론 사회운동은 이 역시 제도화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짙다)을 공격한 것이었다. 지금 사회운동과 당운동의 분리, 또는 결합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현실의 당운동을 첫째, 셋째의 관점에서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첫째와 전술적으로 분리하려는 사고, 그리고 첫째와 전략적으로 결합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전자는 전술적 공간으로서 제도정당의 선거 의회 전술을 부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전략적으로 제도공간을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 관념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관점에서 수정돼야 한다.

〈공통질문〉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앞서 말했듯이 반자본 대체권력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전술적으로 공공성 투쟁을 배치할 수 있다. 시민운동적 공공성 담론은 자본의 합리성과 자본주의적 공동선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체제 개혁적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반자본의 대안적 전략 속에서 전술적으로 공공성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공공성 담론은 한계가 명백하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1. 대안의 문제 : 대안사회상, 대안정책, 대안적 사회운동 전망에 관한 토론에 관해

앞서 제기한 사회운동의 적색화, 계급화를 통해 노동자 정치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운동은 물론 정치화돼야 한다. (앞선 답변들 참조, 아래 변혁론 참조)

공통질문 운동간의 연대,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전환한 사회운동의 대안적 전망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본 밖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해방의 기획에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 이행론과 혁명론

- 과거 이행론/혁명론 논쟁에서 계승 또는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혁명론의 재구성엔 국가론에 대한 재구성을 함축한다.

국가론에 대한 재구성을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도구론적 관점’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것은 맑스에 의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르주아지의 국가, 국가권력, 국가기구(또는 장치)는 단순히 점수하여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르주아 국가권력과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국가장치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권력, 새로운 장치로 대체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관료적 지배 장치의 폐지이다. 이 관료집단은 자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곧 ‘관료주의’라는 관료적 지배이데올로기이다. 관료주의란 전문화된 행정 기술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 또는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이다. 이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생산관계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를 낳는 물질 토대가 따로 존재한다. 그것은 자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작동시키는 기구, 또는 장치로서의 ‘국가장치’이다. 어떻게 이 장치를 폐지시키느냐가 혁명의 관건이 된다. 이 관료적 지배장치는 혁명 이후에도 작동할 수 있으며, 이들 관료들은 노동자계급 대중과 달리 이론과 지식, 그리고 정보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사회주의에서의 생산과 소비, 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와 통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급세력간의 힘 관계가 물질적으로 응축되는 것’으로서의 국가권력이라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게임의 법칙만이 있을 뿐 특정 시기에 특정계급의 정치적 지배장치라는 국가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어떤 세력이든지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마치 그 국가와 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게 한다는 환상이 유포된다. 마치 노동자계급의 어떤 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한다면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이것을 정치세력화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심각한 대리주의와 대중의 수동화, 탈정치화가 발생한다.

셋째, 현대자본주의는 사회세력간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포섭해가는 국가권력보다 더 저변이 넓은 권력인 사회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사회권력은 주로 ‘시민사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한다. 문화교육종교매체 등의 이데올로기장치를 통해서 피지배계급 대중을 포섭해 들어간다. 피지배계급은 사회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자본의 물질성이 낳는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계급대중은 ‘계급’을 탈각한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으로 호명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사회권력은 국가권력보다 더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강력하지도 못하지만, 대신에 더 유연하고 더 간접적이어서 보다 생명력이 강하다. 현실사회주의체제는 단 한 번의 민중봉기로도 생명을 다하였지만, 자본주의체제는 무수한 혁명적 격변기와 대공황의 격변기에도 살아남았다. 이것은 지배적인 정치권력을 저변에서 묶어주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에 뿌리박고 있는 사회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권력이 작동하는 한 국가권력을 둘러싼 아/타의 이분법적 단일 전선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운동의 중심성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적 전선은 매우 다층적이고 다원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대 자본주의의 국가권력과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혁명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국가는 누구나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므로 자본주의의 국가권력을 찬탈하여 장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기존 가설은 폐기해야 한다. ‘국가장치’ 그 자체에 계급지배의 속성이 내재해있기 때문에 혁명은 권력의 장악—그것이 의회를 통해서든, 봉기를 통해서든—으로 완수되지 않는다. ‘국가장치’를 완전히 분쇄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가 변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낡은 국가장치를 ‘폐지’하고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그것으로 ‘대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국가변혁의 과정에서 대체해야 하는 새로운 국가는 국가권력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이 ‘국가장치’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

의 대체권력을 의미한다. 즉, 국가장치가 권력적 지배장치로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혁명의 관건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권력 장치와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 질서 또는 장치가 이미 혁명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맹아적 권력 형태로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혁명이 실질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사회 태내에서부터 공산주의사회로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듯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대체권력을 형성해나가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혁명 이론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제 혁명은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봉기의 차원에서만 그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혁명은 혁명을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체권력이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대체권력이란 바로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 체계이다. 대체권력은 생산의 사회화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전반을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고 조직하는 권력기관이다. 혁명 과정은 그 자체가 대체권력을 조직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그 스스로 대체권력의 주체로 훈련되고 조직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은 정치화돼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하는 국가혁명과 사회 전반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회혁명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과거 기동전에서는 전위당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그 동맹세력이 국가권력을 타격하여 우선 국가권력을 접수한 이후에 위로부터 사회화 조치를 취하고, 사회 문화 영역을 개조하는 선정치혁명, 후 사회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권력이 강고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대체권력의 형성과정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본 밖 요원적 질서를 형성하는 반자본 기획이기도 하다. 자본이 헤게모니를 갖고서 작동되는 모든 사회권력과 이데올로기적 진지를 반자본의 헤게모니로 돌려 세우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지를 구축하면서 반자본 대체권력 형성에 복무해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중립적이거나 등가적인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사회권력이 작동하는 시민사회 영역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지배질서라는 물질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물질성에 기초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만약 이 점을 무시한다면, 사회권력의 차원에서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전선의 형태들만 함상적으로 강조하고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노동자계급 중심성’은 사라지며, 대신 일상 속에서 미시적 권력에 대항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된다. 법적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은 시민사회 또는 사회권력을 ‘중립적인 권력투쟁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 또는 공동선’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시민운동을 지상의 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질서가 규정해 놓은 틀내에서 사회권력을 두고서 사회개량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회권력과 시민사회는 중립적인 권력 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적 사회구성에 기반한 계급들의 권력적 장치가 지배를 생성하고 작용하는 공간이다.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적 영역은 이미 사회, 문화, 의식, 그리고 보편적 가치 등의 모든 지점을 관통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자본의 지배 질서와 그것에 대항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은 사회운동이 견지해야 할 투쟁 전선의 본질적 축이다.

〈공통질문〉

2. 국제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사회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변혁운동에서 가장 시급히 모색해야 할 지점이다. 당위적 수준에서만 말하자면, 반제반자본 국제혁명을 위한 국제주의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철저히 자본의 국가주의와 맞닿아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운동 내부의 민족주의 경향들이 반자본의 지평으로 전인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이미 친자본적 경향은 그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여 전취 또는 중립화시켜내야 한다. 남북 관계, 반전운동, 반세계화 투쟁에서 민족주의를 반제반자본의 코드로 흡수하기 위한 변혁적 사회운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오늘날 세계는 유일한 지배체제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미국헤게모니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든 이후로, 얼마간의 지역별 시간차이와 다소간의 진행양상의 특이성을 두고, 전반적인 대중의 생활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고통 받고 있다. 남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위기 역시 뒤늦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극명한 형태로 표출되었고, 그와중에 성립된 IMF신자유주의 지배체제는 한국사회의 급속하고 철저한 금융적 재편과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진척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에 다름 아니었고, 모든 비극적인 사태는 IMF와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정책개혁 일정과 정확히 발맞추어 진행되었다.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지난 10여년간 이루어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냉정히 돌아쳐보면, 반신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투쟁들이 매번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러 정작 (반신자유주의와는 상관없는)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들에 의해 좌초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투쟁노선에 입각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무엇이 신자유주의인가에 관한 이론적 설득이거나 의지주의적인 투쟁의 호소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반신자유주의’ 슬로건은 겉으로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터져 나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들과 매우 자연스러운 듯이 결합되었지만, 그것은 당장의 투쟁 명분 획득을 위해 이리저리한 현실적 필요와 요구들 위에 얹혀진 공문구이거나, 가식적인 정치적 수사로 전략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민중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의 선악은 너무나 명백하고, 사태는 어느 때보다 혁명적인 체제적 위기로 이어져야 마땅한 외양을 띠고 있다. 민생파탄/민주압

살로 요약되고, 대량의 빈곤과 실업, 폭력탄압과 금융투기/부패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반민주성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는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채색된 안경을 쓰고 본다면, 너무나 명백하고 거대한 계급투쟁전선이 펼쳐져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통치불가능성,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그 자신의 포퓰리즘(인민주의)의 모순들에 봉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 민주운동의 제도적 형태 즉 조직화한 계급투쟁의 해체와 탈정당화(正黨化)라는 부정적 성공을 내포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재구성이나 계급투쟁전선의 복구로 귀착하기는커녕, 지리적 장벽뿐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성적 장벽들로서 프롤레타리아화와의 차별적 측면을 더욱 근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귀착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에 의해 흐려진 계급적대의 가시성속에서 부족한 것은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론적인 것의 새로운 구성과 결합이다.

IMF이후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근거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밝힘으로써, 그것의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실천적 조직적 의미를 확정짓는 것, 결국 **전략전술없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극복해내는 일, 비개념화된 반신자유주의라는 슬로건의 실천적이고 대중운동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일, 이 당연한 듯 하지만 풀리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특히 우리는 빈곤과 전쟁의 시대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들과 그에 대한 토론이 주요하다고 본다.

첫째, 위기론적인 시대인식의 쟁점

： 성장분배의 정치나,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이나

오늘날 위기와 이행(변혁)을 사고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계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체계 내부의 운동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적 지배체계의 위기는 자본주의 지배체계 스스로의 내부적 작동과 힘을 통해 치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여부야말로 위기와 이행(변혁)의 시대인식의 기본 쟁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운동의 전망을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반을 둔 사회진보로 볼 것이냐, 구조적 위기를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 이행(변혁)을 예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대안세계화 사회운동)에 둘 것이냐는 핵심 쟁점이 가로 놓여 있다.

둘째, 변화한 계급투쟁의 양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

： 메제와 포섭, 계급 없는 계급투쟁으로

신자유주의는 ‘해체와 포섭’이라는 (구조적 위기관리를 위한) 자본축적구조 재생산 메커니즘상의 새로운 통치형태를 통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계급분할/해체/재편을 기도한다. 더욱이 더 이상 생산적 팽창을 중단한 자본의 초민족적인 금융적 이탈은 과잉자본과 더불어 과잉노동에 대한 무

차별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금융적 팽창)의 시대’를 열게 된다. 이제 자본은 자신이 파 놓았던 무덤마저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자본축적의 부산물들 중에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결과 비상한 각오와 명백한 요구를 내건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자발적이고 결사적인 대중들이 동원된 수차례의 투쟁들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득을 보게 된 상층 지배계급은 더 많은 더 빠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이룬 반면, 정작 피해를 입게 된 하층은 분파화되고 개별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같은 사태를 본다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한 피해자 집단과 수혜자 집단의 구분은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지만, 수혜자 집단이 자신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통해 지배계급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한 반면, 피해자 집단은 그야말로 피해자 집단 이상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한 채 공통의 ‘집단적 미래’를 상실한 꼴이라 하겠다.

여기서 필히 짚어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급분할/해체란 단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화된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노동자계급의 분할(프롤레타리아트의 고유한 위험으로서의 실업과 고용조건 악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적’ 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과 ‘정치적 주체’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별적 동일성 혹은 자기동일성(정치성)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 혁명적일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혁명적이라는 명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자기동일성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는 비로서 진정으로 자기-통치가 가능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보편계급’이다. (반면 부르조아지는 비록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이긴 하지만 국가를 통해서만 통치할 뿐 스스로 지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상 지배계급의 모든 계급투쟁은 이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인 자기동일성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들이 노동자계급의 직업적 국민적 분할이나 지적 배제(의식적 낙후) 혹은 제국주의적 매수와 같은 것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적하고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와 자본의 공세는 이같은 지배계급의 오랜 계급투쟁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위기 아래에서 최고도로 강화된 형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포섭/배제’ 전략은 피지배계급의 분할을 통한 관리 통치술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기술적인 통치기법만은 아니다. 이는 보다 주요하게는 자본축적구조 재생산 메커니즘상의 새로운 통치형태 혹은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한 국가와 자본의 새로운 계급투쟁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반공 발전주의(중심부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쌍)에 기반한 ‘강제적인 억압-동원’으로부터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지역, 인종, 성별, 계급 계층간 분할과 포섭/배제라는 형태로 국가와 자본의 지배적인 계급투쟁의 형태가 변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억압적 동원체제에서도 반공발전주의적인 매수는 존재했던 것이므로 형태상 전혀 낯설고 새로운 것은 ‘배제’이다. 우리는 이전까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특징을 단순착취가 아니라 초과착취를 향한 영원한 경향이라 보았으나,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초과착취는 그나마 포섭된 자들의 몫이다. ‘배제’는 더 이상 초과착취가 아니라 실업이나 시민권의 박탈과 같은 ‘착취 자체의 배제’라는 의미에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포기’에 가까운 통치형태 아닌 통치형태인 것이다. 실제로 일찍이 1980년대 레이건이나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권은 노동자 대중을 ‘건강한 시민’과 ‘기생충’으로 분할하여, 오직 전자만을 안정적인 관리(=

착취)체제 속에 포섭시키고, 끊임없이 노동대중의 일부를 사회의 기생층으로 규정하여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일정한 ‘규율의 효과’를 얻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러한 배제와 포섭의 체계는 ‘가계의 금융화’나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한 보다 ‘관리주의’적인 형태로 그 걸모양새를 가다듬었을 뿐이다. (물론 그 수혜층은 매우 협소하기에 그것은 자체로 어떤 대안적인 타협점에 미달하는 기본적인 관리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 결과 배제된 다수 대중은 극심한 경제적 곤궁 속에서 심각한 무기력과 의태심, 편견에 빠진 채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려 있다. 사태는 ‘부르주아의 통일과 프롤레타리아의 분할’이라는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일반법칙으로, 단결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보다 10, 20년 앞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들 나라에 존재했던 강력한 노동운동과 좌파 정치세력들의 기나긴 쟁투와 해체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발본적인 지난 투쟁의 평가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전선복구와 새로운 계급형성적 사회운동의 형성만이 그 해법임을 가리킨다.

셋째, 젠더화된 계급투쟁, 경제 낫기 전략의 역전이 필요하다

: 경제성의 정치가 아닌 ‘차이의 평등’에 기초한 ‘인권의 정치’의 필요성

전통적인 20세기의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형성에서 인종·종족·젠더·국적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해왔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점점 더 동질적 노동계급을 만들어낼 것이고, 경험, 이익, 그리고 의식을 수렴시켜, 통일된 민족적(그리고 국제적)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상호대체가능하다고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마르크스가 노동자들 스스로 기꺼이 동일성의 비계급적 토대를 버릴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노동계급의 해체와 재구성이 노동자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경쟁압력을 낳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은 종종 비계급적 구분선과 경계를 그어 대혼란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토대로 삼으려고 하는 뿌리 깊은 경향을 띠었다. 실제로 노동자를 자본가치 증식을 위한 차별적 능력 이외에 어떤 개별성도 지니지 않은 무차별적 대중으로 간주하는 자본의 성향에 직면할 때마다, 프롤레타리아는 반란을 일으켰다. 거의 변함없이 그들은 자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두드러진 특징들(연령, 성별, 피부색,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분된 특이성)의 조합이라도 붙잡거나 새롭게 창조해 냈다. 그 결과 가부장제, 인종주의, 그리고 민족·국수주의가 세계노동운동형성에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고,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와 조직들에 이런저런 형태로 살아남았다.

물론 이 같은 노동권과 시민권 사이를 가르는 주요하고 배타적인 경제 낫기는 자본과 국가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정당성과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자본과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이동을 선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권과 시민권의 내용과 목록을 재편한다. 즉 위기에 처한 자본과 국가는

누가(노동권과 시민권의) 이러저러한 권리들에 포함되고, 배제되며, 그 내용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획정지음으로써(시민권, 노동권의 분단과 내외적인 공간적 재편) 새로운 수익성과(그에 조응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경계 긋기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때문에 비민주적인) 결과를 양산했던 바, 특히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결합해왔던(반)주변부의 혁명적인 노동자운동들은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한 경계 긋기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보편성은 식민주의(어느 정도 수준이상으로) 탈식민화되는 20세기 후반기 이후, 점차로 기존의 민족해방혁명운동과 결별하거나 혁명성(보편성)을 잃은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요컨대, 경계 긋기 전략은 세 가지 주요한 상호 연결된 형태를 띤다. 노동시장 분단(주로 자본이 추구), 시민권의 경계를 정하기(주로 국가가 추구), 그리고 비계급적 토대 위에서 배타적 계급 동일성 구성(주로 노동자 자신이 추구)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타적 경계 긋기는 늘 특정 집단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경계 긋기의 실천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체계수준 문제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체계수준의 문제를 해결/이용하기 위한 시도로 누가(그리고 어떻게) 경계 긋기를 이용하는지를 선형적으로 이론적 고려 속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대신 이는 역사-경험 분석의 기반 위에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다른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과의 격렬한 경쟁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훨씬 더 배제의 전략을 택할 것 같은 반면, 기존 사회계약에서 배제되어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자계급들은 훨씬 더 기존 경계에 저항하고 이를 깨려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법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국가와 자본가들의 배제적/포섭적 성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경계 긋기와 경계파괴의 실제 동화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더욱이 미국헤게모니의 구조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 자본/국가의 포섭과 배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인색한 리생산방식) 과정에서 한 때(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노동자집단의 다수가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탈조직화되었다(예컨대 "하청주 및 파견근로업체와의 일시적이고 영성한 관계망"으로 재배치되고, 생산과정이 수직적으로 해체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된 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비중으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노조와 좌파 정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의 포섭배제전략에 조응하는) '정체성(동일성)의 정치'에 입각한 "원한의 정치"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전통적인 노동자운동 위기의 분석적 계기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계급적 노조주의나 20세기적인 당-마르크스주의를 지양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정치, 즉 자본과 국가뿐 아니라 노동자운동 스스로에 의해 분단되어지고 있는 노동권과 시민권의 새로운 접합과 확장(가장 주요하게는 페미니즘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꾀하는 새로운 운동 전략과 이념을 요청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온갖 폐해와 불평등의 검은 비는 성적 인종적 분할선을 타고 내리며, 이러한 분할에 맞선 국제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반성과 대안의 구축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최전선이다.

넷째, 사회-민족국가의 해체와 정치의 위기

우리는 가설적으로 금융세계화와 구조조정예 조종하는 국가형태로서 '위기관리 국가' 라는 개념을 사고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국가의 화폐관리와 노동력관리 제도의 해체로 드러나는 케인즈주의 국가 또는 사회-민족국가의 위기를 야기했다. 보통 이같은 현상에 대해 1980년대 힘을 얻은 보수주의는 '국가실패론' (과부하정부의 통치불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제거하고, 현재의 법인자본주의는 통치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개혁론' 은 1980년대 말에 다시 헤게모니를 획득한다. 이렇게 재조정된 국가는 '위기관리국가' 의 성격을 갖는다. 위기관리국가에서 2차 관리자혁명(또는 행정혁명)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으로 집중된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재무부의 역할 강화와 중앙은행의 독립으로 특징지어지는 변화는 경제정책이 더 이상 '선출된 정치적 대의기관' 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기술관료(technocracy)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동시에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국제기구들과 이들이 후원하는 NGO의 활동이 증가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민족국가의 '탈민족' 적 형태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민족국가의 약화나 해체와는 전혀 다른 현실, 즉 국가에 대한 인민적 통제 가능성이 차단된 통제받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경찰국가의(경찰폭력과 정보적 통제에 기반한) 등장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하의 국가와 정치는 이른바 '부패' 라는 쟁점을 통해 구조적 위기의 문제를 체제내부의 법적 사정개혁의 문제로 호도한다(OECD, World Bank → 이탈리아의 탄젠토폴리, 남미의 파풀리즘). 법의 지배, 투명성, 책임성(특히 수평적 책임성) 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기존 정당정치와 대표제도의 비효율성이 공격받는다. 의회의 물질적 토대와 정책적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의회를 통한 일말의 계급타협적 정책의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정책개혁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주 임무로 하는 정당의 이념적 토대 역시 약화된다.(이 기능은 점차 미디어, 혹은 미디어 기구화된 정당으로 이전된다) 정당은 이념정당(제공정당)에서 정책정당, 나아가 무지개정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곧 기존 대중정당 내에서 인민적 요소와 입헌적 요소가 분리되어 인민적 요소가 격하·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논자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우량 통치(good governance)' 논의란 공공선을 표방하는 비정부기구(NGO)와 법원이 민주주의를 구성한다는 새로운 통치공식에 다름 아니며, 이를 정당성 위기에 빠진 (특히 반주변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치개혁론의 결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 에 대한 강조는 수용할만하며, 법적 절차에 대한 의존은 본질적이고, 대의적 민주주의의 제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헌법개혁 논의나, 시장의 투명성을 모방한 정치적 투명성, 합법성, 이해관계자의 접근권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나아가 선거의 의미는 매우 적거나 심지어는 그 자체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기구들의 역할을 제한, 변경, 재편한다.)

여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위기관리기관으로서 NGO의 증가는 행정권력에 내재한 '전문가주의' 를 '유연화' 한 것이다.(수많은 각종 위원회들,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NGO의 증가는 이른바 '행정개혁' (new public management)의 핵심이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보편적 요구를 내걸고 사회를 '변혁' 하고자 했다던, 이제 사회운동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주요한 목표로 한다(자기-중심적 실리주의).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국가기구의 일부로 스스로를 통합시키고자 한다. 대중정치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위는 유지되지만 정책의 성격은 미봉적·단기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NGO는 기존의 행정기구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통치를 보장한다(자본의 유연화에 상응하는 국가의 유연화).

한편 이러한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정당의 (계급)대표기능은 상실(절차적 기능을 통해 통치기관으로 기능, 정치지도자들도 대표성보다는 (준)정부행정기관에서의 경력을 중시)되고, 행정권력(기술관료적 경제정책의 자율화, NGO+사법부의 갈등관리, new public management)이 그 빈공간을 메꾸는 방향으로 비대해진다. 기술관료와 ‘전문가’의 지배 하에서 ‘인민의 민주주의’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대립되는 것이다. 인민주의의 득세는 이러한 현실의 부정적 반영이다. 특히 현재의 인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인민주의로 이는 물질적·정치적 통합의 메커니즘으로서 코퍼러티즘을 결여한 ‘정치가적’ 인민주의(‘청중민주주의’)이다. 인민주의는 더 이상 안정적으로 조직된 이익집단 또는 기능집단을 포섭하지 않고 분할/해체(기존의 매개적 조직들, 예를 들면, 의회, 노조 등을 기독교 세력으로 공격)하며, 기존의 조직으로부터 배제되었던 다양한 이질적인 ‘민중’ 들을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혹은 인기몰이)으로 동원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국가형태 또는 통치형태는 기술관료지배(technocracy)와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인민주의의 결합이다.

그러나 물론 자본축적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위기관리에는 객관적 한계가 존재한다. 위기관리는 국가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금융적 축적의 불안정성에 의해 위협을 받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중의 정념적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극단적 폭력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특히 인민주의적 동원이 객관적구조적 위기를 ‘인민들 내부로’ 전가하면서 인민들 내부의 극단적 폭력(예컨대, 종교, 인종, 계급, 성 등의 동일성에 기초한 상호파괴와 자기 파괴의 정치, 이른바 ‘예방적 반봉기’)이 증폭된다.

이러한 변화와 ‘국가기구’의 붕괴, ‘야만’의 도래와 같은 극단적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속에서 혁명적 계몽주의 운동의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붕괴하는 제도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할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고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화되고 국가주의적으로 변질된 20세기적 마르크스주의, 변혁이념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대안은 더 이상 강조할 나위조차 없다. 광범위하게 확대된 국가기구 또는 행정 권력이 낳는 ‘예속화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대항정치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크다. 문제는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조직할 것인가, 인민들이 획득한 기존의 시민성/시민권을 ‘보편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민성/시민권을 고안할 필요성(예컨대, 초민족적 시민권과 같은)이 대두되는 것이다.

다섯째, 거들된 폐쇄와 대안부재로 인한 폐쇄주의와 무력감

: 분할, 순차공격에 대항하는 연대투쟁 성사의 전제는 무엇인가

계급분할 정책과 함께 대중의 반역을 가로막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무기는 “대안은 없다”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 이데올로기다. (전문가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개혁안을 대신할) 대안이 없다는 믿음은 체제 변혁적 사회운동의 예기를 꺾기에 충분하다¹⁰⁾. 그러나 막상 TINA 이데

10) 또한 이러한 대안کمپ렉스와 무력감은 한미FTA투쟁과 미군기지 투쟁이 직면한 이윤배반적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올로기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정책적 이념적 우월성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다.(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이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전략 역시 정책적 이념적 대안쓰기와 설명력의 보장만으로는 대중의 무력감을 역전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각각의 대중투쟁의 고립과 패배, 분열의 악순환을 추동하는 고도의 분할 순차공격 기법이다. 실제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역량을 자랑했던 남한의 노동자 사회운동은 IMF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거듭된 대중투쟁의 고립과 패배, 분열에 뒤따른 깊은 대중적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투쟁의 고립과 패배, 무력감 확산, 연대파괴의 악순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전형적인 공격방식-기법의 전형을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 불리는 남미식 구조조정 기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살라미 전술'¹¹⁾이란 말 그대로 살라미 소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살라미 소시지는 불을 써서 훈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저온 숙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태리 소시지의 일종이다. 즉 비훈제 저온숙성 소시지를 만들듯이, 지역별, 부문별 정책개혁의 실행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 부문별 지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나누어 진행함을 빗대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언제나 공격은 부분적이고, 개별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듯 보이고, 그 결과 대중저항을 고립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우리 차레가 올 것은 알지만, 차레가 올 때까지, 연대하기 보다는 우선 벌고 보자는 식의 패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조장) 그러나 물론 실제 공격과정에서는 숙성 공법이라는 은유법에서 느껴지는 온정과 여유로움이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정책개혁과 구조조정 현안을 다루는데 동원된 국가기관과(경제부처와 경찰, 사법부) 온갖 종류의 이데올로기 기관들의 자세는 작은 양보나 온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전불사, 총력전 태세의 집요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모양새다. 또한 순차 공격방식은 전혀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한 부문에(한 지역에) 대한 공격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른 부문에 대한 공격이 자동연결 확대시켜가는 승설름 없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구체적인 공격 실행전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부문(및 지역)의 고립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실행되며, 이를 통해 해당부문에 대한 성공적 공격이 성사되면, 이를 주요한 경험사례로 조작하여 다른 부문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세계적인 차원의 공격을 자동연결 시켜간다. 결국 이 같은 공격기법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그때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가거나, 개개의 저항의 성과를 모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투쟁의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각각의 개별적 투쟁들은 특정지역과 국가의 부분적 사안일 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금

드러난다.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반미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투쟁의 결정적 국면마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심에 가까운 철의장막 앞에 가로막혀왔다. 미국에는 반대하지만, '미국 없는 평화', '미국 없는 경제'를 상상할 수 없고, 한미동맹(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양 측면에서)이라는 경계선에만 서면, 더 이상의 진로를 잃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채 멈춰 서서 대오가 출어지는 현상 말이다.

11) 한편, 5~6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청와대 아이디 도용사건 역시 「살라미기법」이라 불리는 허킹기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크레딧들은 이자 계산이나 다른 거래 계산 플 그림 속에 단위 수 이하의 숫자를 특정 계좌에 계속 가산되도록 플 그림 루틴을 부정 삽입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돈을 빼냈다. 뚜렷한 피히자가(자신이 피히자라는 인식이 없는 다수의 피히자를 양산) 없어 특별히 검사히 보는 제도를 두지 않으면 말 수 없고, 일단 허킹이 개시되면 시스템 전체를 손보는 별도 수정(시스템 포맷과 같은) 없이는 범행상태가 계속된다.

음-군사세계화의 연쇄 프로그램의 고리라는 인식과 실천적 합의가 없이는 어떠한 작은 투쟁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언제나 지역별 부문별 순차/분할 작동방식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개별현안들에 대한 대응과 구체적인 현실적 승리 없이는 체계 대안적인 전망을 획득하기 어렵다. 개별 사안들 간의 세계적 연관을 밝히고 (사회운동과 금융-군사세계화 비판의 결합), 실천적 연대구축을 통해 현안투쟁대오의 고립을 막아내는 일, 해당 부문 지역의 현실적 승리를 통해 사회운동의 대안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적 대안세계화의 전망을 구축하는 일,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 공세의 연결 사슬을 끊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대안이자 전망의 전제조건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주요한 대안인 것이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1. 87항쟁 20년/ IMF위기 10년,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2. 운동노선 평가의 관점에서

민주화 20년?, 민주항쟁의 자유주의적 분할과 그 균열의 역사

87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87년 체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표현된다. ‘87년 체제’란 보통 87년 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혹은 보다 좁은 의미로 직선제 개헌을 한 6공화국 헌정체제), 즉 군사 정권의 퇴장과 문민 정권의 등장으로 정착된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전의 군부 독재 체제에 대비되는 민주화 체제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87년 체제의 근간은 민주 항쟁이 아니라 노태우가 주도한 6. 29 타협에 있다. 그 결과 민주항쟁의 정치적 성과는 선거를 통한 군사 정권의 재등장으로 소실됐고, 이후 90년 민자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연합의 결성, 93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로 변질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 즉 군사 정권의 퇴장과 문민 정권의 등장이 민주화의 진전이 아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정치적 조건, 신자유주의적 정치 재편이라는 사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다. 우리보다 10년 일찍 이러한 정치 변동과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화를 경험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개발독재국가들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두고,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완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형식과 실질, 또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문민정권의 기본성격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며, 나아가 변화된 현실의 계급대립을 외면한다. 그 결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와 구별되는, 혹은 그에 미달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부차적인 운동이거나 부문운동으로 축소 배제된다.

민주변혁운동과 결합된 민주항쟁은 분명 존재했으나, 결국 권력과 제도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남았다. 문민화는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공고화하기는커녕 민주 항쟁을 통한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

한 시도이고, 합쟁의 정치적 성과를 독식한 자유주의 지배분파의 타락과 배반일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체제로서의 '87년 체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합쟁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를 굳이 87체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87체제는 민주화체제와는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고쳐 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훼손당한 87합쟁과 그 뜻을 되살린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위협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자화자찬하는 386의 기반을 제거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말뜻 그대로 인민이 주인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차가 내용을 규정할뿐더러, 내용 없는 절차적 완성이란 하나의 기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관한 분명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능과 기반의 10년, 누가 보수반동화의 기초를 놓았는가

그러나 막상 그렇게 민주 합쟁의 맥을 자르고, 그 정치적 과실을 찬탈해 간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패했다. 특히 IMF 이후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진보정권 10년'은 신자유주의적 인민주의 정치가 꽃피운 시절이었다. 이들 정권은 개혁과 참여, 민주를 참칭했지만,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무능과 기반을 숨길 수는 없었다. 감격스러운 선거 캠페인의 환호는 채 반년을 넘기지 못했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의 본성은 연이은 노동자민중의 희생과 피를 부르며 말았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환멸이 극에 달하고, 민주주의와 진보는 하나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정권의 반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폭력성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참칭한 민주와 진보가 비웃음과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나아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진보정권' 스스로가 선도하는 왜곡된 형태의 전사회적인 보수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랜 경제 위기로 수동화된 대중은 인민주의적인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에 쉽게 휩쓸리고, 캠페인을 주도한 세력이 실패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크게 실망한 대중의 정치적 불신과 연대파괴가 한층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비단 정권과 386의 배신만이 87 합쟁의 정치적 성과를 유실시킨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 운동 측의 두 가지 원인을 짚어야 한다. 87~91년 계급투쟁의 국내외적 패배로 인한 변혁 이념과 운동/조직의 해체가 그 하나이고, 남은 민중운동 역량이 90년대 중후반 이후 코퍼러티즘적 노동조합과 당으로 수렴된 일이 두 번째 원인이다. 보통 이 같은 일이 벌어진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90년대의 변화와 해체를 거쳐, 이후 2000년대 민중운동은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방어적이고 코퍼러티즘적인 동원과 계급분할/연대파괴의 효과 안을 맴도는 동일성의 정치에 갇혀 왔다. 운동의 위기와 혁신이 이야기됐지만, 대부분 현상적인 진단과 대중 요법에 그친 가운데 근본적인 혁신은 지체된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IMF 위기 이후 계속된 장기 불황과 민생 파탄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같은 처참한 민생파탄의 현실이 대중의 반역과 사회운동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민주와 진보의 실패로 오인하는 대중의 정치적 환멸과 증오를 등에 업고, 오히려 보수

화의 검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앞서 타개해 가야 할 노동자 민중운동이 거듭된 패배와 혁신의 지체로 생기를 잃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이자, 새로운 대안형성을 위한 현실적 극복의 지점이다.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쟁점

： 대안세계화를 위한 노동자 사회운동 형성의 기본방향

분단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의 사회운동은 소수의 지적인 운동과 기층 생산자계급의 반역이 분리된 채 간헐적으로 분출되었다. 운동의 이념과 이론은 크게 발전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민주주의) 관념과 결합되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는 2차 세계전쟁 이후 확립된 스탈린주의(즉 민족화된 사회주의)의 형태를 취했고, 이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식인들은 대중운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준)전위정당을 추진했다. 이는 곧 정당이라는 조직형태가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과잉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 정권의 폭압으로 인해 전위정당(조직) 건설의 시도는 종결되고, 종교계 등의 이른바 '명망가'에 기초한 '재야'운동이 사회운동—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인민주의의 결합물—을 주도했다.¹²⁾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이론 이념과 계급대중운동이 결합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운동이 출현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매우 역설적으로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및 그 변종으로서 주체사상)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단절, 더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의 단절'로 인해 국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념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현실의 결과였다. 즉 역사적 단절로 인해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변화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아래에서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무비판적 확산 속에서 '정당 마르크스주의'의 맹아들이 형성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전위정당 건설 또는 (복의)전위정당을 전제로 한 당세포의 건설을 변혁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지만 전국적 조직을 갖지 못한 수많은 '정파'들이 형성되었다. 정파는 전국적 정치신문(정파 기관지)을 조직적 무기로 해서 조직통합(을 통한 전위정당건설)을 추진했다.(물론 그 건설경로에서는 다양한 내부의 쟁점이 있었다) 정파들은 이념과 사상의 통일성에 기초해서, 나아가 과학적 이론과 강령에 기초해서 스스로를 위로부터 조직했다(모든 정당은 위로부터 건설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길). 이는 변혁의 과학적 경로를 둘러싼 사상투쟁을 동반했는데, 그 결과 변혁에

12) 이러한 운동은 이후 문민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수렴되며 '인민주의'의 뿌리가 된다.

대한 ‘프로그램적 관념’¹³⁾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980년대의 역사적 교훈은 (전위적)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러한 정당이 없었던 덕택으로 자율적인 사회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980년대 사회운동의 진정한 힘은 변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자의 선결집’을 달성하려 했던 정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믿고 ‘변혁논쟁’ (즉 현실사회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구상과 합의, 탐구)을 일상적 활동에서 구현하려 했던 대중적 사회운동(노동자농민여성운동)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대중의 능동적 인식—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일상적 문화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기초한 공통의 현실파악과 대중적 투쟁—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이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보다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반된 지적-정치적 활동이 변혁적 사회운동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은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와 농민에 기초한 계급적 대중조직의 형성, 나아가 대중적인 변혁운동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역설적으로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국제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그 이론적·정치적·조직적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은 (세계사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기로에 빠지게 된다.

첫째, 기존의 스탈린주의를 사민주의로 대체하고 사회주의 정당을 사민주의 정당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중국의 1967년 문화혁명에 뒤이은) 유럽의 1968년을 계기로 기존 정당 마르크스주의의 개혁의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내적 개혁(당과 대중운동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실패하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 정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사민주의 정당은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변모한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는 사실상 변혁적 사회운동의 해체를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스탈린주의 핵심을 국가주의 및 이와 결합된 정당정치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하는 비국가적·자율적 사회운동을 심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1968년 이후 유럽에서 출현한 ‘새로운 사회운동(신사회운동)’이 평의회주의적(또는 자율적) 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중산층의 소비자 운동, 나아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수렴되거나 또는 1990년대에 NGO로 변모한 것처럼 남한에서도 ‘시민운동’은 노동자 운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NGO로 변모한다. NGO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거나 또는 사회운동의 일부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확대된 국가’로 기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NGO는 행정기구의 유연화된 형태(기술관료적인 위기관리기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기구의 유연화된 형태(인민주의적 기술관료적 대중동원)로도 기능한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 또는 의회정치의 취약성, 자유주의 세력의 취약성,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등과 결합하여 ‘인민주의(파퐁리즘) 정치’의 토대가 된다.

13) 이러한 사고의 많은 부분은 련년의 전략-전술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련년은 전략전술을 ‘당의 성장과정’으로 이해하는 정통 중앙과 마르크스주의(카우츠키등 제2인터와 멘셰비키에 대항하면서, ‘전략전술은 ‘당의 성장과정’이 아니라 당의 계획’이라는 터저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련년 전략전술관의 핵심요체는 계급투쟁(대중운동)의 역동성에 입각한 전략전술의 혁명적 전환(부르주아 혁명/사회주의 혁명으로 나뉘는 단계적 혁명론의 폐기)과 급진화(소비에트 권력 수립)였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특수한 해석만으로 련년의 전략전술관이 온전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련년에 계 있어 전략전술(혁명)은 당에 의해 수립되고 실행평가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고가 온전히 제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1980년대 사회운동의 계급적대중적 토대를 (경제적특수주의적코퍼러티즘적) ‘계급’ (?)대중 조직으로 고착화하여 실리적 요구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는 ‘사회경제적 노동운동’ 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체되면서,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은 국가를 적극적인 교섭의 대상으로 활용한다(코퍼러티즘 모형, 사민주의 정당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활용가능한 선택지들 중 하나, 특히 큰 매력은 없는 선택지의 하나에 불과하다).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 과 단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운동은 기존의 노조조직형태로 복속된다(대중 조직 자체의 물신화와 우경화). 대중의 요구를 일상생활과 협소한 경제적 요구로 축소하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의식과 자율적 연대의 실험들이 제거된다.

결국 대중의 자기통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은 국가-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몰락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건립하는 대중의 자율적 운동을 의미한다. 변혁의 과정은 실질적 사회화의 과정이어야 하고, 여기서 주체는 국가(법적 사회화)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자율적 조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정치이념은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군사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현재의 위기에 대한 민족적국가적 관리가 아닌 초민족적-민중적 해결)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활동이 바로 변혁적 사회운동의 활동이 될 것이다(자기교육운동과 대중적 캠페인 등).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새로운 문화(또는 시빌리테)가 사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역사는 1980년대 말에 절정에 이른 변혁적 사회운동, 즉 사회운동 노조주의와 ‘민중운동’ 의 성과가 사민주의적 정당, 코퍼러티즘적 노조, 정치적행정적 NGO로 부정적으로 수렴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특정부분의 조직적 요구만을 추구하는 코퍼러티즘, 혹은 사민주의적 개량주의의 특성상, 그것은 장기-구조적인 타협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시대적 조건에 전혀 적합하지 않음은 명확하다. 물론 개량과 개량적 자기방어 그 자체는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고 절박한 현실의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시대에 코퍼러티즘은 노동자계급의 위계화와 배제에 기반한 허구적인 형태의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본적인 혁신을 지체시키고 위기를 봉합하여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부적합한 운동양식이라는 점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이러한 부정적 수렴에 대항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전선재편을 추진했던 시도는 노동자농민여성의 변혁적 사회운동의 형성과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연합의 확장으로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즉 상층 지도부와 슬로건의 좌우교체를 넘어 기존의 운동이념과 조직들 자체의 혁신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며, 이러한 과제는 다시금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성과 연합으로 발전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안세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연합이다.

자율적 사회운동의 주도성 하에서 정당은 ‘사회운동 정당’ 으로 변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현재의 사민주의 정당의 내적 모순, 즉 선거정당-지배정당으로의 경향과 사회운동으로의 경향에 작용해서 후자를 강화시켜야 한다.(역주행!)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내적 모순, 즉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기술관료적 경향과 사회운동적 경향에 작용해서 후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개조해야 한다.(역주행2) 또한 사회운동은 NGO의 (위기)관리적 경향 및 인민주의적 대중동원과 단절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국가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거부(또는 부정)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및 국가정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인민주의적 성격은 분석비판되어야 한다. 국가와의 협상타협도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운동의 강화에 종속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남한 사회운동의 위기적 상황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으로 표상되는 운동의 이상과 현실(일상정치활동)상의 괴리 정도가 운동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상이다. 이에 운동의 이상을 현실에 맞추어 폐기-수정하자는 우익적 전망과 이전의 이상을 고수하려는 전망이 제출되었다. 전자는 운동의 전투성과 변혁성을 위기의 원인으로 호도하면서 점차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사회합의주의로 나가고 있으며, 후자는 점차 확산되어가는 우경적 전망을 운동의 위기 자체와 혼동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의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익적인 정치적 경제주의(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 좌익적인 전투적 경제주의(실리주의)는 서로간의 대립과 갈등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이행과 위기에 대한 사고 없이, 지난 10여년간 코퍼러티즘적인 산별-진보정당 노선을 공유해왔다. 이는 노동자 대중운동과 노동운동 조직사이의 괴리, 노동운동 조직과 진보정당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식이었다(실리적 동원과 실용적 역할분담, 나아가 의사(擬似)동원 구조로 진화중이다).

그 결과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으며 수동화된 대중은 날로 우경화되는 노동조합의 알리바이가 되었고, 다시 우경화된 노조는 진보정당의 우경화의 알리바이이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상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탈운동적인 연쇄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깊고 복잡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 해결의 방식은 역전된 운동사적인 진행방향을 아래로부터 역주행하는 역전전략이어야 한다. 즉 대중운동의 능동화가 노동조합의 능동화를 낳고, 노동조합의 능동화가 노동자 정당의 운동정당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역주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내적 모순은 당노조의 창건과 발전이 오랜 사회운동의 성과위에(개인적으로는 운동의 경력) 놓여져 있지만, 조직 자체의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기원과 위치를 망각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이는 당과 조합의 현실에서 위기관리 기관화(의회정당화, 경제관리기구로서의 노조)경향과 사회운동적 개조(운동기관화와 사회운동에의 참여와 연대)라는 경향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현 시기 남한자본주의의 위기재편 방향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핵심쟁점은 위로부터의 정책개혁과 파퓰리즘적인 대중동원을 통한 위기관리, 즉 새로운 허구적 사회협약이나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위기의 급진적 전환과 대안세계화인가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기존 이념을 전쟁과 경제위기로 침몰된 이행의 시대에 적합한 반전-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개조해야 할 것이며, 코퍼러티즘적인 당과 노조 조직을 사회운동기관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연합과 자기통치로 가는 교두보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 수행의 현실적인 착수는 기존의 당-노조 조직의 틀을 뛰어넘어, ‘허구적인 사회협약’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별도의 독자적 사회운동의 흐름, 새로운 운동의 표상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운동의 창출로부터 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질문>

2. 변혁적 사회운동은 무엇인가?
3.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는?

국가와 NGO,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종종 대중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실질적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그 관념)의 역사와 현재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운동이라는 관념의 기원은 19세기 노동자운동, 즉 급진 계몽주의를 수용하여 ‘사회혁명’을 추구한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소급된다. 여기서 사회혁명은 종종 ‘정치혁명’과 대립되는 의미를 갖는데, 그 핵심은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화와 대중의 자기통치—실질적인 통치능력의 확립—에 있다. 이러한 운동이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형태의 연합적 운동으로 표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당에 대립하는 특수한 당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실천적으로 모든 나라의 노동자당의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추동적인 일부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다른 노동자대중에 앞서 노동자운동의 전 과정과 조건, 일반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그러나 1848년을 전후로 국가, 특히 민족국가가 노동자 대중을 포섭—투표권의 제한적인 확대, 이른바 ‘대중정당’의 출현—하면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서서히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개혁’의 시도들이 등장한다.(이른바 ‘도덕경제’에서 ‘사회경제’로의 이행) 이는 곧 코퍼러티즘(이적 노동자 운동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페이비언주의와 이들이 주도한 영국 노동당의 형성/변형, 나아가 독일 사민당으로의 이식(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은 코퍼러티즘적 노동자 운동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대중의 자율적인 사회운동의 지위를 대체하게 된 당-노조 조직은 ‘국가주의 프로젝트’를 채택하게 된다. 독일의 사민당과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은 결국 국가주의적 경향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주의는 사회혁명, 즉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혁과 대중의 자기통치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국가자본주의)과 당에 의한 지배로 대체된다. 또한 노동과

14) 서양에서의 코퍼러티즘 전통은 매우 뿌리가 깊다. 그 어원의 뿌리가 되는 것은 선한 군주와 신분으로서 ‘copus’이다. (시민혁명 이후 여기서 군주의 역할은 국가가 담당한다. 국가는 ‘공공선’을 상징하며, 그 근거는 국가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와 합법성에 있다. 국가는 공공의 여러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공공을 위한 도덕과 윤리,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상이한 기능적 집단들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며, 코퍼러티즘 체제 내에서 이익간의 갈등은 비강제적으로 해결된다.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조직, 즉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지만, 이는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으로 변형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제한하여 정치적 행동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산업적/기업적 행동, 나아가 행정적 활동에 종속시킨다. 코퍼러티즘의 경제적 토대는 [물가상승억제와 임금억제의 교환]에 있다. 20세기 코퍼러티즘의 기원으로서 파시즘의 ‘국가’ 코퍼러티즘은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이식되어 인민주의적 코퍼러티즘을 형성하고, 2차 세계전쟁 이후에는 유럽사민주의(미국식 자유주의의 유럽판)의 ‘사회’ 코퍼러티즘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본의 '자율적 협상', 즉 자본이 고임금을 통해서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도 노동을 포섭할 수 있게 된 미국과 달리, 그러한 고임금의 토대를 결여한 유럽에서는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 국가주의적 기획, 즉 코퍼러티즘적 기획을 추구한다. 여기서도 하나의 역설, 즉 대중의 자기해방을 위해 국가에 의존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이른바 '복지국가' 또는 코퍼러티즘 국가의 역설).

2차 세계전쟁 이후 본격화된 대중정당과 선거정치는 사회운동을 대체하며, 정치(politics)를 정책(policy)에 종속시킨다. 19세기 노동자 사회운동의 요구는 의회정치(정당으로 매개로한 계급타협)와 고임금(또는 사회정책)의 형태로 부정적으로 수렴·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관료적 지식, 나아가 기술 관료적 지식을 통해 대중을 수동적으로 예측시키고, 지적 차이는 심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와 국가의 변모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그 이후 금융세계화 속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동자운동의 위기, 특히 정당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구조적 위기의 일부가 된다. 1968년을 전후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폭발은 기존 정당운동의 위기의 중요한 징후가 된다. 그러나 1968년의 대중운동은 기존의 (공산주의) 정당들을 개조하는 데 실패했고, 나아가 사회운동의 심화로 나아가는 데도 실패했다. 그 결과 사회운동은 해체되고 결국 독자적인 제도정당의 건설(녹색당의 경우)로 나아가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로 흡수되었다. 그 이후 정당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사회운동도 대체로 NGO활동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러한 활동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시 사회운동의 물결이 개시되고 있다.

20세기 국가의 확대된 형태로 NGO

물론 NGO는 국가의 단순한 확대는 아니다. 우선 국가기구가 어떻게 NGO라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대중을 수동화하는 '사이비 과학' (여론과 통계 등이 포함된)에 기초한 20세기 행정 권력의 능력이 외부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0세기 국가는 자본에서 발생한 '관리자 혁명'의 연장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혁명, 즉 '행정혁명'을 겪게 된다. 행정혁명은 문제해결(또는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전문적 지식' (사실상 사이비 지식 또는 허구적·통치적 지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구와 사회정책(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기구가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존 국가기구의 위기와 함께 국가기구의 '효율화'와 '유연화'가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NGO는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서 행정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행정분권화와 NGO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공유는 단순한 확대가 아닌데, 왜냐하면 NGO들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기구들의 통일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국가권력이 매우 유연한 형태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통령과 핵심권력기관의 기술 관료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과거의 사회정책은 분권화되거나 NGO를 활용하는 형태로 유연화된다. 그 결과 NGO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사회정책(이른바 '사회안전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보완한다. 이 속에서 정부-NGO의 지속적인 갈등과 이에 대한 단기적·미봉적 관리가 국가-NGO 관계의 기본적 특징이 된다. 동시에 사회운동의 변혁적 요구는 지속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문

제로 환원된다.

당 마르크스주의의 증인과 변혁적 사회운동의 부활의 가능성 :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에 적합한 마르크스주의의 필요성

반면 신자유주의적 NGO로 수렴되길 거부하는 현재의 변혁적 사회운동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했던 20세기 노동자 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운동은 국가와 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대중의 자율성과 그것에 기초한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특히 대중의 자기통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은 국가-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몰락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 우선 사회운동이 변혁적이라는 말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요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이 노동조합의 코퍼러티즘적 요구, 즉 (조직된) 특수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요구(여기서 노동자는 보편적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업적 의식을 갖게 된다)를 넘어서려는 적극적 노력을 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분할과 현장의 특수성다양성을 뛰어넘어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세계화와 그것의 파괴적 성격(예컨대 군사세계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의 변혁적 요구의 요체일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변혁적 사회운동이란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건립하는 대중의 자율적 운동을 의미한다. 변혁의 과정은 실질적 사회화의 과정이어야 하고, 여기서 주체는 국가(법적 사회화)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자율적 조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정치이념은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현재의 위기에 대한 민족적국가적 관리가 아닌 초민족적-민중적 해결)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활동이 바로 변혁적 사회운동의 활동이 될 것이다(자기교육운동과 대중캠페인과 직접행동 등).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새로운 시민문화(또는 시빌리테)가 사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진적인 마르크스주의(운동)의 재개를 위한 첫 출발점은 마르크스의 억압된 테제였던 “달성해야 할 미래의 상태가 아닌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으로서의 공산주의’”이며,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출현했다 사라짐을 반복하며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모순과 공백을 드러내주었던 노동자 민중연합의 대표적인 역사적 실현형태 중 하나였던 평화마르크스주의의 (비극적 실패에 대한) 재해석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이후 제기되어온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획은 역사적 마르크스주의를 넘어 국제주의(=모우니즘)와 페미니즘을 새로운 기본 축으로 하는 발본적인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평등 속에서의 차이의 권리’를 승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계급적대와 성적차이, 지적 차이를 상호 결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계급적대와 인간학적 차이의 결합에 바탕을 둔 ‘연대와 교痛的 정치’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론적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형태는 보다 진취적인 대중운동 속에서만 결정될 것이다.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고유한 활동의 하나로 일종의 자기교육운동이 제안된다. 사상과 이념, 역사와 이론 등에 대한 대중의 ‘원리적 이해’는 변혁적 사회운동의 핵심을 이룬다. 과거 정당운동이 당의 ‘과학적 강령’을 위로부터 아래로 주입하는 형태로 대중적 지도력을 획득했다면, 사회운동은 더 자율적인 형태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결코 지배-종속의 관계를 확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의 내용 자체가 실무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치방침을 하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대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대중적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그런 면에서 단순한 동원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새로운 일상적 활동의 형태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의 사례들

유럽에서의 사회운동은 이미 하나의 현실, 즉 ‘유럽사회포럼’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여기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한국과는 다른 의미, 즉 보편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으로 부활했다.(한국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비시민이며, 시민운동은 NGO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국가와 지방마다 사회포럼 조직이 건설되었고, 유럽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했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대안세계화라는 관점에 입각한 대중적 시위(캠페인)와 자기교육운동으로 요약된다(대안세계화는 하나의 이념이며, 그런 면에서 단순한 ‘국제연대’가 아니다). 여기서 쟁점은 노동조합운동이 이러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차원의 코퍼러티즘, 즉 사회적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지(사회운동이나, 사회협약이나)다. 사회주의의 정당은 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로 변질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일종의 갈등관리기구로 변화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존의 정당운동이 선거정치와 집권(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변화)에 몰두하면서 정당운동 외부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했다. 브라질의 무토지농업노동자(MST),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파라과이의 전국농민연맹(NFP) 등은 사회자유주의적인 선거정당 정치와 구별되는 자율적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이들은 주로 코퍼러티즘적 전망을 갖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외부, 즉 도시 비공식부문과 농촌에서 출현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반이 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토지개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기로 인해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농촌에 남은 새로운 세대의 농민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자율적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거시경제적 변혁을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토지점거 등의 형태로 민중부문의 즉각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코퍼러티즘적 노동조합의 실패 속에서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한다.

〈공통질문〉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 사이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자 부문별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을 서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망은 무엇인가

: 부문운동들의 단순 합을 넘어, 대중운동의 쇄신을 통해 사회변혁을 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통합적 전망을 !

우리는 지난 수년간 즐기치게 반복적으로 우리운동의 두 가지 난점을 지적하고 토론해왔다. 바로 개개 생존권(경제) 투쟁과 부문투쟁들의 고립분산성 극복과 정치적 조직화와 통합, 혹은 보편적 의제 발굴과 연대확장이라는 과제다. 그리고 그 같은 평가는 첫째, 각각의 경제적 요구들에 어떤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혹은 각각의 부문적 요구들에 어떤 보편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둘째, 어떤 조직적 틀(들)로 각각의 고립분산적인 경제(적이고 부문적인)투쟁들을 묶을 것인가라는 쟁점을 낳았다.

그러나 통합(집중)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그 자체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 통합이라는 당위적인 발전과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언제나 어떠한 통합인가라는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쟁점들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힘 있고, 함께 모여 통합하는 것이 이리저리 분산되어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월한 운동양식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 자체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역사적 조건아래에서만 옳다. 그것은 안정적인 체제적 발전이 보장된 가운데, 짜여진 운동구조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긴 평상시기의 진리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행의 시대에 이 같은 믿음은 종종 본래의 좋은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 시대는 기존의 운동구조가 현실 대응력을 잃고, 근본적 반성과 구조적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통합(집중)을 하나 마나가 아니라, 어떤 통합과 집중인가가 보다 진실 되고, 실천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가 새롭게 던지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 속에서 우리운동의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합과 집중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우리가(기존의 운동 구조를 통해)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과 선택사항들의 전후좌우 관계를 따지는 방법에 관한 어려운 계산과 토론 및 민주적 합의과정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더욱이 어떠한 정치적 조직화인가, 어떠한 보편적 의제 설정인가라는 쟁점은 보다 첨예한 논란거리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조직화(의)와 보편적 통합에 관한 당위적 찬반론을 넘어서는다는

의미는 곧, 이제 정치란 무엇이고, 무엇이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과제인지를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차적인 과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낱말이 탈이념화, 탈대중정치, 탈계급정치화 되고 있는 직업 정치인들의 정상배적 정치를 타파하고, '비정치가적 현실정치', 노동자 민중의 생산, 지역 현장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창출하자는 기본 방향은 우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특수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지배적인 보편적 가치와 의제를 발명하고자하는 철학자적 야망은 보편적 사회운동의 전망과 구분되어야 한다. 각각의 특수적 보편과 자율적 소통에 기반한 연대적 통합을 통한 보편적 합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다양하고 분산적인 개별투쟁들과 부문운동들의 단순한 연대(품앗이 연대)와 산술적 통합을 넘어 서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과제는 당위적 통합과 집중, 상층주도의 (소수)정치가적 조직화와 위계적 단순화와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발전적 통합전망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사회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혁신을 선차적 과제로 하여, 이를 통한 대중운동의 쇄신의 길만이 새로운 통합적 사회운동 창출의 유일한 경로라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방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대표성과 체계비판적인 통합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과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면서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일정한 통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비판과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공통질문〉

특히 페미니즘 운동이 던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다른 운동 영역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상호변화와 결합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심축

대중운동의 쇄신을 전제로 하는 통합적 전망의 구축은 자연히 어떠한 대중운동이냐는 쟁점을 낳는다.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상호변화와 결합은 그러한 전망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매우 특별한 주장을 담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노동자와 여성을 체제 변혁적이고 보편적인 주체로 재구성(재조직)하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운동의 이념과 조직을 혁신할 것을 사회운동의 중심과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노동자계급은 어떤 특정한 정세 속에서, 노동의 상품화와 착취를 폐절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의 해방에 이른다는 객관적 조건을 스스로 인식함을 통해 보편적(혁명적) 계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자신의 해방과 체제 변혁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다른 피착취 대중과의 연대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한, 노동자계급은 특수주의적인 직업 이익집단으로 분할된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고도의

15)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에 관한 논란은 우리 운동의 오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른바 '불세비키적 정치경제 투쟁관' (이하 정경투관)으로 불리는 이 논란은 실은 노동자운동에 뿌리박은 부르주아적 운동관의 폐허와 '당의 계획으로서의 진술' 이라는 식의 위계적 운동관의 결과라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급분할 통치를 실행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와 자본은 인종주의적이고 성적인 분할선을 무기로 하여 노동자 계급 대중운동과 조직, 이념을 해체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변혁적 노동자운동의 기본적 방향성이 국제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노동자운동으로의 이념적 조직적 개조인 것은 이 때문이다.

자기소유에 기반한 노동의 상품화를 폐절함으로써(자본주의를 변혁함으로써) 노동자대중이 자기소유를 통해 자아실현과 해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권의 사상이라면, 모성과 처녀성(여성의 정신적-육체적 완전성)에 관한 자기소유를 통해 물성적인 근대정치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토대로서의 국가와 가족을 변혁한다는 것이 여성권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권과 여성권을 결합한다는 것은 기존의 물성적인 노동자운동이 빈곤의 여성화(젠더화된 계급투쟁의)의 객관적 조건을 인식하고, 성별화된 권리(차이의 평등)로서의 여성권을 받아들이는 운동조직, 이념으로 스스로를 개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억압적 국가-가족의 변혁과 자기 해방의 일치)

또한 주류화된 페미니즘의 변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노동자시민의 운동과 단절된 상층 여성엘리트(소비자 시민으로서의)의 무엇이 된 페미니즘을 노동자시민의 사회운동/이념으로 복구해야한다. 나아가 우리는 급진페미니즘의 분리주의적 경향도 극복할 수 있어야한다.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주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도 여성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사회를 변혁하는 사상이다. 다만 이러한 변혁의 현재적 가능성은 우리가 여성적인 관점에 입각했을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페미니즘은 노동자운동 및 마르크스주의와의 제휴와 상호전화를 통해 여성억압의 바탕이 되는 성별분업-성차별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가족과 국가의 변혁을 통해서 여성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질문〉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사회공공성 투쟁 전략 토론을 둘러싼 오해들

언제부터인가 사회공공성 관련 토론은 매우 다양한 수준의 토론쟁점들을 뒤섞어 포괄하는 거대한 담론이 되었다. 그것은 매우 이론적인 개념토론과 중/장기적 운동전략, 그리고 현실의 사유화, 시장화에 맞선 다양한 현안투쟁들의 쟁점들에 걸쳐있다. 심지어 사회공공성은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투쟁들을 묶어주는 통합적 대안전략이자, 반자본주의 이행전략의 핵심 고리로 까지 격상되어 이해되고 있기도 한 형편이다.

1/ 강한국가는 진보일 수 있는가?, 국유화 이행 전략은 여전히 변혁의 유일경로인가?

우선 사회공공성 관련 논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소유, 국유화

이행전략에 관한 전통적인(20세기적인) 사회주의 이념/전략의 유산과 깊이 관련된다. 일례로 얼마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국유화전략을 재론한다.”는 칼럼을 통해 “강한국가는 박정희의 전 유물이 아니고, 좌파적 전략이며, 오히려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은 좌파적인 대안정책인 국유화를 밀러 썼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견해는 국유화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하고자했던 글쓴이 개인의 의도나, 특정 정파적 견해이기 이전에 국유화전략과 PT독재국가론에 관한 20세기적인 사회주의 이념전략의 모순과 동요의 일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PT독재는 “소비에트국가(비국가)”임과 동시에 “강한국가”이며, 국가소유 부문은 자본주의적 사회화(노동의 사회화)이자 사회주의혁명의 관계고지(소유의 사회화)라는 관념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적 관념의 혁명적 이상과 전략은 결국 민족주의화된 통치정당과 국가의 붕괴로 결말지어졌다. PT독재는 프롤레타리아의 소비에트(평의회)연합이라는 애초의 이상이 아닌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국가로 전략했고, 이러한 소련식 전략과의 차별화를 택했던 서구 사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회자되기 시작한 1970년대말 80년대초경에 ‘PT독재 없는 국유화 정책대안’을 실행했으나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말았다(영국노동당의 대안경제정책, 프랑스사회당의 국유화정책)

PT독재국가/국유화 전략의 붕괴와 실패는 역사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회운동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한다. ‘강한 국가’는 진보가 될 수 없다는 교훈, 비국가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보다 자유로운 노동자 민중의 연합이어야 한다는 교훈, 국가소유부문은 그 자체로 진보가 아니며, 법적 행정적 조치에 따른 소유의 사회화는 형식적 사회화일 뿐이며, 그조차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 때문에 ‘평의회(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연합)에 의한 노동자통제’는 형식적 사회화 이후에 부가되는 추가적인 실행(운영)조치가 아니라 국유화전략과는 애초부터 구분되는 대안적 이행전망이라는 교훈 말이다.

2/ 사회공공성 정책대안은 사유화저지, 시장화 저지 투쟁의 정치적 조직자인가

: 사회공공성 투쟁의 망어적 속성의 한계

둘째,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투쟁들을 묶어주는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사회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 요소이지만, 본질적 핵심은 아니다. 사유화/시장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지만, 신자유주의를 곧 사유화/시장화 정책으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일련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사유화/시장화 정책은 기존의 민족적 발전정책을 금융세계화로 변화/이행해가는 정책개혁의 일환이며, 금융세계화를 지지 보좌하는 개별 산업, 기업차원의 미시적 구조조정 사안의 위상으로 추진 또는 보류, 분할 시행될 뿐이다. 물론 효율성 제고, 경쟁체제 도입의 과정에서 결정된 수익성 있는 핵심 공기업들의 사유화와 복지정책의 폐기 등은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민중적 권리 축소와 피해를

16) 말투세르는 이들의 PT독재 없는 국유화전략을 ‘이행을 위한 이행’은 없다’는 말로 비판했다.

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사회운동의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종종 사유화/시장화 정책은 개방화 정책과 혼용 병행되는 데, 이는 사유화/시장화가 과거의 민족적 발전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개혁(변화)의 일환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시장화/개방화 저지 운동은 방어적인 속성을 가지며,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생존권적 방어운동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거지향적인 보수적 운동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우리가 흔히 공공부문이라 부르는 국가복지 시스템과 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역사적 양보조치(혹은 예방혁명조치)의 결과이고, 이로부터 연원하는 민족적 권리는 마땅히 방어되어야 하는 과거 사회운동의 성과다. 그러나 공공부문, 국가소유기업 부문, 국가복지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공공영역은 그 자체가 진보를 의미하거나, 노동자계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제국주의적이거나 종속적인 민족적 발전지배체제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지배체제가 유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변화하게 된 마당에, 체제의 일원 자격으로 부여되었던 기존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은 생존권적 방어라는 측면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렵다.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민족적 시민적 권리의 구성과 확장이지, 불가능한 과거회귀이거나 기존 체제에 대한 보수적 지키기일 수는 없다. 더욱이 방어적 저항의 운동은 계급분할 공세에 지극히 취약할뿐더러 스스로도 연대파괴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3/ 정책개혁(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정책대안이나 사회운동이나

또한 사회공공성을 획득, 확장하기 위한 운동은 국가 공공정책에 종속된 운동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닌다. 정책개혁(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정책대안이나 사회운동이나는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위로부터의 정책개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비용(희생)으로) 위기를 관리-봉합하려는 일련의 이데올로기, 정책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정책대안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시도는 근원적으로 무력하다. 특히나 낱알이 정책개혁에 수반되는 정치개혁의 결과, 정책대안적 정치는 이념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정치와 현실적으로 구분, 대립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사회운동은 상층 테이블의 교섭을 압박하는 정책대안의 도구가 아니라, 기만적인 정책개혁이 악화 심화시킨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새로운 대안체제로 이끌어내는 대안인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진보적 정책대안이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조직자로 기능 하는 듯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책안이 대중교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각기 다른 부문, 영역의 대중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묶기 위한 토론과 합의가 정책을 매개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정책안이 어떤 힘을 발휘했다기보다는, 대중의 자기교육이 수행됨으로써 정치적 조직화와 고양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초계급적인 공공성, 국가소유부문, 대안적 공공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권리목록이고 그를 위한 새로운 합의와 자기통치의 확장을 위한 사회운동이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I. 대안의 문제 : 대안사회상, 대안정책, 대안적 사회운동 전망에 관한 토론에 관해

대안세계에 관한 토론. 정책대안론의 문제에 대해

2006년 이후 본격화된 운동위기논쟁이 지난해 말과 올해를 거치면서 대안이념, 대안사회론 토론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토론은 90년대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반성 없이 중단된 사회주의/변혁노선논쟁의 유산에 대한 저널리즘적 토론과 2007~8 대선/총선 선거정책공약 토론(상의 수사학적 토론)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대안사회의 상과 관련된 토론을 선거정책공약 작성을 위한 정책대안론 혹은 정책대안의 수사적 이름 붙이기식 토론으로 진행되는 사태를 크게 경계하고자 한다. 이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논의들은 대체로 대부분 사민주의적 유럽복지국가모델을 기본 뿌리모델로 한다. 다만 다양한 명칭과 설명방식을 도입하는데, 연대 사회, 참여계획경제, 사회투자국가, 복지동맹 등이 그것들이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니 지식기반경제니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 경제정책들이 대안 진보정책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들 새롭게 쏟아지는 사조와 수사들, 정책명칭들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쟁점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신자유주의적 대안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어 그들 모두를 하나하나를 세밀히 비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비판의 관건이 되는 관점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인식여부에 달려있다.(위기론적 관점)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진보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진보적 성장에 토대를 둔 분배정책을 대안사회의 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그것은 개량주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장기-구조적인 타협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시대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유럽식 사민주의는 세계화 이전 시기에나 가능했던, 일국적 발전모델에 입각한 2류 제국주의 전략의 일환이었고, 현재는 대부분 제3의길류의 신자유주의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곱화야세하는 일부 정치가, 이론가들의 실현되지 않는 후세무민적 공론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타협의 물적 토대가 부재하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사라진 과거의 기득권과 무너진 중산층적 삶으로의 복귀를 동경하는 대중의 현실적 요구는 엄존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대중의 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권적 요구이기 때문에, 과학적 현실인식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외면해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를 지향하는 대중의 요구를 ‘위로부터의 정책개혁’으로 동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위계적 분할과 배제에 기반한 허구적인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와 자본의 대응전략이다. 물질적 토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허구적이지만, 당장의 대중적 요구를 수사적인 구호로 만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그것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회적 합의물(혹은 코퍼러티즘) 실행한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을 약속이나마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순차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계급분할/위계화는 필연적 수순이다. 위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크면 클수록, 연대 연합적 형태의 생활/운동양식에 대한 공격은 손쉬워지고, 대중은 사태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통해 공동의 대안전망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인민주의적 정치선동에 휩쓸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잣대로 구획되어진 진보/보수의 잣대는 별다른 차별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위로부터의 정책개혁’에 대한 대안을 다른 색채의 정책대안에서 찾는 한, 연대 파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대중의 부정적 경향에 편승한다는 면에서 어떤 진보적 대안도 본래의 뜻한바와 전혀 다른 효과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회적 배제와 분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협약(정책대안, 정책개혁)이나, 변화한 조건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바탕으로 두고 이행(변혁)을 예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나는 갈림길이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세계를 구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운동의 과제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NGO가 실행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무능과 무책임을 압도함으로써 (배제와 분할로)무너지고 있는 시민사회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재건(혁명에 이르는)해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의 독자성과 주도권을 창출해내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대안세계와 변혁의 상은 달성해야할 미래의 상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하는 운동의 전망이다. 즉 민중의 새로운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운동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지배체제의 붕괴를 야만의 회귀로부터 신사회 건설의 토대로 전환(변혁)시켜내는 것이다.

둘째, 또한 이러한 대안 정립은 우리에게 ‘국가의 위기’ 또는 국가의 변형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를 제기한다. 현재의 위기는 현 정권의 통치력 위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국가기구’로서의 고유한 물질성을 갖는다. 현재의 문제는 국가라는 도구에 대한 장악력이 아니라 기구 자체의 모순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안이란, ‘위로부터의 동원’과 허구적 타협이다.(체제붕괴를 지연, 회피하기 위한) 더 이상 제시할 미래 비전이 없는 가운데, 일단 사람들을 참여시켜 그들로 하여금 합의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붕괴의 미래를 지연하고, 봉합(책임회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제 수호를 위한 억압적 동원이 아니라 허구적 타협(포섭)과 배제이며, 붕괴와 야만에 대한 공포와 위기극복 비용전가를 댕가로 하는 ‘참여’다. 이로부터 우리는 위기관리를 위한 수동적 동원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에 기초한 온전한 의미의 능동적인 대안적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 없는 수동적 동원과 반복되는 배신/실패와 증폭되는 대중의 정치적 불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위기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파시즘의 위험은 기존 체제를 수구하려는 보수적 세력이 아니라 증대하는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배경으로 하여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의 무능과 책임회피에 대한 새로운 반발의 형태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대중

운동의 폭발적 진출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가보다는 대중운동의 최종적 실패의 결과로 등장해왔음을 새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보수파와의 대결 이전에 새로운 사회운동의 정립, 사회운동의 진정한 반성을 통한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진보를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실천적인 현실인식을 통해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관리된 변화’와 진화로 영유한다. 이에 반해 <개방된 변화>란 곧 <봉기의 정치>를 뜻한다. 그것은 진보를 현실의 사태를 지양하는 운동으로 이해하며 실천한다. 그러므로 봉기의 정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포지티브적인 운동인가 네가티브적인 운동이냐의 구분이 아니다. 도리어 지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는 포지티브적인 요구들이 종종 운동의 역사적 진출을 봉합하고, 새로운 대안의 창출을 억압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상호인정과 교류,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폐지와 이 과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상대적으로) 불가역적인 대안의 창출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헤게모니 형성의 핵심은 의제설정(Agenda setting)능력에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적 운동정치의 헤게모니 형성의 관건을 굳이 이 자유주의적 대안과 비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발리바르의 용어인)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공통질문〉

2. 이행론과 혁명론

- 과거 이행론/혁명론 논쟁에서 제승 또는 제김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1/ 혁명과 이행, 운동에 대한 관념과 구체적인 표상은 시대마다 변해왔고 새롭게 정립되었다. 그러므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행 혹은 혁명에 관한 관념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마르크스에서 레닌까지는 '혁명'의 기본적 모델을 프랑스 혁명으로 생각했는데, 먼저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혁명과 이행 더 정확히 봉기와 이행은 차이가 있다. 이행은 그야말로 생산양식의 혁명이고, 이행의 과정은 보다 지난하고 장구한 과정일 것이다.

혁명은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착취의 모순'이 해후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혁명인데,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이데올로기와 생산양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기존의 이데올로기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이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이데올로기는 평등과 자유라는 상징에 기초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혁명'(더 정확히는 정치혁명)과 이행은 구별될 필요가 있고, 혁명은 이행의 시작일 뿐이다.

또 혁명의 유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혁명에 대한 근대인들의 사고(더 나아가면 지

금까지 인류의 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목적론적 혁명관. 이는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맹아가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관념이다. (헤겔의 모순론은 이런 함의를 갖고 있다.) 모순이 심화되어 역사의 특정한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관념이다.

둘째, 종말론적 혁명관. 이는 변혁을 '전변'으로 생각하는 관념이다. '그날' 이 오면,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가 부정되고 새로운 질서가 창조될 것이라는 관념이다. 이는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맹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혁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의 도래를 의미한다. 세 번째 종류의 사고가 바로 이른바 '비극적 사고'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증도 없고 현재의 어떤 특권적 맹아도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맹아와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혁명이 일어나고 이행의 과정이 개시된다는 관점이다.

목적론은 '정책적 대안'과 같은 미래의 보증을 필요로 하고, 종말론은 초월적인 힘이나 '주체성' 내의 역능이라는 미래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관념론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인 인식에 입각한 비극적 사유의 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비극적 사고란 비관적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극적 사고는 운명에 맞서서 싸운다는 의미에서 비극적인 것이다.

20세기 초엽의 개량주의와 혁명적 대기주의는 붕괴를 <주체적 투쟁의 결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그에 반해 레닌과 로자의 관점 속에서 붕괴는 <주체적 투쟁의 객관적 조건>이었다. 즉 붕괴와 위기라는 운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식함을 통해, 그것을 정벌(공포나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맞서 이겨 내야할 객관적 조건으로 위치 지웠다. 이로써 비로소 그들은 위기라는 객관적 조건을 변혁하기위한 주체적 행동, 즉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행의 시기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의 길이 개방되며, 또한 대다수 행위자들이 중기적인 전략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에 제때 기선을 잡고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는 정치가 곧 이행의 정치(운동)이다. 이행의 시기에 이데올로기적이고 분석적인 차원에서 '혼란'은 변수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즉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에서 분명한 것은 손에 쥐어진 '본전' (즉 지배체제와 함께 동시적 위기에 빠진 기존운동질서와 주어진 부족한 역량, 불리한 여론)보다는 지배체제로부터 탈구되어 유동하는 '대중과 정세'를 중심으로 한 판단과 행동, 즉 실용적이고 부분 정책적 대안보다는 투쟁전술과 조직전략을 중심으로 주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한다.

2/ 혁명의 주체는 더 이상 당이 아니라 대중이며, 대중이 주인으로 서지 못한 혁명은 한 번의 정치적 권력교체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이행은 정치혁명에 뒤이은 사회혁명, 문화혁명으로 확산되고 지속되는 생산양식과 주체화양식의 장구한 이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변혁을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전략이나 권력 장악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있으면, 현재의 혁

명적 이행은 언제나 불가능하거나(정치혁명에 후속하는 사회혁명, 문화혁명의 지연 혹은 불가능), 이행을 위한 이행을 준비하는 정책개혁을(국가나 당이 주도하는)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이행을 위한 이행을 위한 이행의 딜레마) 즉, 혁명의 과정, 이행의 과정은 노동자-시민들의 자기통치와 통제력의 증대의 과정이며, 봉기나 정치혁명은 그 과정의 개시, 혹은 개시를 위한 특정한 계기에 불과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3/ (공산주의적)이행을 사고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와 집단주의,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와 집산주의(collectivism) 또는 국가주의의 대립을 지양하는 ‘연합주의’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자유로운 생산자연합) 집산주의나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자기-통치, 즉 자기-통치의 조건으로서의 지식(과 예술)의 권리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는 개개의 인민의 정치적 역량의 획득 없이는 얻어지거나, 유지-확장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민주적으로 자기통치 되는 연합들로(이 또한 일종의 민주화된 ‘국가’ 일지라도) 대체하는 비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와 같은 것을 구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의사소통으로서 민주주의?).

4/ 이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적-사적 소유를 국가소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개인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공동영유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 이념적 표현으로서 부르주아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노동권의(프롤레타리아적 소유권으로서) 실현, 즉 인간=개인=시민=노동자라는(소비자시민이 아닌 노동자시민) 관점에 따라 집단적 개인성을 재구성하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과정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실의 정치적 개입에서도 시장이나 국가(또는 국유화)나 라는 허구적 논쟁들을 상대화해야 한다. 국가 없는 시장은 없고, 시장 없는 국가도 없다. 국가와 시장은 결국 자본가-소유자들의 자기발전(즉 자본축적)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자본주의는 국가와 자본의 쌍둥독수리).

5/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통제력(자기-소유)을 가지며, 그 연장으로서 (자유로운)자기-노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성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독자적인 정신과 육체, 그 연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성적 자기결정권과 모성권으로서의 여성권)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변혁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권리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투쟁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그리고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해방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와 여성 내부의 분할을 낳을 수도 있다. 또 국가나 자본이 그러한 권리를 ‘전위된 형태’로 통합포섭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여성 내부의 분할을 재생산하는 기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무엇이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가?)

6/ 소통과 연대의 원리에 대해

소통, 연대, 변혁은 각기 대안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원리를 집약한다.

소통, 또는 교통은 노동과 함께 인간의 본질의 하나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곧 소통활동이며, 인간은 소통과정을 떠나서는 사회적 활동과 사고를 지속할 수 없다. 지식은 이러한 교통의 영속적인 완성의 과정으로서 모두의 역능을 증대시킨다(1). 그러나 자본주의는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사회적 분업을 통해 인간의 소통을 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적대적 관계들로 옮겨맨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와 심지어는 육체적 활동을 제약 당하게 된다.(노동의 소외) 대안세계를 향한 대중의 해방의 조건은 모두의 역능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자유로운 교통을 위한, 자본주의적 교통양식 자체의 변혁이다. 즉 억압적 국가장치의 파괴와 영속적 민주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관의 변혁, 사회적 분업의 기술적 분업으로의 대체, 지적 차이 감축을 위한 부단한 문화혁명 등.

뿐만 아니라 또한 소통은 운동들의 소통, 운동들 간의 소통이며, 이는 20세기 마르크스주의가 남긴 당적인(군사적) 운동구조에 대한 반성과 혁신을 의미한다. 즉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동들 간의 소통과 상호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운동구조 말이다.

연대는 보편계급을 보편계급으로 하는 운동 전략이다. 연대 지향적이지 않은 계급은 혁명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레닌의 노농동맹전략에서 보여 지듯이 역사적으로 계급적 단결의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존재해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연대전략은 계급 형성적 주체 형성적 운동의 운동 전략의 요체다. 또한 연대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지향하는 '연합의 원리'를 통해 이윤과 경쟁의 원리로 구조화된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사회운동의 대안적 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공통질문〉

2. 국제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자신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세계화이고 군사(전쟁)의 세계화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애롭고 평등, 평화로운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가로막는다. 이들 금융-군사 세계화가 양산하는 어떤 배타적인 소속의 감정들 혹은 배제적 관계로서 집단적 동일성(민족적, 문화적 또는 심지어 계급적 동일성)의 변혁 또는 전변 없이는 어떤 연대도 생각할 수 없다. 다른 세계,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대안세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17) 특히 스피노자는 이러한 '상호유용성'의 지적 형식을 '공통개념'(notions communes)이라 부른다.

수 없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관된 국제주의의 대표적인 대안형태다.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국제주의를 꿈꾸었던 사상이었다. 그러나 1,2차 세계대전과 인터네셔널의 해체를 거치며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는 지속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그 대신에 20세기 내내 우리는 민족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의 현실형태로 받아들여 왔다. 그 결과 20세기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맞서는 대중적 투쟁을 준비하지도 그 조건들을 창출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성의 정범과 “종족적 정확”의 악화된 형태들로 귀결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야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야만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민족국가의 경계선이자 시민권의 차별성을 물질화하는 장치인 국경을 넘어서고, 민주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은 지난 100여 년간 어떤 마르크스주의도 달성하지 못한 근대정치이데올로기의 한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혁신. 이 두 가지 작업은 새로운 국제주의의 구상과 구체화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여기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덧붙이자면, 최근 한국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고대사논란에 대해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 붉은악마 열풍과 독도캠페인이 2000년대를 개막하더니, 이제는 동북공정 논란에 뒤이어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고대사 열풍이 한창이다.(일부 진보적 운동진영 또한 이 열풍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열풍은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민족 간 차이는 물론 민족 내부의 차이를 불평등과 차별로 뒤바꾼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야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종주의적 경향은 결국엔 신자유주의적 무한전쟁의 싸울 뿌린다는 의미에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열풍의 공간을 이루는 국사와 국어가 사실은 자유주의 근대정치이데올로기의 발명품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이 광풍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민족사적 국사적 관점에 따른 고대사, 혹은 민족의 순수 혈통이라는 관념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구적 픽션일뿐더러, 인종주의적인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 고대사나 중세사는 결코 특정 민족사의 기원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한민족(대한민국의 소유)의 자랑스러운 (혈통으로 연결된)민족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고대지역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를 자유주의적 근대정치이데올로기의 일종인 민족주의를 고대사로 소급/환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허구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물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크게 경계할 일이다.

관련하여 우리는 남한 노동자운동의 이미 주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이주노동자 운동과 관련해 이러한 관점의 변화, 운동태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민족이 과거지향적(사실은 허구적)종족적 동일성이 아니라 현실에 실존하는 (연대지향적인)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면, 혹은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족과 민족주의를 개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긴급한 과제라고 하자. 그렇다면 마땅히 이주노동자는 한반도 지역 정치공동체의 시민이며, 불법적인 이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일원이며, 더 이상 이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운동은 소수 이방

인들만의 운동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과 운동태세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자 사회운동의 미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통질문〉

3.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은 무엇인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차원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자율적 운동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확립되고, 위기에 빠진 정당과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 조직 외부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민중적·자율적 조직과 운동들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운동과 조직들을 세계사회포럼이라 명명된 운동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사회포럼을 중심으로 그 두리에 포진된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을 가르켜, 일반적으로 이른바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이라 부른다. 비록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이 어떤 지향의 어떤 운동을 가르키는지 그것의 경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것은 퇴행적-보수적(국수주의적) ‘반세계화’, 혹은 코퍼러티즘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넘어 ‘인민의 자율성-자기통치를 바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지향하며,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이의 교통과 연대를 확장하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특히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들 중에서, 우리는 1980년대의 신사회운동이나 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NGO와 달리 노동자-농민 대중에 토대를 둔 사회운동(라틴 아메리카의 농민운동, 무토지 농업노동자 운동, 여성 노동자운동, 빈민운동 등등)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생존권 문제를 더 보편적 권리의 문제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즉 이슈 중심/중산층 중심의 새로운 사회운동(1980년대식)과 구별되는 민중적 생활조직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른바 ‘세계정의 연대운동’이라 불리는 세계 체계적 비판의식과 연대성, 변혁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운동들은(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운동/조직을 포함한)고유한 난점을 가진다. 그것은 단적으로 전통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대중과는 충분히 결합되고 있지 못하거나, 기존 조직-이념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역량이 부족한 새로운 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이념적 취약성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변혁적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 이념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세계화는 단순한 국제연대가 아니라 금융세계화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민족국가를 방어하는 것(또는 민족국가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념이다.

또한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일상적 의식을 스스로 비판·극복하고 스스로를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주체로 변형시키는 활동으로 재정의(혹은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기존 운동조직들에 잠복한 ‘관리적’ 경향을 제거하고, ‘사회운동적 경향’을 복구/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운동조직의 ‘관리적 경향’이 관리자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과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수동적

주체로 동원하려는 경향을 지칭한다면, ‘사회운동적 경향’은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사회운동조직의 주 임무로 보는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합의를 전제로 하여 ‘사회운동’의 의미와 실천양식을 구체화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와 자율성의 증대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운동조직들과 새로운 운동조직들의 교육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는 생활과 교육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며, 경제적 요구조차 이러한 시도들을 강화하고 노동자-시민 대중 내부의 단결을(배제와 분할에 맞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융세계화와 평행한 군사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민족국가의 강화가 아닌 초민족적 평화운동이 요구된다. 대안세계화는 민족적 틀을 뛰어넘는 보편적 권리를 선전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노동권과 여성권, 나아가 지식권과 (민주)건강권 등이 현재의 대안세계화의 주요한 이념, 초민족적 시민권의 구체화된 형태다. 또한 대안세계화는 민족형태와 민족적 동일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초민족적 시빌리테(새로운 시민성)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이념은 유럽에서는 ‘지역통합’을 계기로 대안지역화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강석준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좌파 내의 이론적 논의는 이미 국내에 풍부히 소개돼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인데, 이 부분은 아직 취약하다. 특히 초국적 자본화하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해외 초국적 자본 사이의 동맹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가령 초국적 자본과 동맹하여 국내 독점자본을 ‘합리화’ 하겠다든가(강하성)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맞서 국내 독점자본을 ‘방어’ 하겠다(강하준) 입장들을 극복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 정책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연합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좌파의 분석은 구조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 과문하지만 계급분파나 세력관계 수준의 분석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앞으로 정치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공통질문〉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전개 특징은 그것이 민주화,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과 병행했다는 것이다. 87년 당시부터 민주화는 자유화를 동반했고, 이미 그때부터도 자유화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이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신자유주의는 결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외삼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 환경에 대한 국내 독점자본의 자발적인 대응 전략에서 출발했다. 단지 그러한 전략의 결과로 97년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서 '외부'로부터의 강제(IMF의 개입 등)가 대중의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상당 정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다.

물론 남미에서도 민주화는 신자유주의화와 동시에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은 남미에 비해 민주화 과정에서 민중 세력의 영향력이 훨씬 약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종속도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민중의 삶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민중 내의 분절화, 파편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양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자, 민중 내의 분파간, 계층간, 세대간 분열과 긴장, 갈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민중' 범주 자체의 전면적 재구성이 급박한 의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1.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제 와서 특별히 위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 사회운동 내의 위기적인 요소는 그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년대 말부터 이미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회운동 세력은 그 위기 요소들을 극복 내지는 최소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강화하는 길을 걸어왔다.

핵심적인 위기 요소는 기층 기반의 부재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민주화 투쟁의 동원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게다가 운동 내의 주류 세력(이른바 '재야' 부터 NL까지)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왜곡하고 압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사회운동은 기층 기반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보이기 시작했다(이른바 '소용돌이의 정치' 의 운동 내 재생산). 이것은 운동 세력이 '민중'의 이름으로 발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층 대중과 구조적으로 괴리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유일하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한 게 노동(조합)운동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민주노총이 사회운동의 가장 선두에 선 것은 상당 부분 이 때문이었다. 노동계급이 사회진보의 주역이라는 이론 명제 때문이 아니라 기층 기반을 지닌 사회운동이 사실상 노동조합운동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동조합운동마저도 기층 대중과의 괴리로 고통 받고 있다. 물론 조합원 대중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계급 내에서 조직 노동자가 소수 분파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전체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 마디로 지금 한국 사회운동의 위기는 운동 세력과 기층 대중의 괴리에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시민운동에 대한 오래된 비판은 이제 민중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중없는 대중운동’.

〈공통질문〉

2. 운동노선의 평가

과거 운동노선에서 특히 부족했던 부분은 재생산 영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다.

사회운동 내의 주류 세력은 자유주의적 의미의 ‘정치’ 적 과제(민주화, 통일 등)에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의 생활상의 문제들에 주목하지도 않았다. 기층 대중과 호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므로 의제의 편함을 시정할 수도 없었다.

유일하게 기층 기반을 지니고 있던 노동조합운동은 아무래도 재생산 영역보다는 생산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거나 교육 같은 문제는 노동운동의 관심 바깥에 머물렀고, 그 틈새를 탈계급적 시민운동이 메웠다. 노동운동의 의제가 따로 있고, 탈계급적 시민운동의 의제가 따로 있는 양상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노동력 착취 자체가 유통을 비롯한 광범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어쩌면 고전적인 생산/재생산 영역의 구분 자체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사회운동은 과거에는 사회운동의 의제로 상당히 낮설었던 쟁점들을 운동의 중심 의제로 끌고 들어오는 ‘모험’ 을 감행해야만 한다. 주택(사회적 주택의 요구), 대화(임시 철폐) 등이 바로 그 후보 의제들이다.

〈공통질문〉

Ⅲ.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대중운동의 혁신

대중운동이란 게 이론가들이 대안을 설계하면 그에 따라 공학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맹아들을 발견해서 그 성장을 북돋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청사진을 제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몇 가지 맹아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87년 이후 일반화된 대중운동의 역사적 형태와 대중의 현재 상태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고 새로운 운동 형태나 방식, 쟁점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그것이다.

산별노조 전환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산별노조 전환 운동은 애초에는 87년 이후 등장한 대기업 민주노조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별노조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찬반, 기대와 우려는 대부분 이러한 초기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정세의 변화와 함께 산별노조의 문제의식도 변화해왔고, 지금도 그 와중에 있다. 노동계급의 '최대 조직화' 라는 서구 산별노조운동 초기의 이상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전통을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대중운동의 전환의 한 맹아적 출발점이다.

또 다른 맹아는 지역 사회운동을 새롭게 일궈나가려는 시도들이다. 협업농업, 대안농업의 모색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재편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노동조합과 당운동, 사회운동들의 공동 발의로 지역 사회운동의 인큐베이터로서 '민중의 집' 을 건설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런 시도들에 주목하고 그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억압하는 기존 운동의 구조와 관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과 단절이 필요하다. 어쩌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절단의 작업에서 보다 과감한 자세를 취하는 게 운동가들의 당면 임무가 아닐까 싶다. 굳이 예를 들자면, 가령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상층 중심의 관료적 연합기구의 폐해에 맞서 새로운 사회운동 시도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질문〉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개인적으로 여러 운동권 용어들 중에서 특히 ‘부문운동’ 만큼 맘에 안 드는 말도 없다. 과거에는 노동운동과 그 나머지 운동들 중 후자를 지칭하는 은어로 쓰였고, 지금도 위의 질문과 같이 ‘부문별 운동’ 식의 어법이 통용되고 있다.

한국의 운동권은 코포라티즘에 대해 각별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문’이란 말만큼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부문’이란 말은 그야말로 어떤 조화로운 전체(집합)를 미리 상정해놓고 그 각 영역을 기능적으로 나눈다는 식의 사고를 깔고 있다. 코포라티즘이 결국 이런 태도에서 나온 것 아닌가? 사회를 각 이해당사자의 ‘부문’으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입장.

‘부문’ 보다는 차라리 ‘주제’라는 용어가 그나마 낫겠다. ‘주제’는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 여성운동이나 장애인운동 등 각 운동마다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제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모두 광의의 노동계급운동으로 봐야 하고 민중운동으로 봐야 한다. 다만 현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출발점, 즉 ‘주제’가 다른 것뿐이다. 그렇다면 각 운동은 처음부터 서로 소통하고 접속하며 반항하고 합류해야 한다. 마치 음악에서 서로 다른 주제가 만나 하나의 악곡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한다.

다만 주제들이 서로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악곡을 이루려면 화음이 서로 맞아야 한다. 그 ‘화음’을 맞추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 점에서 결국 우리의 기본 음계로서 ‘권리’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 그리고 이들 권리 사이의 조율 작업(=21세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것이 결국 각 주제 운동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길일 것이다.

‘민중’과 ‘시민’의 동일이라는 문제설정은 전형적으로 한국의 최근 상황에서 비롯된 것(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립)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 자체에 대한 거부여야 한다. ‘민중’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말인 것처럼 ‘시민’도 그러하다. ‘시민’은 권리의 보편적 주체를 상징하는 <가면>이고 이 <가면>을 써야 할 사람들이 바로 ‘민중’이다.

〈공통질문〉

3. 운동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

사회운동의 혁신이 과연 특정의 조직 틀로 담보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직 물신주의’ 아닐까? 물론 운동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기구나 연대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도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대 좌파의 조직론의 원칙들을 새롭게 정초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과거에 한국 사회운동의 대부분의 조직들은 ‘동원’ 조직이었다. 즉, 숭고한 변혁 목표가 따로 있었고 조직 생활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조직 성원들의 삶은 그 목표 달성 과정에서 철저히 동원의 대상이었다. 이런 조직 전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과연 스탈린주의의 극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떠한 사회운동 조직에서든 ‘예시적’ (prefigurative) 성격을 조직론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예시적’ 성격이란 현재의 조직 활동 안에 그 조직이 목적으로 삼는 대안 사회의 원리들이 이미 일정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코뮌주의의 이상을 먼 미래의 꿈으로 신주단지처럼 모셔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조직 생활 안에서 맹아적 형태로나마 실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발한 새로운 조직 형태를 기획하기 전에 현존하는 사회운동 조직들 안에서부터 이러한 원칙을 실현해나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 전반의 혁신에 모범이 될, 혹은 그 전 인차가 될 새로운 조직 형태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공통질문〉

(2) 사회운동과 정당 간의 관계

정당운동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정당을 둘러싼 일체의 신비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정당운동에 제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의회정당이든 혁명정당이든 정당운동의 ‘중양’으로 바라보거나 사회운동의 모든 수수께끼를 정당 ‘형태’의 문제로서 풀려고 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당에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줄 수 있게 된다. 탈자본주의 대중운동이 정치 권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전략 단위’를 자임하거나 운동의 모든 자원을 권력 정치에 휩쓸어 넣을 권리는 없는 단지 하나의 조직

으로서 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쓰는 말이 ‘운동 정당’이란 용어다. 한데 운동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과 사회운동 사이의 조화를 보장해주는 어떤 특별한 조직 형태인 것은 아니다. 그런 조직 형태는 없다. 도대체 조직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운동 정당이란 말은 오히려 정당과 사회운동이 둘 사이의 고유한 긴장과 모순, 갈등을 항상 냉정히 의식하면서 그 긴장과 모순, 갈등을 견뎌내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요청 쪽에 가깝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굳이 당운동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정치 권력의 문제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자면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가를 결코 무시하거나 우회할 수 없다. 국가와 대결해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대결의 주된 무대 중 하나는 바로 국가기구 자체다. 즉, 국가에 맞서는 투쟁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국가기구 안에서 벌어져야 한다(‘in and against’ 전략).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하자면 당운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질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섭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운동이 패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 때문에 투쟁 자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포섭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국가 문제로부터 면역된 안전한 길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공상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되도록 국가에 포섭되지 않을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왕도는 없다. 이제까지의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수밖에 없다. 기존의 국가기구를 철저히 파괴한 10월 혁명의 주역들이 어떻게 다시 국가기계의 포로가 되었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을 통해 국가에 포섭되려야 정당 자체가 발전하지 않은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적 지도자에 의한 또 다른 포섭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한 직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외에 다른 일반적 공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의 변형 및 종국적 사멸의 근본 조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우선 민중권력의 성장이다. 민중권력의 출현과 성장은 국가기구 내의 투쟁과 긴밀히 연관되었지만, 그 계보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구 안의 투쟁이 아니라) 국가기구 바깥의 대중운동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자율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변증법’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회운동의 ‘자율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 사이는 여전히 변증법적으로 얽히겠지만, 당운동·사회운동의 관계에서 사회운동의 ‘자율성’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근본 조건은 국제 관계 속에서 국민국가 역할의 의식적 축소다. 국가의 부상과 사멸은 대내적 계급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권력관계와도 직결돼 있다. 국민국가의 역할이 부차화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해야 국가 사멸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제까지 맑스주의 전통은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대중운동의 주제별 구분법으로는 평화운동과 관련된 과제라 하겠다.

〈공통질문〉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공공성 투쟁이 국가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무라정 ‘코포라티즘’의 혐의를 씌우거나 대안세계화운동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공성 투쟁뿐만 아니라 일체의 개혁[개량] 투쟁을 보이콧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집행자가 결국 국가 관료기구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공공부문의 확대 자체를 폄하하거나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유지(사유화 반대), 확대(다양한 사회화 요구 중 특히 국공유화에 해당하는 것들)와 함께 공공부문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대응할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복지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와 함께 그 예산 결정과 집행이 민중들 자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참여예산제는 그 부분적 실현 사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자본가들이 사유화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성 투쟁이 탈자본주의 과도 강령의 한 항목으로서 과거 케인스주의 시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성 개념 자체를 우리 스스로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구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전통적인 the public의 영역 외에도 보다 넓은 the common의 범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공공성 개념은 국가 소유와 관리 외에도 다양한 민중 자치 기구나 협동 조직의 소유와 관리까지 포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공공성 투쟁이라면 상품화 진전의 반대를 반드시 국가 소유 및 관리의 확대로 귀결시키지 않고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I. 대안의 문제

대안사회 구상과 대중운동이 서로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국가사회주의의 명령경제 체제나 케인스주의의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에서는 대중운동은 어디까지나 청원자

의 역할에 머물렀다. 정책 집행자는 결국 국가 관료기구였다(일당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따라서 대안사회의 건설과 대중운동이 구조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과거 사회주의 운동의 대안사회 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명령경제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중운동의 역할을 고민한 흐름도 있었다. 마오주의나 체 게바라의 사상이 그 대표적 사례이고, 주체사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대안사회상 자체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도 대중운동의 적극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동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애초에 專(전)과 缸(옹)(마오주의의 용어법을 따른다면)이 나눌 수밖에 없는 기본 조건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없이 缸의 의지를 강조하거나 專과 缸의 대립만을 선동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전 사회적 노동자, 민중 자주관리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논의되는 ‘참여 계획’ 구상에 주목한다. 참여 계획 체제는, 통속적으로 말하면, 참여예산제의 아이디어가 공공부문 이외에 주요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상에서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체가 처음부터 국가 관료기구가 아니라 대중 자신으로 설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중 내부에서 새로운 지배 계층이 등장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의 명령경제 체제나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에 비해서는 대중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편, 여성주의나 소수자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이후 사회운동의 대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제한된 지면에서 이 물음에 충분히 답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점만은 분명히 해야 하겠다. 여성주의나 소수자 운동, 더 나아가 생태운동, 평화운동 등의 문제의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대중운동 이데올로기에 이들 새로운 운동의 화제들을 단순히 덧붙이는 것일 수 없다는 점이다. 핵심은 기존에 대중운동 내에 공유되어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과 합의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고통스러우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여성화’ 혹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문제를 보자. 이 문제에 대해 평등주의적 해결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연공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연공급의 배후에는 가장(家長) 임금 관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꼭 연공서열급만 가장 임금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임금 체계보다 더 노골적으로 가장 임금 관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만약 노동운동 자체가 이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대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재구성되지 않는다면, ‘여성=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은 결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문제를 먼저 권드릴 것인가? 바로 여기에 사회운동의 ‘전환’의 엄청난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통질문〉

2. 이행론과 혁명론

- 과거 이행론/혁명론 논쟁에서 계승 또는 계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미래의 이행 전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는 것은 과거의 이행론/혁명론 논쟁을 반추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론가들의 고전적 논의는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지만, 칠레 인민연합 시기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초기의 역동적 상황, 포르투갈 혁명이나 니카라과 혁명에 대해서는 예상 외로 소개된 게 그리 많지 않다. 이론가들의 논의도 당시의 구체적 정세와 관련되어서 이해되고 있으나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령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개혁과 혁명의 변증법, 대중파업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대전 직전 독일 사회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다만 번잡한 이행론/혁명론 논쟁의 여러 가닥들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맑스, 엥겔스 사후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의 공식들이 성립되고 나서 끊임없이 제기된, 이행 과정에서의 ‘주체’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사실 ‘사회운동’의 중요성이나 대중운동의 ‘자율성’ 등등의 최근 논의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토론자는 작년에 발표한 한 글에서 이 문제의식을 전개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

... 맑스주의는 이제까지 끊임없이 두 개의 위험에 맞닥뜨려야 했다[원문을 일부 수정].

첫째는 경제주의다. 현실의 사회변화를 생산력 발전을 주축으로 해서 설명하려는 입장은 새로운 사회의 토대 역시 생산력 발전에서 찾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자본가들이 경제를 특권화하는 것만큼이나 바로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세력조차도 경제물신주의에 빠져들었다.

둘째는 진화주의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생산력의 누적적 발전 과정과 동일시되었다.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 수준이 당면 정치 과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는 자본주의의 극한적(도대체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발전 없이는 그 극복도 불가능하다는 숙명론을 낳기도 했지만, 또한 경제성장이 결국 새로운 사회의 도래로 이어지고 만다는 낙관주의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이제 ‘생산력’ 개념은 주인공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보다 더 넓은 맥락의 ‘사회적 능력들’(social capabilities)에 대해 사고해야 한다. 사회적 능력들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란 생산력의 경우에 비해 그렇게 쉽지 않다. 서로 장르를 달리 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생산력을 비롯해서, 조직화의 능력, 지식 생산과 소통 능력, 윤리적 능력 등등이 포함된다. 말하자면 그간 시민사회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

이다.

사회적 능력들에 대한 주목은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풍요롭게 만든다. 한 번의 정치 권력 획득이나 경제성과의 극대화 과정이 곧 대안 사회의 건설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민중들의 역량이 새로이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혁신적인 민주주의 장치도, 어떤 사회주의 경제 모델도 작동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혹시 새로운 종류의 진화주의는 아닌가? 생산력이 일정하게 발전해야만 자본주의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멘세비키적 사고가 이제는 단지 '생산력'의 자리에 '사회적 능력들'을 갖다 놓는 또 다른 속명론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닌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회적 능력들이 단순히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 능력들의 상당한 부분은 세대마다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각각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역량을 깨워낼 끊임없는 정치적 시도들이 필요하다. 속명론이든 낙관주의든 진화주의가 끼어 들 여지는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민중들의 역량을 해체하려 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최악의 형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이 확보한 능력들의 사회적 토대(진보적 계급타협 체제, 보편적 복지제도 등)를 허물어뜨린다. 그리고 대중들 사이의 윤리적 능력을 파괴한다(농촌 공동체의 쇠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개심 등등). 사회주의운동은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인수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공격으로부터 희망의 씨앗들을 살려내는 데 우선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우리를 '개혁'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끈다. 이제 개혁은 자본주의의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전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민중들의 역량을 복원하고 재형성하며 새로운 사회적 능력들로 접합하려는 시도들이어야 한다.

또한 혁명은 일회적 권력 장악을 뛰어넘는 훨씬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사회적 능력들의 놀라운 성장 과정이다. 사회적 능력들의 발전에는 비약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점진적'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급진적' 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낡은 사회를 지탱하던 결정적인 고삐들이 풀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21세기에도 혁명은 여전히 현안이다 ...

한편 이행론/혁명론의 전통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할 것은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선 이행/혁명 구상과 실천의 중요성이다. 즉, '일국 사회주의'의 스탈린주의적 전통을 넘어서 '국제주의'를 새로이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베스와 볼라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지역통합의 시도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렇다고 국제주의의 출발점이 그런 방식의 지역블록 건설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시도가 적어도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선 전략 구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공통질문〉

3. 국제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족주의야말로 한국 사회운동 대전환의 핵심 쟁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운동의 주류가 민족주의 경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바 ‘전국적 관점’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사회주의(스탈린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자민통’ 이념)이 한국 사회운동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진 경향도 사회운동 내에 강력하게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이들 비판 세력은 어떻게 보면 ‘반국적 관점’이라 할 수 있을 ‘남한 국민국가’론으로 ‘자민통’ 이념에 맞섰다. 즉 ‘민족’주의에 대해 ‘국민’주의(민주노동당 1기 정책위 의장인 주대환은 이것을 ‘의존파’ 대 ‘독립파’의 구도로 설명한다)로 맞섰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주의는 민족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민족주의는 오직 국제주의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한국의 사회운동은 어떤 실체를 지닌 국제주의의 전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제주의의 실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운동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의 구체적 정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민국가들이 상호 대립을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립 상황에 맞서며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교류와 소통, 협력과 연대의 통로와 무대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국제주의의 출발점은 강력한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구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실마리 중 하나로서 일본국 헌법 제9조(‘평화’ 조항)에 주목해보자. 이 ‘9조’는 한 국민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비무장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제정 당시부터 일본 사회 내부의 헌법적 합의라는 성격보다는 아시아 인민 전체의 초국가적 합의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9조’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근대 국민국가의 헌법이라는 성격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인들로서는 이런 엄청난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9조’의 폐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세력이나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마찬가지로(과거 일본 사회당은 자위대의 존재가 명백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각적 폐지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사실 일본 사회 내에는 좌우를 따론하고 어떤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9조’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을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일본국 헌법에 ‘9조’를 삽입해 넣었던 미국의 공공연한 입장이기도 했다.

한데, 이러한 비판은 일본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9조' 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일본 우익의 헌법 개정 논의를 비판하는 중국, 남한,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한편으로는 '9조'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유삼아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하며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역시도 '9조' 가 갖는 국제적인, 어쩌면 탈국민 국가적인 성격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 바깥의 민중들이 정말 '9조' 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 내의 개헌 논의를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나라로 '9조' 의 정신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립 전선은 '9조' 의 존치와 폐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투적인 입장과 그것을 새삼 '진지하게' 받아들여려는 시도 사이에 있다.

최근에 '일본 평화헌법을 동아시아 헌법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아직 완전히 확정된 슬로건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한국의 '9조회' 가 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이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주의의 실체를 만들어갈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반도' (= '전국')적 관점을 뛰어넘는 이러한 국제적 관점으로 탈자본주의와 탈국민국가의 새로운 대중운동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통질문〉

4. 대안세계화운동

과문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운동의 '전환' 을 통해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존의 운동방식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성공한 것 같다. 이야기하려면 한국 사회 바깥에서 진행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예로 들어야 할 텐데, 토론자 역시 상당히 피상적인 정보로만 세계사회포럼 등등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답하기 힘들겠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이윤보다 인간을 조대환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각 운동진영이 대동소이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약간씩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금융화가 가지는 역할과 의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화는 전 세계 자본주의가 어떤 축적양식으로 자신을 유지해 가느냐를 판별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금융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신자유주의 생산양식에 맞게 재구축해가는 과정 자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금융화에 주목하는 것은 금융화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이윤율이 생산부문을 통해 얻는 것보다 금융투기를 통해 얻는 것이 높다는 것이 금융을 통한 자본주의 축적이라는 중요한 형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면서 축적체제의 위기에 빠지게 될 때 일반적인 경기순환적인 위기와는 다른 구조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이나, 경제 성장률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헤게모니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자본의 축적양식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금융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에서 중요한 측면은 첫째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축적논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여러 지역 개발 정책 또한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논리를 지역적 차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금융세계화 경향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환적인 경기위기가 아닌 구조적인 축적체제의 위기로 앞서 설명한 대로 지속적인 금융위기와 외

환위기가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물생산에서 나타나는 이윤율의 위기가 근본적인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위기며 이 위기를 표면적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금융세계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지속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분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제된 지역에서의 착취와 학살,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군사화가 금융세계화의 주요한 축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공통질문>

2. 자유주의적 포섭과 정치정세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IMF이전부터 전개되었지만 IMF이후 급속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이 극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급속한 과정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주도세력은 개혁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87년 체제 이후 군사독재세력과 차별성을 획득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완성되면서 의회정치 내에서 범여권은 과거 민주화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전도자들로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정세 지점에서 '반 한나라당 전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더 이상 한국 국적의 자본이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유수의 한국 기업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은 초국적이자, 다국적 기업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초국적 금융세력이 한국에서 얻은 이익도 막대하지만 한국의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버는 수익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수익이 결국은 모두 금융세계화 세력에게 돌아가지 한국의 노동자 민중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금융화에 노출된 한국경제가 금융-외환위기의 반복이 발생시키는 불안정한 경제구조 속에서 한국 노동자 민중을 보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두 가지 보수화입니다.

첫 번째 보수화 경향은 한국자본, 한국국가 위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경제성장 지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 갈수록 분배 기대 심리로 체제 안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초과착취와 강한 탄압이 있는데도 노동자 민중이 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민족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한국의 외파를 쓴 초국적 자본의 두드러진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이 세계 10권의 경제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이 우월하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초국적 자본이 왕성하다는 것이며 한국의 금융세계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두드러진 정책 중 하나가 지역개발 정책인데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민영화와 사유화를 통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금융화 세력의 공격,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와 같은 신자유주의 거점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목표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역의 토호 및 성장연합세력과 결탁하면서 더 강력해 집니다. 지역으로 갈수록 빈곤화가 심화되고 빈곤을 타개할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지역논리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진 선택과 배제라는 기본적인 구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빈곤화의 경향 속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면서 민중들의 보수화 경향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이나 저항보다는 수긍을, 공공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지역차원의 수익성과 경제성을 우선 추구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주의와 실리주의가 노동조합에서 지역차원으로 확장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1. 87항쟁 20년/ IMF위기 10년, 한국 사회 운동의 성과와 재평가

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는 전노협과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체의 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과는 민주노총이 건설될 때 전노협이 가졌던, 계급성, 사회운동성을 많은 부분 상실하면서 퇴색되었고 결정적으로 사회운동의 성과가 산별노조와 정당이라는 양 날개 체제로 귀결되면서 확실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회운동의 성과가 당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당 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위당이든 대중당이든, 당이라는 형태는 수직적인 전달체제와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중앙 권력의 강화와 단일한 정치노선이 필수적입니다. 민주집중제가 민주주의의 외파를 쓰긴 했지만 민주외파보다는 단일한 정치노선을 확립하기 위한 집중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와 체제 속에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상호 발언하고 연대하고 실천하면서 더 넓고 강력한 신자유주의 전선과 새로운 대안사회 실천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87년 체제가 지속적으로 노정

해은 운동의 문제이자 위기의 한 원인입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아무래도 80년 광주 항쟁 이후 87년 체제를 거치면서 성립된 변혁운동의 전망이 당 형태 일반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NL PD의 차이도 민족당과 계급당의 차이, 민주집중제나 수령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변혁운동의 전망을 세우는 혁명조직은 당이라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세에 따라 변화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통질문〉

2. 운동노선 평가의 관점에서

과거 운동 노선은 선도성과 연대성에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선도성은 단순하게 ‘선도투쟁’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질서를 넘어서고자하는 문제제기, 학습,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모순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연대성은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공동투쟁입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은 계승 내지는 되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과거 운동노선은 목적론적인 일국사회주의 혁명 혹은 사회주의-당 노선을 그대로 답습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이 다양한 운동의 성장이나 주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선이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정세에 맞게 분석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또 연대성과 선도성의 상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산관계 분석과 계급투쟁의 중요성 이외에도 자본주의가 재생산되도록 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형성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동시에 공산주의 주체 혹은 새로운 사회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과거의 사회운동은 계급을 중심으로 놓고 사고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 장악을 목표로 한 것만큼 실제 대안사회에 대한 상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변혁에 대한 목적론적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운동을 위한 운동,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운동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과거 사회운동은 ‘계급’과 ‘민족’으로 규정되는 주체들 이외의 운동을 부문화하거나 부차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성문제가 그렇고 인권이나 반인종주의, 국제주의 평화문제가 그랬습니다.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지금까지 대중운동 틀은 많은 부분 혁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대중운동 틀 자체가 부정되거나 전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의미는 살리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위해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형태의 문제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운동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운동방식의 쟁점은 대중들이 스스로 대안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한 고민이 다양한 현장투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적을 분명히 하고 적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의 틀은 봉기와 구성이 일치하는 동시에 진행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사회운동 조직은 그 자체로 공산주의를 실험과 실천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과도하다면 사회운동조직은 운동의 과정에서 적을 타도하는 논리개발이나, 전술만을 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와 타인 혹은 동지, 조직 내부의 민주적 수평적 관계를 고민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와 대중들을 나눔과 성찰을 통한 새로운 주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주체와,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를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통질문〉

2. 부문운동인가 연대운동인가 또는 운동의 혁신인가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움직인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존의 조직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과 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체(조직이나 단체)일 수 있고, 노조나 당이 전개하는 새로운 양상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면 아무리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동을 묶어주는 것은 공통의 지향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전위당, 사회주의 당이 생산한 이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는 공통의 지향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즉 단일한 정치노선, 조직질서에 복무하기 위한 공통의 지향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지향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현재 새로운 사회운동의 한계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요 활동가와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운동의 의제를 대중이 주체적으로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의 대중운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소수자 운동’ 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순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순에 대응하는 운동들을 뭉뚱그려 사고하는 인식 수준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향점은 서로가 토론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흔히 ‘소수자 운동’으로 분류되는 페미니즘, 장애인운동, 동성애운동, 트랜스젠더운동 등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함께 맞물려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인간학적 차이(=인간적 ‘차이’)에 근거한 모순에 대응하는 운동들입니다. 그러한 인간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와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인지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소수자 운동’으로 분류되곤 하는 운동들 중에 빈민운동과 이주민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산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체 규정은 봉건제 시대에는 농민이었다가 초기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자로 변경된 바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노동자 일반으로부터 주변화된 노동자층과 빈민으로의 변경을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빈민운동에 대한 의미 규정은 시혜적인 관점이나 소수자 정도로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내려질 수 있으며, 무산자계급 주체의 조직화라는 관점 속에서 주변화된 노동자층의 운동과 함께 전략적으로 사고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운동은 보다 더 근본적인 전지에서 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인식 속에는 인종주의, 나아가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평등한 ‘인류’인데도 그러한 사고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이며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주민운동은 그러한 강력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며 균열을 내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주민운동은 더더욱 ‘억압받는 소수 또는 억압받는 약자’ 수준에서 사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정세변화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읽어 낼 수 있다면 그 이데올로기적 대응으로서 이주민운동에 대한 전략적 ‘집중’은 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모든 운동들에서 지향하는 권리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의미에서 인권 또는 시민권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운동진영에서 사용하는 ‘시민’ 개념의 유래는 부르주아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토지귀족신분이 아니면서도 남루하지 않은 행색을 갖춘 사람들이 일정하게 생겨나자 통칭해서 ‘시민’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일상용어에서 쓰이기 시작하니 그 시대의 이론가 헤겔의 저작에서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고 그것이 마르크스를 거쳐 그람시의 저작에서도 쓰였고, 대부분 서구의 시민운동진영이나 한국의 시민운동진영에서 쓰이는 ‘시민’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일상용어로서의 시민 개념이던지 아니면 주되게 헤겔이나 그람시의 저작에서 유래한 시민 개념이던지 둘 중의 하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주목해 보자면, 여러 저작에서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헤겔의 용어를 계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점차 교유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사회’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서 혼용하며 ‘사회운동’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니까요. 그러니 아마도 이러한 마르크스의 용어법을 따라 ‘사회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앞에는 괄호 친 시민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것일 겁니다. 시민사회라는 용어 자체가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보자면 ‘시민’ 이나 ‘시민사회’ 라는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을 사고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좌파적 시민운동, 좌파적 시민사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민중이라는 말은 영어의 people이 가진 함의로는 다 표현될 수 없습니다. people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인민’ 이지요. ‘민중’ 이라는 단어는 외국어에는 없는 한국 고유의 개념어입니다.

‘민중’ 은 바로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고난에 저항으로 맞서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인민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이름입니다. 민중운동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함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주아 혁명으로서 시민혁명과 현재 시민단체(운동)이 하는 역할 등으로 시민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권리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는 것이 운동의 과제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주류 ‘시민(단체)운동’ 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 은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이주민이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중이 일국적, 민족적, 인종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외 아직 우리로서도 충분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학적 차이의 모순에 따른 이데올로기들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시민이라면, 그러한 시민은 곧 민중이며, 따라서 그러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건만으로 바로 곧장 ‘시민운동을 긍정하자’ 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기존의 A부류의 시민운동’ 에 대당하는 ‘대안적인 B부류의 시민운동’ 의 정체성 및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작업들이 ‘실제활동’ 과 ‘담론’ 의 차원에서 매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담론 차원에서는 예전에 사회진보연대에서 작성했던 몇몇 글들(민중운동의 관점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했던 글들)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일차어로서의 ‘시민’, ‘시민권’, ‘시민사회’ 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주며 자신의 것으로 전취할 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고려한 속에서 취해야 할 행보라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주아 개혁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인 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3. 운동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 국가와 사회운동의 관계

(1) 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운동들 간의 새로운 연합이 필요합니다. 사회운동들 간의 연합은 조직(단체)과 조직(단체)간의 연합일 수도 있고 운동과 운동 간의 연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인권운동 사랑방과 문화연대 평화인권연대 민주노총의 연합일 수도 있고 여성권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과 지역 여성단체의 공동행동(사회운동적인 강력한 실천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좁게는 노동조합의 경제주의 실리주의를 벗어나는 구체적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의 사회운동적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사회운동 구성되고 상호 소통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할 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조직적 틀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조직 틀은 현재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민운동과 신자유주의 세력 간의 연합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전하고 있는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의 연합이라는 형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이와 연대의 정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통질문〉

(2) 사회운동과 정당 간의 관계

노조와 정당은 원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작동하는 국가주의방식을 벗어나야만 사회운동의 희망이 있습니다. 노조의 한계는 한계일 뿐 여전히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조건이 끊임없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한 경제주의와 실리주의를 벗어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과제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노동조합의 활동양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현실 운동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정치 안에서 변혁을 사고한다거나 현 체제와 같이 산별노조와 정당이라는 양 날개를 통한 운동의 정점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운동에 많은 질곡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권력 장악은 여전히 남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의회정치 안에서 변혁을 사고한다거나 현 체제와 같이 산별노조와 정당이라는 양 날개를 통한 운동의 정점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운동에 많은 질곡을 낳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술적으로 합법정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첫째, 광범위한 사회운동 기

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합법정당에서 의회에 진출하는 ‘대리자’ 들이 언제든 사회운동의 요구에 의해 ‘소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사실상 이것은 바로 앞의 요건과 통합니다. 소환을 가능하게끔 하는 ‘효력 있는 조합이나 장치’가 특별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리자’가 소환을 거부할 때 노동자민중이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 ‘대리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실질적으로 ‘소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겉으로만 ‘당’이라는 표현을 쓸 뿐 실제의 조직운영 구조는 최대한 사회운동적/수평적/민주주의적인 지향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안의 건설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전위당이든 합법정당이든 대중정당이든 간에 당형태 운동을 지양해야 하며,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사회운동 이전에 합법정당 운동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통질문〉

(3) 공공성 투쟁의 문제

일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서 공공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이 공공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부는 아닐지라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는데 공공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영역의 문제는 공기업의 문제로 축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출발지점은 공기업이었지만 더 크게 공공영역이라는 문제로 접근해 합니다. 이는 몇몇 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 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영역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유지 확장한다는 것은 공공영역에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과정일 뿐이며 지속적인 공공영역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르크스는 자유무역 문제에 대한 대처를 원칙의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본주의가 우세한 체제인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무역이 일정하게 불가역적인 경향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무역 수립을 자본주의의 승리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의 한 측면으로서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를 막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폭로하고 운동의 주체로서(자유무역 반대운동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체로서)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운동의 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관건입니다. 얼마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체로서 조직해낼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인가에 대한 가능 결과에 따라서 자유무역 반대 운동에 참가할 수도 있고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민중 주체가 소외되고 상층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정책 자체가 바뀌는 것을 중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책 자체가 바뀌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투쟁과정에서의 노동자민중 주체의 의식화를 더 중요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의 방식으로 공공성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성’ 개념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는 그 자체로서 친화적이지는 않은 이론입니다. 공공성을 고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고한다면 그것은 항상 노동자민중에게 억압적인 결과를 주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국가를 배제한 ‘사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고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사회화 담론과 별로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시민’ 개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 개념도 말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성’ 개념이 훌륭한 것이어서 전취하려 한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취할 수 있다는 관점인 것이지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공공성’이라는 용어 정도를 받아들이며 마르크스주의에 맞추어 그 의미를 가볍게 변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1. 대안의 문제 : 대안사회상, 대안정책, 대안적 사회운동 전망에 관한 토론에 관해

어찌 되었건 생산관계를 변혁하지 않고는 대안사회로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 여러 운동적 시도들도 결국 생산관계변혁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 분석을 근간으로 해서 현실 투쟁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비자본주의적인 질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가 작동하는 고리를 찾아내서 싸움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의제를 확인해서 다양한 공간의 주체들이 자기 운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사회 운동 간의 공동행동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까지 결합해야 새로운 사회운동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노동자 운동, 노동자 대중들의 역동성이 중요하다고 할 때 노동자 대중의 역동성과 운동성을 되살리는 길 중 하나가 개인들의 실리주의를 넘어서 이와 같은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나 다른 소수자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혁신된 사회운동은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리주의를 벗어난 사회운동의 이익(보편적 권리확장)을 위한 공동의 투쟁은 신뢰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누구의

성과도 우리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과 경험, 과정 또한 대안사회를 위한 주체형성의 한 과정이며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출발입니다.

〈공통질문〉

2. 이행론과 혁명론

- 과거 이행론/혁명론 논쟁에서 계승 또는 계집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이행론은 결과적으로 체제 전복과 혁명의 완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래에 도달한 공산주의를 상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도식적인 단계를 거치면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축적체제의 변혁 속에서 위기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변칙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정세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전히 일국적 계급투쟁과 국가 권력장악을 운동의 결과로 놓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에 가서 자본주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를 이끌고 갈 주체가 없다면 그 사회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야만의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하는 현실에서의 끊임없는 운동의 과정으로 이행과 혁명론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의회나 국가권력이 공산주의 주체를 생산할 수 있다거나 공산사회가 오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행과 혁명은 공산주의 주체가 있어야 가능하고 공산주의 주체는 끊임없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을 과거 운동경험의 극복과, 대안사회를 위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면, 사회운동이 곧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의 성격규정을 이렇게 한다면 사회운동으로 전화된 노동조합 운동은 실리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운동과 주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적인 권리투쟁에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인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은 시민교육의 강화입니다. 앞서 시민개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의미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시민교육은 지적차이로 인한 불평등 관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운동의 구도(당에 의한 정치적 지도)를 혁신하고 운동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면 개인의 자발성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발성은 지적차이를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사회운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현실에서 노동법 교육에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꺾드릴 수 없는 것이

제미니즘입니다. 제미니즘 없는 혁명(이론)은 공산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을 통한 사회운동 주체, 대안사회주체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합될 때 새롭게 구성되는 주체로서의 공산주의 주체가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질문〉

2. 국제주의 -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제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제주의라는 고전적인 용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또는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며 그것들 간의(inter-) 관계를 사고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주의나 세계시민주의 또는 인류주의라는 용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관점을 전환하고 실천의제에서 국제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반 인종주의와 결합한다면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와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융화된 초국적 자본이 넘나드는 지점에 대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한국자본이 진출한 아시아나 유럽 국가 노동자들과의 연대,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반인종주의와 보편적 노동권 확대를 기본으로 해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세계화 세력이 제3세계에서 펼치는 착취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하며 FTA투쟁 등에서 국익논리 기업경쟁력 강화 논리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공통질문〉

3.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은 무엇인가?

대안 세계화 운동의 출발 자체는 전통적인 레닌의 제국주의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경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족국가를 축으로 하는 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초민족화된 금융자본, 금융화된 산업자본에 대한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운동 방식의 문제일 텐데 대안세계화 운동을 주장했고 외쳤던 한국의 사회운동이 구체적으로 다른 운동방식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평택 미군 기지문제를 비롯한 미군기지 확장 문제에서 반미운동이 아닌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고민을 제출한다거나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면서 국제주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반대 투쟁에서 국익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일정하게 금융세계화의 관점으로 투쟁에 임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세계화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양식은 기존의 국가주의 경향의 운동 조직들과 자본주의 체제내화 한 운동질서에서는 많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당 형태 운동 그리고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앞으로 대안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의 정치” 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즉 현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운동과 투쟁에서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하기 위한 투쟁, 지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 등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도 그 의미와 활동방향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1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토론문

사회운동포럼 여성운동전략기획단 호성희

우리 모두가 여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통질문〉

I. 시대 인식의 쟁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적 특징은 금융화세계화, 이에 따라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의 비공식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팽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성적착취의 증가라는 특징입니다. 이는 현재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본은 세계적인 하청체계를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도 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수직적 하청체계를 만든다든 상당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하청체계의 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내-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게 됩니다. 95년 세계은행통계에 따르면, 남한 여성노동자의 43%가 비공식부문에 속해있고, 이러한 여성노동자가 요즘말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한편으로 여성들에게 가사와 작업장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게 되는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서 친절과 봉사, 돌봄 등 기존의 여성의 이미지가 극대화되어 활용되고, 그러한 여성성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섹스관광과 같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성장품으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의 상품화가 광고 등에서 일상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80년대 한국사회 자본주의 발전전략은 광범위한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된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적인 폭력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멸시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면서도 일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조건과 현실이 7-80년대 노동자운동이 형성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87년과 10년 뒤인

97년 IMF 구조조정 시기를 단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97년이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구조조정이 전면화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부양자-남성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위기' 인식을 촉발하긴 했어도, 반면 80년대부터 진행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못했고 노동자운동은 이를 가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기간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이 여성해방이념으로서 페미니즘과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해왔고, 동시에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사무직, 서비스직 고용이 증가하고 더불어 기존 여성노동자의 비율도 1980년대에 크게 늘었습니다¹⁸⁾. 값싼 여성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들은 더 싼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거나, 도산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는 대량해고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생산은 비공식 가내 영역으로 이전, 일종의 하청/외주화 된 셈이고 가족적 책임을 지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보충해야했던 기존여성노동자로 채워지게 된 거죠. 조직화된 집단적 힘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힘이라고 할 때,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시대에서 항상 노동해왔다고 볼 수 있고(이것이 자본주의가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전략), 97년 이후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조건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가능하고,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는 동시에, 정부기관의 여성전담 부서가 설립되고,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정책이 전면에 부각되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는 마치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일종의 '기회' 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에 여성부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성차별, 성폭력은 국가인권위 소관으로 넘겨지고 가족정책총괄을 맡게 되면서 2005년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하였습니다. 곧 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 개편될 예정이라, 여성부가 '가족부' 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만.

'발전' 에 여성을 통합하고자 하는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자 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 의 중요한 측면이죠.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여성노동이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열등한 조건들로 모든 산업의 고용조건이 일반화되는 '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구조조정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저항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구조조정은 여성의 희생

18) 1987년에서 1992년에 이르는 동안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감소폭은 13.6%밖에 비해 여성은 35.3%였다. 반면 시간제 전체 노동자 중에서 여성비율은 1980년 45.9%에서 1993년 64.7%로 증가하였다.

19) 총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75년 이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1987년에는 이 비율이 40%에 달한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직의 60.7%, 판매직의 47.2%, 사무직의 36.9%가 여성노동자다. 특히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198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사무노동의 수요증가와 사무내용의 단순화 및 가치저하에 따라 지금까지 남성이 맡아왔던 하급사무직 노동이 여성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에서 기존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7년의 경우 9.7%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는 20.7%로 크게 늘어났으며, 1987년에는 25.5%에 이르게 되었다.

을 통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들은 감소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우선 집안에서 재생산노동을 늘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판매’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성의 이중부담의 증가가 ‘재생산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제발전기구들의 자각이 ‘젠더(성)주류화 전략’으로 수립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선 이것이 최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이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지위와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인력(출산력을 포함하여)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수혜조차 제한적이어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보다 강화할 위험성 또한 농후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여성의 진입이 배제되었던 부분이 개방되고 이에 수혜를 입는 여성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만들어 저항하기 쉽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여성정책들은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화, 성별분업의 새로운 안착화를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죠. 특히 80년대 기층여성들의 생존권 투쟁과 결합하며 등장한 진보적 여성운동들 또한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II. 한국사회 사회운동에 대한 재평가

87년이 “못 살겠다 없어보자!”라는 불만이 대중적으로 분출되고, 이것이 노동조합, 정치, 여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왜 87년 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첫 번째는 87년 투쟁은 70-8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에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투쟁의 역사는 삭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현재 사회운동들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87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도 여성문제를 고민하기 전에는 여성들의 투쟁과 요구에 별반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7-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와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지, 사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남성)노동자의 역사로 기록되었고,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의 ‘영상’ 역시 대공장남성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졌던 사회적 힘을 중심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문제가 곧 정규직의 미래이기에 때문에 비정규직철폐투쟁이 노동운동 공동의 과제인 것처럼, 여성해방운동이 사회운동 전체의 과제로 결합된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분할 통치 전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비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전략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회운동의 위기는 기존 운동의 이념과 전략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새로운 보편적 가치들과 결합된 대안이념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87년 노동자, 농민, 여성조직들이 건설되고 다양한 사회운동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각각이 부문운동으로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특히 여성운동의 경우, 자신의 전망을 여성의 주체화 세력화를 통한 사회변혁운동 속에 위치 짓고 사회운동의 변혁을 이끌기 보다는, 87년 ‘민주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국가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활동해왔습니다. 한편 사회운동 역시 이러한 여성운동의 ‘분리’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화, 세력화가 운동의 성장에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개조를 통한 노동자, 여성, 시민의 자기통치를 사회운동의 목표에 두기보단, 이를 국가권력의 대체로만 사고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억압을 재생산하고 있는 가족의 변혁을 자기 과제로 두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현재의 가족임금체계는 노동자운동이 전투적 투쟁을 통해 극히 일부에게만 성취된 산물이기도 합니다. 가족임금을 비판하면, 남녀 평등한 임금체계는 무엇이나 는 질문과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가족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임금’ 요구가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으로 수렴된 것은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적 성별분업모델을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을 분리하고,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모델을 구축해왔고, 이를 통해 출산, 양육, 노인부양 등 노동력 재생산이 사적 영역인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가족임금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현되었을 뿐 이상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결국 ‘방어’ 할 것조차 남아있는 않은 현실이나 그 목표를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변혁한다는 것은 기존의 성별분업이 억압해왔던 여성권과 노동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운동의 과제를 세우고,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가족이 덜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질문〉

III. 사회운동의 혁신 방향

1. 대중운동의 혁신

대안적인 조직적 틀이라는 게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이러한 실험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조나 당 조직에 비판하여 대표 없고 직위 없이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나 여성독자조직이 그 자체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담아낼 내용의 변혁 없이 그릇으로서 틀만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틀조차 변혁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통/연대/변혁의 원리가 사회운동의 혁신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한다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고, 공동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과 실천이 연대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들 간의 관계 맺기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질문〉

2. 페미니즘 운동과 소수자 운동이 던지는 문제제기를 서로 다른 운동 영역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절반으로서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운동과 이별인 페미니즘을 소수자 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소수자라는 의미에서 여성운동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을 변혁이념과 결합하는 것으로 ‘일반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차이로 보고, 이런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을 개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다양각색, 판인이면 판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각색의 판인들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성적 차이’의 경우 ‘인권’에 삭제되지 않고, 여성권으로 각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폭력의 지속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차별의 의미를 넘어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써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권-노동권이 상호 결합된 전체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가족을 변혁(가족의 축소와 남녀관계의 변화)해야 합니다.

3.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둘러싼 사회운동-사회정책-국가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

최근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이하 「전략」)비판을 중심으로 공공성 투쟁을 둘러싼 사회운동-사회정책-국가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동위’ (준)이 구성되어, 비판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 배경으로 제기하고 있음.

- ① 사회서비스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빈곤층 소득지원 제도)로부터 분리되어 그 기능과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② 새로운 위기(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돌보기의 어려움,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 ③ 일자리 창출(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위와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 되어 운동진영 내에서도 그 필요성과 취지 면에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①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기존의 사회복지, 공적 서비스가 그 내용 면에서나(현금 중심의 소득 지원 중심에서 개인서비스 지원), 대상 면에서(극빈층 중심에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보다 확대된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
- ② 아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며, 향후에 나타날 고령화의 문제들은 가계가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 ③ 지역 단위로 존재하는 실업 관련 운동조직들을 통해 정부의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실업자, 여성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민주노총도 마찬가지)

『전략』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 일반의 확대방향 속에서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영역에서 수행되던 재생산 노동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사회화 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가 자본의 재권 과정 속에서 서비스 산업의 팽창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와 같은 변화에 조응하여 재생산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노동의 불안정화, (그 내부 구성이 매우 불균등하고 임금격차도 매우 큰)서비스 산업 팽창, 그리고 성별분담을 전제로 한 현대의 가족형태가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할당해온 무급 가사노동의 연장으로서 저임금 노동력화가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산의 위기 관점을 결합했을 때,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저출산고령화, 빈곤의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막대하게 초래될 재생산의 비용을 감축해 가기 위한 자본-국가의 효율화, 합리화 방안이라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위’는 『전략』이 시장화를 통한 사회화라는 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보장이 아니라는 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방향을 둘러싸고 잠복된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재생산노동의 사회화’가 가족의 축소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째, 생산과 재생산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생산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재생산 영역을 비가시적하게 만들었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어딘가에서, 누구인가는 수행해야 하며,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이 마치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는 점, 즉, 재생산 노동은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을 소요하는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국가의 경제 통계 같은 것에 반영되지도 않으며, 아무나 적당히 할 수 있는 노동으로 평가절하되어 옴. 이와 같이 재생산 노동이 무급으로 수행되는 것은 자본에게는 생산비용인 임금으로부터의 그 비용의 공제를 의미함.

둘째, 국가의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매개,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 국가는 사회보장, 공적서비스 등의 제도화된 방식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일정하게 완화해 주거나, 자본의 필요에 따라 그를 조정하는 식으로 재생산 노동을 합리화 하는 역할을 담당. 20세기 초반 형

성되었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 만연한 실업, 궁핍화의 조건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등장한 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재생산 노동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여 가사 노동에 집적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사실 한국에서는 복지체계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가족이 흡수하는 형태였음.

셋째, 가족은 국가와 함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장소인데, 국가의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특히 최근처럼 공식 복지가 급격히 후퇴되는 조건에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복지 제공자’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여성의 소득 벌이 수단을 박탈하고 여성에게 재생산 노동을 할당했던 과정을 고려한다면, ‘최후의 복지제공자’는 사실 상 여성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첫 번째 부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재생산 노동의 비가시화는 결국 여성의 동력을 재생산 노동을 무한히 감내할 수 있는 신축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결국 자본-국가-가족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자본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통제되고 강제 받는 것은 ‘생산’ 영역의 노동(자) 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여성에게 모순적인 상황을 강제하는데, 고용기회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관련 노동은 여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 비용의 지불이라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의 관련 논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국가가 재생산 노동의 일부분을 선별적으로 책임지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가족, 여성의 책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사회서비스의 노골적인 시장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시론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재생산의 위기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사회운동 내외부의 비판적 인식을 확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복지 영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재생산의 문제’로 통합적으로 인식,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노동을 누가 어떤 형태로 수행해왔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공공성의 해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문제다. 이는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재생산 노동의 비용이 비생산적이고, 감축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는 재생산 노동을 생산노동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온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 노동은 인간의 재생산 뿐 아니라, 생산노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를 상대로 한 주장과 요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국가가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매개자 조정자라는 측면에서 재생산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통칭되는 현재 운동진영의 대응은 ‘시장화’에 대한 반대가 즉각적으로 국가의 책임 강화로만 수렴되는 방식인데, 이는 복지, 교육, 공적서비스의 문제가 재생산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체형성을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류 여성운동이나 일부 반빈곤운동의 경우처럼 사회운동의 제도와, 국가 전략으로의 수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개별화되고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 일반의 요구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맹목적 수렴은 현재와 같은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결과했다.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 부분의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자기조직화 되어야 한다. 이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 부분의 확대, 시장화로 인해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관련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발언은 매우 핵심적 일 것이다.

네 번째로, 재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적인 상의 모색은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회운동의 개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그를 상대화하며, 또한 시장화된 서비스 부분 노동자의 자기조직화를 옹호하면서도 시장화를 지양해 나가는 실천이 병행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자 민중 내의 연대성을 실현하는 방향의 대안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통질문〉

IV.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변혁하자

가족의 변혁, 축소라는 것이 이미 신자유주의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가족형태(성별분업)가 억압하고 있는 여성권-노동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과제를 밝히는 것이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를 건설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여성이 노동을 통해 받는 임금이 생계를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성 스스로 가족구성을 생존전략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다. 사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경우도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는 거의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투쟁이 승리해서 고용을 보장받겠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는 더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했던 노동에 대한 불인정과 가치절하가 현재 가족 밖에서 재생산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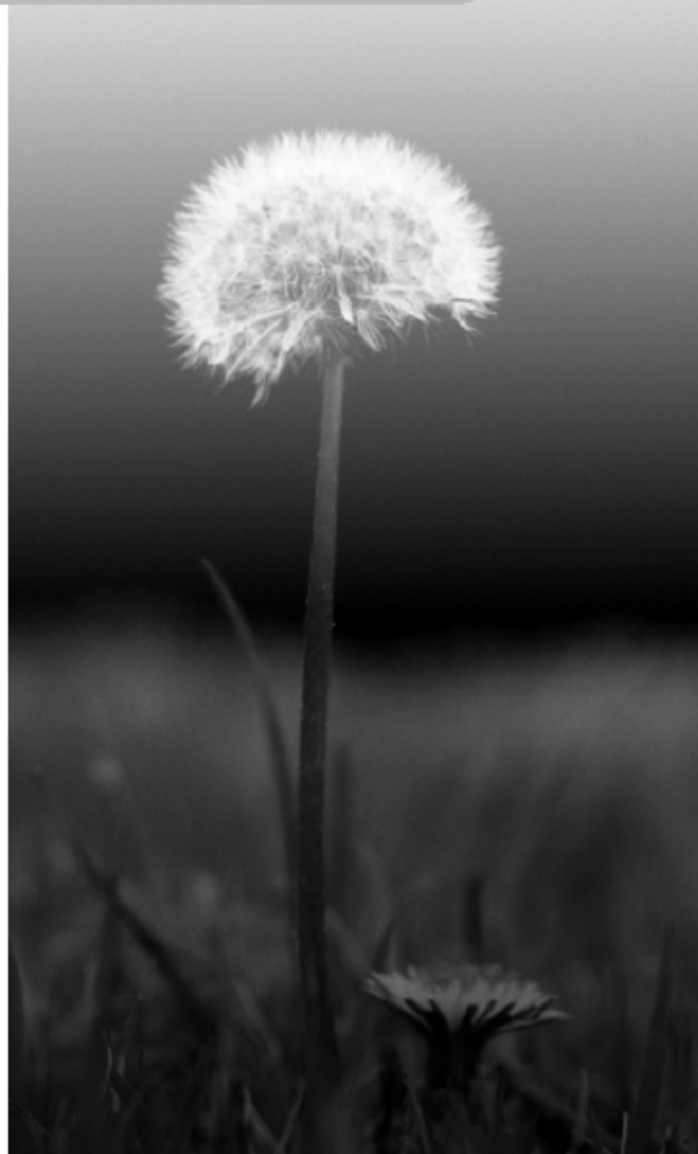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과 실천이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의 과제]

-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기존 이념과 실천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을 토론하고, 사회운동이 전략재구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여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파괴하고 여성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공사분할-성별분업-성차별이데올로기를 폐절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신체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한다.
- 여성의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철폐하는 투쟁을 전면화한다.
-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가내노동, 재생산노동, 비공식노동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투쟁한다.
- 여성이 스스로 대표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조직화/자기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대토론회2부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 대토론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사회운동 대토론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 때: 2007년 8월 30일(목) 오후 7시-10시

○ 곳: 성균관대학교 법대 B107

○ 모실 분들

▷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 이야기손님: 강양미(민주노동당 서대문), 김진익(민주노총서울본부),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혜(전국학생행진), 박진(다산인권센터), 이봉화(여성운동전략기획단), 이원재(문화연대), 이해관(민주노동자연대), 정혜권(노동자의 힘)

□ 이야기 나눌 목지들

예전에 비하면 사회운동 안에서 연대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상대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안되는 이유도 그만큼 연대가 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역으로 연대성이 약화된 이유도 소통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일상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테고, 소통이 잘 되면 연대라는 게 당위가 아니라 운동의 일상이자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통과 연대가 잘 안되는 이유는 저 사람과 내가 만나야 하는 이유, 저 운동과 내 운동이 함께 해야 할 지점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쩌면 연대라는 것에 대해 각자가 혹은 각 운동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연대=공동투쟁, 연대=집중투

소통/연대/변혁

쟁, 연대=몸대주기, 연대=이름 걸어주기와 같은 전형적인 연대 방식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같은 운동 안에서도 소통과 연대가 잘 안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소통과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그만큼 해결 방향과 과제도 분명해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토론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1. 지금 '소통' 과 '연대' 가 서 있는 자리

운동 안에서 소통과 연대를 가로막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운동사회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오늘날 연대의 가치 혹은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 저게 무슨 연대냐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은 어떤 것인지..
- 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은 아닌지..
- 연대라는 게 하나의 사안에 달라붙어 집중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하나의 '전선' 혹은 '공동전선' 을 쳐야 한다거나 전선체를 만들자와 같은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 논의 구조나 회의 방식에서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지점은 없는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에 대해 평가 절하되고 있지는 않은지..

2. 운동 안에서 작동하는 분할과 배제

성, 성체성, 나이, 국적 등 사회가 만들어놓은 분할선이 사회운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 안에서도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

은지 아차 싶을 때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나도 좀 안다는 식의 태도에 그치기만 할 뿐 실질적 소통과 연대가 가로막혀 있는 모습들도 관찰됩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고 서로를 외면하기도 하고, 운동을 떠나는, 운동에서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통과 연대가 가능하려면 그 분할선을 알아채고 인정하고 하나씩 지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포착되는 지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 마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는지...
- 운동의 조직구조와 문화에서 반여성적인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지, 운동 안에서 여성(주의) 의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서 동성애자 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발언을 내비친 사례에서 보듯, ‘소수자’ 운동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차별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은지...
- 나이, 직책에 따른 위계로 인한 갈등은 없는지...
- ‘사회운동’ 이 학생운동을 대하고 만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3. 운동의 본세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저래선 안되는데...'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이는 반민주적인 모습, 실리주의에 매몰된 모습, 성과를 독식하려는 모습, 자리와 이름 날리기에 연연해하는 모습, 큰 단체들의 패권적인 모습, 함께 약속했던 바를 함부로 깨는 모습, 명망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 조직 이기주의 혹은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하는 모습, 민중들의 현실과 유리돼 보이는 모습, 정파적 폐쇄성이 드러나는 모습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지적하다 계속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운동은 혹은 그 단체는 혹은 그 사람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지요. 혹은 그런 문제점이 보여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도 눈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여 운동방식에서 속아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예]

- 조직 내부, 연대체 활동, 집회현장 등에서 소통과 연대에 대한 동기가 꺾이고 돌아서게 만드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 정파들간의 대립이나 조직 이기주의나 성과주의 등에 발목잡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의제나 요구가 도구적으로 활용된 경험은 없는지...
- 사회운동에서 민중의 지리는 무엇인지, 변혁성과 연대성, 민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은 없는지... 혹은 운동과 삶의 일치라는 원칙이 너무 경직되게 해석되면 민중들의 일상, 생활문화와 유리된 ‘비대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부르짖었던 변혁운동의 이념이 새로운 가치들과 융합하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과 인권, 평화, 생태, 페미니즘 등의 소통과 연대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가치 중심 운동들 사이에서도 소통과 연대는 부족했었습니다. 자기 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지닌 한계(불완전성)를 인정하고 서로를 넘나들며 배우고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딪혔던 순간이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를 넘나들며 배우고 힘 모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각 가치들의 개별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연대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 운동을 하면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과 만나면서 부딪혔던 경험은 없었는지... 혹은 내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전망에서 부족함을 발견한 순간은 없었는지...
- 가치들, 운동들 사이의 횡단을 통해 새로운 연대가 가능했던 경험은 없었는지...
- 넘나들며 서로를 채우고 연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5.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쇠말

어떻게 하면 딱힌 소통과 연대를 풀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모색도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기 운동의 전망을 그리는 데 있어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게 느껴져야 실천이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절

실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운동, 운동과 ‘대중’의 위계를 극복하고 민중을 주체로 만드는 운동, 일상적 교육 등을 열쇠말로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해 주세요. 혹 판단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 운동의 현장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장성은 각 운동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 활동 영역, 활동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이유가 현장 밀착성, 민중과의 괴리, 주체형성 전략으로서의 교육 실천의 부족 혹은 도구화 등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각 운동에게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보게 되는지, 지역 전략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기존 지역운동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노동에 기대어 있지는 않은지...
- 지도부가 지침을 하달하고 민중은 동원되는 운동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 운동이 사용하는 언어나 운동방식이 민중을 소외시키고 운동도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 노동운동 중심성, 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6. 현안에 비춰 다른 운동을 기획하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의 운동 전망을 그려 나가는 지점, 운동 자체와 운동이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를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지점에서 속아내야 할 문제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이 다양하게 얘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에서부터 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것일 텐데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 연대 방식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이랜드 투쟁이나 KTA 투쟁, 아프가니스탄 투쟁, 평택 등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던 혹은 떠오르고 있는 투쟁들을 예로 들어, 어떤 대안적 실천 흐름들이 조직될 수 있을지 조곤조곤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문

강양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구위원회 여성위원장)

)) 나의 현장 및 활동영역

: 서울여성노동자회,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분회 지원대책위원
민주노동당 서대문구 여성위원, 노동위원, 서울시당 환경위원, 중앙당 2기 성평등강사단

나의 현장 및 활동영역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이유는 소통과, 연대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고민이 시작되고 실천되는 지점이기 때문.

짜여진 틀을 좋아하지 않아 정해진 질문의 순서를 따라 글을 쓰지 않았다.

생각이란 경험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소통은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몇몇 풍경을 통해 나의 소통과 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풍경 1) 민주노동당 내 성평등교육을 둘러싼 ‘소통’ 들

성평등교육은 조직 내 성평등 혹은 성정치란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소통)해 보고 실천의 지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당이 나의 사상을 관리하려한다’ 라거나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 말을 하신분들은 물론 이유가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남성활동가 대부분은 ‘성평등교육’ 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일종의 본인의 성품(혹은 인격)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성’ 혹은 ‘여성주의’ 란 말은 선거대나 성폭력 사건 등이 있을 때 써 먹기 좋은 하나의 ‘무기’ 같은 것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반응은 어떤면에서 당연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런 처함의 말들은 대부분 당위성에 기반한 부드러운 강권으로 일축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문제의식이 일면 옳다는 것. 즉, 의무화 이후 성평등교육은 당직자의 자격을 지키기 위

한 하나의 '통과의례' 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서울시당의 경우 '성평등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직을 박탈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음. 높은 결의 수준에 따른 실천이 있었나하면...의무교육을 마쳐야하는 마감에 임박한 5월과 6월의 풍경을 떠올려보시라. 한꺼번에 몰린 교육으로 성평등강사단이 스케줄에 쫓기거나 6월초 마지막 성평등교육의 경우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얘기도...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성평등의식' 이라는 소통의 문제.

'교육' 이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훈계' 하거나 '일방적인 가르침' 이 아니어야 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직간접 경험과 고민을 다른사람과 '소통' 하며 '성장'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나의 문제의식이 아니더라도 '성평등의식' 이 일년에 두시간이라는 '형식'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더구나 여성주의적 사고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억압에 대한 경험을 정치화하여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개인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이라고 정의한다면 '성평등교육' 의 의무화에 따른 개인의 경험은 '성평등교육의 의무화로 인한 억압' 이 아닐까.

억압을 경험하게 하는 여성주의란 뭘까?

풍경2)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분회 지원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소통' 과 '연대' 들

: 2006년 10월중순경으로 기억한다. 지금현재 수감된 김경옥위원장(당시 카르푸노조위원장)이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드컵홍예버가 전국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인데 분회가 없다는 것. 결국 마포,서대문,은평,용산이 주말마다 매장선전과 촛불문화제를 하는 것으로 연대에 나섰다. 역시 수감되어있는 이랜드일반노조 이경옥부위원장은 휴게실에서 직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는 매장에서 고객들과 직원에게 선전물을 나누어주고.

그거기를 8개월만에 월드컵분회가 5월11일 월드컵분회가 출범했다.

- 풍경 속 풍경 하나,

그때까지도 나는 주변의 두가지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1) 투쟁이 있는 사업장도 아닌데 우리지역의 미조직비정규직도 조직화문제는 제쳐놓고 남의 지역에서 왜 2) 그런식으로 과연 비정규직이 조직화되겠냐. 첫 번째 질문은 투쟁도 없는 타 지역 사업장에서 우리 지역의 노동위가 다른지역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토로였고, 두 번째는 그런식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설교였다.

지금은? '역시 우리가 그 일을 하길 잘했죠?' 란 말을 듣고 있다.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일에만 매달리고, 우리의 일을 우선하거나 타 지역이나 단체와 경쟁하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마인드 아닐까.

연대는 이미 투쟁이 만들어진 사업장에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투쟁이 있어야 하는 사업장, 앞으로 투쟁해야하는 사업장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것이고, 절박하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뭘든 해 보겠다’ 는 것 아닐까.

- 풍경 속 풍경 들,

월드컴분회가 생기고 얼마 안되어서였다. 분회 만들어진지 한달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경미 월드컴분회장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을 때, 주말마다 파업 일정이 있을 예정이었고, 월드컴점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월드컴분회장이 연단에 오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앞에서 말할해야 하는 부담으로 그녀는 전날밤에 아이들 앞에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는 말로 자신의 열의와 결의를 보여주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연설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지대위원의 말씀, ‘작성한 글, 쥘 보세요. 봐 드릴게.’

이제야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서는 그녀들에게 또 다른 권위에 따른 의존을 경험하게 할까봐 마음이 조금해진 내가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현명했다. ‘지금은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겠지만, 제가 아이가 아니니 판단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난 또 그렇게 또 한가지를 배웠다.

- 풍경 속 풍경 셋

파업초기, 계산대를 멈추면 매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계산대를 멈추면 된다는 아이디어도 조합원들에게서 나왔다). 조합원들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연대하러 온 단위 중 일부가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선전물의 내용은 ‘이랜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것. 월드컴 지대위원 몇몇이 제지 했다. 이랜드파업의 정당성은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연대는 투쟁을 이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텐데, 가끔 일부 연대 단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알리는 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에 성공한다.

- 풍경 속 풍경 넷

첫 번째 매장점거 농성에 들어가기 전, 여성조합원이 99%를 차지하는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 300~400명이 계산대 앞에 앉아 구조를 외치고 있었다. 그 앞은 보안용역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 때 남성조합원으로 구성된 연대대오가 20~30명 정도가 들어섰다. 그리고 보안용역과 조합원들 사이에 앉았다. 그것을 본 또 다른 연대단위의 말. ‘남성동지들이 앞에서 있어주니 든든하지요?’

두 번째 강남뉴코아 매장 점거 당시 풍경. 150명 가량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꺾꽂이 들어차 있고 집회중이다. 일차 점거농성당시 그렇게 호응이 좋았던 촛도, 당대표나 국회의원의 발언도 다 관심이 없어 보인다. 첫 번째 공권력에 침탈되었던 기억은 스스로 자각하는 못하든 정신적인 상흔으로 남았을터...계속 불안한 표정들이다. 유일하게 반응이 좋았던 것은 남성(대부분이 학생)으로 구

성된 사수대의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이곳을 사수하고 있는지 이야기 할 때였다.

이런 방식으로 투쟁을 통한 권력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있을까.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남성화된 권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군대식 문화, 진중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근대성을 버린 합리적 이성술 보이기보다 감정에 더 많이 호소하고, 이미 조직되어 있는 대중을 자기의 깃발로 재조직하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기 자신(특히 '여성'인 자신)에 대한 존중, 국가나 자본에 대한 권력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권력(많은 쪽수에 대한 환상 등)에 기대고 싶은 유혹의 의존을 깨뜨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투쟁을 통해 또 다른 권위와 권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조직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자본주의적 조직화를 경험하면서도?

풍경3) 오랜 선배 운동가를 보며 느끼는 연민과 분노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나. 최근에 있었던 일. 내가 일하고 있는 단체와 당에서 똑 같은 비판을 받았다. 잘난 척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그분들이 나에게 보낸 반응에서 나에게 대한 공통의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여성노동계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선배활동가가 최근 민주신당에 '영입되신' 것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그분의 개인적 선택을 공식회의석상에서 '공지' 한 것을 두고 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명의 선배활동가들은 나이 값도 못하고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현하면(그것이 비록 얼굴표정뿐이지라도, 다른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니까) 안된다는 것을 나에게 설교하다 강요가 되면서였다. 나의 문제의식은 '공지'라는 형식을 대선배가 요구한 것이니 반대할 수 없어서 진행했다는 것에 있었지만, 대답은 '너 잘났다' 였다.

또 하나는 당 활동에서, 열심히 하고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너무 '까칠하다'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너는 문제라는 것이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고 운동을 혼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

얼마전에 '하얀거탑'이란 일본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드라마를 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반응. 일본의 경우, 양심적 의사, 인간적인 의사로 나온 캐릭터를 선호하고 좋아했던 반면, 한국은 그런 캐릭터의 의사를 보고 비현실적이고 독선적이라며 매우 싫어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문제,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문제는 결국 '잘난 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구조적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운동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불편함은 실은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 이미 자기 자신조차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편한 자각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난, 잘난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진실 그대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그런데 자꾸만 나를 잘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배 활동가들에게 분노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렇게 좌절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게 해 온 이 세상을 생각하면 또 그들이 불쌍하다.

풍경4) 정말 이기고 싶을까? 정말?

지역에 있는 전철역에서 이랜드 불매 출근 선전 중에 지나가는 시민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랜드만 난리예요? 맞다. 이 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이 이랜드투쟁과 같은 거대한 투쟁에 당특보 한번 내지 않고, 선전물도 민주노총에 의지하면서, 쪽수 채워주며 만족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랜드 투쟁이 왜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 이미 일어난 투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지 않고 이 투쟁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일까.

투쟁을 통해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단위사업장 내에 가두어 놓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이기고 싶은 것일까.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편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

1. 지금 ‘소통’ 과 ‘연대’ 가 서 있는 자리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매주 수요일 12시면 어김없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오랜 전부터 알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집회 장 주변을 2-3번 지나간 적도 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번도 할머니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철거민 노점상 집회를 일상의 풍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서울본부가 중구청 앞 건물로 이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중구청을 대상으로 철거민과 노점상분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사 직후 처음 그분들의 집회를 접했을 때 지척에서 어떻게 연대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무처 동지들이 돌아가면서 집회에 결합할까, 고생하신다고 물이라도 드리고 따뜻한 말이라도 자주 해드려야지, 뭘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의 해박야지... 등. 임원들이 한 두번 집회에서 연대사를 했던가요? 저 모르게 사무처 동지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린 철거민 노점상 집회에 익숙해졌고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상층연대와 담당자만의 일로 제한되는 이유는?

민주노총에서 3년 남짓 일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사무총국회의를 합니다. 회의 때 자주 듣는 말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는 말입니다. 대외협력실에서는 반전평화, 국가보안법철폐, 민주화운동계승사업, 학교급식조례제정, 언론개혁, 테러방지법-검시법개악 폐지, 빈민철폐민연대 등의 연대 활동에 대한 온갖 보고가 올라오지만 결국 담당 임원과 사업담당자 중심의 상층연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연대단위의 경우는 이름만 걸치기도 합니다. 실제 연대를 하다 보면 역량 상 도저히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뎨 고민스럽습니다. 담당자만이라도 제한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도움이 된다면 이름만이라도 걸 것인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과감히 참여요청을 거부할 것인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렵네요.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해 부족하지만 소박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연대를 위해서는, 첫째, 우선 마음이 동해야 한다. 둘째,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상층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래로부터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과 결합하여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의 지향과 관점, 풍토와 활동방식을 사회운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 개인간, 운동단위간 상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운동 안에서 작동하는 분할과 배제

사회단체 활동가와 노동조합 간부들 간에, 직책과 나이에 따라서, 분파들 간에, 상호간 분할과 배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주로 배제하지요,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사회단체 활동가는 노동조합 활동가 '권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연령이 개입되었을 때는 강압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노동운동에 대하여 잘 모르고 현장 정서를 모르면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계획으로 연대를 강요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선배활동가는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활동가가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잘 모르면서 너무 나대고 건방질 떠내고 고충을 이야기 합니다. 어느 후배 활동가는 선배활동가의 대등한 활동가로 대우하지 않고 각종 실무 등 부당하게 일을 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낫지만 상급조직과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나이, 직책, 성별에 따른 분할과 배제가 적은 편이고 이는 그간 개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하조직, 사업장으로 내려올 때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근자와 아래 직책의 간부를 부하직원 다루 듯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심하지요.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크다가 아니라 운동 내에 분할과 배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식상의 한계, 삶의 경험, 그간의 권위주의적 풍토와 관성에 따른 분할과 배제는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공론화 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인하고 넘어 가거나 감추거나 또는 사안에 따른 쟁점화, 문제를 급격히 포출시키기 보다는 꾸준한 일상의 노력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3. 운동의 본세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가장 큰 분할과 배제 중에 하나가 분파 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 분파들 간에 비이성을 봅니다. 자기들끼리의 공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타 집단에 대해 근거와 내용을 갖는 비판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비이양과 몰이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들끼리의 정서와 감정 공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권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민중경선제를 예를 들면 일부의 불순한 의도는 경계해야 하지만 당과 당원을 넘어서 노동자민중을 움직여보고자 하는 시도가 '왜 말도 안 되는 것' 이고 '논의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으로 치부되어야 하는지요? 그 의미와 긍정성, 문제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질 문제 인데 그들만의 공간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정서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 집단에 게 유리하면 관철시키려 무리하고 내 집단이 주장하면 옳고, 내 집단 사람의 오류는 이해되고 용서되고 옹호합니다. 운동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집단 간에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파가 혁신하거나 그들과 단절을 통하여 제대로 된 정치사상이변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든 혁신하고 지금의 잘못된 운동 방식에서 탈피한다면, 생각의 차이를 넘어 환영할 일이고 함께 연대할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5. 소동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쇠말 - 현안에 비추어 다른 운동을 기획하자

C 어디든 사람은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평가를 만듭니다.

곳곳에 생애, 반전평화, 교육문제, 빈곤, 여성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영역에서 너무 바쁘거나, 다수는 딱연한 마음만 있을 뿐 몸이 움직여 주질 않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의기투합하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누가 동도 안 뜨고, 무엇보다도 서로 흩어져 있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상사에 묻혀 갑니다. 누군가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모임이면 조직이건 집단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여 질 수 있습니다.

C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 자주 위판 바라옵니까? 꼭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결정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상급조직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잘 집행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민주노총과 각급 조직의 상태로는 노동의 의제가 아닌 다른 가치, 의제와 결합하는데 상층단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백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운동은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작업장의 문제와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생태, 인권, 반전평화, 여성주의와 사회공공성 의제와 결합하고 포괄하는 실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또한 활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C 소통과 연대, 변혁운동의 실천 공간으로서 지역운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운동을 실현하는 공간이 지역입니다. 지역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 문화, 교육, 투쟁, 정치의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역을 교육, 의료, 주택, 물가, 교통, 생태 등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쟁취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통제를 관철하고 변혁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근거지로서 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쟁논리에 맞서는 대안운동을 조직하는 공간이자 경쟁이 아닌 공존과 연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서울본부)과 사회운동과의 공동의 실천과 사업이 요구되며, 이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 소통과 협력, 연대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량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방기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역량을 편재²⁰⁾해야 합니다. 지역운동은 지역의 노동자민중과 밀착하는 운동이며 이것이 전제될 때 활성화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만큼의 지루함을 인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실천부대,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 건설이 요구된다. 이 노동자 사회운동체는 현장에 기반 하되 지역에서 사회의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문

문재현 (마을공동체 교육 연구소 소장)

1.

신자유주의화에서 자본의 운동논리는 정부의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미FTA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는 그동안 국민국가 내에서 쫓아왔던 인권과 생태 보존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법령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분리되어 제기되었던 민중의제, 환경의제 등이 중첩적이고 다중적으로 제기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조성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 운동의 대응도 중첩적이며 다중적인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운동의 주체와 대상,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민중운동, 환경운동을 포함한 운동진영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기존의제에서 벗어나 환경의제, 생활의제를 전면적으로 자기화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운동 역시 민중생존권 및 부의 분배문제를 자신의 핵심의제로 삼을 때만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돌파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제를 바탕으로 가족, 지역, 전국, 지구적 의제와 맞닿을 수 있는 실천적인 계기와 공간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급식 문제가 WTO조약, 한미FTA와 연결되고 광우병 최고기 수입반대가 지역 공동체운동, 전 세계적 차원의 식품안전, 한미FTA와 연결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세계화, 지구화와 연결된 구체적 사안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대중적인 언어로 그러한 사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인간관계를 창조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신명나는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2.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과 만날 때 분할과 배제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항상 느끼는 편이다.

약속 하나를 잡더라도 서울 지역 활동가들과 타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는 의식이나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회의를 하더라도 지역 활동가들은 서울에서 약속장소를 잡는 것을 당연히 하는 데 비해 서울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약속 장소를 잡는 것을 불편해 한다. 대전이나 청주 등 중간지점에서 약속을 잡아도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성원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과 관련된 공동실천을 제안하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요즘 00 때문에 바빠서 여력이 없다’ 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좋은 반응이라면 민주노총의 경우, ‘논의는 해 보겠다. 하지만 논의 구조가 복잡해서 논의하다보면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그 쪽에서 하시죠’ 라는 것이고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는 것이다. 이러니 사안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감의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렵다.

항상 중앙으로 표현되는 서울과 지역 사이에는 의사결정 과정도 비대칭적이다. 한미FTA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보더라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부문대책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운동본부는 빠져있다.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은 빠져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전체 운동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이다. 이번 한미FTA 투쟁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번에 걸친 지역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끝내 의사결정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지역 활동가들은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문제제기가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요즘 충북에는 광우병 감시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광우병 운동이 최근에는 동 단위 생활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을단위 광우병 감시단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봉명, 운천동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세 곳의 도소매유통회사 중 두 군데에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 곳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는 중이다. 충북 광우병 감시단은 현재 ‘광우병 안전시대 충북’ 을 내걸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광우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을 상대로는 광우병의 위험성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충북도와 청주시를 상대로는 광우병에 대한 주민 교육,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에 대한 투명성 및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광우병 안전시대 충북’ 을 위한 지역민 선언도 준비 중이다.

현재 충북은 광우병 감시운동의 전국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다. 광우병과 관련된 자료나 지침이 충북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의 광우병 감시단 건설 및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 역시 충북이 주도하고 있다. FTA 반대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외에는 광우병에 대한 대중적 함의를 조직할 의지도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충북이 이처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면서 생활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창발적인 변화의 중심이 풀뿌리 실천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주체들이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필자가 속해 있는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와 전교조, 참여연대, 여성단체(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충북여성민우회), 생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감시단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분회가 마을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조합원 교육, 한 노조 한 마트 감시운동, 전교조 분회의 화구단위 광우병 감시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데도 ‘여력이 없다’, ‘환경단체나 생협, 여성단체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등의 논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사회의 자연적 맥락과 차원을 이론의 실천의 핵심적 측면으로 삼고 있지 못한 노동운동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현장 속에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생활 정치에 대한 관점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4.

서울과 달리 충북지역에서는 다양한 부문 운동 간의 공동실천이 지역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4에서 2005년 충북장애운동의 핵심은 이동권 확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저상버스 도입 문제였다. 2년여의 투쟁 과정을 통해 도지사는 저상 버스를 도입하고, 2013년까지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러한 승리는 장애인 운동만의 노력은 아니었다. 충북장애인권연대 자체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의 장애인운동 단체 못지않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지원이 있었다. 충청북도가 저상버스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때 여성단체는 저상버스가 단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성인지적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은 청주 저상버스 도입을 기념하는 시승식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시승식은 원래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관련 장애인 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들이 시승식의 주인공이 되는 호뭇한 풍경도 연출되었다.

환경운동 역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생태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교통정책이 필수적이므로 환경운동의 차원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해서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연대는 장애인권연대가 구룡산 연결육교 철거반대 운동 등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다양한 부문 운동 간의 연대와 실천이 지역 사회의 비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의 잠재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5.

활동가들이 소통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민중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사소통적인 언어, 의사소통적인 몸의 결여를 실감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공감은커녕 관심을 표하지도 않고 피곤한 얼굴로 ‘여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소통을 위해서는 서사의 공유, 돌봄과 보살핌, 경청하는 태도 등이 필수적이다. 활동가들은 자신이 이러한 기본적인 소통능력을 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믿는다.

소통을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공유 역시 중요하다. 일상생활이 의미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시키는 토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고양된다. 진보적 활동가들이 생활 속에서 소수자,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하고 그것이 대중의 공감 속에서 확산될 때 참다운 소통과 연대의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가사 노동의 분담, 채식 중심의 한 식단의 변화, 가치, 의미, 규범을 공유하는 진보적인 가족생활, 장애인과 아동을 고려하는 안전시설과 생활양식 등을 가족지역 사회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민중의 삶 한 복판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이 토론회는 탁상공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6. 3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략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문

민혜 (전국학생행진 건설준비위원장)

1. 지금 '소통' 과 '연대' 가 서 있는 자리

‘우리 활동가들이라도 잘 챙겨서 해야겠다.’

‘개네한테 제안하면, 같이 하려나?’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 너무 많아져서 괜히 더 번거로워질 것 같아..’

‘앤날 단체이름만 같이 걸어서 입장 내는 게 무슨 연대야..?’

‘매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정작 많이 힘들 때는 각자 다른데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바쁜 투쟁 일정을 따라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공사 분할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해 활동과 삶을 관통하는 소통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세마다 단위별 입장을 내긴 하지만 그것을 구성원들이 ‘자기과제’로 삼아 대중운동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입장표명’으로만 남아있는 모습들. 활동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을 운동과 분리된 방식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풀려하는 모습. 깃발 수에 비해 왜소한 대오, 상층의 의사결정을 지극히 개인화된 활동가들이 ‘받아 안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단위의 다양한 소통과 동기부여가 삭제 될수록 그것은 단위 사이의 소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민중들의 삶은 어떻게 재편되고, 지배계급에 의해 어떻게 포섭-관리되고 있는지,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는 과정이 소통일 것이다. 소통은 서로에게 상호 침투하려는 수많은 계기들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운동진영의 상황은 각자 자기완결적인 구조로 기존에 해오던 활동을 하는 것에 급급해 하거나, 관성화 된 사업과 운영으로 자기 조직 ‘데’를 강화하려는 모습, 정세적 결집을 꾀하지 못한 채 정파별-부문별로 분별정립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정파에 대한 반정립으로 자신을 유지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전체운동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 내부에도 이러한 경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이 학내 자치단위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논쟁하고 합의해오던 공간들이 형식적인 틀거리만 앙상하게 남거나, 정세마다 다양한 입장이 정파별로 ‘표명’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논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우대중들로부터 통계되지 않은 채 정파별 입장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다. 또, 운동 단위들이 한-미 FTA에 같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것이 지배이데올로기(정치와 경제의 분리, 쇠국주의라는 비판, 부문별 문제로 축소)에 맞서기 위해 한-미 FTA 저지 운동의 평가 및 방향 등이 기층단위들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고 한 걸음 나아가기 보다, 터져나오는 이슈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짧게 결집했다 흩어지는 식으로 함께 이름을 걸고, 실무 처리하는 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이러한 식의 활동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같을 뿐 단위 간 상호침투가 불가능할뿐더러, 대중이데올로기를 급진화시켜내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지향하기 보다는 이미 조직된 사람들이 합쳐져 머릿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곤 한다.

민중운동과의 소통을 짚어보면, 학생운동이 전체운동의 관점을 전지한 부문운동으로서 자기과제를 갖는 운동이라기보다 가두투쟁 전술을 구사하는데 동원되는 존재, 심지어는 아직 사회에 나오기 전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이상적인 아이들, 또는 조금은 도식적으로 ‘예비노동자’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학사회는 ‘비판적 지식인’이나 ‘미래의 노동자’라는 선형적인 정체성이 있다기보다 사회의 모든 정치적 갈등과 모순이 투영되는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학생운동은 학생들의 미래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학생사회에 대한 분석 속에서 자신이 형성해 온 특정한 정체성을 해체하고 전체운동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민중운동과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서 발언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운동이 시대를 적확하게 분석할 실력과 긴장감이 있는가, 사회적 관계 속 대학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잘 분석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파열을 내는 투쟁을 기획해내는가, 전체운동에 적극적으로 발언력을 확보하려 하는가 등의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기도 할 것이다.

끝으로, ‘소통의 부재’는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민주화와 개혁을 활용한다. 진보의 언어였던 말들이 어느새 지배자들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더욱더 세련되게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운동진영은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이념적 전망을 상실하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약화되었고, 이러한 이념의 부재를 채운 것은 다양한 우편향과 좌편향, 분파적 대립 등이었다. 자본과 국가의 전략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에 근본적으로 맞서, 지배계급의 분할 관리에 맞설 수 있는 공동의 전략과 이념이 있었는가? 각각의 운동들이 전략과 이념의 부재 속에서 소통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인 것 같다.

2. 운동 안에서 작동하는 분할과 대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운동사회에서도 다름 없이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관계망, 남성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며 여성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인식 하에 성별로 나뉘는 역할(ex, 남성=교육주체/여성=선전주체, 남성=발언하는 대표자/여성=후배들을 챙기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주는 존재) 등이 존재한다. 여성이 피해자화 되지도 않고 명예남성화 되지도 않은 채 ‘그녀 자체로’ 활동공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슬아슬 줄타는 것처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 것 같다. 여성 총리, 여성 CEO, 여성을 위한 일자리 등.. 대선을 앞두고도 여성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지배계급이 말하는 여성 정책은 '여성시대', '기회의 평등' 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을 가족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두고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기만적이다. 운동진영에서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곤 하는데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식으로 여성문제를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조직 내 여성전담부서를 만드는 것 정도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운동 안에서 성별을 매개로 끊임없이 작동되는 분할과 배제를, 그리고 페미니즘이 여성주체 개인에게 전가되고 공동체 내에서 부차화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표면적인 분석이나 주체들의 '의지' 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공부하면 알게 되는 학습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는 동감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취향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은 시대를 보다 적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고 자기모순을 정정할 수 있는 무기이다. 다시 말해 페미니즘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였지만 결혼과 가족으로 흡수되었던 여성노동자들, 남성 생계부양자의 가족임금제도를 수용하여 스스로 여성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평가절하해온 노동운동, 농협 사내 부부 구조조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자본의 입맛에 맞게 활용되어 온 여성, 남성노동자의 부인을 공장 둘러보기-취미교육 등으로 남편 회사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하는 기업, 운동조직 내 성폭력 사건과 남성중심적인 문화들. 대다수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정책과 오히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류여성운동 등.. 이런 무수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안적인 페미니즘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갇은 관리와 차별, 적대에 맞서기 위해 그 대안적인 페미니즘, 특히 역사적 가족형태와 재생산노동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갖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이전에 범민련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서 보인 동성애자 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민주노총의 '나 정규직되면 결혼하자' 는 남성과 그의 팔에 안긴 여성을 그림으로 한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운동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내며 오히려 지배계급의 전략과 공명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집회나 간담회, 문화제 등에 참가하다 보면 특정 성/신체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형제' 등 운동주체를 한정짓는 용어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곤 하는데, 빨리 정정되었으면 좋겠다. 투쟁하는 여성들을 굳이 '어머니' 나 '아가씨' 등 체제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상에 끼워 맞춰 공감할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마다 어떻게 문제제기 할지 고민이다. 지금껏 그러한 언행이 있을 때마다 발언을 통해, 아니면 발언자와 주최측에게 말함으로써 문제제기해왔는데 이것이 의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머리 큰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애네들 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안된다' 식의 효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정인의 '도덕적' 인 문제나 '안하면 된다' 는 침묵-금지주의가 아니라 여성들의 적극적인 권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차이를 파고 들어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구조를 운동사회에

서도 예리하게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말하려 한다. 페미니즘이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공동 전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의 분할-배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배계급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싹뻗던 기간의 반석폭력 운동을 평가하고, (가해자)개인에 대한 처벌주의의 한계, 성적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에서 입지가 작아지는 모습, (권리를 말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수동적인 이미지에 갇히는) 피해자측의 함정 등을 짚어보며 페미니즘의 공동체 내 새로운 관계맺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운동의 본체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학내에 진보인사를 초청하는 강연회가 많이 열렸다. 물론 강연회 자체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최된 강연회의 수나 참석한 학생들의 수에 비해 탁상 학생사회의 대중운동은 해가 갈수록 외소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과 삶이 운동이 된다고, 이제는 진보가 개인이 한때 관심가질 수 있는 '취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활동가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 점점을 형성하고 논쟁하기보다는 하나의 입장을 가진 '점'으로 남아 대중들과 피리되거나, 다원주의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받거나, 정치적 입장과 일상을 분리한 채 대중 속에 묻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운동과 관계, 운동과 삶이 만나지 못한다면,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느껴지기도 쉬운 것 같다. 한미FTA가 어떻든, 아프간이 어떻든, 이랜드가 어떻든, 그저 상관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스타벅스 커피와 던킨도너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며 운동주체들이 느낄 법한 허탈감. 우리에게 투쟁의 현장과 일상, 운동과 나의 삶을 연결해주고 통일시켜주는 것들, 동시에 그러한 활동양식을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운동이라 말해지는 모든 것들이 활동가의 '덕목'이나 '우리끼리의 문화'로 남아있는 것을 넘어 대중들에 의해 공감받고 그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방에서 학우들이 생활을 나누고,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잠기장, 난상토론, 대자보 등을 통해 토론했던 경험, 학회나 소모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학습-토론하고, 민중가요와 몸짓 등 문예를 생산-공유하며, 민중들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동일시하며 함께 저항하게 했던 역사는 특정 정세에 저항할 수 있었던 이념과 당시 대중들의 삶에 광범위한 점점을 형성했던 활동양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페미니즘 또한 지금은 집회, 세미나, 자료집 등에서 간간히 이야기되고 있지만 연애와 놀이문화, 가족 등 활동가들의 생활과 문화는 그와 일정부분 분리된 채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페미니즘이 활동가 개인의 도덕성이나 당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의 관계를 변화시켜내는 것, 즉 정치이념과 생활, 문화에 걸친 모든 것을 관통하고 대중적인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운동진영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소통'이 단지 절차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차이를 파고들어 민중들을 분할관리하고, 각 운동을 '특정 당사자의 이해에 기반한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지배계급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텐데, 다양한 운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자기운동 스스로의 혁신과 마주칠 수 있을 기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고 본다. 가령,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횡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운동과 기존의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에 적합한 내용과 형태로 스스로 혁신되어야 하고, 혁신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노동자운동이 여성운동과 만나기 위해, 여성운동이 장애인운동과 만나기 위해, 빈곤운동이 다양한 운동들과 만나기 위해, 학생운동이 다양한 주체의 운동들과 만나기 위해서도 수많은 혁신의 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성적·지적·인종적·신체적 차이 등을 파고들어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비해, 그간 대부분의 운동은 이러한 지배계급의 전략과 제도에 주목하고 그에 맞선 공세적인 운동을 조직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계급적대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공백은 결코 '하나' 라고 선명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분할되어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노동자의 권리를 특수한 집단의 것으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자본과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계급 적대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특수하다는 시각이 아니라, 계급적대 외에도 다른 보편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뒤엎혀 작동하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이념의 운동으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페미니즘, 문화, 평화주의, 생태주의 등 다른 이념들과의 소통과 상호개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운동의 입장에서 다른 운동과 만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이다. 학생운동은 그 명칭처럼,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주체를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담아야 하는 가치는 시대의 모순이 무엇이고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7~80년대에는 '민주주의' 라는 가치 속에서 다른 운동과 만났고, 그 만남의 과정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라는 가치 속에서 민주학생회를 건설했고, 사회변혁을 위해 노동자 운동과 긴밀히 결합하고 수많은 선배들이 현장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많은 운동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를 위해 모여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학생사회에서 노동자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 파업대오가 캠퍼스에 들어올 때 '학생의 수업권이나 vs. 노동자의 파업권이나'라는 부당한 쟁점이 곧잘 생기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

'신자유주의 반대' 의 실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만들어나가고, 대학생들이 자기 동일성을 넘어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나가는 것에서부터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계기들은 충분히 있다. FTA, 비정규직, 전쟁, 핵확산,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 대학 구조조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계기들을 잘 살려나가고, 그 계기에서 연대를 도울 수 있는 비판

적 지식과 문화를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5. 소동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쇠말

지역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강화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전체운동과 소통하며 대안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지배계급과 운동진영 모두 ‘지역’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다. 지배계급은 도시개발, 올림픽 유치 등 지역발전 이데올로기와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역에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아래로부터(기층, 현장, 지역) 전체운동을 혁신할 수 있고, 노동조합-당-사회단체-캠퍼스가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변혁의 기운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운동 차원에서는 기존의 일단위 일연대 식으로 지역의 사업장 투쟁에 함께 하거나, 같은 지구의 캠퍼스 학생들이 거점에 모여 선전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토론과 공동기획을 강화하고 지역별 쟁점을 확장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대중운동의 활성화와는 일정 괴리되어 있는 상층 중심의 통제합 논의만 강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기층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운동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지역을 기본적인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각 운동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에 우위를 두며 다른 운동들과 마주치고 토론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로 지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운동포럼과 같은 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상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뿌리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반기 각 지역지구별로 이러한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6. 현안에 비춰 다른 운동을 기획하자

6월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불어져 나왔다.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그 때 터져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금 운동진영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FTA를 저지하자는 운동의 목소리들은 “채국하자는 말인가. 왜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가. 완성차부문은 오히려 이익이다.” 등의 공격을 넘어서진 못했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지향과 운동전략이 혁신되어야,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배세력의 공격을 넘어서실 수 있을 것이다. 9월 달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길게 보고 대안을 모색해나가고 대중운동으로 실험해나가자.

이랜드 투쟁도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과제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자본 vs. 노동자의 대결구도를 더욱 확산시켜서 정치적-전국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불안정하게 터져 나오는 경제위기와 꾸준한 사회재편의 충격을 여성들에게 일차적으로 책임 지우려하는 자본과 국가의 기반적인 전략이 부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 역시 민중들을 분할 관리하는 지배세력의 전략을 넘어서실 우리 운동의 혁신과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FTA, 이랜드 같은 현안 문제들을 관통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우리의 대안 모색이 하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다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배세력의 대안은 지금껏 그러했듯이 금융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각종 금융상품에 ‘돈 불리기’ 희망을 걸고 주식시장에 흡수되고, 그럴수록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명 아래 구조조정, 효율적 노동통제, 만성적 실업이 만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운지 못 할 아이러니이다. 현안 투쟁과 동시에 금융화를 넘어설 운동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조직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가 지역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전략토론의 활성화 속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학생운동을 하는 일주체로서 함께 해나갈 것이다.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편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지역운동을 통해본 소통과 연대, 그리고 희망

지역에서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세월의 숫자를 세어보니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무실에 앉아있었던 시간, 회의하고 아는 얼굴들하고 술 먹었던 시간, 컴퓨터에 붙어 앉아서 글 썼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수원역에서의 무수했던 선전전, 집회, 촛불문화제, 무슨 무슨 행사들... 그 사이에 잡혀간 사람들, 다시 나오고 달리 잡혀가고, 운동을 떠난 동지들, 해고되었다고 찾아온 노동자, 투쟁 승리했다고 악수했던 사람들, 피앗기고 넘어지면서 오열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동안, 세상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속절없는 계산을 잠시 해봅니다.

지역에서 인권단체는 소위 말하는 민중진영과 시민진영에 모두 포함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시민단체 월례회의에도 나가고 경기지역민중단체 회의에도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쪽저쪽의 사안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그 속에서 인권의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갑니다. 아무래도 시나 도등 지방정부쪽과 협력관계가 깊은 시민단체에게는 운동적 긴장을 풀어 놓고, 즐기차게 투쟁만을 조직해 나가는 이들에게는 중간층과의 연대사업을 제안하고 여론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획과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해 오면서, 지역운동에서의 소통과 연대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치가 많은 만큼 절망으로 불릴만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희망을 만들고 싶은 안달도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1. 연대는 품을 파는 것

연대는 어느덧 품을 파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앗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행위입니다

다. 노동운동, 빈민운동 하는 분들이 ‘어디로 연대’ 간다는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딱 붙은 ‘연대간다’ 는 의미는 즉, 오늘 누구 집회에 연대 투쟁 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품을 그만치 팔아야, 우리 집중투쟁 필요할 때 그만큼 사람이 오는 거라는 계산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품앗이는 원래 인지상정이지는 않지만, 웬지 연대의 개념이 행편없이 질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는 석연치 않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말만 안했다 뿐이지, 모든 단체들에는 그러한 연대의 품팔이가 있습니다. 우리 토론회 때 나와서 안 알아있었지? 그럼 나도 너네 행사 안가도 별로 미안하지 않아. 라는 식의...지역운동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지 않은 동네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싶다가도... 멋진 기획의 운동으로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연대를 하면 좋겠다고 늘 내심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 머릿수 채우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 바른 사람들은 안 와도 좋아. 라는 뻔심도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와 반대되는 지점에 교착한 연대의 품팔이 욕구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시민단체쪽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소위 말하는 민중운동쪽은 특하면 연대와 공동투쟁을 말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쪽 사안에는 늘 당연히 연대해야한다는 당위만 앞세고, 저쪽 선수들이 하는 잔치나 행사에는 심지어 기자회견 조차 코피기도 비추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보적 기획이 없다는 이유도 아니고 늘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공동투쟁 같은 경우는 함께 힘을 실어주어도 좋으련만 다들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FTA, 뉴코아-이랜드 투쟁하는 데 안나오는 것들이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온도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온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운동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지점에서 연대는 짝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연대나? 단체나 영역을 떠나서 사회운동에 복무하고자하는 활동가들간의 일상적 소통, 이것을 누군가는 횡단대화라고도 했고 공장문과 학교담을 넘는 교류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사회내에서 전략적, 전술적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적 소통, 교류 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영역이 담을 넘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범위에서라도 운동과 삶을 함께 고민하는 활동가들 간의 블록이 자꾸 자꾸 생겼으면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큰 싸움도 준비되리라 생각합니다.

2. 우리안의 차별과 폐제, 꼭 성찰할 문제

여성단체들과 여성대회를 준비할 때입니다. 여성비정규직문제, 빈곤, 정치할당제 등 다양한 이슈와 구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장애,이주,성소수자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소수자 이슈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성노동단체에서 꼭 짚어 성소수자 여성문제까지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논쟁을 했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성대회라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 는 배수진을 치고서야 결국은 이슈로 짐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혐오발언을 감당해야했습니다. “내가 만일 성소수자면 어쩔꺼냐” 고 감정적 발언을 하고 말았는데,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들과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내에서 논의했고, 결국 몰라서 하는 소리니 교육기회를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고 함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속교육은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쪽도 이쪽도 너무 바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분명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잘못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단체가 대표와 사무국장체제를 수평적 활동가체제로 바꾼 후, 지역사회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대표가 나와야 할 자리에 누가 나올까, 당신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너희들은 활동가 역량이 그만큼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힘들다(우리쪽에서 말들이 자주 나온다는)...그러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모든 단체의 활동가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현재는 한두 군데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사무국장만 두고 나머지는 활동가 체제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사회의 위계는 우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선배가 후배 부러먹기, 남성활동가는 일상에서 손을 떼고 여전히 여성활동가가 차를 내오는, 조직적 결정, 특히 형식과 절차에만 매여서 실제적 내용을 논의할 시간조차 빼앗기...남의 방식에 콩내고 팔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들과의 연대 운동은 가끔 번민에 빠지게 합니다. 뒷풀이 같은 술자리에서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는 여성외에는 활동하는 진보적 남성의 의식수준은 정말 여성외에서만큼은 하나도 진보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속성은 결국 모든 수준에서 같다는 생각. 관용조차 가르치지 않은 대한민국의 학교와 아직도 이를 버리지 못한 운동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도발적으로 그게 운동이면, 운동을 하지 말라고 발언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단체 간 영역을 넘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과제입니다. 몇 년 전에 술자리 논쟁으로 결국 반성폭력 활동가 강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안의 차별과 배제라는 중요한 의제가 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 이것도 운동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3. 운동의 본세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운동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특히 조직운동만을 해온 사람일수록,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표 누가 와야 하는데, 그 분이 못나오면 어쩌고 저쩌고...아무리 생각해도 말 장난 밖에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회의 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을 보면, 저 인간이 차라리 공무원이 되지 왜 저 자리에 있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논쟁이 길어지는 것은 반대정파가 앉아있어서 말따먹기에 말을 보낼 때입니다. 서로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 핏대를 올리며 오기를 부리는 40대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에서는 찡욕이 나옵니다. 사실, 어디선가 한말이지만 “박봉의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있는 건 저 인간이 무능력해서 일꺼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조직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가관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몇 년 전 큰 행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행사일정을 조정하자고 하는 통에 행사 날짜는 뒤로 미뤄지고 참여연대는 커녕 민주노총까지 따지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나 그때 모인 작은 단체들과 사업하기 싫다는 의도였죠) 그때 그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랑 우리 같은 조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 몇 년 동안 민주노총 총연맹이나 또는 지역본부, 금속노조 등에서 이와 유사한 대사를 여럿 들었습니다. 억울하면 큰 조직 되던지...라는 식인데, 그때까지 큰 조직 만들기 싫었던 제 생각이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 누가 이기나...까불고 있어...라는 생각.

그래도 성격 좋은 우리들은 여전히 지역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연대조직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 좋은 운동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가르쳐야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백번의 말과 논쟁으로 이뤄질 것이 아닙니다. 실천 투쟁과 운동적 기획에서 새로운 운동을 보여주어야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그렇게 믿고 오늘도 열심히 내부의 적들과 싸우면서도 함께 연대합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상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말을 자주 쓰는 이들일수록 더 소외와 배제에 익숙한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는 논쟁의 시기에는 딱세게 논쟁하되, 그 외에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독야청청.

운동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권력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운동가들은 적어도 자기 안의 권력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체하는 방식의 운동을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또다른 억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과정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상, 선배가 되고 나서 더 커진 고민입니다. 어쨌든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지면 결국 권력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단체의 몫으로 남기거나 후배들에게 올 경험을 뺏지 않는 것으로 갈 건가. 또는 서로간의 운동에 대한 고민의 차이가 분명 존재할텐데, 내가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질러버리면 안될텐데...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내 스스로 억압의 주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운동은 통합을 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한다지만, 인권의제가 아닌 것도 없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인권의 독자적 의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경찰폭력이 발생하면 우리단체를 찾지만 우리단체만의 전문역량으로 풀고 나가기에 이미 경찰폭력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운동주체가 모두 인권활동가가 되고 경찰폭력감시단이 되어야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로 인해, 개방으로 인해, 반평화로 인해 침해받는 인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역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개방, 반평화, 군사주의에 의한 사회문제의 한 주축에서 인권이 구체적 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전체 의제를 두통하게 재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결국 통합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의제가 지역사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비정규직 아니냐는 동의를 얻어야하고, 뉴요아 투쟁에 타격도 필요하지만 전시민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운동의 횡단대화를 만드는 것, 운동가들의 통합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참 신명나겠다... 싶습니다.

5.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쇠말

대화입니다. 어느 순간 노동조합간부든, 사회단체 활동가든, 시민단체 활동가든... 자기 영역 안에서 또아리 들고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끊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안에만 만나는 이합집산은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면 할수록 힘을 잃고, 맨날 지기만 하고,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롭다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이럴 때 우리는 대화의 노력에 몰두해야합니다. 새로운 대중과의 대화, 영역을 넘는 활동가들과의 대화, 자기 단체나 조직, 개인에게 닦친 권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중들의 힘을 믿으면서 두리번 거리는 대화의 시작. 대화의 첫 출발은 운동의 고민이 깊어진 이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결국 모두 외롭게 떠 있는 섬이 된지 오래인데, 이것을 모아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실험과 방식을 교류해보자는... 총체적인 고민들을 나누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장 (공장, 학교, 마을, 소모임)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결을 같이 해야 합니다. 대화하고 대화를 다시 거듭하는 것. 현재는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활동가 운동으로 간혀 있던 우리단체의 운동을 바꿔나가려는 시작단계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현장에서 이뤄진 대화를 바탕으로 실천경험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편

이봉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사회운동포럼 여성운동 전략 기획단)

1. 지금 ‘소통’ 과 ‘연대’ 가 서있는 자리

-운동 안에서 소통과 연대가 가로막혀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단체 각각이 워낙 많은 사안에 대응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연대를 제한함에 있어서 성실한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문 한 장, 전화 한 통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연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논의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 연대하기 곤란하다는 대답을 한 단체에 대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소통하지 않을 때가 많구요.

또, 연대의 범위를 기준 없이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전선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도 연대의 깊이를 더하기보다는 다다익선이라는 관점에서 연대를 사고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속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부(많은 경우, 사회운동이 싸워야 하는 대상인)가 이슈나 의제를 다루는 방식과도 연동이 될 텐데요, 예전 같으면 최소 한두 달은 같비중 있는 이슈가 금세 새로운 이슈에 묻히는(혹은 그러한 비중 있는 이슈를 새로운 이슈로 떨어버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다 보니, 사회운동이 이슈를 다루는 방식도 얇고 넓게, 또 점점 빠르게 다른 사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은 사안대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가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연대도 점차 약화되거나 서로 간에 이름 빌려주고 집회 참석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방기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소통의 중요성:

단체 간 소통, 활동가 사이의 소통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당장에 소통의 부족이나 부재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활동에 매진하느라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소통 장애로 인한 불협화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보는 식(짜우거나, 뒷담화를 치거나, 나이로 누르거나, 그래서 화해하거나 등등)으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 연대의 가치:

비록 현재 서로의 성명서에 연명하는 정도로, 서로의 집회에 참여하는 정도로, 연대를 실현하고 있지만,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연대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침투하며 끊임없이 공동의 지향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방향:

운동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실히 노력하되, 꼭 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충분한 소통을 전제하여 연대를 해야 할 것이며, 하나의 집회, 하나의 기자회견이 다가 아니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개인 생이나 단체의 주기에 끼워 맞추려는 착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구요.

내가, 또는 내가 속한 단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의 노동조합의 파업과 이랜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보정당의 지역조직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결론은 지역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탄압을 때론 시일 내에 끝내도록 연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운동 안에서 작동하는 분할과 배제

- 문제가 포착되는 지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

조직 구성원 모두가 여성주의를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전히 반성폭력 문제, 할당제, 생활양식의 문제로 협소화하고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집단 내에 성소수자가 당연히 있다는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연령주의의 문제도 무척 심각합니다. 다른 차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활동가들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도 어린 것이....”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운동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점도 연령주의와 관련이 있겠지요. 학생운동가들에게 주로 맡겨지는 역할이 있지요, 울동이라든가, 도시락을 나르는 일 등.

그리고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KTX 투쟁을 대하는 여러 운동단체, 활동가들의 태도에서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차별 철폐’ 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도 보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의견을 달리 하면서도 토론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말입니다. 가해자,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자세가 운동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단체별로 자기 조직이 가진 차별주의를 소통을 통해 드러내고 없애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점검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예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듯.

3. 운동의 본세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 운동방식에서 속아내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종파주의, 패권주의의 사례야 한두 가지겠습니까?

운동과 삶의 괴리는 저 스스로가 무척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취함을 추구하다보면 욕망을 조절하기 힘든 때가 종종 있어서 이런 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갑니다.

한편으로, 입성이 너무 지저분한 활동가들을 보면 '저런 비호감 스타일로 사람들 만나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시다.

그리고 적은 활동비를 핑계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활동가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사무처장이 법인카드를 술 마시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활동비를 받아쓰는 활동가들이 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활동가들은 활동을 즐기더라도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단체의 운동방식을 재설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동도 경쟁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의 주장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운동에 팽배해 있는데, 이러한 경쟁주의가 연대를 파괴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으로 과연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운동의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다원주의와는 어떻게 다르지? -_-;;)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정당에서 지역정치와 여성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활동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을 몇 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그 단체의 성원들은 분리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고 그들이 주장했던 바와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고, 그들과의 작은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정당 여성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단도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벽에 부딪치는 순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향하는 바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각자 갈 길을 가야하나 않나요?^^ 예를 들어, 어떤 페미니스트가 여성노동권에 대해서 저와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고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에 극렬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여성후보라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직후보 정책보좌관으로 일한다면 또 그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혹은 그 단체)의 견해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고 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횡단을 통한 연대의 경험이라면, 제가 사는 동네의 주민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형성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관악구에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주민운동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 내의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정보력, 주민조직화 정도에서 주민단체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연대활동의 중심 또한 주민단체들에게 가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그런 연대활동의 성과를 민주노동당으로 귀결시키려고 하다보니, 주민단체들이 불신을 사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역에 새로 나타난 정치세력이 얼마나 열심히 오래하나 지켜보는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만들어놓은 상설 협의체(관악주민자치연설회의)에 들어가려 노력하기도 하고, 그 내부에서 정당 배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를 몇 차례 반복한 후, 민주노동당은 그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안별 연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매 사안마다 따로 연대 제안을 하고 연대들을 유지해야 하는 고달픔이 있지만, 이렇게 연대 방침을 바꾼 후 오히려 정치적 결합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정당으로 귀결시키려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함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연대 관계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시민단체가 민주노동당의 위상조직적 성격이 다소 강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1995년 이후 관악구의 주민연대 모델이 타 지역으로 뻗어나갔고, 이러한 지역주민단체 건설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주도하다보니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노동당과 지역주민단체의 구성원들이 겹치고 단체는 형해화되어 연대 또한 서로 이름 걸어주기에 머물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5. 소동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석말

이번 사회운동포럼도 그렇고, 대안세계화학생포럼 자료집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지역’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사회운동에서 가장 늦게 지역으로 눈을 돌린 좌파 동지들을 환영하는 동시에, 시류(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국사회 지역운동에 진지한 평가와 계획과 실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운동 주체들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지역본부/지구협 조직,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 주민운동단체, 청년회, 여성회, 환경운동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역비정규노동센터가 실험 중이구요.(이에 대한 개인적인 약평은 토론에서)

주민운동단체와 여성회의 활동에서 성별분업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비정규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청소년), 문화, 환경을 열석말로 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을 진보적인 살터로 바꾸고 민중권력 쟁취를 위해 해야할 일이 무척 많고, 아직 공백상태인 영역도 많기 때문에 좌파 운동세력이 지역으로 와서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운동사회에서도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6. 현안에 비춰 다른 운동을 기획하자

(1) 8월 24일에 있었던 기륭전자 분회와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여

성비정규 4사 공동투쟁' 은 참으로 감동적인 연대의 경험이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의 연대를 구축하여 서로 배우고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사회운동포럼의 여성사업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연대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사업전략기획단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운동과 여성주의' 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할 계획이며 내년 3월 8일 100주년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2)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건을 접하고 철군과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랍된 사람들의 숫자도 많거니와 2004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파병을 반대했던 나라가 세계 으뜸의 파병국이 되었는데도 이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적어서 절망스러웠고, 평화운동세력의 결집도 너무 떨어져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비중있는 사안들이 중첩되었던 시기라는 점을 차치했을 때, 파병반대국민행동 내의 이견, 연대운동을 독점하려는 태도와 그에 대한 염증이 집회참여율 저조의 직접적 원인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운동세력이 무척 허약한 평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잡한 사안에서 무척 편이적으로 입장을 바꾸거나 반평화적 행태를 보이는 운동세력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평화인권에 대한 교육은 보다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운동의 지역화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집회 외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다른 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상입니다.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문

이원제 (문화연대)

1. 지금 '소통' 과 '연대' 가 서 있는 자리

모두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언제나 소통과 연대는 “일 중심”, “의제 중심”의 운동사회에서 주변화되거나 부차적인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통과 연대에 대한 인식부터 새로운 접근, 아니 좀 더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운동에 있어 소통과 연대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목적 자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생활양식 자체를 비판하고 비자본주의, 반자본주의의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에 있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연대는 그 목적이자 과정 자체라는 평범한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소통과 연대의 범주가 조직, 의제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개인, 조직(정파), 이념 등 다양한 층위와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직(정파)간의 소통과 연대만을 강조하다보니 어느새 소통과 연대가 일 중심의 결합, 효율성과 성과주의적 평가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다보니 조직(정파)이기주의, 운동의제간 배타성 등의 관성을 낳았고, 이러한 관성들이 다시 소통과 연대를 전고하게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 관심이 애정과 열정을 동반하는 것, 그래서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이러한 과정이 호혜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소통을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한 삶의 과정들이 꺾어져 축적되어 호혜적인 연대를 다양하게 확장해가는 것... 이러한 삶을 둘러싼 자기 실천이야말로 조직과 의제를 넘어 소통과 연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봅니다.

2. 운동 안에서 작동하는 분할과 배제

소통과 연대를 둘러싼 다양한, 잘못된 관성들이 운동 안에서 분할과 배제를 낳는 것(생산, 재생산) 같습니다.

먼저 소통과 연대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중심”으로 진행된다보니 당연하게도 소통과 연

대를 “양적 팽창” (연대 주체의 숫자 늘리기 등), “힘의 논리” (성과주의) 등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관성이 폭 넓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성은 언제나 연대활동, 특히 대규모 연대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비민주주의적인 연대체의 관성으로 연결됩니다. 운동사회내에서조차 반복되는 힘의 논리, 효율성 논리, 생산력주의 등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이는 당연히 많은 운동주체들의 소통과 연대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소통과 연대와는 정반대의 성과주의나 경쟁주의도 아무렇지 않게 운동사회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대활동에서 대중조직 중심의 일방적인 운영 구조, 주요 전문가 조직 중심의 폐권주의 등 비민주주의적인 연대체 운영이 반복적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그 성찰적 대안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주의와 경쟁주의가 우리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비판받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실천하지 않는 대중조직들, 대중조직을 비판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결국 또 다시 성과주의에 기대는 관성들이 이러한 일방적 소통과 단절을 재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운동사회내 소통과 연대가 “상충연대”로 후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운동사회내에서조차 쉽지 않으니깐요. 정작 자신의 일로 다가오고, 급해지면(아니 급하다는 이유로) 과정의 민주주의, 수평적 소통은 생략된 채 상충연대라는 권력지향적이고 효율성 중심의 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운동사회의 오래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충연대의 잘못된 관행은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는 학벌주의, 인맥주의, 경험주의, 나이주의 등의 보편적 문제점을 다시 끌어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맺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가들, 조직 안팎, 운동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민폐가 되구요.

잘못된, 왜곡된, 무원칙적인 소통과 연대가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결국 운동사회, 조직, 개인간 관계성 자체를 비민주주의적인 분할과 배제로 변형시키는 것 같습니다.

3. 운동의 본체와 방식 앞에서 무릎 꿇이게 되는 지점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 조직중심의 배타적인 구조, 태도가 먼저 생각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구 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운동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이런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별 생각없이 지나다보면 조직의 이해가 어느새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운동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조직의 이해를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운동사회내의 조직이기주의는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소통과 연대에 있어서는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조직과 조직간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고스란히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조직의 일방적인 요구나 이해가 우선시되는 구조적인 폭력이 활동가들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완전히 상실된 “조직형 인간”으로 활동가가 변형될

테니까요. 운동이라는... 변혁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데 전혀 창조적이지 못 한 주체...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 내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운동을 하고, 조직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거 있자나요... 어떤 활동가가 한 숨 쉬면서, 혹은 시니컬하게 “뭘, 운동조직이나 회사나 결국 마찬가지지...” 이런 말 할 때, 같은 조직이나 단체 활동가가 아니어도 정말 “무릎 꿇이게” 되지요.

4. 가치, 운동들 사이의 횡단

어느새 운동사회내의 기능주의적인 분업(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임금노동 체계와 꼭 닮아있는)이 일반화되고, 특히 의제중심적인(부문 운동적 사고)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다양한 가치와 운동들간의 넘나들기, 가로지르기 등은 구조적으로 더욱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뭘... 과도하게 구조적이거나 통합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그런 강박관념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분절적으로 운동을 모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행처럼 운동의 미분화가 진행되다보니 횡단성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통합적인 사유나 실천을 저평가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의제간의 횡단만이 아니라 주체 스스로가 횡단적이고 통합적(상호보완적)인 사유와 실천을 고민하는 것, 일상의 자기 실천 자체가 그러한 통합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사실 일이나 의제로서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의제간의 기획으로서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내면화된 연대, 자기실천으로서의 통합성 등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축적되면 운동의제, 조직간의 연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좀 더 깊이있고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두 가지의 경로가 현실에서는 서로 되먹임(피드백)되면서 동시에 진행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태주의, 평화주의, 여성주의, 인권 감수성, 문화 다양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전혀 접촉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소통과 연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자나요...

스스로 횡단하지 않고 대상화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한 횡단이라는 행위,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엿보기나 관찰에 머물게 될 뿐이지요. 소통과 연대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횡단이 기획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봅니다.

5.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열쇠말

- 음... 문화연대에서 활동을 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구요... 많은 운동권들이 소통과 연대의 어려움을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견해 차이?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일상적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문화환경말이죠. 몸예, 뼈 속 깊이 내면화된... 조직문화의 경우도 그렇고, 나이주의나 화력주의 등도 사실 문화적 관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성중심주의를 비롯한 성적 코드는 더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소통과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읽어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열쇠말이라구 봅니다.

- 소통과 연대의 다차원성? 아니면 다층성? 다시 말해서 연대의 대상, 성격, 범주, 경로, 방식, 불확실성 등 연대를 둘러싼 다양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외로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소통과 연대가 매우 단순한 구조로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획적화된 소통과 연대를 실험하는 태도가 말로 열쇠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 현안에 비춰 다른 운동을 기획하자

- 신자유주의 세계화처럼 보편적이고 중요성이 높은(적확하게는 중요성에 대한 공유도가 높은) 의제의 경우, 기존 연대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연대체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수준을 벗어나 비슷한 고민과 조건의 조직간, 개인간 밀도있는 공동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구요, 그러한 과정에서 실험적이고 새로운 연대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고유한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해당 의제 관련 재정, 공간,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활동의 비전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연대체 참여가 아니라 일상적인 공동활동의 연대방식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직 간의 관계를 뛰어 넘는 소통과 연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일상 속의 연대질서가 기획되기를... 의제와 조직만이 아니라 세대, 취향, 비전, 실질적 필요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활동가간의 연대문화가 꽃 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단체 대표나 사무처장 비판을 위한 젊은 활동가 연대”, “운동의 미래가 불확실한 운동가 동맹”, “주위에 단체 사람들밖에 친구가 없어요

- 친구없는 활동가 네트워크 “ ...

사회운동 대토론 2부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편

이재관 (민주노동자연대)

소통을 넘어선 집중, 연대와 변혁의 출발점 지역

소통 없는 연대

오늘날 사회운동에 있어서 ‘연대’는 누구도 부인 못할 사회운동의 최저선의 가치와 외면할 수 없는 실천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 여부와 무관하게 당위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에 대한 강조가 우러나와서 하는 연대, 스스로의 가치 부여와 표방하는 바에 대한 동의로부터 비롯된 연대가 아니라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대를 하면 할수록 나의 가치가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자꾸 당위에 끌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통 없는 연대’, ‘당위로 강요되는 연대’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운동 내부에서 ‘연대단위’란 말도 유행합니다. 아마 옛말로는 ‘가두분자’, ‘데모꾼’ 이런 용어의 최근 사회운동 버전인 듯합니다. 대체로 운동 내부의 특정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연대만 하는 단체들을 부르는 용어인 듯합니다. 이 용어 속에서 ‘소통 없는 연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KTX, 이랜드사태 모두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투쟁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싸움의 사회적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소통 혹은 논쟁과 그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저 기능적 연대만을 요구받습니다. 물론 이 투쟁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연대의 과정에서 소통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들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운동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모두가 연대를 얘기하지만 연대는 점점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그래서 굽기야 공동으로 맞서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실천의 기초, 생활의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져 있는 ‘우리’ 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의 소통 없는 연대의 결과, 대중에게 연대의 힘을 확신시켜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대는 운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뵈하게 보면서 기자회견에 이름 걸어주는 것과 같은 식의 기능적 연대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는 점점 더 연대의 가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이론주의 그리고 정파

연대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누구나 연대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점점 더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것은 ‘소통 없는 연대’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물론 계급, 인종, 성 등 사회 구조적 분할선이 강화되고 이것이 운동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할선의 강요가 곧장 소통의 약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운동에 있어서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이론주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운동은 서로 입각하는 이론의 차이로 인해 실천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각자 믿는 이론을 중심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작업에 몰두하면서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에서는 놀라우리만큼 높은 지식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개인 혹은 단체의 전문성이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운동 전체적으로 이것을 소통시키고 축적하는 기운은 매우 취약해 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위 대중운동하는 사람들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시선은 뼈대합니다. ‘아는 것은 많고, 말은 많으나 연대할 때 보면 데리고 오는 쪽수는 없더라’ 이런 비판이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사회운동 단체 내부에서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론적으로 전문화가 부족한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느낍니다. 많이 알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화 된 것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서는 실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회의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실제로 대중운동 하는 사람들이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뼈대한 시선의 출발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이론주의가 대중운동 내에서 구조화된 것이 소위 ‘정파’입니다. 그 동안 정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비판이 되어 왔으므로 여기서 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판을 해도 이러한 정파구조가 극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현실운동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입각하여 운동을 가르며 소통을 가로막는 이론주의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을 몇 년째 가르고 있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은 이러한 문제점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노동운동 내 사회적 교섭에 관한 논쟁은 민주노총 내 모든 의사결정 및 실천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이 쟁점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는 두 차례 무산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교섭이 제기된 것은 단순한 환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교섭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조운동은 전노협의 치열

한 투쟁을 통해 90년대 중반 경에는 대공장, 정규직을 중심으로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시민권이 대체로 확보됩니다. 그 연장에서 민주노총은 그것이 개량주의든 실리주의든 지향하는 바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게 사회적 시민권 획득을 위한 각종 사회적 발언과 개입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IMF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총은 국가와 총자본에 의해 제한적이거나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인정되었고, 특히 법, 제도 등의 노동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질서 변화를 추구하던 정부에 대한 투쟁과 대응의 필요성이 운동 내부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IMF이후 민주노총의 매우 수세적이고 현실방어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의 진로와 관련된 진지한 전략적 고민이 요구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운동 외부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에 대해 전체 노동운동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 교섭에 대한 태도를 갖고 운동을 양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디 이론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실천의 차이를 보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서로 다른 실천적 경향을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해명하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통일성을 높여 내거나 혹은 차이가 너무도 근본적인 것임을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실천적으로 갈라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 경험의 공유와 상호 소통을 통해 다시 이론이 풍부한 자기 논거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은 이론적 차이가 곧바로 실천적 대립으로 나타남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론바 노동관련연구소들이 주도한 노동운동의 정파구도와 이론주의는 소통을 가로막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포기의 결과가 가능성적 연대입니다. 성명서에 이름 올려주고, 족수대주는 것을 연대라고 생각하는 경향, 연대를 통한 상호침투가 부재한 연대의 결과,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이 운동 내부에서도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렇수록 한편으로 이론에 대한 집착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에 대한 냉소가 심화됩니다. 이는 노동운동에만 적용되는 비판이 아닙니다. 사회운동 역시 이론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자기 분야, 의제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운동에서 더욱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능적 연대에 훨씬 더 익숙한 게 사회운동단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체로 노동자들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언어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편입니다. 실제로 현장활동가로서 사회운동단체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여러 의제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선불리 비판하려 들기 보다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어쩌다 현장으로부터 작은 실천을 모색하려 하다보면 오히려 사회운동단체들로부터 '이론적 근거'가 없는 실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수록 현장의 활동가들은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 벽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단체들이 보다 이론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대중실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단절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전문성의 집착의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는 게 이론에 대한 냉소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A4용지 1장 분량으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도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 쟁점을 이해 못하면 운동에 끼워주지도 않는 분위기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는 운동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론주의에 대한 전형적 냉소라고 봅니다. 즉 이론 논쟁이 실천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기된 의제와 쟁점을 깊숙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보다는 논점만 파악해서 논쟁 때 밀리지 않기 위한 기초 지식 습득 정도로 이론을 생각하는 냉소가 깊숙이 자리 잡힌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론에 대한 이러한 냉소와 진지한 노력의 피하는 운동의 위기와 관련 누군가가 씩박한 운동의 대안을 총체적으로 그려주기를 기대하는 심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에선 위기를 전망 및 이론의 위기로 규정하며 더욱 더 이론주의에 함몰되고, 그 반대로는 운동 전망에 관한 이론화는 현장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하며 주어진 임무, 단기적 운동과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은 요원합니다.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천 경험의 일반화로서의 이론화가 실질적 운동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포디즘이 노동자들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론주의에 입각한 전문주의와 그에 기초한 대리주의는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모두가 정파와 이론주의를 비판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투쟁해도 정파의 줄이라도 갖고 있지 못하면 운동 내부에서 소외되고 묻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저는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한국합성노동조합에 대한 운동의 무관심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국합성은 워낙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투쟁했을 뿐 아니라 온갖 연대에 가장 앞선 투쟁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정파 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투쟁이 어떤 정파들이 표방하는 바에 딱 들어맞는 경우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화성업체는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자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 동종업체가 대부분 공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화성업체의 앞선 투쟁들이 비록 전부 폐배했거나 혹은 운동적인 부분을 제거한 바탕 위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회사 살리기로 귀결되었지만 한함은 여전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이 넘도록 현장의 투쟁력, 조직력을 유지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한함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자본은 노동이 아무리 조직력이 있어도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저 없이 공장을 폐쇄합니다. 현장투쟁만으로도 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반면 현장 투쟁 없는 회사 살리기는 코오롱에서 보여지 듯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힘이 있을 때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근거해서 한함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가 촉발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운동단체들조차 한함 문제를 이는 단체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파에 속하지 않은 운동이 겪는 아주 일반적인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떨어진 현장, 공허한 사회운동

‘민주노총이 사회운동성을 상실하고 실리주의에 빠졌다’ ‘87년 노동자 투쟁의 성과는 대공장,

독점,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자들의 증산총화로 귀결되었다' 사회운동가들로부터 듣는 노동운동에 대한 매우 아픈 지적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더욱 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비판의 이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포착해야 할 '왜 노동운동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놓치지 만들어 문제의식을 추상화시키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비판하듯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 합법화를 계기로 매우 빠르게 제도화의 길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체형성의 관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고 그 속에서 의식화, 조직화 한다는 관점은 상실되고 제도화된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전노협 시절, 마창노련 등지에서 나타났던 열 공장들 구사대가 침탈했다는 이유로 즉각 현장에서 파업을 결행하고 정당방위대를 조직하여 탈환연대투쟁에 나서는 일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직화는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그리고 활동가들이 그 회원을 대리하여 권익을 확보하는 활동가-후원회원 모델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장의 사회운동성은 죽었고 노동조합운동은 실리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익히 논의된 대로 한국 사회가 이른바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장기 호황의 결과로 인한 증산총의 성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유혈적 포디즘에 따른 강도 높은, 비인간적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반란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동력은 전두환 파시즘을 타도하는 데까지는 쉽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질 수 있었지만 그를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분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증산총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 요구, 제도적 민주주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일정하게 보장되었지만(그때북야 국가보안법도 못 없애고, 사학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 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장 앞에 멈춰선 민주주의였습니다.

전노협으로 상징된 강력한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멈춰선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유력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운동과 노동자가 '공돌이'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사회운동 나아가 경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 또한 3저 호황의 벽을 넘지 못했으니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체제에 맞선 노동자의 대반란, 노동자의 인간 해방 투쟁은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지불능력을 갖춘, 독점대 재벌 사업장 주도의 실리주의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안으로 민주주의를 밀고 가던 힘은 대공장 노동자들을 증산총화 하는데 머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노동자 대중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 앞 다투어 개량으로, 심지어 반동으로 돌아선 이른바 전직 혁명가(?)들의 몫이었지만 사회운동의 눈으로 얘기하자면 대중의 분출하는 지향을 변형적으로 모아내지 못하기는 현재 이른바 노동운동에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운동은 남한 자본주의의 예외적 3저 호황을 비롯한 장기호황을 절대화하면서 때때워 등장한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에 발맞춰 서서히 시민권이 보장되는 기업 내 노사관계에 집착하게 되었고 빠르게 대공장 의제로 자기 운동을 국한시키며 실리주의에 경도되었습니다. 단위기업 내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시민권이 부정되던 노태우정권 시절, 전노협 시절과는 달리 기업 내 노사관계 수준에서의 시민권이 확보되면서 '민주노조의 간부=구속, 해고'의 공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인 분야로 노동운동이 진출하는 것은 가로 막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반면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중의 요구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었지만 단위 기업의 노사관계 수준에서 시민권을 확보하기 시작한 노동조합은 분출하는 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안아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대중의 요구를 그 성취여부가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갑두꺼로 단순화하여, 그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개량화 국면을 지내면서 전노협 시절 정권타도를 내걸고 투쟁했던 노동자들, 정치와 사회운동성이 넘치던 현장은 완전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정규, 비정규의 차별 등이 여과 없이 관철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외치는 활동가들도 현장이 아닌 밖으로 돌고 있는 게 노동운동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국가의 후퇴와 함께 그간 억압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진보적 의제의 확장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과대평가하면서 현장과 괴리된 이른바 담론 투쟁으로, 제도화된 공간으로의 진출로 나아가는 경향이 심화되었습니다. 87년 6월 합쟁으로 확보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제와 사회운동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결합하는 것으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없는 사회운동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성의 부재는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의제들을 쏟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확산시켰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사회운동이 87년 합쟁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최종적으로 자유화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무력했던 원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으로부터 멀어진 운동은 정세의 긴장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정세에 민감합니다. 7월1일자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이마트만 나름의 해법을 모색한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예컨대 KT의 경우 회사는 기존의 동일한 조건에서 통신선로수리 업무를 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가르기 위해 행정동별로 업무를 전부 조정하고, 심지어 사원장, 탁카 등도 전부 따로 쓰게 하는 등 완전 초긴장 상태입니다. 자본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선 매우 잘 보입니다. 만약 ‘사회운동이 7월1일자 비정규법시행과 관련된 집중적인 준비를 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현장성의 상실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교섭력 약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으로부터의 괴리된 사회운동은 정세에 대한 둔감하고 이는 다시 사회운동의 집중력의 부재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부터 멀어진 사회운동은 공허합니다. 정세와 무관하게 현장과 동떨어져서 외치는 ‘사회운동성 강화’의 슬로건은 관념적입니다. 정세와 무관하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창하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사회운동적 연대일 수는 없습니다. 정세를 분석하고 집중할 곳에 집중하려는 연대가 사회운동적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과 배제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총체성을 놓친 관심과 의제 그 자체도 분할선 역할을 하게 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달라진 삶의 양식 - 무엇이 중산층적인 것인가!

많은 대중운동의 활동가들은 소비주의와 비대중적 삶 사이에서 동요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경제적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은 만성적인 과로체제입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우울해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보람의 위기, 자긍심의 위기이고 결정적으로 모든 신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장으로부터 사회운동이 멀어진 결과 활동가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현장엔 훨씬 치열한 투쟁의 공간이고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의제 이전에 대중사업이 절실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동자들과 어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사회운동에의 진지한 모색을 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투쟁을 통한 조직화와 의식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힘의 차이는 있었지만 과거에는 현장이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인생의 전부 이다시피 했습니다. 그 관성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활동가들은 대중과 함께하는 삶으로 남았지만 그로 인해 중산층적인 소비주의적 삶 속에 파묻혀 있는 측면도 큼니다. 그래서 신념(가치)으로서의 삶의 일상적 치열성은 매우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대중과 함께하는 삶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은 자신의 신념(가치)이 비교적 생활 속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대중의 삶의 방식과는 말 그대로 괴리되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대중과 맞부딪히면서 확산시키는 삶의 치열성보다는 내 삶이라도 나의 가치관에 충실하겠다는 방어적 치열성을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개인의 결단과 희생이 중요했고 그런 면에서 전위라는 개념이 유효했습니다. 대중의 요구와 지향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억압에 의해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들의 선두에서 있는 사람들의 희생은 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용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위장취업한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의 삶이 보여주는 감동이 있던 시절 얘기입니다. 현장성과 치열함이 결합된 삶이 만들어준 감동과 보람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편에선 대중성이라는 이름으로 치열성이 사라진 소비적 삶이, 다른 한편에선 현장성을 대신해서 ‘우리 각자 자신이 관심 갖는 의제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양쪽 다 대중에게 별로 감동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고 따라서 과거 같은 전위성을 통해 삶의 감동을 줄 수 없다면 무엇이 그 대안일까요? 군사독재의 억압이 주요했던 7,80년대와 달리 오늘날은 자본주의 모순이 극단화되고 소외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앞장선다는 것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속에서 구현되는 사회관계에서의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매력이 사라진 활동가들의 삶은 그다지 대중적이지도, 감동적이지도 못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삶은 현장의 눈으로 보면 매우 비대중적인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편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의 삶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대공장 노동자들조차, 아니 오히려 대공장 노동자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삶의 긴장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 등 재테크에 관한 과도한 열풍은 단순한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불안감의 산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이 실종된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과 삶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대중들은 경쟁과 시장에 목매는 양상입니다. 그런

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지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긴 장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낙관적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억압의 시대 노동운동가들의 삶이 무척 고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억압에 찌든 보통의 노동자, 민중들의 눈에 뭔가 자유로운 영혼의 함기가 느껴지는 삶, 미래에 대한 신념이 현실의 어려움을 압도하는 질은 삶의 낙관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대중은 뻔한 공장 중심의 노조운동 혹은 현장과 동떨어진 상층 중심의 사회적 담론 투쟁 과정에서 자기 능동화의 계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능동화시키는 것은 시장관계 혹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운동은 대중의 눈에는 매우 수동적인 구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눈에 활동가들의 삶이 훨씬 짜들어 있고 매력 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 금속 활동가 모임에 교육을 갔더니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일본으로 스키를 타러 간 노동자 부부에 대해 노조간부들이 심하게 성토했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느니 개인생활밖에 모른다느니 기타 등등. 듣고 있다가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왜 부러워?” 일순간 그 노조간부들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얘기하더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고.

소비주의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만들지 못하는 한, 생동감 있는 사회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그 비판은 별 의미 있는 것이 못되는 듯합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니까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서로를 증산총화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대로 대중 활동을 이유로 소비주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술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회운동은 사회운동대로 전문성을 지향하는 삶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솔직히 말해 저 자신도 술자리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이 아닌 회의판으로는 소통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운동단체 동지들과 만나면 약간의 허전함 같은 게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두 달라진 삶의 양식이 소통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기술여지지 않는 한 사회운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그런 데서 저는 느낍니다. 신념과 생활이 만나는 지점에서 운동적인 삶이 대중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횡단을 위하여

1.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집중

87년 체제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성장하는 증산총, 그리고 그를 가능케 한 고도성장에 기초한 정치행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되었던 것이어서가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 붕괴 등에 의한 외적 변수도 매우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내적으로는 증산총의 성장과 외적으로는 거대 이념의 붕괴라는 조건 하에서 맞이한 87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다양한 가치의 추구를, 그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전략 아닌 전략으로 선택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동 내부는 매우 빠르게 탈이념적, 실용주의적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날 선 것이 못되었고 한국경제가 경험한 예외적 장기호황을 마치 자본주의

일반으로 이해하면서 ‘자본주의=성장하는 체제 but 환경파괴와 불평등을 낳는 체제’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정세는 계급대립의 동합에 근거하기보다는 수구세력과 자유주의 세력과의 정치적 대결에 집중되었고 각자 그 역할 관계에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의제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운동의 분화는 심화되었고 연대는 기능적인, 실용적인 연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당연히 소통의 필요성은 결실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은 집중을 하려할 때 절실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소통 없는 연대는 집중의 부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IMF사태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신화, ‘잘 살아보세’의 살아 있는 화석, 중산층 진입에 성공했던 공공, 사무, 대공장 노동자들을 한 방에 날려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되었고 정세는 향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성장에 기초한 다양한 의제로부터 계급의제로의 집중으로 운동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인권도 노동자의 인권, 철거민들의 인권으로, 생태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국가 전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생태파괴로부터 겪게 되는 삶의 위기를 보다 의제화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적 의미의 소통의 강화가 아니라 소통을 전제로 한 집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운동포럼이 그러한 소통과 그에 기초한 집중점을 찾아 나아가는 논의의 한 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운동성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와 혁신은 사회운동의 구호가 아니라 자본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장에 붙어 있는 각종 기업문화 캠페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요약됩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을 가장 주눅들게 만드는 단어가 아마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운동이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지 못할 때, 운동이 방부제 역할에 만족될 때 ‘변화’는 자본의 담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도성의 상실로 인해 운동은 정세변화에 매우 둔감합니다. 정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즉 노동, 생태, 여성, 인권 등의 의제화를 중심에 두는 운동양식을 넘어서는 것이 변화를 민중이 두려워하는 단어가 아니라 희망하는 단어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안 투쟁과 같이 추구하는 가치의 지속적 의제화가 놀라운 대중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위로부터의 지체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은 활력이 떨어지고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된 다양한 의제의 투쟁은 정세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정세대응력을 놓친 사회운동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에서 약화되었고, 그럴수록 제도적 통로를 통한 협소하지만 안전한 개입방식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정세규정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정세는 고전적인 계급투쟁의 격화로, 즉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민중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요구하는 정세로 치닫고 있는데, 사회운동의 정세 개입력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민중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수구반동들의 정치자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이라크 파병 등에서 드러나듯 한국 자본은 양극화로 인한 민중의 불만을 소제국주의적인

환상을 유포하며 사회우경화를 꾸준히 밀고 가고 있는데 사회운동은 이러한 정세를 둘러싼 지배, 피지배 계급의 힘에 대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매우 실용주의적으로 그 때 그 때 정세에 대응하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투쟁 사안으로 정세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정세관 하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의 논거는 ‘애들이 죽어요’, 한미FTA 반대의 논거는 ‘협상이 잘못되어서’로 제한되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 이후 꾸준히 수구반동세력들에 의해 공세적으로 제기된 북 원조와 관련된 이른바 ‘피주기 논쟁’, 남한 민중의 팍팍한 삶을 근거로, ‘친북좌파정권이 북에 피워서 남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동적 정치선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주된 반론조차도 반동 주도에 대응하는 수세적인 방식이었고 그 논리도 ‘결국은 북한 원조는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베네주엘라의 차베스는 내부 우파 반동세력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석유 피주기 외교’ 비판에 대해 ‘석유를 인간의 눈으로 보자. 무슨 대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풍부한 석유자원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피주기에 대한 베네주엘라 우파들(부자)의 시비는 오히려 우파의 정치적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야말로 주어진 구체적 정세 속에서 매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정세 주도권을 틀어쥐고자 한 운동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바 가치에 있어서는 치열하지만 구체적인 정세에서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지금의 운동관으로는 사회운동의 정세개입력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면 정세에 대한 구체적 개입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운동이 일반화된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힘의 관계와 대립을 분석하는 것 위주로 논쟁할 때 실천적 쟁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론 논쟁이 아닌 정세논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우리의 힘을 모을 집중점을 찾아서 연대할 때 우리는 하나의 전선으로 집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장의 눈높이

현장의 시선으로 사회운동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도 매우 절실합니다. 현장의 실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이 자본의 소비주의에 포획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운동을 밀고 가는 것으로 운동의 무게 중심을 조금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장과 사회운동의 괴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예컨대 페미니즘의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는 확실히 동료 여성노동자와의 관계에서는 수용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파 갈등이 복잡한 사업장들에서 동료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정파구도와 맞물리면서 매우 날카롭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일상 문화에서 노래방 도우미 문화 등은 무던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운동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만 있다는 일부 현장 활동가들의 냉소가 단순한 냉소판이 아니라는 설득력을 얻기도 합니다.

현장 중심의 문제의식은 사회운동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인권운동과의 공동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 하에서 인권침해의 원천지가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의 인권침해였다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기업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형태인 듯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기업 문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왕따시키는 등 인권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 IMF 이후 기업 내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업이 완전히 성역화 되면서 기업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회운동이 개입하기에 녹록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운동 차원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관한 실천적 개입의 실마리를 잘 잡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감시나 억압이 일상화되어 시민들이 그에 대한 위축감을 느끼던 시절에 인권에 대한 계기가 생활과 매우 밀접한 문제제기로 느껴지고 그래서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지금은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 차원의 문제제기는 다소 추상적 가치로, 그래서 현장과 밀착된 이슈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03년 KT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팀에 몰아넣고 미행, 감시, 지방인사발령 등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서 인권운동단체들과 KT의 현장노동자들이 연대해서 투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기자회견해주는 방식을 넘어서자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10여회에 걸쳐 지역을 돌며 전국적인 순회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상품판매전담팀 투쟁에 참여했던 현장 노동자들은 통상의 KT 노동자들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사회연대에 대해 적극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상품판매전담팀이 해체되었다는 구체적 성과보다는 그 투쟁을 통해 연대의 소중함을 깨우쳤다는 점을 더 크게 평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서울서 기자회견해준 것으로 인권단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상담해주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멀리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회운동단체들은 보다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정책 개발이나 이론적 전문성의 심화뿐 아니라 현장성의 강화가 사회운동에게 매우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운동 단위들도, 그 때 그 때 상황에서의 포장할 필요에 따라 사회운동단체들을 활용하면서 ‘연대단위’라고 치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지역의 재발견

한국 자본주의는 87년 체제가 정착되면서 그 나름대로 제도, 형식적인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8저 호황을 통해 비록 매우 제한적인 선이지만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관이든, 정당의 지도부든 대화가 가능한 게 지금의 민주노총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유럽과도 중남미와도 다른 것 같습니다. 계급 투쟁이 말 그래도 사회적 합의를 내용적으로 일정하게 끌어냄으로써 계급 타협의 정치가 자리잡은 서구와도 다르고 아무런 개량의 여지가 없어 국가권력 중심으로 정치적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중남미와도 다른, 그 중간선 어디쯤인가 있는 게 한국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사회적 합의의 환상이 단

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느끼는 층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선 이랜드 사태와 같이 아무런 합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사회갈등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층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즉 한국사회는 개혁의 여지가 대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일정 층을 개혁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실천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자본은 개혁주의를 사회적 합의로 끌어낼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반면, 변혁운동도 단순 정치선동만으로 대중을 혁명적으로 묶어세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반으로 갈라진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 미국에 대한 반미의식과 미국에 대한 압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운동이 변혁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투쟁과 정치선동만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화와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국성을 중심으로 한 상층에서의 담론투쟁과 현장 중심의 경제투쟁이 아닌, 현장 중심의 매우 구체적인 정치, 사회의제에 관한 의식화와 자기성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로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놓고 조직 노동자를 동원하는 방식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계급 내부 분절화를 심화시키며 관료개혁화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로의 의제별 전문화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상층의 담론투쟁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미지만 채용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시민단체들이 뽑은 사회공헌기업들의 명단에 삼성전자, KT 같은 기업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구체적인 소통과 연대 그리고 변혁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중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소통,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만드는데 사회운동이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잃어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연대의 기풍이 마련될 때 전국 단위의 이름걸기 식 연대 혹은 이론적 수준의 소통이 아닌 실천적 연대, 집중을 위한 소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럴 때 달라진 삶의 두 양식(대중성이라는 이름의 소비적 삶과 치열성이라는 이름의 비대중적 삶)도 만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저는 사회운동성 강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의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전국 전선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포럼이 그러한 지역에서의 구체적 소통과 연대 그리고 변혁의 만남의 가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운동포럼

열쇠말(공동의제)워크숍



사회 운동 포럼

미래를 돌아보라!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숍



워크숍 기획 내용

C 누구와 함께:

- 다른 운동을 꿈꾸나요?
-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동의 과정이 일치해야 한다고 믿나요?
- 외톨이 운동은 이제 그만하고 싶나요?
- 열망과 활력이 넘치는 운동을 간절히 원하나요?
- 대안은 먼 미래에 올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의 운동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나요?
-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C 언제: 2007년 8월 31(일) 오후 3시-6시

C 어디서: 상군관대학교 경명대 2층 33203호

C 무엇을:

1부. '미술시계파 혁명투쟁기' - 이야기가 있는 명상 발매

: 외 새로운 활동양식을 이야기하는가?

2부. 미래를 돌아보는 톡, 톡, Talk

: 민주주의, 페미니즘, 운동언어, 집회, 교육, 이렇게 5분을 모셔서 소통/연대/변혁을 위한 운동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3부. 함께하는 마당

: 새로운 활동양식에 대한 고민과 실천 사례, 제안들을 함께 나누는 토론 마당입니다.

※ 행사장 주변에는 다양한 집회 사진, 교육과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그림, 참여 거시판 등이 운영됩니다.

C 준비한 사람들: <사회운동포럼>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기획단

※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기획단은 사회운동포럼으로 오는 길목에서 9차례의 전체 회의, 세 차례의 도움닫기 워크숍을 차근차근 할아왔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내어놓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조물된 결과물을 아래 공동의 발제문으로 내어놓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못한 생각들도 많습니다. 이번의 시도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이들과 우리 안의 미래를 돌아보기 위한 자리를 만들자며 마음을 토닥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

첫째마디-민주주의와 소통

운동사회 내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의 진전을 위하여

우리는 차이를 존중하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평등하지 않다고, 자유롭지 않다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할일도 많고 갈 길도 멀게만 보이는 우리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망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활동가들의 한 맺힌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술자리에서의 푸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실천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 변화의 길로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준 문제점들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어보자. 중요한 것은 몇몇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 그 자체다.

1. 운동사회 내 민주주의와 의사소통 진단

수직적 조직구조의 폐해

대부분의 조직은 효율성에 근거해 신속한 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피라미드형의 의사결정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면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생략되어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생겨나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신도 높아져간다. 또한 소외를 느끼는 구성원들이 점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내부단절이 지속되면서 기본적인 정보공유조차 어려워진다. 부서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부재함으로 인해 관료주의가 만연한대거나 직책이 서열화됨으로써 불필요한 위계가 성립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직위·전문성·연령에 따른 위계 구조

대표 또는 사무총(국)장이 과도한 대표성이나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도 여러 발생한다. 명망가 중심의 운영구조, 조직 내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나 인맥과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명망가 또는 대표나 사무총(국)장의 지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또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원장 직권조인은 조합원 대중의 총의를 왜곡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조직들에서는 정책적 전문성을 이유로 일정 학력이나 연구경력을 지닌 지식인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 활동가에 비해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 연령에 따른 위계구조도 조직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상호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다. 후배는 선배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교민을 하고 선배는 후배의 열정과 신선함으로부터 새로운 시도들을 왜 만들어가지 못할까?

성별 분업의 고착화와 여성의 과소대표

모든 민중의 평등을 외치는 운동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불만들이 가득하다. 실제 활동에서 성차별적인 역분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문화도 한몫을 한다. 게다가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부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해내야하는 여성활동가는 당당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일로 감당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꽃”, “(남성 가장) 당신이 희망입니다” 와 같은 사례는 일회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다. 요즘에는 많은 단체에서 반성폭력 활동이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하나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노동조합 등 일부 조직에서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지만, 어떠한 여성의 권리와 요구가 조직의 이념과 실천에 반영되지 못하는지를 문제제기하지 않은 채, 할당제 자체를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대 활동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각종 연대 활동에서는 조직 및 재정 동원 규모가 큰 단체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비해 사실상 더 큰 대표권을 갖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가 또 다른 연대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몇 백개 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하지만,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몇 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도 허다하다. 특히 대규모집회 등에서 규모가 작은 단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단체의 발언은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연대운동의 원칙과 활동 작풍 모두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2. 운동사회 내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의 진전을 위하여

운동은, 그 스스로가 추구하는 대안사회의 원리와 가치를 실험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군사조직을 모방한 수직적 위계구조나 권위주의, 기업조직을 모방한 능력주의나 관료주의는 운동조직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나아가 운동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형식이나 활동작품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운동의 이념과 지향을 혁신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기 - 차이를 존중하고 소수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서로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또 서로의 운동을 고무, 자극해야 한다. 운동은 서로의 차이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끊임없이 조정·통합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이러한 모색이 연대운동에 적용된다면 그동안 운동 사회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패권성과 자조직중심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그만! -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통로 확보하기

회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면서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함께 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정보는 제한되어져 있고 토론은 생략된 결정만을 위한 회의에서 무엇을 왜 결정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또는 정보공유를 위한 과정은 생략된 채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정보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식회의에서 생략된 정보들이 술자리에서 혹은 개별적인 친분관계 속에서 유통이 되고 왜곡된 정보가 남발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정보공유를 위한 과정을 거쳐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회의다운 회의가 우리가 하고 싶은 회의이다. '위키피디아' 방식을 이용해서 회의 안건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하나의 방식이다.

성폭력파 여성의 과소대표를 지양하기 위하여 - 여성권을 실현하는 운동을 전면화하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극단적인 배제에 다름 아니다. 또 많은 운동 조직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요구가 부차화되거나 운동 전반에 걸쳐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여성을 경제적, 심리적,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족형태 및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 이데올로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성폭력과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념과 실천으로서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정의하고 가족의 변혁과 사회적 관계의 변혁을 사고해야만 한다. 여남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존을 위한, 새로운 유대를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성적 윤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가주의' 를 넘어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역할이 구분되고 위계가 발생하는 문제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 일정한 학력이나 전문성,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 분석하고 기획하면 비전문가들이 발로 뛰고 있다. 혹은 활동방향이나 의사결정은 담당활동가가 하지만 앞에 서는 것은 명망가나 전문가가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각각의 질을 확보하기는

하였지만 분절되고 넘나들기 어려워지면서 하나로 모여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주체들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활동가가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고유한 분업과 능력에 따른 위계를 운동 조직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론과 실천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을 맞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운동 전 과정을 통해 활동가 스스로가 교육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고양해야 한다.

세대 차이? -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기!

한편 나이에 민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보니 운동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선배는 선배대로 후배가 아직 부족하고 어려만 보이는데 선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서운하고, 후배는 후배대로 선배가 권위만 내세우고 새롭게 변화하지 않아 권위적으로 느낀다. 나이가 갖는 권위를 없애고자 어떤 단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는 호칭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면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나 연륜이 갖는 권위보다는 서로의 경험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문제이다.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둘째마디-페미니즘

페미니즘의 거울에 비춰본 운동

열쇠말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즘 거울에 비춰본 운동사회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현재 페미니즘이 사회운동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재 운동사회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약 30여명의 활동가들이 답변해준 설문 결과와 준비과정에서 진행한 도움단기 워크숍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 페미니즘의 지위,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운동 내에서 페미니즘의 지위는?

설문조사와 도움단기 워크숍을 통해 페미니즘이 사회운동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떤 지위를 갖는지 논의한 결과, 페미니즘은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 학문 등 사회운동과 분리된 것 내지 부문 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여성운동=여성단체의 운동’이라는 표상과 독자적인 활동양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이 결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추상적인 합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페미니즘이 여성해방을 위한 이념, 현실의 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대안 세계를 위한 사회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성은 어떻게 주체화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노동권, 정치적 권리 등에 있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통계에 걸맞게 투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운동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은 운동사회의 진보성을 표방하기 위한 미덕, 다른 정파와의 차별성의 지표 정도로 인식되거나 혹은

정체에서 벗어난,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으로 인식되곤 하는 게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부차적 지위는 결국 사회운동이 페미니즘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의 상은 여성단체와의 연대나 부문운동으로의 확대를 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현재 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재구성하는, 자신의 운동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모든 운동의 의제와 결합되어야 하며, 여성의 주체화, 조직화를 위한 계기를 기획하고 시도해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 사회운동 안에서 여성사업의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단체, 노조, 당, 학생단위 등에서 진행되는 여성사업의 수위는 3.8 여성의 날 집회 참가에서부터 조직 내 여성활동가들의 내부 세미나 진행 및 여성 모임 운영, 외부 연대 사업 진행 등 그 수위가 각기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여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단위의 주된 사업이 주로 성폭력 대책위 구성, 반성폭력 워크숍 진행, 성폭력 내규 제정, 연대활동 시 반성폭력 내규 제정 및 주체 육성 등의 반성폭력 운동에 치중되어 있고, 교육 및 세미나도 이와 연관된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모이고 여성문제를 자각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성활동가의 모임을 꾸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여성활동가들은 오히려 사건처리 과정에서 역량을 소진하거나 활발한 공동체의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생한 사건의 처리, 개별 피해자의 구제 수준을 넘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 문화 등 운동사회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일상 교육의 강화, 조직 구조의 재편, 남성활동가의 역할 찾기 등 반성폭력 운동을 변화 내지 확장시키기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여성활동가들이 정체적으로 분출되는 여성노동자 투쟁을 접하거나 소수자 운동, 반전평화운동 등 다양한 운동의 의제에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하고, 운동사회 내 성별분업과 여성활동가들의 부차적인 지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페미니즘’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사회운동 내에서 페미니즘은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으로 이해되거나, 여성들이 제기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부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성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이상의 의미 부여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여성활동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밀려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적 과제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현재 페미니즘이 사회운동 내에서 실천되는 양태가 운동사회 내에서 여성의 부차화, 주변화(성별분업, 성폭력, 육아 전담, 과소대표, 위계적인 구조와 문화)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불만 토로를 넘어 좀 더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이 든다. 사회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여성의제가 ‘피해받은 여성에 대한 대응활동(여성노동권 침해, 성폭력 대응 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제를 좀 더 대안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활동 기획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3. 페미니즘 확대를 위한 제안들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 페미니즘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도는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썩박한 대안은 없다.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 어떻게 페미니즘의 시각과 실천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여성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세 인식에서 여성의 위치는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의제가 정세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해내고 운동과 결합시키려는 우리의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투쟁에서 여성노동자의 통계적 수치 등은 매우 높은 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투쟁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운동에서 주목해야할 여성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랜드 뉴코아 투쟁 지지 여성선언 등의 기획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는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의 확장에 거의 모든 여성 활동가들이 동의하지만 조직적 역량의 부재와 문제의식의 심화가 이뤄지지 않아 여성사업의 기획과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각 단체나 조직의 이슈, 투쟁 각각에서 페미니즘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여성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문제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닐까.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문제의식을 나누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네트워크도 구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활동가들만의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의 이념이자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운동의 한계와 공백은 무엇인지에 대한 페미니즘의 문제제기가 단지 외부적인 비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내적 변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결국 페미니즘과 사회운동 양자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운동이자 대안 운동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 ◎ 새로운 활동양식 기획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활동가 30여 명에게 들은 이야기들은 그 어떤 분석글보다 더 많은 생각의 물꼬를 틔웁니다. 여성활동가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하고 똑같은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마디 한 마디들이 많은 울림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때론 절절한 사례들에 가슴이 시리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녀들의 막막함에 가슴이 짓눌리기도 했고, '우와~ 이런 시도들도 있었네' 하며 가슴이 땁 뚫리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전할 수는 없어 조금은 거칠거, 조금은 간략하게 분석결과를 내놓습니다. 각 단체마다 이 분석결과를 두고 한판 수다를 떨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미니즘이라는 거울에 우리 운동을 비춰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성활동가들에게 듣는 ‘페미니즘 거울에 비춰본 운동’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준비팀에서 현재 운동사회 진단을 위해 ‘페미니즘 거울에 비춰본 운동’이라는 주제로 7월 중순부터 약 2주간 각 사회단체, 노조, 당, 학생단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단위 및 인원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운동사회 내에서 여성운동과 여성외계,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 여성활동가들의 지위와 고민들,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설문 참가 단위

- 노동/평화/문화/미디어 등의 사회단체: 15개 단체(20명)

노힘,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진보넷(2명), 이윤보다인간을, 평화연대, 민가협, 평화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2명), 평화인권연대, 민주노동자연대(3명), 사랑방(2명), 미디어액트, 경기행동연대

- 노조: 4개 노조(4명)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증권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

- 당: 1개(1명)

서울시당

- 학생운동단위: 3단위(3명)

전국학생행진, 고려대 학생행진, 서울대 학생행진

총 23개 단위(28명)

I. 사회운동 안에서의 여성운동

1. 활동하시는 조직/단체 안에 여성(주의)/페미니즘과 관련한 사업이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나요? **있(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과 관련한 교육, 기획사업, 반성폭력 운동, 여성 관련한 연대사업, 여성노동자나 여성외계 관련한 연대사업 등)

※ 23개 단위 중 4단위에서 여성 사업이 거의 없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단위의 여성사업

중 중복되는 부분은 사회단체와 노조 등을 구분하여 한 데 묶고, 학생단위는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유무(응답자 수)	여성(주의)/페미니즘 사업(중복)
반성폭력 운동(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반성폭력 관련 강연 겸 워크숍 진행, 대책위 활동, 형식적이지 않은 반성폭력 워크숍과 내규 만들 여정 -성폭력 대책위 구성 및 활동, 반성폭력규약제정 -02년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강좌 개설(지역 단체들에 제안) -03년 반성폭력 규약 제정, 성폭력 대책위 활동 -100인 위원회, 최근 김박태식, 시민의 신문 성폭력 대책위 참가 등 -내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반성폭력 워크숍 매년 진행 - '반성폭력 내규' 만들기 -거의 1년에 한차례 정도 성폭력 사건 처리
교육과 세미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세미나 -연 2회에 걸친 여성주의 관련 교육 기획 등 -여성위원회 세미나(혁명기 여성운동의 사례, 전쟁과 페미니즘, 여성정책 비판, 성매매/성노동, 신자유주의비판 등) -신입활동가 교육 등에서 페미니즘의 역사와 여성운동의 과제, 현실 쟁점 등 -세미나 : 성매매특별법 등 쟁점 세미나, 책을 가지고 하는 세미나 등(최근 모성적 사유) -여성활동가들 중심으로 여성권의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기 위한 지역별 페미니즘 학습 진행 <p>〈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조합원 수련회 교육, 여성간부교육, 성평등교육 -2005년도 여성교실을 4강으로 진행(강의내용 : 페미니즘이란, 가족과 여성, 내만의 여성성, 밀과 여성) -여성위원회에서 전 당원, 당직자여거 성평등교육을 실시(2006년부터 당직자, 공직후보자에게 의무화), 여성 공직 후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정치아카데미, 독일연수 등)
연대활동(5)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06년 여성의 날 경기도 주간사업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 집합 -여성노동자 연대활동: 06년 삼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 진정과 여성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여성단체 기자회견 등 활동, 07년 경기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복직 등과 관련한 지원활동, 07년 민주노총 **노조 간부 여성 조합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위 구성활동 -후주제 폐지, 새로운 신분등록제 제정 등의 연대 사업 -여성노동자와의 연대사업: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성노동자 연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처럼 대개 여성일자리와 연관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 조직화를 목적으로 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활동: 요즘은 별로 하는 활동 없음

<p>기타</p>	<p>·총회 때 진행하는 기획사업, 설문조사, ·대안생리대 만들기, 음식 만들어 수다 떨기, 양성평등관련 영화감상 ·여성운동 쟁점 토론회/워크샵, 타단위 활동가와의 공동논의 기획 ·지난해 12월까지 총 40회 발간된 월간 <네트워커>에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정기적으로 운영 ·경찰서유치장 시설 실태조사 중 여성관련 부분 등 ·여성주의 책 발간: 활동가들이 미디어엑트와 '여성주의 미디어 운동의 다층적 실천 프로젝트'를 참여하여 「여성, 미디어로 전복을 꿈꾸다」란 책 발간 ·빈민현장활동 사업 진행시 성평등내부규약을 제정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p> <p><노조> ·설문조사 및 캠페인: 직장문화바꾸기 캠페인(성평등,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조사(성희롱예방교육 실태, 보육시설(수당) 실태, 생리휴가 실태) · 2006년도 여성노동자회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와 함께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에 대하여 설문조사하고 토론회를 개최(2006. 7월 ~ 10월까지 진행) ·여성 비정규 차별시정 프로젝트(전종권사의 사측 및 여성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치, 승진, 교육, 퇴사에 이르기까지 차별 문제 설문). ·여성노동자 잡지 발행 「어파」: 여성주의, 여성노동자 잡지-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현실을 말려내고 디름,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업,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드러내는 기존의 남성중심 노동조합 운영방식에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시도</p> <p>·여성활동가 모임 운영(2) ·여성위원회 운영(단체와 노조, 당) ·여성국 운영(학생단위와 1단체)</p>
<p><학생단위></p>	
<p>반성폭력 운동</p>	<p>·518순례, 메이데이 실천단 등 각종 사업에서 반성폭력 주제 <교양 및 신고주제>, 농활 반성폭력 워크샵 진행 및 반성폭력 주제 육성 ·현장활동주체학교: 농활에서의 반성폭력, 여성농민의 권리를 밝혀나가는 활동 등 논의, 제언 등</p>
<p>여성운동 네트워크</p>	<p>·서울대 학생행진 활동가 대회 중 <활동가들 관여맺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이야기판. ·전국대학생대회의 여성주의 포럼 ·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 구성 및 운영</p>
	<p>·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한-미FTA저지! 신자유주의 반대! 빈곤과 폭력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세계화하자!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 3. 8 여성의 날 학내 선전 및 <빵과 장미> · 117주년 메이데이의 여성행동위: 비정규법안 시행을 앞두고 히고되어 나가는 여성노동자</p>

	들과의 간담회, 권리선언 퀘트 제작 참여
세미나	여성주의 관련 세미나: 성폭력,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2. 여성(주의) 관련한 의제와 이슈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활동하고 계신 단체/조직의 역량을 어느 정도 배치했는지, 사업의 주체와 전담인력은 누구였는지, 동료 활동가들의 공감과 지지는 어느 정도였는지 경험하신 부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성주의와 관련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거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ex. 말이 통하는 여성이 없거나, 주체가 별로 없거나, 운동의 수준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거나, ……)

〈단체〉	
▷만되고 있는 이유	
부차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의제들에 비해, 여성의제를 중요 의제로 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듯, 통상 여성의제는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편익주의적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다만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 이를 비판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여성(주의) 관련한 의제나 이슈는 여성들이 하는 것이란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봄, 여성(주의) 관련한 문제를 남성활동가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관심만(!) 두었음, 여성(주의) 운동은 부문운동이라는 낡아빠진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됨.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한 의제(당장 풀 문제가 아니니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느껴질 때가 있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문제의식을 가진 주체가 많지 않아 사업이 단선적으로 진행됨.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실물화시키고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여성희망적 관점의 부재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중 없는 의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란 판단이 있다. ·여성주의 미디어 정책연구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정말 시간이 한가할 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 여성 관련 문제는 항상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필요성 못 느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주의 의제 같은 건 여성단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라 특별히 나설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고, 내부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밀치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 ·뭔가 여성주의 관련 활동이나 여성활동가들 모임에 필요성이나 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남성 활동가들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뉘즈 모를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성운동 단체가 아니니만큼 꼭 (그 활동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사랑방

	<p>이 고유하게 히 온 운동이 아니니만큼 이들(여성주의 사안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확실하게 서 있지도 않으니 더 애매하게 여겨지고 가우뿔하는 것 같다.</p>
<p>역량부족 (3)</p>	<p>·아무래도 역량부족,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아서, ·6개월 이상 활동하였던 상근 활동가 중 여성 활동가가 저 이전에 없었던 때문이 아닌가, ·아직 여성주의 관련한 의제와 이슈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나가지는 못한다.</p>
<p>▷사업 진행하면서 한겨적인 지점들</p>	
<p>여성활동가에게 전담되는 문제(5)</p>	<p>·여성 활동가 개인의 관심으로 국한되어 있고, 성폭력 이슈를 제외하면 단체 남성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내외 활동이 별로 없다(그래서 남성 활동가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성폭력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 듯). ·문제제기 및 주체는 주로 여성 활동가에게 배치된다. 특히, 여성 활동가 수가 적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반성폭력 교양/신고 주체를 맡게 되는 상황들. ·회원 대상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만 유도하고 있는 형편, 여할모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몇 분은 나름의 고민을 펼치고 있지만 조직 안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님. ·여성 사업이 여성위와 여성국에서 기획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여성 관련한 사업을 여성국이나 여성위에게 전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 관련한 의제나 입장이 매 사안마다 구색을 맞출 정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그를 위한 남성활동가들의 고민과 조직 전체 차원의 여념을 바꾸는 노력은 동반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세분석, 실천단, 소식지(뉴스레터), 교양학교, 문화제 등 학생운동의 모든 실천에 걸쳐 여성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를 맡은 사업 내에서 잘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난점을 뛰어넘거나 여성권과 노동권이 온전히 상호교차하는 운동에 대한 선도적인 고민은 기존에 여성주의를 고민해온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p>
<p>대중사업의 부재(4)</p>	<p>·여성권 모임이 형식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크거는 여성권과 관련한 대중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컸던 것 같다. ·여성외제를 제기할 때도 피해 받은 여성에 대한 대응활동(여성노동권침해, 여성성폭력대응 등)을 넘어서지 못한다. 좀 더 대안적이고 적극적 의미의 여성외제가 제기되는 경우를 고민 해야 할 듯. ·2년도의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강좌를 개설하고 활동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당시는 지역 운동사회 내에 문제의식의 썩이 텃다고 본다. 이를 통한 문제의식이 윤금이씨 사진거제와 관련한 지역 논의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지속적인 후속활동이 없다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단체 특성상 일상적인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고, (여성)주체들을 조직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p>

<p>〈노조〉</p>	<p>·여성사업담당자 부재 및 이중 업무 부담, 여성활동가의 부재, 관심이 적음 ·참가와 관심의 미비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조운영방식 때문에 ·여성사업의 의외에 대한 몰이해 ·지속적인 역량 배치 및 사업 연계성 담보되기 힘들</p>
<p>〈당〉</p>	<p>·페미니즘의 부재(페미니즘이 여성위원회의 틀 내에 갇혀있고, 당 전체에 정치이념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전달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공포증도 변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차별,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언급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p>

3. 다양한 부문운동과 결합하고, 사회운동을 실천하면서 운동의 의제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활동 속에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단초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 노숙인, 청소년, 장애인 운동 안에서 여성의 문제를 느낄 때, 여성노동자 연대 투쟁에서의 고민들 등)

답변들(중복)	답변의 특성
<p>페미니즘은 운동의 원리와 의제가 되어야함(3)</p>	<p>·투쟁이나 연대활동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직운영에서도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여성어 세상의 절반이듯이, 여성의제라는 거 모든 운동의 의제와 활동양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것들을 발굴하고 운동의 과제로 만드는 것이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여성의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여성들이 처한 노동권 박탈, 빈곤 문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 종속을 심화하고 그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노동운동과의 연대, 주거권 문제나 문화권 관련 의제 등, 노동자, 장애인, 농민 등의 권리를 말할 때 여성노동자, 장애여성, 여성농민의 권리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 지금의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외 여성이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고 그렇게 교육되는지, 지배계급의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가족'과 '여성'을 관리하는지, 모든 의제들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밀접정도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 소수자에 대한 배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 등..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방식, 삶의 태도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대 사업할 때 절실하게 느끼는데, 의제 선정부터 논의 문화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사회를, 인권운동을, 사랑방 내에서 (운동부터 일상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자면 그걸 함께 만들어나간다고보다는 '여성'</p>

	<p>이 책임져야하는/주도적이어야 하는 듯 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여성주의 운동이나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해보면 그건 어떠한 논리 개발이 아니라 소름이 돋는 건데,</p>
<p>여성활동가의 부차적인 지위(6)</p>	<p>·남성 원로들이 모두 한명씩 이름으로 불러질 때조차도 민가협 어머니들은 사업, 행사 속에 주어진 비중, 역할과 상관없이 '민가협 어머니들' 로만 불러질 때, 나이든 여성에게 활동가성을 부여하기 어려워거나 문제의식 없는 운동사회</p> <p>·당내의 어떤 대학생 모임에서도 남성들 간에 '김장군', '황장군' 등의 호칭을 써서 나가기 싫어했다는 얘기</p> <p>·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 여성 활동가가 제외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구요.</p> <p>·여성외에는 그야말로 주변부화된 의제에 불과하고 간부가 아닌 여성 활동가는 운동단체 전체를 조직하고 관장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p> <p>·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특히 앞 줄에 나이든 남자 어른들이 서는 관행은 정말 심각하다.</p> <p>·노동운동 내에서 여성에 대한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폄하 발언</p>
<p>여성노동자 투쟁에서의 고민들(6)</p>	<p>·이랜드 투쟁을 보면, 웹자보나 여러 문구에 보면 '이랜드 여성노동자 힘내세요, 혹은 이랜드 여성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여성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부분을 너무 부각시킨다는 생각도 듭니다.</p> <p>·KTX 승무원지부의 투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지요. 끊임없이 그녀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p> <p>·비정규직 투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투쟁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런 이미지를 운동사회에서 스스로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노동자의 경우 '노동계급'이라는 독립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언젠가 어머니가 될 아가씨'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는지,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는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미지, 수동적인 이미지로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의 열개가 되기도 하더군요. 여성 저항주체들의 가족, 문화, 이데올로기 등이 고려되면서 투쟁을 기획하는 것, 운동이 남성생계부양 가족이데올로기에 편승하거나 부추기지 않는 것, 신자유주의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어온 사회적 노동이 다시 분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현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은 대부분이 여성들로 이루어져있지만 실제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언급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점. 어쨌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여성들에게 칼날을 들어대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정세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지배계급들보다(실제 정부와 기업들에서는 이와 관련된 갖가지 선동, 선전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화 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p> <p>·또 여성노동자들의 지위를 여전히 '생계보조자' 역할로 보고 투쟁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경우 그러한 관점이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 문제의식이 많이 생기죠.</p> <p>·건설 현장에서의 여성문제, 여성의 존재는 매우 하찮거나 혹은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시공간입니다.</p>

<p>여성활동가의 육아 전담 문제(2)</p>	<p>-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을 (일시)중지하거나 다시 복귀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육아 문제에 대해 활동가라면 어떻게 남성, 여성이 공동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육아의 몫은 여성의 몫으로 따라서 여성활동가는 활동을 하기 힘든 조건이 만들어지지요.</p> <p>-진보넷 블로그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담론과 정치적인 담론의 상호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활동가의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해서 서로 적극 소통하고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p>
<p>사회운동의 위계적인 구조와 문화(3)</p>	<p>-여성의 얘기를 너무 이해 못할 때, 자꾸만 하나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려 할 때, 온갖 정세분석에 무슨 분석에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일을 한두 가지 정하려 할 때, 운동권이 폭력을 사용하는 걸 자꾸만 정당화하려 할 때, 정권의 폭력과 압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동하거나 사고할 때.</p> <p>-문화가 맞기도 함. 집회 장소에서 흔히 쓰는 속어 중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비유한 언어폭력이 느껴질 때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면 당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듯 느껴짐.</p> <p>-결론을 먼저 말하고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발언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여성 활동가들은 감성적인 문제들 이야기 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회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꺼내기를 어려워하는 편입니다.</p>
<p>운동사회 내 성별분업(2)</p>	<p>-빈민당사자 조직(철거민, 노점상) 같은 경우 여성과 관련한 조직(여성위원회, 부녀회 등)을 아예 행사 때 밥을 해 나르는 역할로 규정하고, 주요 행사 시 의례적으로 그런 역할로 동원하곤 합니다.</p> <p>-수련회를 참여했는데, 저녁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할 때, 청소용역 시설관리 여성노동자들이 그 일이 전담하고 남성동지들 중 일부는 놀면서 신경 쓰지도 많음(마치 제사상 준비는 여성들이 하고, 질은 남성들이 하는 기분 같달까).</p>
<p>정보인권운동(2)</p>	<p>-사이버/현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청소년과 동격으로 피해자/희생자로 설정되고 보호 담론이 확산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국가적 감시 정책에 대한 불모가 되고 있다(구석구석 CCTV 설치,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p> <p>-미디어로서의 웹(포탈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도 역시 다른 여성단체에만 다 미뤄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죠.</p>
<p>소수자 운동(2)</p>	<p>-소수자 문화권에 대한 논의나 활동 중에서도 여성들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장애인, 노동자, 아동/청소년, 어주노동자 등 집단으로 묶일 뿐 그 집단 내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장애여성의 생리, 몸, 노동, 가족 등 성별화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촛극이, 제 안에 있던</p>

	'수동적'인 장애여성의 이미지를 한 대 세계 팻! 때려주었죠.
반진평화운동 (2)	북한인권세미나, 평화인권세미나를 진행하다보면 참석자의 90% 이상이 여성. 평화, 인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보며 여성성과 평화, 인권이란 주제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있다. 또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평화란 무엇일까?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적이 있다. 전쟁에서 '군인이 아닌' 여성들이 어떻게 빈곤과 폭력을 전가받는지 알려내기 위해 저희가 했던 교양과 선전전도 좋았구요.
기타 의제	여성 노숙민 청소년. 이들은 성폭력이나 다른 성차별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여성 노숙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든다. 개발논리 및 산업발전 논리 등에서 여성주의적 생태관점이 결합되어야한다.

■ 분석 결과

- 사회단체, 노조, 당, 학생단위 등에서 진행되는 여성사업의 수위는 3.8 여성의 날 집회 참가에서부터 조직 내 여성활동가들의 내부 세미나 진행, 연대 사업,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등 그 수위에 있어 각기 다르다.
- 그러나 공통적인 지점은 반성폭력 운동의 자장 안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 여성활동가들은 운동사회 내에서 여성의 부차화, 주변화(성별분업, 여성활동가의 생존문제(성폭력, 육아 전담 등), 과소대표, 위계적인 구조와 문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 조직 내에서 여성 의제가 여성들만의 사업으로 이해되거나 부차화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
- 여성 의제에 관한 여성활동가들의 관심(세미나, 교육 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대중사업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는 부재함.

II. 반성폭력운동 진단 및 평가

1. 활동하시는 조직/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는지, 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려웠던 지점이나 고민되는 것

은 무엇이었는지?

※ 문항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시에 어려웠던 지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에 관해서는 3번 문항과 겹치는 관계로 3번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음 -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응답자가 1번에 서술했다고 하였습니다.

		처리과정/ (※사례와 그에 따른 평가도 포함)
있었다 (14명)	대책위구성 (10)	<p>0두건의 사건; 첫 번째는 내규가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논란 끝에 가해자는 징계 결정, 징계 중에 활동을 그만두고 피해자도 많은 상처 속에 활동을 그만둠. 이후 반성폭력 내규 제정과 워크숍 등 진행. 두 번째 사건에서는 대책위를 통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후속작업 중. → 피해자의 만족감은 높은 편이었으나 처리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원 부족</p> <p>0대책위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수준이 높지 못함을 확인, 성과로는 여성 활동가 모임 시작/ 드러나지 않은 피해 경험 등이 드러나게 된 거기</p> <p>0공개/비공개 모두 대책위로; 지지 모임 등으로 시작해도 결국 대책위 → 피해자 치유나 가해자 반성 유도의 어려움등 사건 해결 시 제대로 풀린 사례가 없어 공동체의 변화를 기해하기 난감.</p> <p>0공개/비공개 사건이 있었는데 공개는 대책위(논의에 따라 회원탈퇴), 비공개는 집행위(피해자가 사건 공개를 원치 않고, 가해자 외부활동 중단만을 요구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떤 논의와 처리를 할 것인지 난감했음)</p> <p>0성폭력은 해결이 없다 라는 느낌 받음. 가해자 교육과정 이수라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줌</p> <p>0대책위에서 당기위원회에 제소 →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 존재</p> <p>0진상조사위원회의 형태; 노사동수로 꾸려서 증인과 가해자, 피해자를 별도로 만나 증거 취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 노조라고 해도 남성간부 대부분이 인식이 없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부재로 2차 가해를 받기도 하거나 여성간부가 사측과 노측을 전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함</p> <p>0다른 단위와 활동 공간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2인이 해결주체가 되어 대리인/ 해결 주체 역할 수행 → 다른 단위와의 활동공간에서 최소한의 합의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반성.</p> <p>0반성폭력 내부규약에 의거, 대책위 구성하여 해결 → 대책위 인자 외에 해당 단위 전체의 여성주의적 재구조화의 인식이 환류되지 못함</p>
	여성위등의 기구들 통해(1)	0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노조 여성위에서 공직배제징계요구 - 정직 3개월에 그침

	전체회의들 동행(1)	○ 상임집행위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며 처리(어와 관련된 고민을 헤운 활동가들이 많이 배치되었던 효과라 평가함) → 여성 주체에 대한 의존도 높았음, 해당 당사자의 의지나 노력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있지 않으면 묻히는 한계가 존재
	스스로 해결/ 개별관계에서 해결(2)	○ 사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사건 해결을 시도함(성폭력 성격 규정에서부터 대책요구까지) →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 부재로 2차 가해 발생, 해결의 원칙과 관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 내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입장 글 제출, 이후 페미니즘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성폭력이 주로 '관계' 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도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사과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함 ○ 당사자들끼리 이야기/ 워크샵(?)진행
	따로 절차 없었음(1)	
기 타 (3 명)	조직내는 아니지만 사건 해결경험(2)	○ 조직 내는 아니고 기관 내 비조합원 가해자와 조합원 피해자 사건, 대부분 조합에서 문제제기하고 징계하거나 가해자 사직하는 방식 → 징계 및 사직이후 가해자 측의 명예 훼손 등의 먹고소, 고발로 문제해결에 나선 노조 간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다른 조직 내 문제를 의뢰받음 → 적극적 지지자 없음, 관계에서의 주관적 판단과 언어로 2차 가해 존재
	말 수 없는 응답(1)	
		없었다 (5명)
		무응답 (1명)

■ 총평

1.) 설문 결과만으로 볼 때, 노조와 사회단체 사이에 반성폭력운동에 있어서의 질적인 차이점은 그리 크게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내규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조직 내적으로 인식차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선순환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문제의식이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개인적 그룹적 차원의 대응과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조 및 사회단체와 학생단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성폭력운동과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역사와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상대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그러나 역시 핵심적인 쟁점들, 여

성주체에게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고민이 전가된다거나, 대책위를 통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등에서는 크게 보아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2.) 성폭력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 문제에서부터, 해결과정 등에 대한 조직적/공동체적 차원의 합의지반이 균등하지 않은데서 오는 (설득과정 등에서 오는)피로감이 대책위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

3.) 대책위, 혹은 징계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은 실질적인 피해자의 치유나 사건해결 과정을 통한 조직/공동체 내의 반성이나 변혁을 끌어내지 못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처리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반성폭력 운동 하에서 반성폭력/페미니즘 교육 등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있다 (19명) (※중복 응답자가 포함 된 수입니다.)				
세미나, 강좌 및 학습공간마련 (7)	반성폭력&성평등 교육 등의 의무교육화 (5)	일상적 온라인 소통 (1)	여성활동가 모임 (2)	매 사업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이해와 결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양과 토론 (4)
없다 (5명)				
<input type="checkbox"/> 거의 90%이상이 남성인 건설현장의 노동조합이 다보니 교육의 필요성이 인지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여성주의 관련 활동이나 여성활동가들의 모임에 필요성이나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유의 분위기; 남성 활동가들은 표현은 만하지만 부담감을 갖고 있고, 여성 활동가들은 관심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적으로는 맞으나 조직적으로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 없다고 생각, 여성주의는 우리 단체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				
무응답 (4명)				

※ 기차: 일상적으로 대책위가 굴러가는 형편; 관련 사건의 재평가 작업을 몇 개월에 걸쳐 수행하기도 함.

■ 총평

1) 대개의 사업들이 성폭력 사건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조직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일회적, 혹은 단기적 사업인 경우가 많음.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정서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이든 사업적 형태이든 조직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시간적, 인적 안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음(페미니즘 관련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기 보다는 관심 있는 이들의 별도의 기타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2) 페미니즘과 관련한 단위에서의 사업이 대부분 교양, 학습에 국한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로 인해, 일종의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에 국한되는 내용적 한계를 가지기도 함.

3. 반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포함해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힘든 지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반성폭력 운동에서의 고민과 힘든 지점 (※종복 응답자가 포함 된 수입니다.)	
공동체내의 인식차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내에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없음 ○ 여성이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시선 ○ 운동사회 내부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남성중심성 ○ 적극적 지지자 없음 ○ 피해자 치유를 당에서 받아 얻을 수 있어야 함. 개인 의식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성평등 교육과 가해자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활동가들이 같은 수준의 긴장감이나 절실함을 갖고 있지 않음
2차 가해/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분위기 ○ 가해자 온정주의/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의 난점
전반적 페미니즘으로 확장되지 못함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사건이 전부인 페미니즘의 협소한 이해 ○ 개인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임에도 공동체적 해결의 접근 자체가 어려움 ○ 반성폭력 운동이 운동의 과정이 되지 못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로 가면서 피해자의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절대화되는 문제, 여성 내부에서 공감 여부 불일치 ○ 모든 의제에 있어 여성 주의적 시각이 기본적으로, 밀정정도 필요하다 생각됨. ○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차별주의 등)를 넘어서는 운동의 기획과 실천 필요

주체만의 문제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하다가 지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너무 클 때가 대부분인데 마주보고 맞기조차 힘이 들고 버겁다는 것, 남성들끼리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카르텔이 생각보다 엄청 강고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비공개일 경우 한계적이고 어려움, ○ 주체 및 여성활동가가 없음 ○ 성적자기결정권의 모호함 ○ 남성과 여성의 불가피한 감수성 차 ○ 성폭력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만 남겨된 느낌 ○ 해결의 어려움(해결의 의미가 모호함) ○ 피해자들이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권리를 찾는 주체로서 다시금 활동을 결의, 지속하기 위해 당사자와 공동의 결의 필요

무응답 (3명)/ 없다 (1명)

■ 총평

1.) 페미니즘, 그리고 반성폭력운동과 관련한 문제가 ‘여성활동가들의 일’ 이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성폭력사건의 해결 과정 및 반성폭력운동에서 남성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2차 가해나 가해자 동정론 등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와 대책위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존재함.

2.)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성폭력운동의 일반적인 형태인 대책위(대책위에서의 내규적용)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식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한계와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즉, 성폭력 사건해결과정이 성폭력이다 아니다, 2차 가해다 아니다 등에 대한 논쟁에 과잉되면서 조직/공동체에서의 과제와 계획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고, 가해자-피해자의 문제로 협소화되는 문제가 존재함.

3.) 또한 반성폭력운동이 사건해결, 혹은 처리의 문제에 국한되면서 전반적인 여성권,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III. '여성'활동가로서의 지위와 고민들

1. 지금 활동하고 계신 조직/단체에 여성활동가의 수(혹은 비율)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활동가들의 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 등)

답변(응답자 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명(30대 1, 40대 1) - // 12명(30대 6, 40대 6) - // 3명(30대 3) - 주로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이 대다수 - 대략 10%정도이고 연령대는 주로 30대부터 50대까지 넓게 분포 - 40대가 10여명 30대가 주로 20대가 10여명 - 50명 중 15~20명이 여성 - 남성 34명, 여성 10명 (40대-1명, 30대-9명) - 9명 중 5명, 20대 여성활동가 3, 30대 여성활동가 2 - 50%, 30대 초반 - 5명중 2명이 여성, 2명 모두 20대 - 30대가 많음 - 여성 총 4명, 2명은 30대 초반, 2명은 20대 후반 - 여성활동가 8명, 20대 3명, 30대 5명 - 여성 활동가가 남성활동가의 약 1.5 배 / 20대 후반 4명, 30대 초반 4명, 30대 후반 3명 - 절반 / 20,30,40대 고루 분포 - 30대 4명 / 20대 1명 / 10대 1명 - 3명중 1명 여성 / 20대, - 여성 2명 / 20대와 50대 - 여성 50% / 연령대 고루 분포 - 여성:남성=4:1 / 30대 - 모두 여성 / 30대 3명 40대 1명, 어머니활동가 약 15명 모두 60대 - 50%, 20대 1명, 30대 1명 - 20대, 비율은 1/3 정도, - 여성활동가 비율이 전체 40% 정도 되고,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여성활동가들(학생단체) - 상근자 전원 여성, 30대 & 회원분포도 30%정도 -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6:4 / 20대(학생단체)

2. 활동하면서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ex. 일상에서 여성/남성활동가들 사이의 성별분업이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지 등)

유무 (응답자 수)	이유 또는 답변의 특성
없었다	5명
있었다	22명 - 차심부름 - 남성 간부의 수적 우세 및 여성(고위활동가는 모두 남성) - 성별 분업 : 조직활동은 남성 / 문화, 복지 등 여성업무의 편중 : 투쟁 진술 및 중요한 판단 시 여성활동가 배제, 정보의 독점 : 회계 및 사무실 물품 관리, 청소업무는 여성의 고유역할로 생각 : 보살핌 노동(회식이나 모임 등), 감정노동 - 나이, 외모 등으로 평가받거나 대상화되는 경우 - 회식 자리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및 그릇된 회식문화 - 가부장적 위계구조 - 육아로 인한 여성활동가의 공백 - 나이많은 여성활동가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 여성활동가를 투쟁하는 활동가라는 표상을 얻기 힘든 점 - 남성 중심의 문화(술자리, 인맥 등)
기타	- 조직 내부에서 제약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외부활동이나 특정 업무(사무국 운영, 회계 등)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존재 - 제약이나 차별이라기보다는 나를 두려워하는(?) 느낌을 더 받음. 페미니스트 발언을 말아서 조심해야한다? - 지로발송 작업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활동가가 해서 남성활동가들이 차별을 느낄 수 있다. - 업무에서는 차별을 느끼지 못하지만 청소, 음식 등의 밀상에서 느끼는 차별이 존재

3. 활동하면서 '정말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 고 생각될 때가 있으셨나요? 혹은 '나이가 들수록 살아남기 힘들다' 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지(나 뿐만 아니라 주위 여성활동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껴시는지요?

유무(응답자 수)	이유 또는 답변의 특성
-----------	--------------

있다	20명 - 여성비하적(반여성적) 발언이나 성희롱 - 나이든 남성 활동가들의 권력구조에 의해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남성 거부장의 모습을 강요당할 때) - 운동의 전망이 불투명할 때 - 결혼이나 육아 문제 - 경제적 전망이 불투명할 때 - 여성활동가에 대한 기대역할 - 남성활동가들에 대해 느끼는 피해감 및 남성 중심의 활동방식 - 살아남기 위해서는 걸걸하고 강민히 보여야 한다는 압박
무응답	2명
없다	3명

4. 활동하고 계신 조직/단체 안에 여성들의 고민을 나누거나 여성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성들의 논의공간이나 공식/비공식 체계가 있나요? (ex. 계모임, 여성위원회 등)

제안(응답자 수)	구체적인 내용
없다	13명
있다 (중복응답)	17명 - 여성위원회(6명) - 술자리 밥자리 등의 비공식적 자리(2) - 공부 모임 및 세미나 모임(3) - 여성활동가들의 계모임 및 소모임(4) - 여성인권포럼(1) - 여성분회
기타	뒤풀이 등에서의 수다 및 일상적 교류

5. 여성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혹은 여성활동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지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무(응답자 수)	이유 또는 답변의 특성
무응답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및 육아,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지역의 행사, 육아 등)과 이에 대한 내규 -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 여성주의에 대한 공통의 입장에 대한 합의 - 여성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일상적인 수다를 비롯한 소통의 과정 - 반성폭력 뿐 아니라 진보적 운동 내에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획 - 여성들의 연대와 정서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 여성자신의 주체화 - 독립된 공간과 대출(경제적 독립) - 여성 활동가 모임의 지원 - 반성폭력 내규 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반성폭력 활동 지원 - 여성 활동가들도 조직적 책임을 지고 조직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및 회의 체계 및 여성의 언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 마련. -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 지속적인 자기개발 -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녹여낼 수 있는 장 혹은 공동체 - 여성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 - 사업별 여성주의적 기획과 평가 - 페미니즘 학습

IV. 여성주의 활동을 위한 대안과 과제들

1. 여성운동이나 여성의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선결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안들 (중복 응답)	이유
여성활동가, 뜻 맞는 이들의	<p>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운동사회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거 중요.</p> <p>현재의 진보 여성운동은 아주 어린 단계, 조직화 중심의 여성회 운동에 집중되고 있다. 함께</p>

<p>모임 또는 네트워크(13)</p>	<p>모여 공부하고 의제를 잡아 함께 사업하고 그랬으면 한다. -여성활동가들이 겪는 문제들이 언어화되지 않거나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다른 단체의 경험자들과 나눔의 자리가 있어야 -모이는 건 좋으나 분리적으로 보일 수도 -페미니즘 그룹이 형성되고 주체화되는 거 필요 -단체 안에서 말이 안 통해도 여러 단체의 여성활동가들이 모여서 연대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일단 모여 이야기하고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자.</p>
<p>교육과 학습(12)</p>	<p>-여성활동가뿐 아니라 공동체 성원 전체가 자신의 문화, 활동과 삶의 양식을 돌아켜 볼 기회 필요. 느낌, 감수성의 차이로 결론지어지지 않고, 쟁점을 부각시켜 성찰해야. 이를 위한 학습이 이어져야. -활동가 여성주의 교육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교육 -여성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 필요. 여성운동 안의 다양한 의제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자리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등의 시기에 쟁점을 토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남성주체들까지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교육과 실천의 병행</p>
<p>조건의 창출(4)</p>	<p>-여로 든 모든 거 진행되고 있다. 내용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 가능한 환경/제도 마련 -먹고사는 문제 해결</p>
<p>일상 사업 속에서(3)</p>	<p>-일상 사업에서 여성해방적 관점을 녹여내야 한다.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 -기존 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집단적 토론과 고민을 모아가는 과정</p>
<p>의식의 변화(3)</p>	<p>-차후어, 혹은 2차적인, 혹은 여성만의-문제가 아니라는 의식.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부문운동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 급선무. -운동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운동이라는 인식 중요</p>

2. 최근에 여성 관련한 모임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을 해봤더니 힘이 나더라’, ‘여성운동의 단초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긍정적인 혹은 대안적인 사업과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ex) 제모임, 여성활동가 단합대회, 페미니즘 교육 등등

유무(응답자 수)	이유 또는 답변의 특성
없었다(6)	노조에서 활동하는 2명의 여성/ 망심수 문제, 과거사, 국가폭력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단체 2명의 여성/ 남성 전문가 그룹이 포진하고 있고 평화정책을 주로 다루는 평화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1명의 여성/ 학생 1명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하였음.
있었다(27) (중복 응답)	·교육과 세미나, 토론회(10) ·소통과 성찰, 격려의 자리(7)/ 여남이 함께 한 소통과 격려의 자리(1) ·여성들과 함께한 술자리 또는 수다자리(5) ·여성들의 모임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4) ·여성주의에 기반한 사업 또는 투쟁(2) ·여남이 함께하는 학습 또는 실천 모임(2) ·영화를 통한 공감과 교류(1) ·품앗이 또는 겨(1)

3. 여성활동가로 활동해오면서 모범이 되는 여성활동가로서의 모델(멘토, 모범 등등)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본인은 어떤 상을 모델로 지향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유무(응답자 수)	이유 또는 답변의 특성
없다(15)	·단체로는 노동,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 골고루 역할모델이 없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이는 응답자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성주의 의제들을 별로 다루지 않는 노조나 인권단체의 경우, 역할모델을 찾을 수 없어 하거나 굳이 찾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여성활동가들이 여럿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 ·여성활동가 자체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페미니즘 학습과 각자가 처한 운동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각 운동 공간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대안.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극렬히 활동하고 싶지도 않고, 모성을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명예남성이 되기도 싫고, 아직은 없다. (걸국 주위 여성활동가 상이 이 셋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 아닐까?) ·활동가로서의 모범은 찾았지만, '여성' 활동가로서 모범을 찾아본 일은 없다(민가협, 평화네트워크) ·함께 운동했던 여성 선배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선 가정에 만주하더라. 운동하면서 자아실현과 행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나도 저렇게 될까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반면 독신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절실함이나 욕구보다 자아실현에 더 의미를 두므로 면대를 조

	<p>직,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여성들여겨는 더 멍석히지는 것 같다. -어떤 모델을 지향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p>
있다(10)	<p>-선배 여성 활동가들 - 능력있다/ 날 후배로만 대하지 않는다/ 일에 충실하다/ 대표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대중을 만난다/ 자신의 고민을 잘 언어화한다/ 학습과 정세분석에 뛰어나다/ 당당하다 등등 -페미니즘에 관심 많은 여성활동가들 -여성 동지/동기들 - 성실, 똑똑, 소심/ 관계, 몸어 대해 편하게 상담/ 살아남은 여성 활동가들, 당당, 여민, 소통할 줄 아는 여성 -심재옥, 심상정, 김은주 등 -여성학자 -히걸책을 제시해주기보다 위로해주고 다독여주었던 여성활동가들</p>

4. 사회운동포럼에서는 사회운동포럼 여성참가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여성대회(9월 1일(토) 18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모여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또 함께 논의하고 싶은 것, 서로에게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안(응답자 수)	구체적인 내용
단체, 활동가와의 교류와 고민 나눔(9)	<p>각 단체에서 계획 중인 사업, 각자의 고민, 관심있는 분야 공동체 내 여성주의적 실천이 이루어졌던 사례들 각 운동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권 내용, 대중운동적 실천과 어려움 일상에서의 여성주의 실천 -여성들의 고민, 부딪힘, 극복방안, 여성으로서 기쁘고 보람됐던 순간 -여성활동가로 어떻게 늘어갈 것인가 -조직 안에서 느끼는 소통방식의 답답함, 소외감, '조직적 사람' 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등 -반성폭력 활동</p>
여성먹임의 구조 인식과 공동의 투쟁과제(2)	<p>-여성들이 모였다가 아니라 여성먹임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 투쟁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 중요. 당면 주요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 내에서 제기할 공동의 의제와 행동 기획</p>
문화/놀이(2)	<p>-여성 필름 상영 좋아하는 옷 입고 나와 제멋대로 춤추기 혹은 놀기, 여성전사 심겨명여 나오는 것 한</p>

소통/연대/변혁

	가치색 히보기
지역(1)	-지역운동에서 여성해방적 관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기초사업
가족문제(1)	-가족, 생계 등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연애(1)	-조직 내 연애 문제
노동(2)	노동운동 안에서의 여성주의 실천 -여성노동권 운동의 현실과 전망
여성연대(1)	-여성연대, 소통, 커뮤니티 구성과 실천에 대한 내용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

셋째마디-집회

집회! 저항이 분출되고 소통되는 광장으로 거듭나자

똑같은 공식으로 진행되는 집회의 지루한 장면들

집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시간에 맞춰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든다. 깃발을 앞세운 대열이 연단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는다. 특별한 소속이 없는 참가들은 무대에서 떨어진 변방에서 기웃거린다. 간단한 문화공명이 이어진다. 그날의 주제와는 특별히 상관없는 노래가 몇 곡 이어진다. 큰 집회일수록 유명한 사람이 출연해야한다. 개회선언, 민중의례, 참가조직 및 지도부(대표들) 소개, 대회사, 각종 연설들이 이어진다. 대표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은 비슷하면서 싱거운 건지, 거다가 장황하기까지. 어차피 잘 들리지도 않고 하니 잠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낮에는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술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루한 릴레이 연설에 문화공연 한두 개쯤 박아 기쁨질을 살짝 한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행진한다. 행진은 신고한 코스대로 진행된다. 열심히 걷고 또 걸어보지만 행인들을 그리 많이 만나지는 못한다. 왜냐? 전경차가 길고 긴 차벽을 치고 있으니까.

한참을 멍하게 걷다보면 어느새 정리 집회를 하는 장소에 도착한다. 정리 집회에서 이번 집회의 의미를 짧게 이야기해준다. 그렇지만 공감에 잘 맴기는 경우가 많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집회에 외 나온 걸까 잠깐 생각해 잠겨본다. 어엿.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집회의 장면들을 적어보았다. 이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대규모 집회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획일화된 집회문화를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때 말하는 집회는 주로 대규모 집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규모에 대한 맹목적 “집착” 을 버리고 목적에 맞는 집회를 기획해야...

집회의 규모,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규모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이 정말 문제다. 집회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사람이 모여 그 힘으로 합의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집회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의 내부 소통이 집회의 주된 목적일 쥘 때도 있다. 이런 목적에 규탄집회, 파업집회, 청원집회, 저지집회, 문화제, 거리캠페인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문제는 집회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큰 규모의 집회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합의를 표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집회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없애고 규모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기획해 보자는 거다. 사정(사안)을 잘 알리기 위한 집회라면 꼭 규모가 커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밀착해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캠페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과정이 생략된 집회

대규모 집회가 쓴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는 규모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끝날 생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음의 울림을 일으켜 집회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과정은 없고, 머릿수로 표현되는 결과만이 앙상하게 존재한다. 꼭 대규모 집회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집회가 과정 없이 누군가 일정을 박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관성적으로 몸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집회에 나가고 싶다는 울림, 집회에 나가야만 한다는 당위, 최근 집회는 후자에 기대어 겨우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공감의 확산을 위한 과정은 과감히 생략된다. 위중하고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 아닌 이유다. 이렇다 보니 단체 규모에 맞추어 집회 참가자 수가 할당(흔히 배팅이라고 불린다)되고, 큰 규모의 단체 구성원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대표님은 꼭 연단에 올려드려야 한다. 대표의 발언은 동원을 위한 도구이자 동원에 대한 사례이기도 한 셈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연이어진 발언이 집회 참가자를 지치게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끝끝내 고쳐지지 않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통이 없는 집회

집회는 저함의 열정과 역동성이 분출되고 소통되는 열린 광장이다. 그렇지만 마이크를 쥔 연사와 연설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참여자, 집회의 지도부와 일반 참가자 사이에는 위계와 서열화와, 소외와 배제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흩어져 있던 열정이 모여 폭발적 힘을 발휘하려고 만든 집회라는 공간에서 오히려 각자 품었던 열정이 움츠러들고 지리멸렬해지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된다.

집회 참여자와 시민 사이의 소통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언제부터가 이런저런 선전물은 시민들을 향해 공들여 전해지는 게 아니라 집회 참가자 안에서만 돈다. 시가행진을 할 때도 앰프를 단 방송차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행진을 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동참을 권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저항의 열정을 잃어버린, 열정을 오히려 가로막는 집회

법의 울타리에 갇힌 타협적 집회문화도 문제이다. 집회 참여자들의 폭발적 열정을 집회 주최측이 경찰보다 먼저 나서서 정돈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벌어진다. “청와대까지 오늘은 반드시 가겠다”는 주최측의 이야기를 끝이끝대로 믿는 참여자는 이제 별로 없다. 계획도 의지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집회 기획단의 평가가 공개되거나, 집회에 제안하고 싶거나 평가할 지점을 집회 마지막에 열어두는 방식을 충분히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집회라는 그릇을 누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내고 있나?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집회는 누가 기획하고 있을까? 집회는 열린 광장이기에, 그 기획도 다양한 참여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함께 기획해나가는 것이 정답이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집회를 도구적,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기획자도 기능적 업무분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늘 써먹던 방식대로 특별한 기획 없이 관성적인 방식으로 집회 판이 짜여 진다.

비정규직 법안이 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뺨푼기를 나눠주며 팔 걸기를 시도한 ‘왕 의적시위실천단’의 시위는 참여자들이 직접 시위를 기획했을 때, 어떤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물론 기획 과정에서 문화연대의 도움을 약간 받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참여하는 우리가 재미있을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실천단의 의지가 이런 기획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집시법에 관한 집회

집회가 합법 불법의 논란에 가로막혀 실제 집회의 목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도, 집회가 차벽으로 둘러싸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공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도, 정작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타격하기 위한 운동은 운동사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 집시법에 늘 간혀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두는 법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문화는 운동의 현재 모습을 비춰 주는 거울

집회에서 드러나는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들은 단지 집회 공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스란히 집회라는 공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바로 잡아나가는 일은 집회기획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운동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나가는 일로 폭 넓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집회 공간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가슴 뜨겁게 배우고
배우고 느낀 것을 거침없이 말하고 실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여들고
그러면서 가슴 뭉클해지도록 힘 받는
그런 집회.

더 이상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추억하지 말고, 오늘의 일기장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함께 안간 힘을 써보자.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

넷째마디-언어

운동은 삶을, 언어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

-외톨이 언어를 버리고, 연대를 위한 언어를 사용하자

1. 들어가며

우리(운동가들)는 고립된 외톨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사회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 진보를 꿈꾸는 노동자(또는 직장인)들이나 주부, 청소년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고립화는 운동사회간의 연대(시민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 환경생태 운동...)를 해치고, 보다 많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한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외톨이여서 운동이 외톨이인지, 운동이 외톨이여서 언어가 외톨이인지, 그 선후를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운동이 외톨이라서 언어를 외따로 쓰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 표현되는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운동사회의 언어가 외톨이가 된 것은, 운동 사회 자체가 외톨이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톨이 언어 문제를 따로 떼어뜨려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안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우리 내용(운동)이 얼마나 외톨이였는지 언어를 통해 다시금 성찰해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작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외톨이 삶(운동)을 버려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크게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들 떠 볼까요?

우리를 포함한 운동가들은 **1. 소동을 거부하는 고립된 언어 2. 고급단어와 어려운 말로 점철된 지식인의 언어 3. 자기를 담지 않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라 함은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발언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글은 아무래도 좀 더 긴 호흡으로 개념을 설명 할 수도 있고 말과 다른

문어적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가 아니라면 소통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의 역사적 몫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호소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문제로 인해, 일반인들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운동사회간의 벽조차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회운동포럼만 하더라도, 사회운동포럼에서 제출한 제안문을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보여 주었더니, 재미없어하더군요. 근처에는 너네쪽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얼 하나보다...라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회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2. 소통을 거부하는 고립된 언어

1)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의 남발

1) 제안 취지와 목표

- 6월항쟁 20주년, 반신자유주의 투쟁 10년의 성과와 한계, 진보운동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망을 모색한다.
- 서로를 넘나드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의 보편적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운동의 분업구조와 단절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운동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행동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 사회운동포럼은 하나의 행사이자 운동의 과정이다. 본 포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실험의 경험은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위의 제안은 바로 사회운동포럼의 제안문에 있는 취지와 목표입니다. 우리가 익히 써 왔던 단어들이고 문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50대 노동자가 읽기에는, 이제 딱 운동사회에 발을 들인 자원 활동가가 읽기에는 자신과는 너무 먼 언어입니다. 이것은 ‘투쟁’ ‘이념과 전망’ ‘의제’ ‘주체’ ‘분업구조’ ‘전략과제’ ‘도출’ 등의 단어...우리(운동을 업으로 하는 이들^^)가 즐겨 쓰지만, 50대 노동자가 쓰는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글은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운동포럼의 제안문이니만큼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썼다는 아래의 글을 볼까요?

2) 분노만이 남은, 일방적인 언어

국방부와 경찰, 검찰과 법원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쟁성 주민을 다치게 하지마라.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하지마라. 외국군대에게 제나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바치기 위해 더 이상의 불법과 반인권을 저지르지 마라. 전 세계의 양심이 지금 이곳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법을 앞세운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 박태군, 조백기를 석방하고 쟁성의 강제토지수용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것은 역사가 가르친 것이며 민중이 헤쳐 온 진리임을 명심하라.

위의 것은 2006년 3월 다산인권센터가 발표한 ‘명택 쟁성을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 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입니다. 박태군, 조백기 활동가 구속에 이은 분기탱천한 성명서이지요. 읽고 있으니 숨이 딱힐 것 같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고 감정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죠. ‘나는 분노한다, 들어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절실한 요구를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의 상태, 그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 흥분한 사람의 말을 통해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목조목 천천히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언어들에 고수하나? 우리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물론, 옳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전달방법까지 옳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조차 모두 옳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일방적이고 격양된 언어에 대한 고민도 던져 봅시다.

3) 호소력을 잃은 언어

우리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내팽개치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성을 바치는 노무현 정부를 더 이상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신유주의 노동탄압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성난 파도와 같이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

위의 것은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비정규노동자를 수형으로 몰아넣은 노무현대통령은 퇴진 밖에 길이 없다’ 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위의 문장 중에는 ‘자본’ ‘신자유주의’ ‘노동탄압’ ‘투쟁’ ‘선포’ 라는 익히 들어온 단어들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의 단어들 무조건 문제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단어들 나열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딱히 분노조차 일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저런 단어들로 성명서를 끝갈 쓰지만, 솔직히 그런 때는 너무 바빠서 심사숙고하며 글을 쓰지 않을 때입니다.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을 별로 설득하고 싶지 않은 상태’ 라는 것이죠.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연설문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그이가 담고 있던 진정성 때문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던 친숙함 때문입니다. 아래는 부산지하철 매포소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그이가 읽은 연설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출근시간의 번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출근할 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침마다 외로웠던 사람들. 166일이나 됐으면 이제 익숙해질 판도 하련만 이 외로움은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매일 아침 천막 앞에 설 때마다 한숨부터 쉬게 되는 사람들. 84일이나 됐으면 친숙해질 판도 하련만 이 딱딱함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퇴근선전전을 할 때 바쁜 걸음으로 퇴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녁 노을보다 더 서러워지는 사람들. 듣도 보도 못한 점거농성이란 것도 해보고, 난생 처음 경찰들과 싸움도 해 보고, 하늘같은 시장님 쳐어맨 앞에 드러누워도 보고, 천막도 쳐보고...

4)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과격하거나 선명하기만 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를 쫓아내기 위해 활동을 막 시작한 단계인데 마침 통일선봉대 학생들이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집회에서나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애국하는 학생들을 잡아가두고, 한총련 ***의장님을 구속했으며... 우리는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조국통일 투쟁에 복무하겠습니다. (위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선전전을 하면서도, 몇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동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으라는 것인지 앉아있는 소수의 동지들과 소통하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미제국주의' 라느니 '자본가 새끼들' 이라느니...듣고 있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과격하거나 선명한 언어만을 구사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왜 말을 하고 있는지 잊은 상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5) 관성적이고 상상력을 잃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 내는데, 게을러진 사람들은 관성적인 것만을 답습합니다. 활동 전반이 그렇다보니, 언어는 더합니다. 각성하라, 퇴진하라, 연대하자는 등의 언어인데, 이것은 호소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호소의 의지가 없습니다. 호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겠다는 의지는 절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읽었으면 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은 점점 딱딱해지고 추상적이고 쓰지 않는 단어들로 점철됩니다. 단체 내부에서나 쓰는 말을 그대로 바깥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곡적 협상이다' 이다 라는 피켓은 설득적이기는 한데, 설득적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한미FTA 약값 올라 싫어. 광우병 소고기 싫어'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매번 쓰던 말들을 벗어나 상상력이 발휘된 언어를 듣고 읽고 싶습니다.

3. 고급단어와 어려운 말로 점철된 지식인의 언어

고급단어, 전문용어,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 속에 녹아든 이야기를 할 능력이 없으니, 개념화 시켜서 설명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딱딱하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해야 편해집니다. 가끔 회의에서 경험하는데, 어떤 이가 자기 언어로 쉬운 말을 하면 사회자가 그것을 다시금 개념화된 언어로 정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한 말은 ‘우리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내오자’ 는 말인거죠?” 라는 식으로요.(맘소사,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전문가들 중심의 운동이 성장한 탓이 있을 겁니다. 활동가들조차 무계 중심이 높아진 전문가들의 언어를 따라 쓰게 된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인권운동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다보니, 쓰게 되는 용어나 사고를 구성하는 체계가 법률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 어느 순간 그런 용어들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함 없이 복사포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실, 전문가들보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까블지 마라라는 비아냥도 있었겠지만서도, ㅎㅎ 그랬거나 저했거나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려운 글이나 말을 쉬운 글이나 말로 고쳐 쓰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줄었다는 말이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겠지요.

4. 이유 - 자기를 담지 않은 언어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고립되고 어렵고 외로운 언어들 쓰게 되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일단 새로운 활동양식 기획단에서 고민해서 찾아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삶속에서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없다. 자기를 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언어를 써야하는데 남을 분석하는 데만 주력하다보니 이를 쓰지 못하는 것이다.
- ▲ 적들과의 싸움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강해져야하고, 선명해져야하고, 똑똑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고 이의 반영이 언어이다.
- ▲ 운동이 외톨이인데, 언어가 외톨이가 아닐 이유는 없다. 원인은 우리 운동이 외톨이이기 때문이다.
- ▲ 들었으면 읽었으면 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다. 즉, 새롭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운동권들이 즐겨 쓰는 언어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운동사회가 대중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자기를 담지 않은 언어...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언어...위 문제의식의 핵심인 듯합니다.

교육운동을 하는 이들의 예를 보면, 어쨌든 이들은 교육대상자라는 구체적인 이들을 만나게 되다보니 아무래도 어떤 영역의 운동가들보다 보다 쉽고, 보다 호소력 있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교육효과가 높은지 고민하는 만큼 이를 해설하는 언어에도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과 촉진자들이 스스로 쓰는 언어에 신중하게 되고 노력하지요. 운동바깥에 있는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고민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한편으로 남을 분석하고 성토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어느덧 설명하고 설득하기만 바빠진 운동가들은 자기를 들여다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삶에서 녹아든 운동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한미FTA가 체결되고 비정규직법 통과되는 것이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활동가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안이 많으니까 더 바빠질 뿐이죠. 그러나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운동이 내 삶에서 무엇인지, 다시금 구성하고 되돌아보면 좀 더 멋진 언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슴 따뜻한 무엇.

5. 우리를 감동시킨 어떤 글과 말들

1) 어느 네티즌의 편지글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

얼마 전 있었던 살살페스티벌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열린 새만금락페스티벌에 대한 네티티브한 취지의 행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자는 취지로 열린,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마무리한 이들은 놀랍게도 진보넷 블러거 등을 포함한 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체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도 각자 이 행사를 살리기 위해 모였고, 논의하고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 배경에는 각자가 쓴 글들이 또 다른 하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며, 차를 타고 가며 종종 김창완님의 아침창을 듣고, 또 님의 노래를 좋아라 흥얼거리는 편입니다. 또 평소 자전거를 즐기며, 여유와 배려, 우정과 환대를 실천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새만금 락 페스티벌 출연자 명단에 김창완님의 이름이 있어 놀랍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새만금 락 페스티벌은 공연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그간의 새만금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환경재앙, 어업인들의 생활권에 대한 소중한 논쟁들을 그저 덮어버리고, 시끄럽고 번잡하게 한판 놀아보겠다, 그래서 그 논쟁들은 있고 인간이 저지른 엄청난 파괴를 거나하게 즐겨보자는 것일뿐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한 소중한 사람들, 학자들, 환경운동가, 문화 예술인, 학생들과 어린이들, 종교인들과 주민, 또 인간의 언어를 갖지 못한 군산, 김제, 부안에 이르는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와 조개, 갯벌생명체들과 새들의 울부짖음, 한순간 평생직장을 잃고 우울증과 합병으로 하루 하루 시름이 더해가는 그곳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소중한 삶과 이야기들을 덮어버려자, 그리고 그냥 시끄럽게 한판 놀다보면 그대 사람들이 혹해서 그런 이야기들 다 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만금 락 페스티벌은 락(rock)을 위한 잔치도 아니고, 무슨 청년 문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거짓이며, 단지 새만금, 새만금간척사업을 구지 해야 했던 그 전라북도의 정치인들과 디플로머들, 한국농촌공사와 현대건설 등이 저지른 거대한 재앙을 축하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새만금 락 페스티벌에 출연 하시기로 하셨다면, 새만금간척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그곳 군산과 부안 김제의 사막이 되어버린 바다와 하루하루 시름이 깊어가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창완님의 새만금락페스티벌 출연예정은 그저 어떤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겠지요. 좋은 음악이 좋은 문화인들이 그렇게 새만금간척사업 따위의 저주스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http://blog.jiabo.net/page/?cid=1&pid=202>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는 작년 평택 대추리 투쟁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미운동에 머물고 있던 평택투쟁이 확장된 데는 마을에서 살던 활동가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눈물과 삶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책 '들이 운다' 를 발간하고, 빈집을 수리하고 살던 또 다른 활동가들이 자기 블로그에 쉬운 언어로 호소를 한 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글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댜지 플리는 그곳

강좌도 넘치고 교육프로그램도 넘치는 때, 유독 마음을 끄는 강좌가 있습니다. 문화제도 있구요. 오늘도 여전히 바른 그녀가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달려가고 싶게 만든 곳이 있는데, 이런 식의 유희입니다. ^^ 제2회 지리산문화제의 초대 글이랍니다. 지리산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토록 적절하게 표현되었군요.

지리산...

혹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지리산이 자리잡고 있다면

지리산을 다시한번 기억해주세요.

만약 지리산에서 마을의 위안을 찾으셨다면

이제 지리산을 위로해주세요.

.

지리산 자락에 땀을 만들어서 수상스키를 즐기게 한답니다.

지리산까지 케이블카를 놓아서 편안하게 산에 오르게 한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을 짓겠습니다.

자카용 속도가 느리다고 지리산 아래에 있는 성진장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힌답니다.

.

<http://episode.or.kr/choasin/258>

3) 투쟁의 원동력이 된 호소

사실 지난 FTA반대 노동자대회 때 뉴코아 노동자가 읽어내려 간, 편지글이 그토록 귀에 못이지 않았다면 아마 투쟁 중에 유달리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인 투쟁으로 뉴코아 투쟁은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썼던 편지글 하나는 그렇게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투쟁의 원동력 되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대추리에서 할머니들이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지' '올해도 농사짓자' 라고 외쳤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중요한 요구는 바로 일상과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아래는 대추리 김지태 이장이 황새울을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에게 보냈던 편지글의 한 대목입니다.

'그 너른 들판을 사시겠다고? 그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니 너무 작고 불품이 없어서) 나는 상상을 못할 지경이니깐. 힌트를 드리자면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지금껏 거두었던 벼의 낱알의 개수만 하다고나 할까. 그것을 일구기 위해 굶餓다 썼던 관절의 운동 횟수만 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한 가지 더. 그들의 시간, 헌숨, 울음, 웃음 그것을 내려다보았을 별빛이나 시름을 달래 주던 바람의 총량까지 합하면 대충은 나올 것 같다'

4) 구호 하나를 만드는 것도 남달라야 합니다

투쟁을 준비하면서 보다 전달력이 높고,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대표구호를 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여하면서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쟁의 의미를 다시금 정리하게 되고, 대중들을 만나는 지점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쟁이들의 카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피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날 며칠을 회의하고 만들고 폐기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합니

다. 기껏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우리의 열망과 비교할 수 없을진데, 자본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구조를 하나 만드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 보자. 그럼 좋은 구조는 나온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농사짓자’ ‘평화를 택하라’ ‘한미FTA 안돼! 왜 거짓말이니까’ ‘서울시는 봄이 김선달인가’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6. 나오며

그 외에도 시민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일명 좌파운동 단체들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을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선뜻 제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제안문의 언어와 지금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화를 그들과 함께 나눌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어느 순간 운동사회간의 경계조차 넘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었지요.

얼마 전 풀뿌리 운동을 고민하는 한 사람이 프레이리의 ‘대학’을 설명했는데, 그때 들은 일화 하나로 제 고민의 수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어는 ‘대학’을 위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프레이리가 어떤 마을에 갔답니다. 유명한 학자가 왔으니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였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눈을 빛내며 프레이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가르쳐 달라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서로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해 보니 각자 10개정도를 서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프레이리는 배우는 자세, 아는 것을 나누는 자세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추모종을 어느 달에 심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작 ‘한미FTA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만을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삶의 지혜와 사회진보를 위한 우리의 방향이 맞는 지점을 찾아나가는 대학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생이다. 이런 맘이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민중의 바다에서 언어를 건져낸다면, 운동도 보다 풍요로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 양식

다섯째마디-교육

교육이 변혁이다

사회변혁을 위한 우리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쟁을 이루어내는 변혁적 주체를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를 누구나 말하지요. ‘의식화’란 무엇입니까?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기 삶과 사회는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는 것이겠지요. 또 자기 안에 억눌려있는 해방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의식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의 깨어남, 감수성의 깨어남이 없다면 변화를 일구어내는 자율적인 발걸음도 이어지지 못하지요.

이러한 ‘의식화’의 과정에서 교육은 아주 큰 노릇을 합니다. 어떤 운동도, 어떤 활동가도 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너도 나도 운동의 혁신 과제로 교육의 일상화 또는 교육의 강화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교육활동은 여전히 상상하고 틀에 박혀있고 역량도 길러지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 실천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걸림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지 못하는 데는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새로운 활동양식 기획단이 잡아낸 실마리였습니다.

1. 제자리를 잃은 교육

기획단에서는 사회운동포럼으로 오기까지 사회운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노조, 사회단체 활동가들,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교육활동의 현재를 분석한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교육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다, 교육을 부여받고 고민하고 기획할 담당자도 부족하다, 교육내용이 거기에서 거기다, 삶과 유리된 교육이다……. 많은 이들이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는, 꾸역꾸역 해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족하지만 어

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교육과 활동가들 모두가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 따져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교육의 현재를 말해주는 현상들이 과연 원인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며 따져보니 결국 우리 운동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기획단이 꼽아본 세 가지 문제 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계몽에 치우친 교육' 이고 또 하나는 '도구가 되어버린 교육', 나머지 하나는 '주변으로 밀려난 교육' 입니다.

교육=일방적 지식전달?

사회운동내의 교육은 그토록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공교육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다를까 의문이 듭니다. 교육이란 삶을 통찰하고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교육이 꿈꾸는 변화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 교육의 전체도 목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활동은 계몽에만 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많은 교육이 강연형태로만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강연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연 이외의 다른 교육은 상상하지도 시도하지도 않는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열매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많이 알고 있는 이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것이 곧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면, 주로 외부에서 '좀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강연자로 모셔오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 좀더 많이 공부하고 분석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가 현실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는 주로 학벌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유명세, 책의 저자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그들의 교육내용이나 깊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교육자에게 부여하는 틀에 박힌 권위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전문가,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경험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름에도 교육의 성격과 관계없이 '제한된 권위'에만 기대 채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어떤 교육이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와 자기 삶을 연결시켜보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은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단 한 번의 강연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 아닐까요? 나아가 강사를 모셔오는 데는 무척 공을 들이면서도, 그 강사가 교육 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연 내용을 재구성하게끔 독려하는 과정은 교육기획에서 때

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는지를 알아보지 않은 채 유명 인사를 섭외하는 데 더 공을 들이는 교육 관행은 교육 외에도 할일이 많은 우리들이 가장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숫자'에 얽매어 성과를 판단하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갔는가는 평가서에 남는 것이기에, 강사를 섭외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매달리는 교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나 주체가 되는 교육, 참여자를 중심에 둔 교육 없이 민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나 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나는 진리이다, 너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너는 알아야 한다' 는 식의 계몽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로서의 교육을 기획해야 합니다.

도구가 되어버린 교육

교육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도 문제입니다. 계몽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교육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런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 조직을 확장하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접점, 조직 동원을 위한 사전 절차 등등... 정당이나 노동조합 같은 거대조직이 작은 단체보다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당은 정책 중심 교육이나 당면 투쟁 이슈만을 주로 다루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관련 내용, 단사 투쟁사안, 조직화/선전 방법, 간부 자질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기 조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조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내용을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구현해야 하며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들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교육활동은 실종돼 있습니다. 큰 집회나 투쟁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정세 교양 위주의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투쟁 사안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양한 투쟁을 기획해볼 수 있게끔 교육에 충분한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교육에는 긴 호흡이 자리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급한 일도 많은데 교육은 나중에

세상은 무엇 하나만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운동을 통해 당장에 성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은 욕심을 부리자면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갈피를 잡기 힘들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니 시간도 공도 많이 들고, 한번 했다고 해서 눈에 띄는 결과도 당장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해결해야할 일들이 쌓여있고 하나같이 긴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사업은 연기되거나 계획조차 잡기 힘들어지고, 설사 진행된다 해도 형식적이고 현실

적인(앞서 이야기한 조직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 교육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 교육담당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고, 긴 호흡으로 교육을 기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교육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우리 운동이 교육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아닐까요?

2. 교육의 제자리 찾기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탐색 과정으로서의 교육, 자신의 힘을 발전하고 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교육, 전체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교육, 대안사회의 가치와 원리를 꿈꾸고 밑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운동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이 꿈꾸는 사회 구조의 변혁은 그 변혁을 꿈꾸고 일굴 주체들의 해방과 힘 기르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왜 우리는 자꾸만 깜빡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운동이 삶과, 민중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장에 발을 딛는 교육은 단기적인 호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뿌리를 둔 교육은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성을 바라보게 되고 그 때문에 사회를 전체적으로 읽고 다양한 가치가 마주치고 넘나드는 교육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과정에 중심을 둔 운동, 민중이 주체가 된 운동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변혁을 향한 주체형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의 고민을 운동의 주요 과제로 받아안아야 합니다. 사회운동에서 교육은 '알=실천'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순을 알고 그 모순을 향한 역동적인 저항성을 만드는 과정이 교육이고 운동입니다.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실천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목표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누구의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로서 교육 참여자들을 대하고 교육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교육을 고민하는 이들을 만들자

우선 교육담당자 또는 집단을 만듭시다. 이것은 현재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교육을 누군가의 역할로만 맡겨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내용과 실제 활동하는 주체는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사업에서 교육은 필수적으로 녹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담당자를 두자는 것은 교육에 조직적 역량을 배치하고 지원하자는 말입니다. 교육활동은 교육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에게도 역량강화의 기회가 됩니다.

2) 모여서 나누자

모든 교육을 개별 조직이나 담당자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교육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나 교육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조직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활동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통해 교육활동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 긴 호흡으로 준비하자

교육은 1회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과 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준비과정도 충실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교육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수록 참여자들은 더 많이 공감하고 더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것입니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후속활동을 해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2개월 짜리 교육을 준비하는 데 6개월, 1년의 공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 참여자들의 동기를 파악하고 내용을 짜는 교육이야말로 원하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아닐까요?

4)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실험하자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연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형식을 달리하는 것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교육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이 주체 형성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의 삶을 분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읽고 표현하고 부족한 생각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이랜더 교육센터의 창립자인 마일스 호튼의 교육 철학을 인용해서 말하면, ‘교육은 교사가 문제의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그것을 토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사람만 말하고 참여자는 듣기만 하는 방식보다는 참여자와 교육자가 함께 지식, 경험,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의 실천, 변혁으로서의 교육

운동이 현장에 밀착해야 한다는 말은 운동을 풀어내는 공간적 의미로만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민중들의 삶에 발을 딛고 선 운동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교육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삶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가치들이 넘나들고 마주치는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육은 참여자들이 자기해방을 통해 주체로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과정일 때 교육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실천이며 변혁입니다.

새로운 활동양식 기획단이 사회운동포럼으로 오는 길목에서 개최한 도움닫기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운동(또는 전체운동)을 나무로 표현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를 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해보도록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나무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살찌우는 거름, 나무에 맺힌 열매, 나무를 키우는 태양, 연대의 힘으로 나무를 지탱하는 띠, 한 그루의 나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자라게 하는 밀힘, 나무를 숲으로 만드는 힘, 잘려도 잘려도 그 자리에서 운동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힘 등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 다양성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교육이 우리 운동을 키워나가고 메마르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살이 보이고, 삶을 부여잡고, 삶을 재구성하는 교육,

그러기 위해

실제 교육시간보다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교육,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기 삶과 사회를 탐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

자기 운동이 다루는 가치나 의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넘나들고 마주치는 교육,

그래서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로, 모든 활동가가 나누어야 할 경험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는 교육일 때,

교육은 변혁을 위한, 변혁으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 나의 운동이 생기를 잃어 시들어가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자기가 속한 공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 실천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교육 실천을 조직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운동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일일교육에서 <황금거탑>이라는 제목의 마당극으로 의료시장화의 문제점을 교육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전문 연극패에 의뢰하고 무대를 쌓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고 보여주기식에 그친 아쉬움은 있지만, 병원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을 고민들이 생생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의료 시장화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의료 불평등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더군요. 열 개의 연속 강좌를 여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하나의 조직이 교육에 이 정도의 힘을 투여할 만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점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조직은 교육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사회 운동 포럼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사회 공공성 워크숍 기획 내용

■ 기대 :

- 사전 워크숍에서 분야별로 진행되었던 사회공공성 운동 평가를 공유하자.
- 사회변혁의 밑그림 속에서 '보편적 권리의 확장' 과 '삶에 대한 자율적 선택' 이라는 관점으로 사회공공성 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마련해 보자.

■ 일정 : 8월 31일 저녁 7시 ~ 10시 약 3시간

■ 장소 : 성균관 대학교 33203호

■ 참석 예상자 :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활동가

■ 프로그램 :

1부: 도전! 골든벨 (30분)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다 함께 몸풀기, 마음 열기
- 낱말퍼즐 퀴즈를 통해 그동안의 사회공공성 투쟁을 돌아보는 시간
- 사회 : 김하늬
- 준비 : 질문지와 답 만들기, 매직과 종이

쉬는 시간(10분)

2부: 대화로 풀어나가는 사회공공성 - 사회공공성 투쟁의 쟁점 토론과 경험 나누기(120분)

- 현실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쟁점을 풀어나가는 시간
- 사회 변혁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며 현재 떠오르는 이슈를 '보편적 권리의 확장' 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라는 관점 속에서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단초를 마련하는 시간
- 피널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경험과 견해들을 함께 나누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 '발언대' 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피널 참여 : 사회서비스공대위(간병인노조), 현정희(공공노조),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김진익(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하늬(사회공공성기획단) 등.
- 사회 : 공성식(사회진보연대)
- 준비 : 사전 피널미팅을 통해 쟁점 뽑고 토론의 개요 잡기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사회공공성 투쟁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투쟁 - 사회공공성 투쟁

공공서비스 약화 및 시장논리로의 재편, 극심한 생존권 위협과 사회안전망의 (거의 완전한) 부재, 사회 재생산의 위기, 이윤경쟁 등 전 방위적인 시장논리 강화, 양극화 및 빈곤화의 심화,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이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모든 세력이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본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보장해 성장을 한 후에 분배하자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구제 정책을 끊임 없이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낳는 원인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자본은 양극화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민간자본이 진출하고 정부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의 틈을 비집고 이윤 창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변혁운동은? 한편으로는 생존권 투쟁이 극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1998년 정리해고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2007년 비정규약법에 맞선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모양과 당면 현안은 달라졌지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는 기본적인 가치는 일관되게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투쟁으로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생존권 투쟁과 직간접적으로 결합되면서 근 10여 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 혹은 특정 집단의 생존권이나 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로는 '다른 삶' 이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앞에 무너지는 공적 시스템은 되찾아야 한다는, 나아가 전 사회적인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자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고 운동의 확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투쟁이 판개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한계' 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혹은 여러 가지 딜레마와 논점들이 도출되기도 한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다른 삶, 새로운 사회' 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제 그동안 사회공공성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출발.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중 〈사회공공성 워크숍〉을 준비하는 기획단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토론 과정에서 수많은 지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고, 워크숍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다. ‘사회공공성 투쟁’의 범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되었고, ‘사회공공성’ 담론 그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현실 운동에서, 그리고 변혁적 전망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기도 했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많다? 별로 없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획단을 괴롭혔던 것은 ‘평가할 재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던 단위들이 기획단에 결합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회공공성 투쟁 자체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다. IMF 이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사회공공성’을 이야기해왔고 또 그러한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평가할 투쟁이 많지 않다니...

공기업 민영화 저지 투쟁, 교육의료 등 몇몇 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의 투쟁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특별히 사례로서 검토할 만한 투쟁이 꼽혀지지 않는다. 그 외의 투쟁들에 대해 이야기해볼라치면 “특별히 사례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저 이제 시각해보려고 문제의식 정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라는 이야기들이 되돌아오곤 했다.

여기가 우리 토론의 출발점이다. ‘사회공공성’ 또는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담론은 많은데, 정작 구체적인 투쟁의 사례나 확실한 주체가 얼마나 있는가?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들이나 운동 단위들이 모여서 현실을 분석하고 무엇을 바꿔내야 할지를 토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정책 제시, 특정 법률이나 제도를 둘러싼 국회-정부 압박 외에 어떤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회공공성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실천하면서 만들어 왔던 가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당장 답을 내기 어렵다면, 먼저 질문을 분명히 하자

기획단의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사회공공성 투쟁이 잘 될 것’이라는 답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실천 과정에서 빚어내고 검증해야 할 과제와 질문들만이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그 질문들을 분명히 정리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 넘어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재, 그리고 그 투쟁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사회공공성의 의미와 과제

사회공공성 투쟁 평가와 과제

2007년 8월 31일, <사회운동포럼 사회공공성 워크숍 기획단>

1. 먼저 돌아보자 - 사회공공성 투쟁의 출발과 흐름

1)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와 이로 인한 생존권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한국 사회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던 것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본격화와 시기를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는 가장 먼저 노동 유연화와 공공부문 축소로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 합법화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생존권을 위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성 논리를 앞세워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존권 또한 공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부문 축소, 노동자 생존권 파괴에 맞서는 투쟁으로서 기존의 것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갖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투쟁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이었다.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가장 정면으로 부딪혔던 투쟁이었다.

‘민영화’라는 형태로 소유 형태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다각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평가시스템과 예산을 무기로 수익성경쟁 논리로 공기업들을 재편해 왔다. 이에 맞서는 투쟁 또한 각 기업 및 업종 단위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2)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사회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투쟁

먼저,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짚고 가야 한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누군가 추락할 때 그 사람의 신체가 상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추락한다’라는 현상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란 생존권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전제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생존권 파괴 자체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보다는 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질 정도의 파국만은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상징

과도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공공성 강화, 양극화빈곤화 자체의 폐절, 인권 등의 관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단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그런 ‘안전망’ 을 설치하는 것조차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절박하고 힘겨운 투쟁이었다. 시민주의적 전통 하에서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 왔던 서구와는 달리,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한 조건에서 신자유주의가 급격히 도입되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락’ 을 경험했다. 언론을 통해 실업자, 노숙인, 생계형 범죄, 자살 등을 목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조건에서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적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투쟁이 즐기차게 이어졌다. IMF 초기에 실업극복운동, 자활후생기관 설립 등에 대한 제기가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소득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가 중요한 투쟁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라는 4대 보험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공공부문 외에도 사회적 공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다. 금속 업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회공헌기금과 관련된 논쟁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개별 기업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공적 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 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 또한 적극적으로 나섰다.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락’ 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구제책을 만드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 즐기차게 이어졌다. 관련 기관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단체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2003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빈곤운동’ 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3) 사회 재생산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공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쟁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며 가장 광범위한 투쟁을 형성해 왔던 것은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 재생산과 관련되는 영역들이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사람을 재생산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다. ‘이윤’ 이 모든 정의에 앞서는 논리가 되면서 ‘이것만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고 생각해 왔던 통상적 정서를 가장 강하게 자극했던 영역이기도 했다. 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받기 더욱 어려워진 조건에서 그 서비스 생산 구조마저 이윤 논리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에 대한 저항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투쟁은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촉과 이윤 논리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촉의 충돌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심각했다. 최근 의료법 개악을 둘러싼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의사 이해집단 간의 충돌, 교육노동자들의 투쟁과 사교육시장 및 사립재단 등과의 충돌, 보육조례제정운동과 민간 어린이집과의 충돌 등. 그만큼 ‘사회의 공동 책임’ 으로 이루어져야 할 많은 것들이 ‘이윤’ 을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어찌되었든 각 현장지역에서부터 투쟁이 조직되면서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의 슬로건이 제출되는 데에 이르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의료 등의 영역에

대해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요구가 제출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의료교육의 경우 처음에는 기존 시스템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사적 노동이었던 분야를 사회적 노동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편 전략에 따라 간병, 요양 등과 관련된 분야가 개별 가족단위에서 해결하던 사적 노동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서비스의 질과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서비스공대위'와 같은 연대체 운동 등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4)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 투쟁

노동운동과는 다른 흐름으로 인권·빈곤·소수자 등과 관련된 운동을 자기 의제로 삼는 사회운동 단위들에서 주거권, 건강권, 이동권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해당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보다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직접적 권리 침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각 영역에서 사회공공성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피나는 투쟁이 전개되어 온 이동권 투쟁으로 인해 요금이나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해 왔던 교통공공성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다 보편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었다. 주거권 투쟁 또한 인간의 생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단 한 번도 공공재이지 못했던 '집'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건강권, 교육권 등 여러 영역에서의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편적 권리' 담론이 대중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거기서 분배되는 만큼의' 권리 '라는 인식에서' 능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 '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사회공공성 투쟁과 결합되면서 그러한 보편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지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5) 자율적인 네트워크와 실험, 혹은 제3섹터 운동

다른 한편으로 자율적인 네트워크와 실험, 국가시장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제 3의 영역으로서 '공공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생협운동, 시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나눔운동, 자율적인 보육교육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운동은 여러 갈래를 갖고 각기 다른 문제의식에서 전개되어 왔다. 대안 사회를 지향하면서 대안적 삶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사고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사회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운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나 사회 전체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거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전제를 일정하게 깔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해보자'는 흐름 또한 존재했다.

이런 운동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부분적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경쟁과 이윤이 아닌 새로운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을 담는다는 점에서 딱뜨리지 않아야 하는 흐름이다.

6) 저항을 넘어 대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사회공공성 투쟁은 여러 흐름이 서로 결합되면서, 혹은 만나지 못한 채 따로 따로 전개되어 왔다. 그 출발과 영역이 어땠든 투쟁 과정에서 주체들은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필연적으로 요구 받았다. 그것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나 법률로 표현되기도 했고, 대안적인 삶과 사회 시스템을 상상하고 그것을 집약시켜내는 가치와 주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가 사회 각 영역에 전면화되는 것만큼 투쟁의 영역 또한 확장되었다. 금융, 물, 행정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민과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사회공공성’은 특정 영역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및 삶의 구성 전반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 평가와 과제 -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하여, 그 범주나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평가 또한 다양하다. 얼마 되지 않은 투쟁이지만 벌써부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투쟁 딱 바지에 가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라거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얻기 위해 덧붙이는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라는 극단적인 평가들도 나온다. 또한 노동조합 상층이나 일부 사회단체 활동가들 외에 현장과 지역의 대중적 주체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투쟁 과정에서 대중이 어떻게 주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의제 자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정작 투쟁은 해당 영역 노동조합이나 일부 사회단체에 국한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사회공공성 투쟁의 진전을 위해 어떤 한계를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대이다. 이는 현 수준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도달해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투쟁 평가와 진단에 있어 한 가지 곤란함이 있다. 주로 노동(조합)운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많은 영역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중투쟁이 형성된 것은 노동조합(또는 노동조합과 다른 조직들의 연대체) 외에 별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의식을 확장해 왔거나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제기해 왔던 사회단체들이 있다. 보육조례제정운동 등 몇 가지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 정당이 주도한 운동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재료는 노동조합운동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로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현재 넘어서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1) 모두의 과제. 그런데 정작 자기 과제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임단투어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준비하고 투쟁한다. 그런데 사회공공성 투쟁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곤 한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그나마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

누구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당장의 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것들이 있다. 그 투쟁의 중요성은 단지 당위일 뿐이다.

사회공공성 투쟁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뒷전으로 밀리거나 조직의 일부(이클레멘 관련 사안에 관한 대책위에 결합하는 실무자)만의 사업으로 그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외협력사업’이라는 형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초 사업계획서에 등장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너무나 왜소해져버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공성 투쟁은 곳곳에서 확장되고 있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별로 전개되지 않는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서 사회적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구호로 덧붙이거나 임단협 때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다. “불량부품으로 정비한 지하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 선전물은 볼 수 있지만, 불량부품 사용 거부 투쟁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는 못한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건설자본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행동을 조직하지만 일상적인 시기에 부실공사 투입을 거부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긴 어렵다. (물론 사회공공성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굳이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존권노동권 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정당하다.)

조합원-당원-회원들 개개인에게는 주거교육의료교통 등이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정당-사회단체에서는 일상적인 자기 과제로 인식되지 못한다.

2) 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 그 다음에는?

‘사회공공성 투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토론회나 정책간담회, 법률만 공청회 같은 것들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집회 같은 거 밟긴 하지만, 그런 굵직한 밀정 결합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감감해 하는 문제가 있다. 지침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이나 중앙당의 ‘지침’으로 집회캠페인 등에 결합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책담당자들은 바쁜데 대중 행동 양식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현재의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해 진단해야 할 두 번째 문제이다.

흔히 ‘투쟁이 잘 된다’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은 대중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형성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투쟁 주체들 뿐만 아니라 그 투쟁 이슈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대중적 지지, 나아가 참여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제들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별적인 저항이나 범죄자살 등의 행위는 늘어나지만 집단적 저항은 좀처럼 조직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소득 증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해야 할 행동 양식은 파열구를 뚫고 뛰쳐나와 광장을 형성할 때의 그것이 아니라, 파열구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 여전히 '인원 동원' 과 '머릿수' 에 가 있는 관심을 조금은 옮겨야 할 것이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곳곳에서 부딪치는 점점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 최소한 주변을 돌아보고 연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3) 대중적 주체 형성의 문제

'오랫동안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요구들 다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나마 노사협이나 대정부교섭을 통해 몇 가지는 쟁취해 왔다. 그런데 현정에는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 '노동자' 가 아니라 '조합원' 만 남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회공공성 투쟁의 요구는 사회적 제도나 법 제·개정으로 집약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힘에 바탕한 사회적 타협에 집중한 나머지 대중의 주체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투쟁 과정에서 무엇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형성해야 하는가? 우선은 당면 투쟁 요구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당면 요구 뿐 아니라 새로운 지함을 만들어내야 한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이 분배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4) 소유 형태에서 운영의 문제로, 그리고...

'외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에 대해 신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 논리가 먹혔던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소유 형태만 문제 삼았는데, 국가 소유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이윤 논리로 되고 있더라는 거죠.'

사회공공성 투쟁 초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소유' 의 문제였다. 민영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국가 소유였던 산업·행정·사회복지 등이 민간자본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립기관, 공기업 등의 형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이윤 논리가 깊숙이 파고 들어 왔다. '적자 해소' 나 '효율성' 이 명분으로 작용했다. '원래 적자로 운영하라고 공기업으

로 만든 것' 이라거나 '효율성의 기준을 수익성으로 잡아서 안 될 것' 이라는 논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행정기관·공기업 등의 관료적·권위적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영' 과 관련된 요구들이 제출되었다. '공공이사회 구성' 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 정부의 평가시스템이나 예산배분 방침에 맞서는 요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운영의 민주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물론 운영과 관련된 요구는 거의 관철되지 않았다. 관철된다 하더라도 '노사협의 틀 구성' 이나 '일부 문제와 관련해 개방적인 논의 틀 구성' 정도로 왜곡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운영의 문제는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수익성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는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당장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축소와 전환 배치가 그것이다. 이는 해고,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자의 노동이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재구성·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수가 기획하고 다수 노동자에게는 그것에 따라 집행할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5) 사회공공성과 생존권고용의 딜레마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찌합니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보험에서 그런 부분이 축소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회공공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재' 로서 제공되어야 할 재화·서비스가 사적 자본의 이윤 논리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시 '공공재' 로 만드는 것은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긴장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사교육 재벌들만이 아니다. 수많은 소규모·영세화원 경영자나 사교육 노동자들 또한 그러하다. 금융공공성이나 서민금융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뒤에는, 자기 노동에 비애를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 중심 노동자들이 있다.

사적자본이 파괴되어 있는 많은 영역을 공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산업재편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의 노동자 생존권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당장에는 투쟁 과정에서 가뭇식 받게 되는 질문이나 장기적인 과제 정도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향해 나아가는 투쟁이라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제이다.

6) 삶을 담지 못하는 운동?

'주거 문제나 아이들 교육 문제는 회의 끝나고 뒤풀이 때마다 만주 김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회의여

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사회공공성 투쟁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공공성 투쟁은 해당 영역만의 투쟁으로 간혀버리곤 했다.

이는 생산 영역, 그것도 생산 영역에서의 분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노동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노동조합운동 자체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8시간을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24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생산 영역 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의 계급투쟁 또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생산 영역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투쟁하는데 그치면, 그 성과는 생산 영역 밖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권리’ 로 이어지는 데 그친다. ‘소비욕구’ 가 아닌 ‘다른 삶’ 을 향한 가치를 만드는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투쟁의 틀거리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투쟁과 노동운동의 보다 긴밀한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3. 사회공공성 투쟁의 변화 지점

1) 보편적 권리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사회공공성 투쟁은 ‘개개인의 삶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자본의 조치에 대한 방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요구 등에서 출발한 투쟁이라 하더라도, 사회공공성 투쟁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구성’ 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공공성 투쟁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 용역, 서비스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획, 생산, 유통, 분배하는 구조를 고민하는 운동이다.

현재 사회공공성 투쟁이 개별적인 이해와 영역을 넘어 보편적인 인권 담론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옹호에 대한 제한과 재산권을 재구성하는 일을 통해 소유의 사회화에 대한 밀그림 그리기(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사회공공성에서 제기되는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하기 △현재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낙인찍는 방식에 대한 불복종 기획과 실천 △권리를 매개한 연대질서 만들기 △당사자들의 권한 강화를 통한 자기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가 노동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관계를 고민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2) 재산권의 재구성과 소유의 사회화

사회공공성 투쟁은 재산권의 재구성과 소유의 사회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이끌어 낸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제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재산권이 가지는 배타적 소유의 속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편적으로 실현시키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사회권의 실현은 공적 개입으로 불리는 공공을 위한 재산의 제한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데,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재산권이 우선 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권의 진정한 보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재산권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정의 하려는 고민 속에서 재산권을 사회권 실현의 물질 토대로 규정하고, 재산권이 다른 인권과의 상호 의존성이나 불가분성에 기초해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인권의 목록으로 규정되는 권리는 이미 ‘재산권’이 아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소유의 사회화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과 관점을 제공한다. 소유의 사회화는 ‘사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점유·공유 등’라는 다양한 소유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유의 사회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고 우애롭게 인류가 생산한 재화를 배타적이고 충돌하지 않는 속에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공공성은 이 사회에서 공공재라고 불리우는 의료, 주거, 교육,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소유에 근간을 둔 재산권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3) 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자치

삶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관련해,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그리고 나의 노동이 사회(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누가 생산을 계획하고 통제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산창조하는 것의 ‘상호관련성’과 ‘생존의 공동성’을 드러내며, 서로 주고받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형성된다. 이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은 공기업의 소유 형태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 이제는 운영의 문제,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재화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까지 나아가고 있다. 또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한다.

4) 노동 및 일상의 재구성

노동과 만나는 사회공공성은 용역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자기 노동에 대한 기획의 권한, 즉 이윤을 위한 노동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을 위한 노동으로의 재편이라는 문제의식과 맞닿는다.

또한 생산재생산 영역의 결합을 꾀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여성, 생태, 인권, 지역과 만나는 사회공공성

- ‘사회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재화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나 공공재 사용 비용 절감 등의 수준에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해되기도 한다. 국가나 시장과는 독립적인 ‘공공’이라는 영역을 구축하는 문제로 이해되기도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부문의 확대’로 이해되기도 한다.

- 어찌되었든 ‘시장화 반대’에서 출발한 사회공공성 투쟁은 이제 ‘사회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되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가치들과 만나고 있다. 인권, 여성주의, 지역, 생태와 만나는 사회공공성은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1) 인권과 만나는 사회공공성

- 사회공공성 투쟁에서 인권담론은 사회공공성 영역의 구체적인 권리항목을 밝혀주며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가령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물에 대한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운동이다. 물에 대한 권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수를 먹고 가사 및 노동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과 관리체계 및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물과 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알릴 수 있는 권리 △자의적인 단수와 공급 용수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해 물 사유화가 결국 물에 대한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공동체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화 한다. 한편, 사회권운동에 있어서 사회공공성 투쟁은 인권이 실현되는 구조에 대한 전망을 안내한다. 현재 인권론(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론체계)은 사회체제를 전제하지 않는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구조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한계적이다. 사회공공성은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에 변혁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 사회공공성 투쟁과 사회권 운동은 ‘보편성’과 ‘연대성’이라는 주제로 묶인다. “~에게 ~ 권리가 있다”는 것은 권리를 함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엄성에 기초해 차별 없이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권리가 실현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놓여있는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인권보장체계가 원자화된 개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아름다운 말에서 머물고 있다면 사회공공성과 결합하는 사회권운동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란 어떠한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관계는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의 위치를 가능하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2) 여성주의와 만나는 사회공공성

- 여성주의가 녹아든 사회공공성은 공/사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을 깨고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을 공공영역으로 재구성할 것을 의미한다. 대개 재생산노동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이 사회공공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없으며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공존한다.

-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 영역은 기존의 가족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을 기초'로 구성된 사회정책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장에서 남성이 가장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한 '가족 임금체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막이 갖는 배타적 속성은 역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나 재화를 '사인(私人)인 개인'에게 의존하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사적 보호막 구실을 담당해줄 가족이 없는 개인은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가족주의 모델은 가족이라는 사인(私人)을 통해 인권이 증진되고 실현되는 방식에 기반 해 있어서 역시 가족을 매개하지 못하는 개인을 배제시켰다. 결국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사회공공성 실현에 있어서 차별과 배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임금체계는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생계노동일 뿐이라는 가정 하에 더 적은 임금이 합리화시켰다. 정규직 남성의 각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이 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 부조로 가거나 혹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사회정책 속에 녹아 있는 가부장성은 가족을 매개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물론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3) 지역과 만나는 사회공공성

- 지역은 우리가 일상을 설계하고 경험하는 공간이다. 지역과 만나는 사회공공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단위부터 사회공공성의 관점과 실천을 모색하기에 좋은 터전이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의 민영화사유화 논리가 횡횡할 때, 민영화사유화 논의를 철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의 맥락에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가지는 사회적 연대성의 의미를 사회공공성의 의미로 제기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2년 여 동안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경우, 철도노조가 결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이 든다. 공공역사를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가령, SOS센터 건립,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쉼터)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사회적 소수자와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다양한 투쟁이 전개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지역 복지, 공공서비스의 많은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통해 결정·집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비롯해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공무원노조 등 일부만의 행

동이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사회운동 단위들의 공동 전략과 행동이 필요하다.

4) 생태와 만나는 사회공공성

- 생태와 만나는 사회공공성은 우리에게 세대간 통합과 연대의 관점을 제공한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본의 이해와 요구로 자연과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는 전략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라는 공공재가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연결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자.

5. 또 다른 출발을 위하여 - 사회공공성 투쟁 '이렇게' 해보자.

1) 조건은 녹록치 않다

신자유주의는 제도나 정책으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에 내면화되어버렸다.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집값, 교육비 따라잡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해결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래서 잔업특근투쟁 등 경쟁과 '개별적으로 살아남기'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연대와 자치로 나아가자고 하지만 더 심각한 경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의 양극화 및 노동자의 분절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싼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는 우스개까지 나온다. 따라서 '보편성' 을 가질 것 같아 보이는 사회공공성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거의 전적으로 결정짓는다. 재화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에서 이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의미한다. 이는 연대의식의 파괴로 이어진다.

2) 이념과 지향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변혁' 이나 '대안사회' 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은 실천의 주제이기보다 주장의 주제였다. 특정 시기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벌어지지만 관점을 둘러싼 논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론과 정책은 많지만 이념은 사라졌다고들 한다.

그런데 사회공공성 투쟁이 케인즈주의적 주장이나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것을 되찾자는 수준의 요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념과 지향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온존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현실 운동에서부터 다른 삶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야 가능하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를 넘어서서 '적어도 이렇게

는 살고 싶다' 는 꿈을 만들고 그것의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 교육·선전·조직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생존권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모는 현실을 폭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이나 선전 또한 개개인의 '위기감' 을 증폭시키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다. 짤릴 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다,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 등의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이는 허무맹랑한 험박은 아닐지라도, 사회를 구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자기 삶과 노동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그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작더라도 꾸준한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 주제형성 : 권리를 메개로 한 연대의 재구성

기본적인 주거, 교육, 식량, 에너지, 교통, 의료에 있어서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방식이 권리에 기초한 보편성을 내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노동운동, 사회운동, 권리침해자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운동의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동의 이해를 형성해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내고, 운동사회 내 외부의 교차적 연대를 엮어내자. 각자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누는 교류는 각자의 경험을 소통하면서 귀 기울일 때 가능하다. 그 가운데 자신의 노동의 의미에 대한 구성(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사회적 의미(연대성)가 확인될 것이다.

6. 마치며

<사회공공성 워크숍 기획단>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여기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 수차례 토론을 통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들도 있다.

지금 이 순간도 과정이다. 길이 애초부터 있어서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내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제 지혜를 모아 보자!

사회 운동 포럼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

워크숍 기획 내용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오후3시~6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명대 2층 33203

1) 취지

- 노동운동이 어느 샌가 경제주의, 실리주의로 경도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 반영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 또한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운동으로만 드러나고 있고 여타 사회운동과의 광범위한 결합이 지체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커다란 부분으로서 노동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금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에 사회운동포럼 토론회를 통해 노동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사회변혁적인 노동운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함.

2) 세부내용

- 주발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익 정책국장
- 토론 1 -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 방안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 토론 2 - 변혁운동 실천으로서 지역노동자운동 - 전북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 김종섭
 - 토론 3 -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 - 노동전선
 - 토론 4 -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 운동의 복원 - 사회진보연대 박준형
 - 토론 5 -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

* 사회 : 이종탁 (비정규센터)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김진익 (민주노총 서울본부)

시작하며

C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사회변혁을 위한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그 이념의 승리를 주장하였다. 91년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후쿠야마는 공산주의 체계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견한 선각자로 부각되었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닌 어떠한 진보적 대안 체계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미 80년대에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저노믹스로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는 더욱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며 인류의 미래를 파괴한다.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이윤을 팽창시키려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하며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초국적 농기업은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교육의료-에너지물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돈이 없으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횡포에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²¹⁾

21) 사회운동포럼 선언문 초안

이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1994년 멕시코 원주민의 사파티스타 투쟁,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투쟁, 1999년 시애틀의 반세계화 시위,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반대 세계동시다발집회를 시발로 한 반전투쟁, 2008년 이탈리아의 연금법개정 반대 총파업, 2006년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 폐지 반대투쟁 등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급속히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2001년부터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라는 기치 아래 세계사회포럼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거나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반자본주의의 새로운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 혁명세력은 지난 시기 잘못된, 실패한 구 사회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새로운 대안이념과 노선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노동해방을 넘어 인간해방으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989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 을 선언했지만 불과 채 10년도 안되어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사회변혁운동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후쿠야마의 선언은 이미 종언을 고했다.

C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회변혁은 가능한가?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1. 노동운동 진단

1)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적 지향 약화²²⁾

C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펼쳐 일어선 노동대중은 군사독재, 전근대적 자본통제, 어용노총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민주노조운동은 그 자체로 반자본, 반독재, 반민주를 포괄하는 운동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인 전노협운동은 ‘노동해방쟁취’ 와 ‘평등사회건설’ 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만들어 나갔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해방운동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22) 김태면, 한국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워크샵 발제문

마련되었다.

- 그러나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실패, 중국의 자본주의화, 북한사회주의 위기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변혁운동이 일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은 변혁지향성을 구체적 이념과 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 민주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으나, 그것은 어용노총에 대한 대안적 이념 수준에 머물고 변혁지향성에 있어서는 전노협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출범시 제출된 ‘사회개혁’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를 임금과 고용에서 민주적 제 권리, 사회복지, 재벌구조개혁, 언론개혁, 자주민주통일 등으로 확대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었으나, 역으로 이념적 지향을 자본주의체제 안의 개혁으로 한정되었다.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C 실리주의와 노동조합주의

그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임금인상과 복지 개선을 위한 임단협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물론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투쟁과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여 왔지만 가정 기본적인 활동은 기업별 임단협 투쟁이었다. 많은 활동가와 간부들이 현장투쟁이란 미명하에 임단투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에 매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대기업노동자와 영세소기업노동자간에 차별과 격차를 확대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에 간히고 의제가 임금과 복지로 제한되면서 노동조합주의의 경향을 확대했다.

또한 IMF 경제위기와 정리해고-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조합원의 실리주의 경향은 강화되었다.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비정규직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따라 언제 해고당할 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별 수 있을 때 더 별자는 정서가 확대되었다. 조합원은 고용안정과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해 때론 노사협조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때론 전투적 실리주의 지도부를 취사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거둬들인 폐배와 후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C 신자유주의에 저지 투쟁에서의 거둬들인 폐배와 후퇴. 투쟁은 선언하지만 그 끝은 허망하다. 투쟁 역량 결집 실패-분산과 각개 격파. 투쟁이 안 되니 교섭에 끌림.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전선 약화

- 96년 12월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 :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의 충돌
- IMF 경제위기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 98년 5.27 총파업투쟁과 파업 철회, 노사정위원회 복귀
- 98년 구조조정 저지 현장투쟁의 패배 : 현대차, 만도기계, 조폐공사
- 99년 5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투쟁의 실패
- 02년 공공3사 투쟁과 발전노조 파업 투쟁, 2.25 연대파업, 발전 문제 굴욕적 합의와 4.2 총파업 철회
- 03년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 희생물 담보로 한 주5일 근무 법제화
- 03, 04년 궤도 노동자 연대파업 투쟁
- 05~06년 비정규약법 저지를 위한 6차례의 파업투쟁과 비정규법 개악, 노사관계로드맵 법제화,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9.11 야합

C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만 8만 명 이상이 조직되어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였다. 투쟁과 더불어 시작된 비정규노동자간에 연대는 2000년 “서울지역비정규관련노조대책회의” (이하 서울비정규대책회의)를 시발로 2001년 “서울본부비정규연대회의” (이하 서비연)와 2002년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거쳐 각 지역 연대로 확산되었고 2003년 10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비위”를 거쳐 2004년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과 업종단위 생존권 투쟁을 넘어 고용형태별, 지역별 연대와 공동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비정규노동법개악과 권리입법 쟁취라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의 진전을 이루어냈다. 민주노조운동이 변혁적 전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기업과 업종에 안주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운동 전반의 문제점과 한계, 심지어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운동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5~2006년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 투쟁을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일상 활동

과 투쟁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새로운 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은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유연화의 결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다.

3) 계급대표성의 위기와 보편적운동성 상실

C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운동!

-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억압적 구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의 인간적 권리와 시민권을 쟁취해내고 그 결과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했지만 곧바로 자본의 반격과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업무조사, 3자개임금지 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옥죄어 왔고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도 강력한 저항을 통하여 이를 분쇄했으나 중소기업노동조합은 자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탄압으로 상당수가 해산, 폐업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은 저항이 심한 대공장조직노동자들을 우회해 소위 주변업무를 외주, 사내하청, 임시직, 소사장제 도입 등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관철시켰고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현장통제를 강화해왔다.

-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공세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을 취함으로써 자본의 우회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노동자간 분할과 위계화로 귀결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의 위기로 제기되었다. 계급대표성의 위기는 중소기업노동자와 지역연대에 기반 한 전노협의 해산과 더불어 보편적 운동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노동조합주의에 갇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4)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되었다. 비정규, 중소기업, 이주, 여성, 실업노동자를 포괄하고는 산별노조,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일상으로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산별, 투쟁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자체의 구심력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연대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자신들의 세제로 빠져들어 갈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상층 교섭에 매몰되면서 현장투쟁이 약화되고 자본의 상층 관리 구도에 편입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계급운동으로 산별활동이 될지는 향후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산별이라는 형식이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그 정신의 실현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여전히 기업별노조주의에 근거한 무늬만 산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대산별을 지향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은 방식의 산별활동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개별 산별이 아니라 총노동의 대응, 지역산별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 합법정당 운동으로 대체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 운동은 정당, 노조, 사회운동 그 어느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경제투쟁은 노동조합,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임단협이라는 경제투쟁의 영역으로 제한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었고 개량화 될 위험성이 커졌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활동은 실종되었고 민주노동당의 의회 활동이 이를 대리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5) 정치적 노동운동 대외의 무능력과 무책임

2.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만들자!

C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을 저하라는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무제한적인 자본 이동의 자유와 시장화를 보장하는 세계화는 위기에 맞이하길 수밖에 없다. 국제투기 자본의 횡포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와 아르헨티나, 러시아에서 연쇄적인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생산자본의 기반마저도 파괴하는 광폭함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불안정성을 끊임없이 노정할 것이며 경제규모가 큰 국가나 지역의 과잉축적과 이윤을저하에 따른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적 국면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① 파국과 파쇼체제의 등장, 그리고 전쟁 ② 자본의 양보와 개량으로 자본주의 연명 ③ 반자본주의 대안세계 건설” 일 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위기적 국면에서 기존 지배분파가 이를 해결할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기존 지배질서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배분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분파로 파쇼가 등장해 위기를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발-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경험 한 바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개혁분파가 초국적 자본에게 상당한 수준에서 제제를 가하고 노동자민중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와 분배를 관철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반자본주의-대안세계화운동의 실험과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반혁명을 조차 넘어설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혁명 역량이 존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결국은 계급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C 희망의 노동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자!

신자유주의의 파탄이 혁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계급투쟁의 결과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사회변혁운동이 만들어 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강력한 집단으로 존재해왔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은 변혁적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서구와 북미 노동조합운동 다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안주하는 경제주의 내지 비즈니스 노조로 구조화되어 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노동조합총연맹은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노동자-자본가 연대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변혁적 전망을 상실 한 채,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여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가 횡횡하고 있고 교착화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3세계와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량적 물질 토대가 취약하다. 개량과 양보를 할 의사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소수 노동자를 자신의 지배 질서 내로 포섭하고 다수의 노동자를 중층적으로 위계화 시키고 분열시켜 분할통치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도에 균열을 낸다면, 자본의 분할 통치를 넘어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재구축 되고 자본주의를 넘어 변혁적 전망을 갖고 운동을 전개한다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투쟁에서 희망을 본다. 96년 노동법개정까지 총파업 대오에서, 재능교사, 한통계약직, 롯데호텔, 발전노조, 철도노조, 텀프연대,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투쟁대오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본다, 결연한 의지도 본다. 연대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본다. 가슴시린 동지에도 느낀다. 어떤 교육도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 파업은 노동자의 화교인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노동자였고 노동자계급이었다. 세월은 흐른다. 일상의 생활도 계속된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에서는 투쟁 시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결의에 찬 모습은 소심함으로 바뀌었고 주변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연대는 일상의 생활에 묻혀버렸다. 간부들은 1년의 대부분을 임단협에 투여한다. 해당 노조와 관련된 노동기본권 투쟁을 조직하느라 기력을 소진한다. 조합원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구하지만 우리 모두의 요구에는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더라

도 나서서 실현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틀에 안주한다.

왜 그런가? 투쟁할 때는 머리를 묶는 노동자계급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보내길 소망한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에 투자하기도 한다. 노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사보험에 드는 것은 기본이다. 일상에서 노동자는 '존재의 배반', 물계급적으로 살아간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틀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저지, 고용보장,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투쟁만으로 경도되었고 노동조합 틀 내에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만으로 활동이 제한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문화, 교육,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공세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작업장 문제와 노동의계에만 매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 전망을 주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기치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손바닥에서 아등바등 헤쳐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드는 운동,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자!

3.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1) 사회변혁의 전망과 이념을 구체화하자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결코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경험이 있다. 구 사회주의 운동이다. 실패한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자발성과 아래로부터의 통제, 민주주의의 확대, 국제주의적 관점,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의 결합, 계획경제의 문제점 해소, 평화체제의 실현, 노동해방을 넘어서인 인간해방 등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규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불어 넣은 사회변혁의 전망과 이념의 정립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오만하게 단정하지도 않지만 모호하게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기에 현재적 수준에서 모든 이론적 역량과 실천의 경험을 총괄하여 전망과 이념을 구체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이론적 작업과 실천 속에 수정과 보완, 체계화 또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세계사회포럼 등의 대안세계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고 실천하려는 전 세계의 변혁적 진영의 노력과 실험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2)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적으로 재구축하자!

노동운동은 크게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사회운동(단체),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영역으로 이루어진 다.²³⁾ 그간 경제투쟁은 노동조합,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별 임단협이라는 경제투쟁의 영역으로 제한되었고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었고 개혁화 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 노동자 사회운동과 비정당적 정치운동은 약화되어 노동조합운동 외각에 존재하고 그 두리에서의 제한적 활동에 머물러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사회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의 상호결합과 동시병행적 역할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작업장의 문제와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생태, 인권, 반전평화, 여성주의와 사회공공성 의제와 결합하고 포괄하는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적 당운동,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는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지향으로 재정립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사회변혁의 전망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사회운동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의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물 등의 사회공공성 의제를 선정하여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 확대의 장을 매개로 사회정치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임단협 중심의 활동과 기업의 울타리, 연맹 중심의 관성을 깨고 서울본부의 실험이 성공할 지, 실패 할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매우 어려운 시도라는 것,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운동과 공동의 노력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3)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1) 사회의제-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하자

반전평화, 생태, 인권, 여성, 문화, 사회공공성 등 전체노동자·민중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보편적 의제를 제기하고 사회·정치적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23) 이는 명목구분이며 역할 구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칫 역할 구분으로 받아들이 질 때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 노동자 정치운동은 정치투쟁으로 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사회공공성 투쟁이 제기되는 이유는 노동 결과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 노동과 결합되지 않은 '재생산' 영역만을 문제 삼는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효율성과 이윤,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고 자치, 연대, 공동체의 원리를 실현해 가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를 '사적 소유'와 '사적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재구성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소유-운영-노동생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자기 통제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장, 구체적인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노동과 삶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²⁴⁾

현재 사회공공성 투쟁은 수세적인 시장화사유화 저지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반짝하거나, 해당조직만의 실천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조합들에 갇혀 있고 실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잘 안 되는 투쟁이다. 서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량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운동은 특정시기-혁명적 정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량적 투쟁이다. 임단협, 제도개선투쟁, 사회공공성 투쟁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투쟁이 무엇을 지향하는 투쟁이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투쟁으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 보편적 의제 실현, 노동자 민중의 연대와 그 힘에 기반한 사회적 통제, 훈련과 단련, 변혁주체 형성과 근거지 강화가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무기-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를 건설하자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조합의 한계와 틀을 넘어서는 노동자 실천부대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으로 치환되고 있다. 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미루고 있다. 그 만큼 노동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노동조합 투쟁을 지원하는데, 평론하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민주노동당 같은 합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독자정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과 한계를 돌파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운동 조직은 해당 의제에 국한되어 활동가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과 결합하거나 대중을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인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도 보듯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 투쟁이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 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향후 비정규노동자 조직과 투쟁, 법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민주노동당이 그 정치적 위상과 지역위원회 실천에 근거하여 지역연대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24) 사회공공성 기획단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대중적으로 선도하고 주도하는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²⁵⁾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와 현장간부는 노동조합의 틀에 갇혀 있다. 왜 모든 것을 노동조합에게만 맡기려 하는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실천부대,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 건설이 요구된다. 이 노동자 사회운동체는 현장에 기반 하되 지역에서 사회의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3) 변혁운동의 실천 공간이자 근거지로서 지역운동을 강화하자

최근 지역운동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민중에 대해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 각 영역에서 총체적인 공격을 해오고 있고 그 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업종, 산별조직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힘 있는 노동조합은 임단협과 기업복지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일정 정도 공세를 피해갈 수 있지만, 다수의 미조직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와 민중들은 그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묶어 세우 공동의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자신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 민중단체, 사회단체, 당, 주민단체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집하는 전국적 차원의 지역연대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이다.²⁶⁾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지역차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은 노동자 민중에게 생산의 공간이자 생활문화살의 공간이지만 자본에게는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착취의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은 산자유주의 성장 연합세력에 의해 지역발전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은 파괴되고 노동자민중은 권리를 빼앗긴 채, 거리로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이들은 무한 경쟁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웃끼리 경쟁하는 살벌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 문화, 교육, 투쟁, 정치의 공간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역을 교육, 의료, 주택, 물가, 교통, 생태 등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쟁취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통제를 관철하고 변혁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근거지로서 지역을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쟁논리에 맞서는 대안운동을 조직하는 공

25) 노동전선, 전진, 전국회의, 현장연대(준) 등 정치조직이나 전국적 한장조직이 존재하나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근거한 활동(일부는 정당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회운동적 운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되는 투쟁이다. 비정규직법과 맞물려 우호적인 여론의 조명을 받았고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의 거점이 무수히 많고 다양한 전술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싸움이다. 또한 이 투쟁은 기본적으로 지역투쟁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의 역할이 크며 지역연대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싸움이다.

간이자 경쟁이 아닌 공존과 연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량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운동의 중요성만이 강조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이 방기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역량을 편재해야 한다. 지역운동은 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밀착하는 운동이며 이것이 전제될 때 활성화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만큼의 지루함을 인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준비는 되었는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때이다.

4)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을 만들어내자

곳곳에서 한탄이 들려온다. 한때 잘 나간다고 평가 받던 어느 산별노조의 지부장은 솔기까지 했다.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노동조합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간부들이 안 움직이려고 해요, 관성화되어 있어요’,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나마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1998년 노동법개악 노사정 합의로 민주노총이 발각 뒤집혔다. 노사정 합의를 거부했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절규했다. ‘조합원은 싸운다고 한다. 싸움판은 만들어 주지 못할망정 싸울 근거도 없애 버리는 지도부는 책임을 져라’고. 그 뒤 2~3년간은 조합원은 싸울 수 있는데, 싸울 의지가 없는 지도부가 문제라는 호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어느새 자판기노조가 회자되고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탄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의 역동성을 믿는다. 노동자투쟁은 파도와 같다. 거대하게 몰아지다가도 산산이 부서지고, 잠잠하다가도 다시 무서운 기세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이 몰아친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층 중심의 운동, 조직 동원 방식의 사업과 투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어느새 임단협 중심으로 활동이 제도화되었고, 수동화된 일상활동 구조와 관성이 권고해져 있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변혁적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지쳐 있는 것이다. 다시 역동성이 발현되고 거대한 파도로 부활하리라 믿지만, 사회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이 일상활동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변혁은 단지 저항판으로는 안 되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의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될 때 가능하다. 이는 자발성과 창조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동자 민중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에서부터 나온다. 대중 동원 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교육판으로는 노동자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자발성은 스스로 주체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발성은 의식성에 기초해 있고 실천성을 바탕으로 한다. 의식성

은 교육, 그것도 수동적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주체적 학습과 실천이 상호 결합할 때 보다 강화된다. 그때 자발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창조성은 열린 실천, 주체적 실천이 보장될 때 발휘될 수 있고 끊임없이 생산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구현된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반혁명을 달고 베네수엘라 혁명이 계속 진행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도자 차베스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대중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빈민, 농민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자발성과 창조성, 역동성을 가진 노동자계급을 형성하는 것. 이는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사회변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이다.

5) 당을 사회변혁적 흐름 주도로 재구축하고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자!

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사회운동적 성격이 매우 약화되었다. 민족주의 세력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개량화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FTA투쟁과 이랜드-뉴코아투쟁에서 보인 당의 역할이다. 2007년 들어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FTA 투쟁에 불을 붙인 것인 민주노동당이였다. 당 대표의 단식투쟁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위원회의 활약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떤 지역위원회에서는 2만 명이 넘게 FTA반대 서명을 조직했고 지역선전전, 가가호호 방문 등의 실천을 전개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결합된 정치실천, 당 상층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의, 당 기층조직과 당원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은 그 정치적 위상과 지역위원회 실천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예를 들면 25개 지역위원회가 지역거점 투쟁의 주요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마포 지역위원회는 흥에버 상암점 농성투쟁에 매일 수십 명씩 결합하여 투쟁을 지원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1개 지역위원회에서 20명만 조직되어도 서울지역에 500명의 동력 형성이 가능하다. 이 동력만 확보된다면, 더 확대된다면 지역에서 연대투쟁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정당의 한계, 의회중심 활동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지역에 보편적 의제를 제기하고 민중연대 투쟁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6) 노동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 국제연대를 실현하자

우리의 운동은 평등사회,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도 거부한다. 그간 노동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편화하는데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결여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페미니즘 없이 운동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라는 제기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 이제는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조직화는 노동운동의 연대성과 변혁성을 검증하는 준거들이 될 것이며 국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가 될 것이다. 남한 자본의 제 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 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 반전평화, 반자본주의 투쟁과 대안세계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한 걸음 한 걸음 진척시켜야 한다.

마치며

○ 운동의 위기가 회자 된지 오래다. 혁신이 제기되었고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눈에 띄고 있지 않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 실현 방도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도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진전은 없어 보인다. 왜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 운동은 사람이 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동지적 비판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한 성찰과 자아비판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경도된 노동운동, 원칙과 기준이 없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진흙탕 싸움, 노조 권력싸움과 즐서기가 횡횡하는 노동운동 판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 누구는 두렵다고 한다. 외롭다고도 한다. 조합원은 임금인상과 기업복지를 요구하는데 반전평화니 생태-환경이니 사회공공성이니 별로 씨알이 먹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기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새로운 운동을 하자니 기존 운동의 관성과 그간의 인맥관계, 조직관계를 깨야하는 상황도 직면해야 하는데 두렵고 외롭다. 눈 딱 감으면 기존 틀에 안주해서 그럭저럭 간부로 활동가로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 사회변혁이니 새로운 운동이니 다 동의하는데, 너무 바쁘다. 자신의 활동공간에서 주어진 일, 책무가 너무 많다. 한가히 노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활동하는데, 새로운 운동에 투여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의식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데 실천은 노동조합에 갇혀 있다.

- 운동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는데, 항상 고민만 되고 실천 운동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 고립분산, 각개약진. 모이면 결코 적지 않은 역량인데, 제 주장만 강하고 왜 이리 독고다아들이 많은지.... 문제의식만 있고 운동이 없다.

-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 사회변혁을 이야기 하지만, 그 전망과 이념,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매몰된 채 사회변혁의 지향과 피리된 노동조합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 정치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민주노총이 위기고 관료화되었고, 투쟁을 회피하고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와 개량주의로 딱졌다고 연일 공박하지만 되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평론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사회변혁적 운동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동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다. 별로 한 게 없다면 그건 매우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o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 일수 있다. 운동은 사람이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주체가 혁신되어야 한다. 자괴감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희망의 운동을 위한 출발점, 가장 소중한 우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어렵나? 혼자서 두렵고 외로우면 같이 함께 하면 된다.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고 조직으로 단결하자. 문제의식을 모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실천의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체를 건설하자. 민주노동당을 사회변혁적, 사회운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지역으로 내려가자. 조금함을 버리고 10년을 투여할 생각을 하자. 10년이 겁난다면 우선 5년이라도 투여하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이 어느새 거대한 해일이 되어 신자유주의를 집어 삼킬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재미도 괜찮을 것이다.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방안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1. 노동자 운동의 위기와 페미니즘에 대한 상황

1)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부족

현재 노동자 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철폐 운동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운동의 초기 문제의식은 노동운동 혁신, 비정규직운동 주체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몇 년이 경과하면서 비정규직 운동 주체화에 대한 고민만 남았고 그 역시 단순한 조직화나 기술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나마도 정규직 운동의 모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투쟁 역시 전체 투쟁에서 부분적인 문제이거나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한 경향은 전체 운동의 문제를 구조조정 저지(신자유주의 저지), 노동운동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사고한다기보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비정규직 문제를 외삽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2)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측면

그러다 보니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나 주체화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많은 여성을 조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니면 방법적인 면에서 여성 친화적 방식과 같은 조직화밖에 그려지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피해 받은 여성노동자의 수가 많다는 것으로만 집중되거나,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화를 부각하는 측면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미조직 노동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여성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원해야할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노동자

운동의 위기를 운동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적인 열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주체화 역시 어렵게 된다.

3) 노조내의 페미니즘 인식 수준 - 할당제, 성폭력 대책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

그렇다면 노동조합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할당제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정도로 그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조적으로 고민된다고 보아 여성에게로써 접근되다 보니 단일 이슈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도 할당제나 성폭력 논의도 온전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활동가들의 활동력 소진은 계속되고 있고, 성폭력 문제 역시 개별 사건에 대한 운동적 고민과 발전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에 급급하여 운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 의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무관심과 침묵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2. 노동자 운동이 왜 페미니즘을 흡수하지 못 하는가

1)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부재, 구조조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구조조정이 전면화되었을 때를 살펴보자. 이 과정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성별화 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경제위기 초기에는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되어왔다. 최근에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전제로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육가족 정책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를 제도화하고 여성에게 장려(?)되고 있는 상황은 노동 유연화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단지 수치상으로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취급되거나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성별화된 구조조정의 측면을 인식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에게 먼저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업무, 철도공사의 승무원

무를 보더라도 업무의 외주화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처럼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성별화된 공격 양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 양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 노동의 무제한적 착취의 강화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후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는 상황

성별화된 구조조정예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 하는데 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노동자운동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부르주아적 가족 모델을 적극 수용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가족임금’은 현실에서는 없지만, 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곳곳에서 잔존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남성의 고용이 불안정할 때에는 여성을 가정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경제위기 초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 여성인력을 활용할 때에는 저임금-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이처럼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본주의가 가족형태를 통해 구조화한 성적 분업의 영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3.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방안은 무엇인가

(1) 노동조합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이념과 전략 구축

기존의 노동권과 여성권이 분리되어 대응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고,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있어서 여성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비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는 재생산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사회화(사회서비스 확충전략, 각 종 상품 개발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재생산노동 노동자 (간병, 보육 등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역시 요구해야 한다.

(2) 아래로부터의 여성노동자 주체화에 대한 기획 필요

현재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 주체화는 할당제 등 간부 중심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할당제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할당제의 제한적 성과를 확대하기위한 방식을 통해 여성 할당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여성위원회-여성국, 여성대표들에 의해 제안되고 노조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로 만들고,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식도 변혁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에서 전반적인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모성보호성폭력할당제 주체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치도 있는데 기층 여성노동자들까지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여성활동가들 간의 초경과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열린 네트워크 구조 마련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확장하고 노조 내외부의 여성활동가들이 상호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조 내에서는 노조 여성위원회 구조만으로는 문제의식을 교류, 환류 할 수 없으며 그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외부 여성활동가들도 노조 현장과의 괴리가 심해질 수도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조의 실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회운동적인 고민을 한다면 더 많은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열린 의제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여성활동가들 간의 사회연대적인 열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현실의 운동으로 전개하자!!

김종섭(세여정 대표)

1. 들어가며

1-1.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의 경제-실리주의에 대한 혁신의 방안이다. 단위노조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지 않고 사회변혁과 계급전체, 사회(정치)운동의 전체의 이익과 전략차원의 실천 가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목표는 '현장=경제투쟁' 으로 왜곡된 질서를 '현장운동=정치·사회운동' 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을 밝힌 발제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2. 지함에 대한 현실의 과정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운동이 아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 기인된 여러 가지 사례와 투쟁을 통해 이미 실현되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를 재해석하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의 바탕을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①이를 운동화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가 ②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지는가 ③노동자 계급 내부에서의 주체화는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3. 나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을 뒷받침하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전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운동, 노동운동의 시스템의 변혁, 계급적 사회적 연대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나는 토론문에서 사회적 의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이 노동운동의 거의 전체를 규정하는 임단투 방식과 구분(강조)하고자 하는 편의상의 표현이다.

1-4.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우리 노동운동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동지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을 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글을 세 가지 관점으로 썼다.

첫째, 조직 시스템을 전화하면서 활동가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현재 진행형으로 상정하고, 활동가들의 주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전투적 조합주의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으로 전화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로부터의 확산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운동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출할 것이다.

2. 사회운동적 노동운동과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개념의 명확성

사회운동적(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운동적”이란 의제와의 연대를 통한 개념이며, “사회변혁적”은 계급을 통한 봉기가 우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바꿔보자는 것이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은 행위의 결과이다. 이런 행위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기계적으로 사회운동 의제와의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하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은 결국 반전운동, 사회 공공성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의제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심각한 조합주의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사례

○ 개량화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의 하나로 김유선, 박태주 등의 사회적 합의를주의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이들이 사회운동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사회운동의 변혁성 때문이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이미지 관리,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과 개량적 시민운동을 배경으로 더 큰 파이(빈대떡)를 얻기 위해서다. 결국 경제(조합)주의의 또 다른 가면이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실천에서 오염된 개량주의와의 차별, 오해를 피하기위해 변혁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뛰어넘어 현실의 운동을 만들 수 있느냐가 1차 시험대일 것이다.

○ 사회연대기금 조성론 및 정규직 희생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사회연대기금조성론이나, 보건의료노조의 07년 입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이다. 소위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협약은 정규직 희생론에 기인한다. 마치 정규직이 사회연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뭔가를 내놓은 것처럼 포강해 운동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의 분할 통제 전략 한 가운데로 함복해 버린 것이다.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욱 강조하며, 자본의 착취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측면에서 자칫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사례로 설명된다면 운동의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변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더 위험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런 과정의 확대, 재생산으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담론화 될 수 없다.

○ 지역사례로 본 의제투쟁과 사회공공성 투쟁의 함정

- 군산지역 노동자들의 군산미군기지 연대투쟁²⁷⁾

이들의 연대는 헌신 그 자체였다. 군산미군기지라는 사회적 의제를 노동자들이 직접 연대했다는 커다란 의미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희상은 미군기지투쟁은 그저 우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투쟁을 위해 모든 것과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가이다. 이런 연대 활동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좋은 사례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주체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좋은 예가 된다. 결국 이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데,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되는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이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의제의 기계적 결합에 대한 비판

현장의 강화를 위해 사회적 요구와 지역을 활용한다는 인식이다. 다행히도 현장운동이 의료, 교육 등 공공부분의 사회적 착취에 대한 해결 없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현장에서부터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전체 계급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도구로 활용된다.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이득을 위해 지역과 사회적 의제라는 담론을 활용하고 결국 현실의 목표를 위해 이 의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물 사유화 투쟁당시(의료공공성도 마찬가지) 현장의 요구로 공공성의 요구를 가지

27) 1998년 군산기아특수강 히고자 복직 투쟁 과정에서 히고자들이 군산미군기지 퇴출 투쟁에 같이 하며 지역은 폭발적인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군기지 투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히고자 복직 투쟁까지 촉발하는 그이말로 전북지역은 투쟁의 전장터와 같았다. 그러나 이들의 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전북노동운동사팀 '대기업노조의 지역운동의 역할' 라는 주제 토론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고 현장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했지만 현장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현장의 모습이 그것이다. 또한 자본의 현장외해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외피를 쓰려는 경향은 아직도 지역(사회)과 현장, 현장과 지역(사회)이 보편적 이익의 공간으로서 교차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한계다. 일정한 투쟁의 결과를 당으로 전가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 일상적인 현장투쟁의 사회화의 문제 - 현자 2교대 투쟁의 의의와 한계

2006년 12월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버스부 주야 맞교대와 관련해 주변과 도심곳곳에 관련단체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해 2교대 협상을 하루빨리 타결하라’는 현수막 1000장을 게시했다.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개입한 이 사건은 한동안 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아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출근하여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천파농성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내놓고 현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였다. 마치 도지사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대표이사나 공장장처럼 행세하였다. 물론 지역의 모든 언론이 개폐처럼 몰려들었으며 놀랄만큼 단일한 입장으로 도지사와 관련단체를 옹호하였다. 이에 고무된 도지사는 공무원조직과 관련단체를 총동원에 쫓붙시위도 진행하였다. 관련단체들도 나름대로 부분과 업종이 있어서 각각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2교대 협상 조속 타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사협상의 핵심이었던 심야노동이 현장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차선으로 내놓은 주간 맞교대가 지역사회의 염원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노동자들을 이기주의자로 몰아부쳤다.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계속되었지만 현장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이러한 못매를 견뎌내며 어용노동조합의 감정합의안을 조합원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결로 인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악의적 비난이 난무하여 현장노동자와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진영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온갖 악다구니에 시달려야 했다. 현대차처럼 노동자 건강권이 곧 지역사회 민중들의 건강권에 부합되고, 노동자의 현실을 직, 간접적으로 들어낼 호기였음에도 현장과 지역 노동운동은 이 투쟁을 사회화시키는데 실패했다.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거나, 제도개선 투쟁을 가두에서 연대하거나 하는 힘 실어주기이외에 일상적인 노동운동의 계급적 연대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어느 때는 현장투쟁만으로 어느 때는 사회적 의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인가 불충분한 것은 노동운동 스스로가 사회운동적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과 노동조합 운동이 사회운동화 되어가고 이러한 노력의 공동분모로 의제운동과 결합하는 조직 나름의 운동방식이 있어야 한다. 정치공학적 의제 투쟁으로 전락된다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3.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강화에 대한 단상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한 전제는 다양할 수 있다. 현장조직부터, 아니면 정치조직의 결사로부터, 노동자대중조직의 결의로부터 실로 다양한 집행경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민과 토론이 반복되는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

1) 현장운동 : 노동운동 기본 단위인 현장조직의 전화

기업노조에 익숙한 우리들은 현장 조직들의 문제점을 지나칠 정도로 제기해 왔지만 많은 현장조직은 선거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현장 조직이 즉각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하나,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조직은 거의 없다. 단순히 거대 담론인 '산별노조를 건설해서 무엇을 해보자'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산별노조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연맹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공공연맹의 상태는 그나마 축적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역량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국민연금 계약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본에 사회적 임금을 강탈당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조직들의 변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는 더 구조화되고 그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조직에서 나이 먹은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들의 세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예를 제시해 본다.

(1) 노동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 모임

- 자신의 현장에서의 노동재해 없는 현장
- 60-70년대 석면피해 노동자 조사 사업 및 지원 사업, 조직화
- 중소 사업장 노동재해 교육 등

(2) 아프리카 난민과 함께, 모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장 모임

-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반대 및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
- 아프리카 전쟁의 본질이 자원 전쟁이라는 점,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세계 중심부 국가들의 자원 갱탈해서 벌어진 행위를 폭로하는 활동
- 자원 전쟁에서 벌어진 엄청난 희생자 돕기를 통해 전쟁의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
- 북한 어린이 돕기와 동조하고, 통일운동의 전화 시도 및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운동

(3) 조합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현장 모임

- 조합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 활동의 활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활동
- 산별운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
- 조합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모델화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
- 현장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정책 활동

(4) 인권의 보편적 권리로의 노동권 확대 모임

- 노동자 권리가 마치 이익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다수의 보수 언론과 인권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확대한다.
-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생활 문화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즉 현장조직들의 과거 활동방식과 내용을 포기해하거나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는 하나 부르주아적인 정규직 희생론이나 사회연대기금 같은 생색 내기식 담론은 자리 잡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자율적인 현장 의제 조직들의 결합, 현장 의제 조직들을 통한 노동자들의 주체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확대재생산하는 계기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한계도 존재한다.

몇 현장의 모임들은 노동운동의 위상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현장투쟁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

2) 노동조합 : 임단투의 계급적 시각의 전화

임단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80-90년대 임금 인상 투쟁 자체는 그 자체로 정치투쟁이었다. 우리가 그리 원하는 평등한 세상이 마치 노동자들 간 격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단투 자체를 계급적(사회운동적노동운동) 시각으로 전화해야 한다.

임금에서 자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노동조건 함상에 대해 “사회적 분배를 통한 평등사회 지향”이라는 관점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파열구의 시작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즉 노동자 임금 인상은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임금을 통해 사회적 분배를 확대하고, 평등해지기 위한 첫 번째 투쟁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전화하여 설득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단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간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또 다른 핵심 구호이자 실천이다.

또한 임금의 하나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력의 댓가가 아니라 사회전체, 국가 전체에 대한 투쟁의 결과라는 인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하나의 기업에 대한 임단투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백날 총파업해서 임금 올리면 뭐하나 국가와 자본은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국민연금으로 털어간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적게 주면 인공인하가 되는 것이다. 집값폭등하면 임금인상이고 뭐고 다 길바닥에 나 앉는 것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민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임금이다. 그렇다면 임금인상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의적인 사회적 의제와 연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연대를 통해 임단투 시각을 교정하고, 사회적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임단투를 전개함으로써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담론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어렵지만 이미 주장되고 있는 동종 업계에 대한 단협의 보편적 적용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²⁸⁾ 산별은 이런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부여 받고, 사회운동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 그룹과 연대다. 이런 분배의 기초가 촉발할 위력에 대해 설명해내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통은 바로 젊은 노동자들과 세대적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목일 수 있다. 그

(1)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운동

-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학교를 대한 즉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운동 전개
- 이런 운동은 전교조가 할 일이다 라는 식의 인식을 전환하고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운동 전개 *자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 지역운동 차원에서 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노동법 특별 강좌 개설 운동

(2)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비정규직 전수 조사 사업

- 이 사업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도지사 후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지만 각 지역별 비정규직 전수 조사 사업 실시
- 조사 사업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의 지역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과 지자체와의 투쟁 강화
- 기업 투명성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근절 활동
- 자본가들의 부당 이윤 추구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불평등 구조 심화 및 기업 이윤의 부당성 폭로 활동

28) 동종업계 단협 적용은 없는 사례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금속 일부나 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운동이 기계적인 사회 운동과의 연대 흐름이 아니라 노동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사회 공공성 확대 운동이 아닐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는 것은 반드시 구현해야 할 계급적 상상력을 현실의 정치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소 결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사회적 공공성인 교육, 실업, 비정규, 반전 평화 등등 현재 노동운동이 해야 할 일들을 노동자 스스로 주체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의제가 던져지고 이런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을 통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담론을 노동자에게 전제가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바로 현 노동운동의 혁신적이고, 계급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어렵게 의제를 설정하여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에 의해 강제되는 것을 넘어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무슨무슨 공공성은 우리 노동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지침에 의한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 노동자 스스로 내재화될 때, 우리는 사회를 변혁하는 활동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활동가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4.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집합과 그 현실성을 위하여

1) '지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협소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로서 '지역' 개념은 변혁운동의 언어가 아니다.

'지역'을 강조할 때 지역노동시장과 지방자치권력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참여'와 '게임'의 전략을 말하기도 한다.²⁹⁾ 하지만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제로, 지역 차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지역 게임전략의 의미로 보여 진다. 우리가 말하는 '지역'은 이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 산별시대 노동운동의 '지역'의 의미 돌아보기

산별시대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중의 하나로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면 지역이라는 것이 교섭과 재정 등의 산별내

29) 주로 한노사면의 입장이다. 전북지역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48p(2007년 1월25일)

권력의 부분적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찾기로 부족해 보인다. 즉 산별 노조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측면을 핵심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운동의 역할과 계급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정도의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는 지역 자본 세력의 포위와 공격을 통한 일상적인 노동운동 죽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운동의 위기가 관료화에 한정되는 것인가?

'지역'을 말하면서 지역을 판단하는 두 가지의 전제가 공존하고 있다. 첫째,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수행하고, 중앙권력의 부분적 이양을 통해 관료화를 차단하는 효과로서 '지역'의 의미이다. 둘째, 운동이 시작되고, 그 토대와 거점이 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의 의미가 그것이다. 산별노동운동이 말하는 지역은 표현대로라면 전자거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2) 현장과 지역의 관계맺기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현장은 현장대로 잘하고, 지역은 연대하거나 선동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일면 타당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일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투쟁의 공간으로, 지역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투쟁의 태세로 단순히 참여하거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활용공간이라는 협소한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4-1 지역운동은 무엇인가

지역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노동(정치)운동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분명 정치의 핵심이지만 이러한 정치는 자본의 패권정치이지 노동자계급의 민주정치가 아니다. 자본은 도시와 집중을 요구한다. 자본의 정치는 중앙집중적 도시집중적 정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노동자계급의 운동(정치)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서울)중심의 정치에 굳어져 있다. * 노동운동으로 치환하면 산별노조, 민주노총, 대공장정규직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역(정치)운동은 이런 중앙정치의 세습으로부터 자본가적 집중정치로부터 탈출(탈주)하는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지역의 변혁적이고 계급적인 (정치)운동의 자치와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계급)대중의 정치의 확장을 통해, 각각의 흐름을 통합하면서 노동자국제주의라는 거대한 대양으로 나아가야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실과 그 구체적인 삶 속의 계급투쟁의 구체적실천이라는 경험을 (계급)대중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직접 획득하여야 한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계급)대중들이기 때문이다.

소위 "중앙"의 관점에서보면 지금까지 '지역' 운동은 지역적이고 소모적일 뿐이다. 더욱이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나누는 방식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급투쟁이 시작되고 발휘되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 고 해야 변혁적 시각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운동은 계급투쟁 영역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지역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은 노동자계급에게는 계급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보라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담론은 자본의 담론이 확실히 지배하는 곳으로 자본의 운동에 완전히 장악된 공간이 되었다. 교육, 보건, 부동산, 환경, 인권, 정치와 선거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담론은 시민사회 절대다수의 의지로 포장되며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자본의 지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재생산영역에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를 확대재생산하는 자본의 운동 그 자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빈 공간, 자본이 자유로운곳, 우익적 시민사회 담론이 진보인척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지금까지 지역이라 불리는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자본과의 한판 승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곳은 주체형성의 근거지요, 노동자 민중의 생활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시빈민, 장애인, 노약자들, 소수자들, 노동자계급으로부터도 소외받은 수많은 민중들이 있는 곳이다. 노동자계급은 그곳에서 자본이 물려준 배제와 공포의 정치를 몰아내고 공존과 포용의 정치 연대와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의 재생산 근거지를 무너뜨려야 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지역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4-2 지역운동의 중요성은 이외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접근성의 문제이다.

거리 접근성을 통한 생활문화권의 공동화일 것이다. 지역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즉 후자의 관성이 우리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데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주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앙” 이라는 곳 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자본 운동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발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의 전선이 설치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전선들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의 전도사인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지역 투쟁을 강화하게 만들고 있다. 즉 지역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이

런 예는 부안 투쟁, 평택 투쟁 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구조화 안착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운동의 활성화, 다수 운동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소수 운동이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다. 또한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대안적 사회 프로그램이 형성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지역화는 어쩔 우리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이 또 다른 운동 공간으로서 중요한 것이다.³⁰⁾

○ 지역운동은 조직과 전술의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다른 지역에게 모범 사례를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지역운동을 통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담론 안에 숨어 있는 개량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일반노조운동 등이 이런 중요한 계기를 실험했고,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산별운동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역노조운동을 보편적 사례로 받아들이고, 열어주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지역노조는 또한 경계 없는 조직화를 인정해야 한다.³¹⁾ 이것은 또한 정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런 지역노조에서 어떤 정파든 자유롭게 운동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조직인 민주노총만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아닌 조직화 또한 인정함으로써 연대의 일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노조의 파업 투쟁 전술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과제로 자리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접근성의 용이함의 인정

- 산별노조가 지역노조가 되고, 이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 지역 산별노조는 또 다른 지역노조의 활성화를 돕는 운동 조직으로서의 기풍 형성
- 지역 노조들의 지역 사안에 대한 대의원대회 및 기본 의결 단위에서의 결의 형성을 위한 협의체

30) 이런 사례는 전북에서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새만금 반대운동이 그렇다. 활동가들도 막연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허물며 환경단체도 허내지 못한 일인데 '새만금 사업 반대하는 부안 사람들'이라는 소수의 주민들이 시작한 운동이 결국 전국화하는 데 성공했고, 전북 내에서는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부안 해피기장 반대 투쟁은 여러모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피리디뎀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31) 우리 노동운동은 특히 조합운동에서 보면 연맹의 경계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식의 조직화는 운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연맹이 아니면 투쟁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구성 및 내셔널센터 결성

(2) 지역 소수 운동에 대한 주체 형성과 현장조직의 연대

-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지속하는 운동들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새만금 투쟁등 투쟁과 현장조직의 연대 등이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아 간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

(3) 다양한 지역노조 인정

- 민주노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노조를 인정하여 경계 없는 조직화와 연대 활동 강화
- 동종업제와의 단협 일반적 적용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내셔널 센터의 강화

5. 정리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현장투쟁=경제투쟁’으로 박제화한 질서를 ‘현장투쟁=정치사회투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더 많은 상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력들을 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미 조직된 무엇이 아니라 조직할 무엇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래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우리 이데올로기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총론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총론의 이해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가 실제 해볼 수 있는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그것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형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예들은 말 그대로 예일 뿐이다. 그 예들에 가뭇지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노조운동혁신과제와 활동가들의 실천방안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김태연

<5대 혁신방향>

-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 확대강화
-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노조혁신운동 강화
- 자본통계분쇄와 현장권력 확대강화
- 활동가의 민주적 소통과 실천강화

1.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의 확대강화

- '민주노조운동' 에서 '노동해방 노동운동' 으로!
- 민족주의 노동운동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 사민주의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 조합주의·의회주의 노동운동에서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1) '민주노조운동' 에서 '노동해방운동' 으로!

- '민주노조운동' 수준의 노동운동 전망으로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설 수 없다.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 을 사회변혁적 전망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화·사유화의 폐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을 반자본 '노동해방운동' 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대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민주노조운동' 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몇 년전에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나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연대노조운동(전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새 흐름)’, ‘사회개혁적 노동운동(한국노총)’ 등 다양한 방향이 제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전세계 노동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 즉 자본주의를 극복할 운동방향을 모색·실천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기치로 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2) 민족주의 노동운동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 노동운동과 자주통일운동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 수준의 노자대립체계의 산물이며, 분단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민중이기 때문이다. 냉전구도의 해체에 따라 2001년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 채택 등 남북관계가 일정정도 진전되었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자본주의도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중심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자주통일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운동의 전유물이거나, ‘좌파’ 노동운동이 무관심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 그러나 노자간 계급대립을 은폐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비정규문제와 한미FTA문제 등 첨예한 노자대립국면에 있는 2007년 노동절 투쟁전선이 남북노동자 촉구대회로 교란되어서는 안된다. 반신자유주의·세계화 투쟁전선의 중심에 서야 할 민중연대가 자주평화통일 중심의 한국진보연대로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한국노동운동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우뚝 서야 한다

3) 시민주의 노동운동에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으로!

-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량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고, 보다 가열차게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의 개량투쟁을 의미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개량투쟁을 개량주의로 매도하는 좌익적 편향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투쟁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지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량투쟁과 변혁투쟁의 경계에 강고한 철옹성으로 가로막힌 것은 아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첨예해지고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활발한 개량투쟁의 조건이자, 변혁투쟁으로의 발전조건이기도 하다.

-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내 대립은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노사정대표 자회 9.11야합까지 계속되었다. 노사정 3자구도는 ‘교섭활용론’으로 위장하여 대중에게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지만, 9.11노사정야합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 이제 위장된 사회적 합의주의인 교섭활용론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양극화' 로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노자간 양보를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회연대전략은 또 다시 서구 사민주의 노동운동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므로 사회연대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사유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사회화와 공공성을 앞세워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조합주의와 의회주의를 극복하고 변혁적 정치운동으로

- 노동조합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 노동운동은 대중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거세한다. 반면에 좌파 노동운동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변혁성이라는 미명 하에 대중과의 굳건한 결합을 회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자족적 운동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 역시 기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변혁은 소수 선각자들의 선도적인 투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이 변혁투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현 시기에 노동대중의 개량적 요구와 투쟁 곳곳에 반자본 사회변혁의 맹아들이 스며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확산시켜 내고, 그 투쟁을 반자본주의 사회변혁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질서 속에 갇혀 있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정치투쟁과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정치조직이 건설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등 전체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다. 장애인, 여성 등을 자본주의적 착취 사슬의 최하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곳에 노동권과 인권의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자유화' 는 각종 사회적-공공적 규제를 약화시키고,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을 남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반자본 민중해방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을 주창하고 있다. 만약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이 노동운동을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각 부문운동의 하나로 위치짓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논리에 사회공헌기금 등 계급화해, 노동자들의 양보논리가 언뜻 언뜻 보이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노동해방민중해방을 위한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포괄해야 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분쇄를 위한 투쟁전선의 확대강화

1) 투쟁의 위기

-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에 맞서 노동대중은 현장 곳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은 사실상 무너지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관철되어 왔다.

무엇이 패인인가? 우선 지난 투쟁의 요소요소에서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구도에 따라 투쟁전선에 혼란을 초래했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또는 투쟁으로 교섭을 돌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투쟁은 교섭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섭’이라고 했지만 노사정 3자협상은 교섭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가 형식상 제3자적 위치에 서지만 사실은 자본과 함께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구도였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양보가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의 정부와 자본주도의 의제와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경고성 총파업을 반복하고, 그나마 협상일정 변화에 따라 투쟁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신뢰와 긴장이 무너져 갔다.

- 민주노총 투쟁전선외에는 지도부의 문제에서만으로 진단될 수 없다. 투쟁전선을 무너뜨리는 ‘좌우 공멸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지도부는 항상 들고 나오는 ‘역량부재론’에 대해 좌파 노동운동이 자신있는 투쟁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책임있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밑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연맹의 형식적인 투쟁기조를 돌파하는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나서지 못할 때 독자적인 선도투쟁이나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동조합 질서에 가두어 두고 있다.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노동대중은 투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협조적 방식이나 실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경도되고 있다.

2) 투쟁전선 확대강화

(1) 투쟁과제

- 비정규약법 철폐 및 정규직화차별철폐
- WTO, FTA 등 세계화 저지
- 비정규, 공무원, 교수, 교사, 이주, 여성, 장애인등자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노동안전보건쟁취
- 사유화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
- 해고자복지 및 노동탄압분쇄
- 반제반전평화

(2) 투쟁방향

-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위한 전국, 산업, 지역 총파업전선 강화
- ② 활동가 선도투쟁과 현장일상투쟁 강화
- ③ 투쟁집중점을 선정한 일점돌파투쟁
- ④ 대중의 분노와 결합한 위력적 가두투쟁

3.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노조혁신운동 확대강화

1) 산별노조, 복수노조 체계하의 조직발전방향

(1) 노동조합 전국조직의 전망과 발전방향

① 양노총 체계

- 자본과 정권은 해방 이후 어용노총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해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건설투쟁은 전노협에 이어 민주노총을 건설함으로써 어용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체계에 파열구를 내었다. 자본과 정권은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을 거세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이 '시민권' 을 획득했다. 양노총체계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을 통한 노동자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본과 정권의 대노동전략은 민주노총을 포섭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96년 노개위, 97년 노사정위원회가 그 수단이었다. 그러나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관철하는 경로로서는 역할을 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저항과 노사정 3자구도를 끌어갈만한 정치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관계로 포섭에는 실패했다. 물론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 포섭에 실패한다해도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 라는 분할 지배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 3자구도 하에서 한국노총과의 협상공조 필요성에 의해 양노총 연대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9.11 노사정야합으로 양노총 공조전술은 사실상 파탄났다. 이는 그동안의 양노총 공조전술이 사실상 노사정 3자구도를 근거로 한 것이며, 투쟁의 연대는 한번도 실현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 3자구도의 파탄은 곧 동시에 양노총 공조의 파탄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러나 9.11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9.19 대대에서 양노총 공조전술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노동절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로 만들면서 양노총 공조를 복원시켜버렸다.

- 자주통일운동은 한국노총을 진보운동 반열로 자리매김해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한국노총은 수구적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노동자적 행동을 드러내어도 '통일전선선술' 기조 하에 진보세력이라는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연대나 범국민이 물계급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노총을 진보진영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연대전략을 폐기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지변확대를 위해 한국노총을 정치적 연대세력으로 삼아나가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노총 해체를 분명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양노총 체계하에서 노동자분할지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로 현실화될 때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판단과 결사의 자유원칙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복수노조체제에서 자율교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양노총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을 활용한 분할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자율교섭제가 관철되면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결정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한국노총 해체와 조합원 차원의 대중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이 상층 중심의 한국노총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활동가 차원에서 한국노총 산하노조에서 노조민주화를 투쟁하고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② 복수노조시대

- 한나라당 분파는 10년간의 실권으로 한국노총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 물론 재집권하면 복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전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극우적 보수이데올로기를 손질하여 보수세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신보수(뉴라이트)가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그 노동조직인 뉴라이트 노동연합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채노총', '한교조', '공노총' 등은 대선, 총선을 전후하여 제3노총으로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그 지형이 드러나고, 2010년 복수노조 이후 세력을 확대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3노총 구도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늦어도 2010년 이내에 전면적 혁신과 투쟁력 복원을 통해 계급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3분 구도의 하나로 전락하고, 한국노총과 제3노총은 노선상 차이가 없는 가운데 포위되는 형국에 처할 것이다.

- 아직 본격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민주노총 상태에 실망하여 '좌파노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들이 따른다. 현재의 민주노총이 소수의 정규직 노총으로 인주하고 절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대중과 거리를 둘 경우 계급대표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과 조직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주장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전략은 현재의 민주노총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변혁적 노동운동을 운동방향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혁신과 투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1) 관리형 산별노조, 교섭중심 산별노조로 갈 위험성

자본과 정권은 산별노조재편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자본이 원하는 산별노조는 교섭중심의 산별조직, 현상이 약화된 산별조직이다. 산별교섭에 응하는 조건으로 산별 중앙관리집단이 조합원대중의 분출하는 요구와 현장투쟁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나타났듯이 자본과 정권은 할 수만 있다면 기업단위 노조조직을 노사협의회 등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이다. 노동 내부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한 채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위험성도 있다. 현재까지의 산별노조운동으로 보면,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별노조체제로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금속산업연맹에서 업종별 산별조직체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지만, 공공, 사무 등에서는 업종 중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2) 계급적 산별노조를 위한 과제

- 비정규, 중세영세사업장, 실업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산별노조

‘계급적’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기업별노조가 포괄하기 어려운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기업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는 산별노조를 말한다. 그동안 기업별 단위노조의 조직형식전환과 업종별 연맹 통합방식에 의한 산별노조는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기업사업장, 실업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존 전환노조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사업의 중점이 두어졌다.

이제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요구를 전환하고, 투쟁의 중심을 비정규, 이주, 여성, 중소기업사업장, 실업노동자들로 옮겨야 한다.

대사업장에 집중된 재정이 산별노조체제에서 재분배되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업장노조의 친목회적 성격의 조합비 지출함목의 계급적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정도 비율의 산별노조 재정을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기금화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금속, 공공, 사무, 화학, 서비스, 건설 등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업별 울타리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몇 개 지역에 걸쳐 있는 대사업장들이 산별노조전환 과정에서 지역체제로의 재편을 진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노조들이 지역을 근간으로 조직체제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업별노조 중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지역지부 또는 본부)에 편재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역지부, 기업지회(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과 이에 따른 독자적 투쟁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별노조에서 교섭, 투쟁, 재정권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으로 어떻게 분산(배분)하

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집중되지 않으면 ‘무늬만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중앙으로만 집중되고 현장으로 분산(배분)되지 않으면 ‘관료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교섭과 투쟁권의 집중과 분산 기준은 산하조직 보충교섭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조직의 교섭에 대한 인준투표가 부결된 산하 조직에 대해서는 독자적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

- 교섭대물을 지양하고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최근 산별노조들이 자본과의 교섭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중투쟁에 근거하지 않는 교섭구조는 자본이 요구하는 관리형 산별노조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근거한 강력한 산별총파업이 조직되어야 한다.

- 대산별노조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금속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업종을 하나로 묶는 대산별노조로 돌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주요 조선업종이 통합산별노조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동차업종의 업종 중심성이 강화될 경우 대산별노조는 형식화되고 업종별노조로 후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이후 금속산별노조는 대산별노조로의 질적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공공운수의 경우 4연맹통합 및 2007년 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함으로써 대산별노조의 틀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운수는 역시 업종중심성 강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산별노조는 지역중심으로 조직틀을 잡아야 한다. 전교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를 교원산별노조로 통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대산별노조, 공공대산별노조, 교원산별노조, 건설산업노조, 서비스유통산업노조, 공무원노조로 재편되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한다.

- 대중의 산업별 요구에 기초한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

대산별로의 조직통합은 자칫하면 덩치만 키울뿐 조합원대중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권력만 상층으로 집중되어 관료화의 병폐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크게 뭉치는 것은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에 근거해야 한다. 조합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확대강화되어야 하고, 힘의 중심이 노동대중에게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권력의 확대강화를 위해 활동가들이 적극 실천해야 한다.

- 산별노조시대의 활동가

산별노조체제에서의 현장활동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단위노조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은 기업별노조 활동가에서 지역의 활동가로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켜야 한다. 노동전선은 산별노조체제에서 기업단위 활동가들을 지역차원의 활동가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직형식이 될 것이다.

3)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1) 비정규 조직화의 현실과 전망

- 자동차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화물, 학습지, 골프장), 건설의 조직화가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날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유통금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비정규조직화기금 모금사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조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각 연맹은 가입된 정규노동자의 조직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본부는 비정규조직화사업 주체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 불법파견 합법화, 기간제노동자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노자간의 대립 격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2) 과제와 실천방안

- 비정규약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비정규투쟁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노동권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바,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에 대한 전면전, 금속에서의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실질적 성과의 확보를 통해서 제도화에 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에 저항하는 생활권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둘째로, 조직화 전략으로서는 다음에 집중해야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된 노동자 내부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역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로 조직화 전략만이 아니라 비정규활동가들의 주체화 전략이 필요한데, 비정규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사안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비정규연대체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운동과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전선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공동의 경험들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비정규노동자, 유통금융산업비정규노동자 등 핵심조직사업을 설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7년 노동자성인정 투쟁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 극단적 차별과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이주, 장애, 여성노동자 투쟁과 조직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2006년 비정규 계약법이 통과된 조건에서 지금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정규 투쟁이 분산방치될 경우 악법은 현장에서 관철되고 비정규악법철폐 투쟁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요원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규 투쟁을 연대투쟁으로 묶어내고, 연대의 힘으로 일점돌파해야 한다. 노동전선은 KTX, 새마을호 등 진행중인 비정규 현장투쟁 중에서 시급히 집중점을 정해 역량을 집중한 일점돌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비정규조직화는 산별노조와 연동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 기업단위 비정규 노동자 조직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 차원의 비정규조직화사업을 위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권 전반을 요구로 한 지역투쟁과 조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좌파 노동운동 역량이 몇 군데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2-3년간의 지속적 사업으로 지역 차원의 비정규 조직화의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규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노동계층화 정책에 의해 비정규 투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활동가들이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직 활동가들이 소속 사업장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활동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4) 지역운동 강화

- 지역은 노동자대중이 노동과정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부대끼는 공간이다. 전국활동조직이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소통하는 일상적 연대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민주노총 창립과정에서 이른바 ‘씨줄 날줄’ 논쟁결과 산별별조직을 가맹조직으로 하고 지역조직을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체계가 만들어졌다. 연맹은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는 지역연대투쟁,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권한과 역량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연대파업,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투쟁 등에서 교섭권을 독점한 연맹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역본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총연맹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 지역운동은 그간의 투쟁사업장 지역연대투쟁을 넘어서야 한다. 개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사

투쟁을 지원연대하는 것만으로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들을 지역범위에서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빈부격차문제, 생활권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빈곤, 환경, 문화 등 의제를 확대하여 민중연대 확대강화에 노동운동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시민사회단체로 파고들어 노동을 포위하는 형태로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여론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운동이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민중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5) 노동조합조직의 민주성·자주성 강화를 위한 대중운동

(1) 직선제, 소환제, 소수자 의견권 확대

- 지난 10년간의 민주노총 직선제쟁취운동으로 임원직선제가 통과했다. 그러나 대의원 직선제와 소환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 직선제가 단순히 선거운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의 혁신운동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직선제에서 보듯이 제도만으로 조합원 대중의 밀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대중이 사업평가, 정책판단, 지도부 선출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현장 곳곳에서 활동가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 각급조직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조직적 소수자에 대한 할당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2) 부패비리척결

- 부패비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약화에서 초래된다. 자본과 정권과의 무원칙한 만남, 이면협상 등은 부패비리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부가 자본과 무원칙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회동하는 관례를 타파해야 한다.
- 각급 조직 집행부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동반책임을 지는 기풍을 확립해야 하고, 부패비리척결위원회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 그러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비리에 대한 대중적 척결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3) 재정의 자주성

-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혁신안으로 정부보조금 수령확대안을 제출했다. 국고보조금수령확대를 조직혁신안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수령불가안, 사무실 임대료 수령안, 운영비와 사업비 수령안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수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한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연맹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각급 조직이 조직건설과정에서 조성한 기금은 완전히 소진되어버림으로써, 정부보조금

중액없이 사무실확대는 꿈도 못꾸는 처지가 됨으로써 재정자립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다.

- 산별노조체계 하에서 각급 노조조직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에 근거한 맹비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사무실마련 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향후 5년 내에 정부보조금을 반환하고, 재정자립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4) 성차별적가부장적 조직문화의 근절

노동운동 내부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차별가부장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동지적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한다. 동지들의 성차별적가부장적 행태를 농담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문화의 찌꺼기이며, 전근대성의 잔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4. 자본통제분쇄와 현장권력 확대강화

1)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

-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해 즉각적인 일상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국지적인 자본통제에 노조체계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기상실의 위험이 있을 때 활동가들은 즉각적 일상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노동자와 사측간의 힘겨루기가 크고 작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한발한발 물러서다보면 어느덧 현장은 관리자의 수중에 장악되기 마련이다. 물량경쟁, 노동강도강화 등을 소재로 현장일상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강도 강화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특징이다. 산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까지 넘보던 노동자들이 어느 듯 후퇴하고 있다. 노동강도강화에 저항하고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투쟁은 작업장에서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첫걸음이다.

-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짝 꽃피웠던 노동문화는 이제 집회에서 노동가와 울동으로 보조하는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이 서구 상품화된 문화에 맞서 풍물 등 전통 노동문화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대중과 호흡하고 연대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사측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그 외의 모든 문화적 일상활동은 사측의 물량공세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현장의 노동문화활동가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화에 맞서 노동자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노동문화를 대중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87년 20주년을 맞아 이 사업이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문화는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소한 노동자 가족이 지역의 생활공간에 노동문화를 외면하고 자본의 상품화된 문화에 포섭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사측

의 문화공간과 지자체 문화공간을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차 노동자들의 지역문화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2) 노조집행부의 관료적 통제를 노동대중의 민주적 통제로 돌파

- 조합원 주체의 현장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조합원대중은 노동조합을 해결사로 치부하고 직접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노조집행부는 물론이고 활동가들도 조합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합원 대중과의 현장토론 기풍을 세워야 한다. 대사업장의 경우 실종되었거나 유명무실해진 소위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현장토론에 의거하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 조합원들의 토론이 아무런 권위를 갖을 수 없을 때는 결코 현장토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조직이 조직혁신으로 직선제와 소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 노조질서를 넘어서는 현장권력 확대강화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조합 민주주의 판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산별노조의 경우 투쟁권의 중앙집중으로 현장 일상투쟁을 저해할 수 있다. 비공인파업을 비롯한 역동적인 현장투쟁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변혁적 지향은 현장권력이 강화될 때 억제되지 않고 힘차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관료적 질서를 뛰어넘는 현장권력이 끊임없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5. 활동가들의 민주적 소통과 실천강화

1) 연대의 위기

- '현장좌파' 활동가들은 '입장' 차이로 인해 몇 번의 분열을 거듭했다. 그러나 그 입장 차이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에 대한 연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전술적 차이는 노선적 차이로 확대해석되고, 서로를 불신하고 경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에서 당면한 투쟁에 대한 공동의 계획과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가장 가까운 현장 활동가(조직)를 공격하는 매우 저급한 전선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 현재의 노동운동을 두고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는 말이 있다. 특히 정치조직(노동사회단체, 경향) 수준에서의 '현장좌파' 노동운동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조직 간에 연대의 기운이 높아지기 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조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자는 정치조직 수준에서의 좌파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노선, 조직노선의 차이에서부터 실천과정에서의 감정적 불신까지 겹쳐 단기간에 조직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동실천, 사상투쟁 등 많은 실천을 거치고, 논쟁만이 아닌 실천적 검증까지 되어야 좌파 노동운동의

조직적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 좌파 정치조직들은 좌파활동가 역량의 일부를 조직하고 있으나, 통틀어 1/3의 역량이나 조직하고 있는지?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2-3000명의 좌파활동가들을 하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실천내용과 조직형식을 만들어 낸다면 그 힘은 대자본-대정권-대우경화 투쟁에서 한 번 해볼만한 수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2) 활동가들의 민주적 소통과 조직적 실천을 대안, 전국활동가 조직

- 전국활동가조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대사업장과 중소기업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활동가들 간의 민주적 소통을 확대강화한다.
- 전국활동가조직은 정치조직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면 투쟁과 혁신 그리고 변혁적 지향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묶어낸다.
- 전국활동가조직은 지역을 축으로 현장과 전국을 연결하고, 산업과 업종의 벽을 넘는다.

3) 연대연합의 원칙

(1) 대적전선과 운동 내의 노선대립

- 노동운동의 '정파대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운동사에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 앞에서 내부분열로 자중지란을 초래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운동내부의 기회주의와의 노선투쟁에서 대적전선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된다. 노선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세력이 집행한다고 사사건건 문제제기만 하고 투쟁과 실천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 반면에 대적투쟁을 빌미로 하여 운동 내부의 문제를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역사적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이 잘못된 노선으로 경도되어 헤어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자중지란으로 망하는 경우이다.

- 최근 노동운동 내의 정파대립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 투쟁 실패의 원인이 정파 때문이라는 정파책임론이다. 다른 하나는 정파 자체가 문제라는 정파불신론이다. 두 가지 시각은 모두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정파들이 운동의 노선이나 장면 정책과 투쟁전술 등에 대해 대중 앞에 책임있는 대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검증받는 기풍이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선거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조직,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조직, 자신의 입장이나 대안은 밝히지 않고 남 욕만 하는 조직들이 문제이다.

각 정파들은 자신의 노선과 실천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다. 실천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면 흔쾌히 자기반성을 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내용을 중심으로 연대를 확대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 노동운동은 이른바 현장파(좌파), 중앙파, 국민파(우파)로 지칭되는 3분구도에 최근에는 범좌파연합의 균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분열, 새흐름의 독자세력화 등 분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분열은 각 운동노선과 세력들이 자신의 노선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 것이다.
- 노선이 다를지라도 연대연합할 수 있다. 당면한 대적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운동 내 다른 입장과의 연대연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노선적 차이를 이유로 언제나 연대연합을 거부하고 독자청청하는 세력도 있다. 특히 좌파적 입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잘못이다. 노선이 다를지라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당면 과제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공통적인 정책을 내세우나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올바른 연대연합이 아니다.

*** 세 차례 혁신운동의 실패**

- 민주노총 출범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때마다 노동운동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혁신을 주장하고 혁신사업을 추진함. 1998년 민주노총 2기집행부의 혁신위원회, 2000년 단병호-이수호 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수호-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위원회가 그러함. 그러나 모두 실패함.

- 실패의 원인은?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주체의 문제가 가장 큼. 국가 차원의 혁신이든, 노동조합 조직 차원의 혁신이든 혁신 주체가 혁신 승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함. 민주노조운동의 세 번의 혁신사업은 주체로 보면 모두 위로부터의 혁신임. 밑으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고, 위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심지어 궁정쿠데타 세력이 총칼을 앞세운다 해도 밑으로부터의 혁신기반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민주노총의 경우 세 번의 혁신사업 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에 기반하지 못함. 혁신은 불가분하게 노동운동 노선문제가 드러나 혁신 찬반의전이 세력화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로 불리는 세력이 위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했지만, 세 세력 모두 비슷한 노선의 현장활동가들조차 혁신의 주체로 세우는데 실패함.

***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 혁신운동**

-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올바른 방향임.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함. 대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혁신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장활동가들이 혁신을 자기과제로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 혁신은 실패할 것임. 반대로 민주노조운동을 바닥까지 뒤흔드는 대투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현장활동가들만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 즉 관철이

어려움. 그럴듯한 혁신안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올바른 집행력과 결합된 현장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 이장에서 제출된 혁신과제 실천하기 위해 현장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추진되어야 하고, 혁신의지를 갖고 대중적 책임을 질수 있는 집행부가 서야 함.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워크숍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의 복원

박준형(사회진보연대)

〈요약〉

(1) 노동자운동이 신자유주의 하에 변화된 정세에 맞게 노동자계급의 표상을 재구성(계급재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비정규/중소영세/이주) 조직화와 함께 이에 걸맞게 운동 지향/이념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2) 노동자운동(주로 노조)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혹은 경제적 이익집단 성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부에 '운동' 을 다시 도입하고, 하나의 사회운동기관으로 재조직되어야한다.

(3)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허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세계를 위한 변혁 이념을 함께 정립하고, (복수의)보편적인 이념과 운동들을 수용하고 실천하여야한다. 특히 페미니즘과 국제주의 등이 중요.

* 제기하는 논쟁 지점 : 노조의 페미니즘 수용,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의 등

(1) 오늘날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을 “대표” 하는가?

따라서 노동자 조직들 (특히 계급정당)은 결코 노동자 운동의 총체성을 '대표'했던 것이 아니며 노동자 운동과 주기적으로 모순에 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이 산업혁명의 특정단계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집합 노동자'의 특정분파를 이상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대표성이 국가와 정치적 타협의 특정한 형태에 조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노동자 조직의 실천적 형태들에 반대하여 노동자 운동이 재구성되어야하는 순간이 항상 도래했다. - 발리바르, 「계급투쟁에서 계급없는 투쟁으로」

▣ 노동자'계급'은 누구인가?

- 노동자(계급)인가 아닌가?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노점상, 도시빈민, 가내노동자, 가정부, 계절적 농업노동자, 소작농, 다양한 부문의 비공식노동자 등등 : 이런 질문은 허방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은 사회학적 분류가 아니며 계급투쟁 속에서 항상 (재)구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층적으로'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운동을 노동자운동에 실질적으로 결합하면서 노동자의 표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만 현존하는 노동자운동을 표상하는 '노동자'의 분파가 누구인가는 정치적 쟁점 : 민주노총

은 대중에게/조합원에게 누구로 인식되는가? 혹은 누가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 현대자동차노동자.. -->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로. 이는 운동의 표상과 지향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은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념을 혁신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단지 조직화의 숫자나 개별 사업장 투쟁의 승패의 문제만은 아니다.

- 노동자계급은 구체적인 정세들 속에서 '순수하게 역사의 주체인 계급' 이 아니라 '대중' 으로 출현한다. 계급을 형성하는 계급투쟁은 노-자 관계를 넘어선 사회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계급들의 직접적인 실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은 사업장 단위의 경제투쟁 혹은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관계에서 노동이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지배관계-경제적일 뿐 아니라, 법적-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관계 전체를 문제삼는 것이다.)

-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계급투쟁에 개입하는 여러 운동 중 '하나' 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계급투쟁을 가장 잘 '대변' 하거나 '대표' 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에 배타적 특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 복수의 보편적 이념과 운동들

- 노동자운동만이 '보편적' 인가?(혹은 보편적 해방운동은 노동자운동 뿐인가?)

- 사회적 관계의 모순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원인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모순에 반대하는 이념과 운동들 중에는 독자적인 보편성을 가지는 것들이 있다 ;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문제는 이러한 복수의 보편적인 이념들을 어떤 하나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 속에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는,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편적 이념과 운동들을 자신의 내부에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럼 '노동자계급' 은 다양한 저항주체 중 하나일 뿐인가?

- 그것은 생산관계(노자관계) 속에서 직접 자본가계급과 대면하기 때문에 계급적대에 직접적으로 민감하며 노동자운동의 경제투쟁조차 항상 계급적 대립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무엇보다 '대중을 조직' 한다는 점. ('계급' 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을 조직해서 투쟁과정에서 '계급을 형성' 하는 '대중조직' 이다.) 따라서 그것은 특권화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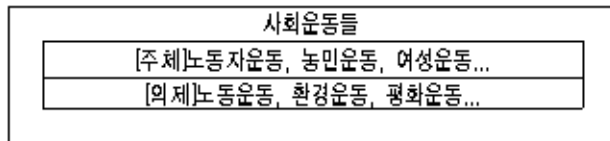
- 현실에서 운동들 사이의 결합은 순수하게 1:1:1...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정세와 운동조건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동 간의 상호 존중하는 교투과 수평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운동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환상의 시간대는 없으며 모든 시기에 정세에 따라 과잉 결정된다. => 경향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중요한 위치를 갖지만 그 중요성은 정세에 따라 상이하며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항상 재구성되어야한다.

(2)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과 어떤 관계인가?

- 노동자운동은 자신을 사회운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해야한다.

▣ 사회운동의 사전적 정의

-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 노동 운동, 농촌 운동, 학생 운동, 혁명 운동 따위가 있다.”



-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사회운동들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사회운동포럼을 거치면서, 다른 운동들과의 대화와 교痛的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도 있음)

o 이는 노동자운동이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부문운동의 의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님. 오히려 하나의 — 가장 중요한, 그러나 유일하지 않은— 운동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

▣ 사회운동의 과제, 노동자운동의 과제

- 한편, 노동자운동이 계급투쟁을 혹은 사회운동 과제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이를 인정하는 운동 간의 윤리/예의가 필요) ① 왜냐하면 노동자운동은 항상 “조직된 노동자운동” 을 의미하지만 이들이 계급투쟁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조직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이며, 그 대중은 노동자계급을 이미 넘어선다.(계급으로 구성되지 않은 노동자가 이 투쟁 속에서 계급으로 구성되며, 또한 노동자가 아닌 대중들도 함께 투쟁한다. 이 속에서 대중투쟁은 노동자운동의 범위를 넘어서고, 또 그럴 때에만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② 노동자운동은 존재 조건 상 노-자 관계로 제한되지 않는 사회의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심지어 자신 내부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운동과의 교통과 연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생태/환경이나 반전/평화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거의 유일하게 ‘노조’ 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경제주의와 실리주의에 침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혁신은 물론 외부적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

(3)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사회공공성을 넘어서

- 그러나 교육, 의료, 교통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장을 민주화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증진되어야 한다. (각각의 사회공공성 투쟁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등의 투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다른 조직들이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 전체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를 '부문의제' 의 문제로 치환할뿐더러 작업장-생산영역-에 기반한 노조활동에 재생산영역 의제를 기계적으로 외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운동으로 조직되는 데 한계), 이는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과제+해당 부문운동의 과제이지 노동자운동 전체의 과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 사회공공성 구호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고 노조운동이 대중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사회변혁의 정치적 전망과 전혀 무관하게 노조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제도적 이슈를 제기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 공기업노조들 중에 일부는 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공세가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집중되면서 2000년대 초 짧은 시기 급진화되었다(철도-발전-가스 연대파업이 정점). 그러나 이들 공기업 노조의 '상황의 지대' 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기되는 '사회공공성' 개념은 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운동방식을 축소하고 경향적으로 코포라티즘에 수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박태주 등의 "공공서비스 노조주의")

- 노조가 경제투쟁을 넘어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고, 신자유주의 사유화 속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대중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이슈들을 매우 단편적이고 제도적이며 도구적인 이슈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다 광의의 사회운동의 일부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o 노동자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 '노조-당' 혹은 '노조-사회운동(단체)' 혹은 '노조-사회운동(단체)-당' 과 같은 역할분담 모델은 모두 노조를 경제주의로 가두는 위험을 안고 있다.(조직적으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운동의 역할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오히려 '사회운동적 노조' 와 같은 이념에 따라 노조-당-사회운동(단체) 모두의 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운동적 노조, 사회운동적 당, 대중적인 사회운동(단체) 등으로 상호 변화해야 한다.(상호 추동해야함)

o 노동자 조직의 변혁 : "노조 내 운동"

- 특히 주로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적 실천을 한다고 할 때, 이는 조직적 결합이라기보다는(그것에 우선해서) 노조 활동의 지향, 사업장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받아들여 이를 조합원 대중 안에서 하나의 '운동' 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조직 내 운동 : 예를 들어 조합원 안에서, 노조 안에서 (단순한 조직동원을 넘어서) 이랜드 투쟁 연대를 위한 '운동' 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반전 '운동' 을 진행할 수도 있다. => 이를 통해 "노동자 사회운동"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조직형태인 '노조' 를 운동들이 관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노조가 경제적인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운동(따라서 계급투쟁)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여러 가지 조직적 가능성도 사고해볼 수 있다.

- 전노협 시기에는 노동운동 단체들이 지노협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동에 결합한 경험이 있고, 필리핀의 API(필리핀노동자연대)와 같은 노동자 연합단체는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단체를 모두 가입단체로 하는 방식으로 조직화 => 민주노총 모델과 같은 노조운동과 사회운동(단체)의 제도적 분리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러한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결합모델이 아니라도 지역단위에서 노조와 사회운동이 소통하고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 혹은 활동가 단체가 필요함 : 현존하는 모델은 정마적인 조직 혹은 활동가 조직이지만,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부터 실험적으로 초정마적인 지역별 '사회운동센터'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운동 조직들의 변모

- 현재 사회운동 단체들은 광범위한 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보다는 (대중의 조직화는 경제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맡기고) 노조 등의 대중조직을 외부에서 비판하거나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운동이 보다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을 경유하는 것이 중요한 경로라는 점에서, 또한 기존의 대중조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적 결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로 노동자운동, 정당의 지역조직, 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센터" 와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중조직의 경유로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단체들도 대중들을 직접 조직하고 활동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사회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의 캠페인 성격의 "직접행동" 을 넘어서 대중에 대한 "직접 조직화" 역시 자신의 역할로 해야 한다는 점)

-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수준의 대중(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일 수 있을 것 ; 마치 프랑스의 ATTAC이 전국적 차원에서는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체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시민교육기관을 겸하는 것처럼. (ATTAC의 경우, 초기 조직화에 다양한 사회운동조직, 특히 SUD노조와 같이 노동자운동이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

- 각 운동들이 '부문운동적 성격' 을 넘어서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할 필요성 : 현재 각각의 운동과제들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운동과제들이 마치 '부문운동' 의 과제처럼 비추어지고 모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여야 하고, 그것은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과 연결.

(4)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의 부활을 위해

- 대안세계화 이념 형성, 공동의 정치적 전망 수립

▣ 노동자운동을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

- 노동자운동이 단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 억압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편적인 해방운동, 사회변혁운동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의 대표적 형태인 노조운동이 자신의 운동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보편적인 해방의 이념들을 수용해야한다 ; 페미니즘, 국제주의, 생태주의 등

▣ 대안이념의 형성

- 운동 간의 교통과 교류가 만능이 아니고, 대안세계를 위한 이념적 사상적 지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현재의 운동이념을 재구성하는 것)
- 국제적으로는 세계사회포럼을 경유하면서 ‘대안세계화’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전망에 대한 집단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도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대안세계의 전망이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혹은 대안세계의 상이 무엇인지, 대안세계화‘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 이러한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사회운동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그 후에도 계속되어야한다.

▣ 정치의 부활과 공동의 정치적 전망 수립

- 신자유주의 하에서 주요한 정치적 판단들은 기술관료들의 ‘행정적 결정’으로 대체된다.(FTA, WTO각료회담, IMF협상..) 이에 따라 공적인 영역에서 상이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대립과 합의, 투쟁으로서 정치는 소멸. 이러한 ‘정치의 소멸’은 역설적으로 ‘정치’를 대중에 대한 포퓰리즘적 동원으로 전환시킨다.(미디어 정치는 이것의 한 요소이다.)
- 이와 함께 ‘정치’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실제로 ‘정치적인 것’들만 국가의 외부에 남게 된다. 여기서 “운동은 상이한 세력들이 쟁투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멀어지며, 정치는 공적 영역을 상징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념이 유포된다.
- 사회운동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치(당)와 경제(노조)와 분리된 어떤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을 관통하는 정치적 전망이 함께 만들어져야 (마치 ‘당-사회운동-노조’라는 식의) 운동들의 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를 제도권의 선거로 환원하거나 혹은 정치조직의 배타적인 임무(따라서 사회운동과 대중운동들로부터 분리되거나 특권적인 어떤 것)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 대안세계화를 위한 이념의 형성과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사회운동들의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운동들조차 정치적 전망을 ‘피해야할 것’으로 사고한다면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정치적 대안 자체를 부정하는 ‘반정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정치’는 오히려 포퓰리즘적 동원에 취약할 수 있다.)
- 이는 당면한 정세에 따라 구체화된 ①정치 노선과 이에 따른 ②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운동의 ③조직형태(혹은 운동들 간에 관계방식)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당면한 대선에서 사회운동들은 어떠한 입장으로 그 정치 공간에 개입할 것인가, 어떤 쟁점을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선거대응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노조의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지, 투표동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노조 내/외의 운동’ 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쟁점들을 노조 안에서 제기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 페미니즘과 국제주의 등

- 대안이념에는 역사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수용하지 못했던 페미니즘과 국제주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평화주의와 생태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러한 쟁점은 노-자 관계는 물론 계급적대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변혁운동적 과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를 사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적 대안들이 없는 자본주의 이후는 더 끔찍한 미래일 수 있다.)

- 역사적 노동자운동은 남성노동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조직화되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여성노동자를 노동자운동이 조직할 수 없고, 운동 간의 분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노동자운동이 페미니즘을 도입하고, 자신을 개조해야 한다.

- 페미니즘의 수용이란, 노조가 사회운동의 기관으로서 페미니즘 운동을 직접 실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페미니즘적 “실천” 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이념이 혁신될 수 있다. (할당제, 성폭력관련규약과 같은 제도의 도입 이전에 페미니즘 운동의 실천, 이를 통한 이념의 혁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페미니즘적 실천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조 내외에서 여성노동자의 “자기 조직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역사적 노동자운동은 20세기 이후 민족국가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데 몰두하고, 자신의 과제를 민족국가의 과제와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결과 민족주의 운동과 분리되지 못하고 일국적인 수준에서 국가와의 타협에 몰두해 왔다. 특히 주변, 반주변 국가의 노동자운동에서 이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전주의의 종말과 국가의 위기에 따라 노동자운동이 동반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체제 변혁을 위해서는 국제적-지역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새로운 대안체제는 민족국가에 대한 의존이나 민족적 차이에 따른 운동의 분할을 재생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주의적인 이념이 필요하다.

사회 운동 포럼



지역운동 워크숍

워크숍 기획 내용

사회 - 이진숙(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기조발제 - 최준명(문화연대)

사례발표 및 토론

- 광주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김희정 집행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최명선 사무국장)
- 명동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명동포지역위 위원장 이광호)
- 이랜드 일반노조 월드컵분회 지원대 책위(전진회원 홍성준)

■ 지역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며

이 글은 '지역운동 기획단' (민주노총서울본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문화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사회진보연대민천지부, 전국학생행진으로 구성)이 3개월 여 동안 토론한 결과를 정리한 공동 발제문입니다. 지역운동기획단은 총 9차례의 회의와 5차례의 쟁점토론 내부 워크샵, 그리고 1차례의 공개 사례워크샵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보다 굳건히 세워내는 것이 현재 사회운동의 밀착적 임무와 과제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지역이 왜 중요한가, 지역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을 모아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몇 번의 토론을 통해 단일한 입장이나 답을 정리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기획단에 참여한 각 단체들의 고유한 운동의 지향, 실천을 또한 존중합니다. 따라서 이 발제문은 현재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공동의 고민들이 수렴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그 안에서 여전히 풀리고 못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등을 정리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운동기획단 논의의 한계로 언급해 둘 점은, 지역운동기획단이 서울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운동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운동이 전혀 새롭게 개척되는 운동이 아닌바, 지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던,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운동'의 위상을 가졌던 운동단위들과 충분히 고민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은 지역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보다 역사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민하는데 있어 커다란 한계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획단 논의의 한계가 포럼 본 행사에 함께할 많은 단위, 활동가들의 공동의 고민, 토론으로 메워질 것을, 그리고 이후에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을 희망합니다.

0. 들어가며

최근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역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과정에서 이야기 되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은 운동의 위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도출되기도 하고, 대안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과 당 등을 연결하여 지역을 강조하는 측면, 주민자치의 유력한 공간으로써 '지역'을 주목하는 측면 등 운동의 새로운 조직화의 측면에서 '지역'을 주목하고 '지역운동'을 아래로부터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이 도출되고 있다. 세부적인 입장의 면이나 강조점에 있어서의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지역운동을 재구축강화하는 것에 대한 공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느껴진다.

사회운동포럼 지역운동 기획단은 그동안 '지역'과 '지역운동'에 대해 각 단위별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지역운동이 구체적 실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조점과 교훈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사례와 쟁점사항들을 둘러보고, 지역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다. 아래의 내용들은 그 고민들을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정리하고, 쟁점을 모아내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토론제안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1. 신자유주의와 지역

자본주의의 발전은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동반한다. 도시/농촌 간의 분리가 심화되면서 농업의 붕괴와 대도시로의 집중이 이뤄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금융세계화된 세계 경제는 경제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며, 세계도시들은 각각의 국민경제의 중심지/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경제에 속한 자신들만의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세계도시는 특정한 국민국가의 주권에 의해 세워지고 그 안에 위치하지만, 민족적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을 통해 군림한다. 세계적, 지역적, 도시적 규모에서 세계화에 따른 주변화 과정은 과거 중심부의 일부라고 여겨지던 핵심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변부화 과정이 심화될수록 도리어 중심성은 커진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일부 지역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새롭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더욱 주변화되고 심지어 이는 하나의 도시, 지역 내에서도 그러하다. 즉, 지역별 불균형의 증대와 내적인 배제의 심화는 신자유주의 시대 지역의 기본적 특성이 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제금융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서울³²⁾이 헤게모니 도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정부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분권화라는 명분 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살아남을 것을 강제한다. 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만성적 재정위기의 제약 속에서, 지방 재정력 강화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단적인 사례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전후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획득한 가운데 광주가 2013년 여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노리고 있고 청주는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부산은 2020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바 있다. 국제대회 유치가 곧 경제적인 혜택, 나아가 우리 삶의 질을 직접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지방 정부가 이에 목을 매는 모습은 (설령 허구적 일지라도) 어떤 성과라도 내고자 하는 지역정부의 압박감을 짐작케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위기 하에, 중앙정부의 책임전가와 지역 대중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지역을 단위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는 배경이 된다.

32) 마스터카드 경제도시 보고서 2007, 6, 12.

이 연구는 세계 시장과 글로벌 상거래를 연결하는 전 세계 50개의 대표적 도시의 기능적 측면을 자본의 유·출입, 상업거래량, 지식의 생성 및 보급 등 6개 항목에서 비교한 종합 분석으로, 세계적 학술 및 연구 기관의 경제학, 도시 개발 및 사회 과학 분야의 권위자 8명이 연구한 결과이다. 보고서는 단순히 각 도시의 개별적 사업 편리성 뿐 아니라, 채용탄력성이나 회사 설립 및 폐쇄 같은 투입요소와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거래량 같은 산출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61210490262585>)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보육, 탁아, 어린이와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 과거 여성이 가족에게 제공하였던 많은 서비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제공되지 않고,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로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빈곤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따른 요구를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과 같이 ‘생산적 복지’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내에 노동자민중의 재생산 과정을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의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생산 영역 뿐 아니라 재생산 영역까지도 위기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는 이 양자가 결합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위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불균등한 효과와 내/외적 배제 및 불평등의 심화는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정부는 이를 더욱 조장하고 활용하며 위기를 관리하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는 특히 생태 문제와 끊임없는 갈등을 낳고 있다. 물, 공기를 비롯한 자연환경은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여 끊임없이 파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의 기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어 왔으며, 유전자 조작 등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다. 또한 각종 자유무역 협정과 경제자유구역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키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조치들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최소한도의 의무마저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을 포기하라는 허구적인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며 자신들을 합리화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는 생태/환경 운동이 맞서 극복해야할 대상이다.

2. 왜 지역에 주목하는가?

2-1. 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국가권력의 탄압과 그러한 국가권력의 비호 속에서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자본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노동대중 투쟁은 87년 투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로 87년 투쟁을 통해 매우 역동적인 계급투쟁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공간 속에서 노동운동은 공장 앞에 멈춰선 민주주의를 공장 안으로 밀고 가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변혁적 전망을 잃은 노동운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시민사회영역을 확대하려는 실천은 있었으나 이는 대체로 탈이념적 실용적인 경향으로 진행되고, 운동의 변혁지향성은 훼손되기 시작한다.

한편,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경험한 자본은 노동운동의 성장에 대응하고자 지불능력이 있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제도화된 경제영역으로 국한시키면서 탄압과 회유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도입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는 초기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 개방 등을 시작으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의 공세를 통해 노동현장에 전면화 된다. 자본의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과정은 생산(계급)과 재생산(시민)을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노동자를 탈정치화된 시민으로, 또는 소비자로 재구성으로 이어져 있다.

87년 이전 권위주의적인 자본의 통제와 국가의 비호 속에서 억압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지만 대중운동을 폭발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는 생산영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일한 전선으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도입 후 노동운동은, 자본에 의해 생산영역에서 중소기업/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와 대공장/정규직/남성/한국노동자와 같은 방식으로 분리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제된다. 이 과정에서 대공장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가 터져나온다. 더 이상 단위사업장 차원의 조직화로는 운동의 주체형성이 한계적이고, 설령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자본의 철저한 탄압과 분할/배제 전략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양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하에 변화된 조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구조조정과 고용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노동자들이 투쟁은 기업 내 이익분배를 둘러싼 투쟁으로 귀결되고, 고용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지 못하고 대중적인 투쟁 동력은 힘을 잃어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국적/중앙 중심적 운동으로 성장했던 운동의 구조와 형태는 대중을 만나가는 구체적 점착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보다 확장된 사회적 연대의 실천은 지체되고 구조로만 남발되고 있다. 이에 대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실질적 연대를 위한 소통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공대위들이 구성되더라도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은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구체적 공간인 ‘지역’은 중앙중심적 운동으로 구조화된 기간의 한계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대중실천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 기획과 논의, 실질적 연대를 위한 관계의 형성, 일상적 정치활동의 혁신을 기획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2-2. 계급형성을 위한 운동의 중심

지금의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20년에 걸친 민주노조운동의 결실이다. 민주노총은 오랜 투쟁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다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계급형성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지역’ 을 강조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작년 금속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위성과 조직형식은 갖췄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 기업지부가 존속하며, 이후 기업지부 해산여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연맹도 대산별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현재의 산별노조가 형식에서 업종을 포괄하지만, 내용은 기업별 노조 상태인 것이다.

단지 기업별노조의 통합이 아닌, 산별노조 정신을 진정 발현하고자 한다면 산업적 차원의 연대 실천과 전망을 넘어서 지역 내 업종을 뛰어넘는 연대전략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주체 형성과 노동운동의 역할과 실천에 대한 지역 연대전략을 시도하고 실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재생산 영역을 매개로 다양한 대중을 묶을 수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는 운동조직들도 확대재 조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당’ 은 전국적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대중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중앙단위로 편중된 현재의 노동운동의 구조와 상대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 은 자발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묶어내지 못하고 중앙에 편중된 실천들을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는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도 자신의 운동과제와 방식을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자가당착에 빠져, 아래로부터의 지역연대운동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조직과 지역 단위로 편제되어있는 ‘당’ 등, 그리고 노동조합 등이 조직형태 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전인하고 지역적 차원의 대중실천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2-3.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대응

생산과 재생산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생산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분리시킴으로써 재생산 영역을 비가시적이게 만들어왔다. 재생산 노동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버림으로써, 자본은 생산비용인 임금으로부터의 그 비용을 공제받는 이득을 누리왔다. 가족은 국가와 함께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을 매개하는 핵심적 장소인데 국가의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을 담당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부문에서의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삭감, 식량과 기초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시켜 그 충격을 흡수토록 하고 있다. 이로써 재생산 노동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급증하고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공적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후퇴해왔고,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를 밀미 삼아 각종 공적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지역은 가족을 기초 단위로 하여 생산부문과 재생산부문이 결합되는 공간이다. 또한 현재의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지역을 기초 단위로 하여 제공시행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의 흐름들이 재생산 부문에 대한 개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생산 부문은 생산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체제를 변형시키는 전망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재생산 노동과 생산부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현재의 핵심 기제인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전망을 모색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생산의 위기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와 기존 복지 및 공적서비스 제도들의 취약함과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국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제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한편, 재생산 노동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공동체성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2-4 풀뿌리 자치 운동의 공간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발과 경쟁의 논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며 대중의 생활조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활동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공간을 바꾸려하는 풀뿌리운동은 ‘지역’을 주목해 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결합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풀뿌리운동은 정권교체나 권력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바꾸거나 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던 지난 날의 운동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동안 풀뿌리운동은 주민들이 보육이나 주거, 교육, 예산 등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며 그들을 지역정치의 주체로 세우고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지원해 왔다. 때리고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기르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풀뿌리운동의 과제였다. 이를 위해 풀뿌리운동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그러나 이제 풀뿌리운동도 수도권/비수도권의 심각한 정치, 경제, 문화적 격차나 사회적 양극화,

개발주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에 접하며 새로운 고민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욕구나 이해관계와 잘 연결되지 않는 이슈들(예를 들어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관해서는 그 운동의 한계를 보였다. 더구나 주민들의 욕구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노골적으로 이익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유혹할 때 풀뿌리운동은 사회적 공공성이나 사회적 필요를 설득하고 대안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데, 지역사회 내에 깊이 뿌리내린 토호세력들은 풀뿌리운동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풀뿌리운동이 단순히 작은 자족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 이제 새로운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적 필요나 욕구가 사회적 필요나 욕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의 역량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이 늘어나고 서로 소통하며 자치역량을 기르고 대안적인 희망과 연대의 씨앗을 조금씩 만들어간다면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풀뿌리운동 간의 소통과 연대, 풀뿌리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운동세력간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2-5. 대안사회에 대한 모색

신자유주의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자민중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계급주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운동으로 모야넬 주체의 부재는 사회운동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변혁운동의 전망이 대중투쟁과 결합되지 못하고 허구적 논쟁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화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대안사회에 대한 변혁적 전망을 형성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변혁적 전망을 잃고 허구적인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적 실익에 경도되었던 실리주의적 운동 양식을 바꾸고, 자본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자율적 삶과 연대를 구축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실용주의적 비판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자본은 생산영역에서 노동시장을 분절화하고 노동자간 대립을 부추기는 동시에 재생산영역에서는 노동자 민중을 개별화 분절화하며 끊임없이 자본주의적 삶, 문화양식, 가치를 내화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영역의 고용의제 중심의 기존 운동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계급적 의제의 확장 및 실천을 만들어내 반자본주의적 대안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지향과 그의 실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산과 재생산을 아우르는 ‘지역’은 계급투쟁의 변혁적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운동’은 자본주의적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생활양식-

생산양식-정치양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지역운동 평가 - 사례연구 워크숍을 중심으로³³⁾

[사례발표]

서울동구비정규센터, 명동포역공공성확보를위한공동대위(이하 명동포공동대위), 마포 민중의 집(이하 민중의집), 전국학생행진.

워크숍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다소 거칠거 정리해 본다면, 서울동구비정규센터와 명동포공동대위의 사례는 기초적인 현장실태조사와 단일이슈 중심의 운동에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공공성 운동으로 확장되어가는 사례로 보인다. 동구비정규센터는 노동자 건강검진에서 시작해 노동복지로 명역을 확장해가고, 명동포공동대위는 민간자본의 공공성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동권, 노숙자,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명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두 사례는 이슈중심의 활동사례로 평가될 수 있고, 물론 그 이슈의 확장과 더불어 운동주체의 폭을 확대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의집과 전국학생행진의 문제의식은 지역적인 면대들의 구축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민중의집은 대중과의 접촉면 확대, 대중주체화, 면대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드러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내 다양한 운동세력을 면대시켜 지역적인 변화의 힘을 축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국학생행진은 지역 내에서 민중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면대 들을 마련하고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역적인 의제 구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 왜 지역인가?:

사례 발표와 뒤 이은 토론에서 받은 인상은 전체적으로 왜 지역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두들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는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며 지역적인 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왜 그 운동을 굳이 지역에서 펼치려 하는가, 라는 물음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단순히 신자유주의 전략에 따라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대응 차원에서 지역을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삶과 운동의 일치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을 고민하는 건지, 그도 아니라면 기존의 의제와 다른 의제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의 장으로서 지역을 고민하는 건지 등

현재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일터와 살터가 이미 분리된 지역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정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점으로서의 지역, 아래로

33) 워크숍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부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따르는 지역, 새로운 공공성 확보의 실험장으로서의 지역, 여러 이야기가 가능한데, 그런 논의들이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고 새롭게 소통하고 연대하려면 각자가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왜 지역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연대의 주체(가령 주민/노동자/소수자/농민/빈민 등) 설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제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3-2.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의제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동부비정규센터나 영등포공대위는 지역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의제화시킨 경우이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의제들이 지역 내에서 소통되고 활동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인 듯하다. 실태조사, 집회나 서명운동 등은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을 압박을 하기엔 좋은 방식이지만 대중들의 힘을 결집시키거나 그 이슈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도록 만드는 데는 한계를 가진 방식이다.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그 운동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운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제가 지역사회 내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복지, 역사공공성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까?

3-3.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지역운동의 접촉점은 다양화되어 있는가?:

여러 사례에서 키움이나 연대, 새로운 주체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주체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을까? 영등포공대위의 아파트부녀회 접촉이나 민중의집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접촉의 면이 제한된 듯하다. 아는 단체, 아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별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넘어서 그 접촉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령 제도정치 영역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반(半)제도공간이라 얘기할 수 있는 지역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과도 접촉점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주체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이별일까, 활동력일까, 해당 사안의 해결능력일까, 이런 점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듯 하다. 새로운 주체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지속적인 구성과정에 있다면, 활동가들이 이런 주체와 어떤 식으로 만나고 함께 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계몽적인 방식을 벗어나 상호 행복이나 즐거움을 주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3-4. 기존의 조직 구조로 지역운동을 잘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은 단순히 의제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아무리 새로운 의제를 잡더라도 기존의 조직구조가 그 의제를 풀어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면(민중의집), 운동이 지지부진해지기 마련이다. 지역운동에서 많이 강조되는 새로운 주체화 전략의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기존의 조직구조로 주민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을 주체로 생성하는 디딤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디딤들을 마련하려면 어떤 조직변화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단체들이 민주적인 소통이나 상향식 의사결정을 강조하지만 막상 그런 원칙을 조직 내에서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듯하다. ‘내용이 좋다면 그 형식은 어찌해도 좋지 않으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듯하다. 민주주의에 관한 고민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2-5. 지역사회 내에서 강한 연대는 가능한가?:

전국학생행진은 지역 내 민중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적인 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학생운동의 쇠퇴와 학생이라는 일시적인 신분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대외공간을 지역사회 내에 개방시키고 소통하는 매개로서 학생운동이 가지는 역할은 쉽게 부정될 수 없는 듯하다. 그리고 지역 내에 중요한 사회운동기관의 역할을 대학이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지원의 가능성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운동세력이 실질적이고 강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상호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하는가? 워크샵에 주민운동단체들이 결합하지 않아서 그런 상호이해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소통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언어를 만들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듯하다. 언어는 문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4. 과제 : 사회운동,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정규직 확대,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사회공공성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이를 극복하고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역사회운동을 고민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운동의 위기 극복과 대안 모색이 ‘지역’, ‘현장’, ‘살’, 즉 보다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 활동양식의 재조직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지역’이라는 공간과 매개를 통해,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서의 공시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운동의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운동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지역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지역사회운동의 계기는 사회운동의 가치개조와 지평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가중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자기 운동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적 삶의 가치에 기

반한 운동과의 소통과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연대, 변혁의 확장은 삶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인 ‘지역’에서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1. 소통 : 자기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의 지평의 확장

지역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주체 스스로의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 자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만으로는 사회 전 영역에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 생태, 페미니즘, 국제주의, 인권, 평화, 문화 등 대안적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의 확장과 비정규직, 빈곤, 사회공공성, 가족주의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은 자기 운동의 변화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역사회운동은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 ▷ 지역사회운동 단체들 간 일상적 소통의 계기 마련 : 서로의 운동의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상적 소통의 장 마련
- ▷ 공동교육, 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 생태, 페미니즘, 인권, 평화, 문화 등 대안적 삶의 가치나 비정규직, 빈곤, 사회공공성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공동교육과 토론의 장 마련
- ▷ 지역사회운동의 자원에 대한 공유와 주민참여 강화 : 교육장, 회의공간, 각종 장비나 교육/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스스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4-2. 연대 : 지역사회운동의 자기전환의 지향, 현장과 삶에 근거한 운동으로의 재조직

지역단체 간 연대의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각자의 기존 역할의 합을 통해 운동의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인식으로 넘어, 지역사회운동 전반의 자기전환, 개조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실용적, 산안별 연대를 넘어 대안적 운동의 이념과 원리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과 결합되어 새로운 운동의 상과 양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와 단체, 조직과 조직만의 연대활동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조합원, 당원, 회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연대활동의 이슈를 지역사회로 확산시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주민의 삶에 근거한 새로운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교육, 주거, 보육, 먹거리, 여가생활 등 지역주민의 삶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지역연대활동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지역연대활동의 지역으로의 확장 : 교육/강좌, 간담회 등을 통한 연대활동 이슈 확산, 주민회, 부녀회, 조합 등 지역자치조직과의 연대 강화 필요
- ▷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실태조사 : 지역의 구성, 지역주민의 고민 등을 지역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연대활동을 기획

- ▷ 삶에 근거한 새로운 연대활동 기획 : 먹거리생협, 의료생협, 공동육아 등 비자본주의적 생활양식 구축을 위한 상호부조운동, 공동체운동을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확산, 아래로부터의 교육, 문화, 생활공동체운동에 주민참여 강화
- ▷ 지역개발주의에 맞선 생태적 가치의 실현과 투쟁 강화

4-3. 변혁 : 생산, 재생산영역을 포괄하는 변혁운동의 전망 모색

지역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는, 변혁운동의 전망 모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 사회운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운동의 전망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영역에서의 운동과 재생산영역에서의 운동의 분리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혁적 사회운동의 과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에 대한 공동교육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주의 동향 등의 흐름과 지역주민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함을 공유
- ▷ 변혁운동 전망에 근거한 지역사회운동의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 강화 :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변혁운동의 전망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지역사회운동의 공동실천과제 도출

[별첨자료 1]

지역운동기획단 활동 보고

1. 기획단 참가 단체

- 민주노총서울본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문화연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전국학생행진

2. 활동보고

○ 1차 회의

- 일시 : 2007년 5월 29일(화) 오후2시
- 장소 : 문화연대 회의실
- 참가 : 이진숙(인천사회진보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최준영(문화연대), 한주태희(민주노총서울본부)
- 주요논의 사항 : 각 참가단체별 참가의 동기, 목적에 대한 공유, 참가단위 확대를 위한 방안, 이후 기획단 운영 및 논의계획 논의

○ 2차 회의 및 1차 워크샵

- 일시 : 2007년 6월 15일(금) 오후3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가 : 김소연(빈곤사회연대, 참관), 이진숙(인천사회진보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최대성(전국학생행진), 최준영(문화연대), 한주태희(민주노총서울본부)
- 주요논의 사항 : 기획단 활동 세부계획 수립(기획단 논의내용 정리 작업/쟁점에 대한 토론(ex. 노동력재생산, 페미니즘 등)/ 공동사업(ex.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전략과제 도출), 각 참가단체별로 지역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해와 발제 및 토론 진행

○ 3차 회의 및 2차 워크샵

- 일시 : 2007년 6월 25일(월), 12시 문화연대

소통/연대/변혁

- 장소 : 문화연대 회의실
- 참가 : 이진숙(인천사회진보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최준영(문화연대), 한주태희(민주노동서울본부), 최대성(전국학생행진)
- 주요논의 사항 : 대략적인 본 행사 기획 방안과 그에 따른 토론 조직화 계획 논의, 생산과 재생산이 결합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주제로 쟁점토론 진행

◦ 4차 회의

- 일시: 2007년 7월 13일(금), 16시
- 장소 : 민주노동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한주태희(민주노동서울본부), 최대성(전국학생행진),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 주요논의 사항 : 신규참석 단위의 기본 문제의식 공유, 기간 토론되었던 지역운동의 의미와 현황에 대한 공유지만, 참가단체별 의견 차이 등을 정리하는 토론 진행, 이후 쟁점토론 워크샵 세부계획 확정(주민자치 운동의 의미와 현황/ 지역 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제미니즘과 생태주의 관점의 지역운동과의 결합의 필요성)

◦ 5차 회의 및 3차 워크샵

- 일시 : 2007년 7월 23일(월) 11시
- 장소 : 민주노동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 주요 논의 사항 : 주민자치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주제로 한 쟁점 토론 중심으로 진행(발제 및 논의 준비 '이음')

◦ 6차 회의 및 4차 워크샵

- 일시 : 2007년 7월 31(화), 2시
- 장소 : 민주노동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최대성(전국학생행진),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 주요 논의 사항 : 사례 워크샵 준비 논의, 지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쟁점토론(발제 및 논의 준비 전진)

◦ 7차 회의 및 5차 워크샵

- 일시 : 2007년 8월 8(수), 2시
-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최대성(전국학생행진),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호성희(여성운동전략과제 기획단)
- 주요 논의 사항 : 사회운동총회 선언문에 대한 토론, 지역운동워크샵 본행사 기획 및 기초발계문 작성과 관련한 논의, 사례워크샵 세부 기획 논의, 페미니즘 관점의 지역운동과의 결합 필요성을 주제로 한 쟁점토론 진행(발계 및 논의 준비 사회진보연대)

◦ 8차 회의

- 일시 : 2007년 8월 16(목), 6시
-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최대성(전국학생행진),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 주요 논의 사항 : 지역운동워크샵 본행사 기초 발계문 초안 토론

◦ 사례운동 워크샵 진행

- 일시 : 2007년 8월 16일(목), 7시
-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회의실
- 참석 : 지역운동기획단 성원을 포함 15인 정도 참석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2] 참고

◦ 9차 회의

- 일시 : 2007년 8월 22(수), 2시
- 장소 : 하승우씨의 사무실
- 참석 : 최준영(문화연대), 장민희(민주노동자연대), 이진숙(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구형구), 한주태희(민주노총서울본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 주요 논의 사항 : 지역운동워크샵 본행사 기초 발계문 토론, 본행사 실무 점검

[별첨자료 2]

* 아래 글은 사회운동포럼 뉴스레터 2호에 실렸던 지역운동 기획단의 사례워크숍 결과 정리서입니다.

지역운동 기획단 사례연구 워크숍이 8월 16일 목요일 오후7시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마포 민중의 집, 학생운동과 민중운동 등의 4개 사례가 토론되었다. 발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의에 대한 응답 내용을 함께 요약했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수동 지역의 노조와 노동자 건강 관련 단체들이 2003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동자 건강문제와 복지문제에 관한 고민을 공유했다. 2006년 ‘영세노동자 노동 복지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설문지 회수율은 절반에 가까웠다. 실태조사 결과 노동조합에 대한 무관심, 생존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구들이 파악되었다. 그해 10월 6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는 후속활동을 결의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영세사업장노동복지연대’를 조직했다. 노동안전 및 노동복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토론회, 정책연구,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의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사업을 병행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36개 사업장에 걸쳐 현장방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2007년 1월 16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로 조직 전환을 했다.

[영등포역 공대위]

공공재산인 영등포역에 롯데자본을 유치하여 역사를 증축하면서 사적자본이 개입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공적 편의시설이 축소되고 상업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성이 저하되었다. 그에 따라 2005년에 철도노조, 민주노동당 영등포위원회, 문화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등이 모여 공대위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공용통로와 상업공간 문제에서 시작하여 장애인과 노숙인 문제 등으로 확대하며 민원접수, 합의방문,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 결과 3층 공용통로에서의 상업행위가 중단되고 편의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역사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철도노조에서는 역사 공공성 확보를 단협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넘어 지역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연대운동 속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과의 거리감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있었다.

[민중의 집]

사회운동의 위기 속에서 대중들과의 만남이 더욱 필요하다. 접촉면에서의 한계가 지역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등 현재의 운동조직들은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대중과의 접촉면 확대, 자원 집약, 대중주체화, 연대를 통해 대안적 운동 전략 구축 등이 중요하다. 그런 고민에서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중의 집’을 고민했다. ‘민중교육문화생활공동체 운동’이며 ‘대안사회를 향한 상상력의 발전소’가 될 것이다. 현재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마포위원회, 지역 노동조합, 지역 시민단체, 지역 학생운동단위 등이 결합해있다. 우선적 사업내용은 교육운동이다. 민중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지적 기반 형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운동]

학생운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운동을 사고하지 못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자기정립이 필요하다.

*** 서울 동부지구 학생운동**

2006년 ‘차별 없는 서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후 430-Mayday 등을 통해서 연대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현재 ‘홍예버 면목점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 서울 북부지구 학생운동**

북부지구 민중 정치학교, 4.19 펄박질, 3.8 여성의 날, 430-Mayday 등의 일정들을 진행하며 공동 실천이 있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사고를 확장하고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사회운동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강화하며, 학생운동 세력을 반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계적 사회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발제와 질의응답이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각각의 단위에서 활동하면서 도출된 고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그날 발표된 사례들을 놓고 지역운동을 의제 중심과 주체형성 중심의 사업으로 분류해보기도 했다. 지역운동 활동가들의 존재조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망 설정과정의 우선적 중요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생활상의 주제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끝으로 지역운동의 일개 수단으로서 지역 제도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그것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고민이 토로되기도 했다. 이는 지역운동만이 아니라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번민과 갈등과 쟁점을 이룰 것이다.

대부분의 워크샵이 그렇듯이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왜 지역인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많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

특별행사



사회 운동 포럼



빈곤심판 민중법정(8/31)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 민중의 반격 빈곤심판, 민중법정
빈곤으로 몰고 가는 “너 나와~”**

- 빈곤심판 민중법정 기획단

1. 빈곤심판 민중법정은?

“빈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므로 범죄이다. 빈곤은 인간에 대한 가장 잔혹한 거부이다”

빈곤을 대하는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빈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빈곤층이라는 위험, 불만집단에 대한 관리전략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빈곤을 범죄화하고, 빈곤에 빠진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등을 나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소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전 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해, 의료기관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고 나섰고, 한국사회에 있지도 않은 ‘복지병’ 을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를 받으려면 사실상 강제노역에 다름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고 뇌까려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특히 IMF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이 개인의 무능과 부족한 노력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유층과 정부 등 정치권 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세자영업 노점상으로, 혹은 노숙인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치솟는 물가와 사유화, 민영화되는 공공서비스 탓에 더욱 부족해지는 살림 좀 메워보겠다고 끝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만 하는 10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해결됐다는데, 왜?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국제회의 다 국제행사다 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를 점유한 죄 때문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노점상은 짝살이 당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뉴타운을 만든다고, 돈 없어서 죄가 되는 세입자원주민은 강제이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와 각종 복지개악 빈곤 확산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있는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는 지금껏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가 때로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 국민의 희생논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계급적 차별을 뛰어넘은 단결과 사회통합논리에 의해 마치 사회적인 '선', 공공 '선' 인양 포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중법정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금융피해자, 철거민, 노점상, 비정규직노동자 등 노동빈곤층, 노숙인... 빈곤층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들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과 이들의 고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은 그저 경제적으로 궁핍함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빈곤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빈곤을 심화하는 범죄 집단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빈곤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을 심화하는 범죄 집단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치밀하게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곤심화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치인, 자본가와 실행구조인 정책들을 드러내고 이들이 빈곤을 심화하는 주범임을 민중의 목소리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지금껏 모든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면서도 범죄자,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받아온 빈곤대중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빈곤 대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의 심화는 단순히 몇 개의 복지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 오히려 빈곤층의 고통을 심화하고 있으며,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은 빈곤층을 낙인지우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생활권은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대신할 수 없는 빈곤대중의 권리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확인해왔습니다. 민중법정은 이러한 빈곤대중의 권리를 함께 선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실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연대를 결의하며, 변혁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중법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회운동과 반빈곤운동와의 소통을 모색하고 빈곤대중간의 소통과 연대의 확인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사자와 활동가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모아내는 민중법정은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고 민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일시장소

2007년 8월 31일(금) 오후 7시~ 9시 30분, 성균관대학교 야외 소극장(금잔디열)

3. 민중법정 구성

- 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발언과 형식을 통해 민중법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
- 행사 전체의 내용이 이미지로도 표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금융자본과 금융피해자의 문제, 노동빈곤을 주제로 한 노동유연화정책 및 노동연계복지, 신개발주의로 인한 빈곤의 확산 3가지 주제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1) 앞풀이 마당

▷ 기획취지

- 빈곤을 심화하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주범을 꼽아보는 사전마당
- 즉석 기소장 작성으로 빈곤의 주범을 함께 기소하자!

▷ 진행

(1) 모치 만들기

- 과일, 떡 등으로 준비된 각각의 접시에는 빈곤의 원인과 주범이 적혀져 있다.
- 참여자들은 빈곤의 원인과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접시의 과일이나 떡을 모치에 썰어 맛나게 먹으며, 민중법정의 의의를 생각해 본다.

(2) 즉석 기소장 작성

- 준비된 판에 즉석으로 약식 기소장을 작성하여 붙인다.
-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빈곤의 주범과 원인을 기소하며 법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2) 본마당 1부 : 금융정책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와 금융피해자의 현실

▷ 기획취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정책을 1997년도에 단행하면서 1998년 25%로 상한선을 제한해오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한다. 이는 1999년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폐지하는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서 금융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규제를 모두 해체하는 정책이었다. 선진금융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사실상 민중들의 땀짓돈을 털어서 시장경제를 살리려는 반민중적 경제정책이었다. 이런 결과로 서민들의 삶은 파탄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금융자본들은 2002년, 궁여지책으로 신용카드 한도서비스 축소, 66% 이율의 대부업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생활고에 빠져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로 생

활을 이어온 민중들을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으며,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초래하게 된다.

2007년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은 허술뿐이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또한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였다. 바로 현재, 2007년 8월에도 여전히 금융채무의 문제, 불법추심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파산면책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2006년도 12만 명의 파산신청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도덕적 해이자'라 매도하며 파산면책 신청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법원의 보수화방침은 오늘 현재에도 파산면책 제도의 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법정을 통해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대란을 일으킨 카드사, 불법채권추심을 자행하고 있는 채권기관, 채권추심기관들의 불법채권추심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정부,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금융자본의 배를 채우게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공개수배 한다.'

▷ 진행 : 20분

(1) 영상

- ① 1997년 IMF발생(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정책), 신용카드 발급기준 폐지 - 첫 파산자 발생
- ②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 ③ 19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 ④ 2002년 신용카드 총 1억 개 돌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돌러타기×, 신용불량자 대량 발생 움직임 보임), 대부업법 제정(이자율 66%)
- ⑤ 2002년 말 ~ 2003년 LG카드 부도 위기(공적자금 투여)
- ⑥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 돌파
- ⑦ 2006년 일본 이자제한법 축소를 인한 일본계 대부업체 국내진출
- ⑧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SBS드라마 "전의 전쟁" 방영 이후 대부업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반전, 인기 연예인의 대부업체 광고 쇄도와 양심고백 속출

(2) 상황극

- #1. 길거리 카드납탈이 이루어진 1998년 어느 지하철역의 L카드사의 이동식 부스
- #2. 2007년도로 넘어간다. 여러 카드를 통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각종 채권추심 기관으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K씨

(3) 당사자발언 : 1명

- ① 영상과 같이 IMF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개의 신용카드 등의 발급하게 되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폐지와 축소를 통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
- ② 채권추심기관의 불법채권추심을 통한 인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발언

- ③ 금융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금융피해당사자모임 등의 활동과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금융채무연석회의) 활동 등에 결합하는 주체적 움직임에 대한 발언
- ④ 파산면책 이후에도 신용기관을 통한 특수코드 1201의 부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당사자 발언

3) 본마당 2부 : 노동빈곤의 문제와 노동자의 투쟁

▷ 기획취지

참여복지의 핵심 기조인 ‘일자리를 통한 빈곤 탈출’ 은 신 빈곤층이라 불리는 근로빈곤층을 더욱 많이 양산하고 그/녀들의 삶의 조건을 고착화 시킬 뿐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때문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을 양산할 뿐인 것이다.

실제 신 빈곤층이라 불리는 이들은 저학력, 미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낮은 임금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답시고 ‘비정규직보호입법’ 을 제정하였음. 하지만 실내용은 더욱 많은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정부의 기만적인 빈곤대책을 폭로하고 나아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주체화 되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

▷ 줄거리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원고)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피고)을 고소한다. 이에 재판이 열리고 각 측은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호출하여 입장을 개진하며 논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일자리를 통한 빈곤 탈출’ 정책과 7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비정규보호입법’ 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1막: 정부의 노동연계 복지 정책 비판

2막: 비정규직 보호법 비판

3막: 노동 빈곤 당사자들의 투쟁

▷ 기소장- 노동연계복지

정부는 노동연계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여 고전적인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탈피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 모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경제확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 투자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고, 핵심적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고 실업자와 빈민 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나타한 사람들을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능력함양과 기회의 보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등 3대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왔던 재생산 영역을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이러한 노동을 무급으로 전담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서 기존의 가족이 이러한 보살핌의 책임을 지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여성들이 담당하던 것을 공식화 하여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경우이죠.”

사회 서비스 확대와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여성의 요구 이고 민중의 요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전략의 골자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문화환경 사회서비스 분야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80만개 중 초기 2년 동안에는 10만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늘어 난다고 보다는 그간 비공식적으로 개인부담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도화된 시장’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병일자리인데, 현재 간병인 수는 20-25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약 13만인데, 이는 현재 ‘비공식 시장’의 일자리도 포괄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정부 정책은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 일부의 제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자본주의 생산-재생산관계에 있어 은폐되어왔던 노동의 영역을 양지로 드러내고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파악됩니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온 재생산영역의 서비스를 필수적 서비스로 공고히 하는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를 이미 현재 있으며 정부는 단지 기존의 일자리에 민간기업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필수적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한 노동을 다시 한 번 노동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저비용고효율을 내세우며 인건비를 절감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빈곤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녕 모른다는 겁니까? 일해도 빈곤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녕 모른다는 겁니까? 바로 불안정한 노동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또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통 사회에 대비한 사회대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돈 없는 사람은 손도 못 댈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

한 선택을 제약받는 약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원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본마당 3부 :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는 서울시 발전 프로젝트를 고발한다

▷ 기획의도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지며 추진, 강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발전 프로젝트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가 뉴타운 개발로부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 4개년 계획’의 프로젝트- 경제문화도시마케팅 프로젝트,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도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정책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전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초민족적 자본의 지부들을 유지하여 이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산업경쟁력)이며, 서울시민 전체의 행복과 발전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자산계층의 부를 더욱 확충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폭로한다.

또한 발전 프로젝트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이면과 균형발전, 복지확충, 문화발전, 환경과 공존이라는 수사들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이러한 개발의 주체인 이명박과 오세훈을 민중의 권리로 심판하는 장을 마련한다.

▷ 주요내용

(1) 서울시 발전 프로젝트가 숨기는 것들

- 피고 : 서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①관광, ②디자인·패션, ③디지털 콘텐츠, ④금융·유통·비즈니스 서비스, ⑤R&D, ⑥컨벤션의 6개 분야를 선정해서 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날 발전은 다름 아닌 이러한 산업(자본)을 최대한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여건을 재정비해야 한다.
- 기소인 : 개발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주체들이 있다.

(2) 균형 발전/복지확충의 허와 실

- 피고 :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오해다. 우리는 양극화 해소를 중심에 놓고 있다. 서울의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저효율, 도시의 기형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도시의 잠재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교사를 확충하며 교육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도심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한편 서울의 4개 지역을 권역별로 특성화시킨 산업벨트로 조성·발전시키며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균형 있게 공급하

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소

① 양극화 해소라고 하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뉴타운 개발의 실질적인 효과들에 대한 폭로

② 복지확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잔여적이고 노동규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장중심의 사회 서비스 확충일 뿐이다.

(3) 개발의 결과는 불평등하다.

- 피고 측 : 당장 부작용이 있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기소 : 개발의 결과는 불평등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① 서울시에서의 주거 불평등의 심화

①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소득불평등의 심화* 이른바 글로벌 시티라는 담장도시의 출현

5) 빈곤심판, 권리선언

빈곤의 주범과 원인을 참여자 모두의 힘으로 심판하고 민중의 권리를 선언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6) 뒤플어마당

소통, 연대, 변혁의 장인 빈곤심판 민중법정의 의의를 공유하고 이후 연대를 결의하는 장.

사회	운동	포럼
----	----	----



여성대회(9.1)

나/너/우리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작, 2007 여성대회

여성대회에서는 사회운동포럼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사회운동의 이념, 조직, 실천에 대한 내부적 반성을 공동의 토론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간 사회운동에서 여성문제는 부문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역할 분담의 문제로 돌려지거나, ‘비정체적’ 사안으로 취급되거나 이미 위계화된 운동들 간의 우선성 속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IMF 이후 삶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시민)들의 내부 분할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사회운동은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이익을 방어하거나 기존의 운동양식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면서 현재의 위기는 증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페미니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동을 혁신해야 하고, 또한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혁신하고 공동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운동포럼에서부터 그러한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운동포럼은 운동들의 연대와 소통의 장이자 매개로서, 새로운 운동양식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너/우리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작, 2007 여성대회는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한 첫 시도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결합의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성대회 기획 내용

〈프로그램〉

- 일시와 장소: 2007년 9월 1일 18시, 법대 B 109
- 주최: 사회운동포럼 여성운동전략 기획단

*여성대회 선언문 초안 제안

: 여성운동 전략기획단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선언문 초안을 제안

*피널토론-김은주(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래군(사회운동포럼 집행위원장)

진우(전국학생행진)

: 사회운동포럼 내/외를 가로지르는 피널들과 함께 여성대회 선언문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또는 더욱 쟁점적으로 제기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선언문 채택을 위한 공동 논의

: 여성대회 선언문 채택을 위한 공동논의와 선언문 수정 및 확정

*선언문 채택 & 결의

: 여성대회 선언문은 단지 선언이 아닌 참가자들의 결의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너/우리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시작

2007 여성대회

여성대회 선언문(초안)

제안자: 사회운동포럼 여성운동전략기획단

1. 선언문의 취지

여성운동전략기획단은 이 '여성대회 선언문'이 으레 고개를 끄덕이는 의미 없는 동의나 말관치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있는 쟁점과 문제제기로 토론되었으면 한다. 이 선언은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내에서 진행된 여성운동의 실천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자각과 성찰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이 겪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거나, 개인의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여성해방을 위한 이념과 개인적·집단적 실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페미니즘은 '나'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회변혁운동이며, '사회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은 사회운동의 이념과 전략, 실천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혁신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안전략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이다.

2. 오늘 여성의 현실

87년 6월 민중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에서 여성들은 독재에 저항하여 민중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웠다. 그러나 87년 투쟁의 성과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면서도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먼저 경험해왔고, 97년 IMF 위기 10년은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의 조건이 모든 노동자의 삶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을 분리하여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한다

는 성별분업모델을 유지해왔다.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은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재생산한다. 여성의 육체, 성욕은 가족 내에서 출산의 의무에 종속되어 여성의 육체와 성욕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은 박탈된다. 이처럼 현재의 가족은 여성을 억압하는 성별분업과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장소이며 국가정책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가족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조건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략이 되어왔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들이 사실은 여성을 발전의 수단, 인구통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권리 실현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70-80년대 산업화를 위한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층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젊은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여성이 가계의 보조자라는 가정은 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대량해고를 정당화했다. IMF 당시 많은 기업의 인원감축정책은 여성 우선해고를 통해 여성 취업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었다.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그동안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온 돌봄노동을 빠르게 상품화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의 가치는 계속 낮게 평가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층이 되고 있다. 여성의 몸과 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삶은 다시 위협당하고 성적 착취는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사회위기가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되는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 '가족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수고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로써 여성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운동의 반성

그러나 한국사회 사회운동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해왔다. 사실 사회운동은 여성운동을 여성단체만의 역할로 맡겨둔 채, 여성해방의 과제를 자기과제로 인식하고 싸워본 경험이 없다. '사회변혁운동과 여성운동의 분리'라는 현재의 상황자체가 저임금 불안정 비공식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던 여성노동자의 주체화를 위한 운동을 형성하지 못했던 원인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안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재 사회운동 위기의 원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간 사회운동은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 모델,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여성을 남성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로 보는 상정을 노동자운동, 지역운동, 인권운동의 전략 속에서 공유해왔다. 그

했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여성의 이중부담 중대와 주변화, 빈곤화를 방지해 왔고 여성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삼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노동자운동은 공사영역의 철저한 분리에 입각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자,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고 협상을 요구해왔다.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고통이 '일'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고 있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는 그런 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보호 내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영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만의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고, 단체협약에서도 모성보호, 여성보호 관련 조항은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되어 왔다.

나아가 사회공공성을 확장하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워온 지역과 여러 부문운동 내에서도 여성의 존재, 여성의 권리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시장화·사유화 전략에 맞서 국가와 공동체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투쟁에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재생산노동과 그녀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에 불과했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은 사회운동 내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모성과 자신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의 지향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별분업, 공사분리에 기초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사회운동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여성을 더욱 더 자본주의 위기 극복의 도구로 전략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가. 페미니즘의 이념과 실천을 통해 쇠신하지 않는 사회운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안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

사회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사회운동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로서 여성임을 인식한 많은 여성활동가들의 자각과 저항으로 인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간 사회운동 내부에서 벌어진 페미니즘 실천들은 운동사회 또한 성별분업/젠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구축된 고유한 여성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성폭력의 지속, 여성활동가의 주변화,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여성활동가들의 일·가정·생계의 삼·사중의 부담이 사회운동의 유지, 성장의 토대였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 여성할당제 실시, 일상 활동과 문화를 보다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들은 사회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억압적 토대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사회운동 전략의 페미니즘적 전환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를 위한 소통과 논쟁은 보다 활발해졌는가

여전히 사회운동의 전망 속에 운동사회는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반의 성별 이데올로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목표와 지향은 불투명한 채, 사회적 소수자라는 지위에만 여성을 가두어 두고 페미니즘은 그녀들만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위한 부문운동, 남성과 여성의 형식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할당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일 이슈 중심의 대응은 운동 주체들이 자신이 서 있는 역사적 여성억압적 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쇠신하기 보다는 성폭력 안하기, 반여성적인 말과 행동을 자제하기,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개인의 각성 등 개별적 실천이 마치 사회운동 내 페미니즘 실천의 전부인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그 속에서 사회운동과 페미니즘

전략의 쇄신에 대한 남성·여성활동가들의 활발한 논의는 봉쇄·축소된 채, 여성활동가들만의 고민과 실천으로 고립·주변화되고 있다.

다시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활동가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사회 전반과 운동사회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분리된 곳이 아니 듯, 여성억압을 초래하는 성별분업/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 전반과 운동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운동 혁신과 사회변혁전략의 재구성, 이 모두가 여성해방을 위한 정치이념으로서 페미니즘과의 결합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4. 여성운동 전략과제

우리는 여성해방을 위한 정치이념으로서 페미니즘을 사회운동들에게 제안할 것이다. 이 제안은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변혁하는 것을 '반드시' 사회변혁전략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여성을 특수화, 주변화해왔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기존 이념과 실천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토론하고, 이러한 토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운동의 과제와 계획 속에 할애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의 힘'을 구축하고자 하며,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을 넘어 소통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여성운동 네트워크'(가칭)를 제안하고자 한다.

○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기존 이념과 실천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토론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회운동의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여성에 대한 빈곤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주제화, 세력화를 위한 지원과 구체적인 대중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에서는 기존 교육의 내용에 페미니즘이 담길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고,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 확보해나가야 한다. 당과 사회운동단체들은 여성활동가들이 진지하게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고, 여성활동가들이 겪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파괴하고 여성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공사분할-성별분업-성차별이데올로기를 폐절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신체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

체를 구축한다.

: 가족의 변혁, 축소라는 것이 이미 신자유주의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가족형태(성별분업)가 억압하고 있는 여성권·노동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과제를 밝히는 것이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를 권설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여성이 노동을 통해 받는 임금이 생계를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성 스스로 가족구성을 생존전략으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가족이 덜 필요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양육은 공동체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확립해 나가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절제하는 투쟁을 전면화한다.

: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노동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자. 만약 여성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면 출산휴가는 주휴일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기본권·물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 기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의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산휴가가 비록 여성만 사용하는 휴가라고 해도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보편성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권의 개념을 발전시킨다면 여성에게 '일'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여성노동자를 특수집단으로 취급하는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다. 여태껏 임신·출산 등 여성의 모성활동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노동권을 박탈당할 '죄'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임신·출산을 직·간접적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주의 '죄'는 진정한 사회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죄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이 스스로 대표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조직화/자기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활동계 요구를 좀 더 급진화해보면, 여성이 세상의 절반으로서 남성과 동수로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성의 어떤 욕구와 권리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변경해야 한다.

〈제안1〉 '여성운동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자'

개별화되어 있는 여성들의 실천, 교육,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성활동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제안2〉 '100주년 3·8 여성의 날을 새로운 여성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제민당 '여성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활동가들이 한국여성운동의 기간 실천을 평가하고, 새로운 여성운동의 전망을 토론하기야 한다. 내년 100주년 여성의 날을 첫 번째 논의 총화의 장으로 기획하자. 이를 위해선 여성의 날이 사회운동의 주요한 대중사업 계획으로 세워져야 한다.

패널토론문 _전국학생행진(진우)

1. 여성대회 선언을 여러 현장의 목소리로! 100주년 38 여성의 날까지 흐름을 만들어나가자.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전략과제들을 외화시켜 나가고 실제 현장(여기서 현장이라 함은 결코 투쟁사업장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한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선언문을 토대로 한 투쟁과제들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에 맞는 실행계획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랜드홈에버뉴코아 여성노동자들과의 간담회라거나 토론회를 통하여 그/녀들의 여성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제 투쟁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자. 2007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광주시정여성노동자, 경북대의료원 여성노동자등 다양한 여성노동자투쟁사업장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처음에도 밝혔듯이 노동현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특히 그동안 사적인 공간 정치적이지 않은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가족)에서 실행하자. 이러한 흐름들이 모여져 내년 100주년 38여성의 날까지 총화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보다 구체적인 여성권리선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가족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들에 대항하는 이태을로기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현재 여성 가족부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로마지2010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담론을 만들면서 그것이 여성의 책임인 양 현재 여성이 양육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는 낳기만 하십시오 노무현이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에게 양육과 일의 이중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저임금하고 유연화된 노동형태로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여성노동을 착취하기 위함을 은폐한 채 수치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소위 여성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개별적인 투쟁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성별화된 모습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3. 여성노동권쟁취 투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내자!

여성노동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여

성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와 노동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구별하여 나눌 수 없다. 여성 노동권은 종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집회 현장이나 노동자 공간에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이른바 비정규직 투쟁의 포상으로 떠오른 이랜드뉴코아홈에버투쟁)에 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생산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가족에서부터의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노동권쟁취 투쟁은 지금까지의 투쟁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4. 단일 사건 처리로서의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으로 확장시키자.

지금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은 단일 사건의 처리를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왔다. '사건' 이 터져야 비로소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기 마련이었고 이것은 반성폭력 운동을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여성이 자신의 성을 온전히 전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이어야 하며 그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에 대한 투쟁이어야 한다.

특히 성적 자유주의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금, 더욱더 심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상품화와 대상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생존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상품 가치화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일부 여성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를 포괄하는 사안이 된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기에 여성의 성이 대상화되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들을 밝혀내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결국 이 투쟁은 단일사안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켜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되어야 한다.)

'사건' 이 터지지 않아도 이 사회는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공동체 또한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반성폭력 운동은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 전체의 권리이며, 공동체의 보편적인 권리를 위한 운동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의 모든 공간(활동가들의 공간)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관통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과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이타기가 아니며 이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여남 간의 윤리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성폭력 운동이 지향해야할 바이다.

사회 운동 포럼



피터 워터만 초청 강연

○ 피터 워터만 특별 강연 (9/1)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 21세기 노동해방전략

강연 소개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13시 30분~15시

장소 : 성균관대학교

* 강연자 소개

- 피터 워터만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주로 활동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로 지난 수십년 간 세계의 노동운동을 분석하고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국제적 정의 연대운동과의 결합 등 노동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과 페미니즘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정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 저자인 킴 무디와 더불어 90년대 이래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전파하고 심화시켜왔습니다. 그는 세계사회포럼으로 대표되는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의 성장에 따라 다시금 '새로운 국제적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저서

:'지구화 시대의 전세계 노동자: 새로운 세계질서에서의 대안적 노동조합 모델'
(로날드 뭉크/피터 워터만 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문화과학사)

* 주요 논문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새로운 노동조합 모델'
새로운 지구적 운동의 국제적 노조주의에 대한 도전에 따른 허방적 노동전략 탐색

사회운동포럼

사회운동전략과제워크숍



사회 운동 포럼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기획

○ 때 : 2007년 8월 31일(금) 오전 11시 - 오후 2시

○ 곳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7호

□ 취지

▷에이즈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전가받고있는 주체들의 삶과 투쟁을 공유함으로써 에이즈문제를 더욱 정확히 보고,

▷에이즈가 그/그녀들의 처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 프로그램

사회: 명진

○ 다 같이 해보기 1. 기사 흔들어보기

#1. 동남아 출장 잦은 맥의 남편은 안전하십니까?

#2. 에이즈 확산 방치해 국민 생명권 침해할 건가

#3. '에이즈 요리사' 호벌서 밀히

#4. 동성애자들 '우리 헌혈하거 해주세요' 스웨덴, 동성애자 헌혈 규제책 완화 검토

○ 다같이 해보기 2. 동성애자, 성노동자, 어주노동자는 에이즈 온상지? 어떻게 해야하지?

-만전한 성: 성파트너수를 줄이기, 성관계수 줄이기, 첫 성관계 시기 늦추기

-에이즈와 무관하다:

-에이즈에 대해 깨끗하다:

-외 나한테만 그래?:

○발제1. 동성애자운동과 에이즈: 병권

○발제2. 성노동자의 권리와 에이즈: 정숙

○토론자 토론: 친구사이/ 나누리+/ 사회진보연대

Silence is Death, Action is Life!

동성애자운동과 에이즈

정을, 장병권 -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기(34)

□ 우리사회 에이즈 운동의 역사와 현재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질병의 확산을 수수방관해온 미 정부에 분노를 터트려 온 에이즈 운동가 ‘래리 크레이머’가 실의에 빠져있는 에이즈 환자 1만 여명을 모아 뉴욕 동성애자 지역봉사센터에서 ‘직접행동’ 조직 Act Up(권력의 해방을 위한 에이즈 연대 : 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을 조직하고 활동한다. 액트업은 침묵은 죽음이라는 공격적인 구호를 외치며 전투적인 합의행동을 펼쳤다. 에이즈 치료제의 접근과 개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단을 개발한 제약사가 있는 윌스트리트를 봉쇄했다. 성패트릭 성당, 증권거래소 등 그들이 벌인 시위장소는 세상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에이즈로 사망한 환자의 관을 들고 백악관으로 행진하며 외치는 구호는 그들이 그 당시 느꼈던 절박감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액트업의 끊임없는 투쟁은 미국 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정부의 입을 열게 하였고 에이즈와 관련한 지원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다.

1980~90년대 미국 액트업 활동가들이 벌인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운동의 영감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또한, 우리사회 에이즈 운동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닐까? 에이즈 환자, HIV 감염인들이 중심에 선 환자권리운동인가? 아니면 동성애 운동이나 보건의료운동 등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과제 중 하나인가? 대개 소수자 운동이라 하면 당사자 중심으로 운동이 건설되고 이끌어져 왔다. 액트업 역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온 미 정부 태도에 분노한 감염인,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운동이었다. 그들이 의사보다 더 나은 의료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성정체성이 대개 동성애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액트업 활동을 보건의료운동, 동성애운동으로만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사회에서는 감염인 스스로의 자조모임들이 등장한 시기와 에이즈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편견과 차별에 맞선 시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우리사회에서 에이즈가 갖는 위치는 다

34) 2006년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인권포럼 '한국의 에이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중 동성애와 에이즈운동의 글을 재구성 작성

양하며, 감염인, 동성애자, 보건의료인, 이주노동자, 성노동자, 인권단체 등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접합지점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출발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동성애자 운동이었다.

□ 1990년대 ~ 2002년 : 동성애자운동의 성장과 함께하다

1987년 4월 최초 감염인이 보고되면서 한국이 내세운 에이즈 정책은 80년대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시작된다. 1988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에이즈를 두고 “동성애자들이 자연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자연은 가공할 천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사회도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였다. ‘동성연애자들의 질병’을 비롯한 특정계층의 질병으로 말하는 것과 동시에 ‘아 이제 다 살았네.’, ‘공공물품, 악수, 키스 등으로 전염’ 등으로 몰아가며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주는 기사들이 판을 쳤다. 1명, 2명 늘어나는 감염인의 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고, 감염인 인권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와 함께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편견은 더 두꺼워졌다.

동성애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pc통신으로 만남이 좀 더 수월해진 1994년, 한국에이즈연맹(현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언론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은 도를 지나쳤다.

친구사이 발족(94년 2월)을 두고 ‘이제 한국사회도 공공연한 동성애자 단체의 등장으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거부해했다.

동성애자운동이 자조모임에서 사회운동으로 발돋움한 시점이었던 1998년, 한국에이즈연맹은 동성애자들을 타겟으로 삼은 96년 발표논문 3년이 지난 뒤에야 언론에 배포하였다. 국내 언론들은 연맹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앞다투어 ‘국내 에이즈감염인 747명’, ‘동성연애자 감염인 급증’, ‘국내 동성연애자 11만명’³⁵⁾이라는 표현이 난무한 기사들을 실었고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업소명, 수까지 언급하였다. 심지어 방송을 통해 게이 사우나가 보도되고 동성애자 감염인을 인터뷰하는 등³⁶⁾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과거와 다르게 동성애 운동이 성장하고 있던 터라 대응 또한 빨랐다. 당시 운동의 중심이었던 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의회(하이텔, 친구사이, 끼리끼리)와 대화동성애자인권연합(현 동성애자인권연대)은 여타의 pc통신 모임, 지역, 대학 동성애자 모임과 함께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 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98년 1월 6일 발족)를 구성하고 대응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998년 1월26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범대위 발족에 150명에 가

35) 98년 1월 6, 9일 등 각종 중앙일간지 (전용상담소를 동성애자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어릴 때부터 성적 호기심이나 충격을 잘못 관리해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기사가 실림)

36) 98년 1월 7일 KBS 뉴스 파노라마 (동성애 성적지향은 에이즈의 원인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사 보도)

까운 동성애자들이 참여한 것은 그 당시 활동의 분위기를 보여준다.³⁷⁾ 범대위 구성원들은 방송국은 물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도 찾아가 강력한 합의행동을 펼쳤다.

범대위 활동은 동성애 운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기 충분했다. 이후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범 동성애자 상설 연대체 구성으로도 연결되었다. 무엇보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편견에 대응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논쟁지점도 형성되었다. 일부 개인과 단체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에이즈를 동성애자와 분리해내고자 했다. 방송을 통해 게이 사우나가 나온 이후 pc통신 천리안³⁸⁾모임의 경우 내부 공지를 통해 '게이사우나를 다니는 이들과 천리안을 이용하는 회원은 다르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pc통신은 때 아닌 '동성애자 순결논쟁' 이 불붙었다. 순결논쟁은 여전히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성문란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라는 담론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의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의 핵심을 빚겨나간 채 논쟁이 되었고, 커뮤니티 안에서의 내부검열은 동성애자 감염인, 비감염인을 분리해내고 동성애자와 감염인들이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 2003년 ~ 현재 : 동성애운동 내 에이즈 논쟁 vs 다양한 운동진영과의 에이즈 공동전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1998년 언론보도를 통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상담소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미국 1980년대 에이즈 운동의 주된 구호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라' 였다면 우리사회는 미국과 달리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은 정부의 꿈이었다. 물론 동성애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 음성적이고 비밀스럽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ISHAP(Ivan Stop HIV/Aids Project)을 내세우며 동성애자 예방 사업을 시작했다. 예산이 책정되고, 사무실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1998년 연맹의 태도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과였다. 이는 무시된 채 사업은 진행되었고, ISHAP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ISHAP이 만들어지며 동성애 운동이 에이즈를 바라보는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성애 운동 내 ISHAP과의 갈등은 2004년 초 한겨레신문 보도 대응활동에서 좀 더 노골적이었

37) 범동성애자 비대위 결의문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동성애자라는 척박한 상황에서 동성애자 공동체를 힘겨게 이루어왔고, 동성애자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다시 숨어들게 하려는 음모를 목도하고 있다. 동성애자들 에이즈의 희생망으로 삼고, 동성애자 먹임을 경제 상황 타개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동성애자로서 동성애자를 먹임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경계하며, 이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이하 결의문)

38) pc 통신 천리안 모임은 처음 분리적인 태도에서 이후 범대위 참여로 입장을 전환하였지만, 주변의 압력과 설득이 없지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 ISHAP이 결성된 이후 1300여명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이 언론 미공개 약속을 뒤로 한 채 한겨레 신문 안종주 기자에 의해 특종처럼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동성애 단체들은 한겨레신문사 앞 시위를 포함 즉각적인 대응활동을 벌였다. 1998년 범대위 활동의 경험은 한겨레신문 대응 활동과 조직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 관련단체와 함께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사업을 시작한 동성애자들과 그 활동에 반대하는 동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활동으로 한겨레신문사로부터 정정 보도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한겨레신문사 대응 공동행동은 ISHAP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퇴치연맹으로부터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받지는 못했다. 파장은 매우 컸다. 이때 공개된 동성애자 대상 설문자료는 2004년 국가감자료로도 활용되어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확산 원인에 대한 질문에 ‘동성애자는 한국에서 에이즈의 핵심고리’ 라고까지 설명했다.

2005년 11월에 개최된 ‘AIDS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 토론회³⁹⁾에서 동성애 단체들은 한결같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SHAP은 동성애자들에게 50판개 이상의 콘돔을 배포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무엇보다 자신들은 동성애자 예방단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취약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콘돔사용만을 강조했다. 에이즈를 동성애자 건강권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콘돔배포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에이즈 예방운동 패러다임은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와 동성애자 운동단체 모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돔배포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동성애라는 하나의 성적체성을 함 문성교라는 성행위와 동일시하며 사우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동성애자들을 문란하고 고위험 행위를 하는 이들로 규정한 정부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고착화시킬 뿐 근본적인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Ishap이 진행하고 있는 콘돔배포 사업과 게이바에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hiv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동성애자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기보다 그 결과에 대한 보고로 인해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고 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동성애자들을 에이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가는 것이다. 성적체성을 떠나 성접촉 시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은 여전히 유효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콘돔은 에이즈 예방활동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콘돔살포로 대표되는 동성애자 예방정책은 ‘콘돔을 왜 써야하는지’ 보다 ‘콘돔을 써야만 한다’ 라는 강박을 동성애자들에게 주입시켰다.

□ AIDS 25년, 연대의 확대

39) 2005년 11월 6일 친구사이 주최 토론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2006년 7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 감염인, 보건의료인, 동성애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하나들씩 모이기 시작했다. 바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발족과 향후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해서였다. 감염인들은 계속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인권증진이 에이즈 예방이다” “씩출과 감시가 아닌 인권보장” 이라는 피켓을 들고 당당히 섰다. 아마 이 기자회견은 스스로 피인이라는 생각과 더러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철저히 숨어만 살아왔던 에이즈 감염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한 의미있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감염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감염인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종식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며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공동행동은 매월 1회씩 ‘에이즈 감염인과 새끼손가락을 겹시다’ 라는 테마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치료제 접근권, 빈곤, 프라이버시권, 직장 내 차별 등 감염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들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나갔고,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동행동은 예방법 대응운동과 FTA 반대활동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거리로 나갔다. 그것은 FTA가 체결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인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반전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시의 에이즈 정책을 비판하며 전쟁에 쓰여진 수많은 돈이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에게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 에이즈와 운동 그리고 연대, 소통

에이즈는 발병 초기부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가족주의를 보호하려는 세력들의 ‘무기’ 가 되었다. 이 무기는 노동력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동성애자들을 공격했으며 일대일의 이성애 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족주의로 편견과 차별의 눈으로 동성애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리려 시도했다. 동성애자와 에이즈는 마치 삼쌍둥이처럼 밀접하게 얘기되어져 왔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건정책에서는 여전히 고위험군을 표적삼아 에이즈 예방정책은 변화할 줄 모르고 있고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퇴치될 수 있는 질병, 나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 에이즈라는 편견에 맞서 싸워왔으며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운동을 성장시키고 있다.

98년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운동이 시작되고 9년이 흐른 뒤 2007년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에서는 에이즈 감염인, 동성애자, 성노동자, 보건의료인, 인권단체 활동가, 청소년, 진보적 종교그룹 등이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성노동자는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 아니다! 에이즈 확산의 주범은 바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며, 거대 자본 제약회사이다!’, ‘감염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무효!’ 등을 외쳤다. 이것은 10년 가까이 혹은 작게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에이즈 운동의 발전을 보여준 것이다.

특정계층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에이즈 그리고 고위험군 논리로 일관하며 에이즈 확산에 동조하는 정부정책을 돌리기 위한 운동에서의 다양한 소통과 연대는 운동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그간 동성애자운동과 에이즈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들을 비난하는가?

김정숙(HIV/AIDS인권연대 나누라+)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성적 자유 이슈의 일부분이다.
 스톤월어 아직도 많이있는 성노동 여성들의 유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법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아직도 많이있다."
 -팀 바넷

팀 바넷은 뉴질랜드에서 2004년 동성애자들의 시민결합을 법률화에 성공한, 첫 커밍아웃한 뉴질랜드의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국회의원이다.

뉴질랜드는 2003년 당시 성노동을 비범죄화한 최초의 나라이기도 한데, 바넷은 자신이 대규모 성산업 지역 국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게이로서 '성노동자 투쟁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통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얻는다고 주장했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성노동자들과 경찰, 정부 관리 사이에 긴장이 덜하고, 나이 어린 성노동자들이 가난 때문에 성노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바넷은 200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에이즈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반-소도미 법률 폐기 및 깨끗한 주사 바늘 교환과 함께 성노동에 대해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과 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승인이 그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 에이즈 예방법과 강제검진

인권, 보건의료, 동성애자, 감염인단체로 구성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 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려져있는 감시와 격리의 방식으로는 에이즈 감염인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국민건강의 상호보완적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식이며 감염인의 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에이즈를 확산시킬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하면서, 특히 성노동자들의 강제검진 조항 폐지는 국민을 에이즈 위협에서 방치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

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의 에이즈 검진은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따르고 있어, 에이즈예방법의 강제검진 조항은 현실에서 효력이 없는 법률로 삭제되어도 무방한 조항이다. 별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강제조항을 삭제하려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의 주범으로 성노동자들을 지목하고 에이즈의 예방을 위해 이들을 관리,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노동을 직업으로 삼은 여성들의 생존권과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없다. 그저 문란한 성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 소위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집단에서 발생하는 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재앙을 피트린다는 낙인과 편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6개월마다 한번씩 강제로 자신의 몸이 건강함을 증명해야한다. 검진 결과가 불건강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여성은 당장 성노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치료보다는 검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물론 이 조차도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검진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에이즈는 성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이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감기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주로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성과 관련되어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이들을 억압하려 한다. 한국에서는 성노동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을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성병이 판연된 시기에 전염병법이 선포되고 공창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남성과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성병검진제도가 존재하였다. 현재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염인의 치료보다는 이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려는 방식으로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한다.

에이즈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는 가족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을 억압하는 주장들로 가득 차있다. 2002년 국립보건원은 에이즈 발생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젊은이들의 성 개방 풍조 때문에 20~30대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개방 풍조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에이즈가 특별한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 에이즈 희생자들을 비난하는데 이용된다. 언론에서 에이즈에 걸린 성노동자들이 일부러 에이즈를 퍼뜨린 것처럼 비난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영화 너는 내 운명의 전도연처럼...

성노동자들이 에이즈의 확산을 부른 게 아니라, 여성이 몸을 팔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가난과 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인 것이다.

사회 운동 포럼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워크숍 기획 내용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일시 : 2007년 8월 31일 오후 3~6시
- 장소 : 성균관대 인문관 7층 31706

[고덕고덕] '살만한 집' 빙고게임

- 참가자들과 함께 빙고게임을 하면서 '살만한 집'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주거권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말뚱달뚱] 홈리스? 홈잇수?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보면서 어떻게 주거권의 침해를 겪어 되는지 토론하고 주거권운동의 과제들을 추려봅니다.

[확자지절] 주거권운동, 너 어디로 갈래?

△ 주거권운동의 현재, △ 의제형성의 과제, △ '지역' 과 연대의 과제, △ 주거권운동의 전망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전체토론을 합니다. 사회는 미류(인권운동사랑방)가 맡으며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썬썬(주거권기획팀)이 징검다리워크숍의 고민을 들고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거권의 정치를 시작하자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을 열며

미류 (주거권운동워크샵 기획단)

대여섯 명이 모여서 집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시대다. 치솟는 집값에, 어렵게 마련한 집값이 올라 흐뭇한 사람도 있을 테고 10년 뒤로 성큼 물려선 내집마련의 꿈에 소주 생각이 간절한 사람도 있을 테다. 내집마련이라니, 당장 반지하방이나 탈출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이 사람들, 우리들의 고민에 시원하게 답을 주고 있다.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길잡이는 되어주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처럼 막연하게라도 공감할 얻는 의제가 있지도 않고 주거권운동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활동가들이 많다. 주거권운동워크샵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철거민운동은 주거권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쳐보면, 집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오래됐다. 한국사회의 운동을 얘기할 때 철거민운동을 끼기는 어렵다. 광주대단지에서부터 상계동, 사당동, 봉천동, 행당동... 이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철거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는 점만은 알고 있다. 그런데 철거민운동과 주거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기 위해 진행한 앙케이트에서 많은 활동가들은 철거민운동과 주거권운동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주거권운동은 접해보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주거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개발 광풍에 맞선 저항을 제시한 활동가들이 많았다.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온몸으로 ‘주거권’ 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편적 의제로서의 주거권

집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철거민들의 ‘주거권’ 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울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철거민투쟁의 요구가 나의 고민과 맞닿는 지점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을 할

때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가이주단지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권리는커녕 물리적인 폭력조차도 집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온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대책의 자리를 넓혀왔다.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주민으로서 지니는 주거에 대한 권리가 조금씩 확장되어온 것이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절반의 국민들이 공감할 만도 하련만, 좀더 나가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집의 소유 여부를 넘어선 주거정책의 대안이 보이기도 하련만, 조금더 가보면 소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짜투리 공간까지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하련만, 솔림이 없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절반의 사람들조차도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한편,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가 내어놓는 각종 정책들, 꿈을 재료로 이윤을 빚어보려는 금융권의 각종 상품들은 모든 사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마저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예당초 위기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

부동산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위기가 싫어지다가도 무엇이 위기라는 것인지, 도대체 그 위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가웃거리게 된다. 몇 년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처방을 꾸준히 내어놓았다. 진보진영도 이런저런 처방을 내어놓고 있다. 부동산 위기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니 위기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강력한 국유화 정책, 삼박자 주거정책과 같은 신선하거나 해묵은 의제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다루는 위기가 '나'의 위기가 아니었던 이유는 현재의 위기가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음직한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되는 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되라는 '명령'은 체제관리전략이기도 했으며 자본주의의 윤리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발뺌고 나서는 것이다. 내집마련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쪽방 거주민, 노숙인, 비혼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은 위기의 밖에 서성거린다. 그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고 각종 쉼터, 또 다른 쪽방과 고시원이다. 누군가에게 얹혀 살든, 아등바등 월세방 하나 마련했든, 삶이 저당잡히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삶이 되돌아 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위기에 대한 분석과 주거권의 관점에서 어떤 의제를 들고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이며 사회운동은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의 우열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정치화하는 문제다. 전술의 급진성이나 의제의 선정성이 운동의 변혁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주거권의 정치가 필요하다.

주거권의 정치, '지역' 을 주목한다

내 집이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띤다. 주택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다뤄질 수 있는 구조, 어떤 집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거권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주거권이 무엇 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거권의 정치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우리는 지역을 주목한다. 철거민운동이 현재 직면한 현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일상의 저항들이 만나기에 유리한 공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지역' 으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공간과 관계들에서도 주거권의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여성주의적 공간의 창출이라는 과제는 지역에서의 정치뿐만 아니라 제도권에서의 정치로도 접근해야 하며 여성들의 관계 자체에서 출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장애인과 청소년과 성소수자들의 외침에서 가장 큰 울림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주거권의 정치를 가로막는 거대한 힘이 '개발' 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자본화할 때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지역' 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결음

징검다리 워크숍을 거치며 나뉘은 고민들은 이어지는 두 개의 글들에서 좀더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철거민투쟁의 역사가 개발사업의 세입자대책을 확장해왔지만 결국 좀더 세련된 개발주의가 등장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은 아닌지, 소수자운동 안에서 움터온 주거권운동의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말할 것이다.

이제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은 워크숍 이후를 고민한다. 철거민운동과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소수자운동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기획을 준비한다. 그 자리에는 더욱 많은 사회운동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유를 하든 하지 않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주택을 점유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주의적이며 생태적인 공간의 재구성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 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은 [임커이트]활동가 100명에게 듣는 주거권운동 이야기' 를 시작으로 철거민 운동 단체와 만나는 징검다리 워크숍1, 다양한 소수자운동과 만나는 징검다리 워크숍2를 거쳐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홀리스들을 위한 복덕방>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와 인종언론 참여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거민투쟁에서 주거권운동으로

재용(주거권운동워크샵 기획단)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낮기 때문에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 신명복.

자본주의가 문제라 했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분리되고 도시공간에 미숙련 노동자들이 대량의 산업예비군으로 강제 수용되는 근대 산업화의 문제가, 쉼 없이 일 할 것을 강제하고 죽지 않을 만큼 제공되는 의식주의 문제가, 그래서 노동자들은, 도시빈민은 그 소외의 뿌리에 맞서 골리앗을 세우고 용역과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또 싸워왔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우리는 흔들림 없는 저항을 위하여 그곳에서 강고한 연대를 외치며 바다를 이루었다. 낮은 곳으로 다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공동의 하나를 이루며 그 수평선 너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는 바다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육체와 정신마저도 이윤 창출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서 바다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철거민운동은 개별 당사자의 경제적 보상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보편적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가 구속되는 질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더 이상 그것이 사회운동가들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강고한 연대를 외치던 이들은 더 이상 변혁의 전망으로서 주거권운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도시 공간의 생활 전반을 상품화 하는 경향에 맞서는 일련의 움직임이 다시금 샘 솟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공공성운동이 새로운 운동의 전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사회운동이 개별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보편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리된 채 각자의 영역에서 자본의 파도에 무너져 버리는 무기력한 저항이 아니라 공동의 의제들을 모아내어 큰 물결을 이루고 저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련의 흐름 속에 우리는 주거권운동이 그 뿌리에서 시작했던 연대와 변혁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 하면서 살려가고자 했다. 여기저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의 물결들은 왜 서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려 하는지 무엇이 하나로 모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

로 따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주거권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뛰어 넘어 함께 만들고자 하는 도시공간이 그리고 주거권의 그림이 완성된 채로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가장 소외된 뿌리의 근원을 찾아 가는 여행,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는 바다의 연대- 그 물결기를 살려보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 하나, 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

-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보자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에서는 먼저 철거민단체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철거민운동이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투쟁 속에서 무엇을 이어가야 하고 어떤 것을 전파시켜야 나가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총 80명에 달하는 각 부문운동의 활동가들이 설문에 답하였고, 답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

철거민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활동가들은 철거민운동하면 생존권/치열함이 생각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폭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장에서 용역과 경찰의 물리적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철거민의 모습을 떠올리는 활동가들이 많았다. 반면 그러한 절박함을 가진 철거민운동이 “철거당하는 사람들이란 정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여 크게 보면 빈민이겠지만, 당장의 현실의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폴리앗투쟁은 용역들의 물리적 폭력과 자본의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는 불복종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한 폴리앗투쟁의 의미를 알기에 학생운동은 꾸준히 연대활동을 지속하였으나 철거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무언가를 함께 지향하는 동지보다는 ‘착한 학생들’ 이란 방식으로 만남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투쟁을 모색하는 연대의 본연의 의미보다는 당장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사수대를 구성하여 용역들에 맞서 몸 벽으로 동원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몫으로 남으면서 “들어쳐보면 학생단위를 도구적으로 사고했던 것 같은” 경험들도 있었다.

강제철거에 임박했다고 하는데 철거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침탈 이후의 대안들은 무엇인지 궁금증은 늘어가지만 급박한 철거상황에 대한 정보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보교환이 원활하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의혹만이 증폭하게 된다.

정보통제에 따른 중앙 집중방식의 의사소통 체계가 악용되면서 철거민 당사자와 연대단위에 협상과

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그들의 의사가 협상에 반영되는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보다는 중앙 지도부의 물밑 협상을 통한 금전적 합의 보상으로 결말이 나면서 철거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철거민운동은 실리추구의 경제주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둘, 2% 부족한 주거권운동, 무엇이 필요할까?

- 개별 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그 너머를 물었다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은 철거민단체와의 구구절절 인터뷰를 통해 철거민운동이 현장에서 주거권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개별이익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다. 그것은 최근 경제주의로 귀결되는 철거민운동의 문제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해온 정세 속에서 운동의 전환을 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지를 묻고자 했던 것이다.

개별 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철거민운동이 현장에서 역량을 쏟고 있는 운동의 성격에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철거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 등 주거대책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 구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지금의 철거민운동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조직화해서 해당기준에 포함시키는 일에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보상을 목적으로 친인척을 재개발지역에 어주시키는 등의 각종 의혹이나 분열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철거민운동이 그러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리앗투쟁 등의 급진적 전술을 사용하지만 내용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략적 고민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거민투쟁 이후에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입자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철거민단체가 철거투쟁 이후에 지역노조 등 노동자운동 등의 전환으로 운동을 지속시키고자 하지만 최근의 경향이 철거민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재정착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조직이 지속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래서 실제 임대주택을 보장받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하지 못하여 철거민투쟁의 성과가 쌓여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입자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거권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사자 교육은 철거투쟁의 과정에서 왜 주거권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철거민단체의 상층 간부들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 변화된 정세를 담아내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교육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속성을 보장할 주민총회조차도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

육의 내용에 자본주의 철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그러한 내용이 현장에서는 당위적인 구호로서만 외쳐지고 철거 당사자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역에서의 개별협상의 틀이 주거권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연대 단위와의 공동위가 꾸러 지더라도 철거민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개별 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함께 요구안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연대 단위가 모이더라도 결국은 각 부분운동이 자기 운동의 이익만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실질적인 투쟁의 동력이 밖으로 쪼이지 못하고 걸치레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셋, 부족한 2%,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터와 나의 목소리로 다른 이들을 노래하는 연대를 고민하다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은 활동가들의 설문서를 통하여 철거민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피고 철거민단체와의 구구절절한 인터뷰를 통해 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활동가들이 지역, 사회적 의제, 교육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거권운동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를 채워가는 주거권운동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러한 운동에 만들기 위해 철거민단체와 사회운동단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토지와 관련한 사회적 의제를 펴뜨려야 한다.

철거민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이슈화하여 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 등의 실질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민운동의 성과의 이면에는 회원들만의 일시적 경제 보상으로 임대주택이나 주거대책비를 받고 흩어지는 결과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철거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홍리스 전반의 문제제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현재의 철거민운동에 대해 활동가들은 모든 노동계급 혹은 억압받는 소수자의 보편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보다는 그녀들만의 생존권을 위해 일시적인 이익집단의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대활동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철거민운동이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보편적인 주거권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 실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 청소년 등 홍리스의 문제를 아우르는 공통의 이슈를 사회화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거권운동의 정당성을 얻어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컨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주택 입주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운동을 한다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

달치는 부당한 기준들을 바꾸어 가는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차원의 주거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관련한 사회적 의제를 급진적으로 제시하고 만들어 가는 운동에 역량을 쏟아 주거권운동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회주택의 문제나 토지불평등 문제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쌓아온 성과들을 철거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서 담론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대안적 정책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직접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역 차원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변화된 주거권운동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에 맞게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 당사자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구체성을 담아내는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한 의제를 현장의 구체적인 전술에 반영하고 그 성과물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 주거권교육이 감추어진 홈리스의 문제를 드러내고 조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권 교육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겪는 주거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임을 인식하며 그것을 개인과 집단의 권리로써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철거민운동에서의 주거권교육은 당사자가 당장의 강제철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고 주거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제철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대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교육매뉴얼을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인권, 빈곤, 홈리스, 학생, 당 그리고 여성, 장애, 청소년 등의 조직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토대로 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사전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세입자투쟁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매뉴얼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했던 부문운동의 단위들이 지역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의 문제가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이며 이것이 사회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에 이슈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주거권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주거권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체로 비슷하지만 모호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다. ‘소유가 아니라 거주’, ‘사회공공성’, ‘생존의

문제로서의 보편적 권리' 등등. 따라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주거권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개발 혹은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는 문제점들을 담아내어 당사자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대응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부문운동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복지네트워크가 가지는 장점은 지역에 기반 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공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조직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그러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풍부한 자원들의 동력을 백분 모아내어 주거문제와 관련한 제반 구조들을 바꾸려는 의미의 지역운동보다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연계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류 활동으로서 하는 것이 그 한계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주거문제를 정치적 이슈화 하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려면 네트워크의 방향이 세입자들의 투쟁을 통해 주거권을 보편적 사회운동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거민운동과 다른 민중운동의 연대 방식이 단체 대 단체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연대의 내용도 해당 단체가 주력하는 과제에 대한 연대발언이나 집회 동원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원 형태의 연대활동 방식은 공통의 요구를 모아내고 그것을 지역의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것에 한계로 작용하고 전통적인 민중운동으로서 제기될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홈리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이슈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부문운동에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공통의 요구로 모아내고, 그것을 지역차원의 의제로 반영하며 그 성과물을 함께 누리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과 '가족구성권'을 통해 본 주거권운동

황형(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

살의 과정에서 독립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구하는 문제를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운동 내에서 주거권운동이 하나의 운동의제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담론화되지 못했을까? 물론 오랫동안 철거민운동이 개발에 의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놓인 철거민과 철거민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철거민운동이 곧 주거권운동으로 등치되고 포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철거민운동에서 생략되어 온 주거권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후 주거권 운동의 의제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주체들로 운동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주거권운동을 고민하면서 주거권운동워크숍 기획단(이하 기획단)에서 제기되었고,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기획단은 앙케이트 “주거권운동 이야기”를 통해 여성, 소수자, 노동, 빈곤, 지역, 문화, 언론,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주거권 운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제안을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영역 중에는 ‘주거권’이라는 개념으로 주거권운동을 고민 해 온 영역도 있고,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거나 이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영역도 있다. 기획단은 다양한 활동영역 간에 이러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앙케이트를 통해 두 개의 키워드를 찾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설과 가족구성권이다. 도대체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주거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영구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과 폭력피해여성, 탈성매매여성, 노숙자, 청소년 등이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쉼터는 거주자, 거주 기간, 거주 이유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로서의 의미로 볼 때, 주거권 운동의 문제와 닿아 있다. 그간에 다양한 활동영역의 주체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설의 민주화나 탈시설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의 지적처럼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설의 문제와 함께 제기된 다른 문제는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의 연관성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소수자가 독립적인 가족 구성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 즉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주거공간과 주거정책으로 이어진다. 앙케이트에서 여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은 현재 주택자원의 분배가 특정한 가족모델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나 비혈연공동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제이트 분석 이후 기획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딪치게 되는 주거권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주거권운동과 다양한 소수자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해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전 워크숍에서는 각 활동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설문제와 가족구성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주거권의 문제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주거권운동의 과제를 탐색해 보았다.

□ '시설' 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사적인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방문한 자원활동가나 후원자에게 노출된 신체가 보이기도 하고,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고 입·퇴소도 자유롭지 않으며, 시설운영자들은 규율을 강요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시설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장애인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노인,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 중 80% 정도가 지적 장애인인데, 이러한 시설들은 거의 시설장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시설 간 이동이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한 형태인 장애인 그룹홈 또한 입소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법인이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전권을 가지고 생활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활동가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 사람 중에 노인시설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옆에는 장묘하고, 복지타운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랑인시설-정신병원-정신장애인시설-노인시설을 세트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돌린다” 는 것이다. 이처럼 시설운영자의 권력은 시설 내에서 다양한 층위로 작동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원주의 어떤 장애인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몇 명이 모여 시작되었는데, 정부에서 미신고 시설로 규정하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해체되어 재구성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장애인운동은 시설비리, 인권유린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요구로 시설의 민주화, 더 나아가 탈시설운동을 진행해 왔다. 한국의 장애인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장애인 운동은 탈시설운동의 문제의식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가 주거권의 보장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심대를 보호해야 할 무성적 존재로 규정한다.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없는 심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공간은 노래방, 낚시방, 친구집, 족방, 그리고 쉼터 등이 있다. 특히 심대 레즈비언의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면 입소가 거부되거나 들어가더라도 계속 눈총을 받는다. 설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고 쉼터에 들어가더라도,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알게 되고, 쉼터 교사에게 알려지게 된다. 교사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아이들과 접촉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쉼터 안에서 왁자지껄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애인과 떨어질 수 있어서 도망치는 경우도 생긴다. 단기쉼터는 길면 6개월 있을 수 있는데 레즈비언의 경우 중장기 쉼터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개 쉼터에서는 이들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집으로 전화하면 집에서는 “폴도 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쉼터에서는 차비를 주면서 집에 다녀오라고 하지만, 이들은 막상 나가도 집에 가기 어렵다. 갈 곳이 없어 쉼터에 찾아 간다고 해도 이들은 결국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에서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 등을 개인에 대한 폭력으로 보듯이, 개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도 폭력이다. 심대가 집이 아닌 살만한 곳을 찾게 될 때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고, 열악하기만 하다. 그나마 갈 곳 없는 심대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쉼터에서조차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대 성소수자들은 거부당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장기적으로 10대 레즈비언을 위한 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생활시설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입소 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일부 시설 운영자들의 보수적이고 시혜적인 태도, 선도 및 보호의 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통제와 규율이 일상화 된 점. 그리고 생활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억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피해자화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설에서의 생활은 개인을 특정 범주로 구분하고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쉼터의 경우, 그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만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가족구성권' 을 통해 주거권운동을 보다⁴⁰⁾

'살만한 집' 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상가족 중심의 법, 제도의 장벽은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가?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은 여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성/소수자들이 소위 '정상가족' 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가족을 구성할 때, 이들은 공공주택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임대주택들을 규율하는 법령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40)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워크샵]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자료 참고

한국의 임대주택들을 규율하는 법령은 “세대” 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세대 개념은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 이며 세대는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고 타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상의 세대개념은 혈연중심의 가족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의 경우는 규정형식상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며, 그 표시도 “동거인” 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⁴¹⁾.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있어서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입주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단독 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이혼녀와 자녀, 범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및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단독세대주의 경우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9조 등을 보면,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입주 가산점이 높아지면서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정상가족’ 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의 규정이 어떻게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운동 진영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한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지원은 중증장애인이면서, 나이가 많고, 가구 수가 많은 장애인이 우선 순위를 갖되, 1인 가구는 전세매입주택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들 중에 1인 가구나 비혈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차별의 해소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살고 싶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과정이기도 하다.

파트너와 함께 사는 레즈비언들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세대주가 들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각자, 세금도 각자 납부한다. 동성 간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파트너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이 친구들과 5년, 7년씩 가족으로 같아도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모여서 같이 사니까 이웃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면서 썩덕져리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레즈비언들은 이사를 자주 하게 된다.

노숙인도 대부분 단신이라 1인가구 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가 300호에서 200호로 1인가구 주택수를 줄였다. 그나마 서울시는 24호밖에 없다.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시원이나 쪽방 외에는 현실적인 주거수단이 없다.

공공주택 정책이야말로 가구수가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는

41) ‘제도 만의 가족 들여다보기’, p14 -18,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조건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전 워크숍에서 나왔다. 오히려 현재 공공주택의 문제는 천편일률적인 평형이나 구조, 과도한 주거비부담 등이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은 없으면서 '정상가족' 모델을 전제로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 차이가 연대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찾다

각자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시설과 가족구성권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주거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르지만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주거권을 통한 접근이 시설/쉼터의 제자리 찾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하는가? 다양한 소수자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주거권의 권리주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주거권운동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전 워크숍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사회운동포럼 이후 1인가구와 비혈연공동체의 주거권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시설과 가족구성권의 문제를 주거권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주거권운동을 통해 시설과 가족구성권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주거권 문제를 제기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의 문제, 즉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상품화시켜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워크숍 과정에서 주거권이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주거권운동이 확대되고, 계속해서 문제 설정이 재구성되면서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모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회운동포럼

2003년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이야기하다



워크숍 기획 내용

반전평화운동의 전략과 과제

- 일시 : 8월 31일(금) 저녁 7시~10시
- 장소 : 인문관 7층 31706호
- 주최 : 사회운동포럼 반전평화기획단: 문화연대, 경계를 너머, 평화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1) 취지

2002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이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전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의 커다란 물결을 일으켜내었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역시 새로운 고민과 실천들로 역동적인 대중운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군 파병 반대운동에 이은 공백 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의 흐름까지 다양한 풀뿌리 대중운동에서 반전평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역량이 모아져야 합니다.

평화운동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반전평화 활동가들의 고민을 교류하고 향후 새로운 반전평화운동의 실천 양태와 전략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세부내용

발 제 :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경계를 너머 활동가 미니)

토 론 : 평화운동의 실천적 모색의 고민들

- 현지에서의 평화운동의 과제
-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평화운동
- 페미니즘과 반전평화운동

전체 토론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이라크 / 중동 민중들과의 연대길

미니 (경계를넘어 <http://www.ifs.or.kr>)

C 시작하는 말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꽃을 선물 하봐야 버려진 과자 봉지와 다름없듯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해 봐야 허망히 지나간 세월과 다름없듯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 마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소통을 얘기하고, 연대를 얘기하고, 변혁을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제 얘기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배와 점령으로 먹물린 이라크/중동의 민중들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얘기를 중단하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쉬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의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백 사람 보다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피눈물 쏟으며 아프게 살아내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할 때
우리의 가슴도 아프고, 저리고, 울렁이며,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푸른 나무 위로 저녁 노을이 드리우듯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 먼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연대와 희망은 시작됩니다.

1. 제국 지배의 역사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국, 하와이, 베네수엘라, 쿠바, 소말리아, 르완
다, 수단, 베트남, 캄보디아, 아일랜드.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제국 지배의 역사와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1) 아프가니스탄⁴²⁾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78년에 인민민주당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민민주당 정권과 소련을 제압 또는 견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군벌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9년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군대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과 이슬람주의자들과의 오랜 전투로 89년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합니다. 소련은 철수 했지만 군벌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전투에 계속되다가 96년에 탈리반이 승리하여 수도인 카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이다의 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1년에 9.11이 터지고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목적은 9.11에 대한 보복도 오사마 빈 라덴도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잇는 석유/가스 수송관의 건설이었고, 수송관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탈리반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을 한 것입니다.

2) 이란

1951년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국민전선의 모사데트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계 석유회사가 통제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그러나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모사데트는 쫓겨나고 국민전선, 투데 등의 활동가들이 체포, 투옥됩니다. 무함마드 레자 샤는 권력에 복귀하구요. 그리고 이듬해인 1954년 영국(40%)+미국(40%)+프랑스(6%)+네덜란드(14%)의 국제 콘소시움이 이란의 석유를 갖게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민중의 저항으로 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샤 왕조가 무너지고 미국은 ①거대한 석유 공급지이자 ②대소 전진기지이자 ③중동지역의 커다란 군사기지이자 ④엄청나게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구매자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 이라크의 반미투쟁을 지원한다는 등의 명분을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며 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 군대인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명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구요.

3) 이라크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투르크의 지배 지역이던 이라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 갑니다. 1932년에 독립을 하구요. 이라크의 석유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제국들이 후루룩 잠잠하다가 1973년에 국유화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다음해인 1980년에는 미국의 부추김과 지원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어 1988년에 끝이 납니다. 1990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다음 해인 91년에는 쿠웨이트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영국 등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인 대량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90년부터 03년까지 미국과 유엔은 진행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 사회기반 시설 파괴 등이 벌어져 또다시

42) 아프가니스탄은 이란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란부터 그 왼쪽을 중동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강 비슷한 셈 치지요.

이라크인 대량학살이 벌어집니다.

03년에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9.11을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물론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것이나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이 관련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03년 침공 이후 또 수 십 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은 까닭과 주체를 알 수 없는 폭탄 공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점령군과 이라크 저항운동 사이에 전투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7년 8월22일까지 미군 3천7백 여 명을 포함해 약 4천 명의 점령군도 사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이라크 정치는 미국과 점령세력 그리고 무크타다 알 사드르와 반점령세력 등 여러 가지 힘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누르 알 말리키 총리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구요.

아무튼 미국이 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쫓겨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9.5%, 매장량 순위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의 석유를 잠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석유 먹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레바논

다른 중동지역과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의 땅 따먹기에서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는 프랑스가 쫓겨 합니다. 1943년에 독립을 하구요. 1948년에는 갓 국가 건설을 선포한 이스라엘과 1차 중동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오니스트들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레바논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67년에는 이스라엘이 3차 중동을 일으키자 또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레바논으로 모여 듭니다. 레바논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 들자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주요한 거점이자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침공 사례 몇 가지를 보면 ①68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공격하여 비행기 13대 파괴 ②78년 침공으로 286,000명 가량의 난민 발생하고 주택 6천 채 파괴 700여명 사망 ③82년 6월 침공으로 1만5천명 가량 사망, 9월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난민 1~3천 명 사망, 레바논 남부 지역 점령 ④93년 침공으로 120여명 사망하고 50만 명 가량의 난민 발생 ⑤96년 침공으로 15여명 사망하고 35~50만 가량의 난민 발생 ⑥헤즈볼라 등의 투쟁으로 2000년에 레바논 점령지에서 이스라엘 철수 ⑦2006년 침공으로 1천2백 명 가량 사망 등입니다.

그래도 중동인데 미국과는 관계없나구요? 이스라엘과 관계있다는 것은 바로 미국과 관계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8년 처음으로 미군 1만5천 명 가량이 아랍 민족주의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에 파병됩니다. 그 이후에도 레바논 우파들을 계속 지원하여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레바논 좌파, 이슬람 운동 등과 싸우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레바논에 대한 시리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의 암살을 계기로 정치 공세를 퍼부어 시리아군이 레바논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현 레바논 정부와는 대테러전쟁과 자본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짝짜꿍 하고 있습니다.

5)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잠수신 지역으로 영국은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 시오니스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민족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1차 중동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78%를 골격 한 뒤, 67년에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공격하여 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3차 중동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22%(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 시리아 땅인 골란고원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의 대 이스라엘 지원 정책은 보다 강화됩니다.

87년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파다(민중항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과 미국은 투쟁을 무마하면서 새로운 지배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평화협상입니다. 예를 들어 93~95년 사이에 맺어진 오슬로 협정은 협정에 서명한 사람들에게는 노벨상을 안겨 주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 통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억압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총선에서 하마스가 집권당이 되자 미국+EU+이스라엘은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봉쇄, 군사공격 등의 방법을 사용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과 파타 등에게 돈과 무기를 주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2. 제국의 역사를 넘는다는 것

1) 강하지만 절대적이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 제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은 중동 지역 민중들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주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01년 탈리반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7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중북부 지역만 장악한 채 전투에서는 탈리반과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테러리스트 지원 등의 명분으로 정치적·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 공격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란이 ‘엿 드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는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중심으로 오지게도 팔 안 듣는 것들이 떠억 버티고 있으며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 정당이나 조직들도 미국에게는 문제입니다.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해 07년에 미군을 증파하여 16만 명 규모로 만들었으나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고 미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군사력이라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헤즈볼라를 박살내려고 했으나 06년 전쟁에서는 오히려 패배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해 봤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 했구요.

미국이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 번 움직이며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미국이 승리하겠지 하는 딱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스페인이나 영국 제국주의가 그랬듯이 미국 또한 제 맘대로만 할 수는 없어서 미칠 노릇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제국주의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는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국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허물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2) 제국이 만든 세계관 넘기

이라크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미군의 철수입니다. 종파간 폭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은 미군 주둔의 명분일 뿐 오히려 미군의 존재가 이라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점령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미국이 당장에 빠지면 이라크가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정치 선전과 제국이 만든 세계관의 영향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라크에서 그들이 말하는 ‘자살폭탄테러’가 벌어져 몇 명이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의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주둔해야겠다는니, 어떤 미국 의원은 철군을 주장했다는니 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이라크에는 두 가지 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살폭탄테러와 미국.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자살폭탄테러만 남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국이 만든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제국의 부재=혼란’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사회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보수 언론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많은 조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점령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아나 수니 정당들도 미국의 점령 정책에 고분고분 하지 않고, 무크타다 알 사드르 등이 주도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시아와 수니 사이에서 종파간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바스라 석유노조와 같은 노동운동은 미국의 석유 꺾먹기를 막기 위해 활동 중입니다. 미국은 물론 활동가들마저 그리는 ‘무능력한 이라크’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라크인들은 자신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면서 부르카를 벗기고 여성들을 해방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직접 미국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치고 있고, 가족과 이웃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이 탈리반 대신에 북부 동맹과 같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던 집단들에게 권력을 넘겨줌으로써 여전히 여성들은 억압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억압 받는 누군가를 구원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들입니다.

이란의 중산층 여성은 1979년 혁명 시기에 베일을 쓴 노동계급 자매들과의 연대를 표방하기 위해 스스로 베일을 썼다. 그렇지만 현대 이란에서 강제적인 이슬람법은 모든 이란 여성들이 베일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베일을 쓰는 데는 동일한 이유가 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란 여성들이 베일을 쓰는 것에 접합된 구체적 의미는 두 경우의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히 다르다.⁴³⁾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억압을 받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제국주의는 아랍/중동/이슬람권 여성들을 히잡과 같은 것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그렇듯 각 사회나 국가마다 여성 억압의 형태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잡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단일화 한 뒤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해방자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는 바다를 넘어 먼 곳을 용감하게 정복하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국 및 세계의 여성들을 억압합니다. 결국 제국주의는 여성운동

43)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59쪽

이든 노동운동이든 흑인운동이든 민족운동이든 해방과 관련 있는 모든 운동을 억압합니다. 만약 제국주의가 여성해방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전쟁과 점령 그리고 여성’ 이라고 하면 여성을 단순히 ‘더 비참한 피해자’ 라고만 규정한 뒤 해방을 기획할 때는 ‘여성인권’ 이라는 하위 구성요소로 한 쪽지 살짝 끼워 넣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운동이나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피해자임과 동시에 제국주의 및 자국/자민족 내부의 남성 억압에 저항하는 주체의 위치에서 해방운동은 기획되어야 합니다.

3.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 관한 몇 가지 생각

1) 누군가 몸이 아프다면

누군가 몸이 아프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 방법은 아픈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검사나 연구를 통해 찾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약이 필요한지 침이 필요한지 운동이 필요한지 등 아프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나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보면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마음이 앞서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의 중심에 억눌린 이들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실천하기보다 자기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집회를 열어 이것이 얼마나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압박 했느냐 보다 ‘몇 명 왔지?’ 에 더 관심이 쏠린다거나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는 호숫함에 빠지는 경우들이죠. 의사가 환자의 건강보다 오늘 몇 명 진료했는지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 반제국주의 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또는 반미 운동은 NL들이나 하는 운동? 평택 투쟁할 때 ‘미군철수’ 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 정말 ‘반미’ 나 ‘미군철수’ 는 NL들이나 하는 주장입니까?

여러 가지 반제국주의 운동 가운데서도 민족해방운동의 경우는 민족주의 경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민족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이 자민족만의 단일성이나 순수성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으로부터 한민족이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의 대안으로 한민족, 단일민족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면 당장에 이주민들의 위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민족해방을 내세우면서 남성 중심의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부정적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민족주의의 길을 걷지 않고 성/민족/인종/계급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방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국제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반제국주의 운동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은 운동 스스로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모델로써 프랑스 혁명이나 68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얘기하는 경우는 많아요 쿠바 혁명이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성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대해서는 웬지 알아야 할 것 같지만 미국이나 프랑스가 어떻게 중동이나 아프리카 여성들을 억압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몇 십 만 명이 모여서 이라크 점령 중단을 왜 치면 '우와, 저 브라' 하지만 이라크에서 몇 십 만 명이 모여서 점령 중단을 외치면 그냥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운동의 이론이나 활동가들의 사고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사상과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좌파나 이론가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공부는 해도 프랑스가 어떻게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알제리인들을 학살 했는지, 프랑스 지식인들이나 좌파들이 어떻게 알제리 지배를 모른 채 하거나 외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프랑스 지식인들이나 좌파들이 자신의 한계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한국의 운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의 뿌리를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생겨나고 성장한 사상이나 이론에 두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중동에 성평등 운동은 없는지, 아시아에는 우리가 사회적 대안이라고 생각할만한 실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제도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열정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역의 민중들과 연대하는 방법도 익히면서 반제국주의 운동도 더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

3) 국제주의

㉮ 인간 동등성

국제주의의 기본은 인간 동등성 또는 보편성입니다. 인간 동등성은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보편적 존재로써의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삼성전자에서 년 간 수 천 만 원씩 임금을 받으며 사는 노동자와 벽들을 굶는 파키스탄 아동 노동자들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사랑하면 기분 좋고 헤어지면 슬프고, 졸리면 자야하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도 슬픔도 얻는 존재이고, 때가 되면 누구나 죽는다는 존재로써의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노동자가 한국에만 있나요?' '여성이 한국에만 있나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다만 우리의 사고가 국가/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부여를 달리할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지지해도 이라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정당에서 여성할당제는 추진해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열심히 비난하는 좌파나 평화주의자들도 비슷하죠. 팔이 안으로 굶는다고 하듯이 헤바논인 천 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국인 1명이 죽는 것에 더 마음 쓰이는 겁니다. 모두들 민족적/국가적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㉔ 세계체제

개별 국가와 개인이 존재함과 동시에 국가와 개인은 세계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IMF나 FTA만 봐도 그렇구요. 그리고 지금의 세계체제는 미국이 맨 꼭대기 자리, 유럽러시아중국 등이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계체제적인 시각에서 세계 또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990년대 말에 IMF가 터지고 나서야 ‘야, IMF가 뭐야?’ 라고 물었던 상황은 그만큼 세계체제에 대한 생각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체들이 정세분석을 할 때는 세계 정치경제를 분석하다가 실천과제를 선정할 때는 한국의 자본이나 국가, 사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자료집이나 정세토론을 할 때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구요.

㉕ 대안의 ‘세계’, ‘세계’의 대안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를 좌파이거나 또 다른 무슨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주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자체가 약간 쪽팔리는 일 아닐까요. 아무튼 모두들 대안, 대안 하는데 과연 누가 만들어서 누가 살아갈 대안사회인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안이 한국인들이 만든, 한국인들만의 대안 사회는 아닐까요? FTA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의 사례는 한국을 위해 참고할 부정적 사례이지 멕시코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개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계체제라 해도 모든 국가와 개인이 오직 세계체제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향을 주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든, 제국주의든, 성차별주의든, 전쟁이든, 환경 파괴든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세계인으로써의 전망과 시각을 가지고 실천하면 더욱 좋겠지요. 민족국가나 국민국가 단위의 대안이 아니라 세계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구상하는 거지요.

말은 좋은데 가능하겠나요?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때는 한국 군을 파병한다고 하던 때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온갖 일을 했었잖아요. 국제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지금부터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구걸도 않는데 적선? - 구호활동과 현장활동에 대해서

장애인 운동에서 하는 말 가운데 ‘시혜와 동정을 거부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를 바라볼 때 ‘불쌍하니깐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라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난리통에 사는 게 어려우니 그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운동을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이 ‘지원 사업은 안하나요?’ 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지원은 물론 돈이겠지요. 팔레스타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에게 휠체어나 보조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 하니깐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다른 사회 특이나 흔히 말하는 ‘제3세계’ 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동정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열등하거나 불쌍하고 우리는 우등하거나 별 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미국이 이라크인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장난삼아 던져주는 겸파 한국인들이 불쌍하다고 건네주는 빵은 겉모양은 달라도 그 속은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 6.25 이후에 선교사들이나 구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들이 와서 빵 주고, 옷 주고, 영어 가르쳐 준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특히나 의도했던 아님든 돈에 사람을 종속 시키는 경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입니다.

전 구호 활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고, 추운 사람은 입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일 터졌다고 몇 푼 싸들고 가서 뿌린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원에 라면 상자 사들고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것과는 최소한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이라크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그들은 억압과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와 해방의 주체입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이라크 상황이 변해서 석유를 미국이 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몇 천 만원 들고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들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해서 우리가 나눠 쓸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삶에 대한 열정과 끈기,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호가 아닌 다른 현장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둘러치고 있구요. 그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이라크에 갈 수 없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라크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의 ‘안정’이란 혹시 울지는 않지만 미국의 완전 점령을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라크의 상황은 아주 유동적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라크인들 앞에서 미국의 완전 점령을 가정하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구요. 마치 이랜드 노동자들이 한창 투쟁을 하고 있는데 경찰 진압 이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려는 분들일수록 어떤 자세로 갈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5) 폭력과 비폭력, 대규모 집회와 소규모 행동

① 이라크인들이 총과 박격포를 들고 미군과 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장투쟁만이 이라크 해방을 위한 길입니까? 그러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은 들러리입니까? 평화운동은 반드시 비폭력운동이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비폭력은 어떤 입장에 처한, 누구를 위한 비폭력입니까?

전 무장투쟁만이 길도 아니고, 비폭력만이 길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 식칼은 좋은 도구가 되지만 열 받는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용기가 됩니다.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해

서 돈 더 낸 것을 발전했으면 그 가게를 찾아 가서 자초지종을 차근히 설명하면 되고, 옆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경찰을 불러 잡아야 합니다.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의미와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폭력이나 비폭력이나를 놓고 논쟁하기 보다는 어떤 때는 무력을 가지고 싸우고, 어떤 때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⑩ 규모 큰 집회, 언론에 나올 만한 기자회견 중심으로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 형식적이며 감동도 없으니 소규모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저쪽을 향해 ‘재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자기만족적인 운동을 하는 것 같애.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야. 저런 애들은 자본주의를 변혁한다는 생각 같은 것은 없고 그저 지네들 끼리 저러는 것을 즐길 뿐이겠지’ 라며 욕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재들은 맨날 집회 아니면 기자회견 밖에 몰라. 집회에 가 봐. 맨날 똑같은 인간들끼리 무대에 올라가서 떠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맨날 이러니깐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지” 라며 욕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큰 집회 많이 해서 한국군 파병 막았습니까? 소규모여야 사람들이 모이기 편안하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까?

대규모 집회와 소규모 행동,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을 모으고 정부를 압박할 때는 대규모 집회가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소규모 행동이 좋은 방식이겠지요. 운동하는 데는 둘 다 필요한 거구요.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대중들은 그저 동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집회하는데 앉아서 연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이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깐요. 또 소규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재들은 자기만족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운동의 과정이 당위성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결을 좀 더 세심하게 읽고 표현하며 모아가자는 것이니깐요.

우리가 운동을 하루 이틀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에 매달리기보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첫마음 그리고 연대성

같이 할 수 없는 건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원칙이 다르고 기본 방향이 다르면 당연히 같이 못하는 거겠지요.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거시기 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솔직하게 느끼는 순간은 단체나 개인들이 운동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때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예를 들면 이러나저러나 비슷한 일인데 내가 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니가 하면 쓸데없는 짓인냥 하는 거죠. 운동에 대한 고민의 깊이나 방법이 크게 달라서가 아니라 같이 하기 싫으니깐 ‘난 나와 달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이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 불리기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방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구요, 우리 모두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첫마음과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잘 나가고 싶고, 언론에 이름 한 번 더 나고 싶고, 내가 마이크 잡으면 꼭 필요한 말이고 내가 마이크 잡은 또 똑같은 소리고 등등등.

우리는 입으로는 '연대' 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연대' 가 무슨 약제사리입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는 연대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꽤거리 짓는 거 말고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턱대고 욱부터 해 대는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에게 연대성이 강합니까, 꽤거리 정신이 강합니까?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밝은 것은 첫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 그대로 억눌린 이들의 해방을 위해 더 넓고 커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7) 언론만 보지 말고 인간을 봅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붙잡히고 나서 많은 단체들이 무언가를 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이런 저런 의견을 내거나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한국인들이 붙잡혔다는 보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 한국인들에게 다가오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말은 참 다릅니다. 보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을 별로 생각지도 않았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보도 이후에는 운동 단체들 사이에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경우 운동의 주제를 누가 선정한 겁니까? 분명히 2001년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2007년에 한국인 피랍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갑자기 단체들의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얘기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점령과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 횟수가 적어지면 아프가니스탄도 곧 많이 잊혀지겠지요. 이라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더 마음을 쏟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언론에 보도가 되든 아니든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행동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동의 주제를 선정하면 좋겠다는 거구요.

8) 대안 정보 운동

청계천이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그다드의 상황은 언론을 통해 나오는 얘기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만약 바그다드의 상황을 이상하게 비추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도 이상하게 흐르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언론들이 이상하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대안이 되는 정보를 우리 스스로 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9) 사람들 속에 살아 있는 운동

가끔 보면 우리의 습관이 그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익숙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끼리끼리 있으니깐 마음도 잘 통하고 무언가를 하기도 수월하죠. 그러다가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걸까?' 라고 생각하구요.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평소에 끼리끼

리가 아닌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운동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10) 공부 합시다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읽었다고 으스스대거나 실천도 하지 않을 것을 머리에 잔뜩 채워 놓고만 있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책만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활동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제대로 된 사회로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배를 지고 산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공부 합시다!

저문 강에 삼을 짓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짓으며
거기 슬픔도 찌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구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짓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사회 운동 포럼



환경운동, 관계맺기와 확장하기

기획

1부 :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 현황과 과제”

사회 : 최정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 최근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체를 구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대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음으로서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이 연계해 감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시간 : 2007년 9월 1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3호

- 발제 1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평가와 과제 -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와 노동운동의 만남”

-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 전력산업구조개편,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란, 에너지기본권과 기본법의 제정,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이 이어져 왔다.
- 그동안 있었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견지해야 할 연대의 원칙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발제 2 : “물사유화공동행동 평가와 과제 - 물사유화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노동운동의 만남”

- 박형모(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수돗물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며, 이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물산업육성을 둘러싼 계획이 나오며 물문제를 둘러싼 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
- 이어 물사유화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의 활동을 평가하며, 향후 공동투쟁에서 함께 극복해야 할 지점을 짚어본다.

지정토론자 :

- 만준관 팀장 (환경운동연합)
- 이준상 위원장 (발전노조 위원장)
- 백명수 사무국장(수돗물시민회의)
- 최준명 정책실장(문화연대)
- 기타 단체별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토론 진행

2부 : “환경운동의 확장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 사회운동포럼 생태분과를 준비하면서 그간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의
관계 맺기와 확장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끌어 간다.

○ 시간 : 2007년 9월 1일 오후 1시~오후 2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3호

○ 사회 : 최정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제 : 이현석(청년환경센터) / 수열(사회진보연대)

○ 발제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 선용진(문화연대)

- 발제자들의 짧은 발제(그리고 발제문) 이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

- 1부에서 발표했던 발제자, 지정토론자들도 함께 2부 토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

-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1부 발제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평가와 과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

신익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들어가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전환과 에너지산업의 사회공공성 쟁취를 목표로 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지난 2005년 6월22일 출범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전환이라는 개념도 어려운 것이지만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연대한다는 것 자체도 당시는 생소함과 아울러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런 만큼 조직출범까지는 어려운 고비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운동진영의 적록연대라는 마치 실험과도 같은 노동과 환경의 실질적 연대체를 우리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출범시켰다. 당시 운동진영 안팎의 시선을 모으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을 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구체적 대상은 에너지산업이다. 노동운동은 특히 98년 외환위기 이후 몰아 닦친 에너지산업 사유화-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동자의 생존권과 이윤과 경쟁이 아닌 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과제를 안고 있었다. 물론 당장의 시작은 생존권 사수라는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했지만 즉각적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지한 자기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는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환경운동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 대표되는 거대 에너지산업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로막는 반환경적 본질에 대하여 싸워왔다. 한국의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통제와 주도하에 공급과 성장위주의 정책이 계속되었고 특히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거대 에너지산업은 분명한 극복대상이었다.

이렇듯 각자의 영역에서 보아 에너지산업에 대한 입장과 태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극복방식이 어떠하였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공히 에너지산업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이미 동시에 각자 따로 바라보고 있었다. 각자 따로 바라보던 두 진영은 에너지산업 사유화-구조개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의 투쟁을 계기로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되었고 쌍방의 입장을 함께 얘기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세부적으로 이견은 있었지만 사회공공성의 문제에 함께 동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두 운동진영이 가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운동성이 그 바탕이 되었으리라 본다. 공공성에 기초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결국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출범 경과

:404:

2002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은 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정부의 공세적인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그 후 2003년부터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유화 정책에 대항하는 구체적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8월 공공연맹과 공공연맹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에너지대안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좀 더 구체적인 에너지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에너지정세와 한국의 에너지수급전망, 당시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와 이를 둘러싼 원자력산업의 문제, 에너지 산업 전반의 사유화 문제,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방폐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환경운동진영과 한국수력원자력노조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논의, 논쟁을 진행함으로써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각 쟁점에 대해 이전은 있었지만 사회공공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노동운동의 에너지산업사유화 저지와 환경운동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전환의 문제는 일정 정도 접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정책대안마련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관점들이 담겨졌다.

2005년에는 정부의 에너지산업의 시장화와 산자부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맞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에너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에너지기본법 대응에 나섰다. 핵심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하며 사무국을 독립시키고 노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참여를 보장할 것, 에너지산업의 시장화 정책 명문화할 중단할 것, 에너지기본권 개념을 명문화 할 것, 선연적이 아닌 구체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정책을 담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당시 단전조치로 인한 여중생 화재사망사건은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우리는 이를 인권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6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국제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출범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긴 시간 동안 에너지산업의 대한 많은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폭넓은 논의 뿐만 아니라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운동적 실천을 통해 현대의 수준을 높이며 만들어졌다.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쟁점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에는 만남의 전후 많은 이견과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과정은 곧 서로간의 이견에 대한 확인과 해소, 접점을 넓혀가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노동운동은 2000년 들어 전력산업 사유화-구조개편저지 투쟁을 하면서 환경운동 진영과 큰 감을 발전하게 되는 데, 즉 일부 환경운동 진영이 정부의 사유화-구조개편정책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찬성하고 있는 현

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갖는 사회적 폐해에 주목하고 있던 노동진영은 이러한 환경운동진영의 입장에 혼란과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환경운동의 입장을 근시안적이고 물계급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날을 세우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은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계급적 요구라고 보며, 한편 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성장 주역으로서의 자존심과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정당성이 훼손당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환경운동의 경우는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공급 위주 정책 중심으로 대규모 집중화 된 양상으로 발전하여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동떨어진 전력산업의 반환경적 폐해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노동운동의 의식 부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이 단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에만 머물러 있고 이미 거대권력화 된 전력산업의 반환경적 폐해를 묵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물론 일부라지만 차라리 사유화-구조개편이 그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실 돌아보면 노동운동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닦힌 사유화-구조개편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있기 전에는 자기산업에 대한 검토나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였다. 오직 산업의 성장과 발전 속에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외부로부터 강제된 변화에 직면하고서야 이 문제를 돌아본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 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소유자배 구조를 공공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과연 사회공공성이 실현이 보장될 것인지, 공기업 체제하에서 저렴한 요가에 보편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진전된 고민으로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환경운동의 경우도 에너지산업의 특성과 지위, 국내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를 포괄하는 자본의 음모, 사유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정책이 단지 지금 존재하는 에너지권력을 약화시킬 수 계기로 보았던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공공부문의 투쟁, 즉 발전노조의 원강했던 장기간의 투쟁은 두 운동진영을 연결시켰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노동운동의 경우는 현재 에너지산업의 지위와 그 공공적 성격에서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산업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고민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환경운동의 경우도 미래 만들어야 할 에너지산업의 바람직한 모습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지만 현재 에너지산업의 지위와 역할 및 그 공공적 성격에 주목하여 노동운동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었다.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시장화 저지, 공공성 확장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공동의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에너지체제전환 개념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이행, 사유화와 시장화 정책으로 왜곡된 에너지 산업구조의 올바른 재편, 에너지 기본권 및 공공성 확장, 이행의 핵심 과제로서 에너지 저소비 및 효율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에너지믹스 정책 결합 등 전반의 쟁점들이 포괄되었다.

환경운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이 그 성격상 수급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특히 산업종사자와의 동의와 연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현실적으로 동의해야 하고, 노동운동의 경우도 현재의 에너지체제가 이후 계속하여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체제를 직접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했다. 미래지향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해결방도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환경과 노동이 함께 찾는 것은 현재의 배치되는 점점들을 풀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 운동진영의 물리적 결합 혹은 물리적 외연확대를 넘어 노동운동은 친환경적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상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고 환경운동은 현재의 자본과 권력에 맞선 사유화-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의미와 이것이 미래 에너지체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운동진영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슈별 소시기 연대가 아니라 미래지향성에 근거한 지속적 연대운동이라는 데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환경과 노동의 만남에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항상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과 방폐장 건설에 대한 문제였다. 운동진영은 일반적으로 반핵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일정 정도 이견과 혼란을 보였다. 아니 그 보다는 환경운동을 제외하면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경향이 많았음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전력생산의 무려40%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수급의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연적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은 방폐장 건설과 맞물려 극단적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어온 주요이슈이기도 했다.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대단히 높으며, 위험시설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가치를 당연히 인정 받고자 하며, 자신들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자긍심으로 느낀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산업종사자인 노동자들에게 환경운동진영이 중심이 된 원자력발전 폐기주장은 깊은 상실감과 자괴감을 주었고 이는 자신의 노동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선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례로 핵폐기장 용어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검토와 운동적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환경운동은 직접적으로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반핵, 방폐장 건설저지 등 치열하게 현장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환경운동진영이 현장에서 항상 부딪힌 이들은 다름 아닌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다. 환경운동진영에게 현장에서 번번히 마주치는 원자력발전종사 노동자의 모습은 결코 그리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노동자에게는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환경운동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현장의 대치는 그 어떤 초보적 소통마저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두고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초기 만남과 대화는 그 태도와 입장의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고, 사소한 오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 보다 서로의 현실과 조건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문제해결에서 공동의 행동을 만들어나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 중단 혹은 폐기가 적어도 50여 년이 걸리는 장기계획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전제한다면 방폐장 건설이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처분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두 운동진영의 간부활동가들간의 논의만이 아니라 현장의 원자력노동자와 환경운동활동가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원전현장을 직접 함께 돌아보고, 원자력노동자의 노동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능했다. 물론 노동운동진영 전반 특히 원자력발전현장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이해된 것은 아니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 이 역시 끈질기게 진행해야 할 장기과제라고 본다. 물론 환경운동도 현재까지 공유해오고 있는 내용들이 환경운동진영 전반의 입장으로 모아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전제한다.

현실적으로 만일 정부가 원자력 폐기를 결정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폐기를 위한 시기와 과정, 경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장기적 계획 속에서만 가능하다. 장기적이고 점진적 이행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가질 수 있음을 본다. 해서 장기적으로 원자력노동자는 친환경적 에너지체제 전환의 문제와 더불어 산업의 재편, 노동현장의 새로운 재편을 고민할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외부로부터 강제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 역시 투쟁현장에서 부딪혀왔던 현장노동자의 조건과 인식수준에 근거하여 이를 변화시켜내는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현장노동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미래지향으로서, 현실적인 해결점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은 현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발전용량의 60%, 발전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일시에 중단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를 전제하고, 이에 따라 전환의 과정을 관련 노동자와 운동진영이 함께 모색해나가자는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동향

한국은 97% 이상의 에너지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세계 석유 수입 4위, LNG 수입 2위, 에너지 소비 9위의 에너지 수입 및 소비대국이다. 그런데 에너지산업의 핵심은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에 있다. 즉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필수재로서의 성격 탓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는 2000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여 배럴 당 25달러이던 유가는 2004년 하반기 55달러, 2005년에는 70달러까지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향후 고유가는 향후 계속하여 지속될 것이며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격이 불안정성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국으로의 등장, 남미 좌파 정권의 에너지 국유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인도의 에너지 대량소비 등은 국제에너지시장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화석 에너지의 고갈전망에다 국제에너지 질서의 변동은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가격과 공급에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는 이제 일반화되었다.

지금 세계각국은 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며 도처에서 자원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2001년 국가에너지정책(MEP, National Energy Policy)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안보 개념을 수립하였다. EU는 대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이다. 2019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총 에너지 소비의 12%, 총 발전량의 2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EU는 유럽 통합을 통해 에너지 시장을 통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 내 전력, 가스 등 망 연결을 높여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역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2004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는 에너지 정책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국가 공기업들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전을 개발하고 닥치는 대로 유전을 인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30에너지 비전에서 향후 가채년수를 석유 42년, 가스 64년, 석탄 164년으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비 OPEC 국가의 공급 능력 저하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향후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자원 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 분할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발전 6개사 간 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발전사매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 역시 LNG직도입 형태로 사적자본의 시장 진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수요 및 효율화 정책의 부재,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만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 통합적이고 장기적 에너지 산업 비전 부재,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사유화 시장화를 통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포기 등 전형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공공부문에 가해지고 있는 권력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격은 대선 이후 에너지산업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성과 독립성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단기적 측면에서조차 에너지 비전을 제시할 단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스럽다. 지난 해 산자부에서 제출한 “에너지비전 2030”에서는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효율, 친환경을 3대 기본방향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1/3(35%)을 자주 개발로 충당,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9%로 확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를 탈피하여 석유의존도를 35%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지만, 그 실효성 역시 의심스럽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과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는 2006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해야 할 최소한의 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유하였다. 첫째,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전제를 공유하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둘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단계적 이행계획을 고민한다. 셋째, 분할과 경쟁으로 왜곡된 전력산업, 가스산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한다. 넷째, 에너지체제 전환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등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와 공유는 에너지체제 전환의 문제가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서고 환경운동을 넘어 사회운동의 전반적 과제로 발전되는 출발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가스산업 사유화·구조개편에 대한 대응,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정리와 원자력정책에 대한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저소비 효율화 정책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에너지기본권 개념의 확립과 이에 따른 사회공공성 투쟁의 구체화 등의 만만찮은 세부과제와 씨름하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는 주로 공동학습과 공동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그 성과들이 하나 둘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출범 이후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의 정책담당자간 공동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더불어 시기별 사안별 이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고 낮은 수준이 나마 공동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6년에는 에너지체제전환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유럽현지 실사 작업을 진행했고 더불어 국내현장전화도 함께 수행하였다. 독일 등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 등을 확인하고,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단계적 이행계획의 정책적, 정치적 실현과정을 살펴봄과 아울러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연대모델을 조사하여 이를 실사보고서로 펴내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노동현장과 화력, 원자력 등 기저발전과 함께 풍력과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현장도 살펴보았다. 집단구역에너지나 민간자본으로 이양된 발전소를 전화하기도 하였다. 월성원자력 및 방폐장 부지를 전화하였고, 집단구역에너지 사업자인 케너텍, GS 파워, 지역난방공사 등을 방문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요이슈에 대한 공개정책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환경단체회원들과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책자형태의 대중적인 읽을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체제 전환 연구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대중적인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교육 및 만남의 장을 집중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환경운동이 노동조합의 현장조합원을 만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환경운동 활동가와 회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 연대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게 될 것이다.

2005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 시 우리는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한자리에 앉아 대안과 전망을 모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점하였다. 오히려 친환경적 미래를 선도하는 독일에서 온 초청인사조차도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작년 해외실사에서도 우리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반핵운동가와 원자력노동자가 같이 앉아 있다는 점 자체에 놀라워하는 시선과 매번 마주 해야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미래 지속과 성공은 단순히 환경과 노동의 연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차이와 이견, 숙제가 있지만 지난 2년이 넘는 시간은 우리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고 본다.

[1부 발제문]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통해서 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간 만남

박형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C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물 사유화의 파고가 닦치고 있다.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시작된 사실상의 물사유화정책은 지난 7월 16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으로 완성되어 공식 발표되었고, 수도법 개정 이후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수도 민간위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물 사유화의 흐름은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과 자본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이윤창출의 기제를 찾아나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IMF 전후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공공부문 사유화의 흐름 속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발전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물이라는 생태자원을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고 물이라는 기본적 공공재이자 권리를 팔살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 특히 공직사회를 축소하고 개편하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의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생태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권, 인권의 문제 즉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회공공성의 문제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미FTA 투쟁이 그러했듯이,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은 모든 부문에 걸친 문제이자 다양한 운동과 부문의 연대가 가능하며 또한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연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과 주체 간 상당한 토론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 내 시민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간 공동투쟁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C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의 배경

IMF이후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과 시장화·사유화 및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면서 많은 공공부문들이 사유화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를 이어받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상시적 개혁체제를 계승하면서, 경영혁신지침을 통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성해가고 있다.

정부는 ①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지자체 생산적 조직운영 ② 민간경험 활용으로 사무처리의 전문성·기술성 제고 ③ 경영혁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공공서비스 질 제고 ④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를 목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영역의 축소(지방공기업 설립) 및 외주화(민간위탁·파견·용역)확대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공기업 등은 물론 행정조직까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200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크게 2가지, '재정운용의 중점',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인건비감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물론 민간위탁이나 사유화가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모두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해 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할 것을 방향으로 정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가격보조"를 줄여나감으로써 복지의 축소, 행정서비스의 상공화 및 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행정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최소비용(인건비절감)·최대성과(노동강도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속에서 정부주도하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인 물마저 신자유주의 시장화논리에 맡기기 위한 사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 물산업육성 정책의 내용

지난 7월 16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5개 부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이하 물산업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용 방향은 수도사업을 포함한 물을 독립적인 산업이자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물(수도사업)을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라고 규정하면서 물을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물 전문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수도사업 구조개편인데,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소를 30여개로 통폐합하면서 민간위탁, 공사화 또는 직접 사유화⁴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64개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주로 소규모 시군)하거나 공사화(대규모 특광역시), 2) 통폐합하면서 몇 개 기업(공기업

44) 민간위탁은 상수도에 대한 소유를 지자체가 유지하되 운영권을 기업에 넘긴다는 것이며, 공사화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유화'는 위탁, 공사화 등 물을 시장화하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위탁' 및 '공사화'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보다 협소한 의미로써 운영권 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사기업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든 국내외 사기업이든) 간 상호 경쟁 유도하고, 3) 궁극적으로 완전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노골적인 ‘물 사유화 정책’ 인 것이다.

사실, 이번 발표된 물산업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던 흐름이 총괄적으로 체계화되고 공식화된 것이다. IMF 이후 공공부문 사유화 흐름에 맞춰 정부는 2001년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에 다시 한 번 개정하여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기타 공기업 및 사기업도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물’ 이 ‘블루골드’ 라 불리면서 초국적 자본의 새로운 이윤창출 도구로 인식되자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물산업 육성방안’ 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전체적인 물 산업화, 사유화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물산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지자체들은 서둘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공문을 시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간위탁을 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내년 초에는 물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물을 산업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물 사유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굳이 세세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과 해외 사례를 비추어 현재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 ① 위탁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앞 다퉈 요금현실화(현재 지자체들은 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윤논리에 입각해 사기업이 수도를 운영할 경우 요금은 상승을 넘어 폭등할 것이다.
- ②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와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실제로 논산의 경우, 위탁된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공사화에 앞서
- ③ 지자체는 위탁기업에게 매년 수십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정적자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상충된다.
- ④ 농어촌지역으로의 보급 확대나 신규투자,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는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다. 즉, 기본 인프라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위탁기업은 운영하면서 이윤만 뽑겠다는 논리이다.
- ⑤ 이윤논리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리 소홀, 오염 등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 ⑥ 지자체 위탁 과정이나 현재 중앙정부의 물산업 정책 추진으로부터 시민사회는 배제되어 있고, 위탁 관계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기업 간 유착과 부정비리가 증가할 수 있다.
- ⑦ 위탁되면 더 이상 국가/지자체가 ‘독점’ 하는 공공서비스가 아니기에 FTA에 귀속된다.

C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결성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는 2002년부터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투쟁을 해왔다. 그러다가 정부 정책이 보다 노골화, 가속화되는 속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 2006년 9월 “물 사

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을 제 단체에 제안하여 결성하였다. 그 이전에 전주시 민간위탁 투쟁하면서 지역 내 제 단체들 간 연대체를 구성하여 저지한 바 있으나, 공동행동은 조합(중앙) 차원에서의 연대의 확장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행동에는 현재 관련 노동조합들(공무원노조와 공공노조), 빈민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2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공동행동은 주로 워크숍과 교육 등 물 사유화의 문제를 제 단체 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8.22 물의 날 기자회견과 대시민 선전전 등의 활동을 해왔다. 8월 30일에는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정부의 물산업육성 정책과 물공공성에 관한 대 국민토론회' 를 개최, 환경부 등을 섬외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C 공무원노조의 물사유화 저지 투쟁의 의미와 성격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물 사유화 저지투쟁은 물 분야에 종사하는 16,000여 공무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위협에 대하여 이를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생존권 사수투쟁으로서 공무원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 권리사수 투쟁이다.

또한 물 사유화를 통한 공공성 약화와 파괴로 초래될 환경권과 건강권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공공성 사수 투쟁이다

즉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부터의 생존권위협에 대한 계급적 운동으로서의 생존권 사수투쟁 이면서 동시에 공공성파괴로 인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공통된 특징으로 계급성과 공공(사회)성 양 측면에서 직간접적 당사자로서의 공무원노조의 자기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C 전국공무원노조의 물 사유화 대응과 지역에서의 연대운동의 경험

이미 언급했듯이,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당시부터 바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해왔는데, 특히 2004년에 있었던 전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 노동조합들과 농민회, 시민사회환경단체, 정당이 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위탁이 임박한 인천, 당진, 나주에서도 지역단체들과 함께 연대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투쟁 과정 속에서 지역단체들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함께 공동투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단지 생존권과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의 요구뿐 아니라 요금폭등, 환경파괴, 자치민주주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런 공동투쟁의 성과로는, 지역 연대투쟁을 통해 비교적이 신생노조인 공무원노조는 조직 내외적으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전주시의 경우처럼 광범위하고 여러 주체들 간 연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물 사유화(민간위탁)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물사유화 저지 투쟁이 당면한 사안에 대해 일회적인 연대 투쟁에 머물렀으며, 이것이 지역운동,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 운동(조직)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면서 매몰됐으며, 이는 장기적인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자의 운동적 기반이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목적의식적 연대 운동으로서 자기 고민이 부족했던 측면에 기인한다.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내 사회운동으로서 전망이 부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C 물 사유화 공동행동을 통한 환경운동과의 만남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적 물질 토대 속에서 자본에 대항하면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획득하고 이를 확장한다는 공세적 측면과 이를 유지하려는 저항적·방어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급속한 신자유주의의 확대 속에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기본권 위협으로 현재 더욱 방어적 운동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운동의 집중과 노동운동의 확장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노동권 확보 투쟁은 자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넘어서는 제반 진영과의 연대전선이 확장되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대중적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로서의 자기이해와 요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으로의 모색과 실험과정을 통한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세우고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자기중심적 이해요구를 넘어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강화 측면에서는 문제의식과 초보적인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고유의 역할을 넘어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 운동자체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반 운동진영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공동대응의 모색은 타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려져 있다.

공무원노조의 연대활동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안적, 지역적 연대에 더욱 밀착되어 있으며 연대활동 자체가 주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전국적 분포와 공무원조직의 업무자체가 공공부문을 거의 망라하고 있는 공공행정서비스 업무적 속성에 기인한다.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역시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노조의 고유활동이자 주요한 연대 활동으로 공무원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물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사유화(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 환경권과 건강권 등의 약화가 결국 지역주민들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으며, 이런 문제의식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또는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이해와 맞닿으면서 연대망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노조로서의 공무원노조와 환경운동은 물을 통한 사안적 만남이긴 하나 일상적으로도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C ‘공무원’ 노조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극복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직사회 재편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사회 전반의 공공적 가치와 환경정의를 지키려는 공무원노조의 물 사유화 저지투쟁은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의미에서 계급적 운동일수 밖에 없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조응하는 자본과 정권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전파와 이에 물적 강요 속 이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기본적 권리 확보 운동을 노동진영의 협소한 계급적 이해관계로 몰아넣고 이를 고착화시켜가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현실 노동운동이 극복하고 실질화 시켜내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이를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저항은 자본과 정권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은 사실상 지난 수십년 간 독재정치와 발전주의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공무원’ 이란 이미지를 유지·확대하면서 이를 왜곡하고 일반 시민사회와 차별되는 이데올로기 생산 및 전파와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왜곡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무원노조 자체는 물론 제 연대단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즉 공무원노조의 기본적인 정당한 활동이 철밥통 지키기, 자기밥그릇 챙기기, 변화와 개혁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무엇보다도 과거 폐쇄적이고 반민중적인 공무원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떨쳐 내고 새롭게 민중적 행정

을 구현하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노력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공무원노조 자신의 당면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투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통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 투쟁을 받아 안고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이고 왜곡된 이데올로기 공세와 한편으로 공무원노조의 구조에 비해 이를 관철시킬 현실적인 역량의 한계, 또 이를 받아 안고 현실적인 전망을 만들어야 할 제 단체들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적인 사고 역시 솔직히 존재하는 것이다.

C 사회운동으로서의 물 사유화 저지운동

사회운동(환경운동)의 기본적 반대, 저항과 대안운동을 통한 공공성 환경성 보편적사회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의 전환과 분화과정 상에서 환경운동 내부의 운동의 분화와 차이는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운동과의 만남에서 이 역시 처한 현실적 조건과 상태에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것이 노동운동이라면 현실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추구가 환경운동 속에 내재된 속성일수 있다.

물 사유화를 통한 공공노동자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직접적 이해 속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물값 폭등, 수질 저하 등 시민사회의 현실적 우려와 지구생태계 파괴, 환경악화 등 공공성(환경권) 확보라는 보편적 사회가치 추구에 대한 상호침투를 통한 공동의 행동과 활동을 전개할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환경운동의 저항적이며 환경권 확보,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의 기저에는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되어 투쟁으로 나서면서 생존권적 투쟁은 지역주민운동으로, 또는 공동체적 운동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주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넘어서는 공공적, 환경적 가치를 위한 사회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 왔듯이

물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은 단지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사수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 공공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작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 물 사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물사유화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며, 언론을 통해 논쟁이 되면서 일단 공사화를 한 다음에 사유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상수도 공사화사유화 계획과 함께 발표된 것은 상수도 노동자 수백 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다.

한 마디로, 수익성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울시의 이런 계획에 대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응과 대안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수호하면서도 보다 공공적이고 친환경적인 상수도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 되면 이는 올바른 대안이 아닐 것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만들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C 극복과제

노동운동 측면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위협에 맞서는 투쟁을 넘어 공공성확보(안정성, 환경성)라는 사회일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물사유화 저지투쟁은 당장의 물사유화 저지를 넘어선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쉽게도 공공성확보라는 가치이면에 당연한 기본적 사안이긴 하지만 일자리 사수라는, 혹은 철밥통 지키기라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정권의 의도된 왜곡과 공무원사회의 상대적 안정성속에서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더욱 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관료주의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공무원 사회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열어가는 공무원노조라는 이중적 잣대 속에서 존재되어 나타나는 공무원 사회(노동자)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공무원노조 본연의 노력과 이를 공동으로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환경단체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광범위하게 만들어가면서 왜곡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단순히 자기 노동권, 생존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안과 혁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길이며 동시에 자기변화와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통한 공무원노조 존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방안일 것이다.

환경생태적 측면

물사유화 저지에 관련한 당면한 생존권적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노동자들이 일차적이고 주체적 동력일 수밖에 없다. 안면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시 해당 지역주민들이 운동의 주 동력이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 내었듯이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자기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절박한 자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기요구가 철밥통 지키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마치 신자유주의 정권의 공직사회 경쟁과 효율성 논리 이면에 숨겨진 공공성 약화와 환경성 파괴라는 본질적 요인이 공무원조직의 부정적 인식과 대비되어 경쟁과 효율의 공공성 파괴논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자기노력과 과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 보편적 가치로서의 환경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가 충돌되는 지점에 있어 이는 환경노동 상호의 이해와 고민·침투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환경운동 단체에서는 환경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절대다수 노동자의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별개의 것인양 인식하는 경향, 이를 자기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는 경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인하는, 또 이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자본과 정권의 환경생태적 제요소 파괴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둔감한 채 연대운동의 동반자로서의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파트너십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는 환경운동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일반화 과정을 통하여 보편적 가치로서의 친환경적 사회를 추구한다는 지향점에 있어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진영과의 사회적 연대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은 반환경적 요소극복과 친환경 사회건설을 위한 운동주체의 확장측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C 연대운동의 모색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친 환경, 생태적 운동을 자기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 환경관련 단체나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무원노조로서는 운동의 주체요 중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환경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하는 일반국민 또한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물 사유화 저지투쟁은 운동의 중심과 주체를 묶어주고 피해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투쟁의 한 주체로 나서게 하는, 즉 각각이 처한 위치와 조건이 다름에도 자연스럽게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이자 연대의 고리로서 작동되었다.

또한 이는 각각의 자기운동의 고유과제를 넘어서 지역으로, 공동체적으로 묶여지고 연대활동을 통하여 가시적 성과 외에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방식으로서도 연대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운동을 넘어서는, 자기운동이 상대운동으로 침투되는 인식의 확대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연대 운동임을, 또한 연대운동은 사안적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으로, 공동체적 운동으로 승화되고 발전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 연대가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물사유화 저지투쟁을 통해서도 보듯이 현실 운동은 사안적 연대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끝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단면화 되어 관계와 상호침투성을 찾지 못하거나 찾으려하지 않고 있는듯하다. 이는 자기운동의 성장과정과 배경 또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속에서 제약을 받고 있거나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동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개별적 요소로서의 운동방향과 과제가 우리가 추구 하는 보편적이고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확인한다면 각각의 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 없이 소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이 야만과 광란의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과정으로서의 연대활동은 상호 신뢰회복과 구체적이고 실천적 연대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연대만이 실질적인 투쟁의 힘을 발휘하고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소위 조합주의를 넘어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노동운동 내 활류시켜야 할 것이며, 환경운동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라는 계급적 가치를 생태적 가치와 점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사유화 투쟁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공무원노동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운동을 통한 생존권 사수만을 주장 하지 않는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배경 속에 드러난 관료주의와 행정권의주의의 발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신자유주의 공직사회 도입프로그램에 의한 행정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공공성 파괴로 점철되어질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부정적 요인들을 발전하고 이를 막기 위한 운동으로의 질적 전환이 공무원노동운동 속에서 운동을 통하여 승화되고 스며드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으로 인한 구조조정 위협과 공공성파괴로 인한 반환경적 영향과 고스란히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부 발제문]

환경운동의 확장을 위한 제안

이현식(청년환경센터 대표)

1. 현실과 이상사이

“우리 노조(혹은 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환경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부터 찾아야지요.”

기후변화, 각종 환경사고, 아토피 등 환경장벽의 급증...

전세계가 이러한 환경문제로 시끄러워진 것도 벌써 몇 년이 되었다.

보수적 신문 조선일보가 환경문제를 논한다며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던 것도 벌써 10년도 넘는 일이고, 웰빙이란 단어가 불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새만금 같은 대형국책사업도 “친환경 건설” 이 되고 핵발전술 주입무로 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친환경에너지기업” 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누구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얼마 전까지 환경문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쟁 아닌 논쟁⁴⁵⁾을 벌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 는 이와 같은 질문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환경운동과의 관계맺기와 확장하기” 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만큼은 현실을 짚어야 할 것 같아 이 예를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로 시작된 관계맺기는 대부분 별로 진전되지 못한 채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리곤 한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또 다시 몇 년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

45)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꽤 많이 있었다. 일부 급진적 좌파를 중심으로 환경문제(그리고 환경운동)의 자본친화성, 더욱 시급한(!) 투쟁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환경운동의 불필요함(혹은 부수적임)을 강조하는 논쟁이 이어졌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계급적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깊게 살펴보았다면 손쉽게 풀렸을 이와 같은 논란은 시민운동과 다른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던 논쟁이었다.

기도 한다.

“환경문제를 다루셨으면 하는데요.”

“몇 년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전임자가 한 것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시 결과는 비슷하다. 몇차례의 만남과 회의, 이후의 성과로 남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단지 해당 단체(혹은 노조)의 문제로만 삼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와 이 동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본은 이 지점을 잘 잡아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함’, ‘내가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 ‘나와 내 가족은 환경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도 조금더 낫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이러한 것은 웰빙이라는 새로운 코드로 시장을 개척해 낸 치밀한 전략으로 나타났고, greenwashing⁴⁶⁾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감추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진보진영의 준비는 그렇지 못하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첨예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은 언제나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가고 있으며 -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대부분 자본 vs 반자본의 전선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 - 뚜렷하지 않고 결론나지 않는 논쟁을 통해 환경문제는 “그냥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통일운동진영과 개혁진영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좌파운동진영 내에서조차 “핵발전(신규발전소, 북한 경수로 지원)”, “핵무기(북핵실험)”, “국책사업, 개발사업(새만금, 천성산)” 등에 대한 입장 등 사안이 생길때 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과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적록동맹”, “평단의 정치와 관계맺기”

조금은 당위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명제들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실에 대해 고민을 풀어가는 것은 “환경문제는 단지 환경운동가들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흐름들로 나가야 되기 때문일 것이다.

2.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과의 만남.

환경운동과 진보운동 -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등과의 만남은 1990년대에도 적지 않게 있었다. 주로 술

46) 녹색, 친환경을 뜻하는 green 과 회반죽, 숨김을 뜻하는 whitewash에서 따온 wash의 합성어인 greenwash는 환경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치부들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산과 창원 등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993년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운동, 1995년 한국타타늄공장 건설저지운동, 1998년 한화 불법폐수방류진상규명 활동 같은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해당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활동을 펼쳤던 사례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함께 연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들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현안 중심의 - 공동대책위 활동 -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000년 ASEM 대응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책위이외에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전력노조 파업을 계기로 환경운동진영과 전력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 나간 사례(이는 이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시발점이 된다.)나, 물사유화문제를 중심으로 한 물사유화공동행동, 철도안전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철도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나타나는 운동 연대의 분명한 차이점은 과거 사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라는 기본 질서는 그대로 둔 채 단기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전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에너지체제전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이 물산업육성정책과 물사유화 반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네트워크는 또한 과거의 연대기구와 달리 노동조합의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초창기 연대기구가 해당지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지역적 수준에서 연대를 펼치던 것과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중앙조직의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다보니, 그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이 중심이 되며,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부조직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는 - 다소 상층단위 중심의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의 경우에는 중앙조직과 지역간의 관계가 노동조합만큼 긴밀하지 못하며, 정책적 수준의 접근이다보니 아직 지역환경단체들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주로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에너지관련 노동조합(전력, 가스, 핵발전 등)과의 연대, 물사유화 문제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환경단체, 사회운동과의 결합,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둘러싼 연대 등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사회공공성 훼손과 관련한 공동 투쟁과 이를 중심으로 한 연대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대활동들은 대부분 현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환경사안에 대한 접근과 활동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환경운동은 해당 분야 담당자를 중심으로 매우 협소한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분야, 결합형식으로는 담당자 중심이다 보니 대사회적으로는 물론 환경운동 내에서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연대를 펼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담당자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느낌이 더욱 강한 - 따라서 상호교류가 더욱 필요한 - 아직은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 연대활동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활동은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상층단위 연대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연대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노동조합 선거에 따른 지도부 변화, 환경단체 실무자 변동에 따른 연대 기조 변화 등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할 내용이 많다. 또한 논의 내용이 기층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주요 쟁점 - 에너지에 있어 핵발전 문제, 사유화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내 이견 등 또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이는 상층부 논의뿐만 아니라 기층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될 때만 여러 가지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로의 사안에 대한 현안 대응 뿐만 아니라, 공동 기획사업의 출발이 필요하다. 연대체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은 서로의 현안에 대한 품앗이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목적에 맞는 공동 기획사업의 기획과 추진일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재생에너지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는 서로가 갖고 있는 현안의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제를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 등에 대한 자연생태, 지역환경현안에 대한 설명 및 접근, 지역환경운동에 대한 참여, 환경운동단체의 노동계 현안 이해 및 공동투쟁 참여 등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민영화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점 차이,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개념의 차이, 핵발전술 둘러싼 논란... 현안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만남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는 이후 다른 운동과의 만남에서도 점차 풀려나가야 할 사안이다.

운동진영 내에서조차 정리되지 못한 - 혹은 풍부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사안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진보 진영내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란이나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애매한 입장 등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토론과 정리가 없이 시기만 지나가고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각각의 운동이 만나 연대를 펼침에 있어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도 많다. 그러나 진보진영내 분열, 의견충돌이라는 이름의 대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논쟁을 벌이지 않는 것은 운동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기도 하다.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 각각의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안 중심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연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안이 있을 때 해당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관계와 활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안이 없는 조합원(또는 단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단지 현안만 갖고 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과 문화, 환경과 인권, 환경과 여성 등 노동운동이외의 운동들과의 연대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아직 이러한 고민들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⁴⁷⁾ 이러한 측면에서

47) 환경과 여성의 경우, 그나마 나은 상황인 듯 싶다. 히당주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로 생겼으며, 여성운동 내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은 다른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운동이 자체적으로 환경과 여성이라는 두가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이 연대활동을 통해 고민을 확장시켜가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일

과거 현안 중심의 연대에서 일상적인 연대로 그 범위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넷째의 고민을 풀어내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이라는 큰 범위내에서 다시 에너지, 자연생태, 도시-교통,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들로 나뉘지듯이 이제는 환경운동과 다른 운동의 연계를 고민하는 이들이 조금씩 모여야 할 때이지 않은가한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노동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정당운동 등)에서 활동 하고 있지만, 생태주의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서로의 활동을 점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우릴 이들도이다. 이러한 이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적녹동맹’, ‘관계맺기와 확장하기’는 공염불일 뿐 서로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났다 헤어졌다는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만 계속 될 것이다.

이들의 힘은 서로가 자신의 분야를 갖고 생태주의를 고민하기에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환경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이들과 이들의 관심사, 관점은 분명 다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확장은 다양한 분야의 이들이 ‘생태주의’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다시 자신의 분야에서 생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딱딱해 질 수 있다.

쌓여있는 일, 여유없는 마음가짐,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소진 되어 가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환경운동과 다른운동과의 관계맺기”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에 기반하되,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작은 행동.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아지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의 흐름 - 그리고 새로운 흐름이 한국사회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며 글을 맺음한다.

2부 발제문

생태운동과의 소통/연대/변혁에 대한 고민

수열(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생태위기의 심화

‘생태위기’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언론 보도에서도 ‘지구 온난화’ 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요즘 같은 때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만원 버스나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어떨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름,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공포가 아닐까?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에는 에어컨이라는 게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벽에 매달려 좌우로 회전하는 선풍기처럼 천장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아가던 지하철 선풍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은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기후대가 변해 ‘장맛비’ 가 아니라 ‘스콜’ 이 내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된다. ‘환경오염’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폐수와 같은 ‘공해’ 로만 생각되던 때와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배 세력의 대응

- 기후변화협약과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제도

- 공공재인 대기 자체를 상품화.
- 온실기체 총량에만 집중 →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 지구온난화의 비용을 전가.
-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배출권 지급 조건 완화, 배출권의 가격 인하.

환경오

염과 생태위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지배 세력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전체 200개 토론 가운데 17개가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로 채워졌으며, 6월에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 지배 세력들은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G8 의장을 맡고 있는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다보스 포럼 개최식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성장을 멈추는 것이 답은 아님’이라며,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강조와 함께 ‘향상된 혁신’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 세션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에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관련 시장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환경 문제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해결하겠다는 논리.
 - 기후변화협약의 배출권 거래제도.

지역 개발과 친환경 사업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전남 고흥 거금도의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강원도 춘천 봉어섬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계획 등등. 전 국토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 관련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거나, 그럴 계획에 있다.

- 실제 발전을 통한 대안 에너지 생산보다는 관광 단지 건설 등의 부가 효과에 집중.
- 생태위기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만들어질 이윤 때문.
- 건설 과정에서 오히려 생태 파괴의 문제 발생.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현재 제3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생태위기의 모습들은 전 세계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을 상품화시켜 생태문제를 시장에 맡겨 해결하려고 하는 한 불평등의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 공급 중단 사태, 인도네시아의 가뭄.
- 가난한 사람들은 생태 파괴로 인해 발생한 위기보다 더욱 큰 위기를 경험.
- 1차 산업 중심의 국가일수록 일상생활과 산업이 자연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생태위기로 인한 피해 증가.
- 지배세력은 연구 및 자본의 재배치를 통해 엄청난 잠재적 파괴력을 지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제재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

생태위기에 맞선 소통/연대/변혁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드러난 민중운동 내부의 혼란과 분열은 우리 운동의 맹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새만금, 부안 투쟁에 대한 기억
→ 지역개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 우리 운동의 맹목을 극복하자. 생태 의제를 통해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대안사회의 올바른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

[2부 발제문]

인권운동의 생태적 재구성과 실천을 위한 메모

박혜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인권운동이 환경운동을 만났을 때

인권운동이 환경운동을 만났던 경험을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보면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나는 것은 10여 년 전에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매항리 국제폭격장 폐지 투쟁, 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등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다.

이런 경험을 거칠게 정리해보면, 인권운동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운동과 만났던 것은 아니고, 주로 지역 현안으로 등장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생존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에서 든 사업들이나 투쟁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깃박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지, 그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가 발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결합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또 환경단체들이나 지역단체들이 위와 같은 사건들에서 인권운동에 연대를 하자고 할 때는 주로 경찰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이 쌓은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운동에 손을 내밀었다. 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 때는 경찰력이 동원되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찰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인권운동은 현지에서 실태를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이를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였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역운동이나 환경운동 모두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작업은 매우 적절하게 투쟁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인권운동이 당시에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된다. 즉 핵심적인 사안이 환경, 생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뒤로 감추어지고, 오로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초점이나 여론의 관심이 본질적인 문제에 쏠리기 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에 쏠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때에도 투쟁 주체들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서는 다른 사례처럼 소극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응을 넘어서었다. 위와 같은 일은 계속 진행했지만, 평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발전했다. 그래서 단지 국책사업의 강행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헌법 기본권적인 문제로 접근했고, 그때 국가권력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 규정되게 된다. 그로부터 국가가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마을과 농토를 강제 수용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이런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인권 옹호활동이라는 논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때 환경운동도 그간의 주한미군기지 투쟁을 통해서 쌓아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결합하였지만, 이때는 인권운동보다 결합도는 떨어졌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이 만났던 경험을 정리하면, 환경 문제를 적극적인 인권적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 그로부터 인권운동은 주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정도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다. 생태 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인식이 없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부분적, 일면적인 연대를 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는 운동 주체의 인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인권담론 그 자체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2. 인권담론의 재구성을 고민할 때

환경권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미 국제조약들이나 헌법의 규정들이 환경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권조약이나 사회권조약은 이미 환경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제33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으로부터 이후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지만 환경권에 대한 국제조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환경권에 대한 유엔의 가장 진전된 논의는 1994년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초안일 것이다.

원칙은 인권,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가 모두 서로 떨 수 없는 분기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따라 2조에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적 권리로서 오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환경을 보전할 권리, 지면의 편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적 권리로서는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권리,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결사의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발전해온 환경권은 집단의 권리로서 대체로 인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 중심의 접근이다. 즉 ‘인간의 건강한 권리에 대한 권리’ (right of humans to a healthy environment)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환경의 권리’ (right of the environment)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위에 인용한 같은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후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즉 다른 생명체들의 법적

48) 남상민, 「환경과 인권, 그 관계맺음에 대하여」,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통권 26호(2007. 8),

지위까지 논의의 주제로 포함한다.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권리를 존재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환경 자체의 권리를 논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권이 인간을 중심으로만 때에는 인간의 권리마저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라고 주장한다.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반대 투쟁에서 ‘도롱뇽’ 이 자신이 생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도롱뇽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천성산 도롱뇽의 법적인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때에는 천성산과 그 주변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려야 할 인간들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도롱뇽의 권리를 부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개발에 의해서 인간의 환경권도 침해받게 된다. 이런 논의와 더불어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환경의 권리는 다르게 나타나며, 대체로 빈곤층이 환경권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 세계적 수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난민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단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환경권 논의는 “인권 보호를 위한 도구적 수단” 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의 지배할 있다는 생각, 자연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정복할 수 있다는 사고 위에서 발전해온 인권 개념을 갖는 근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중심주의적인 존재론적인 개념을 벗어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는 상대화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연 생태계 파괴는 사람과 사람 바깥의 존재를 그러한 관계성에서 인식하지 않고 그 관계성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해내어 개체화한 사람중심주의에서 빚어 나온 결과인 것이다. ...근대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관계성의 훼손이었다. 관계의 망 속에서 ‘사람의 권리’ 를 개념화하고 ‘관계의 과정’ 에서 ‘사람의 권리’ 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의 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분리’ 된 개인을 정시 주체로 치켜 세우고 그러한 개인을 축으로 삼아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만에 사람중심주의의 높은 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문제시하지 않고 당연하게만 여겨 온 사람중심주의 틀을 거꾸로 뒤집어 덮어 버릴 때가 온 것이다. 사람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의 권리’ 는 사람 밖의 다른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람만의 특권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는 존재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막강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 보기를 들어 ‘자연의 권리’ 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의 권리어야 한다.⁴⁹⁾

사람의 권리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한 파괴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지구에서 인종으로 지속가능한 생존을 누릴 수 없게 되며, 그럴 경우에 인권의 가치는 주장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아직도 민중들의 기본권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그 최소한의 권리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는 지금까지 확장해온 권리마저 침탈당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보면 한가로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생태 중심의 관점에서 인권 담론이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가 자연에 대한 무한 파괴와 수탈을 긍정하는 체제이고, 신자유주의는 그

49) 디나르 고드레지, 김민정 역,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가」, 이후, 2007 등의 책들을 보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 책임은 북반 공업국들이 저야 하지만, 실제로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고통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저개발국가 민중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 박명신, 「'사람의 권리', 그 어버지와 올라미」, 《현상과 인식》 2006 가을.

악마성이 침예하게 드러난 최악의 자본주의 단계인 것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인간 바깥의 존재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사고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 중심주의적으로 구성된 인권의 담론 자체를 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3. 인권운동이 생태운동⁵¹⁾과 만날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인권운동은 생태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예를 들어 경찰폭력 등)에 대해 결합함으로써 스스로 생태운동의 수단적, 보완적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권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을 인권평화운동처럼 인권생태운동(생태인권운동으로 부른들 어떻겠는가)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이 가치로서 생태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은 이런 재구성을 이룰 수 없지만, 이후 생태운동과의 횡단대화를 통해서 이런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운동은 무참히 파괴되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사람중심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재구성은 끊임없는 만남 과정과 공동의 실천과정을 통해서 더욱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생태운동과 인권운동이 만날 길은 대체로 세 가지 길에서다.

첫째는 사회공공성 투쟁 과정에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파괴한다. 사회공공성 투쟁 중에서도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재와 관련한 사안들은 민영화의 과정을 통해 일부에 집중되고 일부가 독점하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된다. 즉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고, 그로부터 민중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때 생태운동과 인권운동은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별 고민과 갈등 없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

둘째는 교육에서 같이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내용 중에 생태적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이 보장되고, 생태교육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녹여낼 수 있다. 인권교육에 생태교육을 초청해보고, 반대의 경우도 해보면서 각자의 장점을 녹여내서 공동의 교육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보다 큰 범위이고, 구체적인 과정인 풀뿌리운동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은 모든 진보적 가치가 어우러져 실현되어야 할 공간이다. 생태운동에서도 풀뿌리운동이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오히려 인권운동이 지역을 충분히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이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반대운동을 펴지 못한 데 있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을 얻어내는 반대운동이 아니라, 기존 활동의 관성대로 반대운동을 펼치다보니 결과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대중과의 직접 대면이 잦을 수밖에 없는 풀뿌리 환경운동은 이런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풀뿌리 환경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대

51) 이 글에서 환경운동과 생태운동은 크게 다르지 않게 혼용하여 쓴다. 그렇지만 생태운동이 보다 더 근본적이고, 체제내화되기를 거부하면서 권력화현상을 거부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 <참세상>에 1월 말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글과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참조.

만을 짜내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데 있다.⁵²⁾

플뿌리운동으로서 인권운동, 생태운동이 서로 만나서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역의 운동들과도 교차하면서 만나 담론을 새롭게 형성하고, 공동의 투쟁전략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역 운동의 의제들과 맞물려 사고해야 하므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장 만나면서 그 관계들을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운동적 지향과 방법을 공유하고, 관계성을 회복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운동은 부분으로 분할되어 자신의 운동만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온 운동들이 공동의 상대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구와 인간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영역을 넘어 서로 교차하고, 횡단하는 운동을 실험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겸허하게 각각의 운동들이 수용하고, 그렇게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권운동은 생태운동과, 생태운동은 인권운동과 만나고 다른 운동과도 만나면서 서로를 풍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틀 내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운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꿈을 꾸어본다.

52) 강양구, 「환경운동,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녹색평론》 제84호(2007년 5-6월호).

2부 발제문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의 관계맺기

신용진(문화연대)

21세기 한국사회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문제의 최대 화두는 환경문제가 아닐 듯싶다. 이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맺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구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자본주의 기업들조차도 환경문제에 대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류생존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필연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호들갑에 비해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들인 국가와 자본(기업)은 겉으로는 지구생태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온몸으로 떠들고 있지만 속마음은 환경문제를 활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싸매고 있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답답한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줄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뿐 더러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족한 역량을 결집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생태적 관점과 원칙의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사회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많은 부문(영역)운동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노동, 농민, 시민, 여성, 환경, 문화, 정보통신, 소수자, 빈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운동의 영역들이 그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각 부문운동의 영역도 내에서도 더 세분화 되어서 전문성을 키워가며 의미 있는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각 영역의 운동들간에 미묘한 벽이 생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문제는 노동운동단체를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이, 여성문제는 여성단체들이, 환경문제는 환경단체들이, 문화문제는 문화운동단체들이, 빈곤문제는 빈곤운동단체들이 하는 식으로 획일적인 역할 구분이 되면서 각 영역간의 의미있는 공동의 실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운동의 각계각진인 신자유주의 세력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각계각파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의미있는 공동의 실천을 위한 각 영역간의 강력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 영역의 의미있는 공동의 실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각 영역의 운동의 대의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에 연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의 암울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을 공유하고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을 실천하는 것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원칙중에 생

태적 가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었듯이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환경운동단체가 아니라도 진보적 사회운동은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천운동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운동의 병행이 필요하다. 즉, 개인들의 생활양식을 생태적 생활양식으로 전환하고 단체운동을 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활동의 원칙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의 거시적인 활동의 실질적인 연대와 개인들의 생태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생활양식의 혁신이 더불어 진행될 때 지구적 생태적 위기를 극복과 자본주의의 침범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태적 문화사회〉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 문화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문화연대는 〈문화사회〉라는 대안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사회〉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착취나 억압,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 "개인들이 타인과 연대와 호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희망과 자아를 최대한 구현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이다.⁵³⁾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문화연대는 기존의 문예운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운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런 〈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인간과 자연사이에 착취, 억압,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라고 밝히고 있듯이 생태적 가치가 〈문화사회〉라는 대안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것이다. 즉, 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각각의 독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교집합을 이루는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운동과 환경운동의 공동실천을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국사회 구조를 생태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박정희식 개발을 이어받은 신개발주의가 사회전체를 부동산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호혜적인 관계의 형성이 아닌 돈의 가치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삶이 조직화됨으로써 개발을 통한 이기적인 부의 축적이 최대의 목표가 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구조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 활동이 절실하다. 물론 현재도 공동 실천을 벌이고 있지만 좀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생태계를 착취하는 방식의 개발의 저지를 비롯한 사회공공성 투쟁을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개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태문화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가 개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정의 했을 때 사람이 살아나감에 있어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생태문화적으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개인들의 삶도 자본주의 소비지향적, 생태계 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획이 필요하다. 다양한 생협운동, 공동체운동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개인들의 일상생활양식을 생태문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랜 운동의 과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된 생협운동, 공동체운동에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운동진영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53) 「문화연대와 1990년대 문화운동」,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한국 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2008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구성원⁵⁴⁾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생태문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벌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농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본주의 상품방식으로 거래되는 틀을 벗어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회운동 구성원들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하고, 전농회원들 또한 기존의 자본주의적 농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 농업을 시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예시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태문화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을 고민한다면 현실성있고, 의미있는 사업들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⁵⁵⁾

54) 사회운동의 구성원은 사회단체 활동가, 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

55) 문화면대는 한국사회를 생태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여러 고민과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광현(문화면대 정책위원장)의 「문화사회적 사회구성체론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배신을 위하여」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회 운동 포럼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워크숍 기획 내용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전망

-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오후 12시반 - 3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6호

사회: 최민기(진보련 사무처장)

피널: 정종권(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철(전진 집행위원장),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오준호(사회당 시당위원장)

주제 1. 정치운동과 정당운동의 정의 및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결합방식

: 대부분의 사회운동 주체들이 정치세력화가 필요함을 말하지만 정작 정치세력화, 정치운동에 대한 상이 다릅니다. 정치운동의 정의를 정당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보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구체적 결합방식의 상과 지금까지의 결합방식을 평가해봅니다.

주제 2. 각 정치운동세력이 바라보는 향후 정치운동의 미래

: 현재 각 정치운동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내부의 각 정치운동세력은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으나 하나의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당은 독자정당으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힘'은 비제도적 투쟁정당이라는 독자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상호 비판과 공유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상호 상승작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동운동이 어느 샌가 경제주의, 실리주의로 경도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 반영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 또한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운동으로만 드러나고 있고 여타 사회운동과의 광범위한 결합이 지체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커다란 부분으로서 노동운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금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이에 사회운동포럼 토론회를 통해 노동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사회변혁적인 노동운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함.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

이헌대(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치의 이념과 주체의 변화에 따른 ‘운동’ 표방(표상)의 변화

‘운동 표방(표상)’의 변화

: 70년대 재야운동/민주화운동 → 80년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사회변혁운동
→ 90년 이후 시민운동/NGO, 진보운동(진보진영), 사회운동

-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의 사상, 이론이 공개적으로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음. 8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보다는 민족해방 혁명을 지향한 좌파 이론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었음. 이러한 조건 하에서 70년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재야 민주화 운동이 운동의 대표적 표상이었음.

- 80년 광주 민주화쟁을 거치면서 급진적, 사회변혁적 이념이 도입됨.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성격 논쟁으로 촉발되고, 87년 6월 민주화쟁 및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계급적, 대중적 운동이 촉발, 형성됨. 범NL진영이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여 ‘민족민주운동’으로 표방하였고, 범PD진영이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계급동맹을 고려하여 ‘민중운동’이라고 표방하였음.

- 91년 계급투쟁의 패배 이후 YS의 집권과 함께 경실련이 종래의 ‘민중운동’ 내지 ‘민족민주운동’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계급, 계층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함. 이는 운동의 성격을 ‘시민’이라는 그 운동의 ‘주체’의 속성을 통하여 규정된 것으로, 민중운동을 계급 이기주의적 운동으로, 자신을 초계급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함. 시민운동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적 매개수단을 보편화·절대화시키는 법률주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 갈등의 중재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주의를 내부요소로 하고 있음. 이렇듯 관리주의로서의 시민운동은 노동자와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기보다는 개별 시민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이들을 압력집단으로 재조직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시민성/시민권을 억압하고, 민중운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낳음.

※ 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으로 NGO가 급속히 각광을 받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로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강요되고 있는 세계적 변화와 관련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통치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NGO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는 것임. 사실상 'NGO'들은 비록 정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때때로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정부의 목적을 위해 활용됨. 예를 들어 주변부의 종속국가들에서는 종종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NGO의 설립이 국제적 원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됨. 자본주의 중심부와 그들의 신흥 NGO 사업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짐. 이러한 NGO의 관리자적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를 신자유주의 재편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찾을 수 있음.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NGO가 급증하였으며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개발 계획의 입안자이자 이를 실행하는 대리인역할이었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제위기 상황이 NGO가 확장하는데 기여한 주요요인이 된 것임. 즉 국가정책의 전환과 연결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빈곤의 격감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대안적 집행자역할을 NGO에게 부여했음. 만약 NGO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거나 정부 자금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많은 수의 NGO들이 존재할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러움. 따라서 허구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확대된 국가기구'라는 주장은 NGO(비정부기구)의 성격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며 비정부기구와 사회운동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됨.

-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남한민중운동의 쇠퇴, 세계자본주의 변화=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 남한 운동진영의 현실적 조건은 기존 이념에 대한 해체와 사회변혁 전망의 부재 속에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건설, 선거를 통한 점진적 개혁' 으로 상징되는 '진보정당', '진보운동' 이 대표적 표상이 됨.

- 현실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사회변혁의 전망이 포기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로 강요(TINA, There is no alternative)되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 비판과 역사적으로 한계를 노정한 진보정당 운동(사민주의 노선)을 비판하며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전략인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스스로를 '사회운동' 으로 표방함. 스스로를 '사회운동' 으로 표방하는 운동주체들의 경우, 체제 변혁적 운동뿐만 아니라 체제내적 운동, 지배계급의 운동조차도 포함하는 사회운동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기존 운동이념의 혁신('당' 중심의 운동전략의 상대화를 포함)과 운동주체의 형성을 통해 '사회변혁운동' (대안세계화운동)을 형성(재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정치운동 및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해

- 정치운동(조직)을 정당운동(조직)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치' 를 부르주아적 의미의 정치(의회 정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 마르크스는 정치운동이란 '보편적인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형태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체의 운동' (1871년, 런던에서 뉴욕의 블테에게 보내는 편지)이라고 규정했는데, 우리에게 정치운동의 의미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하는 운동, 즉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연합(주체적인 조직형태)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 해방의 조건을 확장시키려는 일체의 운동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음. 이럴 때에만 사회운동이 정치운동과 다른 그 무엇, 무정부주의적인 반정치나 정치를 경제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로 부당 대립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임.

-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세력화’ 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음. 사실 이는 애초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적 과제의 내포와 외연이 모호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임. ‘정치세력화’ 라는 슬로건은 1987년 대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임. 이 때 핵심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음. 적어도 당시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분명한 정세적, 전술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음. 즉, 그것은 1987년 민중의 투쟁을 어떤 정치적, 조직적 성과로 수렴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계획이자 입장(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후보전술과 결합된 이후의 민중운동 지도부 구축이었음)이었던 것임. YS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1987년의 구체적인 전술적 함의는 사라졌음. 대신 그것은 ‘보수야당’ 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매우 모호한 이념적 표명—이 때문에 ‘독자적’ 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지되었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음. 이 시기에 정당 건설이나 선거참여는 주로 전술적인 판단의 문제였음. 물론 ‘신노선’ 이후 이념이나 전략에서의 변화가 발생했지만 의회나 선거를 통한 집권보다는 총체적인 정치전선의 형성에 복무하는 구체적 선거 전략이 더 강조되었음. DJ의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라는 슬로건으로 변형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세력화’ 라는 말 앞에 ‘독자적’ 이라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게 되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실천적’ 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음. 즉,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보다 노골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DJ와 야당세력의 집권이 한국사회를 사실상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하게 된 것임. 이 과정에서 정치세력화는 사실상 ‘진보정당’ 의 건설과 선거참여를 의미하게 되었음.

정당운동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정당들(전위당, 사민주의정당, 서구 공산당)의 경우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의 폐절과 노동자 국제주의와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주장했으나, 세계자본주의의 (민족)국가간 체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회제적 환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의 세계적 자본주의 체계로 통합되었음.

레닌주의와 전위정당 노선

- 레닌주의의 정수는 전위당 사상. PT독재는 당의 독재가 아니라 인민의 독재라는 레닌 본인의 사고,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당의 독재로 귀결되었음. 이것은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바, 스탈린적 편향을 낳을 수 있는 전위당 사상의 맹점이 존재함. 그것은 당은 정치의 중심이자, 이론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것의 맹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로 PT독재 하에서 정치의 중심인 당이 소비에트(평의회, 인민공사)를 억압할 가능성, 둘째로 스탈린적 편향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과학의 ‘정치이데올로기화’ 즉,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과학적 성격을 억압할 가능성.

-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 노선상의 혼란과 오류로 인해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가 당에 의해서 억압되고, 당 스스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어,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

닌 일국적 차원의 국가자본주의적 자본축적의 길로 통합된 것에 해서 사회주의 사상이념과 당 노선 전반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됨.

- 1)소유의 법적 형태를 계급관계와 기계적으로 동일시('모든 착취계급은 오늘날 제거되었다') ; 2)생산력 우위에 관한 테제("먼저 사회의 생산력이 변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의존하여 그리고 생산력에 부합하여 생산의 인간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변화한다"), 3)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소비에트, 평의회 등에 의한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 확대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등 사회주의 이념, 노선에 대한 스탈린적 편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전위당 '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 노선 전반의 혁신과 구체적인 운용 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함.

- 전위정당 노선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발본적으로 평가해야 함. 과학적 인식이 항상 당을 매개로 보증된다는 관념(당의 분전대, 당의 전달벨트화)의 출현가능성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한 모순을 반영하는 분파의 출현을 대중운동 속에서 전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당의 일파압주의로 억압할 가능성이 스탈린주의로 현실화됨. 분파주의의 원천을 혁명적 실천의 불가피한 모순이 아니라 뿌피 부르주아적 주변들에게 유대하는 기회주의적 요소들의 당 내부 현존 속에서 찾음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과제로서 '영속적 숙청'의 필연성이 도출되었음. 또한 당의 과학성은 어떻게 보증되는가에 대해 스탈린은 과학의 '정치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해결했는데,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비판적 과학적 성격은 억압되었음. 이는 스탈린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레닌 또한 당을 '정치연합'(분파연합)으로 사고한 적이 없으며, 각각의 분파가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사고할 수 없었음.

- 법적(특히 규약의 작성 및 적용)으로 분파형성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경향들은 무단히 위장된 형태로 당의 획기적인 노선전환의 원인이나 결과로서 실존해왔음. 당이론의 한계 속에서 분파형성권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하여 출현하였으나, 조직형태들에 대한 논쟁의 본질이 분파형성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졌음. 그러나 분파형성권의 보장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당 내부 정치'로의 몰두, '당 장치의 강화'와 같은 길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함.('민주집중제'와 '분파형성권'의 딜레마). 당 내부에서 이전이 발생할 때 대중운동 속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할 수 없을 때, 당은 항상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서구 공산당들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 1960~70년대에 이르러, 서구 공산당들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가, '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 '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됨. 당시 지도부는, 이 선택이 혁명적인 길과 개량적인 길 간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두가지 혁명적 수단간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지 상이한 공간적시간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

- '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 '은 ' 프롤레타리아 독재 '와의 세가지' 통변 '적인 대비를 통해 제시됨. 1) ' 평화적 ' 정치적 수단과 ' 폭력적 ' 정치적 수단(무장봉기의 배제, 이데올로기적 선전, 사상투쟁) 2) ' 합법적 ' 수단과 ' 비합법적 ' 수단(현행 법체계의 변혁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가능성에 의해 수행됨) 3) ' 통일 '과 ' 분열 '의 대비 혹은 ' 다수자 '와 ' 소수자 '의 대비(소수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아닌, 보통선거와 다수파 정당들의 합법적 정부).

- 이러한 규정 하에서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 非평화적인 길(내전)에 의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소수자인 노동자계급의 폭력적인(비합법적인) 정치권력 '로 정의(덧붙여 단일정당의 정치지배 및 그

독점의 제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사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심각히 왜곡한 것이며 부르주아지의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찬성하는 자이건 반대하는 자이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소련의 역사라는 표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잘못된 전제와 왜곡된 관념에 근거한 운동 노선은 소련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운동전략의 혁신에도 제대로 기여할 수 없음.

- 오늘날 서구의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됨. 1)권력장악의 모델: 먼저 동맹, 그 다음에 선거의 승리, 그 다음에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개혁, 2)경제의 모델: 다소간의 광범위한 국유화, 엄격한 계획, 기업의 자주관리, 산업부문의 우선 순위, 근로대중의 생활조건 향상, 3)국가의 모델: 집중의 분산으로의 대체.

-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중운동을 형성하고, 여러 사회운동들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집권을 위해 부르주아 정당들을 포함한 상층 동맹을 통한 선거승리 혹은 집권에 집착함으로써

※ 이탈리아 공산주의계전당, 베르티노티, <공산주의 계전당 대안좌파의 건설>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들면서 정치 주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신자유주의로의 수렴

- 역사적으로 사민주의는 '경제주의'와 '진화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즉 '정당은 정치, 노조는 교섭이라는 관념'과 '선거-집권을 통한 자본주의의 모순의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관념'임.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체제 내적 통제를 얻을 수 있었고, 노동의 입장에서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강력한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삼자 합의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를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음.

- 중앙집중적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은 삼자기구와 더불어 사민주의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지탱하는 세 계도적 축이었음. 이러한 제도들의 조합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치영역에서의 정당 활동과 노조의 경제투쟁이라는 양날개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 현장의 계급형성을 방기하고 상급단위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관료주의를 배태시켰음.

-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중심부 국가에서처럼 자본주의의 일정한 물질적 성장, 즉 안정적인 '개발' 혹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에게모니 하의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금융적 팽창과 노동의 불안정화)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은 '제3의길', '새로운 중도'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임.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기구 및 협약들은 외형적인 절차와 형식은 이전 시민주의적 유형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노동의 열세라는 지형 하에서 자본이 헤게모니를 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들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전락되었음. 이른바 '공급주의 코포티즘' 이나 '경쟁력을 위한 코포티즘' 이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고 있음.

상파울로 포럼의 결성과 실제

- 1990년 7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초청으로 모인 남미 48개의 정당, 전선체의 대표들이 상파울루 포럼(Sao Paulo Forum)을 설립함.(케릴라조직에서 정치정당으로 전환과정에 있는 조직들과, 남미의 '별'로 각광을 받던 브라질 노동자당이 주축) 따라서 상파울로 포럼은 무장투쟁에 개입했던 세력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토론을 교환하는 장이자, 서구의 좌파들이 소홀히 다루던 남반부의 나라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장으로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음..

- 이러한 포럼의 노선은 1990년대 초반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고, 1993-96년 사이의 각 나라의 대선이 예정됨에 따라, 포럼의 활동은 대안 강령 특히 경제부문 강령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그 대략적 윤곽을 보면, '혼합경제'와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 대신에 소유와 부의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각 나라에서 이러한 강령이 성공을 거두는 게 라틴아메리카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점차 두 개의 주요 경향이 출현함. 한편으로는 '현실주의적' 활동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개혁의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 세계은행과의 지원 협상)과 제도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지향과 계급적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포럼의 활기는 감소하고, 공동의 '대안강령'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고, 그 결과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의 수렴됨.

- 상파울루 포럼을 구성했던 정당, 전선체들이 생각했던 운동의 노선은 각각의 민족국가들의 발전과 주권의 재건, 그것의 합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였음. 그러나 이미 상파울루 포럼이 창설된 시점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의 전략은 그 전망이 소실되었던 상황임.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기존의 국가간 체계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전략과 지정학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었던 것임.

- 또한 상파울루 포럼은 자신이 '혁명적'인 정당이며 따라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전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 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정치정당과 대중적 토대의 부적응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계급'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보전과 사회경제적 '현상유지'를 위한 실용적 방편을 찾는 방향으로 쉽게 경도함. 또한 대안강령의 실패는 사회변혁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 즉 사회모델의 이론적 구성과 적용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되풀이한 결과일 수 있으며, 정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모델은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과 가까운 것이었음.

※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

-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에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빈민 정책이 주효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 이외에 농촌에서도 토지개혁의 확장 및 지주들의 민병대에 반대하는 빈농들의 투쟁이 형성되고 있음(인디안 공동체 운동 포함).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UNT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변혁 흐름인데, 반대세력의 쿠데타와 총파업/사보타지에 즈음하여 일부 노조지도자들이 CTV(베네수엘라노총)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전국노조의 결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음. 석유, 공공, 자동차, 고무 등 전략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은 UNT에 가입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의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 많은 현장에서 구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가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UNT 일부에서 전개 중인 노동자 통제와 평의회 건설 흐름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저강도 분쟁, 자본의 초민족화와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 등 차베스의 개혁을 제약하는 구조적·객관적인 요인과 차베스 업적 중 상당부분이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차베스 지지세력의 이념적 불균등성과 기존 지배세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않는 개혁정책의 한계와 불확실성, 차베스 개인 카리스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의 프로세스로 인해 역동적인 대중운동이 출현하고 있으며, '민중의 연대,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 을 표방하고 있는 ALBA(미주대륙을 위한 불리바르 대안)-쿠바의 15,000명 의사파견과 베네수엘라의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석유 제공,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판 '알자지라 방송' 인 '텔레수르' 운영, 지역적 통화안정성 확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판 IMF 구축 등 - 구상 등이 라틴아메리카 정부 차원의 연대를 넘어 각 국의 대중운동들을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함.

한국에서의 전위정당 노선의 해체와 진보정당 운동으로의 수렴

- 한국의 경우, 80년대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존재했으나, 80년대 후반 3저 호황 국면을 배경으로 90년대 초 '자립화-개량화 논쟁' 과 함께 '신노선' (전위정당 노선 및 PT독재의 폐기)이 등장함. 이러한 경향은 노동운동 내의 거대 정파들과 활동가들의 대거 참여 속에 90년대 초 한사노당의 결성과 해체로 이어졌음. 92년 백선본의 결성과 해체, 개혁신당의 건설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보정당 건설 흐름은 사실상 쇠퇴하였음.

-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의해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 결성(범NL 진영 참여)되고,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음. 이후 전능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 10개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일정한 시민권을 획득함. 진보정당 건설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98년 11월 '청년진보당->사회당' 이 출범하였음. 청년진보당의 이름으로 2000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전 지역구, 인천 부평구(을) 46명 출마(8.0%, 125,840표 득표)에 출마하여 운동진영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음. 청년진보당은 2001년 8월 '사회당' 으로 재창당되었는데, '반자본주의, 반조선노동당' 노선표명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2004년 총선 이후 한국사회당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과 같은 합법정당들이 의회진출을 초과하는 운동전략 하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어도, '합법정당의 집권' 으로 이행의 전략적 고민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함. 하지만, 그것이 합법정당 일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합법정당이 대중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무엇보다도 진보정당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정당 운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자기방어적 실리주의를 극복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향후 운동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임.

-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경향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책대안 + 선거 집권 + 점

진적 개혁' 을 넘어서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나 당내 가장 커다란 세력인 범NL진영의 경우, 2003년 9월 테제(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통일·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연합계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우경적인 집권전략으로 경도될 우려가 농후함.

※ 진보정당 노선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힘' 은 새로운 전국적인 정치조직의 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정당' 은 국가권력 장악의 주체로서 정당 이 아니고, 대체권력의 정치적 주체로 노동계급을 조직하고, 대안권력의 맹아적 조직들을 형성하는 것을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여전히 전위정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흐름이 존재함.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

오늘날 정당 내에 조직된 좌파들이 직면한 난점(마르타 아르네케리)

- 계급주체 형성을 위한 운동의 감소와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우파는 국가기구를 활용해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제하며 한편으로 특정한 사회운동을 불균형하게 촉진시키는 사회적 분할 전략을 실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반-당 감정을 일으킴.
- 좌파는 선거기간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적 캠페인을 수행하여 민중들을 조직하고 의식을 고양하기 보다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지배계급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함. 그러나 지배계급에 의해 부과된 게임 규칙은 좌파의 단결을 저해하고 심지어 개인승배를 자극함.
- 좌파의 변혁의 요새로서 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좌파를 내부에서 공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 경우 투사들의 활동은 고작 민중들을 진보적으로 대표하여 공격인 영역을 장악하거나 행정직을 차지하는 것. 또한 이를 위하여 집단적 행동을 멈추고 의원으로 활동하거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머물게 됨.
- 점차 당 자금의 의존성과 부당한 개입을 동반하여 국가기관, 의회, 지방정부, 선관위 등에서 활동하는 당 간부들의 기여로 만들어 지게 됨.
- 좌파에게 정치는 국가기구들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제도를 변혁시켜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의미해야 하며, 사회적 권력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권력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이해되어야 함.
- 그러나 당-좌파는 해방을 위한 모든 제안과 운동을 당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것에 자신의 정치활동을 한정하고 있음.

사회운동조직의 한계

- 현재 사회운동 단체들은 광범위한 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보다는 (대중의 조직화는 경제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맡기고) 노조 등의 대중조직을 외부에서 비판하거나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회운동의 NGO화)

- 그들은 종종 자신의 특성에 기인하여, 좌파의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많은 요구를 연계하고 조직된 열망을 표현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함.
- 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부문적이고 조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초민족적으로 사고하는 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거나 종종 지도자 중심주의 수직조직, 토대조직, 출세주의 등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 굴복하기도 함.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축으로는 금융화를 통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부후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장시간 저임금노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특징으로 함.

이는 운동세력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적 자본운동이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을 통한 민족국가의 발전 전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노동자 대중 내부를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국내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위계화, 분절화시킴으로서 계급적 단결과 공동의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음.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연속적인 패배와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이미 조직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음.

당 운동, 노조운동, 사회운동 등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과 표방하는 운동을 넘어서 현실의 대중운동이 처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지 않고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할 수 없음. 공간을 떠나서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광범위한 결집이 필요하며, 이를 가로막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가 요구됨.

- 당-좌파는 ‘집권’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전략적 비전, 현재 실리주의, 조합주의적인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혁신과 계급주체 형성(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을 자신의 목표로 분명히 하고, 사회운동과의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강화해야 함.
- 당-좌파는 당 중앙의 정책역량을 비대화하는 방식을 통한 당 내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각급 사회운동/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이론,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이것이 당과 소통될 수 있도록 토대를 강화하는데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당-좌파는 당내 세력강화를 위한 경쟁에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위원회에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운동과 현장(단위 사업장), 지역주민들의 운동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량을 투여해야 함. 예컨대, 이랜드 홈에버 유통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마포구지역위원회의 노력과 투쟁결합, 아지는 시

작단계이지만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지역운동 조직화와 대중교육의 고민을 갖고 출발하는 ‘민중의 집’ 등은 착목해야할 지점임.

- 사회운동들은 부문운동화, NGO화되어 있는 운동의 관성을 반성하고, 대중운동의 토대를 바꾸기 위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구체화해야 함.

- 사회운동이 보다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을 경유하는 것이 중요한 경로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단체들도 대중들을 직접 조직하고 활동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당-좌파와 사회운동들이 공동의 운동전략을 토론하고, 대중운동을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직적 틀거리의 마련이 필요함.

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운동을 위하여

김종철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장)

사회운동, 대중운동, 정치운동

이번 행사의 이름이 사회운동포럼이다. 그만큼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부문의 진보적 사회변혁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주체들이 소통, 연대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런데, 애초 기획에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이라는 주제가 없었다. 좀 뒤늦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필자가 나섰고, 동의하는 분들이 생겨서 토론이 진행되게 되었다. 사실 누구나 인식하듯이 올해 일반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만한 일정이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필자는 뒤늦게 사회운동포럼에 함께 하게 되었지만 ‘정치운동’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현실적으로 논의하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어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정치운동’을 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었다.

사회운동포럼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과정은 실상 우리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정치운동’에 대한 인식의 상이함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정치운동’에 대한 인식의 상이함이 원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회인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후 사회운동으로 진출하면서 느낀 감정 때문이기도 하다.

10년전, 병역특례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필자는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97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직장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개척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추진 중이던 ‘사회인연합’에 함께 참여하였다.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연합에 참여하던 필자는 결국 소위 ‘필’을 받아서 아예 직장을 그만 두고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이 우리 진보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동시에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의 대선참여를 바라보며 느낀 것이었다. 필자가 병역특례를 마치고 직장을 그만둔 후 사회운동에 진출하기로 마음먹고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처음의 방향은 당연하게도(?)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그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치운동, 그중에서도 협의의 정치운동인 정당운동은 내가 아닌 다른 누가 해야 할 운동이었고, 노동운동은 우리 모두가 달려

들어서 해야 할 운동이었다. 그러나,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필자의 진로가 귀결된 곳은 당시의 국민승리21, 즉 정당운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정치운동은 굳이 따지자면 지금 필자가 하고 있는 정당운동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정당운동으로 한정되지 않는 광의의 정치운동, 즉 대중운동 발전의 다른 이름이었다. 조금 투박하게 말하자면 “정치가 뭐 따로 있나.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갖게 되고, 전농이 투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그게 우리의 정치가 아닌가. 그런 부문부문의 성장이 진정한 정치운동일 것이다.” 뭐, 이런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이 지금도 큰 틀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운동의 발전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길 바라는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성장이 곧 정치운동의 성장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이 사회운동포럼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독자적인 토론주제로 올려 이렇듯 머리 아픈 토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광의의 정치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의 정치운동’ 즉 정당운동(또는 정치조직운동)이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며, 그것이 운동에 기여하고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머리 맞대고 토론해보기 위함이다.

사회변혁과 대중투쟁, 그리고 의회주의 노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여러 노선들이 존재해 왔다. 그것은 아주 다양하였는데 그 입장을 조금 살펴보자면 그 한쪽에는 전면적인 대중운동과 투쟁으로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는 노선이 있었다. 이 노선은 전민항쟁노선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완전한 반대 측에는 의회주의 노선이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관철된 시대에 과거와 같은 전면적 대중투쟁, 전민항쟁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니 선거를 통해 의회의 다수를 점하여,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법률과 제도를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 두가지 노선을 혼합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주의 노선은 그 자체로만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체계 내의 질서로 통합되어 유의미한 변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사회변혁의 운동노선은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을 근본으로 하고 여기에 의회활동을 적절히 결합시켜 나가는 노선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위험, 즉 의회주의 노선으로의 경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노선은 ‘운동정당’이라는 노선이다. 즉, 국가기구와 의회로의 진출을 주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정당운동이 의회주의로 경도되지 않기 위해서 대중운동에 복무하고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또한 이렇게 성장한 대중운동이 다시 정당운동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식의 노선을 말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운동정당 노선을 제대로 걸어왔는가를 평가해보자면 솔직히 아주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사안별, 시기별로 이러한 운동정당의 정신이 실현된 사례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최근에는 이랜드 투쟁이 그렇다. 이랜드 투쟁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농성을 함께 하며 대중투쟁을 만들어나가려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쌀 개방에 반대하며 강기갑 의원이 28일간 단식투쟁을 벌여 농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제벌과 검찰의 범죠택 유착관계를 폭로한 ‘삼성X-파일’ 사건으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노회찬 의원이나 국회에서 한미FTA반대 투쟁을 하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심상정 의원의 활동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노조 투쟁을 엄호하다 법의 굴레를 뒤흔어쓴 이갑훈 구청장의 투쟁 역시 하나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운동과 의회주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여 정당운동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거리를 둔다면 우리는 사회운동 발전에 유력한 하나의 수단을 잃게 되거나,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당운동의 현실과 고민 - 선거, 그리고 지역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 만에 정당 지지도 3위, 의석수 제3위의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비록 소선거구제라는 선거 제도 탓에 13%라는 정당득표율 하고도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3%밖에 얻지 못했지만 민주노동당의 빠른 성장은 다른 나라 진보정당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또 다른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후 민주노동당은 위기와 기회를 반복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2004년 총선의 영광이 있고 1년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 북구에서 패배하고 만다. 연이어 그 다음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그동안 운영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사실상의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내홍을 거쳐 2007년 대선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지표상의 성장과 후퇴와는 별도로 필자가 판단하는 진보정당운동의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진보정당운동이 의회에 자신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선거는 결코 이상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제도는 바로 그러한 현실성의 총이라 할 만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전국을 세분화하여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에 맞춰 어느 정당이건 자신의 조직구조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역구 선거제도 자체가 정당운동이 지역정치에 투신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공간은 전통적인 변혁운동의 의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

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자는 소비자이거나 주민이 된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거주가 재편되면서부터는 노동자는 소비자나 주민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의식이 발현될 수 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노동의제나 그것을 대표하는 00라는 진보정치운동가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정치를 규정하는 대증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는 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여 밤 늦게 그 지역으로 돌아오기에 해당 지역의 주요한 정치세력이 되지 못한다. 지역정치의 주요세력은 하루 종일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 즉 자영업자 계층으로 바뀌게 된다.

필자 역시 이러한 현상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2002년 지방선거에 필자는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오전에 잠깐, 그리고 퇴근 시간대에 잠깐 그 지역의 노동자를 스치듯이 만나는 것 외에는 노동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침과 밤 사이의 긴 시간 동안 필자가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계층은 자영업자, 주부, 그리고 노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정치의 주된 의제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사회변혁운동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지역정치의 주된 의제가 된 것은 자영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된다. 민주노동당의 지역사업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 상가임대차 운동 등이 주된 사업으로 진행된 이유도 각 시군구별 지구당(지역위원회) 구조로 당이 편제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진행된 사업이라면 지역환경관련 사업, 또는 저소득층 지원활동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은 그 자체로 경쟁의 가치가 스며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때는 전국에서 ‘우리 동네 제일주의’가 판을 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의식에 편승해 개발경쟁, 유치경쟁이 어지면 그에 대항하는 진보정당의 의제는 사그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안을 찾아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정당운동의 필연적인 귀결이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의제, 그리고 그것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광역이슈 또는 전국적 이슈를 발굴하여 큰 단위의 투쟁에 집중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자 한다.

한가지 대안을 모색해보자면 사회운동의 지역화를 들 수 있다. 사회운동의 다양한 의제들, (비정규)노동, 성평등, 사회공공성, 생태환경, 대안교육, 공동체 문화 등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주체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조직의 당원들이 사회운동의 다양한 의제들을 자기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역간 경쟁에 대한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역간 경쟁전략’에 맞선 ‘지역간 연대전략’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다른 나라에 대해 경쟁하고 핍박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진보세력의 대안은 국제연대, 협력적 교역, 평화체제구축 등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간 경쟁체제에 대한 대안은 지역간 연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지역이 낙후하고 빈한한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을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함께 모색해나가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지역에 긴박돼 있는 정당운동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 변혁적 성격을 포기하고 기성 보수정치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진보정당운동에는 죽음술, 그리고 변혁적 사회운동에는 유력한 수단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중운동에 기반한 사회운동은 정당운동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정당운동은 대중운동, 사회운동의 발전에 복무하는 유기적 결합이 절실하다. 그러한 유기적 결합에 이번 사회운동포럼이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진보정당과 대중운동의 역할과 관계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1. 들어가며

- 정치운동이 정당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 하지만 대상의 폭을 좁혀 효과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정치운동-사회운동의 관계’라는 주제를 ‘정당-대중운동’으로 집중하고자 함.
- ‘사회운동’에 대해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함. 첫째는 부문대중의 자주적 결사로서의 운동(예컨대 민주노총, 전농 등), 둘째로는 의제나 이슈에 따라 일반 시민대중이 참여하는 운동(예컨대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이 있다고 봄. 하지만 모두 대중의 자주적 욕구에 의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운동으로 봐도 무방할 것임.
- 여기서 정당운동이라 함은 선거참여를 핵심 활동으로 하는 합법정당을 대상으로 함. 물론 정당에는 전위당, 비제도적 투쟁정당 등도 있지만 현대 한국정치의 맥락에서는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2. 대중운동과 정당운동의 차이와 역할

- 대중운동은 그 부문이나 의제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임. 임금인상이나 장애인의 권리 등 부문대중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고, 새만금 살리기나 평택 지키기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투쟁하기도 함.
- 한편 정당운동은 부문과 사안의 요구를 넘어 ‘사회의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구성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함. 국민들은 여성이 여성당을, 노인이 노인당을, 노동자가 노동자당을 찍는 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대안을 중심으로 정치에 참여하려 함.
- 그래서 실제로는 부자들의 이익만 옹호하는 정당-예를 들어 한나라당-이라도 국민 일반에 대한 통합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포섭하려 함.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지지가 가장 높은 정당은 한나라당임. 많은 서민들은 박정희 식 고도성장에 대한 함수와 기대를 갖고 있음.
- 보수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국가 일반의 담론과 비전으로 이야기해온 한편 진보정당은 뽀박받는 노동자

민중 서민의 저함을 대변해왔음. 물론 이러한 활동은 진보정당의 기본적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저함의 대변자를 넘어 국민 다수를 포섭하는 국가 비전, 사회통합 비전을 제시해왔는지는 의문임.

- 저함의 대변자로서 진보정당은 대중운동의 요구를 거의 직접적으로 수렴해왔음. 그러나 대중운동, 특히 조합대중의 요구가 전체 사회 차원에서 언제나 정당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가령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각 대중운동의 요구를 단순 합산한다고 유기적인 사회진보전략이 구성되는 것도 아님.

-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대중운동의 요구를 수렴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국민 다수에 대한 포섭전략, 국가 통합 비전을 제시해야 함. 이를 초계급적 태도라고 비판할 수 없음. 왜냐하면 노조가입률이 10%도 안 되고 저소득층들이 줄줄이 한나라당을 찍는 한국에서 계급은 새로이 구성되어야 할 대상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엇이 아님. 국가사회의 진보적 통합비전은 곧 계급구성전략이며 진보적 다수와 구성전략임. 진보정당이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고 대중투쟁의 대변자로서만 존재할 때 지지율 10%를 넘어설 수 없음.

- 각 대중운동을 넘어선 국민적 진보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정당과 대중운동 사이에는 원활한 소통과 토론이 요구되고, 한편으로 상호 비판과 혁신도 요구됨.

-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관계는 서로의 혁신과 자율적 발전에 일정한 한계로도 작용한다고 봄. 관계의 발전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대한민국 진보를 위한 과제

-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는 국민 일반을 주권자로부터 생존자 수준으로 격하, 해체시켜나가고 있음. 이에 맞서는 투쟁은 진보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산발적이고 분산적임. 87년 투쟁의 주축이었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가능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태도로 생산력 경쟁에 매달리고 있음. 노동자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조합이기주의가 발호하여 사회연대를 약화시킴.

-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진보진영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 첫째, 68년 체제가 곧 해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 더 이상 냉전-안보논리와 감상적 민족지상주의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임. 둘째, 87년 함쟁의 성과를 업고 집권한 노무현-범여권이 87년의 정신을 사실상 부정함에 따라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 셋째, 97년 체제로 확대된 양극화와 사회해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보세력이 주장해온 복지외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임.

-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다수를 통합하는 대안과 비전이 필요함. 한국사회당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국민주권 회복, 생태주의로 전환 등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현 시기 국가대안으로 제안하였음. 사회적 공화국은 국민의 공통조건(복지, 교육, 기본소득 등)을 과감히 확대하여 국민의 역동적인 정치참여와 주권자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함.

-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반드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그 성과를 총선에서 실질적 세력화로 이뤄내야 함. 이것을 바탕으로 과감한 집권 플랜을 구성해야 함. 한국사회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되는 진보대연합도 이런 장기적 전략에 대한 합의과정이어야 함.

- 대중운동은 진보정당의 통합적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 또는 비판하면서 진보진영 전체의 집권플랜을 구성하는 과정에 일 주체로 참여해야 할 것임.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한 활동이 요청되는 바, 한국사

회당과 민주노동당 등 현존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국가대안을 치열하게 논쟁하며 동시에 대중운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 앞으로 '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진보정당-사회운동 대토론회' 같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함.

사회운동포럼

말(語)도 안 되는 대학구조조정을
말(抹, 없애다)하다



	워크숍 기획 내용
<p>○ 일시 : 9월 1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p>	
<p>○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7호</p>	
<p>1) 취지와 목표</p>	
<p>정부는 대학을 구조조정 한담시고 국립대학을 마구잡이로 없애고, 기업과 긴밀하게 손을 잡아 돈을 벌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비민기학과의 폐지 혹은 정원감축,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운영, 학교기업으로 수탁사업, 특성화란 이름으로 모집단위 바꾸기, 등록금 올리기 등 급격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하나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은 청년실업난의 가중과 학교발전 이데올로기에 묻혀 이렇다 할 대응흐름이 없는 가운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학의 병폐는 더욱 악화되길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은 단지 대학내부를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입학 이후에도 지속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와 행동을 제한받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도 기업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된 지극히 편향적인 지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p>	
<p>이에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대학주체들의 힘을 모아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을 넘어서는 기획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재구성을 전망하기 위한 단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p>	
<p>2) 행사 진행안</p>	
<p>주발제 :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현황과 과제 - 배태섭(진보교육연구소)</p>	
<p>지정토론 :</p>	
<p>홍성학 교수노조 교권실장</p>	
<p>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특위 위원장</p>	
<p>김태균 (가)민중학부모회 공동대표</p>	
<p>전국대 학생교육대책위</p>	
<p>전체토론</p>	

■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과제

대학교육 전략위크삼 기획단

했수로 3년째, 대학구조조정은 진행중이다. 정부와 자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학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의 절박함과 시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대체로 한결같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질(質)에 좌우되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은 대학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 즉 국제환경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지금의 대학은 너무 규모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며, 산업수요와 맞지 않은 학과들이 난립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과와 학교를 과감히 없애 첨단산업 중심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욕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중인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 원의 예산투입과 각종 범용정비를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생산은커녕 현재 대학은 부실한 교육환경, 각종 부패와 비리, 폭등하는 등록금 등으로 인해 대학주체들의 불만과 분노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가중되는 청년실업난으로 대중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육비 지출과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대중들은 기업수요에 적합한 학과 중심의 특성화가 취업난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구조조정의 결과 학교와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 속에서 얼마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대학의 문제는 시장원리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원리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대학부실화는 사학자본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해 심화확대되었으며,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학생교직원사회에 퍼지면서 대학과 학문이 죽어가고 있다.

1.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대학재편

가. 자본의 위기가 초래한 대학의 위기

과거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과 산업자본의 수요 충족이라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대중들의 계층상승의 욕구가 결합되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던 남한의 대학은 이제 명실상부 대중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고도의 산업성장과정에서 대학은 국가와 자본에게 고급 노동력의 공급을, 개인에게는 부와 지위의 획득을 제한적이거나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 해서 양적팽창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자본의 축적위기로 인해 이제 대학은 과거와 같이 개인에게 신분상승과 지위획득의 혜택을 더 이상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대학은 '과잉노동력'을 양산하며 계층상승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자 '상위권' 대학진학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기존의 대학서

열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명문대학, 인기학과로의 집중현상이 벌어지는 한편,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개인간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 상위교육기관의 진학이 확대되고 경쟁은 상급교육기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배 이데올로기들은 대학이 변화된 환경과 수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빌미로 대학을 재편하려 한다. ‘다양화특성화’란 명분으로 ‘장사가 안’ 되는 대학과 학과를 대폭 없애고,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적인 구조조정과 편중된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수만 살아남으려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기업예속화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발을 통해 해외 교육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교육시장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재편은 현 국면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교육모순의 격화로 인해 표출될 수밖에 없는 대중의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이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대학진입에 성공했지만 폭등하는 등록금,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립대학, 부실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은 주체적인 학문탐구와 생산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며, 대학인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교육의 이수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리라는 기대심리에 균열이 가해지면서 교육모순은 격화되고 대중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대학교육은 과잉교육 상태를 넘어 부실교육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교육이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대학교육을 위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에 발 벗고 나서면서 학력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낭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소수 상류층은 서울대 졸업장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미권 유학을 통해 지배 엘리트로의 진입을 노린다. 이는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선별적인 보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즉 고향력과 고임금을 연동시킴으로써 임시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대중적 불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대학교육의 실패를 대학과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관리하고 노동자 계급의 내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는 뚜렷한 교육적 목적과 원칙 없이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목적과 산업자본의 부흥에 조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정원을 급격히 확대하였고, 그것도 개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즉,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인가와 정원확대를 통해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학의 양적 규모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도까지 확대되었고, 교육환경의 변화는 양적 팽창을 뒷받침 해주지 못한 채 더욱 열악해졌다. 한편 90년대 후반 자본의 축적위기로 인한 청년실업난은 대중들을 더욱 경쟁에 몰아넣으며 지방대학과 비인기학과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면서 학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었고, 정부와 자본은 이를 심분 활용하여 대중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선별과 배제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나. 지식기반사회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무엇보다도 현재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론이다. 이제 ‘지식’이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됨에 따라 지식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

원 개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노동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체계가 요청된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창조적인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대학이 수행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남한 자본은 이미 97년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화 정책과 노동의 유연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재벌구조조정은 ‘빅딜’ 을 통해 과잉자본을 처리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금융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고, 미국식 ‘신경제’ 의 환상 속에서 정보통신 벤처가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도 ‘지식정보화사회’ 라는 담론이 자리를 잡게 된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자본의 산업구조 재편이 제조업에서 첨단산업(IT, BT 따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에 걸맞게 노동력 양성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선전되고 있다. 결국 지식기반사회론은 과거 수출지향 제조업중심에서 벗어나 ‘지식’ 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보고 다수의 표준적 기능인력보다 소수의 창조적 두뇌인력이 중요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부각된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는 그야말로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자본의 투기와 착취를 미화할 따름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바탕이 되는 정보기술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금융화를 촉진시켜 투기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개를 치도록 해왔다. 또한 벤처업계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장시간의 초과근무와 저임금이 있었고, 스톡옵션의 환상에 젖은 노동자들의 초과착취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와 자본의 금융화를 통해 이윤을 뽑아내는 체제라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만연한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담당해왔던 공공영역, 특히 교육부문은 유연한 노동력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국가는 실업과 양극화 등에 대한 적절한 위기관리대책 정도만 마련하고, 자본이 직접 교육부문에 개입하여 자신의 변화된 생산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찍어내고자 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자본의 불만은 사실 실업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연화된 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통해 소수의 고급지식노동자를 선별하고, 기타 나머지 대학에서는 유연화된 노동력 생산을 위해 산학협력이란 이름으로 학교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계약학과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모집이 요원한 지방대학들의 경우 취업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천편일률적인 ‘특성화’ 를 시도하고 있다.

다. 지역분할과 대학의 기능분화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계획은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남한을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편입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신자유주의 블럭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IT/BT R&D 클러스터, 물류중심, 비즈니스(금융)거점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토를 이에 맞게 재편하려는 계획이 뒤따른다.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으로써 예컨대 인천, 부산, 광양 지역은 동북아 허브 함판공함으로 개발하여 물류중심지로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초민족 기업과 금융기관 단지를 조성하는 금융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수도권에 자본과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성화된 ‘균형발전’ 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수도

를 이전하고 기존의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국가 플랜의 전진기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화는 그저 레토릭으로 부가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일국 내부에서 기능적 분할을 초래하며 첨단 세계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은 특정한 기능중심의 경제구조로 살아남을 것을 강요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겐 농업기반이 무너지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사활을 걸고 투자개발을 유지하는 것 외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는 철폐된다. 넘쳐나고 있는 각종 특구정책(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덕R&D 특구)과 골프장 유치 계획 등은 이러한 계획이 반영된 산물이다.

이러한 지역의 기능분화 구상에 따라 대학도 핵심도시의 기능을 뒷받침할 지배 엘리트의 양성과 지역의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맞춤형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화된 기능의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따른 대학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바, '세계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이 그것이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이들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지배 엘리트 양성 기지로 재편하려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유치를 장려하여 외국유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반면 지방대학은 대학간 통연합, 퇴출, 정원감축으로 양적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며 지역경제를 위한 하급 노동력 양성소로 맞추려 한다. 물론 외국대학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게 되면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러한 기능 분화를 위해선 국가의 간섭과 통제는 불필요함은 물론이다. '경영 합리화'란 명분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덜고자 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라. '교육' 없는 인적자원정책

정부는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조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변화는 산업구조재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며 선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노동력통제전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구조의 재편에 맞지 않는 대학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차등적 행재정적 지원, 교육체계의 계층적 분화와 경쟁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롭게 노동력 양성체제를 재편해 나간다.

정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하에서 지식기반경제론을 들먹이며 신성장동력(IT, BT, 금융, 법률)을 중심으로 한 핵심인력 양성이 경제활성화의 방편이라 떠들고 있으며, 대학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제지표에서 드러나듯 남한의 대학은 전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력의 양성을 위해선 국제 기준에 맞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개입을 과감히 없애고, 시장이 직접 개입하여 대학을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현황

가. 양적 축소

○ 대학 통폐합

대학구조조정의 목적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교육비용의 개인화다. 따라서 국립대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감축과 통폐합으로 국립대의 규모를 줄이고, 법인화를 통해 운영책임과 비용을 개별대학과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8쌍의 국립대학 간 통폐합이 확정되었는데, 대부분이 지역 거점 종합대학에 인근의 산업대나 전문대가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다루기 손쉬운 국립대학만 없애면서 국립/사립 간의 비정상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190> 국립대 통폐합 현황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감축인원	비 고
	A대학	B대학	A+B			
공주대(A)+천안공대(B)	2,805	1,112	3,917	3,215	702	' 04통합
강원대(A)+삼척대(B)	3,475	2,105	5,580	4,915	665	' 05통합
부산대(A)+밀양대(B)	4,270	1,260	5,530	4,595	935	-
전남대(A)+여수대(B)	4,310	1,280	5,590	4,911	679	-
충주대(A)+청주과학대(B)	1,840	720	2,560	2,005	555	-
강릉대(A)+원주대(B)	1,760	1,008	2,495	2,037	458	' 06통합
총계	18,480	7,485	25,672	21,678	3,994	

* 2007 통합 확정 : 전북·익산, 원경·재일·복지대

반면, 난립해 있는 사립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은 줄어들기는커녕 늘고 있는 추세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국립대학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표 192〉 대학 수 변동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학	국공립	26	26	26	26	26	26	26	26	25
	사립	130	132	135	136	137	143	145	147	150
산업대학	국공립	8	8	8	8	8	8	8	8	6
	사립	11	11	11	11	11	11	10	10	8
전문대학	국공립	15	16	16	15	16	16	15	14	13
	사립	143	145	142	143	143	142	143	144	139
<p>사립대 신설(개편) 현황</p> <p>00 : 동해대(개편), 명신대, 목포가대(개편), 여원대</p> <p>01 : 부동산신대</p> <p>02 : 한국정보통신대</p> <p>03 : 금강대, 대구외국어대, 성민대, 아시아대, 여수간호대(개편), 진주국제대(개편)</p> <p>04 : 한북대, 광주대(개편)</p> <p>05 : 경북외국어대, 신경대</p> <p>06 : 건동대(개편), 백석대(교명변경), 동명대(개편), 명산대(개편)</p>										

○ 대학 통폐합

〈표 193〉 대학별 입학정원 변동 추이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학	국공립	정원	86,845	87,875	87,594	87,897	88,358	87,791	87,485	86,300	84,322
		증감	△1,510	△1,230	▼281	103	881	▼587	▼328	▼1,185	▼1,978
	사립	정원	238,950	243,385	248,818	249,083	255,951	259,249	260,275	257,237	258,785
		증감	△21,425	△4,415	△3,451	△2,287	△6,868	△3,298	△1,028	▼3,038	▼452
교육대학		정원	4,285	4,285	4,735	4,735	1,855	5,015	5,815	6,015	6,015
		증감	—	—	△450	—	△120	△180	△800	△400	—
산업대학	국공립	정원	12,300	12,760	12,990	13,255	13,850	13,900	13,900	13,531	9,705
		증감	—	△460	△230	△265	△395	△250	—	▼369	▼3,826
	사립	정원	18,010	18,305	19,985	19,985	20,795	21,293	17,778	16,388	11,882
		증감	△2,300	△295	△1,860	—	△830	△498	▼3,515	▼1,410	▼4,486
전문대학	국공립	정원	11,380	12,120	12,510	11,550	11,828	11,754	11,458	10,023	9,111
		증감	△2,880	△740	△390	▼980	△278	▼74	▼298	▼1,435	▼912
	사립	정원	287,250	282,130	281,885	280,485	281,348	274,188	285,785	258,087	238,493
		증감	△27,100	△14,880	▼485	▼1,180	△881	▼7,178	▼8,403	▼9,898	▼17,574

〈표 4〉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감축 계획인데, 2004년부터 5년 동안 입학정원을 5만 명 가량 줄이되 주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로써 양적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현실적 근거가 바로 신입생(=돈) 확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정원감축의 실질적 효과는 어차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허수(虛數)를 없애는 것일 뿐이다.

〈표 194〉 연도별 입학정원 감축 계획

구 분	' 04	' 05	' 06	' 07	' 09	감축인원 (' 04 대비 ' 09)
	계	219,665	218,912	213,647	212,619	212,430
수도권	422,591	406,629	382,259	380,935	378,880	43,711 (10.3%)
지방	642,256	625,541	595,906	593,554	591,310	50,946 (7.9%)
전국		16,715	46,350	48,702	50,946	
누적감축인원		(2.6%)	(7.2%)	(7.6%)	(7.9%)	

나. 수직적 위계서열화 : 연구중심 / 교육중심 / 직업기술중심의 위계화

○ '상위권' 대학의 승자독식

정부의 대학 지원 방식은 '선택과 집중' 으로 특정 '상위권' 대학에 몰아주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대표적 예로 BK21 사업(1999~2012까지 총 3조 6천억원 규모)은 사실상 서울대가 독식을 하였고, 대학구조조정 사업,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지원액이 큰 굵직한 사업은 대부분 현 대학서열 순위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다.

〈표 5〉 2단계 BK21 대학별 지원액

연 번	대학명	선정 분야					지원액 (백만원)
		과학기술	인문사회	전문서비스	핵심	합계	
1	서울대학교	15	10	3	16	44	49,728
2	연세대학교	13(1)	9	3	8(2)	33	25,532
3	고려대학교	11(1)	9(1)	2	6(1)	28	20,091
4	성균관대학교	10	8	2	8	28	15,874
5	부산대학교	13	5	1	14	33	15,872
6	한양대학교	9	-	1	18	28	15,448
7	포항공과대학교	8	-	-	1	9	11,939
8	경북대학교	7	1	2	5	15	11,652
9	한국과학기술원	8	1	-	7	16	10,619
10	전남대학교	7	4	2	14	27	8,822

<표 6>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액 (백만원)

		대학명	2005	2006	2007	2008	합계
'05년 선정	서울대학교	3,835	1,913	2,551	1,913	9,712	
	고려대학교	2,852	1,987	2,582	1,987	7,371	
	성균관대학교	3,808	1,950	2,600	1,950	10,308	
	인하대학교	3,570	1,831	2,442	1,831	7,843	
	이화여자대학교	2,716	1,795	2,393	1,795	8,904	
	연세대학교	2,827	1,751	2,335	1,751	8,484	
	한양대학교	3,738	1,918	2,557	1,918	10,131	
	경희대학교	3,704	1,905	2,540	1,905	10,054	
'08년 선정	동국대학교	-	5,902	1,967	891	7,869	
	중앙대학교	-	6,098	2,033	921	8,131	
합 계		23,010	27,000	24,000	16,812	86,782	

여기에 더해 로스쿨, 의치화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이미 상위권 대학에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군 공여지 특별법, 평택 특별법으로 인해서 경기도내 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해져, 수도권 팽창과 더불어 대학들의 캠퍼스 확장이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평택(성균관대), 파주(이대, 서강대), 송도(연세대, 인천대, 가천의대, 인천가톨릭대), 포천(한서대, 적십자간호대), 남양주(상명대, 삼육대, 경북대), 연천(서울산업대), 의정부(광운대), 일산(동국대) 등 지방대학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더욱 팽창하며 서열체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지방대 및 전문대는 저렴한 노동력 양성소로 재편

NURI 사업은 지방대를 산업인력 양성소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작년까지 7,200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주로 양적지표(교원확보율, 취업률)로 사업지원 여부를 평가하면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바, 기업의 요구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거나 이마저도 오직 취업을 위해 운영되면서 대학이 특정 기업의 취업준비를 위한 예비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다.

<p>2007년 3-7월 강의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biz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 서영석 (대표, (주) 블루소프트) 2.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IT 인재상 -이혁동(대전 지사장, 픽스소프트(주)) 3. 한국 IT 산업의 공동화 현상과 동남아 및 동유럽 진출방안 - 박성병 (이사 (주)피아이) 4. 한중협력방안 및 IT 인력 중국 진출전략 -남중희(수석대표, 사단법인 북방권교류협회최중국대표부) 5. 나의 LG 20년 - 윤관식 《재》충북테크노파크) 6. IT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역할과 자세 - 장래현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

얼핏보면 IT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누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강의 계획 중 일부이다. 기업인들의 일회성 강의로 꾸러진 이 강의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누리사업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문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겉으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누리사업은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취업률 수치는 허수가 많다. 취업자의 대다수는 산학협력을 진행했던 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취직되기 일쑤이며 심지어 실습/파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습득보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모의 면접, 포트폴리오 제작, 어학능력 등의 극히 지역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미취업자는 그간 트랙이수의 지원비용에 털미를 잡혀 파견직, 비정규직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그저 숫자상으로만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신입생 유치에 바쁘고 정부는 이를 누리사업의 효과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실용적’ 학문으로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였거나, 기업과의 연계로 ‘성공적인 취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도태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다.

다. 내적 제편

0 선택과 집중으로 획일화

고등교육 재정 규모

- ⊗ 대학의 총 예산규모('05) : 21조 9,175억원 (GDP의 2.6%)
- ⊗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예산('06) : 3조 2,840억원 (교육부 예산의 11.3%)
 - 국립대 인건비, 운명비 제외한 사업비 : 1조 7,206억원 (교육부 예산의 5.9%)

이제껏 정부는 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하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강제협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이 평가와 연계되어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부제 실시, 산학협력 강화, 정원감축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조 7천억원 가량의 고등교육 사업비가 모든 대학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몰아주면서(선택과 집중) 대학들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대학이 비슷비슷하게 획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교육부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승자독식 시스템이 오히려 대학의 다양화를 해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NURI, 수도권특성화, 산학협력중심대학, 학교기업육성, 커넥트 코리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산학협력단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지만 이름만 있을 뿐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학부제도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정부가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대학들이 앞다퉈 무분별하게 학부제나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과거 학과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나타

나고 있다.

〈표 7〉 교육부 주요 사업비 항목별 내역 '04~'07 (단위: 억원)

항 목	04	05	06	07
대학구조개혁	-	800	700	520
수도권 대학 특성화	-	600	600	600
고등교육평가운영	12.8	15.3	37.4	19
NURI	2200	2400	2600	2594
전문대 혁신 프로그램 개발보급	-	-	6	6
협약학과 지원	-	-	14	-
직업교육혁신센터 지원	-	-	-	10
산학면 협력체제 활성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 지원, 학교기업 운영지 원, 커넥트 코리아,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지 원)	300	450	500	500
BK21	1800	1850	2900	2895
전문대 특성화	1680	1680	1680	1680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50	100	100	100
의치학 전문대학원	55	64.6	74.6	74.6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2264	3138	1205	1505

○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2004년 4월부터 일본의 국립대학이 독립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국내에도 이를 모델로 한 '국립 대학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람은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신 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등을 내세우며 국립대학 민영화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립대학의 재정, 조직, 인사, 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법인화 이후 자체회계가 도입되면 국고지원은 줄어들면서 수입구조는 불안정해진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엔 등록금을 대폭 높이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자체수익사업의 경우 이미 국공립대학에도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우며 대학 스스로가 효율적인 경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배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수익자부담'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를 내걸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성회 직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 '자율'로 포장된 대학의 기업화

최근 노골적으로 사학의 영리행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기업 운영 금지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축소하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이 허용된다. 백화점,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도박장 운영 등의 업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를 대폭 허용하여 대학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자금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따라 학교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적립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허용해줄 참이라 ‘자율’ 을 내세워 대학의 기업화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C 기업의 직접 지배

고려대는 전 어운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화수 강의실', '김승유(하나은행 회장) 강의실', '이명박 라운지', '100주년 기념 삼성관', 'LG-POSCO 경영관', '하나 사이언스파크', 'CJ인터내셔널하우스', 'SK 정보관', '대양상선 법대 도서관' 등이 건립되거나 계획되었다. 어운대 총장은 '말레이시아 SDI 현지화 전략', 'LG 특론' 등의 교과목까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LG전자에게 학생선발권, 교과목 설계권, 계약교수 파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웅진그룹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대신에 석좌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줬다. 퇴직 재벌임원들에게는 교수자리를 보장해 주기도 했다. 이미 6명의 기업인들이 경영대 교수가 됐다 ("대학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위한 전국 간담회" 자료, 2007년 7월 13일).

C 교원노동 유연화

2006년 현재 시간강사 수는 3만 3천719명으로 전체 교원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시간강사들은 전공강좌의 38.3%, 교양강좌의 60.6%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은 4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C 외국대학 유치의 허구성

모순적이게도 국내 대학의 규모는 줄이려 하면서 외국대학, 특히 미국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허황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여러 면에서 무모하고도 위험한 짓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유학생 수가 미국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대학들의 경우는 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아무리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에서 혜택을 준다면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4년제 정규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어떤 고등교육기관이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을까? 2년제 단기과정 대학이나, WTO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훈련 서비스' 를 제공하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정부가 유학수지 적자 해소라는 실현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의 진출을 허용해줄 채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법인대학은 2년제 대학 중 29%, 4년제 대학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재투자하기도 한다. 즉 수익창출이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나 여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수업료 또한 비쌀 것이다.

영리형 고등교육기관이나 학원들이 해외 현지에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사무소만을 설치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또한 2년제 단기과정은 정식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외유학 수요는 결코 줄지 않는다. 주로 직업훈련 서비스로 강사를 하는 학교나 학원들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목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을 남발하며 서비스업종에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된다.

3.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결과, 정부가 다루기 손쉬운 국립대학을 축소하는 반면 사립대학 신설허가를 계속 내줌으로써 사립대학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사사(私事)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지방대학들이 정원감축이나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줄이는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감축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오히려 경기도로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성화란 명분으로 정원규모를 줄이면서 비인기학과를 축소·폐지하고, 기업과의 밀착연계로 취업에서의 유리함을 앞세우는 형편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의 취약한 재정구조 하에서 주로 재정지원을 미끼로 강제협박하는 형식을 취해왔는데, 특히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할 때 전제조건으로 산학협력, 정원 충원을 같은 지표를 내걸어 구조조정을 강제한다.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의 고등교육 사업비가 모든 대학에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몰이주면서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특성화’ ‘세계화’를 떠들어대지만, 결국엔 신입생 끌어들이기 경쟁이 빚어낸 사태일 뿐이다. 입학지원자의 감소, 상위권 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란 외적 조건 속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별다른 걱정없이 오히려 캠퍼스를 확장하려는 한편, 지방대학들은 한 명의 신입생이라도 붙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현재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은 학문경쟁, 연구경쟁이 아니라 신입생(=돈) 유치 경쟁일 뿐.

대학을 수직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대중/엘리트 분할을 강화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 복무하는 지식만을 생산함으로써 대중들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 가중되는 실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이 자신의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대학의 재편은 대학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재생산 시스템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심각하다.

4.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와 투쟁방향

가. 대학주체들의 조건

구조조정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며, 현재 대학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빗발치고 있으며, 입체적이고 총체화된 구조조정 드라이브가 진행중이다. 게다가 대학은 이미 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실내용과 효과가 어떠한 구조조정 계획은 대학주체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대학들이 철저히 자신의 요구에 부응해왔기 때문에 서울의 소수 상위권 대학과 지방의 일부 기초학과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으며, 지방대학은 특성화 전략으로, 대학 본연의 학문생산 기능은 소수 연구중심대학이 담당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괜찮은 일자리’, 즉 전체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일자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 14만개도 채 못 된다.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존적 고민은 사치이고,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건 낭비가 된다. 12년 간의 공식적인 입시경쟁을 거쳐 간신히 대학에 입학했지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경쟁이다. 1학년 때부터 화점경쟁, 영어점수따기,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어 다른 생각을 하게끔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배우는 학문이, 내가 속한 학과/학부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다. 연대의식이 형성되지 않고 파편화분절화된 20대 개인들의 ‘짜가지’ 없음을 욕할 일이 아니라 20대의 미래를 꺾어간 비상식적인 사회 구조를 먼저 이해할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대학재편에 대해 왜 이렇다 할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먼저 현재 학생들이 처한 존재조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20대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5%의 확률도 안 되는 정규일자리를 향한 무모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 대학개혁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지표

c 자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학으로

폐쇄적인 대학운영, 자치활동에 대한 탄압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 대학구성원들의 자치기구를 공식 인정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이들 대학주체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c 인민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고 이를 불평등한 계급관계와 연동함으로써 대중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조차 박탈하고 있다. 철저히 사유화된 고등교육을 인민들의 보편적 권리로 격상시켜야 한다. 언젠든, 어디서든, 원하면 누구나,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

회와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C 자본의 가치증식에 복무하는 지식이 아닌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식생산을

현 교육제도는 지식의 위계에 따라 대중들을 분할하고 차별하고 있다. 이에 대중들은 지식 그 자체를 습득하고 전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이란 계 산화협동을 필미로 자본이 대학을 직접 지배 통제하면서 전쟁기술 생산, 생태파괴 등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자본과 국가에 종속된 지식이 아닌 만인을 위한 지식생산 기지로 대학이 거듭나야 한다.

C 현존 지배질서에 순응하는 주체가 아닌 새로운 주체형성 과정으로

학교교육은 학력을 준거로 위계적인 노동 분업구조(육체/지식노동)에 배치함으로써 위계적인 노동분할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분할지배전략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핵심적 기능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해 대중/엘리트, 육체노동자/지식노동자 분할이 재생산되면서 현존 지배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간파하고 이에 저항함으로써 재생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저항주체 형성에 복무해야 한다.

C 일상적 삶의 실천과 운동의 과정으로서의 교육으로

대중 내부를 끊임없이 차별하는 분할선의 경계를 넘어 일상적인 자기교육으로 민족적 틀을 벗어나 보편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다. 투쟁방향

C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공동투쟁을 시작하자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인식지반은 협소하며, 이에 대한 대응 또한 미약한 수준이다.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의 경험은 재단비리와 같은 학내 사안에 국한되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예비교사들은 임용문제), 직원들은 임금, 교원들은 임용비리 및 비정규 교원 문제 등 개별사안마다 각기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대학별로, 사안별로도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분석한대로 현재 구조조정은 대학주체 어느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으며,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올바른 대학의 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대학주체들의 공동투쟁의 기풍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동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상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단위별로, 개별대학별로 투쟁

하고 있는 사례들이 널리 공유되어 연대의 땅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선은 각 대학주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 속에서 투쟁의 지점을 형성해 나가고, 그러한 투쟁의 장들이 서로 교통하며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저지' 라는 일관된 흐름과 공동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C 목표

-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을 대학사회에 확산시킨다.
- 정부의 대학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 고등교육에 대한 발본적 대안 논의를 촉발한다.

<p>※ 실천 과제들(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전국 대학 순회 토론회 - 대학구조조정 전국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심모사 모집단위 변천사, 비인기학과를 축소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오던 모집단위 변경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는가. ·학교별 산학협력 실태 조사, 기업이 세운 건물들, 학내 상업시설 현황, 학교기업,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 ·취업들의 거품을 걷어라. 공식 발표된 취업들의 실상 까발리기 ·학교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 교직원 점수를 매겨 퇴출을 시켰다는 총학생회, 노트 빌려주기는커녕 대리출석 부탁도 못하는 학생들, 입학하자마자 학점따기 경쟁, 공무원시험, 자격증 따기, 고시에 매달리는 학생들. - 국정감사 자료 활용, '전국 대학의 철학과가 0개 없어졌다' '00대학은 국고지원금을 허투루 썼다' 등의 분석결과 발표. - '진보적 대학의 상' 제시, 사회적 논의 확산 - 대선시기 사이버후보 실천단 활동, '내가 바라는 대학 만들기' - 학내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
--

[토론회]

사회운동포럼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워크숍 기획 내용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서는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오후3시~6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6호

1) 취지

- 반빈곤토론회는 빈곤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오늘날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핵심적인 투쟁과제를 밝히는 계기
- 반빈곤토론회는 노무현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중의 보편적인 생활권으로서 요구해야 할 소득보장방안, 사회복지보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 반빈곤토론회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확대되는 빈곤에 맞서 사회운동이 어떠한 투쟁과 연대를 활성화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토론하는 계기
- 반빈곤토론회는 반빈곤운동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계기

2) 주된 토론 쟁점

- ①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반빈곤 대항담론 모색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심화 양상을 진단
 - 신자유주의 복지/사회정책개혁의 문제점을 진단
 - 반빈곤운동 모색을 위한 빈곤의 개념 규정
 - 사회적 빈곤, 신빈곤, 사회양극화, 사회적 배제 등 빈곤인식 틀에 대한 고찰
 - 반빈곤운동 주체형성을 위한 반빈곤운동의 대항담론 모색
- ② 보편적인 소득보장, 복지에 대한 전망과 기본생활권의 개념 공유, 토론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소득보장, 사회복지 보장방안을 모색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안담론의 발굴과 실천과제 모색
 - '기본생활권'의 개념을 공유하고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한 운동의 과제 모색

워크숍 기획 내용

③ '반빈곤' 연대운동의 과제와 운동 주체 형성을 위한 과제 모색

- 반빈곤운동의 현재적 주체들의 현황 점검
- 각각의 사회운동과 반빈곤운동의 결합지점, 결합방안을 모색
- 대중운동으로서의 반빈곤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주체형성 고민.

토론회 내용

□ 제목: '빈곤과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서는 반빈곤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2007년 9월 1일(토) 15: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 참가대상: 반빈곤운동을 모색하는 사회운동 활동가, 회원

□ 순서

발제1_ 반빈곤투쟁을 위한 반빈곤 대항담론의 모색(사회진보연대 이진숙)

발제2_ 반빈곤운동 전략과제와 연대운동의 전망 모색(빈곤사회연대 강동진)

토론1_ 반빈곤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민중복지연대 이정면)

토론2_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 전략(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토론3_ 반빈곤 전략과제 의견 및 반빈곤 연대운동에 대하여(전빈련 최인기)

토론4_ 인간답게 살 권리, 반빈곤운동의 다른 이름(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종합토론

반빈곤투쟁을 위한 반빈곤 대항담론의 모색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복지개혁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의 양상

1) 세계적 수준에서 빈곤의 확대 경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곤인구가 급증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등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지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약 11억 명에 달하며,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27억 명을 넘는 수준이다⁵⁶⁾.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빈곤인구 숫자는 증가했지만, 빈곤율(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인구 증가 뿐 아니라, 빈곤율 변화의 지역적-대륙별 편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경험한 동아시아의 경우 1980년대 초 57%대를 차지하던 극단적 빈곤인구(하루 1달러 이하로 생존) 비중이 2000년 초가 되면 15%로 감소했다. 그러나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경우 1980년대 초 극단적 빈곤인구는 불과 0.7%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초에는 4% 수준으로 증가하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약 10% 수준으로 그 수치가 변화가 거의 없다. 또한 상대적 빈곤층이라 불리는 인구는(소비, 소득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하던)동아시아를 제외하고 전 대륙에 걸쳐 증가했다.

56) 사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발전 국가들의 경우 국가 차원의 공식적 빈곤집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대부분 유엔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개발목표 수립, 원조계획(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이들 국가들에 강제하는 것이다) 등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것이다. 빈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이후, 빈곤측정, 빈곤기준 등 빈곤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쟁점이 되어왔다. 한국에서도 바로 얼마 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는데,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이 큰 쟁점 중의 하나였다. 빈곤선 채택의 문제는 기초법(공적부조), 최저임금 등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나 빈곤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나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반빈곤운동의 관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의 공식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빈곤으로부터 빈곤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를 넘어, 실제 인간다운 삶의 기본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회적 불평등이 어떤 양상으로 확대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선전과 폭로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미국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고 있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13%에 이르며, 상대 빈곤층은 20%를 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1996년 13.7%에서 이른바 신경제호황이라 부르는 2000년 일시적으로 감소해 11% 수준을 보이지만, 그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 효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세계 유동 자본의 대부분은 몇몇 중심부 국가(특히 미국)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이들 국가들에게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따라서 1960-70년대 이윤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자본의 운동이 전환했다는 ‘금융세계화’ 관점 아래서 본다면, 중심부 국가(의 금융자본)들이 얻는 금융적 이익은 천문학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은행, IMF 등의 각종 국제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은 초민족적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며 막대한 강제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소득의 흐름과 분배구조의 변화),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절대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국가 경제기반의 침식).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 빈곤율의 증감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빈곤정책, 복지정책,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경향이 핵심적이며, 이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복지개혁(국가의 빈곤층 지원 예산의 감축,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2)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추세에 있던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곤율의 일시적인 감소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변함이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60만 명)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율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는 기초법 수급신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많은 분석들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인구를 1000 만 명에 가깝게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 특질이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장애인, 노인 등 노동무능력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던 '전통적인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또한 그를 넘어 빈곤의 대상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의 증감이 실업과 비례하여 나타났던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듯하다.

또한 빈곤의 확대가 단지 절대빈곤층 비율의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 불평등의 급격한 확대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도 증대했다. 여기서 과거에 빈곤과 관련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다양한 쟁점들이 개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 문제, 그리고 사회보험 제도를 대표로 한 복지제도 수혜의 근본적 불균등성, 공적서비스의 사유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부나 주류 복지제 내에서는 복지제도의 보상정도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제도적 변화가 활발했다. 이와 같은 대응의 흐름들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것은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체계'의 구축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⁵⁷⁾ 그러나 단순한 빈곤 수치의 증가만을 보아도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공염불에 불과했는가, 혹은 불가능한 접근이었는가는 명확히 확인된다. 한편, 빈곤의 일차적 원인이 실업이라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실업의 감소를 통한 빈곤의 감소, 즉 국가가 실업의 관리를 통해 빈곤을 통제하는 것은 극히 한계적인 상황이 되었다.⁵⁸⁾

3) 노동빈곤의 확대

이른바 극단적 빈곤층, 절대적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 역시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다. 이는 통상 소비, 소득의 중간 값의 3-50% 수준을 기준선으로 잡는데, 이러한 층에서의 빈곤율의 증가는 아프리카 등의 극도의 저발전 국가 보다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동아시아도 그렇고, 특히 남아시아처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절대빈곤율을 감축한 일부 지역-국가들의 경우도,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중간빈곤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다.

57) 복지의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은 '복지국가 위기' 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이 그와 같은 정책 방향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데, 사실 '예방적 접근'이라는 말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아래서 개별 국가의 복지제도가 처한 딜레마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즉, 복지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전체인민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고용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은 만성적 고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대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58) 실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밀지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종 처방들이 수도 없이 제출되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빈곤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시간 당 실질임금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른바 중간 빈곤층, 잠재적 빈곤층이 현재 5,500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빈곤층 비율은 86년 전인 1968년 수준과 유사하며, 실질임금 역시 1960년대 수준과 비견될 만한 수준이다. 또한 자본이 일시적으로 이윤율을 회복하는 시점에서도 실질임금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경제, IT붐을 내세워 일시적인 성장 국면에 있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여, 1960년대 수준과 유사했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실업과 반실업의 회전문과 빈곤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의 결과이다. 부분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감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복지개혁의 일반적인 추세는 오히려 조세지원정책(EITC, 근로장려세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상대빈곤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한 공격서비스의 축소, 시장확화 저소득층의 가계소비 증대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이른바 '신빈곤'의 확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빈곤의 확대에 대해 정부, 특히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입안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복지정책이 보장하던 위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며, 이를 이른바 '신빈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맥락이 강조된다. 첫째,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 교육훈련의 접근성의 악화 둘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생산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셋째, 가족의 위기-해체에 따른 한부모 가족, 아동빈곤의 증가 넷째, 복지의 감축, 민영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후퇴, 계층별 차별화 문제 등.

이러한 접근은 현상에 대한 지적 면에서는 틀리지 않는다. 오히려 현상에만 착목함으로써 새로운 빈곤, 사회적 위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증대는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자본의 비용절감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공격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 이 양자가 맞물리는 가운데 나타난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부담 증가, 가족의 해체, 여성가구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제도의 부재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불안정성이 폭발하는 것을 지연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위험들의 대부분은 어떤 시점에 새롭게 출현한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소위 전통적인 빈곤으로 간주되어온 계 문제들 또한 해소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인, 장애인 등 노동인구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빈곤 또한 확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런 접근의 기본전제, 전통적인 사회보장책이 담당하지 못했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책의 역할을 현실에 근거해 판단하기보다 어떤 이념형, 이상에 근거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담당했던 역할조차도 붕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은 빈곤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원인을 인식하는데 한계적이며,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의 보완물로 기능하는 현실에 수렴하는 방향이다.

2.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그것이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대립적이며 복지예산의 감축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이윤율의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의 복지 후퇴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기반을 두는데, 이른바 복지국가에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시민주의적 전망과 연관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논쟁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위기가 논의된 이후에도 가시적으로 복지예산의 감축이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를 절대적 척도로 삼는 접근 아래서는 복지국가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정책내용에서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복지예산의 긴축, 정책 내용의 변화를 보다 주목하는 입장들의 경우 새로운 빈곤의 양상에 적응하는 형태의 변화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단순화 시켜 본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복지예산의 현상유지, 또는 일정한 확대,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유인과 저출산고령화의 정책기조의 강화, 사회보험 민영화의 확대 등을 공통요소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변화를 두고 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결국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이념적 토대와 그를 넘어서는 정치적 전망에 근거한 차이들인 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구축을 주도해 온 시민주의적 전망의 신자유주의적 수렴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개혁을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생산 부문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아래서 불안정노동은 일반화된다. 이는 산업구조(금융과 연계된 부문과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변형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만성적인 실업, 빈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필수적이다. 즉 구조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취업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복지, (주식, 스톡옵션,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을

등을 통한 포섭이 이루어지고, 실업, 불안정노동, 빈곤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전략으로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극도의 빈곤을 적정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은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관리전략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통치성의 구축이 과제가 되며,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제 계급, 세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특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 확산 전략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관리전략의 실행주체로 동원해 내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노사정위원회,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의 참여를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용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사회통합, 참여 등의 이름으로 뒷받침, 정당화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 아래 나타나는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 노동연계복지의 강화는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이다. 노동유인을 강화하고, 제안되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보다 엄격해진다. 이는 사회복지가 가지는 기본 전제, 즉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시적 지원이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강조할 것은 이런 가운데,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한, 즉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를 수용하게끔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적극 개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EITC, 영국의 WTC, 한국에서도 2008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정책들이다.

한편 노동시장 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던 사회보험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의 경우 노령연금을 제외한다면 구체적인 제도변화의 양상은 보다 다채롭다고 볼 수도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세계은행이 고안한 개혁안을 따라 다층체계 구축, 소득비례 부분 축소, 민간보험의 확대, 기금의 금융투자 확대를 위한 적립식으로의 전환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사회보험들, 즉 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각 국가 마다의 노동시장 구조, 산업구조, 관련 정책의 특성 등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수급 기준의 엄격화, 민간 보험의 확대는 공통적 추세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개별 노동자(실업자)들에 대한 면담, 사례관리 등 전통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입 방식은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화체계화되기 이전에 성행했던 것으로, 실업과 빈곤의 원인을 보다 개인적인 차원(학력, 기술력, 음주, 생활습관, 가족관계 등)에서 찾고, 자활의지라는 이름의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개혁 역시 많은 국가들에서 강조해대되어 왔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일과 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감소 등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가족의 역할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공동체의 자원동원 구조나 출산율, 고령화 정도,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나 형태 등을 반영하는 외양을 띤다. 따라서 노인관련 정책, 아동

관련 정책 등 그 강조점이나 예산투여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 등이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수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기본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가족 구조, 여성의 역할 등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변화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신자유주의 복지개혁

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 한국판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출발점

김대중 정부의 집권 시기는 한국의 복지개혁에 있어 매우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통상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양자는 양립이 매우 어려운 것이거나, 국가의 정책수단, 특히 사회복지, 사회정책이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앞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나타난 양면향의 결과이거나, 당시의 급증하는 실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했던 낙관적 기대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래 없이 매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고용보험 사업장확대 등 4개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행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공적 부조의 개혁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기초법과 연계된 자활사업(초창기 공공근로)의 실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복지개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역시 집권 초중반을 거치며 이루어졌다.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합리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이념으로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구조개혁 로드맵 구상에 착수하겠다는 정책과제 수립, 지방정부로 예산지원 방식의 변화(성공을 반영하는 사업별 지원제도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점으로, 구조조정, 상시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짝을 이루는 사회적 관리정책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이 아닌,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자원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복지정책이 변모해 가는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의 역할, 기조의 변화는 각종 경제위기 담론을 동원하여 대중의 비판적 인식이나 저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2)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사회적 관리전략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재구축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을 거치며, 경제위기의 적신호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통해 위기관리가 전면화된 것), 빈곤은 축소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가, 가족해체 등의 사회위기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은 배제된 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핵심 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통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경제위기 담론을 지속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배제된 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재조직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재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워 지역 단위에서부터 NGO와 같은 민간조직들을 동원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벨트 또는 매개자로 재조직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각종 복지관련 연석회의, 자활후견기관 등).

집권 초기, 각종 정책의 강조점은 '탈빈곤'에 두었는데, 그에 따라 실업, 빈곤을 감축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제도(구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인력센터 구축,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등의 정책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의 기본 기조와 핵심 요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최저생계비 인상을 매우 낮은 수치를 묶어 두면서,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컸다. 또한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정책을 구체화했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다변화했으며, 자활사업을 보다 다층화 하는 한편, 기초법과의 관계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의 핵심 요소로 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 따위를 동원하여 노동규율을 강제하면서 노동시장-복지수급의 경계를 분명히 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으로, 복지정책 자체가 노동유인을 강제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복지개혁의 주요 의제로 등장했고,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비전 2030'과 국민연금 개혁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복지정책의 위상을 노동시장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자원의 원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척하는 지향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 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복지부담의 증가가 국가의 책임, 최소한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했다.

이 같은 흐름들은 결국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그 외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사회투자정책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어 제안되고 있다.

3) 사회통합 정책, 사회투자국가: 근로연계복지의 다른 이름

사회투자국가는 영국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정책 수장 역할을 했던 기든스가 주창한 제3의 길에 기반한 정책노선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보수당의 19년 집권을 종식하고 집권했던 블레어 정부는 집권을 위해 역대 어느 시기 노동당 보다 우경화된 노선변화를 꾀했고,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등을 통해 보수당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즉, 복지에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익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책과 시민주의적 이상에 근거한 복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론을 피력하며, 그 중간 길(제3의 길)로서, 복지가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사회투자국가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것이 미국식 노동연계복지와 유럽식 전통적인 사회보장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전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고, 후자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가 핵심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인적자본(특히 아동과 중장년 층 퇴직자)에 대한 투자, ‘사후적 재분배’가 아닌 ‘사전적 배제의 타파’, 그리고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지역사회의 활용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세금과 지출을 대신하여 사회투자라는 담론을 사용, 아동과 지역사회가 상징이 되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미래 지향적(사후 대처가 아닌 위험예방), 평등을 촉진하는 소득의 재분배보다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회의 재분배에 초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사고, 표적화된 자산조사 프로그램을 선호 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연계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괄하는 유급노동학 정책, 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자산형성 접근법 등이 제시된다.

이른바 중도를 표방하는 모든 정치세력, 정책들이 그러하듯,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투자국가가 이념적 기반을 가지는 국가의 정책노선이 될 수 있는가, 실제 신자유주의와 시민주의적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투자국가가 결국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사회투자국가를 옹호하는 이들은 근로연계복지가 단지 빈곤의 탈출에 강조점을 둔다면, 사회투자국가는 (중산층 등으로의) 보다 장기적인 사회계층 이동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것은, 사회투자국가든 근로연계복지든 신자유주의 아래서의 복지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기조들은 사회양극화, 사회통합 등 구체적인 현실분석인 듯 보이는 담론들의 흡수와 함께 등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기조들이 긍정적인(positive) 방식이 아닌, 항상 다른 정책, 노선에 대한 부정적(negative) 정립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 또한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가적 전방까지를 내건 듯한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기반을 가지는 하나의 정책노선에는 미달하는 무언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앞선 정책들의 변주이거나 정치적 수사,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사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책의 형태에서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지만, 본래부터 복지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유럽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그 본류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동과 중장년층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아동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한다는 것은 인색한 복지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오히려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표적화된 자산조사를 선호한다는 내용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지원의 확대, 자산형성⁵⁹⁾의 강조 등 일면 새로운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 비판의 맥락에서 오히려 더 풍부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결국 사회투자전략은 근로연계복지를 보다 확장된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4) 복지개혁 담론 비판 : 사회양극화/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사실 사회투자국가든 정책적 내용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사회통합, 사회양극화 등의 담론의 측면에 주목했을 때 그 실체와 의도가 명확해 진다. 사회양극화라는 말은 자본의 위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낳은 각종 양극화(노동시장, 산업, 소득 등), 특히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분석하는 개념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극화된 구조 전반,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우회하여 특정 계층(중산층)의 소득, 소비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실제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위해 지배계급이 내놓는 처방은 최근의 비정규보호법으로 상징되듯 비정규직의 사용을 더욱 확대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의 정책은 인력채용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조세감면 등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빈곤의 핵심 원인인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의 부담을 덜어 주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구조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사회통합 담론의 경우 현재의 만연한 실업, 빈곤 등의 사회위기를 탈빈곤과 같은 경제적(임금과 소득)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자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공동체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개입함으로써 심리적 배제를 극복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59) 이동에 대한 투자의 강화의 맥락에서 강조되며, 한국에서도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빈곤 이동을 선발하여 이동의 앞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밀정액의 정부지원금, 민간의 후원 등을 매월 적립하여(대략 3-4000만 원 정도의 액수), 이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비판할 것은,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임금, 소득의 문제를 상대화, 주변화하거나 고작해야 근로연계복지식 처방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가 확대는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다.

결국 사회통합 담론의 적극적 활용은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의한 노동의 불안정화에 순응하도록 하는 한편, 사후보완 조치들에 대한 국가의 의존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략 아래서의 사회적 배제 집단의 능동적인 주체화에 대한 강조는 매우 위험한 효과를 낳게 된다. 이들은 결국 자본의 필요와 위기적 조건에 따른 불안정노동자층(산업예비군), 실업자(잉여인구)들인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인식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배제의 원인을 다른 집단, 대표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들에게서 찾게끔 한다. 즉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대항하고 그 수혜를 누리는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 이주노동자의 권리 박탈,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제한다. 신자유주의 저함 주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반동적인 사회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대응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신자유주의 금융화 비판),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한 국가의 책임 강제 뿐 만 아니라, 이와 같이 횡행하는 복지개혁 담론의 위험한 효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는 것, 나아가 적극적인 대항담론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반빈곤운동 전략과제와 연대운동의 전망 모색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한 운동주체형성을 위하여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빈곤’은 빈곤층 인구 700만이라는 양적 숫자에만 담겨 있지 않다. 물론 양적 숫자는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모티브가 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회적 합의를 표방하기는 하나 ‘예산 꺾밧 추기식’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량적 숫자일 뿐이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인’과 이 원인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 동력과 주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빈곤’에 대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 ‘빈곤’은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사회적 낙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로서 바라볼 수 있다. 즉,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를 설계하거나 꿈꿀 수 있는 문제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시기 ‘빈곤’을 양산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연화, 탈규제, 민영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전략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빈곤의 확산과 불평등의 심화를 불가피한 것이자, 당연한 결과로서,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전략의 성공의 근거로서 판단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빈곤에 대한 대책은 ‘보호’와 ‘안전망 강화’ 그리고 ‘노동연계’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빈곤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격을 엄격히 한다. 따라서 이들의 빈곤대책은 ‘탈빈곤’의 의미보다는 사회(물론 신자유주의 이윤추구를 자유롭게 하는 사회이다)에 대한 위협과 일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빈곤층의 존재가 이윤추구를 위한 전략관철의 유력한 매개이자 통로로서 활용 가능케 하도록 작동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라는 온갖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전략을 전제하는(적극적으로 옹호하든, 불가피하다고 여기든) 빈곤대책은 신자유주의전략을 넘어설 수가 없거니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전략의 파트너로 기능하거나, 하위전략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빈곤’ 전략과 제를 세우고, 연대운동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을 신자유주의전략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빈곤’은 빈곤을 양산하는 원인에 대한 ‘저항과 반대’이자, 결과로서 ‘빈곤’을 어쩔 수 없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의 여러 모습들

신자유주의시대 ‘빈곤’은 소득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모습만을 띠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의 모습을 띠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는 길은 실로 다양하다. 그리고 절대적 궁핍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가 앞서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전략으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는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고임금의 안정적인’의 일자리를 향한 욕망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생존을 유일한 희망으로서 간주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저임금의 일자리든, 단기간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자리든 상관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된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별분업화된 노동의 위계질서와 가족임금모델에 근거한 임금의 책정은 여성에게 더욱 큰 희생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활동 활성화’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생계를 꾸리기에 도 벅찬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화되고 있는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마저 이를 감당할 구매능력을 가지길 요구함으로써 ‘엎친 데 덮친 격’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이 최소 5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노동빈곤’이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특징적인 빈곤의 모습이다. 더구나 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소사장,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마저 이들에게는 더욱 다가가기엔 너무 먼 제도가 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본이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선택한 전략 앞에서는 무기력할 따름이며, 그 부담은 온전하게 이들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겐 자본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다그치고 있다.

둘째,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의 빈곤의 모습을 보자. 이들의 빈곤은 노동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에 근거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를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제도는 ‘소득지원’의 의미에서도 모자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의 각종 건강, 보육, 교육 등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를 전적으로 가족에 내맡겨 왔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막이자 최후안전망의 보루였던 가족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 역할을 대신하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들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구매 능력이 없기에 시장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을 내놓긴 하지만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노인과 아동빈곤층이

200만에 달한다.

셋째, ‘뉴타운개발, 지역균형발전, 능동적 세계화’ 라는 전략 속에서의 빈곤의 양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개발과 성장은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포장술 내세운다. 지방분권이라는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내세운다. 세계 속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의 소리를 드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속에서 극소수 일부는 ‘보상’이라는 명분하에 부를 거머쥐기도 하고, 건설자본과 토목자본의 배는 불러가지만 대다수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쟁사회와 부딪쳐야 한다. 자기 삶의 공간에서 쫓겨나는 철거민의 모습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해 포장마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 옮겨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경쟁자가 도사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모습으로, 한평생 생활을 꾸려오던 농촌에서 아무런 생계대책을 갖지 못하는 대책 없는 삶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런 이들이 자그마치 500만을 넘어선다. 이들은 법적인 고용관계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거, 교육, 의료 등 다른 삶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넷째, 하루아침에 ‘도덕적 해이자’ ‘무분별한 과잉소비행태’의 대표적 낙인찍히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 더욱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금융정책에 의한 ‘금융피해자’ 들이다. 이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서 신용카드남발, 질병과 가계의 몰락으로 인한 단기간의 재정적 부담,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정기적인 소득원의 저하와 부채, 금융자본만을 살찌우는 금융정책과 고금리 사채업을 방치한 금융정책 등에 결과로 인해 양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은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고려는 금융자본의 ‘자본 회수’ 여부이다. 이러한 이들이 300만을 넘어선다.

다섯째,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온갖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진입부터 가로막히고 삶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박탈당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차라리 이차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표현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가 펼치는 ‘사회안전망’은 ‘자본안전망’에 다름 아니다. ‘사회통합’은 ‘이윤추구망으로의 포획’이기도 하다.

사실 반빈곤운동은 자본과 권력의 의도에 대한 공격보다는 빈곤층이 처한 다양한 고통과 억압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2000년부터 본격화된 반빈곤운동은 사실 그것에서 시작했다. 있는 제도라

60) 바우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우처(voucher, 이용권)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말하는데,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 대량 사유화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을 기원으로 하며,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바우처제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바우처의 핵심 원리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구매력 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61) 우리는 최유란 열시여겨서 이를 확인했다. 그녀는 기초범 수감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먹먹하는 세상과 싸웠다.

도 제대로 실시하길 바랐으며,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권리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했으며, 저임금이라도 좋으니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다. 이제는 ‘분노의 조직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분노의 조직화’ 만으로(이 역시 아직도 불충분하긴 하다), ‘상징화된 빈곤’에 대한 인식확대 만으로는 반빈곤운동의 대중화와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다.

3. ‘반빈곤운동’의 성격

1)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현 시기 빈곤 확산과 불평등심화의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핵심 전략인 민영화와 노동유연화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 후퇴,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경쟁과 효율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노동윤리를 강요하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은 여러 양상을 띤다. 구조조정반대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교육의료시장화반대투쟁,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 최근에는 FTA 반대투쟁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빈곤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으로 진전하고 있지는 못하다. ‘빈곤을 확산하는 한미FTA반대’를 내걸고 FTA반대투쟁에 결합을 도모했으나 대중적 결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 당사자들의 권리쟁취투쟁 또한 아직은 신자유주의전략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물로서 자신이 놓인 조건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은 전면적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일부로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 하에서 대중 조직화를 수행해야 한다.

2) 개발과 성장으로 인한 피해와 억압에 저항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성장을 위한 산업재편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민중들은 주거권을 포함한 삶의 후퇴, 삶의 터전에서 퇴출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은 일부 소수계층만을 살피우는 성장을 위한 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또한 개발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맞서는 운동이다. 결국 주민공동체를 보호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3) 제도적, 법적 보장을 넘어 대안적 권리를 쟁취해나가는 운동

기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빈곤해결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기존 제도의 효과마저도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투자로 일컬어지는 정책(소득지원, 자산형성 등)도 빈곤탈출보다는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빈곤운동은 기존 제도와 법적 테두리에 안주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빈민 당사자주체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 권리에 근거하여 제도와 법의 보장성을 넘어 새로운 대안적 권리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삶의 원리를 구현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

경쟁과 효율, 성장과 개발의 담론과 원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은 곧 자본의 논리와 의도한 바대로 민중들의 삶을 던지는 것과 같다. 또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이 물질적인 필요를 무한적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연대와 공존의 원리,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삶의 권리 의식 확산, 그에 따라 개인과 빈민당사자의 주체형성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과 대안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운동으로 반빈곤운동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반빈곤운동은 의료·교육·교통 등에 대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옹호하고, 시장화전략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쟁취운동과 접합이 가능하다. 또한 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이 후퇴를 상정하고, 이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불안정노동철폐운동과도 결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공공성운동은 주요한 사회서비스(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쟁취를 주요한 과제로 하는 데에 비해서 반빈곤운동은 여기에 더하여 사회구성원(주로는 빈곤층)의 기본생활소득을 쟁취하고, 빈곤당사자의 직접적인 자기 권리실현도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공공성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은 ‘주체’ 없는 당위로서의 사회공공성 운동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불안정노동철폐운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은 현재적 수준에서는 ‘노동시장’의 내부에서의 신자유주의문제를 제기한다면, 반빈곤운동은 ‘노동시장’ 밖의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전략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의제와 주체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빈곤운동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4. 2000년 이후 ‘반빈곤운동’의 흐름

2000년 이후 반빈곤운동은 크게 두 줄기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불안정노동자들의 빈곤화, 노동권에 대한 억압과 배제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⁶²⁾과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계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주요 요구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개혁투쟁이 그것이다.

1999년부터 본격화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2001년도에 확산되기 시작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장애인중들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했고, 여

62) 이 투쟁과 관련한 아래의 서술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자료집(2004. 5. 31)에서 주로 인용함.

성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유연화의 지속과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해 삶이 파탄 난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저항에 나선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이렇게 파탄 난 삶을 메워주기엔커녕 오히려 더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주체들의 조직력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투쟁의 역사도 달라서 각자가 자기의 과제를 갖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을 아우르는 중심체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 투쟁들은 선도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했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동위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소수자로 표현되었던 노동자들이 존재선언을 한 이후 첫 번째 ‘공동투쟁’의 시도는 “2001 민중복지 한마당”이었다. “2001 민중복지 한마당”에서는 ‘사각을 허물며’라는 주제가 표현하듯이,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또 하나의 기둥인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며 ‘민중복지 쟁취’를 내세웠다. 동시에 각자 어떤 문제의식과 역사성 속에서 투쟁해왔는지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폭발적 투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운동사회 안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소수자들의 투쟁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소외감’이 공동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은 ‘민중복지’라는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투쟁의 주체로 선언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이라는 대주제 아래, 비정규 실업 이주 장애, 신제노동자 등 취약하고, 주변화된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민중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로서, “△고용안정! 모든 이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권리보장! 자본을 위한 노동법 철폐, 있는 법은 제대로! △차별철폐! 노동제공의 모든 분리과 차별 철폐, △나는 내일! 실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 △건강!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택! 투기의 대상에서 삶의 공간으로 △교육! 교육시장화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라는 7대 요구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중복지’ 개념은 여전히 모호했다. 또한 서로의 문제의식과 고통의 역사를 이해했다고 해서 곧 공동투쟁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중복지 한마당의 후속 사업으로 각 조직별 투쟁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입각해서 공동투쟁의 의미를 밝혀보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주체들이 다시 집중 투쟁에 돌입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었고, 불안정노동자들이 단지 ‘복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발생원인의 규명을 통해 개별적이고 특수해 보이는 불안정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투쟁을 하나의 원칙 아래 묶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투쟁 요구로 ‘노동권, 생활권, 민주적 권리’를 제출하였다. 구체 요구로서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고,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라는 요구를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분리시켜 단지 고용유지만을 목표로 하게 만드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요구를 제출했다.

이 내용을 갖고 2002년 상반기에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 주간을 제안했고, “①시기집중을 통해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든다. ②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불안정노동자들 공동 요구를 정식화하는 틀을 만든다. ③민중운동 전체에 이 문제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하여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 공동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명확하게는 시기를 집중한 품앗이 투쟁이었다. 하지만 품앗이 투쟁에서 머물지 않고, ‘불안정노동철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했고, 그 결과 대전이나 전북 등 지역별로 ‘불안정노동철폐 연석회의’ 등이 만들어졌다. 한편 불안정노

동 철폐투쟁이 구조조정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인데도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들만의 투쟁’으로 남아있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되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처함하지 않고 자본의 방식에 조응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전체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기도 하였다.

‘공동투쟁’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품앗이 투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은, 그동안의 투쟁 평가를 재출하면서 첫째로 현재의 과제들이 너무나 코앞에 닥쳐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투쟁의 기풍을 세우기에 너무 힘들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둘째, 공동투쟁의 요구의 기반은 확인되지만 여전히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업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장애인노동자가 되고, 이주노동자도 그 자체로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인상투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독소조항 폐지투쟁은 빈곤화에 처함하는 투쟁의 의미를 가진 공동의 투쟁이기도 했다. 또 참여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민중복지를 이야기해야 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허가제 쟁취, 단속에 맞선 투쟁 등 정권에 대한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안정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 해고위협, 차별철폐에 맞서는 방어적 투쟁을 뛰어넘기 힘들었으며 공동의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동의 과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추상적이었고, 각 주체들에게 그 요구는 절실하지 않았다. 또한 주체가 함상 빈약해서 공동투쟁의 주체로 나설 조건이 되지 못했다.

결국 단체 간 품앗이 연대를 넘어서서 불안정 노동자 스스로가 초동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출되었다. 현재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직화와 투쟁이 공동요구를 매개로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공동투쟁이 시기별, 영역별 집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들이 공동의 원리를 통해 이 운동을 책임지는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공동투쟁’의 요구로 제출된 ‘노동권’과 ‘생활권’을 구체화하기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노동권과 생활권을 자신의 요구로 하는 주체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작으로 2004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처함하는 공동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공동투쟁의 요구로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보장” “안정적 일자리 확충”과 기본 연대원리로서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 요구”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을 제출하고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처함하는 이들의 행진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등을 전개하였다.

한편 다른 한축으로 2001년 12월 최옥란 열사가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의 성과라고만 인식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수급자 스스로 제기하며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요구한 투쟁이었다. 농성투쟁 이후 기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활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구성되었으며, 불안정한 노동자 및 광범위한 빈곤계층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30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으로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빈곤사회연대(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 의료, 건강, 사회서비스 그리고 소득보장에 대해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빈곤여성, 노숙인, 저임금불안정노동자등 빈민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들의 직접행동의 방식을 통해 반빈곤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자본의 전략에 맞서 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의료급여 개악저지 공대위, 물 사유화 저지 공대위 그리고 교통기본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2004년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삼보일배, 2005, 2006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을 기점으로 펼쳐진 빈곤철폐를 위한 직접 행동, 2005년 말에 전개된 최저생계비현실화, 비정규약법 철폐 등 5대 요구를 내건 국회 앞 천파 농성 등 주요하게는 직접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주요한 원칙으로 삼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제기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빈곤에 고통 받는 주체들의 결집과 연대 모색 방식 문제이다. 지역, 부문 운동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 사회권리를 제기할 공동투쟁 과제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투쟁과제의 모색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의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을 비롯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들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공대위의 활동목표는 그에 기반해 있었으나, 각각의 정책요구를 병렬하는 방식의 투쟁의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공동투쟁의 과제를 모색할 이유는 기존 운동에 있어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 빈곤사회연대, 전빈련 등을 중심으로 결집되어있는 빈민운동, 부문운동의 자기과제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5. ‘반빈곤운동’의 목표와 전략과제

기간의 논의와 투쟁의 성과, 그리고 반빈곤운동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반빈곤운동의 목표 설정 시 우선 시되어야 하는 원칙은 첫째, 노동과 복지의 이분법에 기초한 노동연계 복지전략을 뛰어넘어, 반빈곤운동 주체의 ‘권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반빈곤운동 주체의 개별요구에 머물지 않는 보편적 요구와 지향함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의 실현 속에 현 사회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대안원리를 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1) 목표 : “기본생활권 확보, 빈곤 없는 세상”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과 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매개로서 이를 적

절히 의도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빈곤화를 사회복지로서 보완 또는 사회복지를 시장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위계화하고 자본의 노동윤리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빈곤운동은 이제 노동(생산)과 복지의 연계와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일정한 민중들을 노동권으로부터 배제시키면서 산업예비군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거나, 자본주의적으로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이들을 빈곤계층으로 떨어뜨려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할 권리'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배제당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가에서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권'이 전제되고 그것에서 배제된 자들의 요구로서 '생활권'이 제출되는 것이다.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를 전면으로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을 통해 그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권'과 노동하는 자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에 못지않게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을 '시혜'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유지 보조도구'로 활용하려는 정권에 맞선 '권리'개념도 발달해왔고, 이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 있어왔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투쟁이나 실업자들의 투쟁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현재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파괴되고 개별화되면서 노자간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역시 자본의 이윤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착취강화를 보장하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투쟁은 매우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어떤 노동자들이 간접고용화가 확대되면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대항하는 투쟁의 영역이기도 하다. 원래 자본과의 투쟁이 본래적이지만, 그런 구조적 저임금 장치는 국가의 제도의 의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의 목표는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를 '기본생활권'이라 부르기로 한다. 기본생활권은 경제적 능력,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나이의 유무와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 개개인이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가 성별분업과 가족임금모델에 근거하여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설계를 하였다면 기본생활권은 '개인'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생활권은 노동이나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울러 기본생활권의 확보는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고, 차이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권력과 메카니즘에 대한 저항과 반대, 권력의 철폐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존 빈곤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기본생활권이 확보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하기에 반빈곤운동은 '기본생활권'을 사회투쟁, 정치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전략과제

반빈곤운동의 목표를 위와 같이 정했을 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생활권'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과 이 영역을 둘러싼 과제의 쟁취 및 이를 위한 주체(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소위

제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운동)의 형성 및 투쟁의 현실화로서 모색될 수 있다. '기본생활권' 을 다음과 같은 프레임을 통해 실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1. 기본생활권의 주요과제>

목표	기본생활소득 확보	공적 사회서비스 확보	노동권 ⁶³⁾ 확보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최저임금의 현실화, 생활임금 확보 - 이동, 중증장애인, 노인층의 기본생활수당 (연금) 도입 및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권 보장 - 교육권 보장 - 건강권 보장 - 돌봄노동의 사회화 - 교통, 통신,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확대 -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 정책 및 인권 정책 -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여 및 노동할 권리 확보 -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 여성노동권 확보(만정된 노동을 할 권리, 강요된 노동을 거부할 권리)

반빈곤운동의 목표와 세 가지 영역은 개별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역으로 개별 영역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기본생활권이란 목표도 구현될 수가 없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주체의 상황도 다양하다. 따라서 불안정노동층 및 빈곤층의 당장의 일차적 이해와 요구도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장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이해와 요구에

63) '만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협소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노동권의 확보

다른 조직화와 투쟁은 반빈곤운동 주체 형성의 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 주체들의 운동이 여기에 간혀서는 해당 주체운동의 질적 상승이나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본과 국가가 펼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노동자 이해의 다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 삶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닌 총체적인 측면을 공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투쟁 정도에 따라서 자본과 국가는 포섭, 배제, 분할, 위계화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빈곤운동의 전개는 개별 주체들의 개별투쟁을 넘어 목표와 전략에 근거한 주체들의 연대운동이 필연적이다.

6. '반빈곤' 연대운동의 방향

지금까지 반빈곤운동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곤의 실상을 폭로하고(타워펠리스 vs 포이동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만성을 드러내고(최옥란열사투쟁), 저임금의 구조화(최저임금, 여성노동권확보투쟁)와 그 양상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했다. 이제는 여기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또한 이제는 계기별 투쟁과 운동에서 일상적·구조적·전략적 연대로 나아가는 과제 또한 부여받고 있다.

'반빈곤' 연대운동은 반빈곤운동의 목표와 전략과제를 실현시킬 주체의 형성과 조직화 과정을 일컫는다. 우리는 이를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한 운동주체의 형성과 투쟁"으로 부르려 한다.

반빈곤연대운동의 일차적 주체는 빈곤과 불평등으로부터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다. 빈곤층, 노점상 등의 비공식노동자, 이주장에 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주체로 나서게 하고, 이들 간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먼저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연대운동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연대, 이들과 중간층의 연대를 가능케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연대, 정치연대를 이룰 수 있다.

1) 당사자주체의 능동적 조직화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빈곤층(혹은 빈민)의 주체적인 권리인식(권리선언)과 이에 기반을 둔 직접행동 및 이의 조직화가 핵심이어야 한다.

2) 반빈곤전략의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

반빈곤 전략의계는 특정계층, 특정빈민당사자만의 이해와 요구, 권리라기보다는 빈곤층 전체의 이해와 요구이면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인 이해와 요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계의 사회화와 투쟁의 전개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가 필수적이다. 현실 투쟁의 전개도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거권투쟁, 의료급여개악저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생활임금쟁취 등이 그러하다.

3) 반빈곤 전략거점이자 토대로서 '지역' 운동의 조직화

지역은 생활과 삶의 공간이다. 지금까지 지역은 정부나 권력의 빈곤대책의 전달통로이자,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했거나, 특정 지역에 갇힌 당사자들의 자조적인 공동체로서의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하였다. 부분적으로 주민공동체형성을 통해 대안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공간으로 '지역' 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진 않으나 아직은 드물다.

이제 '지역' 은 반빈곤 주체의 연대 공간이어야 한다. 새로운 대안적 삶을 형성하는 공존의 공간(공동체, 모문)이어야 한다. 반빈곤운동의 일차적 출발이자 전략적 교두보로서 실천공간이어야 한다.

4)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네트워크 형성은 주체 형성을 위한 일차적 과제이다.

이러한 당사자운동, 의제운동, 지역운동은 서로가 연대하고, 소통하였을 때 운동의 질적 상승을 꾀할 수가 있다. 변혁운동의 당당한 영역으로, 변혁주체의 당당한 일주체로, 그리고 새로운 대안권력의 한 축으로 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빈곤사회연대(준)은 “빈곤대중 및 반빈곤활동가/단체 간의 실천네트워크” 로서의 자기 위상과 역할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반빈곤 전략과제 의견 및 반빈곤 연대운동에 대하여

최인기 | 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1.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의견

- 빈곤문제가 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빈곤담론의 점점을 통해 빈곤사회연대의 기존의 경향성을 넘는 새로운 모색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반빈곤 전략과제를 둘러싼 토론은 의미 있고 긍정적인 시도라 하겠다.
- 빈곤사회연대의 반빈곤 전략과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를 언급해보면 (아직은 빈곤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점을 벗어난 의견일 수도 있지만)
- 한편 익히 알려져 있듯이 노무현 정권은 중소기업 활성화,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노동연계복지를 뛰어넘지 하며 빈곤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권 차원의 시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발제문에서는 부분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본다.
- 그러나 가령 노무현 정권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확대, 정부경비 절감, 조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또는 조세부담률인상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어 빈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 이밖에도 우리사회 빈곤의 원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총체적인 접근과 분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전략과제를 둘러싼 방법론 다시 말해서 단기적 실천 및 장기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빈곤사회연대 내 기존의 경향들 가령 사회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입각한 보수정치권의 동향과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순발력 있는 실천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번 정부의 최저생계비 발표에 따른 대응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다양한 빈곤담론 사회적 양극화, 신빈곤, 사회적빈곤, 사회적배제 등의 담론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시적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빈곤사회연대 내 참여단체의 성향이 위와 같은 다양한 담론에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

- 특히 반빈곤 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발제문에서 제출된 논의를 넘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빈민발생의 구조적인 원인 중 비공식부문론과 상대적 과잉인구론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신개발주의에 입각한 도시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실천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대응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둘러싼 실천방법도 주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영세상인 특히 최근 들어 우리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폐지수집인 노동자들과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뛰어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조직화 방안과 운동에 대한 검토도 앞으로는 주요하게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밖에 사회공공투쟁과 반빈곤 운동 그리고 기본생활임금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문제의 대응방식과 주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 노동자 층과 도시빈민층과의 연대를 꾀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약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뿐 만 아니라 빈곤 극복방안의 하나로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행 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5호)는 기간제한 예외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복지와 실업 대책 속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영구 비정규직 일자리라가 된다는 의미 일 것이다. 복지와 실업 대책 속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들, 대부분의 전문직과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각종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도 기간제가 남용되도록 만들어 놓아 불안정노동 양상은 가속화되고 사회적 빈곤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이럴때 반빈곤 운동과의 의제적 접점이 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 정책과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공동의 이해와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반빈곤 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운동 이라 했을 때 기타 다른 부문운동 정치 사회 운동과 어떠한 연관과 관계설정을 할 것인가 또는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정치권의 변동이 심하고 하반기 대선의 결과 유무에 따라 기존의 빈곤정책마저 더욱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정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특히 개인적으로 빈곤사회연대 조직방안과 긴밀히 맞물려야 할 것이다.

2. 빈민운동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 2천 년대 들어 노점상, 철거민을 중심으로 한 빈민운동 진영은 당사자들의 철거 투쟁과 노점상 단속 투쟁을 넘어 전체의 전망은 물론 빈곤문제의 일반적인 의제로까지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해당 조직의 투쟁에 매몰된 측면이 있다.
- 남한 사회 빈민단체를 중심으로 비공식부문에 대한 확대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빈민운동은 당사자 이해와 운동을 넘어 빈곤의제를 넓혀가야 할 것 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노점상 철거민 운동의 연대체인 전빈련의 역할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 대선이후 보수진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숙명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기만적인 혜택을 분쇄하고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운동주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규명해 내고 당면 신자유주의 질서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고 재생산 영역인 반 빈곤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며 빈곤사회연대(준)을 중심으로 10월 이후 본 조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조직발전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
- 전빈련은 미약하나마 80년대 이후 빈민당사자 운동의 주요한 축으로 발전을 해왔으며 빈곤사회연대(준)은 2천년대 새롭게 등장한 빈곤문제에 맞서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빈련은 99년 재결성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명칭에 걸맞게 조직위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히 집행하고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에 놓여있다.
- 이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는 빈곤인구 천만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과거 빈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철거와 노점상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넘어서 변화된 조건에 맞게 조직운영과 위상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능동적으로 적응을 해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관철이 되어야 한다. 언급한 수많은 연대기구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큰 과제를 주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 반빈곤운동의 다른 이름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기획팀

1. 총체적 인권침해로서의 빈곤

0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재화와 서비스들을 이윤창출의 매개로 빼앗아가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심화가 단일한 빈곤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빈곤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것은 여성권의 침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억압과 맞물려 들어온다.

0 빈곤은 총체적인 인권 침해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과 같은 ‘여러’ 권리의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환경, 벗어나기 어려운 불건강,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거대한 폭력이 된다. 또한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무력화하는 것도 빈곤이다. 이처럼 빈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에게서 자본에게로 이양시킨다.

2. ‘인권’ 적 접근이란 어떤 것인가

0 인권은 민중의 저항 속에서 만들어져온 가치이며 우리가 꾸준히 버려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안개에 쌓여있는 개념 너머로 솟구쳐나오는 인권의 힘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억압과 착취 아래서 고통받던 인간이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를 선언할 때 나타난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는 선언은 “나는 사람이다” 라는 외침을 사회에 던짐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확인시켜준다. 다른 하나는,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것이 사회적 약속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권이 정치와 사회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합의될 때 그것은 당장의 현실을 인권적으로 탈바꿈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어지는 변화를 강제하는 힘이 된다.

0 그러나 이러한 인권의 힘이 반빈곤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하는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끊임없이 재구성해내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권리의 과잉 시대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재산과 소유 자체를 옹호하기 위해 권리가 동원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다. 반빈곤운동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그것이 보편적 권리이기 위해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채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권리’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경계로 작동할 수도 있다.

○ 또한 앞서 말했듯 인권은 개별 영역의 총합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서와 구조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저항의 권리와 구분될 수 없다. 인권적 접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확보하는 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동연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하는 운동을 요구한다.

3. 반빈곤 연대운동의 과제

○ 빈곤의 역사에 비하면 ‘반빈곤 운동’의 역사는 참 짧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촉발한 계기들은 ‘빈곤’이다. 다만, 노예들의 반란, 농동자운동, 노숙인의 투쟁 등으로 불려왔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반빈곤운동은 그 자체 연대운동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빈곤을 양산하는 억압과 모순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만큼 빈곤에 저항하는 주체들도 다양한 운동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반빈곤운동’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뿐, 반빈곤운동의 역사는 짧지 않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은 수많은 의제들을 아우르면서 전략의제를 제시해야 하며 어떤 연대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발제문에서 제시된 ‘기본생활권’을 전략의제로 놓는 것은 유의미해보인다. 빈곤이 총체적인 인권침해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빈곤의 양상은 주로 경제적, 물질적 조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조건들을 묶어서 ‘기본생활권’의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인권의 힘을 반빈곤운동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가로지르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생활권의 확보를 위해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수서비스들의 보편적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고 이 각각의 계기들을 통해 정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동을 기획하는 것이다.

○ 한편 반빈곤운동은 지금까지 정체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불안정노동자 등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빈민들을 묶어세우는 과정이 반빈곤운동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전략의제를 중심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는 대중의 정치가 필요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연대운동의 상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여성, 레즈비언, 청소년 등 ‘새롭게’ 빈곤을 고민하기 시작한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계기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4. 의료, 주거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박탈에 맞서는 과제

○ 인간답게 살 권리의 박탈에 맞서는 과제는 무엇일까. 당연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말

장난 같지만 쉽지가 않다. 특히, 기본생활권으로 묶일 만한 권리들은 한국사회에서 권리로 인식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 자체를 구성하고 권리인식을 확산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종 사회서비스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공격해들어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지만 ‘권리의 침해’는 직관이 아니라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분석이다. 에너지와 물이 자본에 넘어갈 때에서야 권리가 등장한다. 권리를 침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도 권리는 멀고 생소한 개념이라 운동의 시작과 확산은 매우 더디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영역별 권리 중 주거권과 건강권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다. 권리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권리의 정치성을 이해해가면서, 권리가 특정 재화와 서비스 자체로 한정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공공성 운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권리영역에 걸쳐있는 성질로서, 공공영역 자체의 재구성 과제를 내포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공공성의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현재 사회공공성 담론으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흐름, 민간부문의 사유화가 더욱 진전되는 것에 반대하는 흐름, 공공성 자체를 구성하려는 흐름으로 나뉠 수 있다. 주거권/주거공공성은 이 중 마지막 흐름에 가깝고 건강권과 관련있는 의료부문은 사유화 반대 담론으로 공공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운동의 조건으로 인해 주거권운동과 건강권운동 각각의 과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부터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공공성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것은 생산수단을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생태주의, 여성주의의 가치들과 횡단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 △ 국가와 비정부간기구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각각의 사회공공성운동이 ‘인권’ 적 접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개발주의가 공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개발주의에 맞서는 급진적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운동워크샵에서는 철거민운동의 현재를 점검하기도 했다. 철거민운동의 역사가 짧지 않은데도 결국 세련된 개발주의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술의 급진성이 운동의 진보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개발주의에 맞선 운동의 진보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등이 고민이다. 한편으로는, 주거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거권의 내용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소수자운동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헤아려보는 중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과 같은 의제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는 어떠한지 할지를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의료산업화 저지, 의료급여 개악 저지를 넘어서 의료공공성을 구현하는 질서는 어떤 것일지, 당사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한편, 의료와 주거 등을 노동력 ‘재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재생산’

이라는 개념 설정이 가구주로서의 남성노동자 모델을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본생활권의 근거를 ‘노동력’의 재생산에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접근은 기본생활권을 사회복지의 틀 안에 가둬으로써 정치를 정책경쟁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

5. 인권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만남

○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반빈곤운동의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썼다. 이는 반빈곤운동이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 더욱 고민하면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권운동이 반빈곤운동을 더욱 자기 과제로 끌어안으면서 반빈곤운동으로 연대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인권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 보편적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 지금의 인권 목록은 삶의 총체성을 드문드문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이때 영역의 확장은 단순히 목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권리가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만난다. 이 과정은 자칫 권력에 의해 포섭될 수도 있는 인권담론을 저항하는 민중의 것으로 끊임없이 되찾아오는 과정일 것이다.

○ 인권의 힘은 당사자에게서 나온다. 그만큼 당사자들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통해 그/녀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물론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기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빈곤운동과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다.

○ 반빈곤 직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정책제안, 캠페인, 이슈파이팅 중심으로 진행되는 NGO의 활동방식은 다른, 새로운 활동양식을 모색해야 한다. 직접행동은 단순히 ‘과격함’ ‘직접적인’ ‘최후의’ 것을 의미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양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직접민주주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반빈곤직접행동이 고민되어야 한다.

반빈곤토론회 참고자료

반빈곤포럼 기획단

[사회운동활동가 설문을 통해 본 반빈곤운동 쟁점]

설문기간 : 2007년 8월 12일~ 8월 25일

설문응답자 : 15인 (공공노조 1인/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1인/ 문학연대 1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1인/ 민주노총(총연맹) 1인/ 민중복지연대 2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1인/ 사회진보연대 2인/ 인권운동사랑방 1인/ 전국노점상총연합 3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인)

[빈곤문제에 대한 견해]

1. 한국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목해야 하는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빈곤의 원인 :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자의 저임금화의 부의 집중 / 자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공핍화(금융적인 방식을 통한 부의 이전, 대다수 민중들의 공핍화)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발주의 확산, 주거 불안정성 확대 / 철거민, 노숙인 탄압과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제 / 이 가운데 사회발전의 축소와 사회복지 시장화가 원인으로 작동하며 노동과 기여를 강조하는 노동면허복지 정책
- => 공통된 지적은 노동의 불안정화, 생산영역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와 재생산영역에서의 시장화로 표현될 수 있음. 한편, 심리적인 측면에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 인간의 개별분자화 경향 등이 지적되기도 함.
- 특징적 양상 :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노동빈곤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관리정책 확대 및 사회적 배제 / '유연화된' 노동, 즉 사실상(半)실업자에 다름 아닌 노동-빈민의 증가(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의 여성화' 와의 상호 연관)/ IMF 이후 국가재정 금융정책의 실패로 인한 금융채무의 확산 / 인간 존엄성의 황폐함 / 파산, 실직, 신용불량 등 소득영역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빈곤의 고착화, 저층 이동의 불가능성.

==> 설문답변은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빈곤의 원인으로 꼽고 있음.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사회적, 공간(주거)적 박탈과 배제이라고 지적.

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빈곤 철폐를 위한 핵심 출발점.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에 의해 산업재편전략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인식이 기초가 될 필요가 있음. 노동력 활용, 관리 전략을 핵심으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변화와 가족을 기초로 한 노동력 재생산 관리 전략의 변화 양자를 포괄하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에 따라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은폐 또는 완화되기도 하기 때문. 따라서 빈곤문제의 '일반적' 원인에 대한 지적을 넘은 분석과 토론이 필요함.

2. '빈곤', '빈민', '반빈곤'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전과 오늘날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빈 곤 : 사회적 박탈감과 차별에 대한 양상(과거의 극빈층을 지칭하는 것에서 '빈곤화'로 확대됨) 사회적 양극화(절대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도시빈민과 노동자, 농민 등 대다수 민중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며,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상호 이허가 높아져야 할 것임. / '빈곤'을 '빈곤'으로 인식하지 못함. /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명세자명업자, 노숙인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 주체.
 - 빈 민 : 특정 계급 및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허됨. 극빈층, 달동네 등이 떠오름
 - 반빈곤 : 대안담론 / 개념의 추상성. '잘산다'는 철학적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확립해야 함.
- => 대중의 전반적인 빈곤화 속에서 '정형화된' 빈곤, 빈민이 특정하지 않다는 공통된 견해. 최근의 빈곤 양상을 설명하는 이데올로기, 방식 등의 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루어짐. 한편, 빈민들의 대한 지원활동이 빈곤해결의 담론을 '복지'로 치환시키면서 빈곤의 원인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됨.

==> 설문에서 드러나듯 빈곤이라는 용어는 절대빈곤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화의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빈곤대중을 일컫는 빈민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극빈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이런 상황에서 '반빈곤'은 빈곤화에 맞서는 투쟁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전달되지만 핵심적인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기에는 한계적이라는 지적. 그동안의 빈곤사회연대의 접근방식은 첫째, 소위 '침전층'으로 희망을 잃고 사는 절대빈곤층에 국한된 '빈민'규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음. 즉, '빈민'주체의 확대. 그러나 빈곤을 철폐한다는 것을 운동 과제로 갖는 이상, '빈민'주체의 확대는 '노동자'주체의 확대와 동일한 과정일 수 없음. 둘째, 반빈곤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 그러나, '반빈곤운동'과 같은 안티테제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보편계급으로서의 주체 형성을 보증하지는 못함. 따라서, 빈민주체의 조직, 반빈곤운동의 주체 형성은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함. 예컨대 '반빈곤운동'의 주체라는 동일한 형태로 조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정책에 대해]

3. '사회복지' 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한국사회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회복지 : 공공서비스 / 따스한 촉감과 녹색이 연상된다 / 온정주의, 구빈적 개념으로 흔히 인식됨, 그
에 기반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구휼정책으로 일관 / 전문가주의에 대한 동경과 시장 활성화
에 대한 환상
- 한국복지제도의 문제점
: 시혜적 잔여적 관리정책기조, 최저 수준에서의 '통제' 와 '대상화' 로 빈곤층을 의존형 인간으로
전락 / 민중의 노동권의 쟁취로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를 마치 구제책과 시혜와 동점으로써 해결가능한
것처럼 포장 / 사회복지의 시장화, 민간위탁, 사회복지 인프라의 개인 소유구조 /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독점화, 양적인 확대는 이뤄져도 개별적 복지자원이 연계되지 못하고 폐쇄적인 한
계,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주거를 기본으로 한 복지체계, 인프라 부재 / 노동연계복지(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조건부수급조항으로 통한 자활사업 강제동원) / 차상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 / 일면적인 점
근과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한계,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 / 복지 인프라 부실한 가운데 양
극화해소 담론은 허구적 수사여 그침, 조세개혁의 방향이 부유층에 대해서는 수사적 공격여 그치고 명
세자명업자, 노동자대중에 대한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계 / 경제성장논리에 종속된 복지정책 /
시혜와 통제의 기제(소극적)에서 자본시장 발달의 기제(적극적)로 - 취약한 공공성, 시장으로의 재편강
화, 노동시장정책과의 부조음.

==> 설문에서는 '통제' 와 '대상화',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 기조에 다른 선별적 구휼정책의
가능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복지전달체계와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시
장화, 독점화 경향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동시에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가운데 공
공복지전달체계의 부재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지적됨. 노동강요와 수급자에 대한 선별적, 잔여적 복지 시
스템,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지적됨.

4.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일자리 부족시대라느니,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해야 한다느니 담론이 무성함
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포괄적인 노동정책을 포함하
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저임금 일자리 육성책,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드러나는 열악한 노동조건(저임금 불안정노동 노동자성 불인정 등) 일자리 나누기로 상징되는 '유연화' 된 노동의 증가
- 자본의 개입이 규모화되는 저임금노동시장 형성, 시장화 정책(사회적 기업도 유수 재벌들의 기부들 통해 운명(대신 막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짐), 불안정한 일자리 형성과 서비스 시장 육성으로 자본의 이혜를 충족 하는 동시에 실업을 감소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데 있음. 이 과정에서 여성과 노인 등은 노동력 시장의 최하층에 편입 /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미 주어진 틀 내에서 노동력의 적절한 관리 및 활용과 노동자들의 분할, 통제 수단
-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저임금, 비공식 일자리 공식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내세운 여성저임금불안정 인력활용이 문제로 대두됨.
- 정부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임 / 정부의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전제로 한 가운데 유연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순된 정책이 마치 대만인양 등장하는 실정.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회 운동 일부 역시 입장을 같이 한다는 점. 민주노총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의 사업 내용이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그대로 베껴오는 실정.

==> IMF 이후 대규모로 양산된 실업문제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대책을 내놓았음.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확대해 빈곤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이나, 희망한국21, 비전 2030 등의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가운데, 2006년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 혹은 실업자층(특히 여성)이 상당 수 존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체계적인 비판과 관련 노동자의 주체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반빈곤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임.

한편, 실업운동은 일자리 창출-연계사업을 자기 사업과제로 삼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귀결. 그러나, ‘일자리 (수량적) 창출인가’, ‘노동강도 완화와 안정된 일자리 쟁취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함. 예컨대,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주로 여성)들이 그러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노동하지 않는가? 임시적, 불안한, 더욱 열악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안정,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고민이 본격화되어야 함. 즉, ‘일자리가 창출이 필요하다’ 는 것이 운동사회의 전제인가 하는 문제를 토론해야 함.

5. 빈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습니다.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한 민중들의 가장 큰 피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개인적 경험을 서술해주셔도 좋습니다)

- 자본의 시각이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정책은 민중을 지속적으로 공간에서 배제시키며 자본의 이윤증식의 공간으로 재구성 /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박탈과 도시민민의 구조화 / 민중들의 대규모의 공간적 배제가 현실화됨(주거권박탈은 물론 명세자명업, 비공식노동의 해체를 동시에 초래함으로써 복합적인 삶의 파탄) / 주거비 상승과 저임금 일자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 주거, 생활권의 붕괴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함. 더불어 지역주민운동, 공동체운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성과가 강제로 해체됨
- 도시개발을 통한 건설자본, 금융자본, 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 / 금융화의 효과로 부동산 투기로 지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 지역발전주의를 등에 업은 신개발주의 발로, 서울은 '담장도시' 화하고 있음 / '담장치진 도시'가 실물화되고 있음. 소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곤한 민중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분리 심화, 민간담거 살 수 있는 선택받은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의 격화는 사회운동의 주체형성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 /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생태와 문화를 파괴하지만 신개발주의는 이를 내세우고 있음.
- 공공임대아파트 등 저렴주택의 부재, 일방적인 개발정책.

==> 도시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권 박탈과 실업문제 야기로 가난한 민중의 공간적 배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좀 더 가격 높은 집을 소유하기 위한 끝없는 경주를 여기함. 그러한 점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대응이 주거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철거민 등 영세세입자의 권리 문제로만 머무는 것은 한계적. 신개발주의와 지역발전주의 투기충동에 대한 대응과 함께 주거권 운동의 확산이 기획되어야 함.

[반빈곤운동의 전망에 대해]

6. 비정규직 900만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과 물질적 결핍을 동시에 수반하는 노동자의 빈곤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빈곤운동은 '불안정노동철폐' '비정규직철폐'라는 접근뿐만 아니라 '반빈곤'이라는 화두로 접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확하게 표현 / 반빈곤투쟁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을 폭로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반빈곤'이라는 화두는 이념적 저항과 운동방향을 잘 전달 / 반빈곤운동이 도시 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불안정 노동의 문제, 궁핍화 문제를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도시철거민, 노점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빈민운동을 포괄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은 새로운 빈민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식의 확대와 심화에 밀조할 수 있다고 봄. 또 주제 확장 측면에서도 유효함.
- 대체로 동의하지만, 재생산명역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 / '반빈곤'으로 생산명역의 문제와 재생산명역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조직화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난점이 발생 / 보다 구체적인 슬로건 필요 / 비정규문제와 빈곤문제의 연관을 밝히는 이슈파이어팅이 필요 /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빈곤의 문제를 너무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만 보는 한계. 한국사회에서 빈곤문제는 노동과 생태 양쪽의 측면 즉 비정규직 문제와 개발주의 방식이 낳은 토건국가의 방식이 낳은 부의 편중 가속화라는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 공동체 삶의 가치라는 철학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 빈곤의 문제를 너무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으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점점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 등이 공존.

비정규직화는 고용불안정성과 동시에 절대적인 (임금)소득의 결핍을 동반. 빈곤사회연대에서는 생활임금운동을 제기하며 노동권과 생활권의 결합을 이야기했으나, 고용불안, 해고위험의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비정규노동자 투쟁주체의 투쟁과정에서 이를 풀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일상적인 운동의 기획과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요구됨.

7. 한국사회의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등의 '도시빈민 당사자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 경험을 서술해 주셔도 좋습니다.

- 운동의 중장기적 계획 부재 / '빈곤'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 데 한계 / 부문운동이 국한되지 않고 전체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함. / 방어적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좀더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의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운동들(노동운동, 여성운동...)과의 마주침도 필요
- 노점, 노숙인 등 빈민 당사자운동은 반빈곤운동에 있어 대단히 중요. / '당사자의 이해'에서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당사자운동'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지 항구적인 운동의 방식은 아님. 현재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빈곤을 내면화한 당사자들의 주체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 조직적 이해관계여 기반한 조합주의적 경향 경계해야. 물적조건 동일함이 아니라 반빈곤운동 활동가 주체와 같은 방식으로 주체화될 수 있는 면대의 활성화가 필수적. / 도시빈민 당사자운동과 반빈곤운동의 전반적 과제와의 연계와 접합이 필요. 노동자운동은 도시빈민 당사자의 노동권 문제도 함께 사고해야 함. 복지의 수혜자를 넘어 보편적 권리의 담지자로 / 노동운동의 관점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들
- 투쟁 방식은 전투적이지만 내용은 방어적. 교육 선전 활동을 강화해 활동가주체를 육성해야 함. 빈곤의 원인에 대한 투쟁의 관점을 갖고 지역 차원의 연대를 통해 사회운동의 주요 의제와 결합해야 함.

==> 모든 운동의 출발점은 이해관계 당사자를 조직하는 것. 또한 억압과 차별에 맞선 분노와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운동의 기본적 방향. 그러나, 도시빈민 당사자 운동은 특유의 조합주의적 성격과 내부의 활력 부재를 조건으로 함. 또한 '빈민' 주체로서의 긍정적 방식의 조직화는 여러모로 난점이 많음. 도시 빈민 당사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반빈곤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의 의제들과 결합하는 당사자 주체화 과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빈민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연대는 필수적인 전제여야 함. 지역 차원에서의 연대의 활성화를 통해 여타의 부문운동, 다양한 사회운동과 호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를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 주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

8. 반빈곤운동의 중요한 운동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면과제나 중장기적 과제 모두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 지역에서 반빈곤운동만들기 / 지역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 당사자 및 지역사회와의 활동, 센터와 지역의 연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과의 연대활동 모색, 노동운동과의 결합 / 지역을 거점으로 한 주체 간 연대와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담론차원의 대응수준을 벗어나야.
- 기초생활수급권의 확대를 통해 생계보장 현실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 주거확보, 국민건강보험 보험 적용의 범위 대폭 확대 등의 당면과제들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숙인, 빈곤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우선 적용하는 가운데, 지역중심의 경제공동체가 형성, GDP비대화를 통한 복지중심이 아닌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복지정책 구축 지향.
- 주체형성과 확장, 노동운동, 여성운동과의 결합. (working poor, 빈곤의 여성화...) / 빈곤에 직면한 당사자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반빈곤 운동으로 직결 / 자기 대중을 계속 넓혀나가는 작업이 반빈곤 운동단체들의 일상 사업이어야 함. 아울러, 당사자들 간 소통채널을 열어 도시빈민 상호간에 낙인찍는 분위기를 해소하는 도시빈민 연대투쟁 활성화 / 당사자조직망을 넓히는 가운데 반자본주의 운동 영역으로의 결합 /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화되는 사회구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중적 접근, 비(반)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과 대안, 인식의 확대 / 새로운 빈민운동의 쟁점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빈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변화를 추동하는 흐름으로 반빈곤운동이 기능해야, 이를 위한 정책적-조직적 토대를 형성.
- 복지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현실에서 단계적 과제가 제시될 필요.
- 빈곤 철폐를 위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인식과 투쟁이 필요. 여성의 저임금 노동 철폐와 같은 구체 투쟁과제를 실행해야 함.

==> 지역운동에 대한 강조, 연대운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당사자 주체화와 대안적 사회 지향 등이 지적됨. 기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빈곤운동의 기획이 필요함. 반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형성, 당사자 주체화의 방향도 상호 연대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과 기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9. 빈곤사회연대(준)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기초법, 사회서비스, 의료급여, 교통공공성 등의 연대운동 및 활동 등은 빈곤사회연대가 단순히 빈곤(빈민)에 국한된 운동을 전개하였던 부문운동을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이었음. 또한 빈민현장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조직하는 활동은 빈곤운동의 활동기뿐만 아니라 대중운동에서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미.
-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계획 및 반빈곤운동의 전면화내지 대중화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어야 함 /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전면여 부각시키는 활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반빈곤운동에 앞장서야 / 빈곤운동의 새로운 명목을 확보해야 함 / 정부의탈빈곤정책 비판, 새로운 대안적 전망과 운동 방향 제시하는 정책적 역할은 반드시 필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축으로써 활동가 네트워크를 지역단위로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장기적 전략 필요 / 정책 역량 강화, 정책팀 개인 참여 보장 /
- 연대체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과 재정구조 강화, 사무국이 각 연대단체들을 매개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함 / 개별 단위에서는 제기하기 어려운 빈곤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싸움으로 만들고, 간접적으로나마 각 단위의 상황을 교류시키는 역할을 해 왔으나, 끊임없이 의제를 개발해내는 역할을 하되, 이들 각 구성단위의 동력으로 실행해야 할 것임 / 느슨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반빈곤운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펼쳐나가기를 바람 /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반빈곤 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여러 도시 빈민 운동, 사회운동의 소통과 교류, 공동계획이 가능한 단위
- 분명한 기본 과제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초법, 생활임금 등의 의제 정립, 투쟁 활성화 / 반빈곤활동기군의 구축 / 집중적이고 밀접된 활동을 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하는 연대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제까지는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주체와 단위들이 결집할 수 있는 전선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반빈곤'이라는 화두단지를 했다면, 앞으로는 기획된 대중운동을 통해 현장의 조직화에 역량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ex. 반빈곤 운동을 주제로 한 전국적인 교육강좌사업, 반빈곤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중투쟁 기획, 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등등...)

==> 포괄적인 반빈곤 의제설정과 분석틀을 제시하는 역할 / 활동가들에 의한 실행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집중성 있는 분명한 자기 과제 실현 / 참여 단위들의 주도 하에 반빈곤운동을 활성화하는 매개자의 역할 강화 / 여러 사회운동/ 지역운동의 흐름과의 소통과 교류의 매개이자 공동계획 토론, 수렴을 위한 거점 등 다양한 의견 제시됨.

10. 끝으로 사회운동포럼, 반빈곤포럼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 사회운동포럼이 운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빈곤포럼을 통해 저항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많은 생산적 논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이 사회 빈곤의 현장에 실천하는데 크게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보다 많은 대중과 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하여 현실을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사회운동포럼, 반빈곤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실 준비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해 드립 말씀이 없다. 대신 포럼에 집중 참여하여 영감이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지역사회 활동을 사례와 움직임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포럼 당일 뿐만아니라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말자..
-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운동 내외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공유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서로 안났으면 하는 기대 ~
- 반빈곤이라는 의제를 갖고 노동운동, 여성주의운동, 생태운동, 인권운동과 횡단대회를 통해 반빈곤을 구체화하는 일, 서로 만나 운동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할.
- 사회운동포럼과 반빈곤포럼을 매년 했으면 좋겠네요...활동가와 대중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많은 기대하고 있음. 구호와 당위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전망을 내놓는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 사회운동포럼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겹치는 문제로 직접 반빈곤포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논의결과가 사회운동포럼 이후에 실천적으로 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물론 선언문 채택의 과정에서도 논의결과가 반영될 것이고, 당연히 사회운동포럼 이후에도 그 성과들이 빈곤사회연대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실천으로 외화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
- 우선적으로 부문, 영역을 막론하고 여기저기 모인 활동가들이 '변혁' 에 대한 '통합적인 전망' 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할. 반빈곤포럼 역시 기존의 빈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빈곤사회연대(준)의 운동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할.

사회 운동 포럼

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 사회운동



워크숍 기획 내용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차지훈 변호사

- 일시 : 2007년 9월 1일 오후 3시-6시
- 곳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7호

1) 취지

□ 1부

▷ 해외한국기업문제의 배경과 문제점

- ① 해외한국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사례 유형 및 사례발표(국제민주연대 최미경): 20분

▷ 각국의 사례보고

- ① 필리핀 한국기업보고(필리핀 한국기업 노동자 2인과 활동가 1인): 30분
- ② 인도네시아 한국기업보고(인도네시아 현장 활동가 2인): 30분
- ③ 아시아지역 한국기업과 ATNC 네트워크의 대응(장대업): 20분
- ④ 질의 및 응답: 20분

□ 휴식: 10분

□ 2부

* 사회: 해외한국기업감시팀장 차미경

▷ 한국사회운동의 국제 연대방안 (피널토론): 50분

- ① 민주노총 서울본부
- ② 공감 황필규 변호사
- ③ APWSL 한국위원회
- ④ 플로어 토론

■ 해외 한국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

최미경(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1. 해외한국기업의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원자재 등 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1968년 처음 시작되어 삼림 개발과 수산업에 집중되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부분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근래 들어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의 세계화(globalisation)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자본과 기업의 해외투자생산이 1980년대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초과하게 되어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현재 많은 한국중소기업들이 섬유, 의류,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베트남, 중국,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자동차, 중공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투자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

시기별·연도별 현황 - 김대중 정부 시기 해외투자 최대, 최근 10년의 투자 건수·투자금액이 전체 85% 넘어

업종별 현황 - 제조업 투자가 투자건수 60%, 투자금액 50% 넘어

지역별 현황 - 아시아에 최대 해외투자, 다음은 북미·유럽 순

국가별 현황 - 투자건수 중국이 최대, 투자금액은 미국이 최대

기업규모별 현황 - 투자건수의 62%가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76%는 대기업, 중소기업 아시아 편중 심해

지난 35년 동안 대기업의 총투자건수는 2,791건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1,255건으로 62.3%였으며, 개인투자를 포함한 기타 투자가 4,022건으로 22.3%를 점했다. 아시아, 북미, 중남미, 대양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건수가 대기업을 앞선 데 비해, 유럽과 중동 지역은 대기업의 투자건수가 중소기업을 근소하게 앞서 이 두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투자금액 측면에서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를 비교하면, 대기업이 320억7백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76.0%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91억7천만 달러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출처: 윤효원, '한국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특징', 국제민주연대 발행,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2003년.

2. 노동인권문제

1) 노동운동·민주화 약한 저개발국가에서 많아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의 경우 현지 노동법 자체가 노동인권준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거나 노동법에 명시는 되어있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수출자유지역' 을 만들어 그 내에서 노동인권보장을 유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노동인권에 대한 제한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제한하거나 수출자유지역의 총 책임자나 해당지역의 시장이 이를 공인하기도 한다.

◇ 사례1. 필리핀 '청원'



〈청원공장 앞에서 시위중인 노동자들〉

필리핀 가비예 지역(수출자유지역) 소재, 현지 노동단체로부터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2004년 CE(Certification Election)를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를 부정하였으며, 필리핀 노동부 및 당국이 수차례 노조를 단체협상의 상대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단체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2006년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촉구하며 평화적으로 필리핀 현지법이 허용하는 피켓라인(Picket Line)내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중에 수출자유지역청 경찰 및

Phils.Jeon 공장의 용역경비직원들이 폭력을 행사, 수출자유지역청 경찰과 청원피션 공장의 용역경비 직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노동자들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부상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농성을 차단하여 식수 및 음식물을 구하지 못함.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이뤄진 시위대의 40명 이상이 곤봉에 맞아 부상당하고 2명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공격 당시 이들이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지키는 곳을 골라서 공격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들이 술 냄새를 풍기고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다.

작년 2006년 국제민주연대에서 이 사건을 접한 후 청원의 한국 본사를 찾아갔을 때 부모를 내고 이미 문을 닫았으나, 필리핀에서는 계속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이름을 '청우' 로 바꾸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파업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10일과 11일에 걸쳐 M-16소총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파업을 계속하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노조불인정: 해외투자 끌어들이려는 해외현지 정부(수출자유지역)와 이해 맞물려

해외한국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문제로는 노조 불인정(노조 설립추진 노동자 해고), 강제 초과노동, 질 낮은 음식제공, 폭언, 성희롱 등이 심각하다.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기업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거나 노동권 준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업은 공장폐쇄나 이전 등을 해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불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2~3년에는, 베트남, 중국, 중남미 등 한국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한국자본의 해외이동이 확대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해외현지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 불지급, 갑작스런 공장폐쇄, 야반도주 등의 새로운 문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정규직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노동권준수를 요구할 경우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3)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공장폐쇄와 도주

기업이 인권침해(임금미지급 등)를 했더라도 공장을 폐쇄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다시 공장을 열곤한다. 물론 공장폐쇄에 적절한 절차(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등:OECD 규정)를 밟지 않는다.

◇ 사례2. 도주하는 기업들



무더운 여름, 공장안에서 숙식하며 농성중인 '삼보'의 노동자들

자카르타 북부, 의류생산공장 '삼보'의 사례는 2003년 7월이었다. 한국인인 회사 사장은 딸의 결혼식 때문이라며 서울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는 이미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후였다.

◇ 사례3. 한국에 있는 스웨덴 기업 테트라픽

테트라픽은 우유팩을 만드는 공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업 테트라픽은 198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1년간 흑자를 내오다가 갑자기 제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밀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2007년 하였다. 먼 평균 1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 측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흑자를 설명할 수 없다.

테트라픽의 갑작스런 공장폐쇄통보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노동쟁의가 있어왔고 회사측은 노동쟁의 중에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OECD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 사례4. ‘독나무에는 물을 주지마라’ -버마가스개발이 가져올 노동인권문제

- 44년 이어온 군사독재정권과 이윤에만 관심 있는 해외기업의 결합

따뜻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버마(미얀마)땅이지만 1962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있어 민중들의 삶은 어렵다.

지난 1990년 버마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군부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지 못한, 버마의 민주화 요구 세력 즉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로 대표되는 NLD(민족민주동맹)와 여러 민족들은, 해외기업에게 버마가 민주화가 될 때까지 투자를 멈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버마정부가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비정부기구들 역시,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 (The Burma Campaign UK)과 국제자유노련(ICFTU)은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더러운 리스트’ (dirty list)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유노칼(Unocal) 회사와 프랑스의 토탈(Total) 회사가 1990년대 초반부터 버마에서 가스개발에 투자를 하였는데 생산한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발생되어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2000년 버마 정부는 버마북서부 해상 광구 개발사업의 해외입찰을 실시하였다.

(주)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권을 따내어 현재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에 대한 지분은 (주)대우인터내셔널 60%, 한국가스공사 10%, 인도국영석유공사 20%, 인도국영가스공사 10%이다.

반인권적인 군사독재라는 버마상황과 이전의 유노칼 등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버마가스개발로 인하여 노동권, 인권, 환경침해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 버마현지주민들은 슈에가스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쉽 가스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버마서쪽 해상과 가까운 아라칸 지역에 군인이 늘어나고 있고 강제이주와 토지몰수, 강제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고 있다. 정보접근도 차단되어 있어 강제노동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버마에서는 기업활동이나 투자가 곧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 나쁘게는 일한 댓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가스를 비롯한 많은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버마현지주민들은 그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 최근 아라칸 조사를 다녀온 한국인들은 하루에 8시간동안만 전기가 들어오고 컴퓨터를 전공한 대학생들은 전기가 부족해 컴퓨터 실습을 해 본적이 없다고 전한다.

한국의 버마가스개발에 대한 감시와 버마 가스개발사업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한국기업

한국은 앞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늘린다고 공언하고 있다. 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는데, 유상원조의 경우, 한국기업이 현지에 나가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ODA가 거꾸로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해외원조라를 틀을 빌어 교묘하게 해외에 한국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해외원조 사업의 중심에 인권의 원칙이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즈니스'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 사례5. 필리핀 남부철도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대고 대우인터내셔널이 공사를 하고 있는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사우스 레일 사업)'에 대한 필리핀 현지주민의 반발이 거세게 밀고 있다.

사우스 레일 사업은 총 6486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36km 길이의 통근용 철도를 새로 놓는 사업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여러 나라에 요청했으나, 현지 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들어 반대활동을 벌이는 바람에 자금 유치에 번번이 실패했다. 1991년 일본과 맺었던 대외개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철로 변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취소되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유상원조(열차 및 기타 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조건)를 하기로 함에 따라 대우인터내셔널을 시공사로 해서 이 사업이 착수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3년 국회 승인을 거쳐 2004년 5월 EDCF 차관 공여 계약을 필리핀과 체결했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출금융을 결합한 혼합금융을 필리핀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말로는 유상원조지만 모든 서비스와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토록 한 구속성 차관(Tied Aid) 3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54%)와 면리 7%의 수출 신용 1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3.9%)가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의 원조가 도리어 철로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전을 비탄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철도 건설을 위한 돈만 지원할 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 .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들은 주민의 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아예 돈을 대주지 않는다. . . . 한국 정부는 '너희들이 말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 .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면, 한국인 자신이 말하는 거 가장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작년 2006년 이 문제를 말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니스 머피 신부는 얘기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있는 해외현지의 노동인권단체의 보고와 도움요청, 한국측에서 행한 현지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는 심각하며 한국기업의 해외확장과 함께 우리가 감시해야하는 물리적인 지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

■ 필리핀 가비테 경제구역 (Cavite Economic Processing Zone) 사례

◎ 가비테 경제구역: 필리핀의 가비테 지역은 수도인 마닐라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버스로 약 1시간정도 떨어진 곳으로 필리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각종세제혜택을 주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이다.

가비테 지역의 노동자들은 애시당초 불리한 노동조건에 놓여있을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기업들로부터 각종 지원 및 뇌물을 받고 있는 주정부의 'No Union, No Strike'(무노조 무파업)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지역은 한국기업의 투자가 필리핀 내에서 가장 활발한 곳 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 기업의 60%를 한국기업이 차지하여 한국기업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특히, 한국기업 특유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인 차별과 폭력등이 만연해 있다.

1. 청원폐선 사건

공장명: Chong Waa Fashion, Inc. 사장: 김용렬 1990년에 가비테 수출자유지역에 설립

본사는 청원무역으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했으나 2006년도 9월 초에 방문한 결과, 몇 주 전인 8월말에 채권단회의를 거쳐 부도처리 내고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빌딩경비원에게 들음. (전화받지 않음-)가비테 경제구역에서 한국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 지원센터 (Workers Assistance Center, WAC)활동가 세실씨가 판단하기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잠적했을 것이라 보고 있음. 실제 필리핀 공장은 잘 운영되고 있음.

주요 생산품: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인 GAP과 유통업체인 월마트등에 납품.

◎ 정의 발생경과:

청원폐선 노조는 210명의 노조원을 가지고 있음. 2001년부터 노조 등록선거를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의 집요한 방해와 해고로 인해 노조인가가 지연되어 왔음. 2004년 8월 5일에 마침내 노조등록선거에서 승리하게 됨. 그러나 회사 측이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의신청을 함. 2004년부터 지금까지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필리핀 노동부와 노동법원이 청원노조를 배타적 단체협상권을 가진 노조로 인정했음에도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음. 이 지난한 과정에서 회사 측은 노조원들에 대해 임금 및 수당을 차별하고 노조간부에 대해 해고위협을 가함.

노조는 회사가 계속해서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해고위협을 가하자 8월 30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 및 필리

핀 노동법이 요구하는 파업 요건(노동위원회 사전 통보등)을 갖추고 파업에 돌입함.

조합원들이 피켓라인을 준수하며 평화롭게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측 용역경비 업체인 Jantro Security Guard사 직원들과 수출자유지역청 경찰들이 피켓라인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킴.

9월 21일에 노조 대표와 회사사장간의 대화가 열림. 사장은 노조의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여건이 없으며 회사가 70만 달러 상당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함.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음)계속해서 투쟁할 경우 공장을 폐쇄 하겠다는 협박도 함

8월 30일 파업 시작 때부터 시작된 경찰과 용역직원의 피켓라인에 대한 공격은 9월 25일과 27일에 절정을 맞음.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파업노동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40명이상의 노동자가 부상당함.

특히 WAC의 보고에 의하면 경찰과 용역경비직원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여러 정황 상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공격을 했을 거라고 의심함.(노동자들은 이들에 대한 약물검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여성인데 이들의 공격 시 여성노동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을 공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계속되자 농성장을 완전 봉쇄하여 음식물 및 식수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차단하고 있음. 이들에게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8명의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음.

11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팀, 이 문제에 관하여 방송을 내보냄

11월, 미국기업 켄, 플로와 월마트등이 청원폐선과 필스전의 노동탄압문제를 제기하며 아로요에게 편지를 보냄.

청원폐선, 월마트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우무역으로 이름을 바꿈

2007년 2월 5일 필리핀 지역 노동청은 청원폐선 노조등록을 취소시킴 (노조측은 담당관리가 회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 청렴위원회에 제소한 상태)

2007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동안, 청원폐선과 필스전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 노동자 모금활동(27만 8천 10원 모금)을 벌여 노조측에 전달함

◎ 회사측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살해위협

2007년 6월 10일과 11일에 걸쳐 무장괴한이 청원폐선 노동자가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에 찾아와 자신들이 회사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파업을 계속 할 경우, 살해하겠다고 위협함

위협을 받은 노조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농성장을 철수해서 현재 경제구역 외곽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이 중 한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음

2. 필스전(Phils, Jeon)사건

현지 회사정보: Phils-Jeon Garments Inc.

- * (주)일경이 설립한 필리핀 현지법인(법인장: 최양선)
- * 수출 지역 : 일본, 중동 등
- * 연수입 : 약 1천 5백만 달러

모회사인 (주)일경 정보

- * 대표이사 : 오병권
- * 주소 : (156-807)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88-19 태창빌딩
- * 홈페이지 : <http://www.ilkyung.com>
- * 업종 : 내의류 및 금강수 판매
- * 주요 브랜드 : VICMAN, O/X, O/X MILANO, Marie Claire, NIX21, ANNA MOLINARI

◎ 정의 발생 경과

필스전 노조는 2003부터 노조설립을 준비해왔으나 회사측의 끈질긴 압력에 의해 노조설립이 지체되어왔음. 2004년에 노조 등록선거를 거쳐 노조가 설립됨. 회사측은 노조등록선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필리핀 지역노동위원회는 2005년 11월 필스전 노조를 합법노조로 선언함. 노조는 계속해서 단체협상에 회사가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끝내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거부. 2006년 8월 29~31일에 걸쳐 회사는 노조원 63명을 해고함. 노조는 2006년 9월 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9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 9월 27일에 두 회사 노조의 농성장이 공격받고, 10월에는 농성장이 차단당하는 등, 회사측의 집요한 공격이 이어짐. 9개월이 넘는 농성과정에서 두 회사의 파업참가 노조원들은 복귀하거나 대부분 해고당함. 현재는 소수의 노조 지도부만이 공장 앞에서 농성 진행중.

◎ 회사 측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공격

2007년 8월 6일 새벽에 필스전 공장 앞 농성장에서 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 2명을 피한 10여명이 테이프 로 팔다리를 묶고 눈을 가린 후, 농성장 텐트를 부숨. 이후, 그들의 소지품과 함께 트럭에 태워 경제자유구역 옆에 위치한 고속도로 변 웅덩이에 두 사람을 던지고 떠남. 폭 살해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지만, 팔다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칫 위험할 뻔 했던 상황임.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 개요

한국자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규모 진출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수하르토 독재정권 치하에서 한국자본은 싼 노동력을 찾아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였으며 수하르토 정권은 이런 한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였다. 이시기에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고 각 공장은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신발과, 의류, 잡화, 인형등을 생산하였다. 이시기에 주로 한국자본이 진출한 곳은 서부 자카르타의 Tangerang과 동부 자카르타의 Cikarang 및 Cakung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수하르토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었다.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은 주로 한국공장이 밀집해 있던, 자카르타 지역의 대규모 민중 저항에 의해 실권하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루피아 환는 가치가 폭락하여 정치 위기 전에 1달러에 2500루피 하던 것이 한때 1달러에 13000루피까지 치솟기까지 하였다. 생필품값이 폭등하자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고, 한국의 의류 및 신발공장들은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베트남과 버마로 이전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3번째 해외투자국이며 현재 570개 회사가 진출중이다. 작년말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규모는 10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2. 한국기업 조사 자료

인도네시아 현지 한 노동단체가 북부 자카르타 경제지대인 Cakung에 진출한 4개 한국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 PT Gunung Abadi:

- 진출년도: 1991 / 생산품목: 의류 / 노동자수: 1000명(900 여성, 100 남성) / 수출국: 미국, 일본
- 문제점:
 - 1)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음.
 - 2)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회사규칙은 노동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3)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4) 출산휴가를 가지기가 매우 어려움
 - 5) 직무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만을 받고 있음

2. PT Saudara Tiga Mulia (STM) Willbes Indonesia

- 진출년도: 2005년 8월 4일 / 생산품목: 의류 / 노동자수: 1000명(800 여성, 200 남성) / 수출국: 한국, 미국

- 문제점

- 1) 생리휴가가 없음
- 2) 출산휴가를 가지기 어려움
- 3)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회사규칙은 노동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4) 종종 경영진이 7시 출근을 강요함. (보통 출근시간은 7시 30분)
- 5) 직무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만을 받고 있음
- 6) 식사, 교통 및 출근 수당 없음

3. PT Molax International

- 진출년도: 1997년도 가을 / 생산품목: 의류 / 노동자수: 1220명(1000 여성, 220 남성) / 수출국: 미국, 일본, 캐나다

- 문제점

- 1) 회사규정에 가족에 대한 건강보장이 있어서, 8살 미만의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 2) 임금인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오직 회사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만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4. PT Bangun Busana Maju

- 진출년도: 2003년 / 생산품목: 미국, 유럽 / 노동자수: 816명 (700 여성, 116 남성) / 수출국: 미국, 유럽

- 문제점

- 1) 건강보험이 제공되지 않음.
- 2)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회사규칙은 노동자에게 고지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3)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4) 직무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만을 받고 있음

3.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에서의 인권침해

1)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음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를 쓰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임금외에 기타 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같은 기초적인 복지도 제공되지 않음.

2) 노동권을 탄압하는 한국기업

단체협상을 회사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노조 형성까지 가로막는 등, 노동3권을 부정하는 한국기업 특유의 인권침해 저지르고 있음. 기업이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많은 사례들이 보고. 일례로 PT Saudara Tiga Mulia-Willbes Indonesia의 경우 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후, 2년 후에 노조설립을 허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노조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사실들은 한국 자본가들이 노조를 회사의 적으로 간주하여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3) 먹고 튀는 기업, 한국자본

한국공장은 어느날 갑자기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함. PT Dozon-Tangerang (2003), PT Starwin-Tangerang (2005), PT Dong Ho Puspa-Bekasi (2005), PT Dong Joe-Tangerang (2006), PT SpotecTangerang (2006), PT Tae Hwa-Balaraja (2006) 과 같은 회사들이 사라져서 현재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남기고간 공장 기계들을 자신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싸우고 있음.

4. 한국정부와 기업의 입장

2005년 8월 8일 자카르타 포스트(Jakarta Post)와 인도네시아 이선진 대사 사이에 이뤄진 인터뷰를 보면, 이대사는 한국기업이 50만명을 고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을 높게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런 문제인식을 전달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노조불인정, 공장폐쇄, 저임금, 모성보호를 무시하는 행동 등에는 눈감고, 오히려 좀 더 많은 정리해고권한을 기업에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정부에게 압력을 넣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했으니 저임금은 당연하며, 이것이보장되지 않을 때는 노동자의 생계는 내팽겨친 채 언제든지 철수하겠다는 한국자본의 논리를 한국정부가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공장폐쇄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갑작스런 공장폐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도 있지만,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출국가의 법까지 무시하거나 계약을 요구하는 한국자본의 비도덕성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사회운동포럼

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워크숍 기획 내용
<p>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p> <p>○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7시 ○ 곳 :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7층 31707</p> <p>1) 논의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의 평화 의제에 대한 분석과 제언 - 6자회담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과 제언 -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방안 <p>* 주발제자 및 토론자가 이러한 세 가지 주제별로 문서를 작성한다.</p> <p>2) 진행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협국장) * 주발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명제> / 25분 * 토론자 - 사회진보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 섭외중 - 범민련 서울본부 * 섭외중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통일위원회 * 섭외중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섭외중 - 노동자의 힘 * 섭외중 <p>* 휴식 * 청중토론 * 마무리토론</p>

■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남북미의 정세 대응

1)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공세적으로 돌파하여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

-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면서 2차 북핵 위기를 조성한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에 맞서 북은 핵동결 해제 선언-IAEA사찰단 추방-NPT탈퇴 선언으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던 부시정권을 6자회담 마당으로 끌어 냄.
- 이어 6자회담을 북에 대한 5:1 고립구도를 만들려는 부시정권에 맞서 핵보유 선언을 통한 정면 대응으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 냄.
- 9.19공동성명 이후에도 BDA 문제 등으로 대북 압살정책을 멈추지 않는 부시정권에 대하여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여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2.13합의를 도출. 이는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을 되치기 한 북의 배수진을 친 결의와 정치·외교적 역량의 승리
- 북은 리비아의 타협적 태도나, 후세인정권의 수세적 태도와는 달리 전쟁을 불사한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로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을 파탄내어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
- 북은 ‘선 핵시설, 후 핵무기’ 의 2단계 비핵화 협상전략 구사. 최종적인 핵폐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체제 안전이 법·제도적으로 담보될 때 실행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 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치 중지와 조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 ‘조미가 평협 당사자’ (한성렬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리소장, 7/4)

2) 대북 적대정책에서 수세에 빠진 미국은 핵 없는 북과의 공존을 선택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수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관철을 위한 대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

(1) 대북 적대정책의 좌절과 핵 확산 방지의 절박성

- 콜린턴 정권의 대북 관계정상화정책을 폐기시킨 부시정권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9월 조일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되는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무드가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2002년 10월 HEU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여 2차 북핵 위기를 조작
- 이후 부시정권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구사하여 북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6자회담에서의 '대북 5:1

고립구도'의 좌절, 북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의 충격,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실효성 상실, PST발동의 실패, BDA문제에서의 완패 등으로 대북 압살정책 파산

- 2차 북핵위기(02년 10월)부터 BDA송금완료(07년 6월)까지의 기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아틀란틱 보고서, 07년 4월) 것을 미국 조야가 인정하는 과정이자, 젤리코 보고서(06년 초)가 지적한 “기존의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난관 봉착” 확인 과정
- 북의 핵보유 및 핵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핵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핵확산과 NPT체제의 붕괴, 그에 따른 미국의 (핵)패권 붕괴를 우려, 핵 없는 북과의 공존을 선택**
- 유사시 미국 영토 및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부담

(2)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정세는 되돌리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54년 제네바회의와 90년대 후반 4자회담의 파탄,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회피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해 옴.
- 북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압살정책의 파산, 이라크에서의 실패 등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수 없게 됨.
-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과 전면전을 감행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압박을 지속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을 굴복시킬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고립과 영향력 약화를 자초하기 보다는 핵이 없는 북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하는 것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
- 또 9.19 공동성명과 2.18합의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다자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조미간 합의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한 쪽이 뒤집기 어려운 규정성을 갖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퇴임과 대선을 앞둔 부시의 공화당 정권으로서의 이라크 등 중동에서의 잇따른 실패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반회할 필요성이 절박함.
- 거시적 측면에서는 냉전의 해소와 중국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사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냉전 해소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옴.
-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연이어 대북 적대정책의 실패로 협상으로 돌아선 경험이 있기 때문임.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과 가자지구 등에서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부시정권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민심이반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또, 북의 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만을 폐기시키고 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는 중간단계의 해결, 즉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인정도 미국에게는 핵확산에 대한 부담과 NPT체제의 균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임.
-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침과 지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흐름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형에 있다고 하겠음.**

- 또, **평화체제 구축은 50여 년간 지체된 문제라는 점에서 압축적 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북과 미국이 각기 취약성과 함께 자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핵심적 요구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내온다면 상황이 급속히 진전될 수 있음.
- 한국 정부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입장에서 **동시병행 입장**으로 선회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게 된 것도 **평협 정세의 급진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자 차기 정권에서의 지속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3) 미국은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동맹 전환을 토대로 대반전을 꾀하고 있음.

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한미FTA로 남한에 대한 패권 유지·강화의 교두보 마련

- 2005. 11. 17, 한미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선언)을 통해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중진을 위해 있다는 데 동의”함.
- 이는 한미동맹이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동맹에서 ‘포괄’, ‘가치’ 등의 이름을 붙인 침략동맹으로 전환되었다는 선언임.
- 이를 근거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꿔 남한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자국의 패권전략을 관철하고자 함.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일환인 NATO GP 참여,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가에 대한 포위와 공격을 일상적이고 지구적으로 감행하고자 함.
- 이처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전략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장기적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임.
 - 또한, 경주선언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이에 따라 2006 2 2, 한미FTA 협상이 개시됨.
- 이와 관련하여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미)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 한국 외교당국자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발언. 이는 한미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
- 이처럼 미국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한미FTA를 통해 남한에 대한 장기적 패권구도의 교두보를 마련.**

②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 관리, 흡수통일 지향

- 정치외교 경제 등을 고리로 '변환 외교' 추구. 라이스 젤리코, 버시바우 등이 변환외교 전문가
- 리영희 선생의 "지금처럼 미국 승패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통일조차 두렵다."는 표현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 미국 일각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후 미국과 북의 동맹관계를 제안하기도 함.(2000)
- 국방연구원(KIDA) 발표문(2007. 5) : "**북핵을 미국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구도 속에서 관리**"
- '한미동맹미래공동협의결과'(2002년 SCM보고자료) : "남한이 통일 한국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2002. 9) : "미국은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자유시장이 되기를 바랄 것"
- 한미동맹비전연구 한국측 준비자료(2005. 12) : 평화공존단계에서 미국의 안보목표 중 "체제전환국(북한)의 안정적인 민주화"
- **미국은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관리권 행사를 추구**

③ 남에 대한 지속적 지배와 북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견제

- CSIS 보고서(2002. 9) : "통일 이후에도 ……미국은 또한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지원하도록 재정의 될 특수한 동맹관계를 한국과 유지하기를 원할 것"
- 한미동맹비전연구 한국측 준비자료(2005. 12) : 미국의 안보목표 중 화해협력단계에서 "중국의 패권세력화 방지", 평화공존단계에서 "패권세력 등장 방지"를 명시
- 경주선언(2005. 11) :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
- 아미티지 보고서(2007. 2) : ▲ 미국 단독의 아시아 관리는 불가능하고, ▲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공동관리는 위협하고, ▲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의 양극 구조는 비효과적, ▲ 최선의 아시아 관리구조는 "미국의 힘과 책임, 지역적 지도력이, 아시아의 다른 성공적인 국가들의 지역문제에의 사전적인 참여와 결합한 가운데 지속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모든 노력이 중국과의 이견을 솔직히 제기하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협력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들과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남한에 대한 지배권과 동북아에 대한 개입 토대를 확보한 데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공동안보구도 형성과정에서 북에 대한 '변환외교'를 통한 관리와 개입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주도 아래 동북아 협력안보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전략을 추구함.**

3) 평화협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한미동맹세력의 확고한 입장

- 김대중 전 대통령 :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 2002. 12. SCM에 보고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의 결과],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 2006. 1. 19,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송민순 외교 :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

-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하위파트너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 수립에 임해 옴. 이런 연장선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한미 동맹세력은 평협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를 자신의 입장으로 하고 있음.

4) 소결론 : 향후 정세는 유동적이고 임중함.

- 북의 배수진을 친 되치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좌절하면서 평화체제 정세가 도래

- 수세에 빠진 미국은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을 통한 장기적 유지를 고리로 북에 대한 관리와 중국 견제·포위를 노리고 있음.

- 노무현 정부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음.

- 향후 정세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평화협정인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평화협정인가를 둘러싸고 자주·평화·통일세력과 한미동맹세력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향후 정세는 유동적이고 임중함.

- 이는 남북 운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의미.

2.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현황과 태세

1) 평협 정세를 맞는 진보진영과 시민운동의 준비정도는 취약한 상태임.

- 자주진영은 평화협정문제가 정세의 중심적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그러나 그 속도나 정세의 역동성, 투쟁의 중심 고리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주체의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음.

- 평등진영은 평협 정세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고 실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기층대중조직들은 자기 계급계층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면서 평협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진보진영 전반적으로 정파간 대립과 분열 만연, 실천적 단결과 투쟁의 기층 저하, 사업에 대한 관성적 태도, 지도집행력의 부족 등의 난맥상으로 인해 평협 투쟁에 대한 힘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시민운동진영은 당분간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에 대해 모호하거나 절충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평협 정세에 대한 대응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주어 볼 때 내용적으로나 조직적·투쟁적으로 준비정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2) 총체적 정세인식과 실천적 자세의 필요성

(1) 조미간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

- 조미간 대결전에서 완승한 북이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궁지에 몰려있으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북의 완승론은 북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 약속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통해 관계정상화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점을 도외시 하는 과도한 시각임. 북이 공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나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 등에서 북의 취약성으로 인해 관계정상화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은 정치·외교적 협상과 각종 압박(군사적 압박도 포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활적 이해에 해당하는 평협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려 할 것임.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패권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님. 따라서 미국이 북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관적임.
- 이처럼 조미 양측이 모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에서 조미 양국은 자국의 요구 관철을 위해 향후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임.
- 이런 점에서 조미간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 남측 운동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은 정세에 대한 안이하고 과도하며 비주체적이고 비실천적인 인식임.
- 이와 같은 안이한 정세인식은 필연적으로 안이한 조직적·실천적 태도로 귀결됨. 이는 실천적으로는 평협을 중심고리로 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것임.

(2)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평협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장기 주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

-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평협을 받아들이 리 없기 때문에 북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동맹세력이 압도하고 있는 남측의 지형과 정세에 매몰된 나머지, 더 큰 규명력을 갖고 있는 조미관계에서 현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세적 정세인식.
-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쨌든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세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국은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인정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음.
- 북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전쟁의 불씨를 코 앞에 두고 살게 된다는 점에서 북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 관변 일각에서조차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된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히는 것은 주미철 주장이 결코 운동권 일각의 주관적 희망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평협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는데다가 정세의 고양과 주체의 올바르게 효과적

인 투쟁에 따라 남측에서 주미철·한미동맹 폐기 여론이 높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협이 체결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임. 따라서 주한미군 장기 주둔 불가피 시각은 비주체적이고 고정적 사고.

- 수세적 정세인식은 평협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로 귀결. 이런 태도로는 주한미군 없는 평협투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임.

(3) 정세인식의 좌우편향을 경계해야

- 현 정세는 조미간 대결에서 북이 정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남한의 한미동맹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반전을 꾀하는 형국.

- 향후 북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중심 전선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임.

- 따라서 정세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바탕하여 주미철 및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평협 체결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절실

3) 정세는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1) 절호의 기회 : 주한미군 철수의 객관적 조건 성숙

- 평화협정 체결되면 정전협정 60항의 외국군대 철수 조항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 근거 상실

- 평화협정 체결되면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근거 소멸.

- 북의 정세 주도성

- 2차 남북정상회담도 호재

- 지난 10년간 평균 국민 여론 50%(중앙일보 여론조사), 단계적 또는 즉각 주미철 입장

-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된다면 60여년에 걸친 군사적 대결과 갈등, 온갖 예측과 굴욕, 고립과 파괴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 평협 정세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쟁취할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

(2) 위기 :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준비정도 부족

- 남측에서 한미동맹 세력이 평화협정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한미동맹의 가치·포괄동맹으로의 전환과 그 실현 수단인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평협과 통일을 강제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주미철 문제가 쟁점화되면 승미 반복세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미군철수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임.

-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은 내용적, 조직적, 투쟁적 준비태세가 매우 취약한 상태.

- 평협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미철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은 영구 주둔할 수도.

-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한다면 주권 침탈의 영구화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따른 전쟁의 일상화·지구화에 끌려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NATO의 글로벌화, 아태지역 나

라들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미국의 지구적 침략동맹화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미국에 대한 대항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침략동맹노선을 유지·강화한다면 신냉전의 한축이 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히게 될 것임.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온갖 인적·재정적·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단의 온전한 극복도 어려울 것임. 이처럼 한미동맹의 족쇄 아래서는 민족적·국가적·민중적 장래가 보장될 수 없음.

(3) 비상한 각오와 대응 절실

- 지금은 '해방 8년'에 맞먹는 현대사의 중대 고비
- 자주평화통일운동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안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의 절호의 기회가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위기로 전화할 수 있어
- 한미동맹세력은 "한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는 주장을 대세화하여 평협 협상과정에도 이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유지의 근거로 내세우려 할 것임.
- 따라서 자주평화통일운동은 비상한 정세인식과 각오, 엄중한 결의와 일사불란한 준비와 위력적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한미동맹세력의 의도를 파탄내야 할 것임.
- 만일, 이런 엄중한 정세가 예견되에도 불구하고 조직적·개별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 투쟁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단결을 이뤄내지 못하여 역사적 호기를 놓친다면 이는 역사적 오류가 될 것임.
- 이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운동은 기존의 구도와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서 오로지 역사와 민중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혁신과 실천적 단결을 추구해야.

3. 평협, 주미철, 통일 전망에 관한 우리의 구상

1) 평협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종전 및 불가침 선언
- 군사분계선을 대체하는 육상 경계선 및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상경계선 설정
- 남에 대한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 지향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 외국군대의 철수 및 동맹 폐기
- 평화관리기구 구성
- 한반도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및 통일 방안 합의
- 당사국 상호간의 관계 정상화

2) 당사자 및 체결 방식문제

- 조미를 핵심당사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남한 또는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음. 즉, 조미 2자가 기본이되, 남한이 참여하는 3자,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도 가능.
- 협정의 구성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포함된 포괄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사안 및 해당 당사국끼리 맺는 몇 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능.
- 문서의 형식은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상원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treaty)'이 바람직.

3) 평협, 주미첩, 통일의 단계 및 시기 구상

- 1단계 평화협정 체결(현재~2008년말) : 한반도비핵화 및 군축, 주미첩, 자주적 통일 담보하는 이정표로서의 평화협정체결
- 2단계 낮은단계 연방제(2009년~2018년) : 평협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1단계 군축, 주미첩, 6.15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 3단계 높은 단계 연방제(2019년~2028년) : 외교와 국방 등의 중심적 권한을 연방정부가 갖는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2단계 군축

4.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남북미의 입장

- 8월 28~30일, 개최하기로 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됨.
- 2차 회담 성사로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회담으로 가는 길을 틔.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확고한 토대가 될 것.
- 자주통일 지향과 통일방향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로 교류협력에 머물렀던 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측면인 정치·군사적 측면에 대한 진전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회담임.
- 노무현 정권의 경우,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입장을 견지했던 데서 보듯이 이제까지의 대미 추종적 자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됨. 노무현 정권은 핵심의제를 경제협력문제로 설정하는 한편, 의제를 제한하려는 한나라당 등의 요구에 반발하는 데서 보듯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과를 내고 합의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당황하고 견제하는 입장임. 즉, 회담 의제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하며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미국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북이 선도에 나갈 경우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은 정상회담이 자국의 패권 관철에 불

리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정상회담을 통제하려 할 것으로 보임.

- 북의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속박되어 있는 노 정권을 견인하여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한편,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하여 조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남 쪽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음.

- 한반도 평화 관련 의제에서 합의 또는 협의되어야 할 내용은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한다는 큰 틀의 합의 속에, ▲ 남쪽에 드리워진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지향에 대한 천명, ▲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실현을 위한 조치에 대한 합의, ▲ 해상경계선 설정 협상에 대한 합의,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외국군대의 철수문제에 대한 협의, ▲ 당사자 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협의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노 정권이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의 번영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문화적 교류의 폭을 확대하며, 인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조국통일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 기초하여 ▲ 통일방안에 대한 진전된 합의, ▲ 민족통일기구 구성문제에 대한 합의, ▲ 조국통일 일정을 내오는 문제에 대한 합의, ▲ 반통일적 법·제도 정비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3)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호관계

-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 가능성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동

- 이제 역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할 것임. 특히, 평화 의제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선도하고 일정하게 규정하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의 정도에 따라 한반도 정치외교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음.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통일의 시기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

5.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전술적 과제

1) 평화협정체결투쟁을 자주평화통일투쟁의 중심 고리로

- 9월경 열릴 6자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포럼'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 의제가 다뤄지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남측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평화 협상이 중대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역사적 대논쟁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어떤 평협이 체결되느냐에 따라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지형이 규정되고 통일의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평협이 정세의 중심적 흐름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이 이후 정세에 또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화투쟁이 중심고리로 되는 것은 타당.

2) 평화투쟁에 주미철을 결합하여

- 전체 구도에서 평화 정세의 전선은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임.
- 평화와 주한미군(한미동맹)문제는 배놓을 수 없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주미철은 평화의 핵심 내용을 담보하고, 평화는 주미철을 촉진하고 강제하는 관계.
- 평화와 주미철을 빼어놓는 순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야 할 핵심 내용이 거세되면서 평화 내용에 근본적 한계가 발생하고, 범여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통일지향의 평화협정'과 차별성을 잃게 됨.
-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만이 올바른 평화이므로 평화를 중심고리로 하되, 주미철을 뗄 수 없이 연관시켜 투쟁을 전개할 필요.
- 다만 대중의 준비정도를 고려할 때, 무매개적인 주미철 주장이 아니라 정세의 중심요인으로 부상할 평화를 매개고리로 하여 주미철을 설명하는 것이 대중적 설득력을 높일 것임. 즉, 평화와 주미철은 동전의 양면이 되, 대중적 접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미철을 평화에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

3) 현시기 평화,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위상

- 매항리, SOFA, MD, R-15K, 여중생 투쟁 등의 대중적 반미지주화투쟁은 전술적(각론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직접적 요구(행동 슬로건)로 하는 투쟁이었음.
- 그 한 정점인 여중생 투쟁은 정권 장출을 좌우할 정도로 위력적이고 성공적인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평화, 주미철 등의 전략적 요구를 결합시키지 않은 것은 대중의 준비정도가 아직 전략적 요구를 자신의 직접적 요구로 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판단 때문이었음.
- 평택투쟁은 반미지주화투쟁이 전략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투쟁이었음. 사안의 성격이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이었다는 점과 함께 투쟁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대중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외쳤다는 것은 이 투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임.

- 현 정세는 평협, 주미철을 대중의 직접적 과제로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평협과 주미철이 아직은 대중의 직접적 요구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이는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이 평협, 주미철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또 그에 조응하여 선전적 요구 차원에서 행동적 요구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금은 평협, 주미철을 '선전적 요구 - 선동적 요구 - 행동적 요구' 중에서 '선동적 요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할 시점임.
- 대대적인 대중 선동의 세례를 통해 대중이 평협, 주미철을 자신의 직접적 요구(행동 슬로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평협체결 협상 과정에서 대중이 평협, 주미철을 자신의 직접적 요구로 하여 거리로 진출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4) 전술적 투쟁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 선동적 차원에서 평협, 주미철을 제기해 나간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술적 투쟁(작통권·유엔사,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평택 등 기지, 파병, 방위비, 전시비축탄(WRSA), 반환기지 환경문제, 미군범죄,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무기도입 등)임. 즉, 각 전술적 투쟁들은 평협, 주미철 선동의 실득력있는 소재가 됨.
- 또 평협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 논쟁이 벌어지면 각 입장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국민적 실득력과 호소력을 갖느냐, 그리고 어느 입장이 더 큰 전파력을 갖느냐에 따라 여론이 좌우될 것임.
- 따라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은 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한미군·한미동맹 유지론이 왜 허구적인지 그 근거와 이유를 실득력있게 정리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전파해야. 전술적 사안들은 주미철, 동맹폐기 주장의 근거가 됨.
- 전술적 사안들은 주미철과 한미동맹 폐기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한편, 그것 자체로 대중의 반미치주의식을 고양시키는 의미를 가짐.
- 평협, 주미철 투쟁과 각 전술적 투쟁은 자기 독자적 의의와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됨으로써 내용과 근거를 풍부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전략적 투쟁과 전술적 투쟁을 결합한 구호의 예> :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는데 100년 가는 미군기지 건설 웬말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 평화협정 체결 걸림돌 유엔사를 해체하라.
- 전쟁동맹, 죽음의 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 평화군축 역행하는 국방비증액, 무기도입 반대한다.
- 평화협정 체결한다면서 북침전쟁연습 웬말이나, UFL중단하라.
-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국민 혈세 빨아먹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6. 평협, 주미철 실현을 위한 사업 과제

1) 사업 목표

- 한반도 평화포럼이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광범위하고 단결된 실천을 전개한다.
- 평협, 주미철 투쟁의 통일적이고 위력적인 전개를 통하여 남측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
- 평협, 주미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을 마련한다.

2) 사업기조와 방향

- ‘국보철·평협·주미철·한미동맹 폐기·낮은단계 연방제·높은단계 연방제’의 전략적 투쟁에 복무하며, 이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투쟁 전개
-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 통일에 대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대안과 경로를 제시
- 평협을 중심 고리로 하여 주미철과 한미동맹 폐기를 긴밀히 결합하여 투쟁을 전개
- 평협, 주미철 등 전략적 투쟁과 좌통전·유엔사, 방위비·평택, 작계와 전쟁연습, 국방비증액과 무기도입 등 전술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투쟁을 전개
- 우선, 전술적 투쟁을 중심으로 평협, 주미철을 결합하여 전개해 나가면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 내부 입장 정리와 교양 등 평협투쟁을 실천적으로 준비
-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 등 평협 정세의 발전에 따라 평협투쟁의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투쟁을 전개
- 대선과 총선 시기 각 정당과 후보에 평협, 주미철 입장 관철 노력
- 주미철을 담보하는 평협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최대단결을 추구하여 위력적 실천을 전개. 이를 담보할 범국민적 운동기구와 실천단위 구성
- 북과 평협체결, 군축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 추진

3) 영역별 사업계획

- 정책 :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 입장 및 로드맵 정리, 한미동맹세력 입장 분석 비판, 정책 워크숍, 토론회 개최, 통일방안과 경로 연구
- 교육 : 활동가용·대중용 교양교재 제작, 강사단 조직·운영하여 각급 단위 교양 전면적으로 전개
- 선전홍보 : 온-오프라인상 대중선전물(신문, 리플렛, 만화, 포스터, 엽진, 동영상 등) 제작 배포
- 조직 :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기구 구성, 그 산하에 실천단 조직, 해외연대
- 투쟁 : 주한미군 없는 평협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주요 계기별(9.8, 10.1, SPI, SCM, 12.19, 4.9 등), 사안별(좌통전 조기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방위비·WRSA 등 한미간 각종 협상 및 이행 전면 재조정, 평택 등 기지확장 중단, 국방예산 삭감 및 첨단무기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 새로운 공격적 작전계획 작성 중단 및 북침전쟁연습 중단) 투쟁 전개

[토론문]

‘남북정상회담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토론문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정세 인식에 대하여

- 한반도 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보고, 이중 특정 당사자의 승패 구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다소 일면적
- 물론 미국이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현실적 역량이 제한적이고, 특히나 지역 동맹국(동아시아의 일본과 남한)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제약/ 또한 전쟁이 발발할 시 초래될 동아시아 경제네트워크의 파괴가 끼칠 현실적 효과라는 제약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
- 그러나 현재 국면을 ‘북한의 승리’ 라고 규정하면, 이는 곧 ‘북한 핵개발의 승리’ 라는 인식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자위력’ 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고 인식하는 것은 위험성이 수반됨. (이는 세계 모든 군부가 목 놓아 외치는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라’ 는 주장과 공명하며, 평화운동과 양립할 수 없음)
- ‘핵개발→대미협상에서 우위 확보’ 이라는 모델은 미국과 직접적, 잠재적 적대관계에 있거나 지역 패권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핵개발, 핵보유 욕구를 자극함.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욱 평화롭고 평등한 세계질서와는 다른 형태의 무질서, 폭력의 확산을 뜻함.
- 한편 이러한 인식은 평화운동, 민중운동의 개입 여지를 극히 제약함. 평화가 특정 국가를 과도 지배하는 군사, 정치 엘리트 집단의 정치적 책략에 의해 달성된다는 환상을 유포함.
- 덧붙여 핵무기는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학살의 극단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중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의 극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2. 평화운동과 평화협정

- 역사적으로 ‘국가간 협정’ (평화협정), 국제법이 함구적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함.
- (국제)법의 실행성은 일국적인 수준에서는 사법부, 경찰, 군대라는 폭력기구를 통해 보장되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패권국가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보장됨. 국제적 폭력(전쟁)의 최종 담당자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은 현재 세계체제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함
- 다만 국제적, 일국적 세력관계에 따라 전쟁 유발요인을 억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 신념, 의지일 것임.

- 과거 1차 세계대전 직전 2인터내셔널에서는 무엇으로 평화를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됨. 한편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즉 국가/지배자의 선의에 의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노동자운동의 직접적인 행동, 즉 총파업을 통해 자국의 전쟁수행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됨. 그러나 당시 전자는 철저히 무산되었고, 후자는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체결된 (미국이 보장하는) 평화협정은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가시적인 분쟁을 종결시키더라도 경제적, 정치적으로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도 함. (1998년 오슬로 협정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형태로 변질.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파다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새로운 지배 방법으로 기능함)

3. 한반도 평화협정

- 물론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성문화, 제도화된 평화의 보장이 지닌 물질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평화의 최종 담지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함께 인식해야 함.
-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는 평화협정이 미국의 전쟁 감행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형성과 전쟁유발요인의 실질적 제거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따라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이에 수반하는 공격적 전쟁전략, 무기체계의 폐기와 해체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상시전쟁준비태세' 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에 있음. 남북 각각이 수십만/수백만에 이르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평화' 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명확함.
- 또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현실적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남아 있는 것은 그리 현실 가망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짐. 따라서 최소한 동북아 차원에서 주둔미군 문제를 제기하는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적극 고려해야 함.
- 또한 한미동맹이 실질적인 침략동맹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폭로하여, 국제 평화운동의 연대 차원에서 침략적인 한미동맹 폐기의 대중적 압력을 형성해야 함.

4. 한국 평화운동과 국제연대

1) 일본 평화헌법

- 현재 한국에서 '상시전쟁준비태세' 의 해체를 주장할 때, 반대 논거로 제기되는 것이 동북아 국가의 잠재적, 현실적 군비경쟁 특히 일본의 재무장확임.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도 자주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이 자신의 군비는 강화하면서 일본은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일본이 패전국이니까 과거의 강요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는 논리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운동은 동시에 자국의 상시전쟁준비태세를 해체하는 운동과 맞물려야만 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동아시아 헌법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의 운동이 준비 중임)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헌을 반대하는 운동은 오히려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오히려 더 일본의 재무장화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 결론적으로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 만 외치는 것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

2) 외국군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 2007년 예콰도르에서 외국군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한국에서 평택범대위 참여. 이에 관한 후속 사업을 통해 (일단) 외국군 기지가 낳는 사회적 고통을 범세계적으로 폭로하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

3)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의 교훈

- 미국의 테러전쟁, 아프간 침략, 이라크 침략 등을 매개로 국제적으로 형성된 반전평화운동이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벌어졌을 때 어떤 인상적인 활동도 펼치지 않은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물론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국제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펼쳤음. 다른 한편 해외 평화운동 세력 중에서도 '부적절한 선교활동' 을 비판하는 시각도 많았음)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평화운동이 국제적 평화운동의 이슈,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한국이 현재에도 이라크, 아프간 현지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활동이 저조하듯이 미국의 테러전쟁에 대한 대응이 취약함),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평화운동이 국제 평화운동과 무엇을 함께 요구하고 활동해야 하는지를 사고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함. '대북억지력' 차원을 넘어서 침략동맹으로서 한 단계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한미동맹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남북정상회담

- 현재 한국과 미국간의 역할 분담, 즉 정치군사 이슈는 미국이 통제하고 남한은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에 중점을 둔다는 '당근과 채찍' (좋은 경찰/나쁜 경찰) 전략이 작동 중.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점차 일방적인 '지원' 의 성격을 버리고, '비즈니스' 의 논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하고 있음.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태도나, 실질적인 남북합작의 경제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비즈니스에 적합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라는 것 (즉 개혁개방).
- 과거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단지 찬성(좌파), 반대(우파)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현재 북한의 변화를 단지 찬성, 반대로 접근할 수 없음. 그러나 기술, 기계의 이전이 단지 '생산수단' 이 이전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이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상업교역, 공단건설 등등), 개발지원(정부, 국제기구, NGO)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맞물려 제안될 것이라는 점. 신자유주의가 제3세계 국가의 민중적 발전의 길을 차단하고, '자유경제' 라는 미명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교환을 봉쇄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끝>

[토론문외]

평화협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 민주노동당 정책위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방안 연구’ 중 발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김동원

○ 한반도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전쟁의 공식종결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단 평화회담 4개국이 합의하고 정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 둘째, 종전이 합의되면 한반도정전협정의 관리주체였던 유엔사 해체를 명문화해야 함. 유엔사는 이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으로 존재근거가 희박해졌으며⁶⁴⁾, 그동안 유엔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미국이 평화협정 주체가 될 경우 더욱더 존재할 필요성이 없음.⁶⁵⁾ 또한 유엔사는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⁶⁶⁾ 그리고 이미 한국군이 유엔사의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정전체제의 관리기구라 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모두 유명무실화되었으며, 북미 장성급회담을 통해 정전체제상의 문제를 풀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당장 한반도평화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⁶⁷⁾

64) 유엔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 1511호에 따라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따라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했을 때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유엔사 해체문제였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안보리 결의로 인해, 유엔이 북한을 평화예후국으로 인정한 것이 되어 유엔군사령부설치의 법적 토대인 유엔안보리 결의 1511호는 존재의의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이정희, 2005: 41).

65) 1994년 5월 28일 북한은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전협정의 대체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6월 24일 부트로스-갈리 총장은 ‘미국만이 유엔군 사령부의 존속이나 해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1950년 7월 유엔사를 결성할 당시 안보리는 ‘병력과 기타 지원을 통합군 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Harrison, 2003: 266).

66) 유엔사는 2002년 11월~12월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을 위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군사정전위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 28일에는 유엔사 부참모장이었던 제임스 솔리건 소장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유엔사의 승인을 무시한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발언한 것은 당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유엔사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2003년 8월 평양체육관 준공식 참가단의 대규모 방북 무신도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에 지장을 초래한 실례다.

67) 최근까지 미국이 유엔사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점을 볼 때 유엔사해체 문제는 의외로 평화협정 체결의 난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06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사를 유사시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개편해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역할을 높여줬다며 이런 구상의 의미를 ‘진시 후발상황에 대비해 유엔사 병력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유엔사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기지 사용권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기도 하다. 1951년 9월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과 이에 따른 여치슨·요시다 공문은 주한유엔군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시설과 역무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엔사가 해체될 경

○ 셋째, 동맹체제의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이와 관련해 기존 학계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외국군 철수나 쌍무동맹 문제를 우회 또는 현상유지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⁶⁸⁾,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상호주의적 해체야말로 최대주의적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필수요소로 봄. 그러나 동맹의 해체는 동맹체결 당사국들의 주권행사라는 점에서 평화협정이 동맹의 파기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평화협정 문안에서는 동맹의 성격 즉 남측과 미국측을 염두에 둔 북중동맹과 북측과 중국측을 염두에 둔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고, 동맹의 파기 자체는 당사국들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적대성을 탈각해야 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측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의 철회, 미2사단 철수, 주한미군의 후방 배치 등의 조치는 명시되어야 함.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평화체제의 공고화와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2006년 1월 19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역시 무효화되어야 함.

○ 넷째,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충돌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동시행동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공약하고 미국은 핵선제공격과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 중국 역시 한반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평화협정문 안에 명시되어야 함.

○ 다섯째, 전후의 다양한 문제 청산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정전협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남북 간의 영토문제, 예를 들어 서해상의 해상분계선 문제를 평화협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합의되어야 함.⁶⁹⁾ 또한 미귀환국군포로, 남북자, 장기수, 전시 민간인 학살문제 처리⁷⁰⁾ 등도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임.

○ 여섯째, 남북 양측은 평화통일 추진을 위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은 남북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함.

○ 일곱째, 남북미중 4자는 상호 충돌과 전쟁의 포기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문화해야 함.

○ 여덟째, 끝으로 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집행할 평화협정이행기구-평화통일추진기구 포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우 일본 내 6개기지의 사용권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백진현, 1991: 70~71). 한편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는 역설적이거나도 유엔사의 정전업무를 한국에 이양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유엔사가 맡고 있는 20여개의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기능 중 대부분을 한국에 함께 넘기고 싶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이다(조선일보) 2006년 12월 11일). 미국은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할 자질구레한 일들은 한국에 떠넘기면서 유엔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68) 백승주는 외국군 주둔 및 쌍무동맹조약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내용을 평화협정에 직접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백승주, 2006), 박명림 역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는 직접 연계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박명림, 2004).

69) 박명림은 평화협정 초안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peace zone)로의 전환을 명문화하고 있는데(박명림, 2004), 비무장지대 처리를 위한 평화협정 조항에는 무엇보다도 명칭니겨 매설되어 있는 대인살상무기를 어떤 절차로, 누구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0) 남북중미 4개국 모두 민간인 학살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볼 때 4개국이 한반도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다 뚜렷해진다. 다만 피학살유가족이 생존해 있는 현실에서 학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평화협정 체결의 난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 운동 포럼



‘비공식’ 노동자 조직화 전략 모색 워크숍

워크숍 기획 내용

- 일시: 9월 2일(일) 오전 11시
- 장소: 인문관 7층 31507
- 주최: 비공식노동자 조직화전략 워크숍 기획단

1) 취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확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군의 형성, 빈곤의 확대·심화에 따른 노동빈곤층의 광범위한 형성은 기존 '기업 중심의 정규고용관계' 에서 벗어난 다양한 노동자층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다양한 노동자층은 소득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등 제반 사회적 권리의 후퇴에 따른 삶의 불안정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점상처럼 단속에 맞서 20년에 걸쳐 저항과 조직화의 흐름을 이어온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들의 저항과 불만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조직화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제도적 고용관계의 틀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층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의 조직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는 불안정노동의 철폐와 불안정노동층의 기본노동권 쟁취, 그리고 빈곤층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2. 목표

- 법적·제도적 고용관계의 틀에 포괄되지 않는 '비공식노동자' 의 현실을 살펴본다.
- '비공식노동자' 조직화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공유한다.
- '비공식노동자운동' 의 방향과 조직화 경로에 대해 토론하고, 이후 운동의 전망을 모색한다.

3. 프로그램

사회: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 원장)

발제 : 비공식노동자의 현실과 조직화의 방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사례검토 1. 노점상운동 (조송화, 전국노점상총연합)

2. 재할용수집 노동자(신희철, 사회당 서울시당 빈곤특별위원회)

3. 사회적일자리 노동자(김병기, 대전실업극복연대)

참가자 자유토론

■ ‘비공식노동자’ 현실과 조직화 방향 모색⁷¹⁾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1. 고용형태와 조직운동의 다양성이라는 현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늘어 임금노동자의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크게 세가지 경로를 통해 확산되어 왔다고 얘기되어 진다.⁷²⁾ 첫째, 비정규 고용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부문의 팽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시장 수요의 변동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부문(유통문화사파운수물류 서비스 등)의 확대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대기(또는 호출)노동 등의 비정규 고용형태 증가, 파견용역·도급 방식의 간접고용형태가 서비스 산업부문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량적 유연화로 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고, 그 일자리를 임시직, 촉탁직, 단시간 노동,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으로 대체되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흔히 3D 업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기업들이 합법적인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도 포함된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으로 인해 각종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셋째로는 비공식 부문의 비정규 노동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가내노동과 유사하게 특정기업에 대해 고용계약에 의한 관리통제를 받지 않으나 일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속적인 지사감독을 받는 다양한 특수고용형태의 비임금-비정규 노동(독립사업자, 프리랜서, 상품판매원 등)의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비임금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특정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임금노동자들이 누리는 노동권과 근로기준의 법적 보호,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등이 적용되는 공식적 고용의 영역 밖으로 배제되고 있다. 더불어 노동의 국제 이동의 활발해지면서 불법 취업의 이주 노동자들은 해당 국가의 제도적 노동보호에서 제외되는 비공식-비정규 고용의 형태에 포함된다.

이렇게 비정규노동 및 비공식노동의 비율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첫째, 노동자내부의 분할, 위계 등으로 사용자의 노동자 포섭기제도 다양화되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펼쳐져온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대표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양적 지표 뿐만 아니라 흔히 ‘정규직 이기주의’ 라고 비판받아왔듯이 노동조합운동의 지향해 온 계급성보편성연대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이 노동조합운동을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71) 이 글은 질라라비 2007년 5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72)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병훈, 윤정향.

둘째,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의 임단협 투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섭구조와 일정한 해고모니를 지녀온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에 비해 대표적으로 비정규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3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임금과 단협 중심의 투쟁보다는 '노동조합인정'과 같은 최소한의 단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치열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울러 최저임금현실화투쟁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의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주체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운동 등이 함께 연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됨으로 해서 기존 임단협 투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점이 맞물려 노동조합과는 다른 조직화 형태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존재하고 있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같은 범의 대중조직 뿐만 아니라, 진보적 장애인대중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⁷³⁾에서도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저소득빈곤여성층은 다양한 NGO의 활동과 매개되어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등의 공동체운동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가입률은 11.3%에 머물고 있으며,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1.6%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의 가입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나마도 전체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치열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투쟁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쟁이 성공을 거두어 이후 조직화의 확산과 투쟁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보다는 패배를 되풀이함으로써 투쟁주체와 왜해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개발·저발전 상태에서 확산되어 온 비공식부문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 자유화, 시장화가 근본 원인이 되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비공식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처지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운동과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2. 노동자로서 거부되는 비공식 노동자

1)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대한 논의 소개⁷⁴⁾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출지향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중심의 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대비되는 경제부문이 1970년대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형성된 이중경제(dual economy)의 불균형 발전의 결과 공식 부문(formal sector)에 대비되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가 자리잡아왔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은 '공식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제활동 부문'이라고 거칠게 정의된다. ILO에서는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에 대비하여 임직이 쉽고, 토착자원 의존적이고, 가족소유기업 중심이고,

73) 지난 8월 17일 발족.

74) 저소득 실직자 자활대책에 대한 연구, 이정원 외, 한국노동연구원, 1999, 을 참조함.

소규모 운영방식이고, 노동집약적이며, 규제가 적은 경쟁적 시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ILO의 규정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한국사회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비공식부문의 특징을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정의내리고 있기도 한데, 공식부문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육성·규제되는 경제활동인 반면, 비공식 부문은 그런 혜택의 부재로 특징지워지며 따라서 공식적 신용기관과 외부기술 및 자원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흔히 비공식부문은 불법성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비공식부문의 경제주체들이 공식부문의 경제주체들과 유사한 경제활동을 추구한다는 데서 그 행위의 본질이 불법적이라기 보다는 공식부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결과로서 불법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은 가사부문이나 범죄 부분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고용에 초점을 맞춰 비공식부문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비공식 부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의미에서 투자기회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용의 필요성으로부터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들 대부분이 고용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에 유입되었으며 실질적인 자본, 교육, 기술을 결여하고 있으면서 등장한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Thomas에서 재인용)라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저개발 국가에서 이들 비공식 부문 자영노동자들은 곧 공식 부문으로 편입될 대기자라기 보다는 공식 부문 노동자와 구분되는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공식 부문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일정한 자립 후에는 공식 부문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인적 자본의 속성, 특히 저학력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어 주로 경제적 자본축적을 통한 자영사업자로서의 탈출방법 이외에는 공식 부문으로의 편입이 극히 제한된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반영해서인지 여성부가 펴낸 여성정책용어사전은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공식적인 경제 체계에 속하지 않은 부문에서의 활동.

이전에는 ‘도시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다. 급격하게 경제가 발전한 저개발국의 소득 수준이나 취업 지위의 불안정성과 열악성에 주목하여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도시에서 있는 불안정 취업층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비공식 부문의 조건은 첫째, 시장 참가의 자유, 둘째, 토착 자원에 의존, 셋째, 가족 소유제, 넷째, 소규모 사업, 다섯째, 노동집약적 기술, 여섯째, 정규 이외의 교육제도로 기술을 습득하는 부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전통적인 도시 비공식 부문은 명세 지명업, 하층 서비스업, 밀용 노동자 및 주부 부업 등으로 구성된다. 명세 지명업에는 행상, 노점상 등이 속하고 하층 서비스업에는 청소용역, 파출부 등이 있으며 건설 부문 등의 밀용노동자와 집 안에서 하는 각종 주부 부업 등이 있다. 이들 비공식 부문의 노동은 거의 대부분이 공식 부문과 하청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비공식 부문의 여성 근로자들은 주로 저소득층 기혼 여성들이며 이들은 가계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일을 해야만 하는 조건과 공식 부문에서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공식 부문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와 같은 비공식 부문에 대한 규정을 갖고 비공식노동자를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라고 곧바로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공식노동의 형태는 저개발·저발전상태에서 공식부문에 편입되지 못한 노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식부문에서의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창출되는 고용노동형태이거나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추출되거나 배제된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비공식부문=비공식노동이란 등식은 적절하지 않다.

2) 노동자개념의 확대로서 비공식노동자

흔히 비공식노동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법적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일반으로 확대해석 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법의 노동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

ILO에서는 “확실한 계약, 노동금부, 사회적 보호가 없는 노동자로서 ‘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 ‘비공식 일 자리의 유급고용’ 종사자” 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는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유급노동자들 모두 확실한 계약, 노동금부, 사회적 보호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공식부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흔히 조직되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둘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자본과 상품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비공식 유급노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관련자들과 교섭력이 저조하고 특히 자가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기관과 시장의 경쟁자들과 교섭을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힘이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공식노동자, 비공식노동자로 나누고 이들이 어떠한 노동자인가를 규정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들을 모두 포괄적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의 테두리로 묶어세우는 조직화와 주체 형성의 과정을 밟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수많은 고용형태 속에서 자본의 유연화, 이윤추구 전략이 어떻게 관철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가를 밝혀내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법에 규정된 ‘노동자’ 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내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로 보다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은 매우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노동자성’ 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에 노동부에서는 ‘유사노동자’ 라는 개념을 내놓았는데,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비보조원, 레미콘·화물·덤프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새로운 개념인 ‘유사 노동자’ 로 보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들을 ‘노동자’ 나 ‘자영업자’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어렵다며, 유사 노동자란 ‘서비스업의 발달이나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생긴 노동

형태'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당연히 노동법 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은 이들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직업능력 개발 △불공정행위 처벌 △불공정 약관 시정 △모성 보호 △성적 괴롭힘 금지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노동 3권' 만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은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노동자' 로서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그들 자신의 '계급적 원칙' 을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비공식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접근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전체로 노동자개념을 확대해야 하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넓은 의미의 특수고용으로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자가 고용의 경우는 노동법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과 보호장치 등을 요구하려는 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⁷⁵⁾

3) 비공식노동자의 유형과 규모

(1) 유급 고용넓은 의미의 특수고용

이 유형은 특정사용자(다수이든, 소수이든, 아님 국가기관이든)에 대해 경제적 종속관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은폐되거나 혹은 부정되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 유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의 특수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완전 고용관계가 있는 데도 고용관계를 은폐하는 방식의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화물·덤프차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들을 '유사노동자' 라고 칭하면서 '노동자' 도 '자영업자' 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법적으로 '노동자' 이다. 산업연수생 형태로 고용되어 왔던 이주노동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고용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지만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형태에서는 고용관계가 부정된다. 사용자-피고용자라는 관계라기보다는 '수혜자' 이거나 '동반자' 라는 관계를 내세우게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탈빈곤대책' '일자리창출사업' 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수혜자로서 간주될 뿐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간주되는 형태는 소위 '공동체' 로서 간주되는 각종 협동조합이나 가내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셋째, 사용자가 단일하거나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노동시간이 규칙적이거나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기간 돌봄노동의 주체가 개인과 가족에서 다른 양식으로서의 변화를 강제받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늘고 있기도 하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이 그러하다. 또한 오토바이 택배노동자나 대

75) '불안정 노동자' 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상태(노동조건을 포함한 삶 전체)가 '불안정' 할 수 비어 없고, 불안정한 처지와 조건, 그리고 이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처한 처지와 조건은 대기업, 중소기업, 고용형태, 이주국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직화의 경로와 방법, 주체화의 양상의 많은 부분 편차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운전기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자가 고용

이러한 유형에는 저개발 국가의 비공식부문과 유사한 경우와 발전된 국가의 유통물류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업형태가 동시에 포함된다.

첫째 형태는 비공식 부문의 자가고용 형태인데 ‘노점상’ 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본교육수준기술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대부분 불법인 상황이다. 또한 일정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에는 공식부문으로 편입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자본축적을 통해 ‘노동자’ 로서보다는 ‘자영사업자’ 로서의 욕망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 내부에서도 업종 및 상품에 따라 특정한 사용자(업체)에 종속성을 띤 경우가 있으며, 영업형태나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처지와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이른바 기업형 노점, 포장마차, 좌판형 노점, 계절적 노점 등 양상이 다르다.

둘째 형태는 종속성이 분명한 양상을 띠는 자가고용 형태이다. 재활용수집 노동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리점 업주, 성산업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3) 규모

비공식노동자의 특징은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를 알기 어렵다. 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⁷⁶⁾에 따르면 2006년 8월 기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57만6천명이고, 재택근로는 17만6천명,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인 일일근로자 77만3천명으로 통계에 드러난 비공식노동자의 규모만 해도 전체임금노동자 1586만 1천 명 중 15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법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157만여 명의 무급가족종사자와 150만여 명의 성매매종사자들, 이에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 다양한 비공식노동자들을 감안하면 5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3.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비공식노동자의 규모는 경제가 성장을 하든 후퇴를 하든 상관없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2006년 말에 통과된 노동관련 법률의 개악으로 파견업무와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기간제 고용의 확대에 따라 이제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의 심화와 저하는 다양한 노동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FTA의 영향과 효과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비공식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문화적으로 교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족의 해체 현상은 이러한 고용형태를 더욱 도

76) 비정규노동, 2006, 12.

드라지게 보여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비공식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비해 이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권리,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임금수준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해 30%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비율도 이들 비공식노동자의 경우가 훨씬 높다. 임금지급방식도 시급제로 되어 있어 매우 불안정하다.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의 진입도 어렵고 소득구조도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권라무정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과 이들의 처지와 조건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은 누차 있어왔고,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 또한 당연히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합상적인 단속과 철거에 저항하여 싸워온 노점상의 경우 ‘전국노점상총연합’을 결성한지가 올해로 20년이 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노조를 결성하여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고용주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왔고, 지금도 투쟁중이다. 이들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투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들 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조직화가 향후 운동의 향배를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정당이어야 한다거나, ‘미조직기금’을 거두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조직력을 쏟고 있는 민주노총도 그러하며, 그리고 지역에서 조직되고 있는 일반노조운동은 주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직화의 더딤에 비해 이들 운동의 한계가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권력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 자기 활동의 대부분이거나¹¹⁾,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제도화된 틀에 안주하게 되거나, 단지 ‘양적인 조직화’만이 목적인 양 간주되거나 하는 경향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동의 확장을 이루기는 커녕 정부와 권력,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1) 신자유주의시대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의미

신자유주의 시대는 정규직노동 보다는 비정규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운동에 있어서도 정규직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기존 임당협투쟁이 아닌 새로운 양상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아울러 조직형태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조직률의 확대’라는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새로이 나타나는 운동과 투쟁에 대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의미를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신자유주의 시대, 제급해체의 과정에서 새로운 저하층체를 세워내는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제도화된 노동시장의 경계 위에 있는 노동자층을 함상적으로 양산하고 확대한다. 이들의 존재는 노동시장 내부의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전판'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바닥을 향한 경쟁'을 추동하는 촉매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저하 속에서 경계가 확장되거나, 경계를 이탈(탈주?)하는 경우에는 제도화된 노동시장을 흔들거나 균열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단 이들의 저하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조직화되는 경우이다.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프랑스 CPE투쟁의 주체가 된 학생에게서, 실업 이주노동자의 저하 속에서 이를 발전할 수가 있다. 2004년 화물운송노동자의 파업투쟁 또한 그러했다.

둘째, 기존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상상력의 기반이 된다. 알다시피 사회보험제도는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에 걸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완전고용이거나 아니면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전제로 한다. 비공식노동자에게 사회보험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사회보험의 원리로 보았을 때 실현불가능하거나, 원리의 왜곡(혹은 변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비공식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은 비단 '임금을 올려 달라'라는 요구에서 저하가 시작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3권'의 보장이기도 하고, '휴식 시간의 보장'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자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는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국한된 한정된 원리이자 권리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함을 익히 겪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새로운 조직화모델의 공간을 제공하고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들은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지향 또한 굉장히 불안정하여 기존 제도정당운동으로 포괄되기도 힘들다. 심지어 이들은 보수우익정당의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이전부터 새로운 조직화모델이 실험되기도 했고, 현재도 그러하다.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체 모델'이 대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 NGO의 활동의 대상은 빈곤층을 포함하여 비공식노동자 계층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하위적 개별이자 관리적 범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생활임금운동을 위한 캠페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캠페인, 지역노동자를 위한 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를 테면 비노조 비정당인 '제3의 운동'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위와 같은 의미를 종합하면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은 '저하와 대안의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자는 데에 있다.

2) 비공식노동자운동 조직화의 방향

비공식노동자운동 조직화의 사례는 몇 가지이다. 노점상운동처럼 '단속에 대한 저하'를 집단적으로 조직하면서 대두된 경우이다. 그리고 단속과 불법추방에 맞서 '노동비자쟁취'를 쟁취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있다. 노동조건을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도 있고, 장애인 운동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투쟁을 통한 조직화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노조처럼 소규모 사업장

의 노동자를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조직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소득이나 임금수준의 향상만이 이들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득이나 임金的 향상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직접적인 이들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비록 ‘정규직’은 아니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구이다.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이주노동자에게는 노동비자, 노점상에게는 노점상 합법화 등처럼 말이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에게는 가사, 교육 등 가족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중삼중으로 떠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당 노동자의 당장 직접적인 요구만을 제기했을 때 운동은 거기에 갇히게 된다. 더더구나 포괄적인 ‘사회적 권리 쟁취’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요구에 접근하고, 제반 사회적 권리의 내용이 운동의 과제로 자리잡도록 해 나가야 한다.

둘째, ‘대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해당 노동자가 삶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서나가는 과정과 동시에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모든 요구나 투쟁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직접 행동’이 조직화의 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요한 ‘살과 생활,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의미이다. 특히 비공식노동자의 노동은 개인차원의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특정한 ‘노동, 작업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화는 ‘살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동시에 그리고 투쟁과 직접행동과 결부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조직화 전략과 방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앞에서도 약간씩은 언급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① 비공식노동자의 범주 구분

노점상, 특수고용, 가내노동, 모호한 노동관계 등 범주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에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

②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조직을 만드는 방식, 조직 유지에서의 민주주의의 관철과 강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메카니즘 등이 필요하다.

③ 노동관련 법률에서의 적용 여부

각국에서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떠한지, 그리고 ILO의 고용관계 권고안의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요구된다.

④ 단체협상의 문제

고용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 노동자로서 지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 협약의 대표성을 인정받게 하는 것 등

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나 생활권 관련 요구와 의제들을 각 노동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⑤ 사회적 권리 실현의 문제

각국에서 사회보험이나 지위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한국 사회 4대 보험, 공공부조 등 제반 제도와 법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권리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⑥ 고용형태와 기술함양의 문제

노동과정에서의 상호 부조 형태, 기술 훈련과 재교육, 노동시장의 참여 방안에 대한 확인과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고민되어야 한다.

■ 비공식 기업의 자가 노동자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 : 노점상

- 노점상 조직화와 또 다른 과제

조승화 | 전국노점상총연합 선전국장

1. 노점상으로 산다는 것

길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매연을 맡으며 추위와 더위 속에 장사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취객이나 폭력배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따가운 차별의 시선이 노점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더불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점단속과 그 과정에서의 폭력행사들은 더욱 노점상을 절망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된다.

힘들고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점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배운 게 적거나 가난해서, 여성이나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서, 노점을 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하지만 공통적으로 '빈곤의 문제'로 인해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길에서 한다는 어려움 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노점상은 기존의 공식 노동자의 대열에서도 밀려나고 가게를 내어 장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거리에서 장사하게 되는 비공식 노동자(비공식 기업의 자가고용노동자)의 범주에 속한다. 자가 고용에는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되듯, 누군가에게 종속된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의 범주가 있다. 후자의 형태가 바로 노점상이라고 하겠다. 노점상들 중에는 일반 노점상과는 달리 대형으로 하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는데, 이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비공식 자가고용노동자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금포탈 기업에 가까울 것이다. 이에 비공식 자가고용노동자로 다루어지는 노점상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노점상(생계형 노점상)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들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2. 노점상의 실태와 조직화의 필요성

1) 노점상의 실태와 현실

60~80년대의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빈민을 형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나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노동자로의 유입을 통해 노점상은 급증하게 된다. 또한 98년 IMF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가 대량해고와 실직,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노점상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증가된 노점상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재래시장노점, 차량노점을 포함하여 현재는 백만 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노점상들이 노점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지만 화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도 부족하고 다른 생계수단도 여의치 않아, 장시간의 고된 노점 장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점상으로 끝까지 남게 된다. 이런 노점상들이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점상에 대한 현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과 차별을 들 수 있다. 사회의 전반적 빈곤과 함께 노점상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노점상을 불법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현 정부는 노점상을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 노점단속과 그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로 노점상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 또한 열악하다. 거리에서 장사를 해 나가다보니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 전기, 물, 가스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안정적인 장사자리 확보에서의 어려움 등 안정적 노동을 위한 조건조차 열악하다.

끝으로 노점상들은 단순히 노점에서 오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빈곤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욱 힘들게 한다. 노점상들은 빈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교육, 주거와 같은 생활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하다.

2) 노점상의 조직화 필요성

이처럼 노점상이 처한 현실인, 지자체의 폭력적인 노점단속, 사회적 차별, 노동조건 열악함, 전반적 빈곤한 현실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점상 조직화는 매우 결실하다. 또한 이들의 생존권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미 노점상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노점합법화

먼저 조직화를 위한 가장 큰 목적은 '노점합법화'에 있다. 어떤 방식의 합법화인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노점상이 척결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노점상은 사회의 전반적 빈곤문제 해결 없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로 지자체와 노점 당사자 간의 노점합법화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노점상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일변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들도 가능할 것이다.

■ 노동권을 포괄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확보

또한 조직화를 통해 비공식 자가고용 노동자로서 노점상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국제노동총회(ILO)에서는 ‘노점상을 포함한 비공식 경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는 국제결의를 한바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노점상들이 (일반)노조 조직 속에 포함되어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한국정부는 노점상들에 대해 거리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로 현행 도로법을 통해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에는 노동권을 임금노동자에게 제한된 권리로 인식하지만 사전적이고 넓은 의미의 ‘노동권’ 인 노동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노동 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점상의 노동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후의 노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 노점마저 공식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법, 식품위생법, 음반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노점할 공간의 보장, 전기, 물, 가스의 원활한 공급 등 안정적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노점상이 처한 민간의 문제 해결

끝으로 조직화를 통해,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복지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활동에 있어 산재보험이나 저소득 노점상에 대한 보조금 제공, 재취업을 위한 융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교육, 보험, 신용, 보육, 문화, 주거의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3. 각국의 조직화된 노점상들의 운동에 대한 평가

전통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노점상을 없애는 방안일 뿐이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더욱 더 강한 조직을 만들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면서, 각국의 단속위주의 노점상정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으로서 노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가령, 선진국들의 경우 비록 부족하지만 노점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품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점상연합 소속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 더반, 인도, 잠비아, 가나 등에서는 노점상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노점상단체의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정부관계자 등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노점상 사례: 도시의 파투리 땅 중심으로 노점상 보장

과거 파리의 노점상들은 시의 잦은 단속으로 노점상과 시의 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해 노점상을 허용하고 이곳에 야시장으로 만들어 노점상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가 가능케 되어 이 야시장은 파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파리의 노점상들은 구청의 허가를 통해서 한 평당 6유로의 세금(한국 돈 8000원)을 내고 장사가 가능하다. 장사는 파리 시내의 야시장 70여 곳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전철역이나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해 시장을 개설하고 용역회사는 진열대를 설치해주고 전기와 물을 공급해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노점상 사례: 정부의 노점상 육성정책 실시**

남아공은 노점상을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갈등관계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도시빈민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변화를 통한 노점상과 정부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 협력적인 모습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노점가판대를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하거나 노점상들이 밀집된 시장에서는 현대적 시설로 재건축 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노점상을 위하여 가로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심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인도 노점상 사례: 정부와 함께 실무팀 구성하고 노점상을 합법화시킴**

인도의 경우, 노동자의 8%만이 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92%는 자가 고용 형태로 비공식부문에서 종사하고, 1000만 명가량의 노점상이 있다. 또한 도시인구의 50%이상이 넘는 저소득층이 노점상을 통해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부유한 소비자들도 또한 적어도 50% 이상의 필수품을 노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가 비공식 부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노점상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단속과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SEWA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전국적인 합의를 진행 했으며, 1998년 인도 노점상 연합(NASVI, National Alliance of Street Vendors of India)이 구성되었다.

이 노점상 연합은 현재 5만 명가량의 회원이 있으며 SEWA를 통해 무담보 소액대출, 교육 등을 진행 하고 있다. 320명의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인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노점상연합이 이들을 지원해 고등법원 판결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이 영업허가와 영업공간을 얻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노점상연합과 주정부는 경찰·기업·노점상·상인·정부·소비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을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내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합법화 되었지만, 여전히 노점상에 대한 탄압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홍콩 노점상 사례: 정부의 일방적 노점허가제 내놨지만 실효성 없어**

홍콩 정부는 약 1930년대부터 노점허가증을 발부하였지만 1973년에는 허가증 발부를 중단하였고 93년에는 그나마 있던 허가증마저 취소시켰다. 이처럼 홍콩의 노점허가제가 실패 한 것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점상을 전면 합법화하지 않고 이중 일부에 한해 합법화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 허가제는 신규 노점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홍콩의 중국반환, 노동유연화로 인해 무허가 노점상 급증 하여 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 현재 홍콩에는 2만 명가량의 노점상이 있는데, 허가증이 있는지 없든지 단속당하는 형편이다.

■ **싱가포르 노점상 사례: 노점상 허가제지만 노점상 50%가 하늘의 별따기**

싱가포르의 경우, 노점상에 따라 다양한 면허증을 발급, 노점을 허가해 주고 있다. 야시장 형태의 품물시장 또한 많이 있다. 차량 노점상의 경우 오래 전부터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성 노점상국, 도시개발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자격 기준 또한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 노점상의 경우, 지정된 주차장에서 장사를 세금을 내고 정해진 시간(가령 07:00~10:30)동안 장사를 해야 하지만 유동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며 장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량 노점상의 경우 2000명이 노점

상을 신청했는데 불과 33명만 장사를 허가해준 것처럼 '합법적으로 노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단속을 위한 명분용 허가제에 일 뿐이다. 최근은 사업이 망하거나 IMF 이후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라 새롭게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 한국 노점상 사례 : 노점합법화를 가장한 단속중심의 정책을 일방적 강행

한국 노점상들은 단속공무원, 경찰,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인 용역반과 용역업체와 같은 집단들에 의해 수없이 단속을 당해야 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명목으로 한 전국적 단속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점상들은 스스로 단결해야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도시노점상연합회(도노련)를 건설하였다. 이후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합의하며 전국에서 조직화되지 않았던 3000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여 노점생존권 보장을 외쳤고 이에 정부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보시켰다. 이는 노점상들에게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했고 이후 본격적인 노점상 조직화가 진행되어, 1988년 8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가 결성되었다.

노점상 조직이 결성된 지 20년이 되는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노점상의 권리와 노점상조직인 전국노점상총연합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노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협상기구조차 두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일부 대형, 소수의 기업형 노점을 명분으로, 보행에 방해되고 환경미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노점상에 대해 처벌을 통한 정비는 어렵기에, 지자체는 노점상들과 함께 노점문제를 해결하자며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품물 시장과 같은 노점유도구역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이 정책은 노점합법화라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노점단속과 탄압을 위한 명목상의 노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노점상 운동의 사례를 통해 노점상 운동의 방향을 모색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들이 조직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공통적으로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행하는 정부나 시의 노점단속에 맞선 싸움에서 시작된다. 이에 각국의 노점상 조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자신의 노점자리에서 몇몇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즉 노점합법화에 두고 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부나 시는 형식적인 수준 이든 아니든 노점합법화가 진행 중이다. 인도나 남아공의 노점상 사례가 노점합법화에 있어 주시해 볼 사례인데, 먼저 노점상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아래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노점 합법화가 실패하는 요인은 노점상의 생존권 차원보다는 정부와 시의 환경미화차원의 접근, 노점상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부나 시의 일방적 강행, 사회의 전반적 빈곤에 대한 이해결여가 주요인 일 것이다. 이에 홍콩, 싱가포르, 한국의 경우, 정부나 시의 형식적인 합법화 논의는 노점단속을 위한 명분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점상의 노동할 권리보장과 안정적 노동조건 확보는 합법화가 진행되는 수준과 함께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합법화 진행이 어렵더라도 노동권이나 노동조건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네팔의 경우, 노동조합에 노점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법에 '자가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에 해당 한다' 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을 진행 하는 곳은 인도, 남아공, 잠비아, 멕시코가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빈민으로서의 노점상에 대한 시혜적 차원 혹은 여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 장사와 관련된 권리 투쟁 외에도 노점상이 처한 전반적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

력들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노점상 조직은 노점상들을 상대로 소액담보 대출, 교육지원사업 등 빈곤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전노련),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권리 쟁취는 미흡한 수준으로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파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을 해 나가고 있다.

4. 노점상 조직화의 과제

노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점단속이 더 강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노점상의 저항도 더 커지며 노점상 조직도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노점상 운동은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적 차원에서 노점합법화를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점상 조직의 노점합법화 투쟁들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노점단속에 맞서 진행된 현 노점자리를 지켜 내는 차원의 투쟁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노점대책을 보면 명분상 노점합법화를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노점단속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해 소수의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주는 대신 그 외의 노점상과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의 방침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합법화라는 껍데기를 일방적이고 노점생존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노점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로서의 노점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노점상 조직의 목표는 노점합법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점상들의 생활전반과 관련하여 도시빈민의 노동, 교육, 보육, 주거 등에서의 사회적 권리쟁취여야 한다. 이 사회적 권리로서는 노점상 조직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안정적 노동을 위한 공간, 전기, 수도, 가스 지원, 산재보험 적용, 생계대책 지원, 재취업을 위한 교육실시 등 노점상 생존권을 포함한 도시빈민 전체에 대한 복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노점상의 현실, 그리고 한국/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 | 신하철[해방수레 2005년 제7호]

전국노점상총연합, 우리시대 노점상 현황과 실태 | 최인기[해방수레 2006년 제8호]

■ 종속성이 있는 자가 고용

: 재활용수집 노동자를 중심으로 본 조직화 사례

신희철(전국노점상총연합 조직2국장)

1. ‘재활용수집 노동자’ 는 누구인가?

비공식노동자 조직화팀을 비롯 전국빈민연합과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국제 코디네이팅위원회’ 는 노동빈곤층 중 미조직된 재활용수집 노동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국빈민연합의 경우 노점상, 철거민 중심의 빈민대중조직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 있는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활용수집 노동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넙마주이’, ‘재활용품 수집원/수집상’, ‘고물상’ 혹은 ‘자원수집상’ 등으로 불려온 이들 중 ‘직접’ 재활용 물건들을 수집하여 이를 ‘중간납품업자(흔히 ‘넙마주이’)’에게 적정 금액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을 ‘재활용수집 노동자’라 하겠다. 알다시피 흔히 ‘넙마주이’로 알려졌지만 이는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던 사람, 혹은 땅대기를 이고 짐계를 들고 거리를 다니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던 사람이라는 말로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고 더불어 ‘불결한 존재’로 낙인찍는 말이기 때문에 ‘재활용수집 노동자’로 부르도록 하겠다.

‘우리가 한 달만 미엄하면 서울이 온통 막튀가 풍길 것이오’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값을 줘야해. 쌀값처럼 쓰레기 값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해. 쓰레기도 쓸처럼 돈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 윤수종 교수의 넙마주이공동체⁷⁸⁾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중

위 인터뷰에도 나오듯이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재활용수집 노동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폄지는 않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 등에 의한 탄압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재활용수집 노동자가 대략 어느 규모일까?

지난 2004년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원수집상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활동하는 회원은 3,000여명이고 동네에서 작은 규모로 고물을 수집하는 ‘소상’(이 글에서 말하는 ‘재활용수집노동자’)에서부터 중간 단계인 ‘중상’, 제철소나 제지소로 최종 고물을 압축해 넘기는 ‘대상’ 등을 모두 합하면

78) 지난 1996년 윤팔병(66)씨가 넙마주이들과 함께 명동5교 밑에 만든 자활공동체다. 이들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쓰레기를 주워 재활용품을 골라 팔며 살았다. 찾아오는 노숙인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 양재천 명동5교 밑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전체 종사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재활용수집 노동자가 8~9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1987년 념마주이공동체가 자체 소식지인 「ням마」 3호에 실은 〈자활근로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986년 당시 서울에서만도 재건대⁷⁹⁾에서, 사설파⁸⁰⁾에서 고물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약 3천 여 명, 파지, 고철, 석유화학제품, 빈병 등 고물을 줍는 사람, 일반 고물상, 경우회(이익단체 중 하나)나 재건대의 폐품 수집소, 난지도 처분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서울 시내에만도 1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수집 노동자에 대한 규모나 실태의 파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참고로 비공식노동자와 관련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는 Chris Bonner 교수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시민 2%가 재활용수집노동자라고 ILO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즘은 1t짜리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내에서 수집소를 마련할 수 없는 ‘중상’, ‘대상’은 고물수집을 위한 트럭과 압축기, 지게차 등을 갖춰야 하며 이동식 고물상을 하거나 시 외곽에 거점을 두고 있다. ‘고물상법’에 따라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198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신고제’로 전환되고 외환위기 이후 고물을 줍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임자 없는 종이박스나 고철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2. 재활용수집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은 고물상 등 소매업자에게 리어카를 빌리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반 도구를 가지고 매일 선회하는 특별 구역을 돌며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수집한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고물 상인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받게 된다. 그들은 쓰레기통과 쓰레기 하치장에 대한 ‘영역권’을 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어겼을 때 서로 입씨름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수집이 산업적으로나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고 이들의 노동이 보여지지 않고 때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중간 유통업자에게 착취당하고 있기도 한다. 낙후한 노동조건으로 병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많다.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수집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나 정부기관 외에도 당사자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알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79)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념마주이, 거지 등 도시빈민들의 자활을 위한다며 집단수용하여 군대식으로 운영한 것.

80) 재건대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재건대에서 나온 념마주이들이 념마주이 자체들을 그나마 소유한 소위 ‘조미리’ 혹은 ‘왕초’ 등 중심으로 따로 활동한 것.

외 노동은 분산되어 하지만 고물상 혹은 자원공사라는 ‘집결소’에 동료들이 모임에도 자주적인 조직의 건설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고물상 혹은 중간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자신이 수집한 물건에 대해 제값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아파트단지나 지자체와의 협상도 엄두를 내지 못해 최근 늘어가고 있는 재활용 전문회사에게 밀려 생존권 위협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아파트 경비나 청소부에게 권리금을 주거나 아파트 단지 측과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으나, 청소용역회사, 경비용역회사, 더 나아가 각종 재활용품수집 전담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단지 등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어렵게 노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받기도 한다.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이 많아 제값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나 골목, 도로 등에 수집한 재활용품을 모으다가 납품업자에게 파는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의 경우, 특히 도로나 골목 등을 불법점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철거를 겪고 있다. 그 예로 포이동 남부혈액원에 방치된 시유지를 점유했던 넝마주이공동체에 가해진 강제철거를 들 수 있다. 강남구청은 해당부지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2005년 11월과 2006년 1월 현장을 씩씩이 강제철거하였다.

3. 조직화 사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활용수집노동자들의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조직을 만들으로써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 정부, 사기업과 교섭할 수 있으며 중간착취자를 제거함으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조직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고 위상을 재고할 수 있으며 정부의 태도가 바뀔 때 이에 맞설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역/시 차원의 조직들이 많은데 그중 콜롬비아의 경우, Cooperatva Recuperar는 1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60%가 여성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1.5배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공부할 위해 장학금도 받으며 생명/산재보험을 가지고 있다. 공공/민간기관에 의해 임시 고용도 제공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재활용수집노동자가 되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25000여명이 이에 종사하고 14개 이상의 단체가 있다. 그 중에는 여성에 의해 설립되어 회원 102명 중 대부분이 여성인 Cooperativa El Ceibo가 있다. 이들은 시청 측과 협상하여 각 집, 주거지마다 흩어져 있던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인도 Pune 시의 경우, Kagad Kach Patra Kashtakarí Panchayat(KKPKP)는 5000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최근 공식 단체로 인정받아 full cost recovery basis에 따라 주거지와 상업지의 쓰레기들을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Ahmedabad의 경우, SEWA는 재활용수집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쓰레기들을 수집하고 청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SEWA는 회원들에게 쓰레기를 수집할 도구를 제공하며 ID카드를 발급하도록 지자체와 협상하였다. 이 두 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완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신용협동조합, 집단 생명보험 제도, 집단 의료 보험 제도 도입, 대부업자에 대응한 투쟁, 협동 고물상 운영,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 아동노동, 여

성에 대한 억압 등에 맞서 관련 단체 등과 연대투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윤팔병 씨로 유명한 강남의 ‘넙마공동체’가 그나마 재활용수집 노동자 당사자들의 조직 사례라 할 수 있다. 넙마공동체는 조마리(웁초) 제도라는 착취제도를 없애고 나아가 경찰 등의 밤이 되는 넙마주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결성하였다. <아름다운 가게> 산파 역할을 한 윤팔병 씨가 당시 헌책방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넙마주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나눔과 섬김의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 3년 여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 1986년 여름에 제1 넙마공동체가, 1987년 3월에 제2 넙마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했는데 공동체적 특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1991년 제1 작업장이 철거되고 1992년부터 정부 투장 자원재생공사에 각 지역 넙마주이 작업장이 흡수되고 파지, 고철 등까지 수입개방 되면서 탈퇴와 신규 가입을 반복, 약 20여명 선을 유지했다.

지금은 쉽지 않게 되었지만 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청소부, 경비 등과 계약을 하거나 권리금을 주는 대가로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을 대거 수집하여 확장해나갔다. 그러다가 경비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간 함께 하던 경비, 청소부들에게 노조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초기, 연희광대페(대표 임진택) 등과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극단 ‘새뜩이’와 ‘양아치’ 공연을 하기도 했다. 구성원 다수가 초등학교 문턱을 한두 해 넘나든 게 고작이기 때문에 야학을 하기도 했다. 후원회나 후원인을 통해 사당의원, 이안과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고 자체 소식지도 제작했다. 마침 1980년대 후반 폭발하던 사회운동과 연계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이 넙마공동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했고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의식적으로 넙마공동체가 직접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여 헌책을 달동네나 산간벽지에 후원하고 외국인 노동자, 북한 등에게 옷을 기증하기도 했다. 1997년 이후에 외부 후원을 안 받기로 했는데 이는 스스로, 자력으로 일구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넙마공동체는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빈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겠다고 세운 1백 평도 안 되는 작은 건물(작업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강남구청이 하루아침에 철거하는 것에 맞서 2달 동안 천막시위 등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른 지역 넙마주이들과 연대하여 협상을 통해 직접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하며 ‘헌 물품 장터(벼룩시장)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건설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 곳곳에 나눔 장터 혹은 벼룩시장이 들어서는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4. 정리하며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연구와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WIEGO⁸¹⁾의 Sharit Bhowmik 교수가 지난 6월 한국 전국노점상대회에 참여하여 제안하였다. 내년 3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국제 재활용수집 노동자 협의회’(WasteNet International)라며 한국을 방문한 내내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81) WIEGO: Women In the Informal Employment, Globalizing & Organizing. www.wiego.org

물론 아직 우리들에게 재활용수집 노동자운동이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 조직이 없으므로 인해(그게 노조든 임의단체든, 공동체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활후견기관들이 노동빈곤층의 자활사업 일환으로 폐자원재활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든 그 구성원들의 모임을 꾸려 활동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한편 강제철거에 대항하며 조직활동의 경험을 쌓고 있는 포이동266번지사수대책위원회가 생각을 조금 넓혀 대부분 넝마주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이 이후 운동으로서 재활용수집 노동자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다수의 노숙인들이 넝마주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에 노숙당사자모임 등도 이를 참고할 수는 없을까?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 이제 외국의 사례를 언급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이들의 운동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참고자료]

- Chris Bonner, 「Organize Waste Picker Workers」, WIEGO, 2005.
 KKPKP(인도 뽀나(Pune)지역 재활용수집 노동자협회) 자료(2006)
 윤수종, 「넝마공동체의 성격과 그 변화」, 진보평론 15호, 2003, 8.

■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김병기(대전실업극복연대)

들어가며

노무현 정부는 2006년 9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07년~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주로 간병과 보육, 방과 후 교사, 문화, 안전 영역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8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의 문제점과 투쟁방향, 최예륜」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글에서는 각 부처별로 앞 다퉈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에 생소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끝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화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변명을 좀 하자면 필자는 자활근로사업에 9개월간 참여자로 일하다가 사회적일자리 수행단체에서 실무책임자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다. 이 경험이 나에게 준 느낌은 참 대책이 없다는 답답함뿐이다. 우선은 혼자 풀 수 없으면 같이 풀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열거하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1.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일자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노동부에 신청하면 노동부는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1년 단위로 재심사하여 최대3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 간 지원하고 있다. 임금은 주당 40시간 근로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07년 77만원)에 맞추어진다.

1년 단위로 단체와 노동부 간에 계약이 갱신됨으로써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노동부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와 노동부 간에는 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이, 단체와 참여자간에는 근로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인건비를 '지원' 하는 것이지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지만 정작 노동부의 입장은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도 퇴직금 만드는 것이 왜 어려운가 반문한다. 실제로 한 달에 7만원만 벌면 되는데 그것도 못 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한 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예시당초 공익성을 고려하다보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고 오히려 적자를 보지 않는 것이 다행인 사업들인데 인건비를 지원받다고 해도 운영비와 퇴직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딸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아닌가?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고용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다. 엄연히 3년간 동일노동에 종사했음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노동법위반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재까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단체 역시 정부사업의 위탁임을 내세우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참여자 또한 1년간의 연장을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사실 참여자들은 계약만료기간이 가까워지면 단체실무자 눈치를 보게 된다. 심각한 경우는 단체와 참여자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비밀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회적일자리형(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중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는 그리 높은 비중이 아니다. 아래 <표>에서 노동부는 전체 20만개의 사회적일자리형 사업 중 12,000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여성부와 복지부가 차지하고 있다. 처음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일자리를 왜 노동부가 아닌 거의 모든 부처가 노동부보다 더 열성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우선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무조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고용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부처 고유의 사업에 저임금의 노동력을 손쉽게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세부내역 >

소관	사업명	예산	인원
합 계		1,294,519	201,059
여 성 부	아이돌보미, 아동 양육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영아 반 인건비	386,832	81,808
복 지 부	독거노인 도우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 이동센터 운영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가시간병도우미, 의료급여 관리(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352,933	63,765
농 립 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1,923	300
행 자 부	자원봉사 도우미,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3,749	801
교 육 부	장애아동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지원 인력확충, 깨끗한 학교 만들기, 방과 후 학교	104,440	19,170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아카데미)	14,607	1,300
문 화 재 청	고궁면장운영,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	4,561	392
문화관광부	도서관등 문화시설 연장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예술강사 물제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49,486	5,465
환 경 부	5대강 환경지킴이,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12,119	695
노 동 부	사회적 일자리	121,541	12,000
산 립 청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숲가꾸기, 산림보유강화	242,308	15,363

1) 이론적 배경

(1) 사회투자전략 (social investment)

최근 노무현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사회투자국가’를 언급한 바 있다. 사회투자전략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1998년 출간한 『제3의 길 : 사회민주주의의 쇄신(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이라는 책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기든스는 영국에서 ‘제3의 길’ 이 토니 블레어와 그가 이끄는 새 노동당(New Labour)의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인적자본이론처럼 사람의 신체에 저장되는 지식과 기능, 즉 인적자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물질 자본과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력의 질 향상,

둘째, 노동공급을 증가,

셋째,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 강조.

사회투자적 사회정책은 첫째, 노동력의 비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순한 소득보장을 지향하고 소위 ‘수치 맞는 취업 정책’ 을 펼쳐야 하며, 둘째 노동수요보다는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제고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근로연계복지(workfare)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의 범지구화 및 숙련 편향의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실업의 구조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 등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 비용을 억제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근로능력을 시장으로 몰아넣는 재상정책, 제도 정비의 동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따라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소위 ‘일하는 복지(workfare)’ 이다. 유럽의 각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권리보다 책임(의무)을 강조하는 논리가 등장하고 복지에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후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사회적일자리의 탄생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일자리’ 라는 개념은 1999년 12월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저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였다. ‘사회적 일자리’ 라는 용어는 1990년부터 유럽에서 등장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 의 개념을 직접 대입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 시민단체 간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사회적 일자리는 국가나 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창출하는 일자리이며, 실질빈곤층의 취업촉진과 지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노동부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로, 복지부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수익성은 멀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을 각기 진행하였다.

3)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의 정책 변화

노무현정부는 사회적일자리와 자활근로가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극복한 참여정부의 업적인 양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1) '일을 통한 빈곤탈출' (2004년 12월)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 근로빈곤층(불완전 취업자 및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즉,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였다.

(2)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비전(2006년 1월)

사회안정망을 갖춘 글로벌강국이 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재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성장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서는 ① 평생교육훈련체계 강화·차세대 성장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을 강화하고, ②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금융·물류·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IT, BT산업의 육성을 통해 창출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과 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은 '동반성장'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거의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3)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창출 보고' (2006년 9월)

정부는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정부의 특기가 자기변명을 위한 언변뿐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도 없지만 여기서 다시 그 현란한 말잔치가 시작된다.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서비스**인 반면 **사회서비스**는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서비스라고 한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 포괄적 복지가 정부가 앞장서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의 사회서비스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노무현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처음부터 고용을 전제로 하는 실업대책이 아니라 열악한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실업자들을 재교육시켜 노동의 질을 제고해 고용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이미 이 과정은 노동부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영역에 붙잡아둠으로써 저임금노동자군에 의한 노동유연화와 자본의 사회서비스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역할을 역설적이게도 시장경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던 민간단체들이 열성적으로 수행해왔다.

2. 우리나라 자활근로사업의 문제점

한국의 자활근로사업은 유럽의 근로연계복지 제도처럼 실업자 또는 불완전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조건으로 강제적 근로를 강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의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 세분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한 두 프로그램의 대상그룹을 목표로 적용되며, 청년층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자활사업은 중·고령 실업자 및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즉, 유럽의 근로연계복지 제도가 개인의 실업에 대한 급여로 주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의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원 전체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족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원에게 추가로 자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 수준에서는 노동의 의무가 ‘자활’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급여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부가되고 있을 뿐이다. 단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대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럽의 경우 자활프로그램이 실행 대책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확대되는 공공부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됨으로써 빚어지게 되었다. 연령, 근로능력 및 직업이력 등에서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이미 노동부 프로그램의 ‘취업대상자’로 걸러진 상태이고,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속하는 나머지 참여자들은 설사 교육과 훈련을 거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진입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 방안은 자연히 개별 취업보다는 자활사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공동창업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 설계 당시부터 복지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고안된 자활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과거 지역사회복지관이 보여주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재의 자활근로 방식은 참여주민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인건비를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보다는 사업규모를 부풀리는 형태로 진행되게 하여 중복된 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낳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이러한 사업방식에 의해 참여자들을 적성과 욕구와 무관하게 적당히 배치하며, 사업 아이템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수를 맞춘다. 1년 단위로 완결되게 사업을 계획하고 자활근로 사업비가 남으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하면 써버리는 예산낭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역시 전반적인 사회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기껏해야 자활공동체라는 대안밖에 없기 때문에 1개월 동안 20일 일하고 현재의 임금을 받는 자활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자활근로사업은 11개월 단위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동권마저도 방기한 채, 산재 가입에 대한 거부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한국 정부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 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수급자의 소득과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수급조합은 수급자를 강제노역에 다름 아니다.

3.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

정부는 2007년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수행단체를 선정하면서 10명단위로 구성되는 영세한 비영리 민간단체 단독의 사업은 경쟁력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NGO단독형사업에 대한 추가선정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업연계형, 광역형사업으로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했다. 간병, 가사, 보육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처음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체들이 다투어 참여함으로써 노동법 위반, 부정수급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의 제고’가 아니라 저임금불안정 노동 고착화와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상품화는 빈곤층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양방향에서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자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헐값에 사회 서비스 시장에 내놓아야 하고, 열악한 복지시스템 때문에 상품화된 사회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약순환의 고리에 묶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사회적기업

1) 외국의 사회적 기업

(1) 프랑스의 가전제품재활용기업 앙비(Envie)

앙비는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사회적 기업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사례와 제도가 국가 정책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앙비는 1985년 6명이 일하는 사업조직으로 출발하여 2000년에는 560명이 일하는 큰 규모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프랑스 굴지의 가전제품 판매유통업체(Darty)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수거한 중고가전제품 및 고장난 가전제품을 앙비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앙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빈곤계층인데, 우리나라 자활근로처럼 자격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앙비의 일자리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999년까지 앙비를 거쳐간 사람들은 약 2천명인데 이중 46%는 취업했고 10%는 상위단계의 전문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 캐나다 퀘벡지방의 자활공동체 “노동통합 기업(B)”

회는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거나 직업훈련, 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교를 제공한다. 회는 취약계층에게 실제적인 노동의 경험을 제공한다. 우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다양한 자원이 이들을 지원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으며,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에 복귀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이다. 회는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하여 이들의 통합과정을 지원한다.

(3) 영국 사회적 기업

영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 가운데 협동조합과 신용조합만이 고유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5년간,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적 기업의 개발이 일반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적 기업이 설립될 당시의 상황 및 조건에 입각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적 지위를 채택하는 방식이 통용되어 왔으며 이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의 형태로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신용 조합(Credit Unions), 지역사회 기업(Community Businesses), 사회적 회사(Social Firms), 지역사회 개발 트러스트(지역사회 소유의 경제개발 기구로서 지역사회 내에 부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 등이 있다.

(4)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최근에 이르러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보다 전반적으로는 이탈리아 복지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다.

-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복지 및 교육서비스 관리, 생산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될 수 있지만 기업적 성격을 가진다.
- B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 기타 농업,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이나 취약계층(disadvantaged people)의 노동 통합(work integration) 서비스 제공,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업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소속 직원의 최소 30%가 취약계층 노동자로 채워져야 한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 말 약 7,00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밝혔다. 그 중 59%에 달하는 4,026개가 사회 및 교육 서비스(국가법에 따라 A 타입으로 분류)를 제공했고, 2,459개(33%)가 열위 계층의 노동 통합, 377개(8%)가 상기 2개 타입의 혼합 타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267,000명의 회원과 223,000명의 유급 직원, 31,000명의 자원봉사자 및 24,000명의 열외 계층이 일하고 있다.

국 가	고용인원	총고용 대비 %	총 피고용자 대비 %
덴마크	289,482	12.56	13.85
프랑스	1,214,827	5.93	6.81
독일	1,860,861	5.77	6.46
이태리	1,146,968	5.88	8.23
룩셈부르크	6,740	4.16	4.6
네덜란드	769,000	14.69	16.64
스웨덴	180,793	5.15	5.83
영국	1,622,962	7.32	8.42
유럽연합 계 (15개국)	8,879,546	6.57	7.92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제3섹터 고용비중 (1995-1997)

(5) 미국의 사회적 기업

① Juma Ventures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역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아이스크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재무교육, 저축 상담, 진화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2,000여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 제공했다.

② Rubicon Programs Inc.

장애인, 장기실직자, 노숙자 등의 빈곤 탈출을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 주거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 사업이며 루비콘 조경의 경우 '01~'02년 사이 880만 달러의 수입을 내기도 했으며, 루비콘 베이커리는 '03년에 샌프란시스코에 41개의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4. '사회적 기업' 화의 문제점

외국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복지와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으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은 유럽 '복지국가' 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둔화, 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복지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에서의 교육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최근 불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서구의 사회적 기업들이 저마다 독특한 자기발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 하에 노동시

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화는 이미 존재하는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공식적 노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되,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용관계를 불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자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사회적일자리를 기업연계형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사회적일자리 수행단체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이후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금 및 세제혜택 등에 발목이 묶여 이미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직접 유지·운영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의해 전체 사회적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수준을 통제받게 될 것이다.

사회 운동 포럼

주체화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운동



워크숍 기획 내용

주체화와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이주노동자 조직과 투쟁

- 일시 : 2007년 9월 1일(토) 오후3시~6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명대 2층 33203

1) 토론회 배경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 한 것은 80년대 말이며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던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과 비인격적인 대우와 차별을 강요받았다. 이에 저항하여 90년대 초중반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생적 투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과 자생적 투쟁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인권 보호, 생활문화적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만들어 냈으며 96년 그 연합단체로서 1996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하 외노협)가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 지원단체와 외노협은 인권을 포함해 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전망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를 개별적 수준에서 해결하거나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정부와 관련 제도를 협상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내국인 중심의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주노동자와 활동가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에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 10월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에 이어 2000년 4월에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이후 11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15만명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에 맞서 추방저지와 이주노동자진명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무려 380일간이나 전개되었고 그 성과로서 전국적 조직화를 목표로 하는 서울경기민천이주노동조합이 2005년 4월 간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심으로 300여명만이 조직되어 있어 40만 등록·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적 조직화 과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이 땅에는 약 63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 중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는 23만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잘못된 이주 정책에 의해 노동자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으며 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 불허, 1년마다 재계약, 3년으로 고용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할 사업장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없고, 재계약을 보장 받기 위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말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옥설과 구타 등 비인격적 대우도 감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사업장에서 이탈하고 3년 고용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단속 추방으로 버랑 끝으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고통과 치욕의 땅이다.

워크숍 기획 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 방안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10년을 되돌아보고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기동하여 이주노동자 조직과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 토론회

- 1) 이주노동자 주체화화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조직화 전략을 논의한다.
- 2) 조직화의 걸림돌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 자본의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의 분할 기도를 분쇄할 것인가? 내국과 이주노동자간의 연대를 만들어 낼 것인가?
 -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의식 어떻게 강화하고 조직과 투쟁의 주체로 내세울 것인가?
 - 이주지원단체와 관계설정은? 연대는 가능한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지역조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 조직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 현재 우선적으로 중점을 주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3)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 수 있는가?
- 내국인 노동자, 조합원의 연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제도개선투쟁 방안은 무엇인가?

4) 민주노동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3. 토론의 열거

- 11:00~12:20 발제1,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노동권 투쟁 방안
 발제2, 미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투쟁 사례
 발제3, 건설연맹 이주노동자 조직투쟁 방안
- 12:20~12:40 휴식
- 12:40~14:00 토론

4. 토론 주제

- 첫째,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의식을 강화하고 주체로 만들 것인가?
- 둘째, 내국인 노동자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셋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	운동	포럼
----	----	----



비정규 운동의 비상(飛上)을 위한
원탁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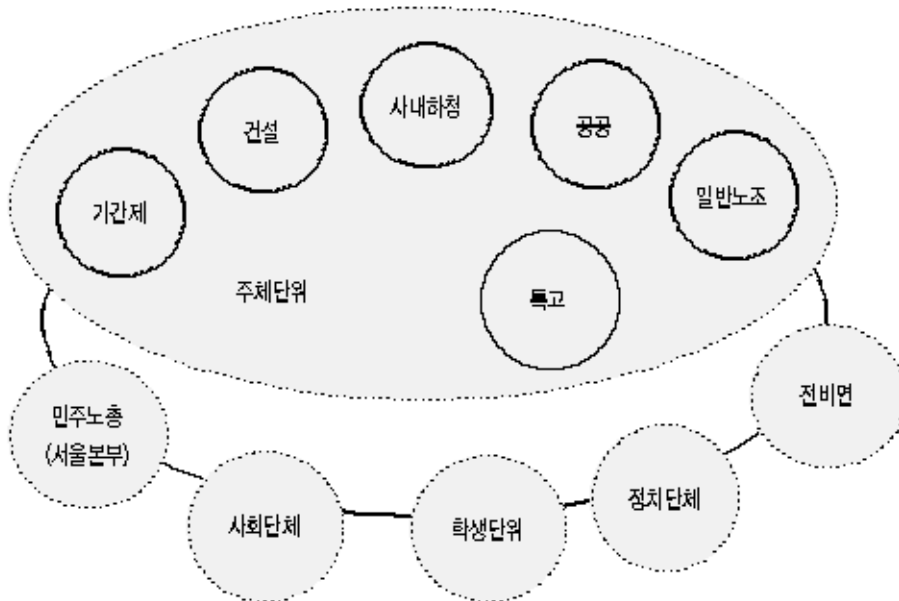
■ 비정규직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1. 토론의 취지

-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 운동과 관련하여 반성적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온전히 들어내고 이에 대한 비정규 주체를 포함한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과 입장을 열어놓고 전망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낸다.
- 토론의 주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주체들의 반성적인 평가와 고민’ 과 아울러 비정규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영역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입장을 통하여 비정규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구체화 한다.
- 주요 참가단위는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활동가와 사회단체 및 각 부문 영역의 활동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 과정에서 참여 단위의 고민과 입장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추후 연속 사업을 통하여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낸다.

2. 토론의 일계

1) 원탁의 구성



2) 토론 순서

11:00 ~ 12:30 1부 토론 :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점과 과제

- 비정규직 주체 토론
- 질의 응답

12:30 ~ 12:50 휴식 및 간식

12:50 ~ 13:50 2부 토론

3. 토론 내용

꼭지 하나,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점과 과제

비정규 조직화 10년, 사내하청·기간제·사내하청·특고 등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화 과정보다 지난한 투쟁과 노력의 결과이었으나 이제 초기의 조직화를 넘어서 대중적 조직화와 전망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 조직화의 문제와 전망에 대하여 각 단위가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고민과 지혜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는 28만 4천여 명이 조직되어 조직 노동자의 1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화에 관한 실태조사⁸²⁾의 결과를 보면 간접고용 관련 노조가 67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간제 61개, 지역일반과 지역업종이 각각 52개와 45개, 특수고용이 30개, 여성노조가 11개입니다. 조직화 노조의 조직과 운영의 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기업과 지역 그리고 전국으로 구분하여 보면⁸³⁾ 지역이 1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업과 전국이 각각 87개와 39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류 형태별 조합원의 수로 보면 지역업종이 58,5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특수고용과 지역일반이 각각 35,612명과 16,036명이며 기간제와 간접고용이 1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여성노조가 4,733여 명입니다. 평균조합원수는 지역업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특수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⁸⁴⁾

최근 노동계의 주요 투쟁은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투쟁이었으며 구속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입니다.⁸⁵⁾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각 고용형태와 영역별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하여 주체와 각 단위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모아보고 전망을 모색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82)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266개 조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실태조사 대상에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 노조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간비정규 노동 2006.12

83) 조직구조의 분류는 형식적의 조직형태 외에 실제 조직의 경로와 운영 형태를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신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라 할지라도 기업 수준에서 조직되었고 실제적으로 기업 수준의 조직활동과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구조를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84) 조합원의 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직은 제외하였다.

85)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 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7월 말 현재 9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38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에 건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구속된 노총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62명의 구속 노동자 중에서 39명(63%)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또 지난 달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등 정규직 노조간부 가운데서도 일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건 피범으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났다.(한겨레 2007.8.3, 황보연 기자)

먼저 비정규 주체 단위의 토론이 있을 건데 조직의 경과와 현황은 참고자료로 정리하고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전망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영역별 단위들도 비정규 조직화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겠으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꼭지 들,

민주노조운동에서 비정규 운동의 위치와 전망

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어있으며 노동운동의 핵심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비정규 운동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비정규 운동이 전면화 되지 못한 상황이나 민주노조운동에서 비정규 운동의 위치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로 '기업별 노조주의' 와 '경제주의' 그리고 '조합주의' 가 지적되고 있습니다.⁸⁶⁾ 과연 비정규 운동이 이러한 기존 조직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사내하청의 운동주체들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선 운동을 주장하였고 모색하여 왔으나 사내하청 운동이 사업장 안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주의와 관련하여 대안으로서 연대운동과 관련하여 비정규 운동도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일반노조운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 연대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주의와 관련하여서는 특수고용 조직이 현안 요구 즉, 경제 투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와 아울러 비정규직 투쟁이 자신의 요구에만 매몰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의 평가들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과연 비정규 운동도 역시 기존의 운동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조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86) 이밖에 남성 중심성,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노조운동의 최대의 조직과제로 산별노조의 건설이 제기되었으며 이미 상당한 규모가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산별노조의 핵심과제로서 비정규직 조직화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운동에 대한 현재의 산별노조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업종과 고용형태를 넘는 조직화를 전개하고 있는데 조직 전망으로서 산별노조와의 관계와 아울러 현실에서의 부딪힘이 없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노동운동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별노조에 대하여 비정규 운동의 입장에서 토론하여 봅시다.

■ 단위별 토론문

[전국일반노조협의회 토론문]

발표 : 정의현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1. 일반노조운동 소개

2000년에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지역일반노조는 아직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전국적으로 20여 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일반노협)로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은 16개이다. (14개 참가조직 2개 참관조직 : 서울일반, 인천지역, 부천일반, 평택안성일반, 안산시용일반, 중부일반/원주, 영서북부일반/춘천, 충남지역, 광주일반, 제주일반, 대구일반, 경북일반, 경남일반, 부산일반// 인천일반, 울산연대) 아직 일반노협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들 중에는 이미 지역에서 자리잡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전북일반, 충남서부일반) 또 지역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다.(전남서부일반, 강릉지역 등) 지역일반노조들은 대개 광역시도 단위로 활동하고 있지만 부천, 평택안성, 춘천, 원주 등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름은 대개 지역일반노조로 쓰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한다.(충남지역노조, 인천지역노조, 울산연대노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일반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반노조의 조직성장은 매우 느리다. 전체적으로 추산 해를 때 지역일반노조들의 현재 조합원은 6천명 안팎이다.(일반노협 5천, 그 외 1천) 각 지역에서 뜻있는 활동가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결코 성공적인 조직술이라 할 수 없다. 사실 경남과 충남 처럼 조합원 1천명을 돌파한 지역도 있지만 2, 3백명 수준에서 수년간의 조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도 다수 있으며 심지어 부산과 광주처럼 조직축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일반노조운동의 양적 성장이 더디고 어려운 것은 일손 부족과 재정난 등 주체 역량 한계와 더불어 노조운동 안팎의 두 가지 여건이 작용하고 있다. 신규 조직의 조직편제 방향을 좌우하는 산별 중심의 민주노총운동 조직질서와 빈번한 장기투쟁 사업장을 발생시키는 자본의 가혹한 탄압이 그것이다.

지역일반노조들은 모두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지구협에 직가입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급조직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급조직과의 관계나 도움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북처럼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지역본부가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일반노조를 만들어 조직 정착 시기 까지 인력과 재정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전북, 경남, 대구처럼 노조 설립 초기부터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여 조직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부산, 서울, 충남, 광주나 수도권 중소도시들처

럼 조직이 정착하면서 지역본부나 지구협과 직가입 노조로서 협력관계를 점차 강화해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역본부와 지구협 등 상급조직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일반노조들은 상근역량 부족과 재정난을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은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지난한 일기에 전임 활동가들의 자기희생이 노조활동 유지에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많은 지역에서 전임 활동가 간부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활동비를 받으며 일반노조운동 발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다수 지역에서 전임활동가를 세우지 못해 노조 깃발은 올려놓고 활동은 못하고 있다.(안양, 강릉, 삼척, 목포, 경기북부 등)

2. 일반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민주노총운동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성과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인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한 것 그 자체이다. 그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이 시대 노동운동의 일반적 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노조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노동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해온 기존의 노조운동이 더 이상 시대적 진보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운동의 대열에 함께 나서지 못하는 한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기업별 노조운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산별노조운동 또한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반노조운동은 더디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노조운동은 수년간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전체 노조운동의 양적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화물연대, 텀프연대, 건설플랜트, 사내하청 등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 조직들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또 일반노조운동 자체로만 보더라도 여러 해에 걸친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에도 매우 저조한 양적 성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쟁의 사회적 효과와 위력이라는 점에서도 일반노조운동은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지 못했다. 화물연대, 사내하청, 텀프연대, 건설플랜트, 지역건설, 유통비정규직 등 일반노조운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파급력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온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노조들의 투쟁은 일 년 내내 계속되는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지역사회 수준에서만 일정하게 주목받는 투쟁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일반노조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투쟁의 한계이지만 동시에 사업장을 넘어서는 지역적 전국적 단일투쟁을 수행할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반노조운동의 한계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사업장과 비정규직 조직화가 갖는 일반적 의의를 제외하면 일반노조운동의 성과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조운동이 주목받아 왔다면 그것은 IMF 사태 이후 시대에 조응하여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기치로 낮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방향과 기풍에 대한 문제제기 역할 때문이다. 또 지역적 단결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단일노조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산별조직을 골간으로 하는 민주노총운동과 전혀 다른 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고 실천노력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일반노조운동은 이론적 주장으로 그쳤을 것이다. 다행히 일반노조운동은 조합원 수나

투쟁의 파급력과 관계없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헌신적 활동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조직화의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 왔고 비록 지역 수준이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강화를 위해 출선수범 해왔다. 일반노조운동은 그 연장선에서 권력편제와 조합원 동원에서 중앙 집중에 치우쳐 점차 간부 활동가들의 계급적 단결과 조합원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운동의 현실과 한계를 실천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흔히 산별조직운동과 비교하여 일반노조운동의 단점과 한계로서 조직확대의 한계와 투쟁위력의 한계만이 아니라 교섭의 한계에 대해 많이 지적되어 왔다. 교섭대상의 집중(중앙교섭)과 요구의 통일(통일 임단협안)이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분명 일반노조운동이 안고 있는 큰 한계이다. 하지만 산별노조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별과 지역의 본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극복하기 불가능한 한계가 아님을 확인해 가고 있다. 조직역량의 확대 강화와 함께 극복될 수 있는 한계이다. 지금은 오히려 조직 확대와 조직 안정화에 따라 노조운동이 일반적으로 경험해온 운동의 보수화라는 조직상의 문제들(간부들의 관료화와 조합원들의 수동화, 조합주의 등)을 일반노조운동이라고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장단점을 떠나 재정과 인력의 중앙 집중을 원리로 하는 산별조직운동과는 전혀 다른 조직발전 경로와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일반노조운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노조운동의 가장 큰 현실적 한계는 전체 민주노총운동과 마찬가지로 결국 조직 확대의 문제이고 노동운동 사상이념적 진화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대중적 주체 형성의 문제로 민주노총운동의 혁신 없이는 일반노조운동의 성장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 계급적 단결의 기운을 세워내는 것과 함께 운동의 지역구심을 대폭 강화하여 산별을 뛰어넘는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힘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또 민주노총운동 간부와 활동가들이 변혁적 사상이념으로 자신을 재정립하는 것과 함께 복잡다단한 계급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 갈 수 있는 풍부한 실천역량(기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노조운동을 그 출발을 위한 하나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비정규직운동, 이대로 좋은가?

‘짜우면서 닳는다’ 는 말이 있다. 비정규직운동이 바로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는 하나다’ 를 외치며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땐 ‘노동자는 하나’ 이고 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나도 제각각이 되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운동도 정규직 노조운동과 같은 운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정규직 특히 대기업 정규직과는 사회적으로 처한 조건이 다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처지로 인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동적 지함을 촉발시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운동도 끊임없이 높아가는 사상이념적 진화가 없이는 현실안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온 노동운동의 일반적 경향이다.

하지만 현실운동에서 비정규직 운동의 정체와 자기 안주를 강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로 민주노총운동 혁신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

면 의사결정권의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고 현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을 책임지는 대표들(대의원)이 민주노총운동을 책임지는 의사결정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행히 임원직선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훨씬 중요한 것이 대의원 직선제이다. 사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나 그들과 다른 없는 처지의 중소기업사업장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비중보다 훨씬 적은 의사결정 참여권한을 부여받고 있을 뿐이다. 조직에 따라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 할당제’ 도입을 도모하고도 있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비정규 조합원들의 현실운동에서 민주노총 문제보다 더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형식이 앞서가는 산별노조운동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당사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정신과 기풍이 부족한 가운데 조직 틀 건설에 치우친 산별운동이 가져다주는 폐해이다. 사실 비정규직 노조운동 동지들은 산별노조운동이 비정규직 노조운동의 자주적 성장을 복돋우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이를 억누르거나 시혜자로서 역할에 더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조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허물없이 함께 하는 조건이 마련되기까지는 또 건설노조처럼 산별조직 내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비정규직 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질 때 까지는 산별노조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 상대적 독자성을 부여하고 비정규직 운동의 자주적 성장을 지원하고 연대하는데 더욱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각 산별 조직 내부에 비정규단위들의 자율적 연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운동내 비정규노조들의 자율적 연대활동이 적극 장려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비연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전비연운동 현실은 그 의미를 키워오지 못했다. 산별노조운동의 진전만큼 전비연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점차 현실적 힘을 잃어 왔기 때문이다. 또 산별노조 진전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 기풍을 정착시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운동의 강고한 산별조직 질서는 비정규직 운동이 기존의 정규직 노조운동을 극복하는데서 부딪히는 뛰어넘기 어려운 필연적인 한계일까? 더욱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체제 속에서 내외 독점자본이 좌지우지하는 사회현실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나 혼자 또는 우리 사업장만이라도 적당히 살아남는데 빠져 있거나,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자본이 요구하는 바를 향한 질주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운동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대폭 확대 신장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대중적 활성화와 더불어서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 건설노조 조직현황과 향후 방향

발표 : 김승환 전국건설노조 정책국장

0. 들어가며

이 글은 비정규 노동자 운동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문을 제출하라는 제의를 받고 건설노조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칠 여유와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건설노조 내부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정책단위의 고민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07년 3월 2일 산별단일노조 건설에 집중하면서 건설노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점검을 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였던 바가 있으므로 건설노조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다루고 본 토론의 취지에 맞추어서 재작성 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운동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반성적 접근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건설노조에서 주요하게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조직화를 제대로 할 것인가였습니다.

현장에서 조직화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년간 고민하였던 주제였지만 비정규 노동자 운동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반성적 접근을 해보지 않은 이유는 건설노조의 조직대상이 모두 비정규직이고, 이미 비정규직으로 수십년을 일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제에 적합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노조 운동에서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하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진단과 개별단위 노조의 진단을 통해서 산별노조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서 조직확대와 조직강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개별의 고민과 과제를 조직의 고민과 과제로 만들고, 건설노조라는 한 울타리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산별노조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이후 조직발전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전망을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노조의 조직현황과 과제를 보시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현황

- 조직대상 :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200만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포함)
- 조직화 현황 : 건설사무노조(사무관리직, 정규직위주) 약5천명, 플랜트 건설노조 약5천명, 건설노조 약2만명, 산별미전환노조
- 건설노조 현황

- 1) 토목건축분과위원회 / 건설기계분과위원회 / 전기분과위원회
- 2) 6개 지역본부, 37개 지부 약 2만명

- 3) 지역별 조직과 업종별 조직을 통합하여 업종별 조직을 업종분과위원피로 하였고, 지역별로 본부를 두어 본부의 지도집행력을 만들어가고 있음
- 4) 중앙과 지역본부 상근자는 약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2. 조직화의 고민과 과제

□ 특수고용직 문제 (노동기본권) - 건설기계 업종

건설산업내에 건설기계를 다루는 기종이 26개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06년 말 기준으로 약 33만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노동자수는 등록현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기계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와 법인소유로 구분하더라도 법인보다는 개인소유가 더 많습니다. IMF 이전에는 건설회사들이 건설장비들을 보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IMF이후 건설장비들을 노동자들에게 불하하거나, 개인들이 소유해서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서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레미콘, 덤프, 굴삭기 등을 소유한 개인사업주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고 토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내에서 덤프조합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덤프의 조직화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덤프는 05년에 결성하여 05년에 2번의 파업과 06년에 4번의 파업을 거치면서 1만 5천대오를 형성하게 됩니다. 단시간에 급격한 조직적 성과를 내었습니다.

조직화의 원인을 분석하면, 덤프연대 이전에 이미 건설기계 연합회등으로 지역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었던 점이 있고, 지속적으로 임대단가가 하락하게 되고, 도로법상으로 과적에 대한 벌금을 덤프조합원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미 화물연대가 조직되어 유가보조를 쟁취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화에 성과를 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개선투쟁을 진행하면서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고자 전국적 관점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한 지도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조직화의 성과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문제가 있고, 나머지 25개 건설기계기종에 대한 조직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업종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고 입법 문제는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특고단위와 함께 입법전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다루고 있는 조직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미조직 기종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 대하여 조직쟁의실에 사업에 대한 주관을 하고, 지역본부와 건설기계지부에서 개인별로 조직하거나,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현재 굴삭기, 불도저 등의 경우 지역지부에서 활발히 조직하면서 조직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굴삭기와 불도저를 지회로 편제하여 조직하고 있고, 덤프, 굴삭기, 불도저등의 단위를 묶어서 원청, 전문건설업체, 지자체등에 조합원 우선고용, 적정단가보장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회별로 파업을 하면서 투쟁을 통해서 타 기종으로 주체를 세우면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건설노조를 만들고 난후에 조직사업은 더욱 체계와 질서를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지역본부별로 조직담당자들과 중앙의 조직담당자들이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고, 현안이 발생하면 지부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와 본조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본조에서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의 경우 지역에서 함께 작업해 왔던 덤프, 굴삭기, 불도저 등이 기존의 인맥과 일자리를 통해서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조직사업이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 원형 사용자성 문제 - 토목건축, 플랜트

건설산업은 발주산업이고, 수직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법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팀단위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하청업체에 마지막 도급을 받아서 일하였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동을 하다보니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임금만 제때 받으면 되었고, 오야지가 되면 공사를 일부 하도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사용자보다 임금을 주는 오야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원청이 어디인지, 하청이 어디인지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일 노조 건설이전에 토목건축 노동자와 플랜트 노동자를 주로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건설노조는 단위 노조 수준에서 조직가를 양성하였습니다. 조직가들은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조직가들의 조직사업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자본의 사주를 받은 공안검찰에 의해서 공갈범으로 범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사업이 진행되면서 임단협 투쟁을 하면서 조직사업을 한 대구경북건설노조의 사례는 토목건축노동자 조직사업을 노조의 핵심사업으로 고민해온 지역노조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구경북건설노조의 조직사업은 작업팀을 책임지는 팀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하였고, 이들의 요구를 모아서 지역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투쟁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사례를 통해서 대전지역도 팀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하였고, 이후 안산과 광주에서 팀단위 조직사업을 한 후 현장의 전문업체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투쟁을 하면서 조직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주제가 비정규 노동자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 토목건축 지역노조들은 04년에 공안탄압을 맞으면서 심각한 반성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조직사업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안된다는 절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조직화에 성공하고, 대규모 파업투쟁이 가능하였던 핵심적인 이유는 지도부들의 조직화에 대한 불타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현장에서 기능인력들이 소외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인맥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오야지들이 사실상 작업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야지들을 조직하는 것이 조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오야지들이 가지는 사

용자적 의식 때문에 노조가 풀려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오야지 조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조직화 사례를 통해서 오야지들에 대한 노조의 정책적 입장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속에서 조직화를 하면 가능하다는 사례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도 20여개의 직종과 공종으로 구분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틀목수와 철근 위주의 조직이 되었지만 타 직종에 대한 조직사업에 대하여 전국적 고민을 하고 있다. 조직쟁의실에 주관하고, 각 지역본부와 지부가 조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플랜트 건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주로 철강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등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종도 10여가지로 구분됩니다. 플랜트 업종의 조직화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89년에 포항건설노조가 설립되고, 매년 파업을 통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02년에 여수건설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이른 단체협약으로 인하여 현장의 노무공급권(조합원 우선고용)을 쟁취하였고, 현장반장에 대한 선임권을 노조가 가지게 되면서 1년만에 등록조합원 1만명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가 마찬가지로 여수와 비슷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파업이후 1년만에 등록조합원 6천명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자본의 대응으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76일간 끈질긴 파업을 하였지만 여수나 전남동부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조합원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쟁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플랜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때 타지역의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타기 위해서라도 단일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전국의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조직부장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건설플랜트 노조를 조직하게 됩니다.

플랜트 단일노조를 만들고, 충남플랜트 노조를 결성한 것은 전국적 관점에서 조직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플랜트 노조의 과정은 단일노조에 들어오지 못한 여수건설노조와의 관계설정이고, 조직사업과 정책사업을 이끌어갈 조직활동가의 확보입니다.

3. 마치며

□ 전국적 관점과 조직적 질서의 확립 -산별노조 건설

지역노조와 업종노조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조직사업들이 단일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좀더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동안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노조들의 재정상태나, 조직화 경험이나, 조직활동가들의 경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산별노조의 힘으로 재정과 조직과 경험있는 활동가들의 의식적 노력이 조직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조직쟁의실에서 미조직 사업을 담당하고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흐름과 방향은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지부에서 조직사업을 하고, 본부가 지원하고, 중앙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중장기적 방향과 조직화의 원칙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별노조를 결성할 때 진성조합원 기준으로 약 1만 2천명정도 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1만6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특성상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조직이 확대됨

덤프조직화 과정이나, 플랜트 조직화 과정, 그리고 토목건축 조직화 과정을 보면, 파업투쟁을 통해서 조직이 확대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덤프의 경우 중앙차원의 파업과 지역차원의 단가협상투쟁등을 통해서 조직이 확대되는 경험을 보입니다.

토목건축, 건설기계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도개선과 조합원들의 실질적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을 조직함

건설산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고, 특고노동자들이 있으므로 노동기본권적 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과적 문제, 유가보조 문제, 임대차계약서 문제등이 핵심쟁점이 되었고, 수급 조절등이 조합원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점이 조직화 사업에 힘과 탄력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목건축은 저임금, 장시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시달리는 현실이 조합원 확대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역민 우선고용 혹은 조합원 우선고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단가)인상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함께 벌였던 것이 조직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지역간, 직종과 업종간 조직화 정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함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업종간에 조직화의 정도에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조직적 계획이 필요하고, 중앙차원에서 조직활동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명확을 설정해야 함

플랜트, 토목건축현장에 함께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기초와

소통/연대/변혁

방향을 정해서 조직사업의 영역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 토론회]

발표 : 임성훈 전국평생교육노조 사무국장

1. 조직 현황과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일반현황

소 속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 기능대학
인 원	22명	99명
성 별	남 2 / 여 20	남 88 / 여 10
주 요 무	1. 외국인 고용지원 업무(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강의, 학생지도, 취업지도, 산학협력 등)
지 역	전국 23개 지사에 1명씩 분포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6명	전국 20개 대학 및 캠퍼스에 분포
전 임 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복무협조	1명 (하루 6시간 연단위 적치분할)
조합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지하1층	

㉡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의 경과

일 자	경 과	비 고
2004년 8월 20일	비정규직 교원협의회 설립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2004년 9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2004년 12월 15일	제1차 총파업 - 예비합약 체결	1년에 2~3차례 계약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2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2005년도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함.
2005년 4월 27일	단체협약 체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함.
2005년 8월 10일	민주노동 공공연명 가입	
2005년 10월 24일	제2차 총파업 - 노사합의서 체결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이라는 정부정책의 추진으로 공단의 조직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해고를 예고하는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에 맞서는 66일간의 총파업을 통해 인력공단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정규직전환 이첩어 받.
2005년 12월 24일	노사합의서 체결	
2006년 2월 25일	전국평생교육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6년 3월 1일	조직분리	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교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능 대학으로 이관됨.
2006년 9월 25일	학교법인 기능 대학과 단체협약 체결	
2007년 3월 1일	노동조합 2대 집행부 임기 시작	
2007년 6월 26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	무기계약전환대상자 (인력공단 65명, 기능대학 129명)
2007년 8월 24일	공공대학 후속조치 교섭 개시	

◎ 한계와 문제점

(1) 한국산업인력공단

1) 한계

① 2006년 노사합의 이후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있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음.

②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현재 86명으로 인력공단본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

③ 조합원은 전국 23개의 지사에 1명씩 근무하고 있음.

④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한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65명이 확정됨

⑤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0여명이 계속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

⑥ 현재 무기계약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전환대상자 일부가 조합가입을 타진하고 있으나,

⑦ 담당업무가 달라 서로 교류가 부족하여 조직화가 미진한 상태

⑧ 조직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통합 가능성 있음

2) 현 노조(공단)의 현안문제

① 2006년 66일간의 총파업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을 받아냄

- ② 2006년 2월 노동부는 공단에 100명의 직제승인을 하였고 공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하였고
- ③ 노동부는 100명의 정원 직제승인을 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예산 불승인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 ④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과 맞물리면서 2007년 현재까지도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⑤ 정부대책 발표이후 공기업의 경우 정원에 반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지고 있음
- ⑥ 이에 따라 공단은 2008년 예산에서 65명 전환자의 차별시정 예산액을 500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입사 전·후 경력을 모두 불인정하고 경력, 학력, 능력 모두 무시한 채 정규직 직렬의 최하급 6급으로 일괄전환하며 임금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 8명은 한시적으로 7급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임
- ⑦ 또한 현 정규직 보수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보수표를 하향 재획정하여 현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임금수준으로 맞추어 적용하겠다고 함
- ⑧ 이제 공기업의 노사합의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입장으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시정이 아니라 차별을 고착화 하고 퇴직할 때까지 차별받으라는 것으로 기만적인 대책임이 명확해짐

(2) 학교법인 기능대학

1) 한계

- ① 2006년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사업이 통합되면서 인력공단의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능대학으로 이관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 ② 2007년 6월 현재 기간제노동자 304명, 간접고용노동자 735명으로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교사(139명), 홍보-전산업무(3명), 평생교육원사무원(6명), 산학협력담당(1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청소 및 시설관리, 기숙사사감, 경비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에서 교사 139명 중 98명이 조직화 됨.
- ③ 2006년 상반기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였으나 교사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조합가입의사를 밝힌 노동자가 없었음. 교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계를 받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람으로서 재가입이 어려운 상황
- ④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구조 발생이 우려됨.
- ⑤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전환대상으로 확정된 교사 및 홍보-전산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조직화가 시급한 상황임.

2) 현 노조(기능대학)의 현안문제

- ① 노사합의 사항의 내용은 공단과 동일하며 2007년도 50%를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
- ② 2006년 2월 노동부는 기능대학에 76명의 직제승인을 하였고 기능대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 ③ 기능대학도 공단과 동일하게 기획예산처의 예산불승인으로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이 무산되었으며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되었음

⑤ 정부대책 발표전 정규직교원(교수)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환계획서를 제출했던 기능대학은 교사로 별도직군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며

⑥ 정규직 교원대비 2007년 70%, 2008년 80%등 점차적으로 임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⑦ 별도직군에 걸맞은 임금을 주겠다고 입장을 변경하고 있음.

④ 향후 노조의 계획

- 공공운수노조와 단위 노조들과 연대하여 기획예산처와 대책단 면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 연맹일정과 연동하여 조합원 연가투쟁을 조직하여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를 압박하고
- 공단과 기능대학의 미조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안 문제를 알리고 노조에 가입하여 투쟁하는 작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며 현 공단은 6명이 추가로 노조에 가입하였음.
-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기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함
- 각 기관에 보충협약 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능대학의 경우 1차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 공단의 경우 전환과 관련하여 8월31일 사측과 협의를 하며 추후 임금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충협약을 진행할 예정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토론편]

발표 : 김종호 전비연 정책국장

1.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몇 가지 통계 및 문제의식

-1997년 IMF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힘입어 현재(2007년 3월 기준) 비정규직이 879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임. 그리고 여성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약 3:7 비율임

-임금에 있어서도 정규직(238만원) 대비 비정규직(120만원) 월 평균 임금총액은 50.5%로 그 격차가 전연도에 비해 확대됨(2007년 3월 기준)

-현재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는 23만 4천여 명이 조직되어 조직 노동자의 13.47%를 차지하고 있음. 비정규화에 관한 실태조사⁸⁷⁾ 결과를 보면 간접고용 관련 노조가 67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기간제 61개, 지역일반과 지역업종이 각각 52개와 45개, 특수고용이 30개, 여성노조가 11개 임

-초국적 자본의 대변자인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완전히 또는 일부 보장받기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빈곤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해결 없이 사회양극화 해결은 요원함

-총자본의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에 돌아갈 임금 일부분을 양보해 비정규직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에 돌아갈 이익은 언급하지 않고 노노갈등을 유발하기위한 저급하기 짝이없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폈임없이 퍼붓고 있음

-노동기본권조차 갖지 못한 2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면 일할 수록 적자인생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임이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직장문화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음

87)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266개 조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기서 실태조사 대상에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 노조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간비정규 노동 2006.12

-비정규약법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전혀 보호받지 못함. 그리고 직접고용 계약 직노동자들도 비정규약법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뉴코아에서는 용역전환과 계약해지로 800명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흥에버에서는 무려 500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했고 무너진 정규직인 기반적인 직무급제가 진행됨

-무너진 정규직 일뿐 차별을 고착화하는 분리직군제를 통해 총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순기능적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음(실제로 지난 8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특고노동자 보호입법 청문회 때 노동부 비정규 담당팀장이 했던 말)

-결론적으로 이 정도면 현재 한국사회가 정확한 계급사회(못 가진자와 가진자의 비율이 90:10에서 95:5로 변하고 있음)로 규정하고 싶은데 지나친 확대 해석일까?

2. 비상을 위한 몇가지 단상

*전제

- 전비연이 비정규노조 연대의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중심으로 서술
- 조직화와 이기는 싸움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약법 폐기)여론화 작업 및 조직혁신 방안 등

1)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위에 나열된 총자본을 이기기 위해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대리주의 극복)이 필요하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조직화라 판단됨

-조직화와 관련 우선 현장에 투신해 조직화하는 활동가들이 필요함. 현재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활동가들은 현장 투신이 아닌 연맹이나 본부에 적을 두고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음

-조직화는 현장정서가 중요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키워 내기위한 재정부담도 덜기 때문에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이라 판단함(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성이 전제된 것이지만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는 논외로 함)

-기 조직된 산별노조에서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필요함. 예를 들면 조직화에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전교조에서 규약을 열어 교사만이 아닌 10만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합법화 이후 또 한번의 조직르네상스를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산별노조-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주요한 무기임)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 향후 산별노조로 묶는 것이 산업별 요구(최저임금 등)와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반대로 일반노조들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한 조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급적 연대를 통해 계급운동을 복원하고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케이티엑스가 철도노조에서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인데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과 아울러 지금까지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고 있음(이랜드, 뉴코아 투쟁도 또 한 예일 것임)

-현장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은 싸움이 벌어지면 대부분 깨진다는데 있음. 이것을 극복하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노조들만의 품앗이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노조들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예전보다 배가되어야 함(여기에서 산별노조 역할이 중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기노력과 관련해서는 학습을 통해 변화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기업별 노조주의를 뛰어넘는 사업장 벽 허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혁신의 주체이며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함

-투쟁을 통한 조직화와 조직화를 통한 투쟁은 상호보완 관계로 투쟁을 통해 조직은 깨져도 사람은 남는 사회적 교섭이 아닌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세와 정신이 중요함

3) 여론화 작업 및 조직혁신 방안

-올해 치러질 대선은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고 이것으로 인해 이랜드, 뉴코아 투쟁이 벌어진 후(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되며 이 시기 비정규직법 폐기(아니면 전면개정) 공동행동이 필요함

- 올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한 전면 사회 의제화
- 각 당 대통령 후보 초청(아니면 후보 선대위원장 등) 비정규직 토론회를 통한 정치 쟁점화
- 선거 막판에 기자회견(내용은 ?)

-꾸준한 악법 피해사례 발표 및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를 통해 여론화를 주도해야함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압박투쟁을 민주노총을 통한 대리전이 아닌 비정규직 주체의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함

-조직혁신 방안으로는 각 조직(당 포함)들이 임원선출 및 회의구조에서 비정규직당체 도입을 강제하기 위

한 노력과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과 관련 상박하후 개념을 도입해 조직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행동 및 여론전 필요함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노래, 영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함

3. 소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쟁점화 되는 것은 아님. 긴 호흡과 안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함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을 중심으로 권리보장 입법쟁취, 비정규직 사유제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투쟁의제로 전면화해야함

-변방 제 3의 비정규직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할 보편적인 노동인권으로 인식하고 달려들었으면 함

-최저임금 투쟁은 생활임금 쟁취로 귀결되어야하며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함

[민주노총 서울본부 토론회]

발표 : 허유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차장

1.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점과 과제

○ 전두환 군부파쇼 시절,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법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겨우 노조 결성에 성공한다 해도 온갖 탄압에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였다. 공들이 공순이로 천대 받았고 욕설에, 걸 밟히면 조인트 구타에 몸도 가슴도 멍들어 갔다. 장시간 저임금은 기본이요 산재로 죽으면 그야말로 개 값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왔다. 그렇게 억눌려 살아왔다. 87년 6월 함쟁이라는 정치적 공간의 확대는 억눌려 있던 노동자의 고통과 슬픔, 분노를 폭발시켰고 3천개가 넘는 노동조합을 일시에 건설하게 하였다. 노동조합 운동은 대중화되었다.

○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그간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통계상으로 23만 4천명이 조직되었고 조직 노동자의 13.47%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점차 비정규노동자 조직화가 확대되었고 동시에 상당 규모로 파급력 있는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제는 전략조직화의 관점에서 상급조직과 사업장, 단체 등에서 목적의식적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87년처럼 폭발적으로 분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 하지만 현재,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조직화는 신규활동가 몇 명을 현장에 투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직 유지관리 위주의 사업에서 미조직 조직화,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에서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까지 포괄하기 위한 조직문화환경의 변화와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왜 기존 노동조합 동력을 비정규 조직화 사업으로 배치시키지 못하는가? 이제 상당한 역량으로 성장한 비정규노동조합은 진정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역량을 투여하기 어려운가? 현장 밖에서 지원하는 활동가가 있으면 현장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가를 육성하던, 현장으로 들여보내던 왜 실행하지 못하는가? 이 모든 노력이 합해질 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주체적 측면에서 노동운동 전반의 주체의 문제를 지적해 본다.

○ 조직화와 투쟁은 반드시 병행된다. 조직화와 더불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대중적 조직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압도적 투쟁으로 빠른 시기 승리를 쟁취했다면, 그 파급력은 유통부분 노동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며 대중적 조직화의 길이 열렸을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싸움은 되는 싸움이다. 비정규약법 시행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이목이 우호적으로 집중되었고 그간 비정규조직

투쟁 속에 그 의미와 주요성에 대한 조직내 공감대가 있었기에 초반부터 민주노총이 받아 안는 싸움이였다. 유동업체의 특성 상 매장-매출 타격이라는 투쟁 기제가 분명했으며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매장은 자본에겐 방어할 거점이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대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에 근거한 투쟁이기에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기도 쉽다. 그러나 의미 있게 연대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간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비정규사업장, 비정규조합원은 어떤가? 대중적 조직화의 성공 유무는 반드시 투쟁을 경과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조직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0 산별노조 조직화와 지역일반노조 조직화, 정답은 없다. 누가 실천으로 검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산별노조는 비정규, 이주노동자까지 포괄하여 조직화에 나설 것인가? 그러길 바란다. 단순하게 규약 상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을 개정하면 될 것이고, 사업역량이 없다면 역량을 투여 하면 된다. 의지와 결의의 문제가 크다. 지역 차원의 조직화는 산별노조에서 조직하던 아니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상당수의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의 비정규노동자가 지역에 기반 하여 노동과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의 경우에도 보듯이 지역 조직화와 투쟁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지역일반노조로의 조직화는 산별 지역조직화든 지역 차원의 조직화와 투쟁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역운동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노조운동에서 비정규 운동의 위치와 전망

민주노조운동은 87년 이후 '노동해방' 과 '평등사회' 를 지향하며 총자본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의 실패로 인해 변혁적 지향이 약화되었다. 임단협과 복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과 IMF 경제위기 하에 수세적 싸움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노동조합주의와 실리주의로 경도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념의 위기, 투쟁의 위기, 조직의 위기, 계급대표성의 위기 등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실천으로서 비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운동이 부상하였다.

C 변혁적 지향의 약화, 비정규운동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운동으로 나갈 수 있는가?

87년 전후 민주노조운동 선배들의 변혁적 지향은 확고했다. 젊은 시절 삶을 바쳤고 군부파쇼에 맞서 목숨 걸고 운동했던 시절이 있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인 노동자 대중투쟁도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투쟁했다. 지금의 비정규운동은 어떠한가? 비정규운동은 변혁적 지향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로는 노동자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가치 실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 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과 실천운동이 필요한데 비정규운동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과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가? 사회변혁적 전망과 지향이 없다면 비정규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C 투쟁성과 연대성, 비정규운동이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대안이 될 수 없다.

- 2004년 말부터 6차례에 걸쳐 비정규압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선언만의 투쟁이었고, 의지도, 실천도 부족했기에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비정규주체 조차 유의미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고 체념과 패배감에 빠졌다. 그러나 그 패배적인 분위기를 풀고 이랜드-뉴코아투쟁이,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였다. 앞으로도 죽 계속 이어질 조직과 투쟁이다. 희망이다.

- 그러나 비정규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연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장기 투쟁으로 인한 조직적 피로도가 커요, 지난번 투쟁으로 휴유증이 있어요, 조직력이 약화 되 어려움이 많아요,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업장 특성 상 투쟁을 조직하기가 어려워요, 비정규사업장은 정규직사업장과는 달리 법제도적 문제로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이 토로된다. 왜 이해가 안 되겠는가? 충분히 이해된다. 현실이다. 그런데 어찌하잔 말인가? 정규직 사업장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비슷하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부분 일치하는 어려움이 있다. 단지,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승리하는 운동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투쟁해야 할 때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랜드-뉴코아처럼 연대가 결실할 때 연대해야 한다. 온갖 이유를 넘어서야 투쟁성도 발휘되고 연대도 실현된다. 비정규운동은 투쟁성을 회복하고 연대성을 실현 할 수 있는가?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대안과 중심이 되기 위해서 실천적 검증이 되어야 할 지점이다.

C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비정규운동은 가능한가?

- 노동조합운동은 생존권 투쟁으로부터 출발한다.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맞서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했다. 비정규노동자의 투쟁 또한 그러하다. 투쟁과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노동기본권이 결실함을 체득하고 노동기본권-제도개선 투쟁으로 나아간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에 있어서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비정규직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등의 기본권 투쟁은 매우 절실하고 절박하다. 노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조직으로 묶여 있는 한 점진적이거나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규직노동조합이 그러했다. 20년간의 투쟁의 결과 조직된 힘으로 임금인상도, 기업복지도 쟁취했고 정리해고-고용문제도 일정부문 타아내었다. 그러나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약한 고리-희생양을 찾았고 미조직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한다면 상당부분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운동은 정규직운동이 걸어왔던 조직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노동기본권 투쟁으로 한계 지워질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문화, 교육,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공세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작업장 문제와 노동의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비정규사업장, 비정규운동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 전망을 주어야 한다.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노동조

합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보편적인 해방운동으로서 비정규운동은 현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되 더 나아가 생태, 인권, 반전평화, 여성주의와 교육의료·보육공공서비스 등의 사회공공성 의제와 결합하고 포괄하는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 우리 모두의 희망을 만드는 운동,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운동, 전체노동자와 민중과 함께 하는 보편적인 운동으로 비정규운동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희망이 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토론문]

지역중심 비정규조직계급대표성 복원으로

발표 : 이승철 (사회진보연대)

1.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점과 과제

(1) 조직화 집중현상

-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154개 비정규직 노조를 조사한 결과, 노조수에서는 직접고용 계약직 노조가 전체의 3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접고용(31.2%), 특수고용(22.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조합원수에서는 특수고용노조가 전체의 39.2%였으며, 계약직(25.8%), 간접고용(20.9%) 순⁸⁸⁾.
- 반면,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15,731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74만 4천명(55.6%), 이 중 일반임시직이 345만 2천명(2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간제고용은 227만 8천명(14.5%), 특수고용은 61만명(3.9%), 파견근로는 17만 5천명(1.1%)⁸⁹⁾.
- 특수고용과 지역건설 등 동질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이 나오고 있으나, 기간제·유통서비스 등에서는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
-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조직률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반면, 특수고용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로 인해 과대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민주노조운동이 기간제 노동자 조직에 보다 박차를 가할 때만이 비정규직 운동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계급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2) 투쟁의 중심은 옮겨왔으나, 운동의 중심은 옮겨오지 않았다

- 최근 몇 년간 주요 투쟁과 그에 따른 구속자 발생 등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중요성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 사실. 그러나 이 같은 '투쟁의 중심이동'에 들어맞는 '사업의 중심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일례로 민주노총의 예산배정문제를 들 수 있음. 2007년 3월 중앙위에서 결정된 민주노총의 미조직사업비와 전략조직화사업비는 각각 '0원'. 일반사업비 중 비정규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3%에 불과. 2006년 4천3백여만원이었던 민주노총 비정규직사업비는 2천1백여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

88)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2007.4.

89) <2007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월간 비정규노동 6월호, 남우근, 2007.6.

- 비정규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나 연대 역시 지역본부나 해당 지역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른 것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역량집중을 찾아보긴 어려움. 비정규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 수공업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
- 민주노총이 2008년부터 도입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의 실패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상담 위주의 조직, 현안 문제에 봉착해 진행되는 조직화와 개별작고립 분산적 조직사업을 지양하고, 전방위적인 비정규 조직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였음. 따라서 개별 조직별로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여하는 사업이어야 했지만, 사실상 여타의 '부문사업화' 되는 경향이 짙었음.

2. 민주노조 운동에서 비정규 운동의 위치와 전망

(1) 비정규 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이유

- 비정규 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노동유연화 전략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 즉 과거 저임금 산업구조에서 대기업을 필두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운동의 핵심가치였던 것처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화 투쟁은 마찬가지로 위상을 지니는 것.
- 아울러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며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 주요 매개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보편적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로 인식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그러나 비정규운동만으로 정규직 노조운동의 폐해로 지적되는 경제주의와 조합주의, 기업별 노조주의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 같은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노동조합운동 일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

(2) 비정규직 운동마저 기존 정규직 노조운동의 폐해를 담습하는 이유는

- 임단협 중심의 활동 : 노동(조합)운동의 임단협 투쟁은 일상에서 발견되는 자본과 노동의 대표적인 접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자본의 착취구조를 깨고, 자생적인 노동대중의 투쟁을 이끌어내며, 활동가를 생산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함. 경제투쟁은 우리 사회 체제의 특성상 그 조건과 준비정도에 따라 보다 진일보한 변혁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재론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문제는, 최근 노동(조합)운동의 활동이 '현장투쟁 강화' '상향식 민주주의' 라는 말을 쓰고 이 같은 경제투쟁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임.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임단협에 지나치게 치우친 활동방식을 계속할 경우,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대리주의(정규직노조 및 진보정당)와 극단적 선도투의 공존 : 지금까지의 비정규투쟁 중 비판적으로 살펴볼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리주의' 와 '극단적인 선도투 중심의 활동' 이 그것. 문제는 이 같은 양극단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는 점. '대규모 노조 조직과 이를 근거로 한 대중활동' 으로 상징되는 한국 노조운동의 모델이 비정규직에게는 대입되기 어렵기 때문. 그러나 대안적인 활동방식과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 주체는 기존 모델을 차용하지만, 비정규직이 놓여있는 특성 상 제대로 적용되긴 어려움.

(3) 노동조합 운동의 활동전형을 바꿔낼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운동과의 긴밀한 결합 : 의제와 실천 양면에서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 지역은 중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지방이나 전국단위의 하부단위로서의 지부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 연대와 투쟁의 단위이자 거점. 신자유주의 시대에 상층타협이나, 산업적 이해에 기반한 권리 방어를 극복하고, 노동자 교육문화운동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연대가 필수불가결한 경로가 됨. 기존의 투쟁사업장 지역연대를 보다 확장시켜 지역차원에서 생활임금, 최저임금 쟁취투쟁, 미조작비정규 노동자 조직활동, 노동자 학습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매겨야 함. 통상 ‘지역연대’를 ‘지역 노동조합운동의 연대’나 ‘투쟁연대’ 수준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짙는데, 이를 넘어서는 지역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노동자운동의 사회적 확장이 필요.

- 계급대표성의 재구성과 복원 : 요구와 투쟁, 사업에서의 계급대표성이 복원되어야 함. ‘부문의제’로 왜곡되고 있는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기실 전체 운동의 과제임. 반대로 전쟁과 빈곤, 여성억압, 식량주권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발생하는 갈등 역시 노동자운동의 과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운동과 호흡해야 하며, 노동자운동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이를 ‘계급대표성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의제로 노동운동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우편향적 해석과 ‘계급중심성 약화’를 우려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좌편향적 해석을 극복해야 함.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새로운 계급성을 구현하고 형성하는 것. 노동관련 문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체에 대한 운동을 기획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기관으로 변화시키려는 혁신운동과, 전체 운동의 변혁성 강화로 이어짐.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 : 여성노동운동을 노동운동 내 성차별 극복과 거부장적 조직문화의 철폐 수준에 가둬놓고 있는 인식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 이는 현재 노동조합의 여성사업이 대부분 위 두가지 주제에 간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남. 노조 여성국이 ‘성폭력 해결기구화’돼가고 있는 현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화’의 하부구조로 여성사업을 사고하는 경향 역시 발견됨. 심지어는 현장투쟁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문제가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음. 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억압의 문제. ‘불안정노동’, ‘여성억압’ 등은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특화된 접근이 필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시장 내 수직적수평적 직종직군 성별분업 현상이 비정규직 양산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음. 이는 곧 바로 성별화된 구조조정으로 나타남. ‘저임금, 미숙련, 하위직’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여성직종’에서 집중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정으로 되돌려지거나 재취업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환원됐음.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고하고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분리직군제’를 통해 여성집중 직종에 대한 차별의 고착화 현상으로까지 발전.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를 볼모로 자본의 위기를 지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

3.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1) 기존의 비정규직 조직화 모델 약평

- 산별노조지역노조 모두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 : 강조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존하는 남한 산별노조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를 기치로 내걸고 건설됐음. 그러나 보다 밀착된 ‘비정규직 투쟁 지원’ 에서는 일정정도 전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은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움.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원초적 한계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겠지만, 특히 제조업에 집중된 사내하청의 경우 정규직노조와의 갈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의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의 대부분 측면에서 기존 정규직 중심 체제(대공장 중심 체제)를 차용하고 있는 산별노조가 과연 얼마만큼의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 지역일반노조 역시 수공업적 조직화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지점. ‘뽕앗이 투쟁’ 이외의 공동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나타남. 임단협 이상의 공유가능한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함으로써, ‘지역’ 이 갖는 역동성을 심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외국의 사례 :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드시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조직의 왕도는 아님. 이탈리아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직 독자 전국노조 건설이 시작됐으며, 대표적 비정규 노조인 인도의 SEWA(자가고용여성연합) 역시 애초 인도섬유노조연맹(TLA) 소속이었으나 분리. 대기업 정규직노조 극복을 기치로 1954년 실시된 일본의 ‘합동노조운동’ 과 뒤이은 ‘산별개인가맹운동’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며 1970년 들어 ‘업종별·직종별 일반노조운동’ 으로 계승됨.
- 전통적인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나드는 활동 : 때로는 광역적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며(SEIU), 때로는 상조사업이나 은행사업(SEWA), 더 나아가 국가 연금재정에 대한 개입까지 활동(이탈리아)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
- 결론적으로 ‘조직형태’ 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것. 산별노조와 지역일반노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님. 더 나아가, 반드시 노조의 형태일 필요도 없음. ‘임단협’ 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의 효과적인 경로 등을 고민한다면 이 같은 모색도 의미가 있음.

(2)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 지역노동시장을 중심에 둔 조직화 : 지역기반으로 활동함으로써 비정규직간의 연대 형성은 물론 지역노동시장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이해대표의 내용을 개발할 수 있음⁹⁰⁾. 아울러 의제와 실천 양 측면에서 지역운동과 노동자운동이 긴밀하게 결합하며 투쟁·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이 지역과 소통하는 것을 경유해 노동자운동이 지역운동화 해야.
- 직종 또는 업종 중심의 조직화 : 일본의 일반노조운동이 ‘백화점식 조직화’ 전략에서 점차 직종업종 중심으로 재편된 과정 살펴봐야. 이후 대산별 원칙 등을 수용할 여지는 충분하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 방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를 듯.
- 지역조직화 모델의 실험 : 특정지역, 특정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노조와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함께 초정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을 펼치는 형태.

90) Banner & Dean, 200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발표 : 유현경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1. 비정규직 조직화의 난점과 과제

○ 98년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투쟁 이후 비정규직 조직화는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과 함께 조직건설로 이어져 왔다. 수많은 비정규사업장의 조직투쟁 사례는 여러 가지 조직화의 가능성과 함께 개별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의 피로감 또한 맛보게 했다.

○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의 희생물이 되어 투쟁하면서 조직화되던가, 조직화되자 마자 투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조직화투쟁의 준비정도를 고려하며 조직화를 고민하기도 전에 노조의 생존과 유지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다.

○ 이러한 현안문제에 봉착해 내몰리다시피 하는 투쟁과 동시에 벌어지는 조직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투쟁의 파급력으로 비정규직 투쟁 전선을 유지해왔고, 비정규직 조직화대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개별사업장의 투쟁을 통한 조직화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내몰리는 전에 미리 준비하는 투쟁과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노동운동내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에 대한 전략조직화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것은 승리하는 투쟁이 실제 수공업적인 조직화 방식을 넘어 대중적 조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민속에서 투쟁과 조직을 전략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것이었다.

○ 그러나 전략적 조직화에 고민은 사업으로 배치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첫째, 비정규직 미조직 조직화가 의미하는 바는 조직 내부의 사업 작풍과 투쟁의 방향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순간 자본과 더 이상 일정한 타협과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하기에 이런 긴장을 노동조합 내부에 걸어놓고 내부 투쟁을 하는 과정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투쟁 과정 없이 외부적 조직방식이 문제 없이 채택되고 있고, 50억기금도 열성을 다해 조직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많은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계급적 원칙에 입각해서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조직화가 노조활동 내부를 건드리지 않으며, 비정규직 조합원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 조직 전략이 구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인 혁신과 변화를 동반하지 못해왔다. 여기에 조직화되어 노조로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도 예외는 될 수 없다.

- 현재 조직화 자체가 자신의 존재이유인 노동조합이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구조조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과 재정이 조직화를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활동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대항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실무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조직활동가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임단협에 집중되어 있다. 임단협 시기가 되면 모든 활동은 중단된다. 임단협 과정에서 자본이 고분고분하지 않기에 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모아야 이것도 돌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임단협 속에서 파업을 기획하지만 조직화를 위한 파업을 기획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한 것을 갖고 파업을 하지도 않는다. 만약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결국 노동자들을 분할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요소라면 그것이 임단협 보다 계급적 단결에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에 대한 고려가 1순위가 되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되지 않는다. 임단협 때에는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더 중요한 과제에는 임단협에 쏟는 정성의 1/10도 그 안에 쏟아부어 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산별노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의 교육활동,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그리고 활동가들의 역할이 모두 조직활동으로 배치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어 있고, 그 투쟁을 따라다니기에 바쁜 산별노조로는 절대로 조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조직 조직화가 몇몇 담당자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노조운동 내부의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조직화는 절대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조직된 노동자 대부분은 정규직 혹은 대공장들이고,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이다. 이미 현실에서는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분리되고, 대공장과 중소기업체의 이해관계가 분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조직화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체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정규직 중심성이나 대공장 중심성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또한 이러한 반성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전략적 조직화를 위해 기존 노조 중심의 조직구조와 활동양태를 변화시켜 과감하게 무게중심을 옮겨내야 한다. 개별적이고 고립분산되어 진행되어온 조직사업에서 벗어나 민주노총의 전략적인 계획하에 진행해야 하는 전략조직화는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여할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 이제는 주체화를 위한 전략조직화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략조직화의 핵심은 지금처럼 공공이나 사내하청 등 대규모 비정규직이 첫 번째이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조직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고 조직화가 필요하기보다는 정치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후의 전략조직화는 분산되어 있으나 현장의 문제로 자기를 가두지 않고 지역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의제 중심으로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업종별 혹은 지역별 조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2. 민주노조 운동에서 비정규 운동의 위치와 전망

○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혁신의 주체로 위기를 극복할 투쟁 내용으로 비정규 운동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위기가 현시기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데서 일면 비롯되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운동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성화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새로운 주체로서 비정규노동자를 주목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단속에서 비정규운동 또는 비정규노조의 운동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규직 노조운동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기업별 노조주의, 경제주의, 조합주의가 주체가 새롭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운동이 민주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운동이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 낼 때, 비정규노조운동이 그러한 관점에서 계급적이고 민주적 활동 훈련이 전제될 때 민주노조 운동에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낼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비정규운동의 과제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주체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대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 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노조운동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단결을 경험하고 투쟁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주체화는 단지 비정규직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노조운동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규직 활동가들조차도 주체화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든다

○ 물론 현재 조직된 비정규직 주체들도 자기 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작고 힘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이 갖춰지지 못한 현실의 한계 때문에 자본의 폭력 탄압에 의해 깨지고 있다. 어느 정도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대규모 비정규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규직 현실을 인정하고 안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존재조건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철저히 탄압당한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자들 사이에 내부 위계를 인정하게 조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노조가 오히려 불안정노동자들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위험도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단위사업장의 시야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이다. 조직된 비정규노동조합이 자기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쟁취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식성이 필요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현시기 진행중인 이랜드-뉴코아투쟁, 비정규투쟁사업장 공동행동, 비정규여성사업장 4사 공동투쟁 등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연대성의 훈련이자 실천의 장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비정규 투쟁의

역사속에서 연대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실제 품앗이 투쟁이라는 비판도 면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품앗이 투쟁을 통해 서로의 투쟁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연대의 필요성 속에서 연대투쟁 고리를 만들고, 이것을 넘어 공동투쟁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인 조직이 필요한 시기이다.

0 얼마전 사회운동 포럼 여성워크숍에서는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라는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70%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조직해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라는 존재론적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성별화된 비정규직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심화확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운동에서부터 이러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제기를 자기 과제로 받아안고 실현하며,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내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서야 한다.

3.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노조, 그리고 지역

0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산별노조, 지역일반노조 등의 조직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투쟁과 조직화로 봤을때, 어떤 방식이 성공했다고 어떤 방식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름의 한계와 성과를 가지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산별의 방식은 비정규직과 해당 사업장 정규직과의 문제가 갈등관계가 발생했을때 이를 투쟁속에서 조직해 내지 못했고,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산별구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집중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또한 지역일반노조 또한 인력과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수공업적 조직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품앗이를 넘어서는 지역 공동투쟁의 전형을 만들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제는 산별노조와 지역일반노조 모두의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어떤 조직형식이든 지역적 실험의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0 산별과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몇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산별노조 건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자 내부의 분할에 맞서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고, 그 공동투쟁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연쇄 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0 산별노조 건설이 단지 기존 조직의 전환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사업에 대한 전망은 주로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장 중심이었다. 사내하청 조직화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것이 금속산업에서 집단성이 높고 대규모 조직화가 가능하며, 파업의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었고 그 결과 완성차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많이 건설되었다.

금속의 사례를 들면 지금도 미조직 조직화의 방향으로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모비스 등 1차부품업체들(여기는 100% 하청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품히고 있고, 중공업이나 철강에서도 대규모 사업

장의 사내하청이 1순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분할정책은 일부 핵심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투쟁에 의거하여 다른 곳의 노동 조건을 올리거나 산별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완성차에서는 일정하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부품업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부품업체로 내려갈수록 더욱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이제는 대공장의 투쟁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밑에서부터 조직화에 힘써서 더 어려운 조건의 노동자들이 힘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투쟁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조직되기 어렵고, 힘든 3차부품업체 등 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해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역적 조직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 또한 산별노조 건설이 계급적 단결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출발은 당연히 이미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사업장 내부의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결의하여 직접고용·간접고용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업 결의를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정규직 노조에 대한 시비걸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계급적 산별의 지향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포럼



학생운동전략포럼

■ 위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운동전략토론회

[총괄발제문] 학생운동, 위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자

사회운동포럼 학생운동전략기획단 지효

[토론1] 페미니즘으로 세계를 변혁하자

25대 관악인문대 학생회장 러목

[토론2] 교육투쟁

39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양경언

[토론3] 학생회/부문영역운동

37대 연세대 법대학생회장 강경인

[토론4] 지식울 매개로 학생운동의 대안을 창출하자

강원대 생활도서관 관장 조재명

[토론5] 지역운동

21대 인하대 문과대 학생회장 조남명

[총괄발제문]

■ 학생운동, 위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자!

사회운동포럼 학생운동전략기획단

1. 학생운동 위기의 원인과 위기극복 편향들

1-1. 학생운동 위기의 출발

현재 학생운동을 하고있는 활동가들 중 ‘위기’ 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학생운동의 위기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피자되고, 학생운동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이러한 위기가 언제부터였는가? 각각 판단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91년 소련사회의 붕괴와 5월 투쟁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자기 정확작업 혹은 학생운동 스스로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위기’ 가 피자되기는 하였겠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지속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제 ‘위기’ 가 아닌 ‘붕괴’ 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들기도 한다. 물론 단순한 학생운동만의 위기가 아닌 남한사회의 전체운동의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부문운동인 학생운동이 ‘위기’ 가 아닌 ‘발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운동은 단순한 전체운동의 위기로부터 파생된 위기가 아닌 스스로 위기를 형성하고 그 위기의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운동이 위기인가? 아니 왜 붕괴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1-2. 학생운동 위기의 원인

c 학생운동 위기 그 첫 번째 <내용의 부재> : 과거 91년 소련사회의 붕괴이후 남한사회운동에서는 자신들의 운동의 대안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좌파 학생운동 역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이는 단순히 사회 변혁의 단계에서 현실사회에서 대중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대안의 붕괴를 뛰어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자신들의 이행전망을 상실한 것, 즉 변혁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남한사회내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소련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하지만 좌파진영 혹은 변혁적 운동진영을 대표하며 대중들에게 보였던 이미지는 바로 소련 사회였다. 또한 그 비판의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이행전망을 구체화시켜내지 못함으로써 소련 사회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형성해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후 지속적인 자신들의 내용(대중들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이데

솔로기 혹은 변혁 이데올로기)을 밝히지 못하는 계속해서 상실해 나가게 되었다. 물론 단기적인 정세분석과 인식을 통해 끊임없이 과제들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상정, 기획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c 학생운동 위기 그 두 번째 <재생산 구조의 붕괴> : 단순히 활동가들을 재생산 해내는 구조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학생사회에서의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추동할 수 있는 구조의 붕괴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과거 학생운동, 사회에서 가장 큰 재생산의 구조는 바로 학생회와 학회였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하고 대중들을 저항주체화 시켜내며 이후 활동가들의 재생산까지 담보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자기블록의 활동가들을 재생산하는 것마저도 근근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그마저도 하지 못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원인은 그 구조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모순과 주체들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대중일 것이다. 단순히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된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c 학생운동 위기 그 세 번째 <대중 분석의 실패> : 바로 대중 이데올로기, 대중들의 의식지형을 명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한 채 과거 89년대의 운동방식과 기획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앞서 밝힌 것처럼 2007년이다. 즉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에게 과거의 방식과 기획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운동은 대중들의 의식지형조차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전체적인 동력의 감소, 혹은 무관심, 심하게는 반권이라하는 지형까지 형성하게 된 것이다. 간단한 예로 현재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수를 보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동계에 참가하는 학생보다는, 농활에 참가하는 학생보다는, 기업의 공모전, 기업에서 진행하는 국토순례, 해외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좋고 무조건 따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대중지형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것들을 더욱더 힘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3. 학생운동 위기를 대하는 잘못된 경향

c 학생운동의 위기를 체험할 뿐, 위기극복을 소홀히 하는 경향 : 학생운동의 위기가 통용 된지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긴 시간동안 위기가 회자되어 이제는 학생운동속에 위기는 **미놓고** 갈 수 없는 말처럼 우리들 사이에서 너무나 당연해져버린 용어가 되었다. 또한 학생운동의 위기를 전체운동의 위기속에 나타난 문제로 치부해버림으로서 스스로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전체운동의 혁신이 학생운동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체성을 상실한 경향이 쉽게 발견된다.

c 위기의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경향 :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가? 그것을 통해 현재 운동

이 위기인지, 단위의 위기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왜 대중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없이 단순히 그들이 오고 안오고의 문제로 치부해버림으로서 결과로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집회문화의 혁신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역시 현상만을 바라본 근시안적인 모습일 뿐이다.⁹¹⁾

c 대중 추수주의적 경향 : 대중동원력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다. 예로 2002년 반전집회에 수많은 학우대중들이 참가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동원력이 상실되자 그 극복방안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삭제한 채 그들이 좋아하는 방안들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의 모습이다. 물론 대중이 많으면, 집회 참가성원이 많으면 그것은 운동에게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대중들만을 끌어들이는다고 해서 운동이 성공하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c 실리주의적 경향 : 등록금 인상률 몇% 반환, 학내 복지사안의 확충을 전부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학우대중들과의 소통, 대중운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운동의 목적이 그것으로 소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등록금을 뛰어넘는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불안정노동과 같은 학생사회의 모순이 어디로부터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운동으로 상층시켜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운동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발전 없는 활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 학생운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는 시대의 모순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내지 못하고 대중의 불만을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지배세력에 대한 파괴력과 대중적 기반을 모두 잃어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학생운동의 시대 인식, 학생대중의 현 상태와 이데올로기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91) 물론 집회문화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혁신의 근본적인 방안은 아닐 것이다.

2. 오늘날 시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2-1.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는 70년대부터 시작된 구조적 위기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으며, 동시에 미 헤게모니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촉을 체계적으로 파괴시킨 미국은, 미국의 배후 경제지로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의 이윤을 상당부분 채워주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재활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파괴하였고,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 보편성까지 상실해왔다.

자본주의는 역사 속에서 기존의 축적 체계가 노정한 이윤을 저하에 대한 새로운 반작용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물질적 확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주의는 그 위기를 극복할 체계적인 상쇄요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신경계, 정보혁명, IT, BT 산업의 이윤은 대부분 산업부분이 아니라 금융부분에서 나왔으며, 그마저 대부분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2000년도를 전후하여 드러났다.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는 '금융 우위의 축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자연' 시키고 있을 뿐이며, 또한 그러한 축적구조를 '보호' 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패권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였고, 이를 보호하며 미 헤게모니의 위기를 자연 관리하는 전쟁을 동반해왔다. 현 시대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미국의 군사패권 정책과 약탈적인 금융자본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파국적인 양상인 것이다.

2-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C '금융(세계)화'로 압축되는 전 세계적 지권 과정과 세계 경제 불안정성의 증대 : 현재의 국제정세는 외환 거래, 국제자본이동, 초민족적 자본의 팽창,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제도의 새로운 역할 증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금융우위의 축적 구조의 주요한 특징은 생산부문 일반에서 다양한 소득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이전되는 '부의 이전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축적 구조를 추동해내는 주요 주체는 초민족적 법인자본과 각종 펀드라고 할 수 있다(특히, 기관투자자). 이러한 '금융화'는 전 세계적인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국의 주가 폭등으로 연결된 점인데, 비우량 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권을 각종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수출한 현 상황은 금융(세계)화 속에서 동시다발적인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합상적인 경제위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C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와 공공서비스 사유화 - 더 짧은 작위와 만연한 빈곤 : 오늘날

금융(세계)화로의 재편 과정에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는 하나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히 지칭하는 것 처럼 '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지배계급의 권력과 소득을 회복시킨 계급 투쟁의 과정이었다. 자본도피의 압력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더 많은 착취, 구조조정, 효율적 노동통제 등이 도입되어 노동자들은 해고, 만성적 실업, 비정규직화의 길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은 주식투자와 M&A 등으로 막대한 부를 가져갔던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 물, 전기 등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과정은 안정적인 자본투자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반면, 민중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충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인해 더 많은 재생산 노동을 감내하도록 요구받으며 극단적인 불안정화와 빈곤에 내몰려왔다.

C남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과 한미FTA : 그런 점에서 한미FTA 역시 적어도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금융(세계)화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정확히 '금융화' 내지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라는 방향성 하에 진행되어왔다. 즉,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금융적 이익의 추구가 가능한 형태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IMF를 경유하면서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주식시장을 자유화 함으로 인해서 기업과 은행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형태로 전환시켰고, 주식시장을 개방하여 초민족적인 자본 거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노동유연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 시행된 비정규계약법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마무리'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금융(세계)화에 적용한 재벌들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경험했지만, 초국적 자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 불안정성은 끊임없이 커져왔다. '해외투자자' 들은 경제위기를 틈타 국내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후 구조조정으로 주가치를 키워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겨 나갔다. 뿐만 아니라 농촌 붕괴, 고용불안, 빈곤의 확산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 한미 FTA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재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국내 재벌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를 개방하여 한국사회 법과 제도 전반을 금융자본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겠다는 것이다.⁹²⁾

2-3. 오늘날의 전쟁 - 금융세계화에 대한 보호와 미 해계모니의 위기에 대한 관리

C금융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중심부 국가의 공동지배 : 금융우위의 축적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다수의 배제된 지역을 양산했다. 초민족적 자본의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과 해외 직접투자의 약70%가 미국과 EU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외적으로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가 이러한 범대

9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통법은 노무현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에 있어 결정적 준거점인 만큼, 이를 단순히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가처치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통상국가로의 발전전망). 왜냐하면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적 순환의 축(hub)이 되겠다는 것은 곧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국내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가 '투자과 무역의 자유화' 그 중에서도 '투자의 자유, 투자자의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서양적 축적 공간에 합류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질서에 통합된 지역들에서도 양극화, 경제 불안정성 증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배제된 지역(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에서는 보다 극단적인 사회적 몰락이 관찰된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미국은 선별된 지역들만 관리해서는 헤체되고 있는 세계 질서 전반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특히, 911 테러는 극단적 사례) 하에,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반동적 대응을 전개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심부 국가들에게 있어 금융 우위의 신자유주의적 축적구조를 지속시키기 위한 세계 질서의 안정은 그야말로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등장한 오늘날의 전쟁은 범대서양-범태평양 '동맹' 하에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와 불안정요인들에 대한 (폭력적) 관리를 통한 금융세계화의 보호를 목표로 하게된다. UN과 다목적군 역시 이러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따름이다.

C전략적 유연성과 동아시아 평화 : 그런 점에서 06년도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평택 전쟁기 지 건설은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을 관리하고 미국의 지역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둔미군의 재편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으로는 특히 중국 경제와 군사적 팽창을 관리하고,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C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인에 대한 관리 문제 역시도 미국에게 있어서는 분명 사활적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적인 불안정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기술이 중동 지역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쟁점은 북한 체제에 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자. 그러나 남한, 일본, 중국 모두 독특한 민족주의-군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NPT 체제의 사실상의 붕괴로 인한 핵 개발 도미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아시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결코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213 합의와 BDA 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 문제, IAEA 핵사찰 문제 등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향후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관철되는 6자회담에서 평화가 담보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2-4.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정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전락 그리고 개별 국가 지배세력의 전략 : 초민족적 자본의 운동은 국가에 기초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의 통제 능력에서 상당부분 벗어나있다. 즉, 국가가 원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을 경제 내에 담아두거나 혹은 경제를 넘나드는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케인즈주의자들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별 국가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은 세계적 차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개별국가의 지배계급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띤다. 즉, 민족국가 스스로가 기업화되어 노동력을 세계의 규준들에 종속시켜 나갈으로써 금융세계화 질서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 내부는 “국경없는 세계, 담장치진 도시” 라는 표현처럼 세계 도시와 배제된 지역으로 분할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최소한도의 사회적 역할 자체가 해체되어 체계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지배 정치의 위기에서 정치 일반의 위기로 :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배세력이 형성해놓은 취약한 자유주의적 국가 제도들도 위기에 처한다. 민중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있어 주시시장의 부양, 글로벌스탠다드 등을 항상 최우선의 고려대상으로 파악하면서, 지배 분파들의 비전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유일한 대안’ 으로서 신자유주의로 수렴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더욱 허구적 이전투구에 빠져드는데, 각종 의사쟁점들, 비리문제 등이 이러한 허구적 이전투구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다. 그리고 이처럼 의회가 최소한도의 인민주권과도 완전히 멀어지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은 행정부 강화와 사법부 강화이다. 또한 인민주의 - 특히 근대 정치의 대중적 토대가 취약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더더욱 - 가 발호하게된다. 노무현의 정치스타일은 인민주의의 단적인 사례이며, 최근 들어 지자체 선거, 총선, 2007 대선에서도 토목공사적인 이미지(이명박) 내지는 사회통합적 이미지(문국현, 손학규) 등 정치 자체가 이미지화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배 정치, 그리고 지배 정치의 제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민중들의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와 환멸은 더욱 짙어지며 실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해진다.

정치의 위기와 운동의 위기 : 이러한 현상은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배정치의 위기가 정치 일반의 위기로 확산되어왔다는 것이다. 운동 주체들 역시도 초민족적인 현재의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대안적 이념, 거대담론이 취약한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금융세계화로의 편입과는 다른 해방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인 처참 이데올로기 구축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운동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집단지기주의)으로 사고되고 있으며, 문제의 집단적 해결의 가능성 보다는 실리주의적인 해결의 가능성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주의와 민주주의가 말본적으로 새롭게 사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대중의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을 사고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한 운동을 기획해야 한다.

2-5. 신자유주의와 재생산의 위기

C 충격흡수층으로서 여성 :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행되는 각종 구조조정의 결과 민중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은 '충격흡수층'으로서 구조조정의 최전선에서 희생당해왔다. 오늘날 여성들은 감소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부의 공적 지출 감소로 인한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의 재생산 노동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C 자본주의와 가족 이데올로기 :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과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들과 폭력들이 존재해왔는데, 그것의 20세기 지배적 형태는 '가족임금' 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이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은 여성을 사적영역에 남성을 공적영역으로 위계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델은 20세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협약의 토대였다. 그러나 사실상 20세기 중반 가족임금의 절정기에도 여성의 40% 가량이 임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약은 허구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약으로 인한 '가족 이데올로기' 의 강화가 노동자운동의 변혁성을 억제하고 소비자로서 재조직화(마이홈, 마이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에서의 7~8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들어서는 '가족대책위' 를 위시로 하는 투쟁이 지배적 형태가 된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C 재생산의 위기와 지배계급의 전략 : 현재의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가족임금' 이라는 협약이 붕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많은 남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거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가계 소득의 '보충' 으로 간주되는 저평가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이중착취를 감내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문제가 된 소위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의 이중착취가 더 이상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값싼 여성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가족 강화' 라는 기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3. 학생 대중의 현 상태와 이데올로기는 어떠한가?

3-1.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대학사회

C 확 바꿔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속에 대학역시 비껴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정권과 자본은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대학, 대학교육을 만들어가려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외적재편과 내적재편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외적재편은 대학의 양적 축소와 함께 대학의 수직적 계열화를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BK21을 통해 서울대를 중심으로 소위 상위권 대학들에게 재정과 학생수를 독식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지방사립대 및 전문대를 하위노동력 양성소로서 위치지워주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들의 통·폐합을 통해 양적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⁹³⁾ 이는 단순히 국립대의 통·폐합만이 아닌 사립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미끼로 조직과 정원의 감축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

93) 이미 공주대와 천안공대의 통합을 시작으로 총 12개의 국립대가 통합되었다.

이다. 이러한 외적재편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은 내적재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내적재편은 외적재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수직적 계열화와 같이 학문간의 서열화를 진행하고 있다. 흔히 인문·사회과학의 붕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철학, 사회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새롭게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듯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학문에 대해서 지속적인 퇴출과 법학, 경영학, 의·치학과 같은 인기있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영향을 주는 학문은 전문대학원의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서열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시키고 대학을 기업과 같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용 등 대학지배구조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들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자본의 요구에 맞게끔 변화하지 않는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핵심노동과 주변노동으로 분할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불안정노동 심화에 대학을 위계·서열화 시킴으로서 고착화시켜내겠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C 대학 = 지배 이데올로기 교육장 / 취업양성소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인 핵심노동과 주변노동의 분할 속에 대학의 역할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게 되었다. 대학은 손쉽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퍼트릴 수 있는 교육장이자 주변노동 / 불안정노동층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교양강좌에 철학 대신 펀드 혹은 주식투자 실무강의가 들어가고, 사회과학 대신 벤처 경영론과 같은 수업이 들어간지는 너무나 오래되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혹은 주체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수동적인 자본형 인간을 양성하는 역할,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과 이공계특성화 등을 통해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얼마 전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던 중소기업과 기술전문대학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의 실무에 바로 배치할 수 있는 노동력을 양산하겠다는 내용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3-2.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입되고 있는 학우대중

C 일그러진 방식의 분노표출 : 학우대중들이 현재 사회에 대한 모순을 모르고 있는가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모순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모순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고 일부는 머리로도 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분노하고 모순을 느끼고 있는 학우대중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혹은 실천으로 외화시켜 내고 있는가? 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분노표출 방식은 외면과 방기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집단화되거나 저항 주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거나 혹은 사회에 대한 싸움보다는 사회에 순응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학우대중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최선의 방식은 귀차니즘, 폐인과 같은 방식이다.

C 적극적인 편입을 위한 노력 : 대다수의 학우대중들은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어떻게든 체제에 편입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을 기업과 같이 경쟁함으로써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용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토익과 토플,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 학생회장과 같은 활동들을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는 이력서의 한 칸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정규직 혹은 전문직으로의 취업)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다수의 학우대중은 고시준비(공무원, 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학우대중들의 현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학우대중들에게도 관철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c 학생사회 소비문화의 만연 : 현재 학생사회는 소비문화에 의해 잠식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문화에 비판적이고, 상호 소통하고 연대를 지향하며,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문화는 점차 사라져왔던 것이다. 대신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소비문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해소해나가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 내외에 커피전문점, 펠스트푸드점, 피자방, 플레이스테이션방 등의 시설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대학 내의 공간들도 광장과 토론공간은 줄어들고 반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만 늘어났다.

c 성적 분할의 쟁점 : ‘00고시 여성합격률 증가’, ‘00고시 여성 최초 수석’, ‘최초 여성 00탄생’ 과 같은 문구를 심심치 않게 대학 내에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나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된장녀 논란’ 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남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축소, 꺾임으로 인식되면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이는 ‘여성시대, 더 이상 여성에게 차별은 없다’ 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성적분할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된장녀 논란’ 은 스타벅스의 비싼 커피값 논쟁부터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주장하는 남성들과 ‘남성들의 술값이 더 비싼데 왜 여성들에게 뭐라고 하나’ 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여성들 간의 갈등까지 보여주었다. 이 논쟁은 물론 여성과 남성 모두 이미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깊이 길들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소비문화 내에서도 ‘사치’, ‘타락’ 등의 코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 학생운동, 위기를 넘어 대안으로!

4-1. 학생운동의 위상과 과제 의 재확인

본격적으로 ‘대안’ 을 논하기에 앞서서 잠시 학생운동의 위상과 과제에 대해 재확인하도록 하자. 이미 앞선 분석 방식이 학생운동의 위상과 과제추출의 방식을 특정하게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자기과제와 부문운동으로서의 자기과제를 동시에 가진다. 예컨대, 과거 민주/반민주 전선에서 학생운동은 전체 운동 속에서 반독재 투쟁을 자본주의적 착취를 지양하는 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해 매진하는 한편, 그러한 한국사회의 모순이 학생사회에서 투영되어 나타난 학도호국단 등의 억압적 체계에 맞

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정권과 대항당국으로부터) 학생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즉, 우리가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전체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또한 현 사회의 모순이 외곽 굴절되어 투영되는 학생사회에 대한 분석 속에서 전체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4-2.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학생운동으로!

○앞서 확인했듯, 오늘날 세계는 금융화를 그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 병을 앓고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적어도 10년 이상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겪으면서 황폐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IMF 이후 전체 운동 내에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 실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나아가면 커다란 이견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06-07년 한미FTA 저지 투쟁 과정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대한 여전히 존재하는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생운동은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핵심 내용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체운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전 세계 노동자의 분할 지배에 맞서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족적 경계와 인종적 분할에서는 국제주의, 성적 위계와 분할의 차원에서는 페미니즘이 투쟁의 방향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세계)화를 비판하는 운동이 이전과는 전혀 어떤 새로운 의제나 이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배세력의 한국사회 재편방향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동을 혁신하는 것이며, 지배세력이 파괴시키는 연대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구체적인 (중장기적) 투쟁의 과제로는 세계화를 추동해내는 각종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반대,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빈곤 심화에 대한 반대, 전쟁과 핵확산에 대한 반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이종착취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기획’에 관한 토론, ‘기간 교육 투쟁에 대한 평가 및 교육투쟁의 목표와 방향 수립’ 두 가지에 관해서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의 살펴보도록 하자.

○기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기획 : (1)00년부터의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은 분명 반성폭력 운동으로 상징되어왔다. 반성폭력 운동은 다양한 일상적 관계에서 은폐되어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또한 그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2)또한 ‘여성리더 양성’과 같은 대학 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현안이 급격

히 증가하면서 이제 ‘여성노동권 쟁취’ 라는 구호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노동권의 구체적 실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상호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전가되는 현실, 여성의 1차적 위치는 가정이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0기간 교육 투쟁에 대한 평가 및 교육투쟁의 목표와 방향 수립 : (1)오늘날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상대평가제와 같은 학사관리제도의 재편, 산학협력의 강화로 상징되는 대학의 기업화,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문제, 국립대 법인화, 대학통폐합, 학부 대학-전문대학원으로의 재편, 대학교육 커리큘럼의 변화가 가지는 문제점, 사립학교법, 임시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중 어떤 지점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점인지를 밝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오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교육투쟁은 여전히 등록금 투쟁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의 교육투쟁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2)다음으로, 교육투쟁을 다양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어떻게 결합시켜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청년실업, 대학구조조정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시킨다거나, 등록금 인상을 FTA와 연관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시도들이 존재해왔다. (3)마지막으로, 현재의 학생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육투쟁을 사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토론 역시 필요하다.

4-3. 연대의 원리를 확산하는 학생운동으로!

신자유주의는 대중을 끊임없이 분할하며, 선택된 소수를 향한 상호 적대적인 ‘경쟁’ 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위한 - 즉, 배제되지 않기 위한 자기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대학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내부의 분할과 경쟁,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분할선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원리가 관철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은 서로 다른 동일성들 간의 보편적 해방을 기획해나감에 있어 ‘연대’ 를 핵심적인 원리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4-4. 비판적 지식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학생운동으로!

0보편적 해방을 기획해내는 과정에서 지식은 현재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매개이며, 문화는 보다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

0지금까지 학생운동에서 지식은 학회, 생활자치도서관 등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대중운동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주체들이 창출해왔던 유의미한 담론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토론-자기교육의 문화 역시 송두리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지식을 매개로 학우대중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주요한 경로가 위기에 처함으로 인해 대중 스스로의 정치역량이 축소되고 있다. 한

편, '지식기반경제' 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대학구조조정 속에서 대학에서의 지식 생산-유통은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불안정을 상급교육기관 진학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과잉교육' 현상과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학부 교육 질이 저하되는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상위의 교육기관으로 이전) '과소교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극소수에게만 전문적 지식을 독점시키는 동시에, 지식의 내용 자체를 철저히 자본축적에 종속시키는 한편, 낮은 수준의 똑같은 지식을 배우기 위한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식의 문제는 지식에 대한 권리를 대중에게 되돌림으로써 대중의 정치 역량을 증대시키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권 교육에의 개입, 학회화술/생자도 운동 등 기존의 운동 구조 복원 및 혁신, 그리고 나아가 기존의 경로 외의 다양한 운동들(월례포럼, 교육강좌 등)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운동을 기획함에 있어서 지역운동과의 연계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운동의 경우 노래패, 문선패, 품물패, 연극패 등 여러 문화예술단위들이 다양한 문화적 개입의 시도를 통해서 학생사회의 비판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현재적으로는 그 대중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당국과 자본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대중의 역량을 강화해낼 수 있었던 공간들(예컨대, 광장)을 하나 둘 없애는 대신, 학우대중들에게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방식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다시금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생대중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시급히 요구된다.

4-5. 기존 학생회 운동의 혁신과 부문영역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학생운동으로!

대중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저함 이데올로기가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복지담당 탈 정치화된 조직 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정지향의 운동이 점유하는 공간으로서의 학생회는 현실적으로(또한 경향적으로) 집행의 독점과 의제의 독점(하여 대부분의 경우 공간과 예산의 독점)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운동일반 수준의 의제들을 학생회의 몇몇 집행부가 모두 전담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 운동일반의 퇴행과 다양한 의제 발굴의 불가능성이 악순환됨은 익히 보아온 일이다. 관건은 학생회를 광의의 학생회로 확장하는 기획이다. 그 기획은 다양한 대중운동과의 접점을 만들고, 다양한 대중운동을 담지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일반을 담지 하는 학생회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인들은 지배체제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도 지배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학생회는 이를 극복 해내가는 해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에게 일차적으로 국한되는 의제는 무엇보다도 대학 안의 의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학생회는 대학 안의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펼쳐 내가야 한다. 물론 이를 어떻게 담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 -한대련 식 등록금 투쟁 한계성 단순히 등록금 %의 문제로 소급되는 경향)

영역운동 교육/환경/페미니즘/인권 등등의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다양한 주체화 경로가 생성되고 다양한 의제들 속에서 우리의 실천 양태들이 나올 수 있다. 저하이데올로기의 생성과 구축을 담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영역운동이 더욱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운동을 단순히 각 부분별 운동적 분업의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페미니즘이 단순히 페미니즘 영역단위에 문제의식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들의 운동들이 서로 고립 분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생회 체계 밖으로 영역운동들이 유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영역운동을 학생회가 포섭하는 학생회중심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가 다양한 대중운동을 받아 왔고 영역 운동들이 운동일반을 담지 하는 학생회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역운동과 학생회는 서로 분리 사고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대중운동들이 넘나드는 환류의 장으로써 광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장으로써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4-6.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 속에서 호흡하며, 지역을 거점으로 전체 운동과 함께 대안전략을 모색하는 학생운동으로!

과거 노화연대라는 모습으로 노동자-학생의 연대투쟁을 지역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노화연대는 학생대오의 수적지원을 토대로 하는 일상적·전투적 연대활동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는 있었다. 현재 학생운동의 조건에서는 과거와 같은 의미의 노화연대를 구현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 현재의 노화연대는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소통구조의 확보와 결의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 긴밀한 소통구조의 확보는 현장에서 진행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학생운동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노동자 계층이 계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운동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단순히 생산의 영역, 공장안의 영역에만 국한된 계급성 확보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개별 공장의 사안으로, 전국적인 정세를 지역에서 벌여내는 것만으로는 지역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을 재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내야 할 것이다.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 지역에서 어두운 곳으로 변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이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체계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시장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극적인 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중은 자본주의적인 소비문화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상업적인 문화, 공동체적 문화들을 제공하고 대중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함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등록금, 청년실업 등)을 지역사회에 던져야 한다. 학내선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학내에 그치게 되면서 학생운동은 고립되어왔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생사회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선전해내고 지역의 진보적 단위들을 학내로 끌어당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동의 위기 속에서 사업의 연속성 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회 운동이 꾸준한 역량을 투여해야하는 지역운동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의 활동방식과 싸이클을 개조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리를 해본다면 학생운동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학생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제기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운동 혁신 전략으로서 '반신자유주의 지역운동'

 : 상층 힘모으기 식 운동에 대한 전체 운동의 혁신 방향

○지역 대중에 대한 노동조합, 학생회, 당 지역위, 사회단체 등의 공동의 개입

○공동의 운동 전략 토론 :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변혁의 전망을 열어간다는 사회운동포럼의 취지가 밀상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밀상적 거점이 바로 지역이다.

○학생운동의 지역-지구 차원의 소통과 공동투쟁

[토론]

■ 페미니즘으로 세계를 변혁하자!

25대 관악인문대 학생회장 러목

0/들어가며

들어쳐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여러 흐름들이 존재했는데, 한편으로 국가를 ‘압박’ 함으로써 여성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권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의 주류적인 흐름이 존재한다.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주류 여성운동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주목하고 주력한 결과, 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32%에 이르렀고(2003년), 2004년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최초로 두 자리 수를 넘겨 13%를 차지했고, 여성총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저출산 고령화 위기담론을 공유하며 여성의 ‘일과 가사의 양립’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07년 초, 아동대비 보육시설 30% 확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여성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한 편으로 여성의 깨끗하고 참신하며 포용적인 이미지가 정치 개혁의 담론과 맞물려 신 자유주의로 비롯된 정치의 위기와 대중의 불신을 극복하기 ‘활용’되기도 하며, 공적 진출의 가시적 성과로 여성의 현실을 은폐(여성상위시대?)하는 효과를 낳곤 한다. 다른 한 편 보육시설의 확충은 비정규직의 전면화계획과 병행되면서 보육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기반으로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을 지속하는 방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 편으로 1990년대를 지나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모토로 집약되는 영 페미니스트 운동⁹⁴⁾은 일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여성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 내 여성운동이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 기존의 운동에서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정치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⁹⁵⁾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에 스스로를 가동으로써 몇몇 주체들의 개인적 의식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권을 확장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4) 처음부터 명페미니스트 그룹이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중·후반, 여성운동단위를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자들과 좌파 학생운동간의 공동실천이 존재했으나 학생운동 내부에 끊임없이 발생했던 성폭력과 여성배제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여성운동은 학생운동과 결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95) 이에 대해서는 토론 : 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전망

그렇다면 ‘여성권을 확장하는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일단 현 시기 여성이 놓인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보자. 역사적 가족 형태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한편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착취하며, 다른 한 편으로 신자유주의의 착취구조와 결합하여 여성들을 재생산 노동/불안정노동의 이중착취로 몰아가고 있다. 성적분업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며,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다. ‘위기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운동전략대토론회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권을 확장하는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현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의 빈곤화 / 빈곤의 여성화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전체 빈곤 인구는 300여 만명(최저생계비 기준)~1,000여 만명(최저생계비 120% 기준) 수준으로 증가했고,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여성빈곤의 확대는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수급 중 여성의 비율은 1991년(당시는 생활보호제도) 45.4%에서 IMF 금융위기 이후 55~57%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빈곤해질 가능성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추산해 보았을 때, 최빈곤층 13억 인구의 70%가 여성이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2/3이 여자 아이들, 지구상 난민의 75-80 가량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을 본다면, 세계화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은 ‘빈곤화’ 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여성의 고용과 노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빈곤의 여성화’ 라는 맥락과 연계지어 사고해야 하는데, 여성 고용의 확대라는 것은 곧 저임금 서비스 부문과 비공식 부문으로의 고용 증대를 의미한다. 곧 일을 해도 가난한(빈곤) 일자리에서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노동 시장에서 비용 절감과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의 유연화’ 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순종적이며, 노조를 조직할 경향이 더 낮고, 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상으로 파악되고 또 보다 쉽게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내쫓을 수 있는 여성들을 선호한다.

2.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한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이 외의 장기화되고 있는 각 비정규

96) 지난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을 보면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간병인, 조리사, 공중보건 명망사, 대중유흥업소 무용수 등이 허용된 파견업종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소위 ‘여성직종’ 이 허당한다는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파견직으로 허용된 26개의 직종이 외 하필 여성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렇게 젠더화 된 신자유주의적 착취 구조의 일면을 보여준다. 2006년 8-9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신규채용내용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주어진 비정규직 일자리는 1,236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일자리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 여성의 구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심화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휴가, 그리고 양육 시설은 배부른 소리나 다름없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만든다 한들 이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3.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 : 일과 가사의 양립?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정부 예산 삭감 등과 함께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수반하는데 가족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은폐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구조 조정의 후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사회적 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며,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일차적 책임 역시 가족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출산률, 이혼 등과 같은 사회적 필요가 있는 관심사가 아니고서는 가족은 언제나 사적영역에 머무르기를 강요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성은 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이한다. 사회복지의 축소와 주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곧 공공 서비스 요금과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효과로 남성 가장의 수입에 살림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여성들은 뛰어오르는 의료비, 교육비,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에서는 재생산 노동을 일임하고, 다른 한 편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역할과 피로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가부장제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가족정책은 철저히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경제발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무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 을 내놓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혼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 육아지원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만든다 한들 이들에겐 그림의 떡⁹⁷⁾에 불과하며, 여성의 이중부담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성적 착취 - 성산업,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의 팽창

이미 '여성' 은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상품이 되고 있다. 자금회전이 빨라 손쉽게 단기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을 선호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에 있어 서비스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익창출을 위해 가부장제에 기생하고 있는 자본의 속성은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성산업을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위치 짓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성매매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의 성산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97) 훔쳐버-뉴코아 캐서 노동자들은 몇 시간동안 화장실도 못가지 많았는개!

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성매매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성매매의 지도는 초국적 자본이 이동하는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고, 성매매 산업에서의 수입은 국제 마약 또는 무기 산업에서의 수입과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는 성산업이 초국적인 규모로 번창하는 것과 비례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폭력은 세계적인 규모로 심화확산되고 있다.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는 광고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을 정도로 남한사회에서도 제3세계 국가에서 신부를 ‘사오느’ 일이 하나의 규모 있는 사업이 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여성권을 확장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에 맞선 여성권 쟁취투쟁을 벌이자.

신자유주의는 재생산을 사회에서 책임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재구성하는 토대의 마련은 사고하지 않은 채,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유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적으로 착취받고 있다. 이제 여성을 희생시켜 재생산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띠어내고, 그녀들의 손에 재생산의 권리를 되돌리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이윤축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동안 가족이 독점해왔던 혈연에 기초한 배타적인 친밀성과 감춰진 가족 내 억압과 폭력들을 공동체적으로 전파시켜내며, 여남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젠더이데올로기를 활용하며 여성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여성권을 확장하는 싸움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가족형태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장하자.

여성권을 확장하는 투쟁에 있어 신자유주의와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장소로의 ‘가족’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은 성별 분업, 가족 임금, 숙련과 미숙련 등의 남성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과 가족 내 성별 분업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의 모델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형태 하의 여성 노동은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는 무임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육아연료 수장급수식품 가공식사 준비집안 청소병자 간호가계 관리 등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들은 대개 여성이 수행하는데, 이러한 여성의 ‘필수적인 재생산 노동’들을 무한히 탄력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족과 재생산을 둘러싼 공사 분할, 성별분업,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활용하며 여성을 가족 내로 유예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맞선 싸움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3. 여성 노동권에 착목하는 운동을 벌이자!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여성의 노동은 시간제, 임시직, 파

전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빈곤화와 직결된다. 빈곤의 여성화와 성주류화 전략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착취억압에 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착취의 정점에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KTX·보육노조이랜드 등 여성 노동자 투쟁의 확장을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게다가 비정규 약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고 여성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현재 이러한 투쟁은 매우 절실하다. 여성 노동자 투쟁의 연대에서 노동자이면서 여성이기에 이중적 착취에 놓여있다는 것을 발언하고, 그 원인 자체를 타격하는 저항으로 이끌어내는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스스로의 권리’, 즉 ‘여성권’은 인간의 권리를 전제하면서 그것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또 다른 독자적인 권리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 투쟁을 ‘여성’ 사건⁹⁸⁾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인정하되 이 차이를 억압하거나 획일화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우리 운동의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인식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의 생애 주기와 생활 조건을 고려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들도 필요할 것이다.⁹⁹⁾

4. 여성의 성적착취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3차 산업이 급증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 이중에서도 유흥업, 접객업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팽창해 왔다. 이는 여성의 빈곤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많은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여성신체/이미지의 상품화에 전격으로 의존하는 서비스 산업은 팽창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위기에 따른 출산률 저하의 대응책으로 국가는 출산률 저하의 책임을 여성들의 ‘출산기피’로 돌리며 출산률 강제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들을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기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서, 이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5.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여성운동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그 유지를 위해 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폭력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폭력을 낳는다. 특히나 전시 강간과 같은 극단적 폭력은 여성의 보편적 해방과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는 인간의 보편적인 해방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의 요구임과 동시에, 여성이 스스로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주체화되는 과정을 가로막는 폭력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서 여성의 해방을 위한 요구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억압에 저항하며 여성들로부터, 새로운 세계, 대안세계화의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반성폭력 운동을 넘어, 성차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생산하는 운동으로

반성폭력 운동이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가시적으로 사건화하고 법, 규범을 만들어가

98) KTX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정규직 투쟁의 꽃’으로 표현하는 예가 보여주듯이.

99) 연대단위들이 여성노동자의 선도적인 투쟁을 연약한 여성의 ‘가상한’ 투쟁 정도로 인식한다거나, 투쟁에 연대함을 ‘보로’ 해 주는 것 정도로 사고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는 과정은 일정한 성과일 수 있으나 지금의 반성폭력 운동은 반성폭력 화칙이나 규범의 한계에 갇혀 여러 한계와 난점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¹⁰⁰⁾ 우리는 이러한 한계과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시민권을 전횡해내기 위한 사고와 “평등 속에서의 차이의 권리”로부터 고민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성적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왜냐하면 성과 관련하여 주체는 결코 동일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란 법 조문화된 중성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변혁해야 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등 속에서의 차이의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은 법, 규범에 갇히지 않는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기획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사회의 제 관계들을 변혁하고 ‘성차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형성해내는 것을 지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나아가며

학생운동의 위기를 넘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여성운동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단지 부분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초과하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전체 사회변혁과 분리시켜 사고하게 되는 순간, 신자유주의에 포섭되거나 동요하고 있는 주류 여성운동의 오늘날의 현실, ‘가족임금’과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수용하며 지배계급과의 ‘타협’을 이루어 변혁성을 상실하였던 노동운동의 역사는 결코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빈곤과 폭력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이중 착취에 반대하고 평등 속에서의 차이의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적 착취와 가부장제의 억압과 폭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나가자. 그 출발점은 현재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발본학해내는 연대투쟁과 학생사회를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생산해내는 실천일 것이다.

100) 이에 대해서는 보른 - 반성폭력운동의 평가와 전망 -에서 다룸

[보론] 반성폭력 운동 평가

1/대학 내 반성폭력운동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시작

90년대 초반 여성단체에 의해 성폭력 문제를 독자적인 사안으로 이슈화하고 법 제정(1993)을 이룬 후, 학생운동의 다원화와 성정치화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90년대 중후반 대학 사회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¹⁰¹⁾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반성폭력 운동주체들은 성폭력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였으며, 90년대 초반 여성단체에 의해 한시적 전략으로 채택된 피해자중심주의가 ‘철저하게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이자 방식’으로 전면화된다.

‘실명공개사과자보’를 통한 사건 해결, 그리고 반성폭력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첫걸음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공개사과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중립의 가면을 쓰고 사실상 남성만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하던 사회에서 늘 타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 스스로가 기존의 법, 도덕, 윤리체계 속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던, 성별간의 위계에 기반한 폭력을 ‘성폭력’이라 명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실명공개사과자보는 대학 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전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성폭력이 문제이며 자신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폭력적인지, 가해자의 포지션에 있지는 않은지를 이야기하고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 피해자에게 친화력을 갖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내의 토론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지녔다.

실명공개사과자보가 가져온 학내의 충격과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이후 학내 반성폭력운동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반성폭력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학칙제정운동의 경우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학생들이 모두 해결할 수단이나 강제력이 없고, 교수의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학칙이나 자치 규약은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해결의 과정을 명문화하였으며, 규약에 따라 법 체계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해자 구도에 따른 사건 인과 관계 구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제시되었다. 학칙제정이 보다 제도적이고 본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이었다면, 자치규약의 경우 학생 공동체 내의 책임을 인식하며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은 가장 현실적이며 대중적인 운동이라는 이유로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과제로 자리 잡아 갔다.

역풍 : 무너진 합의, 무너진 전선

그러나 언뜻 대중들 사이에 ‘동의되는 듯’ 보였던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들은 2001년 00씨의 사건을 필두로 한 몇 개의 역풍(backlash)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렸다. 2001년 가을, 예전에 자신의 성폭력 가해에 대

101) 사회적으로는 우조교 사건이라 알려져 있지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용어인 ‘신교수 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

해 실명공개사과를 했던 00씨는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자보를 냈으며 동시에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이후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절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급기야 ‘성폭력 조작?’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비슷한 시기에 공개되었던 다른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역고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대학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난 가해자들의 ‘역풍’이었다.

애초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접근방향은 ‘공정한 법적 처벌’ 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바꾸어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 에 기반한 것이었다. 단지 성폭력 사건이 ‘개인 대 개인’ 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일상화 되고 정상화되어 문제제기조차 되지 못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오래된 구조화된 폭력임을 말하고 공동체 내에서 함께 풀어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반성폭력 운동을 열어가야 할 시기에, 이러한 믿음을 배반한 이데올로기적/법적 역풍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반성폭력 운동주체들은 너무나 많은 힘을 써야만 했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후 반성폭력 운동은 대중 단위에서의 영향력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축소/퇴보하게 되었다.

2/반성폭력운동의 쟁점과 전망

처벌¹⁰²⁾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반성폭력운동의 주된 흐름으로 제기되었던 학칙제정운동(또는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제정이 이루어지고부터 여러 가지 난점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규범의 한계에 간혀 자칫 운동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약은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에게 가할 ‘처벌’ 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성폭력운동이 다수 대중의 변화를 끌어내어 공동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을 때, ‘처벌’ 이라는 방식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남성중심적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 없이는 성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처벌’ 은 논의를 봉쇄하거나 여성에게 ‘피해 목록’ 을 끊임없이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곤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부담스러워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선택지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언어형 성폭력이나 환경형 성폭력일 경우,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등에 처벌을 기반으로 한 사건의 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동’ 은 다수 대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가져왔던 긍정적 의미는 계속 전취해가되, ‘관계의 전착’ 와 새로운 성별 윤리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사회적 통제와 개인적 자유의 한계를 둘러싸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대치하는 국면이 펼쳐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는 성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의 신체와 성적인 삶의

102) 반성폭력 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응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오히려 비난받기 십상인 우리 사회에서 피희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성폭력’ 이라 명명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당당해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러한 반성폭력운동에서의 처벌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어가되, 새롭게 반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란 주체성과 양립하지 못한다. 보수주의는 역사적으로 실정화된 특정한 성도덕을 규범으로 절대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성적 자유와 자율성의 자리를 남겨놓지 않으며, 자유주의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절대화함으로써 상호적인 관계의 규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였던 ‘성적자기결정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자유주의의 틀로써 사고하는 사람들은 남성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중립적인 ‘성(sex)’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gender/sexuality구도 속에서 약자인 성의 피해임지 않을 권리 및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의 의사 결정권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 ‘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권력 구도 속에 피해자로 위치 지워지는 성적 권력의 약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 하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로 읽혀야 한다.

한편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개인’ - ‘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이리가레는 <세계인권선언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17조로 되돌아가 보자.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강간은 무엇이나? 그리고 지하철 광고에 나의 벗어벗은 육체를 착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권리’에 대해 쓰여 있긴 하지만 여성의 일상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상징적·표상적 이미지 또한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며, 근대 정치 일반이 여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이다.¹⁰³⁾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행위 등의 포괄적인 일상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고려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젠더 관계를 관통하는 사회적 권력관계, 가부장제적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며 중성화된 ‘개인’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종별적인 성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양성간의 민주적 관계의 전망과 공동체의 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화의 함경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남성의 인식과 언어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실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 있고, 결국 발언력이 큰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쉽다. 그러므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감’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언어’를 확보함으로써 성폭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던 것

103) 우리사회에서 ‘부부장간’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육체적 외상보다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위축감,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관점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경험과 언어를 ‘보편’으로 간주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경험과 언어는 ‘보편이 아닌 것’이 되며 언제나 ‘특수한 것’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 되며, 사회는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일반되지도 못한) 경험과 언어를’ 객관 ‘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이 ‘객관’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객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식 (가해자 인권론)으로 이어지며, 다른 한편 남성의 ‘보편’에 맞추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건으로서 문제제기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화의 함정’의 출발점이다.

한편 ‘객관성’에 대한 압박은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의 맥락이 천차만별일 수 있음에도 ‘여성’ 범주를 집단화하여(젠더) ‘여성의 보편적 억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만든다. 이는 차이가 있는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하거나(‘왜 너는 [같은] 여성이면서 내 감정을 이해 못하는가?’) 불행을 경쟁하면서 서로를 무력하게 만들어 권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힘들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너의 경험은 객관적이냐, 너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말하라’ 등과 같은 질문에서 여성의 경험을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객관성’의 틀에 끼워 맞추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질문들 안에 있는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누구의 객관성인지를 반문하고 그 객관성이라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립적인 ‘성(sex)’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현한다는 것이 gender/sexuality구도 속에서 약자인 성의 피해임지 않을 권리 및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실질적 권력 구도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작업은 곧 사회구조와의 투쟁을 전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피해자 중심주의’ 역시 사회구조적인 맥락 하에서 사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구조와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 즉,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질문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고해야 할 것이다.

3/반성폭력운동의 전화

새로운 관계맺음의 양식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관계맺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이 개입하고, 근본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들이 서로 관계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성/남성이 서로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반성폭력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성들간의 새로운 관계방식을 확립하는 것, 즉 ‘관계의 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전화를 어떤 방식의 운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법이나 학칙 등의 제도적 차원보다는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개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대중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맺음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맺음, 공존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윤리’이기 때문이다.

타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윤리’인데, 지금의 윤리 또한 법, 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이다. 기존의 윤리 체계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폭력’으로 사고되지 못하므로, 관계맺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성폭력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맺음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또한 여타의 규율이나 제도에 앞서 ‘관계’의 발생에서부터 그 양식을 결정짓는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의 남성중심성은 다른 모든 남성중심적 구조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들 사이의 관계맺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윤리를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윤리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또한 그만큼 폭넓은 부분에 작용하는 ‘윤리’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맺음에 다양하게 개입해야 하므로 대중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다. 주변의 관계맺음 양식을 새로이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대안적인 관계맺음의 양식을 개발해 가는 것이 성별 차이에 기반한 윤리를 만들어가는 길일 것이다. 윤리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며 관계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관계맺음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공존의 토대가 될 윤리는 새로운 공존의 관계맺음의 시도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 교육투쟁

39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양정연

0. 글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생운동(이하 학운)에 대한 논쟁 및 위기대처방안에 대한 좌파학운진영의 논의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21세기 들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한 학생운동의 붕괴라 칭할만한 위기는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학우 대중들의 의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바로 뉴라이트학생세력의 출현과 그들의 학생회 선거개입으로 기존의 학생회 진영을 ‘운동권’이라 규정지며 집단화 시키고, 대중들로부터 분리책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전반의 위기 속에서 전체 학운 진영의 연대체 내지 연합체가 과거만큼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흔히 메이저쟁이라 일컬어지며 학운의 주류를 형성했던 단위들이 하나둘씩 뉴라이트에게 점령당해 가면서 학생운동은 그 활동력과 기반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운의 재개를 위한 논쟁이 시작되었음은 매우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논의를 위한 논의가 아닌 그로 인한 실천 또한 공동으로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 현 시기 학생운동의 위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현시기 학운의 위기는 사실, 전체운동의 퇴조기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방이후 80년대까지 남한의 민중운동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면, 90년대 이후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그 방향성을 상실하며 한번의 좌절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소위 ‘민중화’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의 운동은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악선전으로 운동의 위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특히 98년 금융위기 이후 ‘국익’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노동운동에 꽃피기 시작한 칼날들은 정권의 교묘한 선전공작으로 인해 정규직 노조를 ‘노동귀족’으로 몰아붙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를 분리시키며, 급기야 ‘사회연대기금’,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이 속에서 변혁운동은 국민과 함께 하는 당운동으로, 그리고 국민운동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체운동의 퇴조 속에서 학생운동 역시도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사회 안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힐 차례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투자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정권은 선두에 서서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98년 정리해고법을 시작으로 현재의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과

지,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노동자 민중을 더욱 거센 착취의 구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반 사회에 걸친 이같은 구조조정 바람에 대학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국주의 자본은 일반 산업을 뛰어넘어 교육, 의료, 공공부문까지 그 시장을 확대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기에 서둘러 산화협동, 대학구조조정, 등록금 인상, 대학내 경쟁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공간이 아닌 철저한 ‘가능한 양성소’ 가 된 것이다. 높아진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의 입학울 승인하지 않는다. 현재 소위 상위권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는 통계는 계급재생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속 빈부격차의 심화는 대학안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학한 대학인들은 더 이상 ‘남’의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대학졸업장은 더 이상 취업에 있어 특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철저한 입시전쟁 속에서 이미 경쟁이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신의 몸값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한 생존경쟁의 사각지대에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결코 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질 수 없기에 교육시장개방과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로, 취업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현재의 학우 대중들은 이를 사회 전반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소급시키며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경쟁의 대열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변화는 학생운동의 결정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현재 학생운동에서 학생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지켜갈 것인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학운 내부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과거 학생회는 대중공간으로서 대중들과 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며 학생운동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뉴라이트 학생회의 건설, 운동하는 학생회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 상실의 모습은 학생회를 통한 학생운동이 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우 대중들은 더 이상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의 고민과 실제적인 움직임에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에서 바라본 정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학생회의 활동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학생회 활동을 돌아보기 전에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짚어보기로 하자. 학생회의 유의미성은 바로 학우 대중들의 단 하나인 조합조직(자동가입제로서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이자, 대중적 조직임에 있다. 대중적 조직이란 단순히 형식적 민주주의로 뭉친 대표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 대중들 스스로 최소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조직임을 말한다. 이런 학생회의 대중적 특성은 학생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운동이란 소수가 아닌 다수의 대중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학생회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변혁적 관점을 선전선동하고 직접적 대중행동을 조직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동아리나 학회는 소수의 열성적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대중들의 실천행동을 끌어내는 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생회를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물론 대중조직 자체는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변혁적 지함을 끌어내기 힘든 한계를 지니기도 하며, 이를 위한 정치조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 시기 학생회 활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대중조직을 버리고 동아리, 학회 또는 정치조직을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좌편향, 또는 변혁적 운동의 지함을 상실한 채 지극히 학우 대중들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우편향 역시도 위험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는 운동에 있어 그

어느 것도 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들이다.

현시기 학생회의 첫 번째 오류는 학운세력이 학우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학생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내용의 선전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학우대중과의 괴리를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다. 학우 대중들은 학생회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의 관심을 배제한 채 정치적 이야기 ‘만’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중들의 비판은 대중의 탈정치화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실제 이화의 경우, 2004, 2006, 2007년 총학생회는 선거 시기 민주연대 활동을 표방하고 나왔음에도 학우 대중들은 표를 던져주었다. 2005년 ‘운동권’ 총학을 비판하는 진영이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으나 오히려 2006년, 약 1000표라는 많은 표차로 학우 대중들은 다시 ‘투쟁하는 총학생회’에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현재 그 원인은 바로 ‘준비된 교육투쟁과 등록금 동결’을 주요 실천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상 초유의 등록금 인상과 법인화를 앞두고 등록금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서울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고 있다. 운동의 메카로 여겨졌던 메이저 캠프의 총학생회가 줄줄이 뉴라이트에게 장악되고 있는 올해, 만약 학우들의 선택은 달랐다. 우리는 그 이유가 학우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학우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학운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생운동은 다시 학우들의 강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다시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투쟁이 대중들이 실리주의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뒤에서 밝히기로 한다.)

두 번째 오류는 학생회의 기본 운영원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민주적인 운영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학생회 간부와 집행부들은 학생회의 위상에 대한 고민없이 자신의 경력쌓기의 하나로 학생회 간부를 자원하는 학우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 때 학생회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복지사안을 해결하고 실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학우 대중들의 소속감은 사라지고 학생회 간부와 학우 대중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게 되며, 대중들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더욱 사라지고 학생회에 대한 대중들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회와 대중들의 괴리가 커질수록 학생회는 더욱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학생회와 학우 대중들의 긴밀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학생운동은 대중적 운동을 만들어갈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의 학우대중들은 자본주의의 소비적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개인출세주의를 위해 공동체적 문화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학우대중들의 삶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나타나는 그 지점이다. 그것은 바로 높은 등록금, 취업난과 청년실업이다.

3. 학우대중에 기반한 투쟁으로 학생자치권 탄압에 맞서자.

2006년에는 고려대 학생 7인에게 내려진 출교라는 징계로 대표되는 학생자치 탄압의 강풍이 몰아쳤다. 이화여대에서 신설된 학생징계규정과 징계위협 시도들, 한국외대에서 학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유인물

배포로 인한 무기정화,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재단비리를 둘러싼 갈등과 자치 탄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징계라는 칼은 자치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휘둘러지고 있다. 소수운동권의 씨를 팔리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근래의 이러한 자치탄압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더욱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학생자치권 탄압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들이 다수 학우 대중들과 괴리된 채 학생회 간부들이나 징계 당사자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우 대중들 또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생자치 탄압과 최근 대학에서의 뉴라이트 등장은 결코 우연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 학생회를 통해 학우대중의 사상적 흐름을 시장논리의 입맛에 맞게, 사회 순응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은 매해 그 세력의 범위를 키워가고 있다. 학생회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내에서 학생회의 위상은 중요하며 학내의 분위기 형성, 쟁점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기구이다. 그러하기에 뉴라이트세력은 운동권에 대한 반대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와의 후원을 등에 업고 학생회 장악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운동, 등록금 등 학내문제에 대한 타협적 태도, 광장 집회 금지 공약 등 학내 면화분위기 조성을 빙자한 자치권 말살, 기업의 후원이나 시장논리에 따라가는 정책을 제시하며 점차 스스로의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대의 아픈 경험은 우리에게 학생운동 탄압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2000년 등록금 투쟁 당시 성균관대 당국은 대학 본부 점거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 징계를 내렸다. 4명에게 출교 조치가 내려졌고, 18명의 학생회 간부들에게 제적, 무기정화, 유기정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학생회는 학교의 이런 탄압을 막아내지 못했다. 현재 성대에서는 재단이 학내 모든 교수들의 성향을 수집하고, 학생들의 시위 참여와 사회 비판적인 선전물에 대해 끊임없는 사찰을 벌인다. 심지어 학내 잔디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입구에 언덕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버렸다. 삼성그룹 이진희 부자의 변칙 증여세습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렸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만든 교지 <성균> 5천 부 전량이 배포 시작 두 시간 만에 강제 회수되었고 이후에도 대학 당국은 편집장 선출권을 빼앗고, 교지 발행마저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의 경우 '학교 부속 기구'라는 이유로 학생들은 편집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몇 년 지나자 학우들은 너무도 당연히 대학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단지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곳으로 바라보며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며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를 바라는 '교육수혜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학교는 선심 쓰듯이 복지라는 떡고물은 던져주고 학생회는 이를 선전하며 다시 한 번 상생을 강조한다. (작년 성대가 조선일보에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바른 사례로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는가?)

이러한 자치탄압은 마치 사측이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해 어용노조를 이용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투쟁의 불씨를 잘라버리는 이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산화협동을 통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권리와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사립대학의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은 온갖 복지를 지원해주며 반권학생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그대신 불순한 사상을 아예 접하지도 못하도록 철통방비를 하는 것이다.

학우 대중들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투쟁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당국 역시도 잘 알

고 있으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학운을 뿌리뽑기 위한 학교의 계획적인 탄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탄압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가. 그 답은 당연하게도 대중에 기반한 투쟁뿐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등록금과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투쟁의 과정을 통해 자치권 탄압에 저항하면서 이를 확대해가는 흐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잘 알다시피 학생회와 자치권은 파쇼정권과 학도호국단의 위협 속에 수십 년간 선배들이 투쟁으로 쌓아온 역사이다. 이는 또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움켜져 오는 것에 대해 행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의 억압에 대한 투쟁만을 함께하자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학생자치탄압은 분명 학생운동 전체를 말살하려는 위험한 흐름이며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우들에 기반한 투쟁, 단위 학교를 넘어선 공동의 투쟁만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4. 왜 우리는 지금 시기 교육투쟁을 외치는가?

교육투쟁이란 말이 단순히 등록금 투쟁만을 일컫는 말은 아니다. 교육투쟁은 등록금 뿐 아니라, 학생자치권, 청년실업 등 학우 대중들이 실제 체해있는 학내 현실에 대한 저항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등록금을 몇 퍼센트 깎느냐, 교육재정을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 현재 학우 대중들의 입장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실천하며 저항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높아가는 등록금은 비단 '비싸서'가 문제의 핵심이어서는 안된다. 높은 등록금은 실제 다수의 노동자민중의 자식들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로서 대학의 부르조아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그대로 계급 되물림의 수단으로 이어진다. 대졸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대학교육을 선택한 많은 노동자들의 자식들은 비싼 돈낸 값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 우리의 앞에는 비정규직 또는 고용불안정이라는 벽이 있을 뿐이다. 교투는 투쟁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틀을 깨기 위한 실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교투에 대해 '대중의 실리주의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청년실업의 경우 '체제 자체를 폭로하는 수준 이상의 무엇이 있을지 밝히기 힘들며 학우들의 실리주의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위 '경제투쟁'이라 일컬어지는 대중들의 실리에 기반한 투쟁이 왜 비판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 교육의 공공성의 주장은 대중들의 실리에 기반한 경제투쟁이 아닌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은 변혁과는 무관한 실리적 투쟁인가? 대중들의 투쟁은 경제투쟁에 기반하여 시작되며 이를 정치투쟁으로 상승시켜내는 것이 바로 활동가들의 몫이다. 등록금 문제 역시 무상교육 실현의 한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민중운동과 연결시켜내고 실리적 관점을 넘어 변혁적 관점을 제시할 것인가가 바로 학생운동가들의 몫이다. 청년실업 역시 고용을 늘려달라라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이것이 계급주의 자본의 요구에 따른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며, 하기에 당장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역시 학생들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안이라는 것을 선전선동하는 것, 그래서 학우 대중들을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모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운동가들의 임무이다. 이런 앞뒤 맥락없이, 청년실업은 실리주의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건드리지 않고, 단지 신자유주의 반대 흐름으로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함께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학우 대중들에게 ‘운동권’이란 낙인이 찍힌 채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대중들로부터 화운을 고립시키는 자기무덤파기이다. FTA 투쟁 역시 높은 등록금과 교육시장개방, 경쟁체제 가속화의 이야기와 함께 묶어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유로 FTA를 반대하는 개별적 흐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타인의 해방없이 나의 해방은 불가능하다’란 점을 실천 속에 경험하려면, 학우 대중들은 나를 해방시키고 싶은 문제에서부터 그 실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는 토대에 기반한 실천적 투쟁을 통해 나타난다는 아주 기본적 원리이다.

교육투쟁을 패배적으로만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 교육투쟁을 단순히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기제로만 이용하려기에 학기 초에 타협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에만 급급해 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평가할 때다. 학우대중들에게 적당히 보여주기식, 선연식 투쟁만을 배치하고, 투쟁의 흐름들을 잠재우고자 내놓은 복지요구안을 일찌감치 받아버리고 끝내버리지는 않았는가? 대중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투쟁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다르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학우대중들을 개량적, 타협적으로 만드는 원인이었다.

현재 학내를 옥죄어오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학우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를 깨어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투쟁이 절실한 때이다. 투쟁의 과정 속에서 지금의 질곡들을 깨어나가야 한다. 이에 해방이화 총학생회는 2학기 민주남부 투쟁을 준비하면서 ‘등록금 문제해결, 청년실업 해결, 학생자치권 쟁취를 위한 2007년하반기청년학생투쟁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 투쟁의 승리를 가져오려면 각 학교의 경계를 넘어 전체화된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 갈 때만이 실제 등록금을 삭감하는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권 투쟁 역시 제 2의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모아내지 못한다면, 굳게 연대해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의 탄압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학교별의 다양한 투쟁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소통하고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모색하는 속에서 하반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형성해나가고 이후 대선을 향한 공동의 실천투쟁으로 그 파고를 높여 가자. 현시기 화운의 위기는 이러한 실질적 움직임 속에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 학생회 운동의 현 조건과 다양한 운동들의 접합을 위하여

경인

0. 들어가며

신자유주의 대학교육구조조정 공세, 자치권 탄압으로 표출되는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공세는 늦춰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가운데 뉴라이트 반권은 이미 대학가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그나마도 좌파학생운동단위가 학생회를 꾸려도 별 다른 반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학생운동의 위기가 제출된 것은 근 10년 전의 이야기다. 학생운동의 위기는 그간 중심이 되어 왔던 학생회운동의 위기와 더불어, 학생회 운동의 활로모색을 통해 논의되었고 다양한 실험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발호와 더불어 날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재편과 신자유주의 전선으로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기획은 현재 반권 학생회의 공세가 심각해지고,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위기와 더불어 '학생회를 복원'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표출되고 있다. 학생운동 위기론, 학생회운동 위기론이 10여년을 지난 지금 재론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실험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여전히 학생회 운동은 학생운동의 주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학생회 운동의 위기는 반권 학생회의 수권과 학생회의 주된 장점이었던 대중동원력 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단면적으로 드러난다. 전반적인 학생회운동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학생운동이 얼마나 난관에 봉착해있는가를 보여주는 오래된 지표일 뿐이지만,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위기가 아니라 눈앞에 직면한 현실적 위기라는 것에서 지금 학생회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10년 전의 기획을 재탕할 수는 없는 일, 학생운동 전반의 위기 속에서 학생회 운동의 위상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단락_ 대학 내 풍경

요번에 당선된 총학생회 뉴라이트 학생회라면서? 내년엔 교육투쟁의 '교' 자도 안 보이겠구나

학생회 하는 애들 xx정파야 개네들한테 사업제안 해도 개네들 다른 사업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을걸?

학생회는 정치적 중립적여야 하고 학내 복지만..... (어느 학교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의견들)

학생회? 그게 특별한 애들만 하는거 아닌가?

나랑 별 상관도 없어 보이고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공약이행은 잘 되는지....

사업 제안은 학운위/중운위 제안하세요 (정작 중운위 자리라면) 발언권 열고 얘기 하세요 참관인 발언은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주의? 그게 참여에서 하는 거 아냐? / 환경운동 개람 아냐?

1. 현실 상의 학생회 운동에 대한 소묘

1) 배타적인 학생회 수권

일정정파의 수권공간이 되거나, 일정지향의 운동이 점유하는 공간으로서의 학생회는 현실적으로(또한 경향적으로) 집행의 독점과 의제의 독점(하여 대부분의 경우 공간과 예산의 독점)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운동 일반 수준의 의제들을 학생회의 몇몇 집행부가 모두 전담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 운동일반의 퇴행과 다양한 의제 발굴의 불가능성이 악순환점은 익히 보아온 일이다.

또한 이러한 수권을 위하여, 혹은 학생회 재생산을 위한 부조리는 선거 시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생회 수권을 위한 공납받은 학생공동의 목표를 담지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학생회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기능하는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학생회를 수권하기 위한 공약들은 학교 발전 이데올로기, 교육환경개선, 취업센터 운영 등 교육투쟁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점관리나 취업 등으로 직결될 공약들이나 복지공약으로 축소될 권리들을 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데, 학점취소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어느 시기부터 대학 내에서 선거 시기 선거 외의 발언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학생회선거 자체를 전제하거나 개입하려는 흐름이 사라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배타적인 학생회 수권의 배경에는 다수의 학생운동조직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직조되어왔던, 또한 현실적으로 직조되어 있는 소위 메이저 캠프 총학생회가 주로 학생사회 내에서 발언대를 도맡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열려있는 논쟁과 소통이 안 되는 회의로 농담반 진담반처럼 ‘전학투위 회의와 같다’ 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 메이저 캠퍼스 총학생회와 그 총학생회가 속해있는 정치조직을 중심으로 의장자리와 노동절 전야 문화계 개최를 가지고 생산성 없는 자조직 중심주의에 기반한 논쟁들을 밤새서 지루하게 진행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그 조차도 지금은 좌파학생회의 축소와 운동의 위기 속에서 먼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학생회 대표자 중심성과 그 대표자를 메이저 총학생회가 의례히 결의 및 인준되는 과정은 되풀이 되고 있고 각 운동조직의 질서는 일정 부분 그를 조장하고 유지시키고 있다.

2) 학우들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

학생회가 대학인들과 괴리되는 것은 다만 낮은 투표율로 드러나는 선거시기뿐만은 아니다. 지난 시기 학생회가 대학인들과 괴리되는 것의 주요한 이유로서 학생회가 학우들을 대상화/수동화하고 ‘계몽주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변하고, 학생들을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에서 찾아왔다. 전술했듯이 학생회 구조가 자생적인, 혹은 학생회¹⁰⁴⁾ 외곽에 존재하는 학회나 소모임들의 정치적 활동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학생회의 논쟁구조

104) 언급하는 학생회는 협의의 학생회를 지칭한다. 특정한 운동지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와 학생회의 지지층으로 기능하는

속으로 수렴시키면서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행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지점이었고 이러한 학생회 중심성과 대표자 중심성, 학생회 수권이 모든 발언과 재정, 공간을 장악함으로써 자생적인 저항의 흐름과 내부비판을 통합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던 것은 일정 부분 학생회에 대한 불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음, 특정 정치세력으로 인한 대중의 편가르기)과 운동진영전반에 대한 퇴보를 심화시켰다. 현재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쇠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변한 조건으로서 자생적인 운동의 흐름과 그 공세들이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대학주체들이 학교발전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빠른 속도로 포섭되어가고 있는 경향 속에서 자생적인 사회 변혁적 흐름, 제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 속에서 대학인의 운동이 후퇴하고 있고 자생적인 대중운동의 퇴조가 가장 먼저 그것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학생회가 대학인에게서 괴리되는 것은 대학인 일반의 요구들을 받아 안고 그것을 운동 의제화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러한 대중운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데 1)대학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요구들을 운동 의제화 하는 것, 2)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생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운동을 대중운동 상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성과를 대학인 전체에게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대학인들은 지배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도 지배체제에 대한 주류로의 편입을 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운동이 자신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작은 승리조차 이뤄내지 못했고 따라서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언명이상으로 구축해내지 못한 것의 결과일 것이다. 학내에서 전선을 만들어 내고, 최소한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투쟁의 경험을 끊임없이 만들어감으로서, 다양한 대중운동 공간에서의 성과들을 다시금 승리의 경험으로써 대학인의 삶 속에서 공유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대학인들에게 학생회가 해방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야 해왔던 적이있었는가에 대해 심각히 의문을 품어야 할 때다.

3) 정치와 복지의 사이에서 :이중의 노동을 수행하는 학생회

학생회 수권 이후 학내에서는 복지와 일상정책을 담당하고 학교행사를 진행하는(고대 총학생회, 연대 총학생회를 운동권 총학생회가 되어도 모두 고연전을 치루고, 그와 같은 대중적인 사업 속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 한다기 보다는 구색 맞추기 정도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또 그래야만 학우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객관조건이 있음)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집회 등에 나가서 전체 운동 전선에서 선도적인 학생운동의 발언을 진행하곤 한다. 두 가지의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때때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은 다반사이고, 하여 조합주의나 대중추수적인 움직임들이 대체적으로 보여진다. 이는 문제의식이 '개량' 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회가 대학인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고 있지 못하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대학주체들에게서의 최소한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인들의 삶에 기반한 다양한 요구들을 운동 의제화하여 저항의 흐름으로 창출해내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복지사안을 받아안음으로서 대학인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만/불안 일반을 유예시키는 한편

단위까지를 포괄할 수 있겠다. 쉽게 의례히 떠올러지는 '학생회 사람들' 을 생각해보라.

학생회 활동가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형세로 진행된다.(실무만 하는 학생회), 활동가로서의 임무와 정치적 목표가 학생회 '업무'와 괴리되는 가운데 학생회가 대중운동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2. 학생회 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들

2.1. 우선적으로 학생회를 어떤 조직으로 사고하는가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광의의 학생회와 협의의 학생회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회의 모습은 협의의 학생회일 것이다. 협의의 학생회, 즉 대개의 경우에 학생회로 이야기되는 '학생회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대의제의 한계 안에서 작동하여 대중운동을 유실시켜버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학생회를 수권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중운동이 역동적으로 부딪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담지한 맹아적 형태의 제기들이 저함이데올로기로 상충될 수 있는 공간, 대의제의 골간을 타고 그 집행이나 성과가 독점되지 않는 대중운동일반의 공간으로 사고해야 한다. 물론 이처럼 기능할 수 있 토대¹⁰⁵⁾를 만들어야 함은 필수적인 문제이다. (토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진행)

2.2. 이러한 제기는 학생회=국가주의라는 도식적인 이해 속에서 학생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운동의 위기에서 학생회를 포함하여 자치적이고 저함적인 다양한 공간들을 확장, 재전유 및 생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생회가 다양한 학생대중의 발언과 행동이 조직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형식과 형태를 변화시켜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과거 예산차지제, 대중운동 네트워크, 예산 심의 및 평가제, 간부 소환제 등의 제도의 도입 및 개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결국 현재 학생회의 임무는 대학 내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역할과 학생사회 내에 저함이데올로기 구축에 복무하며 학생회 그 스스로가 발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체가 대중운동공간이 되는, 하여 운동일반의 수준을 상승시켜낼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 을 하고자 하지만, '모든 것' 이하고자 하지는 않는 학생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3. 이제까지 학생회운동은 실패만 거듭했던가, 학생회에 대한 그 무수한 제기들이 결론적으로 없던 것으로 만들어 온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패의 어떤 측면으로는 그 학생회 혁신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가의 '내용', 운동의 방식 뿐만 아니라 운동의 내용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인데 그러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고민되고 그에 맞는 운동의 내용을 생산하지 못한 채 형식

105) 이에 대해서 총회의 정치를 주창하는 경우가 있으나, 총회 자리 자체가 결정을 요하는 자리이고, 실제로 운동일반의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학우들을 만건의 찬반으로 나누고 손을 들어 결정하게 만드는, 박수로 결의를 통과시키는 정치 이상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총회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갇혀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민주주의의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음.

판을 받아 안음으로써 결국 내용의 부재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2.4. 결국 운동 일반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학생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운동일반의 거점으로 학생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관건은 운동일반을 다시금 대학 내에 어떻게 정초해낼 것인가, 대학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객관조건을 만들어내는가를 뒷받침할 운동의 내용과 전략이 생산되어야 한다. 대중운동을 질곡하지 않는, 대중운동 그 자체를 활성화시켜낼 학생회의 체계는 그 운동과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대의제의 한계를 인식해내는, 민주주의는 부단한 실천 속에서 실현되어오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 일반의 관점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광의의)학생회 기반에서 다양한 대중운동의 접합, 대중운동 공간간의 수평적이고 윗리적인 연대 속에서 연대의 신뢰를 창출해나가고, 힘을 모음으로써 실질적인 승리를 온전히 대중운동에 돌려주는 것이 당장에 그려낼 수 있는 경로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회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운동질서의 문제의식도 조율하여 변화해가야 할 것이다.

3. 영역운동에 왜 착목해야 하는가

— 다양한 대중운동간의 교痛的 원리를 통한 운동의 활성화로!

사회적 적대를 넘어 사회적 유대 또는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에 착목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적대의 복수성, 투쟁의 다차원성을 체계화하여 다양한 운동과의 접합과 연대를 통한 운동을 구축(계급 투쟁, 성적차이, 지적차이 등)하여 자본주의의 재생산 고리를 깨고, 새로운 정치성을 구축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느끼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은 체제 곳곳에서 노/자적대를 넘어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모순과 다양한 계기들이 현실정치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운동으로 투신하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반신자유주의 전선 속에 약한 고리를 타격하는 동시에 다면적인 전선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핵심적 문제의식(구성의 정치)으로서 영역운동이 이미 대안적인 사회상을 그려나가는 밑그림으로, 현실로 작동해야만 한다.

3.1. 영역운동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영역운동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현실조건에서 그것을 협소한 전문적 영역으로 치부해내는 경향과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무관한 영역운동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혹은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그것이다. 실제로 영역운동이 대안이라고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영역운동이 나름의 분석틀을 가지고 현체제를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현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스스로 그려낼 수 있을 때에야 판이 스스로의 활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과 역량,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때야만이 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역운동을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성과를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성과라는 것 자체도 과거의 기준들- 대오의 숫자, 타격능력 정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역운동을 생각할 때 각 운동의 경계를 본질적으로 구분할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관련된 의제만을, 환경은 환경파괴의 극복과 관련된 의제만을, 평화운동은 군사적 대립과 관련된 의제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해당영역단위' 외의 주체들은 영역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영역운동의 활동은 구체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역운동은 스스로의 활동을 공간적 구분에 매달리기 보다는 자신의 영역의 문제를 원리로 상승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 분석과는 동떨어져서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소위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생태주의, 변혁성을 담지하지 못하는 인권을 표방한 캠페인들은 영역운동이라 말할 수 없음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반대로, 이러한 본질적 성향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소위 '전담반'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영역운동에 모든 고민을 떠맡기기 보다는 이를 스스로 체내화 시켜내어야 한다는 고민, 운동 자체가 여성운동이자 생태운동, 장애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이 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모색 해야만 한다.

3.2. 실제로 영역운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낼 것인가?

그러한 물음에 난점이 존재한다. 현재 많은 영역운동 단위들이 재생산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기 보단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것이 슬픈 현실이다. 영역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본다. 각 기층에서의 운동들을 담지 하는 영역으로써 영역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상을 제기하기엔 우리의 실험과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역운동은 구성의 정치를 포괄하는 만큼 무궁무진한 실험과 무궁무진한 주체재생산의 경로로서, 해방구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마치 68혁명 때에 소르본느 대학에 부쳐져 있던 글귀처럼 강단 없는 대학을 꿈꾸는, 모든 지적 권위가 철폐되고 지식의 위계를 민중들이 결정하는 경험을 기획해본다면, 자본주의를 넘어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에코토피아에 참가해본다면 하는 기획들은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해방구로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제2대학이나 학회 평론등으로 실험되었던 학회학을 운동은 현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미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자기 교육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또한 끊임없이 발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의 가능성과 더 많은 연대의 가능성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운동이 하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연대로 만나 가야 한다는 점, 끊임없는 교痛的 원리로 구축되는 신자유주의 전선만이 각개약진, 각개격파를 당하지 않고 대안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학생회 내/외부로 나누고, 학생회 운동과 영역운동으로 분할하는 지금까지의 경향들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는 학생회라는 공간이 이제껏 운동의 역사 속에서 자리잡아왔던 관성 속에서 변혁시키기란 그 관성 이상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도 아니지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된다. 요는, 학생회를 어떻게 대화사회 내에서 재정초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원칙들을 가능한 수준 내에서 환류해내고, 그를 기반으로 각 운동공간에서의 세대중운동들의 연대를 각각의 조건에 맞게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가는 우리가 담지하고자 하는 운동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에 그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의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주되게 차이와 연대, 수평적이고 윤리적인 연대라는 원칙 속에서 진행해나가면 되는 일이다. 작게는 학생회 집행부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좌파연대 속에서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하다. 좌파연대 전선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전체 운동으로 파급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서의 오늘을 기대한다.

[토론]

■ 지식을 매개로 학생운동의 대안을 창출하자!

- 지식에 대한 권리와 자기교육 운동

강원대 생활도서관 관장 조계명

0. 들어가며

지금까지 학생운동에서 지식은 화해, 생활자치도서관 등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대중운동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주체들이 창출해왔던 유의미한 담론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토론자기교육의 문화 역시 송두리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지식을 매개로 학우대중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주요한 경로가 위기에 처함으로 인해 대중 스스로의 정치역량이 축소되고 있다.

여기서 ‘정치역량’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정치’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다.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글을 읽는 활동가들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공동체 사이의 우애와 연대, 해방감을 증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지식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예컨대 새내기들이 “왜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학기 초에 던졌을 때,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 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공동체의 몫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역량을 구축해왔는가? 우리는 왜 신자유주의가 나쁜지, 왜 FTA에 반대해야 하는지, 세미나 때 한 번 훑어 본 어려운 단어들을 터듬터듬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해가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동체의 게시판에서 익명을 빌려서 논쟁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게시판의 해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러한 글들에 우애롭고 과학적이며 동시에 날카로운 글들을 쓸 수 있었는가? 이러한 실력을 함께 기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걸맞는 자체적인 교육-훈련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단 대중과의 지적인 교통과 논쟁 속에서 활동가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언어를 가다듬고 정치사상적인 실력을 다질 수 있다. 또 이러한 구조를 재건함으로써 활동가들과 대중들의 접촉 면적은 늘어날 것이며, 그/녀들 사이의 자율적인 토론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활동가와 대중이라는 이분법을 허물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의 교육-훈련이란 단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치열한 대중운동의 과정이다. 예컨대 FTA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야기하는 폭력적인 결과들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결과들을 낳는 근본 원인들 - 즉 미계제모니의 위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 - 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넓히고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FTA 반대 집회에 수많은 대중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녀들의 인식과 이해관계는 저마다 상이하다. 집단적인 학습과 토론 속에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이로써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거대한 전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학에서의 지식 생산-유통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지식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을 어떻게 축소시키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간략히 살피고, 이에 맞선 자기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신자유주의와 대중교육의 변모

자본주의가 최초로 과학적 지식을 기술(테크놀로지)이라는 이름으로 생산과정에 내부화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자본에게 있어 재앙의 씨앗이기도 하다. 테크놀로지는 자본으로 하여금 고정자본을 막대하게 소비하게 만들으로써⁽¹⁰⁶⁾ ‘이윤율의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60년대 중반부터 법인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며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빈곤과 실업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나타난다. 즉 법인자본과 국가는 오히려 고등교육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60년대 중반부터 대학대학원의 정원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 이로써 자본과 국가는 빈곤실업에 따른 대중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¹⁰⁷⁾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과잉교육(over-education)’ 현상이다. 즉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대학에 노동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이 학교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같은 화력을 소지하고도 이전보다 더욱 고용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성과주의는 더욱 극심해진다. 그리하여 노동자내부에서의 경쟁과 갈등만 극심화될 뿐이다.⁽¹⁰⁸⁾

더욱이, ‘과소교육(under-education)’ 또한 과잉교육과 동시에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고등교육을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형시킨다. 대표적 현상은 바로 학교간/학문간 위계서열화의 심화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은 연구중심 엘리트대학/교육중심 대중대학으로 계열화되고 이들의 격차는 확대된다. 또 구조조정 속에서 자본축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학과들은 통제합된다.

106) 자본의 편향적 기술진보

107) 그리고 자유주의적 교육개혁가들도 ‘학교교육을 통해 계급간-민종간성적 불평등을 완화하자.’ 라는 마인드 속에서 이에 동참한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다. 정부나 교육개혁가들이 무상교육, 빈민교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노동자계급여성유색민종들이 많이 학교에 들어갔지만, 이들의 차별적 지위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통계들 통해 증명된 바 있다.

108) 최근 남한에서 취직에 실패한 대학생들이 대학원으로 도피하는 것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육의 전반적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중심의 대중대학 과정, 또 심지어 연구중심 엘리트대학이라 할지라도 (대학원이 아닌) 학부 과정은 일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다. 실제로 광역화가 실행되고 대학원 중심 체계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옛날이면 1학년 때 배웠을 내용을 3학년에서 배우게 된다.⁽¹⁰⁹⁾ 학부교육은 이전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부실해졌다. 고등학교 교육만 보더라도,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면 커리큘럼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변화가 아니다. 예컨대 미적분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는 결국 커리큘럼이 상위의 교육기관(즉 대학)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소교육은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똑같은 지식을 배우기 위한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과잉교육’과 ‘과소교육’은 조삼모사 식으로 대중을 속이고, 착취한다. 빈곤과 불안정노동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높은 교육비용과 낮은 교육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방끈’을 늘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안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 본능적으로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대학원으로, 또 기회와 돈만 생기면 해외로 가려 한다.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고시공부로 들어서려고 한다. 교육의 기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¹¹⁰⁾ 계급투쟁은 과소결정되고, 지적 차이를 둘러싼 위계와 차별은 더욱 확대된다.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역사적 과정

60년대 중반부터 대학과 대학원이 임화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다.(과잉교육). 그런데 70년대 초부터 대불황이 본격화되고 8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 정부의 긴축정책에 의해 공적 지원이 축소되면서 대학의 팽창은 일시적으로 정체된다(과잉교육의 일시적 정체). 이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적 교육개혁’의 단계이다. 80년대에 신보수주의는 ‘정부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공교육’의 실패를 비판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공립학교를 사립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심 화두가 된다.

그런데 90년대의 교육개혁은 신보수주의를 대체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¹¹¹⁾에 의해 주도된다. 그리하여 다시 고등교육이 확대된다.(과잉교육의 재개)⁽¹¹²⁾ 그리고 소유형태나 재정지출을 둘러싼 쟁점은 다소 상대화된다.⁽¹¹³⁾ 대신 교육구조가 질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109) 그리고 과거 3.4 학년 때 이수했던 수준의 내용은 대학원으로 이전되고 있다.

110) 현재 자본은 우리에게 ‘평생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나와도 끝이 아니다. 개인은 직업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끊임없이 적응시켜야 한다.

111) 이 (좁은 의미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합한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라 보면 무방할 것이다.

112)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25-34세의 연령층 중 대학교 이상을 이수한 남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1995년에는 29%였다. 그런데 (IMF 위기를 거친 후) 2001년에는 40%로 증가한다.

113) 이제 중요한 것은 공립을 사립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사립처럼 운영되도록 교육구조를 바꾸고 교사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재정지출 관련해서는, 물론 대중들은 여전히 많은 교육비용을 지불한다. 적은 교육비용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원리의 기본 상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비용 문제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신축적 노동시장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 관심사가 된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교육재정은 다시 증가

대표적인 것이 평가대학의 출현이다. 마치 기업의 단기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처럼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수월성(excellence)'라는 범주가 대학 운영의 중심에 자리잡는다. 그리하여 학생 성적-졸업률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화된다. 또 표준화된 교수평가연봉제/계약제 도입 등으로 인해 교수의 자율적 지위 또한 박탈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교/학문간 위계서열화가 강화된다는 것은 앞에서 '과소교육'을 논하면서 이미 서술하였다.) 현재 남한에서 시도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에 법인기업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평가대학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의 성격의 변화이다. 80년대부터 시작된 대학재정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연구활동이 그나마 가져왔던 (상대적) 자율성은 박탈된다. 그리고 연구활동은 법인자본에 포섭된다. 현재 남한에서도 그러하듯 온갖 종류의 산학협동이 범람하게 된다. 이 속에서 법인자본은 대학의 고급 인력을 저렴하게 쓰면서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국가는 지적 재산권을 제도화하면서 대학의 기업화, 그리고 지식의 상품화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모든 지식이 대접 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세계화에서 부상하는 정보통신인공지능생명공학신소재공학 등에 모든 자원이 집중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응용과학이라는 것만이 지식 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산학협동 속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물학은 전통적으로 기초과학으로 분류되었지만 지식의 상품화를 현재 주도하고 있다. 예컨대 분자생물학의 경우, 1980년대 미국 연구대학의 정교수들은 대부분 법인자본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학 실험실에서 개발된 신제품을 법인자본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법인자본은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제공한다.

소위 '지식기반경제' 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대학과 법인자본의 결합은, 지식을 자본축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포섭시키면서 지식의 발전방향을 크게 왜곡한다. 또 인류 공동의 소유인 지식이 사실상 법인자본과 연구대학의 사적 소유로 전환한다. 일반 대중은 물론, 심지어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도 지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핵과 생명공학의 발전을 둘러싼 각종 사건들에서 드러나듯,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한다. 문제는 그 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냐이다.

3. 자기교육을 통해 학생운동의 활로를 찾자

위에서 살펴보았듯, ‘지식기반경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대학구조조정 속에서 대학에서의 지식 생산·유통은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불안정을 상급교육기관 진학으로 탈피하고자 하는 ‘과잉교육’ 현상과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학부 교육 질이 저하되는(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상위의 교육기관으로 이전) ‘과소교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극소수에게만 전문적 지식을 독점시키는 동시에, 지식의 내용 자체를 철저히 자본축적에 종속시키는 한편, 낮은 수준의 똑같은 지식을 배우기 위한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식의 문제를 지식에 대한 권리를 대중에게 되돌림으로써 대중의 정치 역량을 증대시키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교육은, 특정한 교육제도—여기에는 ‘공교육’과 같은 공식적 교육제도 및 노조와 야학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교육제도 모두를 포함한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 전망 또는 관점이자 자기교육의 관점에서 여러 교육제도들을 개조하고 창설하는 총괄적이고 장구적인 운동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공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제도들이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배타적 소속과 동일성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중의 반(反)지성주의, 그리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인민주의와 권위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파괴라는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는 유력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자기교육운동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축소에 맞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입각하여 이념적 논쟁을 본격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운동의 활성화에 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불러오는 실업 및 노동의 불안정화가 대중들의 권리와 소속, 안전을 파괴하고 이것이 배제와 배타적 소속이라는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져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들이 소속을 둘러싼 폭력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기교육은 일회적 시도나 특정한 제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학교와 노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제도들을 이런 관점에 맞게 개조하는 보다 넓은 운동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되는 인민의 권리에 대처하는 지적·교육적 기획이 요청된다는 점, 그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려는 모든 대중운동들에 공통적인 운동 의제이자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기교육은 금융세계화 반대 투쟁의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고, 따라서 이것만으로 운동의 활로를 열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 없이 새로운 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나아가며

80년대 ‘저항’으로 상징되었던 대학의 문화는 대학인들의 삶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통기타를 치면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모습을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대중사업 속에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인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대학의 문화는 대학의 문을 넘어 사회적 영향을 미치면서 비판적인 사회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초석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정치의 대한 담론과 사회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고찰이 교류되고 소통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학사회 내에 우애로운 관계맺음의 가능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오로지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살아남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를 매개로 한 대학인들의 관계맺음은 점점 줄어들고 정치의 공간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다.

정치의 공간을 확장하기 대중운동을 벌여내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식’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을 매개로 한 일상적인 논쟁과 소통을 대학사회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양한 토론과 민주적인 합의, 집단적인 실천을 벌이기 위한 논쟁을 통해 대학사회를 정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해낼 것이다. 그리고 대학 내에 제도적(수업, 행정제도) 혹은 비제도적 영역(학회, 자치단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발전전망만을 강요하는 주체화양식에 맞서 민주적이고 페미니즘적인 우애로운 관계맺음이 가능한 삶의 양식을 재창출해나가야 한다.

[토론5]

■ 학생운동과 지역운동, 그 공동의 상생을 위하여

21대 인하대 문과대 학생회장 조남명

0. 들어가며

신자유주의가 남한사회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기간 신자유주의는 노동, 기업, 금융, 공공 부분에서의 구조조정을 필두로 남한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자본의 요구, 자본이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단순한 경제적 구조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남한사회 전반 그리고 노동자-민중들의 인식구조까지도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으로 대학사회를 재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대중들의 의식지형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자본은 거대한 공간부터 인간 개개인의 작은 공간까지 침투하여 자신들의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우리들의 공간, 노동자-민중의 공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본의 편입이 아닌 변혁적 공간, 주체형성을 위한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지역, 지역운동이란 무엇인가?¹¹⁴⁾

학생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역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역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역은 무엇인가? 지역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가? 과거 지역운동이라 하면 행정구역상의 구분으로 나누어진 주소지 혹은 정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을 단순히 이러한 의미로만 사고할 수 있을 것인가? 포이동과 강남구를 같은 행정구역에 묶여있다고 해서 같은 지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위의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같은 지역으로 지역운동의 공동의 주체로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별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뛰어넘어 같은 공간, 현장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인가?

이렇듯 지역은 단순한 정주공간으로서만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은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사회적 동일성이 존재하는 공간, 소통과 교류, 연대 속에서 획득되는 공간,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이렇게 규정지었듯이 지역운동 역시 단순히 지역에서 행하는 운동, 지역의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114) 이 부분은 사회운동포럼 열쇠말 / 지역운동의 평가와 전망 모색을 참고하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아닌 지역에서의 변혁적 저항주체의 형성,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일 것이다.

2. 학생운동과 지역운동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 기간 활동에 대한 평가

지난 시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역운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430-Mayday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지구별 연석회의를 통해 많은 활동들을 벌여냈다. 비정규직과 전쟁, 한미 FTA와 같은 사회적 현안들을 지역 내 선전하고 대중들을 만나가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또한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해 많은 활동들을 진행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진정으로 지역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평가지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지역-지구별 연석회의의 경우 개별 학교간의 연대활동 이상의 그 어떤 활동의 의미를 가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할 것이다. 소시기적인 430-Mayday 투쟁체로서 지역적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유, 확장 의의보다는 전국적인, 전사회적인 쟁점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알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지역-지구별 연석회의에서 가져갔던 중요한 판단지점이었다. 학생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현안들이 함께 묶여지는 활동이 아닌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활동을 지역별로 풀어내는 방식, 그것이 기간의 연석회의 활동의 모습이었다. 또한 연석회의는 각 학교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서 시간적인 효율성이 좋아 같이 한 것이 강하게 작용하였다.¹¹⁵⁾ 이러한 모습 속에 지역에 대한 판단 역시 부재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간 학생운동에서 주되게 활동했던 지역운동의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든다.

두 번째로 1단위 1연대, 연대 활동이다. 기간 이 활동 역시 위의 활동과 별단 다르지 않았다. 단일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대오의 수적지원을 토대로 하는 일상적-전투적 연대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역 혹은 학내의 노동자, 학생들의 문제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 또한 안정적인 소통구조의 확보를 통한 생산관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기간의 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역과의 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지점도 존재한다. 또한 전국적인 사안을 지역에서 선전하는 것, 일상적인 노동자 학생연대 활동이라는 측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활동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이러한 활동으로만 지역운동을 진행했던 것은 기간 지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소급하게 설정되어 그랬던 측면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규정의 재정립을 통해 더욱더 폭넓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2.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활동

115) 실상 현재 지역-지구별 연석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은 이러한 유리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의 수도권 집중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공세적으로 자본과 정권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투쟁들과 활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대학과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지방)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지역 자체적으로 단순한 몸대주기식의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활동공간의 창출이라는 주체적인 결의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운동을 펼치기에 고립되고 악조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 새로이 지역운동을 확두로 던지고 있는 지금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변혁운동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3. 지역과의 관계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한 속에서 어떻게 지역, 지역운동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사회의 문제를 통한 지역과의 소통이다. 학생운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기운동의 과제는 바로 교육과 교육투쟁이다. 교육투쟁의 경우 주된 쟁점을 형성하는 것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등록금을 학생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속에서 심화되는 빈곤, 불안정노동의 심화와 같이 전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투쟁들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학우대중들에게만 선전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학생의 문제로 인식하고 혹은 학생사회에서의 해결만을 이야기 할 경우 결국은 학생사회의 고립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의 중요한 쟁점을 학생사회로 끌어들이어야 할 것이다. 지역운동의 쟁점을 학생사회로 끌어들이는 의미는 단순히 쟁점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진보적 단위들을 학생사회로 함께 끌어들이므로써 그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역운동의 쟁점을 단순한 지역적 사안이 아닌 학우대중들의 문제, 전체 사회의 문제로 확장, 상승시켜 낼 수 있는 계기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졸업을 맞이하는 대학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총체적인 문제이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 대한 제기¹¹⁶⁾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연대운동을 상승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설정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의 담벼락을 없애는 것이다.¹¹⁷⁾ 학생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환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학생사회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혁적인 공간, 저항주체들의 해방광장으로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생운동과 지역운동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담벼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확장시켜본다면 학생운동 사이클과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새롭게 대중을 만나가는 활동들이 뚜렷한 성과지점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남과 성과지점은 단발적으로 끝

116)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7) 현재 각 대학들은 대부분 외부인의 출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학생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학교내에서의 행사를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대학을 대학 구성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속에서 변혁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새로이 전선에 세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활동가들이 각 캠페인으로 조직하고 수행하는 농활의 경우 과거의 농활과는 분명 다른 위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새롭게 위상을 정리하고 새로운 위상에 맞는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의 활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제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3.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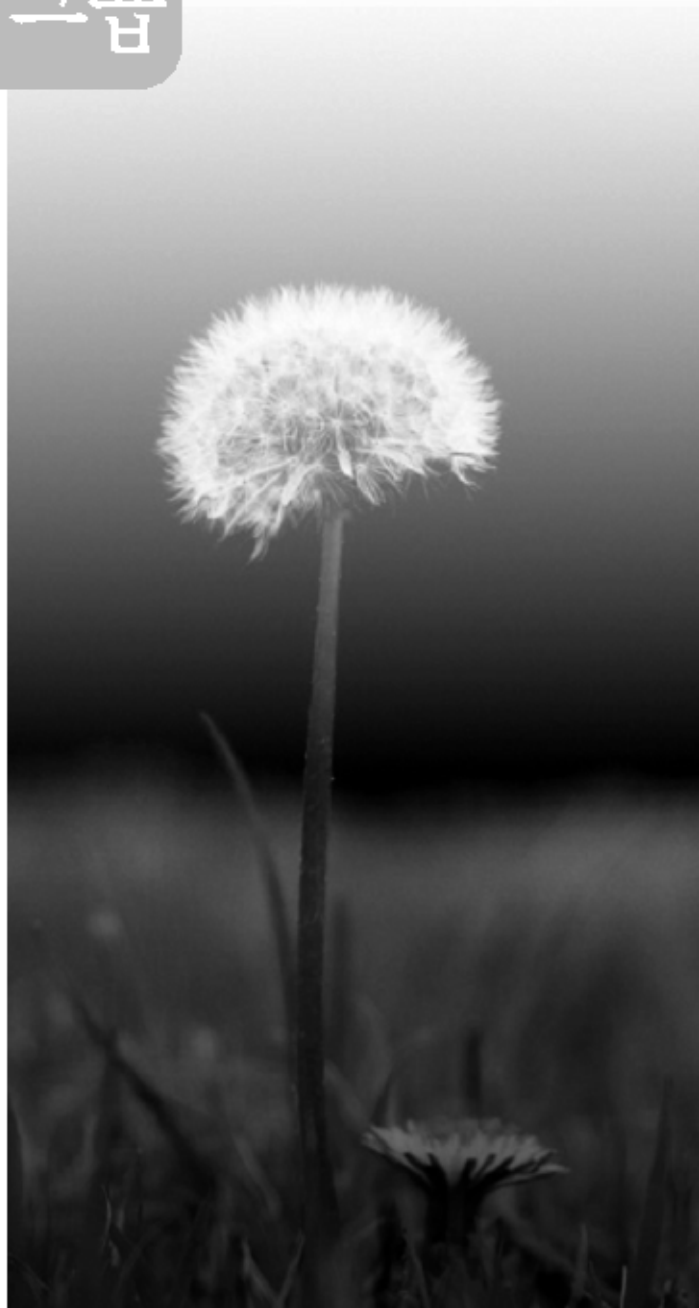
이 문서를 통해 학생운동이 지역운동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 혹은 지역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이라는 공간을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면, 지역운동이 변혁적 저항주체의 형성,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정의한다면 향후 지역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고민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된다. 20번째를 맞이하는 인천노동문화제와 11회를 맞이하게 될 인천인권영화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의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노동문화와 인권영화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결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학생운동진영에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대중접촉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재할 경우에는 그것을 생산해내는 학생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커다란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활동에서부터 가능할 것이다. 아직은 초벌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운동 내부에서의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을 좀더 확장하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폐기하고 인간의 해방,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으로 더욱 더 전진했으면 한다. 지역운동 관련 발제문은 행사 당일 별지로 나눠 드립니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사전워크숍

:664: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 연속워크숍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 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일시 : 2007. 06. 14.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 김정은

이 발제문은 기존 노동자운동이 여성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비정규직철폐투쟁을 다루는 관점과 한계를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왜 비정규직의 70%를 여성노동자가 차지한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조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해결의 단초를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고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현존하는 특정 노동조합, 단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방어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여성노조조차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극단적인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려있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른바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열린 논의를 시작해보자.

1.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에 대한 역사적 평가

-흔히 가부장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를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성' 으로 언급함. 이는 현재 노조에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이므로 여성의 이해나 요구가 부차화 되고, 노조 내 여성활동가가 과소대표되는 현상을 드러내는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노조로 조직된) 남성 조합원 내지 간부들의 의지와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자운동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이에 대한 물인식에서 결과한 것이다.

-70년대 농촌 출신 여성노동자가 경공업에 흡수되어 핵심 노동력 층을 구성한 데 이어, 80년대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생산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노동력 구성이 변화되었다. 9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노조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3저 호황에 따른 대기업을 지불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장 교섭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 내 임금과 기업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함
 -당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국가와 비타협적 투쟁을 일궈내며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노동자 투쟁이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냈던 시절이었으나)과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적 주체성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일반화되는 조건 속에서 해체되고 있음.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의 심화 속에서 조직된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안정(특정 분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계화·분화된 다른 노동자계층의 이해를 맞바꾸는 방식이 문제임)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 노조의 낮은 조직률은 수치의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운동이 노동자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는 문제임
 -산업화, 도시화 등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일부 대공장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가족임금’이라는 물적 기반을 성취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전업주부)’라는 관념이자 이데올로기가 노동자계급에게도 확산됨. 남성은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족에 적합하다는 공사분리 이데올로기와 (위계적인)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하에서 남성은 가족을 식마한 노동 현장과 대비되는 휴식처로 받아들였다(당시 여성들도 결혼을 통해 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결혼이 신분상승의 통로가 되거나 결혼 후에도 노동하는 것이 가부장적 무능으로 치부되는 상황 등이 존재했음). 당시 여련 등의 여성운동단체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운동의 주체를 기층여성(여성노동자)이 아닌(여성노동자 조직화의 과정은 노동조합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 하에) ‘주부’로 상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벌였음
 -대공장남성정규직 중심성은 산업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상태 변화가 노동조합운동의 목표나 활동양태와 맞물리며 결과한 현상임. 여성의 일차적인 공간을 가족으로, 가사노동으로 간주하는 (위계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이를 재생산하는 가족형태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의 노동은 생계에 부수적이라고 간주되며, 남녀 임금 격차가 정당화되었음. 가족임금은 일부 노동자계급에게만 해당되어 대다수의 여성들은 공식/비공식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였으나 이러한 현실은 주목되지 못하였고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는 온전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여성노동자의 현실

1) 노동시장 내 성별분업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맞물려 노동의 불안정화 확산

-자본은 여성노동력을 임시적이고 주변화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결혼퇴직제,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유지시켜왔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분업은 여성들을 특정 직종(소위 ‘여성직종’으로 불리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산업과 비공식 부문 등)과 직무(단순노무, 사무서비스 등)에 편중시켰으며, 한 사업장 내에서도 최하위 직급에 위치시켰음. 여성의 저임금(성별분리보통제 적용, 노골적인 임금 차별 등)이 정당화되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했음. 가내노동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노조운동 내에서 이러한 여성차별은 노동자운동의 과제로 제기되지 못하였음. 성별분업,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노동자계

급에게 여성노동자의 노동은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과 가족 유지에 비해 부차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음
 -이렇게 단기간 활용되던, 주변화된 여성노동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와 맞물리면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구조화되기 시작함. 80년대 후반부터 3차 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해왔음. 주로 저숙련, 저임금의 노동부문(단순사무, 청소 등)에 편향된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됨(1985년 이후부터 3차 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함, 1990년~1997년 사이에 여성은 주로 임시고에서 고용이 이뤄졌음)

-가내노동,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수금원, 텔레마케터, 덤프트럭·레미콘 지입차주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그 범위와 규모가 크며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함.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이는 가내노동 등 비공식 부문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유사함. 즉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는 고용형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노동법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함. 노동자들을 법적 보호와 권리의 틀을 벗어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법적 투쟁을 원천 봉쇄함

-성별로 분리된 수직적·수평적 직무·직종분리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임시계약직, 파견직 등)와 맞물리며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핵가족과 가족임금 공사분리 이데올로기 하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해온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게 공히 인식되지 못하고, IMF 구조조정을 거치며 비정규직이 노동전반으로 확대된 후에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함

2) 성별화된 구조조정

-IMF 구조조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전면화됨(1998년 남성의 고용감소는 주로 임시고(94.8%)인 반면 여성의 고용감소는 상용고(83.3%)에서 이뤄짐). 구조조정 하에서 우선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여성노동이 다시 한번 비정규직화되거나 신종 여성 비정규직이 등장함. 여성은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되었음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 조합원 정리해고,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 사례는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맞바꾼 사례로서 노조운동의 몰성성을 보여줌. 노동자운동도 성별분업과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와 노동분할을 정당화한 자본의 착취전략에 공조하게 된 것임. 당시 실직한 남성 가장에게 용원을 보내는 사회적 캠페인이 시행했던 반면 여성의 실직과 해고는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성적 차이에 따른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방어에 급급하던 노동자운동이 98년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 후,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 전반에 확산됨. 새로운 노동의 특징은 저임금, 미숙련, 하위직 등 소위 '여성직종'에서 드러났던 여성화된 노동의 특성을 보임. 고용불안정, 정형화된 고용관계로부터의 배제와 차별, 임금 및 승진체계의 부재, 주변부 노동, 외부노동시장 등의 확대라는 새로운 노동 조건이 일반화됨.

3) 현재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처해있는 것이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인 실업과 극단적인 저임금,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빈곤과 배제가 극심하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은 기업복지, 사회보험 등에서도 배제되어있음. 이러한 상황은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여성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이 100일 때, 여성 정규직은 79, 남성 비정규직은 54 여성 비정규직은 42에 불과함).

-저출산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성장 동력으로 양성' 하기 위해 '여성인력활용',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보육 가족 정책' 으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권 박탈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여성노동조건을 활용하여 저비용에 여성인력을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

-보육과 가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파트타임, 변형시간 근로제 등의 유연한 노동형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대다수 단시간 근로제는 명목적 단시간 근로제(근로시간은 별로 짧지 않으면서 임시적인 고용형태로 이용되는 유사 단시간 근로제)임. 이는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는 것을 보여줌.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성친화적인 노동조건' 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 유연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답시고 확장하는 일자리가 바로 보육,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이를 통해 여성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는 사회적 공공성의 구축이 아니라 재생산 노동의 시장화로서, 해당 일자리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노동으로서 기존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특성이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함. 간병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해당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을 제도화하고 있음

-결국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생산 노동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를 동원하여 자본의 위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빈곤의 여성화, 사회위기 담론으로 활용되는 저출산 현상 등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때문에 발생한 상황임. 노동권, 생존권 박탈에 내몰리며, 직장과 가족에서 이중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임.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양자에서 여성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

3. 여성비정규직의 해법을 둘러싼 현실 쟁점

-비정규직 법안의 기간제한 조항과 차별금지 조항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대응책에서 드러나는 비정규직 담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 비정규직 법안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해지,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등은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상황을 ‘합당한’ 근거를 들어 비정규직 활용을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대응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사례로서 은행권에서의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인 무기근로계약화 사례를 통해 여성비정규직 해법의 한계를 살펴보자

1) 분리직군제 사례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는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해 ‘일부업무(상시적인 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는)’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를 특정 직군으로 분리하여 ‘정규직화’ 하되, 해당 직군에 별도의 인사/임금 체계(직무급)를 도입하여 임금은 종전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함

-노동운동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관반 논쟁이 벌어졌음.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제도’ 나, ‘여성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할 정규직 전환’ 이나의 대립구도가 그것임. 혹은 분리직군제의 성과는 분리직군이 이후 급여나 승진 상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했음.

-분리직군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실시되고 있던 제도로서 하위 직군에 몰려있는 여성 정규직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한다는 비판은 있어왔음(중견산업노조 2006 임단협 요구안에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고, 특정 직무나 특정 성의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기 위한 직군제 편제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의 결단이 여성노동자 착취와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측의 시도에 일조하게 된 몰성성이 비판되어야 함

-우선 고용안정을 따내고 임금/승진 등의 차별을 시정하자는 전략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차별적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무기계약화된 여성노동자와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나오는 주장임.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앞서 왜 그 전에 여성노동자의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봐야 하지 않을까.

2) 무기계약화 사례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핵심 업무는 무기계약, 주변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것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초안 상의 상시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이 이후 ‘무기계약근로’ 로 수정된 것은 해당 노동자에게 정규직이 가지는 고용안정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며, 처우 상의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스스로의 고백임.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직무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이나 저임금을 문제삼지 않고 고착화하겠다는 것임

-핵심-주변 업무에 대한 구분이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에서, 기존에 가치절하되고 저임금화된 여성노동이 주변업무로 분류되어 외주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여성운동계에서 제기되어온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화하라는 전국여성노조의 요구가 나오고 있음

-정규직과 다른 무기근로계약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을 무기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여성운동의 요구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 남성정규직노조, 여성정규직노조 식의 대립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여성노조의 힘을 얻어 성과로 포장될 것임

-핵심-주변 업무를 나누고(어떠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 분할에 따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무기계약화에 (전국여성노조의 주요 조합원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조의 또 다른 실리주의적 태도임. 여성노조 내에서도 조합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했을 만큼 쟁점적인 사안이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3)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 성차별, 고용형태 차별을 동시에 사고하자

-해당 사안이 모두 여성비정규직 해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차별의 고착화' 나, '현실에서의 차선택' 이나에 대한 판단에서 입장이 다름. 한편 이러한 논쟁이 분리적근제 or 무기계약 '반대'(정규직 남성 노조) vs 찬성(비정규직 포괄 여성노조, 여성단체)' 라는 구도를 그린다라는 점.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두고 노동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

-대책에 얼마나 많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조합원에게 어떤 성과를 안겨줄 것인가라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실리주의를 넘어서야 함. 앞서 비정규 대책이 일부 여성노동자에게나 가능한 해법이며, 대책에서 제외된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옹호한다는 점을 직시해야함. 이것이 다시 여성비정규직 내에서 분할과 위계화를 심화시킬 것임. 따라서 합리성을 가장한 노동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른 고용/임금상의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전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함.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여성비정규직 철폐' 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지도, 투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부차화하고 해결의 과제로 제기하지 못하는 몰성성을 드러냈음. 여성비정규직 노동조건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만을 문제 삼을 때, 성적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 상의 차이를 확대시켜온 여성노동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음

-이른바 성차별 시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이 분리적으로 시도될 때, 여성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이뤄질 수 없음.

*여성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에 따른 차별시정(소송이나 민권위 차별시정 진정 등)이 진행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1987), 남녀차별금지법(1999)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는 현실은 법· 제도의 한계를 보여줌. 여성비정규직의 일반화(고용의 불안정화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법적 권리에 무방비함), 여성 직종의 존재라는 조건 하에서 차별 시정은 노동조건, 여성먹임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 변화를 동반해야 해결 가능함(새미를 여성무원 직제에 대한 성차별 진정에 대한 철도 공사의 차별 시정은 '남성 비정규직 승무원' 을 채용하는 방식의 '남녀평등' 이었음. 남녀 차별 시정 조치가 남성노동자의 해당 직무 편입이라는 기만적인 결과로 이어짐)

*남녀 임금 차별 시정의 도구로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 이미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면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비정규직, 노동시장 복귀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 시키므로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는 것. 그러나 저임금의 원인인 중간직취, 비정규직 차별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채, 임금체계 개편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저임금 정규직의 '고임금' 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면공급에 기초한 단일호봉제로 그 원인을 돌리는 공격 논리임. 직무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임금배분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만을 쟁점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는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조정하는 방식. 현재 직무· 성

과 중심의 임금 체제 개편이 제기되는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성적 차이, 노동자 분할을 활용하여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높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비정규직과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과 성적 차이와 결합된 고용형태 상의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이 불가능함. '비정규직철폐'가 비현실적인 구호에 그칠 수는 있어도(실상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조건 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인식해가는 과정 하에서 전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자가 처한 성별분업, 성적 차이 등에 대한 해결이 동반되어야 여성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

4.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통한 여성노동자 조직화/주체화를 위한 과제들

-IMF 경제 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자본의 통제/착취 전략과 정부의 노동정책이 맞물려 핵심 노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이 일부 노동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의 노동조건도 형애화하는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제 노동자 계급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비정규직 투쟁이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임. 그러나 현재 노동자운동에서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역량 및 노력이 투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

1)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시도를 제시하자

-노동자를 억압하는 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적인 인식과 투쟁을 가능케 하는 틀거리로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사고해보자면, 현재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조 가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통계적 수치와 달리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은 남성노동자(여성이 특수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상징은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규모가 큰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접근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만나서니까 어렵다' 등으로 역량을 투여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여성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성과 다른 여성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조건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여성노동자 조직화도 가능할 것임. 여성들이 노조활동 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한 시간배치의 어려움' 임. 가사노동 육아노동에서 면제 받은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의 투쟁과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 노조활동 자체도 시간적·육체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 여성 개인의 투쟁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터인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비가시화된 가사노동의 문제, 여성의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 노동자운동이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여성의 노동권도 같이 사고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는 단지 고용안정(정규직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 노동 조건,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함해야 함. 성별 분업에 기초한 직무·직종 분리, 저임금 등의 특질을 갖는 여성을 둘러싼 차별적인 노동 현실은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

2) 고용 형태 개선 외에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결정하는 구조를 인식하자

-기존에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 개선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기에, 노동력의 사회적 가치와 숙련도 등을 앞세운 노동의 분할과 노동자간 위계화, 성적 차이에 기반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없다.

-KTX 여승무원 직제, 간병 노동자 등의 사례는 성별분리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여성노동의 측면을 보여줌.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보살핌 노동, 감정노동 등의 서비스 노동이 (가족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던 일과 유사한 분야이므로)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며 공격적인 영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저임금 뿐 아니라 여성 직종이 외부화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운동 내에서 인식하자.

-금융권에서 여성노동자의 사례. 여행원제를 통해 여성노동자를 주변업무에 배치하고 임금/승진 체계에서 차별을 일삼았던 관행은 폐지되었으나, 금융권에서 여행원제와 형태를 달리한 여성차별적인 직군제를 운영해왔음. '종합직군(관리 사무직 위주)과 FM/CL(창구직 위주)' 이원직군제(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 금지 위반 판정 내려졌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가 그것. FM/CL 직군의 97%가 여성으로 종합직의 58% 임금수준에 승진 상에서의 차별이 존재했음. IMF 이후 여성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 해고되어 비정규직으로 금융권에 재입사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 분리직군제를 통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화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고용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고용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임금/승진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한 채 고용안정을 목표로 내세울 경우 한계적임.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화된 차별을 주목하고 주체의 인식과 요구에 기반한 투쟁의 과제를 세워야 함.

-기류전자에서 불법과건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은 별반 차이가 없음. 과건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많은 기만적인 저임금. 이미 기존 정규직의 고임금, 고용안정이 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더이상 급진적인 요구가 아닌 상황을 보여줌.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장 내에 갇힌 임금인상을 넘어서 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로 자리매김 되어야함

3) 재생산의 권리를 노동자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로

-최근 '저출산' 이라는 '사회위기' 담론을 계기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이기적' 이라고 몰아 부치는 공

격이나 여성의 출산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비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런 담론을 수용하는 데 조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여성의 출산 양육 노동 등 재생산의 권리를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적인 기능으로 사고하거나 다분히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기능으로 사고하기 때문임

-저출산의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저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권/생존권 박탈,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재하기 때문임. 이제껏 이중부담을 감내하며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당해왔던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모성의 권리,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유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여성의 모성 보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판단해서는 안 됨. 이는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소위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임. 이러한 정부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분리하고, 의무로서의 모성을 더욱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비판하자.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변화, 전략적 의미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요구됨. 보육, 간병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노인수발보협법 제정 등의 정세적 사안에 적절한 대응과 해당 영역의 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함. 돌봄 노동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사전 연속워크숍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일시 : 2007. 06. 28.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 김 원 정

1. 들어가며: 일·가정 양립은 노동자운동의 과제인가?

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일·가정 양립이 과연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운동의 과제인가’이다. 사회운동은 지금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비판해야 하는가, 일·가정 양립 논의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해야 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지향을 사회운동, 노동자운동이 표방할 과제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기되는 정세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검토 대상에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조건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앞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과 조건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덧붙여 향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 혹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노동운동에게 요구되는 자기 성찰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명쾌한 해답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일과 가족생활, 자기 개발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가져오는 인간성의 파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이자 사회활동가인 필자에게 ‘일·가정 양립’은 분명 어떤 이상과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마 다른 사회운동가들의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두고 사회운동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는 것 같다. 그 많은 논의를 다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자리가 앞으로 탐색해 가야할 여러 의제들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 일·가정 양립,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74: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 자체는 참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용어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지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표방하는 담론과 맥락, 그 속에서 구성되어진 의도가 무엇인지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는 최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안된 배경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 수개의 중장기 정책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들은 모두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 소득과 고용불안정의 확대, 가족에 의존하던 사회안전망의 한계,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이 향후 한국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발적·단편적 정책만으로 한계적이라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들 중장기 계획에 두루 포함된 정책 과제들 중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다양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가족정책 맥락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지향으로, 여성인력개발정책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 배경을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하고, “일하는 엄마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또 “여성 고용확대 및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출산·양육 등 가정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② 여성노동자의 취업과 출산·양육이라는 이중 역할의 ‘효과적’ 조정
- ③ 노동자의 일-가족생활 균형 지원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은 특히 ①의 의미로 강조되고 있는데, ①이 과연 ‘일·가정 양립’ 정책인가는 다소 모호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돌봄의 사회화는 말 그대로 ‘가정’의 책임을 ‘사회’가 맡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가정 양립이라면 여기서 ‘양립’의 주체는 누구인가-개인인가 사회인가. 이런 용어상의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것이다.

또 ②와 ③의 의미를 굳이 구분한 것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대상이 남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여성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가, 성평등-성별분업 해소의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주로 제기한 페미니스트들은 일·가정 양립이 그 자체로 성평등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 체계의 해소를 지향할 때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¹⁶⁾ 그렇게 보면 ②는 오히려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근거와 정책 과제들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지향 중 어떤 부분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니 무엇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지향과 담론을 들여오는 것인지 정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채 내부적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¹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일·가정 양립이 제기된 출발점과 목표지점 자체가 갖는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일·가정의 불균형 내지 부조화라는 문제 진단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해결해서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현재 일·가정 양립의 담론과 정책은 모두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사회 재생산과 경제 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구성되고 있다. 이 안에 노동자는 없다.

여성노동자에게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은 수십 수백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고통과 갈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여성이 '저성장'과 '인구 위기' 해소의 유효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그런 점에서 최근의 논의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②의 지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를 검토해 보자. 여기서의 초점은 현재 한미 FTA 추진 등 세계 신자유주의 질서로 한국사회를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세적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들 중 어떤 문제들이 '문제'로 재현되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정책 추진 현황

앞서 언급한 중장기 계획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의 요구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미래의 노동력 수급의 위

118) 신경애(2005), "성평등과 일-가족의 양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2006년 여성의제 토론회 발표문.; 장지연외 (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등

119)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혼란은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외 무슨 목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자신'의 입장이 없다면 예매모호함은 지속되고 사회 주류 세력이 주도하는 담론이 일방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각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추진 근거들이다. 이러한 지향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범주 하에 배치된 세부 정책과제에도 잘 나타난다.

<표 1> 각 중장기 계획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1차건강기반기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유산·사산유가에 대한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형태 유연화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도입 ·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 전업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지원 ·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검토 · 가사·양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홍보 프로그램 운영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 학부모 저녁모임 확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수준 확대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대체인력 지원 등 이용여건 조성 · 기혼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 기혼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강화 ·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및 유산·사산유가 법제화 · 육아휴직 사용요건 완화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 가족 친화적인 기업·사회문화 조성 · 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로모델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 공동육아, 야간학부모회의 등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출처 : 각 기본계획

<표 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명칭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무급 3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가능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사용자는 노동자의 자녀양육, 가족수발 등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 사업종업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간호휴직 등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조사·연구기관 설립 근거

자료: 2007년 3월 노동부 입법예고안

위 과제들은 크게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제고 △가족친화적 기업 및 사회문화 조성 △근로형태 유연화 △기혼여성 재취업 활성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혼여성(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가정 양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각 중장기 계획이 표방하는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 문제점

C 일·가정 양립 정책,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가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불균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며, 또 비슷한 수준의 여성노동자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여성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치들은 여성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현재 절대다수가 여성인 수혜대상이 남성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보다 강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여성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같은 무기력한 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러 불안정노동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해 준다면 도 현재 제안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C ‘가정’ 영역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일·가정 양립은 적어도 일과 가정이 대등한 지위로 인정될 때 ‘말이 되는 얘기’이며, 사회적영역으로 방치되었던 ‘가정’의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여 균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전히 존재하는, 절대 다수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 영역의 노동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돌봄노동을 자연스러운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별 이데올로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는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시기에 남녀노동자 모두가 취약한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시장영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임금노동자, 이른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대다수 여성들에게 해당되지만 남성이 가정안팎의 돌봄노동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정부는 또 다른 대형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그것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즉 보육, 간병인, 방과후교사 등 ‘여성적’ 일자리를 크게 늘려 경력단절 기혼여성들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하되 이를 시장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결국 ‘가정’ 영역 노동의 비가시화와 가치 저평가는 돌봄노동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그를 위한 비용의 부담을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기혼여성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의 근간을 형성해 준다. 이들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일·가정 양립은 임금이 지불되면 그렇지 않은 ‘허찮은 살림’의 연속일 뿐이며, 지금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타인을 돌보는 노동자가 정작 돌봄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해 자신의 자녀나 가족구성원을 방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다.

C 여성노동자의 주변화, 불안정화는 ‘문제’로 다루지고 있는가?

다음으로 ‘일’ 영역, 특히 여성노동자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앞서 살펴본 중장기 계획은 여성 ‘탄’을 타겟으로 하는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등은 남성에게 돌봄노동을 분배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와 같이 ‘가정’ 영역의 책임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분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고 있지만 정작 ‘일’ 영역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이미 노동시장 내에서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제공자의 취약함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현재 미혼여성노동자의 55.5%가 비정규직인 반면 기혼여성노동자의 경우 73.7%가 비정규직이며¹²⁰⁾, 중장년 여성노동자는 전체 남성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¹²¹⁾

이러한 여성노동자, 특히 기혼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여성의 유급노동 ‘절근’ 확대를 넘어서는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보편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일·가정 양립을 추진한다면 이미 절반의 노동권만을 보장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이란 명분으로 점토되고 있는 근로형태 유연화, 탄력적 노동시간제에 대한 우려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결국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노동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사회 여성노동자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120) 김유선(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노동사회』, 115호.

121) 물론 남성노동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즉 부모라는 지위가 노동시장 내 취약성을 가져오는 것은 여성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과연 ‘노동자’인가. 이러한 질문이 배제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결국 성별분업을 보다 고착화할 위험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4.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노동운동의 조건과 한계

이제 오늘의 주요한 논의로 방향을 돌려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가정 양립 논의는 결코 노동자에게, 특히 취약한 불안정노동자, 여성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만은 없는 환경 하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이라는 주체가 일·가정 양립을 말한다는 것 혹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보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일·가정 양립의 지향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겠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운동에 붙여진 ‘정규직 대공장 남성중심 노동운동’이라는 꼬리표의 함의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 ‘만’ 이 겪어 온 일·가정 양립의 이중 부담을 ‘문제’로 인식한 경험이 없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남성 간부와 조합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해서, 여성노동자와 함께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¹²²⁾ 노동운동의 현재적 조건과 지위 자체가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부담, 이를 초래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

1) 일·가정/공·사 분리와 여성의 노동자성

우리사회 대부분의 남성노동자에게 ‘가정’이 노동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에게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었다. 노동조합 역시 공사영역의 철저한 분리에 입각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자, 국가를 상대로 요구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사적영역의 가족과 재생산 문제는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고 또 **“분명히”** 자본과 국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만은 이를 정치 의제로 삼지 않았다. 대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온 것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에 이러한 의제를 들여온 것은 여성노동자들이다.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교착이 ‘일’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의 제도는 그런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의제들이 노동조합 전체의 요구였던 적은 거의 없다.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보호 내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이 전제한 노동자는 ‘가정’ 영역에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없다고 가정되는) 남성노동자다. 따라서 ‘가정’ 영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만의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어 단체협약(요구안)에서도 모성보호, 여성보호 관련 조항에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다.

122) 만약 이것이 원인이려면 여성문제에 대한 말, 그들 위한 교육이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것이고 이미 밀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다음 연속워크샵의 주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예를 통해 살펴보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법·제도가 인정하는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치열한 투쟁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현재 노동관련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들도 겪고 있다. 이들의 90% 이상은 여성이며 남성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이러한 노동은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명시적 배제는 ‘가정’ 영역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심지어 공공병원이라는 명백한 공적 공간에서 일하며 사실상 병원 사용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간병노동자도 그 업무 특성상 가사사용인으로 규정되는 현실이다.¹²³⁾ 이처럼 공식부문에 있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이야말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특수고용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싸움이 노동조합의 과제가 된 적은 없다.

어떻게 보면 남성가장노동자에게 집안에서 전업주부 여성들의 살림을 임금을 받고 하는 여성노동자는 참으로 기이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임을 입증하고 노동자성 인정을 주장할 근거들을 지금의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위의 현실은 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많은 부분 가정 내 돌봄노동을 시장영역으로 끌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곧 대규모의 직업군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시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때다.

2) 남성 생계부양자 가정과 가족임금의 신화

이제까지 대부분의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별분업 논리와 젠더 불평등 구조를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생계부양자 남성만을 ‘노동자’로 전제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과 휴일·휴가제도, 핵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남성가장의 부양 책임을 보존하기 위한 형태로 구축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또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장시간의 연장노동을 통해서만 적정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노동관행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노동자를 항상 이등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게 했으며, 여성이 주로 담당해온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사적영역으로 분리·주변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역시 남성 생계부양자 가정과 가족임금 신화를 바탕으로 위의 정책과 제도들을 투쟁과 협상을 통해 ‘함께’ 구축해 온 것이다. 대공장 남성노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밀접한 연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수년간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간 것인가. 결국 누가 행복해 진 것인가. 부모 중 한명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릴 때 그들의 자녀는 어디에서 누가 돌보고 있는가. 한 달에 몇 번 아이의 얼굴도 보기 힘든 노동자가 과연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까지 노동운동의 이상은 생계부양자 남성의 불행한 삶과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를 ‘참을 수 있을 만큼’ 안착화 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성별분업 논리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이상은 완전히 새롭게 전환

123) 이상의 논의는 정형욱(2006), ‘노동법 적용대상의 성별 효과: 남성우선보호와 여성적용배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참조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불안정 노동의 위협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수준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의 삶, 그리고 아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방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5. 맺으며: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일·가정 양립은 노동운동의 과제인가. 사회운동은 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현재 일·가정 양립에 관한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자신의 지위, 이제까지 표방해온 이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성별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구성해 온 노동운동은 갈해야 여성노동자의 일과 출산·양육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 이상의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도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와 심각성을 짚고 넘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조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회 패러다임 전반의 수정을 노동운동이 구상해내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과업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당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짚어 본다. 이후 많은 토론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1) 돌봄의 공공서비스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 투쟁의 의의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하다.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또한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의 과제와 요구가 불분명하고 투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어떤 걸림돌도 없이 저만큼 나가고 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대응은 이미 한발 늦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개선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불안정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만 부추기는 정책들 보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주장해야 한다. 또 하나 정부 역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자기 과제로 내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논점은 돌봄을 가정에서 수행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넘어서고 있다. 초점은 정부의 ‘상공화’ 전략이다. 노동운동은 돌봄의 ‘공공서비스화’ 라는 주장으로 쟁점을 형성해 가야 한다.

2) ‘가정’ 영역의 ‘노동’ 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1)번 과제와 연결되는 돌봄제공자의 노동권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동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1)번의 투쟁과 함께 가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노동운동이 얼마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드러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른바 ‘가정’ 영역의 노동, ‘여성적 일’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노동운동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사사용인, 가내노동자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성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와 관행상의 노동자 개념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자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노동정책 전반의 성 인지적 페러다임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력은 또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저임금화에 대항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주변적이고 하찮은 ‘비숙련’ 노동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비정규직화·외주화되고 저임금으로 고착되었던 ‘여성적 일’들이 개별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숙련’ 노동임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3)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노동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자. 만약 여성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면 출산휴가는 주휴일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기본권-물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이마저 기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의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산휴가가 비록 여성만 사용하는 휴가라고 해도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보편성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권의 개념을 발전시킨다면 여성에게 ‘일’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여성노동자를 특수집단으로 취급하는 인식 또한 변화될 것이다. 여태껏 임신·출산 등 여성의 모성활동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오히려 노동권을 박탈당할 ‘죄’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임신·출산을 직·간접적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주의 ‘죄’는 진정 사회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노동자의 일-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을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돌봄의 공공서비스화가 크게 진전되어 돌봄이 필요한 약자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진다해도 파트너, 부모-자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물질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역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에 양보하는 것이 익숙하다. 공과 사를 분리하고 그렇게 규정된 시·공간을 수시로 넘나드는 인간마저 분리시키는 사회이다. ‘사적인 일’은 ‘공적인 일’에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관념은 변화해야 하며, 그 논리의 가장 큰 희생자였던 노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가족과 개인생활의 영역은 특정 성, 특정한 가족 내 지위에 따라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누군가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모두가 일-가족-개인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노동기본권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그러한 책임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남성들 가족과 개인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남성노동자 스스로 그것을 ‘원리’

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가. 앞서 제기한 과제들에 비추어 보면 ‘일·가정 양립’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지배세력이 주도하는 특정한 담론과 맥락, 의도를 비판하고 넘어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개개인이 삶의 현실과 욕구를 비추어 보게끔 하고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의 페미니즘적 이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것,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노동자’의 담론과 언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가능성에 희망을 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여성노동력 활용에 솔인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한 가지 교훈만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여성을 ‘가정’에 유배된 존재로 보지 않으며 그렇게 놔두려고도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이 암울한(!) 현실에서 여성의 값싼 노동력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희망이자 자원이다. 정부와 자본이 여성노동자의 ‘가치’를 따르게, 새롭게 인식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노동운동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 여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지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싶다.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3차 사전 연속워크숍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7. 07. 12.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호 성 희

1. 들어가며: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¹²⁴⁾, 필요한가?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라는 3차에 걸친 이번 연속토론회 기획의 기본 방향은 그 자체로 현재 양자가 결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주요한 기획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이면은 여성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족적 책임을 떠맡으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함께 바꾸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조직적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성별 분할선을 타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 없이 노동자가 되고, 투쟁할 권리조차 없으며, 그래서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어낼 방안은 없는 것일까?
-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여성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조직과 이념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에게 페미니즘과 노동자운동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양자가 분리된 현실은 여성노동자의 주체화를 어렵게 만들고 여성노동자를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한다.
- 그렇다면 양자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의 노동조합은 왜 그러한 틀이 아닌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 하겠다는 노동자운동은 결합의 필요성에도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결합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여성운동)의 포함을 요구하거나,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지향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부문화, 특수화, 주변화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기존 노동자운동과의 분리를 여성의 주체화, 세력화를 위한 전략 혹은 전술로 채택해왔고 이는 현재 여성운동의

¹²⁴⁾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을 여성해방을 위한 이념과 운동을, ‘노동자운동’은 기존의 노동의력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사회단체의 운동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모든 사회·정치 운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배적인 방식이다. 또한 기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은 ‘필요’에 따라 서로를 대상화, 도구화하면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만 결합, 연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연대를 넘어 양자가 결합할 수 있으려면, 기존 운동들간의 연대를 다양화, 강화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왜 결합할 수 없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내부적 성찰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분리의 원인을 일방(특히 노동자운동)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양자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 즉,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이 왜 페미니즘을 사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노동자운동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 토론회를 통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 1차 토론회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와 2차 토론회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는 “대공장 정규직 남성”을 노동자의 모델로 삼았고 여전히 그러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왜” 여성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제약과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는가를 분석, 비판한 토론회였다.

: 1차 토론회에서는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에서, 노동자운동이 ‘정규직’의 틀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운동이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의 70%이상을 차지한다”는 현실에 대해 왜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라는 인식에 머물러있을 뿐,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초해서 현재의 노동의 불안정화를 분석, 비판하고,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확장하고 있지 못한지를 분석, 평가하고자 했다.

: 2차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이 오히려 ‘여성인력활용’이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쏟아내면서 ‘여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운동은 스스로 여성노동자의 이중부담과 성차별에 맞선 운동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고자 했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이 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운동은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내부 분할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순응해왔다.

: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현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운동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차이는 어떻게 차별로 만들어지는가?

: 기존 노동자운동의 ‘노동자’의 상징과 이념

C 페미니즘의 통찰과 도전

- ‘여성억압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페미니즘 내부의 오랜 논쟁이기도 했으며, 어떤 원인(계급vs성)이 더

근본적이나를 두고 노동계급운동과 여성운동이 대립하기도 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받는 자’가 되고 남성이기 때문에 ‘억압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성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차를 여성-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만드는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문제일 것이다.

- 근대 정치의 형성과정에서 천명된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누가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인가’는 소유한자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유색인종, 여성, 어린이는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노동자와 흑인이 시민이 되었을 때조차 여성은 제외되었다. 노동자의 자기소유와 자기통치를 이념으로 하는 노동자운동 역시 (사적) 가정생활에 유예된 ‘여성’이라는 부르주아적 관념을 공유했고, 여성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적 차이는 모든 차이를 우선하여 시민의 지위를 가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선이 되었다.

- 이러한 배제에 맞선 여성들의 행동과 요구가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적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고, 이는 역설적인 페미니즘의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이름으로’ 평등을 요구했고, 그런 차이 때문에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차이-평등의 딜레마들을 겪어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겪으면서 ‘시민권’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통찰을 갖게 되었다.

- 어찌되었건 우리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며, 차별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정치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여성들)가 요구하는 평등은 누구와의 평등인가?”, 시민은 남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가진 만큼’의 평등을 요구해야 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성적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긍정적 권리의 근거로 바꿀 수는 없는가? ‘성차의 페미니즘’은 성적 차이를 여성의 독자적 권리(‘여성권’)로 제기하여 차이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남성-시민, 남성-노동자 모델을 해체, 재구성하고자 하는 도전이다. 이것이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 기존 노동자운동의 ‘노동자’의 상징과 이념

- 기존 노동자운동의 가부장성은 그동안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성’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노조운동의 ‘현실’이라며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 역시 대공장이 아닌 중소기업체사업장, 남성이 아닌 여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포함하는 방식으로 ‘딴’ 고민¹²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하려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조운동을 평가할 때 상황은 더 근본적이다. 노동조합은 ‘가정’ 영역에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없는(없다고 여겨지는), 생계부양자 남성만을 ‘노동자’로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보호 내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니며, 따라서 ‘가정’ 영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만의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어 단체협약(요구안)에서도 모성보호, 여성보호 관련 조항은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노동운동

125) 최근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문제의식이 이에 머물거나 미달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우려는 쉽게 확인된다.

의 이상은 생계부양자 남성의 불행한 삶과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를 ‘참을 수 있을 만큼’ 안락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 ‘만’ 이 겪어 온 일가정 양립의 이중 부담을 ‘문제’ 로 인식한 경험이 없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남성 간부와 조합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해서, 여성노동자와 함께 열심히 싸우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현재적 조건과 지위 자체가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부담, 이를 초래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¹²⁶⁾

- 그동안 노동조합은 남성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쟁취’ 를 목표로 투쟁해왔고,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 으로 조직화, 선전되어 왔다. 남성노동자의 부인을 전업주부로 상징¹²⁷⁾하는 ‘가족대책위’ 를 구성하는 것이 파업투쟁의 주요한 조직화 방안이 되고 있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유지를 목표로 투쟁해왔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의 포스터 사건¹²⁸⁾은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동자 이상과 목표가 투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노조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의 저임금은 당연시 되어왔고, 최근의 최저임금 투쟁 역시 ‘여성가장’ 인 노동자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거나 일종의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목표로 했던 가족, (일부 노동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성취된) 가족임금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심각하게 공격받고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그러한 목표를 방어하거나 고수하려해서는 낮은 조직률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의 위기 또한 극복할 수도 없다. 이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 공사 분할,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성과와 한계

- 노동자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색과 실천은 누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 노조운동 속에서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노조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조 페미니즘이 노조운동의 혁신의 “실체” 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조 내 페미니즘의 실천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왔는가.

C 주변화 된 여성위원회(여성활동가)의 지위와 역할

126)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토론회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발제문

127) 이는 기혼여성의 80%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8) 1999년 포스터 ‘당신만이 희망이에요’ (투쟁초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남편을 뒤에서 배웅하며 아기를 안아 든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와 2005년 포스터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번치에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함)가 대표적 예. 두 개의 포스터 모두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로 배포되지는 않았다.

-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는 민주노총 내의 여러 개의 상설위원회 중의 하나로, 민주노총 중앙과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1년 여성할당제 논의가 시작된 후에야 만들어졌다. 또한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여성할당 부위원장이나 임원이 여성위원장을 하고는 있으나 정작 주요역할은 여성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서 '할당' 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총 전체 주요 사업계획에 여성사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사업은 여성위원회 '판' 의 사업으로 기획되거나 여성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와 활동력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노조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위원회-여성국으로 전담시켜 특수화, 주변화되어 있고 오히려 여성위원회의 존재가 노조의 가부장성과 물성성에 대한 비판에 생색내기식 방패막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여성위원회가 상층 여성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위원회의 사업 구상을 위한 논의와 실행 역시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성위원회도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사업과 투쟁의 동원 대상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사업의 대부분은 상급단체 여성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것이고 민주노총 중앙 여성위원회의 사업계획 역시 아래로부터 여성노동자의 주체화, 세력화에 주력하기 보단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 조건과 괴리된 제도개선투쟁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위원장이거나 여성활동가들이 개인의 결의를 바탕으로 고민한다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따라 '사람' 이 바뀌다보니 고 민과 주체조차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노조의 현재 운동모델 내 여성위원회 지위와 여성활동가들의 상황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현재의 지위와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도 남성과는 그 의미가 다르게 평가된다. 남성활동가의 노조활동 참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인데 반해, 가사양육 노동과 노조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잘 봐줘야 힘들겠다며 개인적으로 안쓰럽게 바라볼 뿐, 실제로 자기 책무(가정생활의 유지)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평가된다. 출산/양육을 하고 활동에 복귀하더라도 이 역시 일종의 '경력단절' 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주변적인 역할을 맡게 되다보니, 이는 다시 여성이 하는 '운동' 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져 여성은 '활용한 활동가' 의 기준에 미달하는 활동가가 된다.

C 할당제의 함정

- 2001년 전교조의 50% 여성할당제(2004년 동반출마 단서조합 신설) 도입을 출발로,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공공연맹-공공노조, 사무금융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이 할당제를 도입¹²⁹⁾하거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몇 년 동안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할당제의 한계에 대한 평가¹³⁰⁾가 제기 되곤 있지만, 노조 내에서 '여성할당제' 는 여전히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그 성과가 평가 되고 있다. 일례로, (구)공공연맹의 경우 여성조합원 비율 14.96%에 비해 5%미만에 그쳤던 여성 대의원,

129) 대부분 30% 여성할당제를 도입. 30%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기준. 금속노조의 경우 여성조합원 5% 비율을 반영하여 10%인데, 이조차도 노조 내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여성조합원 비율이 70%인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내 최대 여성사업장임에도 여성할당과 여성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의 여성관련 사항을 규약 상에 명시하지 않고, 여성위원회도 없다.

130) 토론회- '여성할당제를 넘어' -노동조합 내 젠더평등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2007.1.19, 여성노동모임 주최

중앙위원 비율이 할당제 시행으로 20%까지 높아진 것처럼 여성위원회 사업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여전히 할당제 시행은 노조 여성위원회의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 여성할당제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즉 여성의 권리로써 제기되기 보다는 제한된 권리의 틀 내에서 인구비율(공동체 구성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여서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노조 운동의 목표가 여전히 ‘남성노동자’를 이상으로 해서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할당 대표와 임원이 늘어도 현재는 여성활동가들에게 3,4종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할당제로 인해 여성활동가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사업이 확대되고 있지 못한 현재 할당제의 한계가 기초단위, 집행단위까지 확대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 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선 여성할당 대표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할당제 주장의 근거는 소수자로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에만 맞추어져 있다. 즉 무엇을 하기 위해 여성대표들이 필요한가란 질문은 빠져있고 여성사업은 조직적 과제와 실천으로서가 아니라 여성활동가들 개인의 의지와 능력, 노력 여부에 맡겨지게 된다. 여성대표가 그 자체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성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를 형식적인 평등 속에서 은폐시킬 위험도 다분히 존재하며, 할당제의 목표 자체가 그러한 구조변혁에 있지도 않다.

- 소수자 대표성 제고에 관한 할당제는 여성활동가와 여성문제를 여전히 주변화, 특수화 할 뿐이다. 할당제를 점차 확대하여 50%할당¹³¹⁾으로 간다하더라도,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남성노동자, 남성간부와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성노동자와의 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재의 노조의 운동이념과 구조에서는 할당제가 여성활동가의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여성활동가의 재생산도 어려워지고 오히려 여성의 주변적 지위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파, 소속 노조의 이해관계가 여성으로서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 따라서 현재 할당제 시행과 할당제를 잘하기 위한 사업 전반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할당제가 시행된다면, 현재 노조운동의 변혁을 위해 어떤 여성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고민과 과제는 미뤄진 채 할당제 시행을 위한 토론, 할당제를 채우기 위한 여성조합원 교육과 사업에 모든 역량을 소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 성폭력과 여성활동가들의 딜레마

-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해온 대학가의 반성폭력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회운동 내 성폭력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만연되었지만 가려진 반여성성을 충격적으로 드러내주었다¹³²⁾. 100인위 사건은 운동사회의 ‘진보성’에 대해 큰

131) 한국에서 프랑스의 파리때(남녀동수대표제)는 할당제를 확대한 제도로 오히려 되는 경향이 있다. 동수대표제와 할당제의 가장 큰 차이는 할당제가 일종의 인구비율을 대표제에도 기입하고, 정치적 과소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조치라면, 동수대표제는 권리의 담지자로서 시민(개인이 남성성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성적 차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기입하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프랑스에서도 이전에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프랑스 헌법의 보편주의 원리에 위배하는 것으로 인한 판결되었다. 동수대표제는 그러한 기존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수대표제는 선거제도 내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졌다는 점과 여성권과 결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탈성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다.

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 사건을 토론,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각각하게 되면서 운동조직 내 여성활동가 모임이나 여성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그러나 사회운동 내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구도 속에서 '처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사회운동의 지향, 그 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오히려 희미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조직 내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 보다는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비공개성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와 반발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개인들간의 신상처리 문제로 축소되었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노조의 여성억압적 구조와 문화는 변하지 않은 채, 노조는 마치 공적 재판관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여성활동가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늘어나는 반면, 남성활동가들은 세미나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적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그렇다고 발생, 신고 접수된 사건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 노조 여성활동가들은 상당한 역량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남성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가 남성활동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파대립에 활용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 그렇다면 여성위원회는 성폭력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을 가로막는 사회제도 및 관행, 구조 자체를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노동자가 겪는 성차별과 배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은 기존의 사건접수-진상조사-징계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노조 운동의 혁신의 과제와 방향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여성위원회가 성폭력을 여성 개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즉 "공동체에 대한 폭력" 으로 인식제기하고 기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윤리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성폭력을 바라보는 조직 이데올로기를 바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취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조직에 대한 사과, 징계 중 '조직에 대한 사과' 의 의미를 좀 더 발본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흔히 가해자들은 조직에 '물의' 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조직에 대한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징계를 수용하는 것에 비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물의' 는 성폭력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성폭력을 제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권리 자체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로 기입된다면,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당기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중 여성위원 의무적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여성(운동)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 혹은 노조의 기풍을 변화시키는 것에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변화된 당기풍과 노조 문화에 기반해 당기위원회가 성폭력 사건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전환을 해볼 수도 있다.

132) 100인위원회 사건을 '폭로', '충격' 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은 필자가 그 당시 느꼈던 경험과 느낌을 드러내는 것이다. 100인위원회 사건은 여성 '활동가' 인 내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였고, '여성활동가' 로 키워지는 성장통 같은 것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100인위원회의 방식은 여성활동가들에게는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거나 운동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형성시켰던데 반해 남성활동가에게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면)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방어의 기제를 형성시키기도 했다.

4. 변화를 위한 도전: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 형성을 위한 과제

-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적 도전은 70년대부터 있어왔다. 로즈마리 와스켓은¹³³⁾ '과연 페미니즘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조운동을 혁신하고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는가?' 질문하면서 중심부 국가의 노조페미니즘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법률적인 협상이나 단체교섭에서 성과를 얻는데 있어 페미니즘은 실질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둘째, 가정과 직장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분리는 페미니즘적 통찰에 의해 효과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셋째, 몇몇 노조들에서 민주적인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페미니즘적인 민주적인 논의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었다. 넷째, 여성들이 더 많이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작업장, 공동체 그리고 사회전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왔다. 사실 노동조합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동료들처럼 경제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의제들을 추진해왔으며, 그 근처에 남성 지배적인 비즈니스 노조주의 판금이나 주류적인 페미니즘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선진국에서 노조 페미니즘의 시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 노동조합 페미니즘은 어떠한가? 이제 딱 형성되기 시작한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이 아직 이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성해방은 여성노동자의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 출발 자체가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있어야 할 것이다.

C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 실천이 주는 시사점

- 70년대 중반 형성되었던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의미를 평가할 때, 페미니즘과 좌파의 밀접한 관계와 상호 작용, 차이와 평등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 페미니즘과 사회주의가 다소의 불일치와 긴장은 있었지만 결코 갈등상태에 빠지진 않았다. 이런 여성운동의 유형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노동자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긴밀하게 접촉해왔고, 생산 영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정치적 쟁점들에 노동자운동이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봐야 한다.

- 이탈리아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70년대 중반에 노조페미니즘이 전개되고 프랑스에서 이리가레의 페미니즘 이론이 수입되면서 성적차이의 페미니즘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문화는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이 점목되어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은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 노조 내에서의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의를 논할 때 언급되는 것으로 '160시간 코스'를 들 수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더 많이 교육받을 권리로써 제기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분할되어있는 8대 노총의 여성노동

133) 로즈마리 와스켓 「중심부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가능성과 모순들」,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년 9월호(18호) 특속의 책

자들이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것이 노조가 임금협상 중심의 전통적 의제를 뛰어넘어 '낙태의 권리' 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결합하여 싸울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 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 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 이라는 부제를 단 여성현장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이 현장은 성적 차이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C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 형성을 위한 과제

-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방향을 노조의 이념에 성적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여성사업과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중장기적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선거 사이클에 종속되어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이 단절되는 것이다. 냉정한 평가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여성활동가들이 죽을 뚱 살 뚱 활동해도 노동조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각에 맞는 사업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1) 노동조합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전략 구축

-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약자' 나 소수자로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접근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성적차이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34). 이를 위해 기업과 산별노조의 틀을 넘는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사회화 방식을 비판하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정부(와 기업)의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역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매카니즘을 분석, 비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노동자상, 노동정책,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수준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기존 임금요구안과 체계를 분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래로부터의 여성노동자 주체화, 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 집행

- 할당제는 여성들을 특수집단화하거나 남성노동자에 동화시킬 뿐이다. 소수 여성활동가들에게 성장(고속 승진의 기회)의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점점 현장과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할당제 시행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134) '만약 여성노동자의 원정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회라면 출산휴가는 주휴일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산휴가가 비록 여성만 사용하는 휴기라고 해도 여성노동자가 '노동자' 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보편성은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임신·출산을 직간접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의 '죄' 는 진정 사회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 2차 토론회 발제문 중

- 따라서 할당제의 제한적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 여성할당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맞추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 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여성위원회-여성국, 여성대표들에 의해 제안되고 노조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① 우선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여성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이것 자체를 사업화하고 노조에 물적, 인적 역량 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여성위원회가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일 수 있다.
- ② 여성노동자가 주체화, 세력화 되는 것은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조합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식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노조 내의 교육은 턱없이 부족해서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이나 해당 투쟁사안에 대한 교양강좌 정도에 그치고 있고, 여성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나 여성간부학교도 모성보호/성폭력/할당제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기 마련이다.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문화와 운동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인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③ 3.8 여성(노동자)대회나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등을 기점으로 여성노동자의 대중적 행진을 조직하고, 이 과정에 여성노동자들의 상호토론, 자기교육적 사업과 결합되어 이것이 여성 자신의 요구와 권리로 구체화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원식의 여성노동자대회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임단협 중심의 노조운동 사이클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여성투쟁사업장간의 연대망을 형성하는데 노조 여성위원회와 여성활동가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조가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연대하고, 여성활동가들 간에 초정파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열린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경쟁적 질서를 극복하고 노조 내외부의 여성활동가들이 상호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조 여성위원회 구조만으로는 문제의식을 교류, 환류 할 수 없으며 그 지속성도 담보될 수 없고, 위의 제안한 모든 과제를 노조 여성활동가들이 다 준비하고 집행할 수도 없다. 또한 외부 여성활동가들이 노조 현장과의 괴리가 심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세미나 등의 강좌를 기획하고, 교육안을 마련해보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더 욕심을 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 사회운동포럼의 '여성운동전략기획단'에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